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동북아 문화공동체 토대 연구 (1)

주요국의 인식과 한국의 대응

통일연구원 김갑식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17-01

“동북아문화공동체 토대 연구(1): 주요국의 인식과 한국의 대응”

통일연구원 김갑식 외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동북아문화공동체 토대 연구(1):
주요국의 인식과 한국의 대응”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9-17-01	동북아문화공동체 토대 연구(1): 주요국의 인식과 한국의 대응	통일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기관	통일연구원	김갑식 연구위원	이상신 연구위원 박주화 부연구위원 이무철 부연구위원
협력 연구기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양일모 교수	조관자 부교수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이희옥 교수	위완잉 책임연구원 김지현 겸임교수 (한동대학 국제어문학부)
	(사) 대한민국 지식중심	배기찬 대표	백인주 박사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배병인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신범식 교수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유라시아실�크로드연구소	김장구 전문연구원	
	국립대만사범대학 동아시아학과	왕은미 교수	

제 출 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동북아문화공동체 토대 연구: 각국의 인식과 연구동향”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8월

통 일 연 구 원
원장 임 강택

국문요약

본 연구는 기존의 동북아문화공동체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론적이고 현실적인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주요국(지역)의 입장을 비교·검토하여 실천적 대안 모색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중·일 국가의 학자군(각 20명)을 대상으로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입장과 인식 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유관 국가와 지역(미국, 러시아, 몽골, 대만)의 인식도 확인함으로써 한·중·일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범위를 확장하여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입장과 인식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단순히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각국의 인식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실현가능성을 전제로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기존 논의와 달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가능성 자체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1권과 별도로 제2권에서 한·중·일 3국의 대표적 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1993년 이후 동북아, 동아시아, 공동체, 일체화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동북아공동체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논의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동북아 지역과 관련한 지역협력 및 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정책 등에서 공통분모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대상 국가를 넓혀 미국, 러시아, 몽골, 대만의 논의를 고려하면,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지역협력 및 문화공동체에 대한 공동의 합의나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체제의 상이성, 역내 역사 및 영토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자국 중심으로 지역을 설정하고 지역협력 및 공동체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범위 설정 논의는 어떤 국가를 포함시키고 배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이는 국가의 핵심이익과 직접 연관되어 논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예민한 외교적 사안이 되기도 한다. 한·중·일 3국은 동북아 지역협력 논의를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중심으로 전개하다보니 상호 간 지역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한·중·일 3국에서 지역협력과 연결된 문화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논의도 쉽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문화공동체 논의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2000년대 초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한국의 문화공동체 논의는 동북아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거나,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

하면서 새로운 문화 개념의 창출을 제안하면서 진행되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평화공동체와 이익공동체 형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문화공동체를 바라보았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다민족 국가라는 점에서 문화공동체보다 주변운명공동체가 강조되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 중심의 공동체 구상을 위해서 유교문화와 한자문화를 중심으로 '중국적 담론'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개방적 다층적 네트워크'의 육성에 초점을 두고 동아시아 문화 이념의 모색을 문화의 다양성과 일본문화의 혼종성을 강조하면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통한 공동체 논의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중·일 3국 전문가들은 동북아의 다자협력 및 문화공동체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는데, 특히 일본 전문가 대다수가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한·중·일 3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3국이 서로에게 갖고 있는 '혐오'의식 확산에 대한 우려이다. 각 국가의 전문가들은 자국 내 상대국들에 대한 혐오의식의 증대를 우려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현상이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에서 새로운 차원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동체를 도모할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후속 연구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적 범주 문제와 관련해서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해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협력 및 문화공동체 논의는 공동체 개념보다는 '이질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방적이고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공동체 논의는 정치·안보, 경제를 포괄하여 인간존중과 인간애를 담아내야 한다. 넷째, 국가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위주체의 역할과 관계 형성 논의를 좀 더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첫째, 동아시아를 우리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지역범주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각종 구상과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동아시아를 지역범주의 중심으로 설정하더라도 동북아의 핵심국가인 한·중·일의 정상회의는 지속하면서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한다. 셋째, '동북아'라는 지역범주는 남북한과 이와 관계되는 미·중·일·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소지역주의의 일환으로 한정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적인 기관들 차원에서는 첫째,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 더 좁게는 환동해권,

환서해권 차원의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한·중·일 및 동아시아 차원의 각종 인적, 사회문화적 교류의 확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지혜롭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 셋째, 학생들과 젊은 세대의 교류협력을 위해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동아시아에서 활동할 미래의 '지역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적교류 및 사회문화협력에서 각종 문턱을 낮추고 장애물을 제거하며, 협력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시민사회와 언론 등 민간 차원에서는 첫째, 상호간의 생각과 평가를 공유하는 기능을 하는 언론과 SNS 등 각종 여론형성 기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일본의 헤이트스피치 방지법처럼 인간의 존엄과 인간애를 해치는 발언이나 행위가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주장될 수 없도록 동북아 및 동아시아 각국에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에 시민단체들이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자기와 타자, 자국과 타국, 같은 것과 다른 것을 조화시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2권에서 한·중·일 3국의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한국과 일본은 2005년~2009년에 지역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였으며, 중국은 2010년~2014년에 지역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였다. 이 가운데 한·중·일 3국 모두 정치 분야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에 동북아 지역의 문화 동질성 및 문화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한국이 가장 높았으며 중국이 가장 낮았다. 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은 중국이 가장 높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1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100년의 비전으로 '신한반도체제'를 공식 제안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신한반도체제와 관련된 논의는 우리에게 과거 100년과 다른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100년을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반도체제는 남북의 평범한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생명공동체를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능동적이며 포용적인 평화질서 정립에 기여해 나갈 것임을 밝힌 미래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한반도체제 추진 전략의 구체화 작업은 본 연구가 제시한 연구의 시사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신한반도체제는 본 연구가 제시한 자국 및 동북아 중심주의의 탈피와 함께 인간존중과 인간애, 다양성과 이질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추진해 나갈 것임을, 그리고 능동적인 포용질서 형성을 위해 주변국들과 함께 할 것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신한반도체제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데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draw up theoretical and pragmatic issues through reviewing discussions on 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and to lay the foundation to seek practical alternatives by comparing and reviewing stances of major countries(regions). To that end,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scholar groups (20 people for each group) of Korea, China and Japan on their views and perceptions on 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In addition, perceptions of relevant countries and regions (the United States, Russia, Mongolia and Taiwan) were also reviewed, thereby expanding the scope of Northeast Asia from Korea, China and Japan. The study does not just simply suggest each country's perceptions on 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in parallel, but carry out a systematic comparative analysis. With this method, unlike the previous studies on how to form 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on the basis of feasibility as well as policies to implement it, this research examines the possibility of forming 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itself vi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comparative analysis.

It is true that finding a common denominator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n their perceptions and policies of regional cooperation and cultural communities for Northeast Asia is difficult. When expanding the scope of communities to include the United States, Russia, Mongolia and Taiwan, it can be easily found that Northeast Asia or East Asian countries have difficulties to form consensus on regional cooperation and cultural communities. This is because, without resolving conflicts arising from differences in the system as well as historic and territorial disputes, each countries have defined the region on their own and tried to seek regional cooperation and building regional community based on their idea of region.

Generally, discussions on zoning involves which countries are to be included and which are to be excluded. This is also very sensitive issue in terms of diplomacy

because it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nation's core interests. As Korea, China and Japan proceed discussions on regional cooperation with their strategical interests at the center, they are not sharing ideas on regional cooperation. As such, it is hard for the three countries to discuss on culture-centered community that links to regional cooperation.

Compared to China and Japan, Korea started active discussions on cultural community in the early 2000s. Its discussions on cultural community centered on the cultural identit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emphasized cultural diversity to suggest creation of a new cultural concept. In addition, the cultural community was seen as the starting point to create community of peace and interests for peaceful and prosperous Korean peninsula. On the other hand, for China, as it is a multiracial country, community of common destiny was emphasized over cultural community. At the same time, China is concentrating on producing "Chinese discourse" with the focus on the culture of Confucian and Chinese characters in order to create China-centered community. In the case of Japan, it is focusing on fostering an "open, multi-layered network" and expanding its search for East Asian cultural ideology to community discussions through universal values of humanity, emphasizing cultural diversity and the mixed nature of Japanese culture. Not only Korea, China and Japan but also the relevant countries approach the discussions on regional cooperation in order to secure their own strategic interests, which make the discussions on regional cooperation and formation of community via culture very hard.

Such trend could also be found in the surveys to experts from South Korea, China and Japan. The experts from three countries acknowledged the need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cultural community in Northeast Asia, but were generally negative about the possibility, especially the majority of Japanese experts. What should be noted in the survey is concerns over the spread of "abhorrence" that the three countries have toward each other. Experts were concerned about a growing sense of abhorrence within their country towards the

counterparts. In a way, this phenomenon is further increasing the need to promote a new level of reconciliation, cooperation and community in Northeast Asia where Korea, China and Japan lie on the center.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or future follow-up stud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regional zoning issues, research needs to be carried out beyond “Northeast Asia” to “East Asia” or “Asia-India-Pacific”. Second, the discussion on regional cooperation and cultural communities need to be centered on an “open, multi-layered network” that recognizes “uniqueness and diversity”. Third, the cultural community discussion should encompass politics, security and economy to embrace respect for human and humanity. Fourth, it is necessary to move away from a country-centered perspective and deepen the discussion of the role and relationship formation of various actors.

정책 제안

- 1)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를 우리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지역범주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각종 구상과 제도의 마련 및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III'을 출범시켜 '동아시아 인문·사회·문화 협력체'를 목표로 한 연구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
- 2) '동아시아'를 지역협력의 기본 범주로 설정할 경우, 동아시아협력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나라들은 동남아의 아세안 회원국이다. 따라서 한-아세안 정상회담 등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이 동아시아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공동으로 동아시아협력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 3) '동북아'라는 지역범주는 동북아평화안보협력체, 동북아철도공동체, 동북아에너지공동체, 동북아환경문제 등 한·중·일과 극동 러시아를 포함하는 동북아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지역 범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동북아를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도 계속되어야 한다.
- 4) 동북아의 핵심국가인 한·중·일의 정상회의를 지속하면서 내실을 다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중·일 협력사무국'이 기존에 해온 한·중·일 언론인 교류프로그램, 청년대사 프로그램, 한·중·일 3국협력포럼 등을 더욱 활성화하고, 새로운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 더 좁게는 환동해(일본해)권, 환서해(황해)권 차원의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 6) 한·중·일 및 동아시아 차원의 각종 인적, 사회·문화적 교류가 상호 간에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장소 지원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과의 문화교류를 돕는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

- 7) 젊은 세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동아시아에서 활동할 미래의 '지역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 8) 인적교류 및 사회·문화 협력에서 각종 문턱을 낮추고 장애물을 제거하며, 협력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의 유레일 패스처럼 일정 나이대의 청년들에게만 통용되는 3개월 정도의 '동아시아(동북아) 철도패스'를 검토할 수 있다.
- 9) 상호 간의 생각과 평가를 공유하는 기능을 하는 언론과 SNS 등 각종 여론형성 기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북아 국가들 간의 혐오발언 확산을 막기 위해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네트워크 시행법(Network Enforcement Act)'을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 10)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처럼 인간의 존엄과 인간애를 해치는 발언이나 행위가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주장될 수 없도록 동북아 및 동아시아 각국에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시민단체들이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1) '상반되는 것은 보완적인 것이다(CONTRARIA SVNT COMPLEMENTIA)'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자기와 타자, 자국과 타국, 같은 것과 다른 것을 조화시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우리는 이전에 시도된 적이 있었던 '공동의 역사교과서' 등 공동의 인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동북아문화공동체 정의 6

1. 동북아의 의미 6
2. 문화공동체의 의미 7
3.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 9

제3절 연구방법과 범위 10

제2장 한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 13

제1절 한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 15

1. 지역공동체 논의와 문화공동체 15
2. 문화공동체 논의의 주요 내용과 특징 20
3. 주요 쟁점 29

제2절 한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 전문가 조사 37

1. 방법론 및 조사대상 37
2. 동북아 개념의 인식과 범위 39
3.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필요성과 가능성 47
4. 동북아시아의 정체성과 한·중·일 상호 인식 62
5. 한·중·일 문화적 협력방안 81
6. 소결 93

제3절 한국의 문화공동체 논의의 시사점 94

1. 이론적 시사점	94
2. 정책적 시사점	95

제3장 중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 97

제1절 중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 99

1. 지역공동체 논의와 문화공동체	99
2. 문화공동체 논의의 주요 내용과 특징	110
3. 중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 쟁점과 과제	118

제2절 중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 전문가 조사 127

1. 조사 목적과 특징	127
2. 방법론 및 조사대상	128
3. 동북아 개념의 인식과 그 범위	130
4.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필요성과 가능성	134
5. 동북아시아의 정체성과 한·중·일 상호인식	143
6. 한·중·일 문화적 협력방안	152
7. 소결	157

제3절 중국의 동북아공동체 논의의 시사점 161

제4장 일본의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 165

제1절 일본의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 167

1. 지역공동체 논의와 문화공동체	167
2. 지역공동체와 문화공동체 논의의 주요 내용과 특징	175
3. 주요 쟁점	187
4. 소결	193

제2절 일본의 동북아문화공동체 전문가 조사 195

1. 방법론 및 조사대상	195
2. 동북아 개념의 인식과 범위	198
3.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필요성과 가능성	207
4. 동북아시아의 정체성과 한·중·일 상호인식	226
5. 한·중·일 문화적 협력방안	233
6. 소결	239
제3절 일본의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의 시사점	243
1. 이론적 시사점	243
2. 정책적 시사점	245
제5장 유관국(지역)의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	249
제1절 미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	251
1. 미국과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251
2. 미국 역대 행정부와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논의의 전개	254
3. 문화공동체 논의의 주요 내용과 특징	265
4. 문화공동체 논의의 시사점	273
제2절 러시아의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	276
1. 서론	276
2. 소련/러시아 정부의 아태지역에 대한 지역주의 정책	280
3. 동북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인식	302
4. 시사점과 정책제언	312
제3절 몽골의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	316
1.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와 몽골의 역사적 위치	316
2. 문화공동체 논의의 주요 내용과 특징	330
3. 문화공동체 논의의 시사점	337
제4절 대만의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	341

1. 지역공동체 논의와 문화공동체	341
2. 지역·문화공동체 논의의 주요 내용과 특징	355
3. 지역통합 및 공동체 논의의 시사점	368

제6장 종합분석 및 한국의 대응전략 381

제1절 각국 인식에 대한 비교분석 383

1. 각국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논의 비교	383
2. 각국의 지역협력에 대한 논의 비교	389
3. 각국의 문화협력에 대한 논의 비교	397
4. 한·중·일 전문가 조사 비교	405

제2절 한국의 대응방향과 정책과제 418

1. 한국의 대응방향	418
2. 정책과제	431

제7장 결론 439

제1절 요약 및 연구의 시사점 441

제2절 향후 정책적 과제와 신한반도체제 448

■ 참고문헌	451
■ 부록	471

■ 표 차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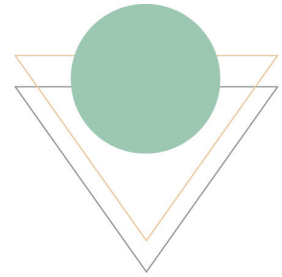
〈표 2-1〉 응답자 전공영역별 분포	38
〈표 2-2〉 응답자 분포	38
〈표 2-3〉 응답자 직업군별 분포	39
〈표 2-4〉 동북아 개념의 인식	40
〈표 2-5〉 동북아 개념의 중·일 확장 가능성	41
〈표 2-6〉 동북아 개념의 중·일 확장 가능성 / 전문가 전공별 분류 (빈도)	42
〈표 2-7〉 '동북아시아'에 포함되어야 하는 국가 혹은 지역	45
〈표 2-8〉 동북아다자협력체의 가능성	47
〈표 2-9〉 동북아다자협력체의 유형별 필요성 비교	52
〈표 2-10〉 동북아다자협력체의 유형별 실현 가능성 비교	54
〈표 2-11〉 정부주도 한·중·일 중심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	56
〈표 2-12〉 동북아에 공통적 정체성이 부재하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	63
〈표 2-13〉 동북아시아 공통 정체성의 바탕을 이루는 요소	71
〈표 2-14〉 한국의 혐종과 혐일 수준	72
〈표 2-15〉 중국의 혐한과 혐일 수준	73
〈표 2-16〉 일본의 혐한과 혐중 수준	73
〈표 2-17〉 중국에 대한 인식 2018-2019년	74
〈표 2-18〉 일본에 대한 인식 2018-2019년	74
〈표 2-19〉 동북아 민간교류 전망	82
〈표 2-20〉 민간교류와 동북아문화공동체	85
〈표 3-1〉 운명공동체의 차원	113
〈표 3-2〉 대국책임의 세가지 유형	114
〈표 3-3〉 중국 인문외교 전략의 목표	123
〈표 3-4〉 응답자 분포	129
〈표 3-5〉 응답자 직업군별 분포	130
〈표 3-6〉 응답자 전공영역별 분포	130
〈표 3-7〉 동북아 개념의 인식	130
〈표 3-8〉 동북아 개념의 중·일 확장 가능성	131
〈표 3-9〉 '동북아시아'에 포함되어야 하는 국가 혹은 지역	132
〈표 3-10〉 동북아다자협력체의 가능성	134
〈표 3-11〉 동북아다자협력체의 유형별 필요성 비교	136
〈표 3-12〉 동북아다자협력체의 유형별 실현 가능성 비교	138
〈표 3-13〉 정부주도 한·중·일 중심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	140
〈표 3-14〉 동북아에 공통적 정체성이 부재하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	143

〈표 3-15〉 동북아시아 공통 정체성의 바탕을 이루는 요소	145
〈표 3-16〉 한국의 혐종과 혐일 수준	147
〈표 3-17〉 중국의 혐한과 혐일 수준	147
〈표 3-18〉 일본의 혐한과 혐중 수준	148
〈표 3-19〉 동북아 민간교류 전망	152
〈표 3-20〉 민간교류와 동북아문화공동체	153
〈표 4-1〉 2017년 일본의 유학생 수 상위 10개국	174
〈표 4-2〉 응답자 분포	197
〈표 4-3〉 응답자 직업군별 분포	198
〈표 4-4〉 응답자 전공영역별 분포	198
〈표 4-5〉 동북아 개념의 인식	198
〈표 4-6〉 동북아 개념의 중·일 확장 가능성	199
〈표 4-7〉 '동북아시아'에 포함되어야 하는 국가 혹은 지역	204
〈표 4-8〉 동북아다자협력체의 가능성	207
〈표 4-9〉 동북아다자협력체의 유형별 필요성 비교	215
〈표 4-10〉 동북아다자협력체의 유형별 실현 가능성 비교	217
〈표 4-11〉 정부주도 한·중·일 중심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	219
〈표 4-12〉 동북아에 공통적 정체성이 부재하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	227
〈표 4-13〉 동북아시아 공통 정체성의 바탕을 이루는 요소	229
〈표 4-14〉 한국의 혐종과 혐일 수준	230
〈표 4-15〉 일본의 혐한과 혐중 수준	231
〈표 4-16〉 중국의 혐한과 혐일 수준	231
〈표 4-17〉 동북아 민간교류 전망	233
〈표 4-18〉 민간교류와 동북아문화공동체	234
〈표 5-1〉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개입 전략	254
〈표 5-2〉 러시아 행정관구 지표별 비중(2014년)	285
〈표 5-3〉 러시아의 수출, 수입에서 중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	288
〈표 5-4〉 2015~2017년 러시아의 동북아 4개국 수출액	289
〈표 5-5〉 2015~2017년 러시아의 동북아 4개국 수입액	289
〈표 5-6〉 2015~2017년 동북아시아 국가별 러시아 방문 관광객 수	296
〈표 5-7〉 2015~2017년 동북아 국가별 방문 러시아인 관광객 수	296
〈표 5-8〉 2012~2016년 러시아인 방문 목적	298
〈표 5-9〉 러시아 내 외국인 유학생 수	300
〈표 5-10〉 2016~2018년 한국 내 동북아시아(미국, 러시아 포함) 유학생 변화 추이	301
〈표 5-11〉 오늘날 러시아인들의 중국 인식	309
〈표 5-12〉 신남향정책강령의 정책목표와 행동기준 요점	373
〈표 5-13〉 대만 2017년 대남향국가 및 중국의 수출액	376

〈표 6-1〉 각국의 동북아 지역에 관한 논의 비교	389
〈표 6-2〉 각국의 지역협력에 관한 논의 비교	397
〈표 6-3〉 각국의 문화협력에 관한 논의 비교	404
〈표 6-4〉 동북아 개념의 인식	406
〈표 6-5〉 동북아 개념의 중·일 확장가능성	406
〈표 6-6〉 '동북아시아'에 포함되어야 하는 국가 혹은 지역	407
〈표 6-7〉 동북아다자협력체의 가능성	409
〈표 6-8〉 정부주도 한·중·일 중심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	410
〈표 6-9〉 동북아에 공통적 정체성이 부재하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	411
〈표 6-10〉 동북아시아 공통 정체성의 바탕을 이루는 요소	412
〈표 6-11〉 한국의 혐중 수준	413
〈표 6-12〉 한국의 혐일 수준	413
〈표 6-13〉 중국의 혐한 수준	414
〈표 6-14〉 중국의 혐일 수준	414
〈표 6-15〉 일본의 혐한 수준	415
〈표 6-16〉 일본의 혐중 수준	415
〈표 6-17〉 동북아 민간교류 전망	416

■ 그림 차례 ■

[그림 1-1]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신한반도체제) 개념도	11
[그림 3-1] 중국 CNKI ‘공동체’ 관련 학술 추세	113
[그림 3-2] 운명공동체 담론구조	113
[그림 5-1] 미국의 공공외교 예산(1980-2017년)	267
[그림 5-2] 미국 공공외교 예산의 지역별 분포(2016년) 기준	268
[그림 5-3] 21세기 스테이트크래프트 어젠다	270
[그림 5-4] 러시아의 시기별 극동 개발 전략의 변화	285
[그림 5-5] 러시아 극동지역 교역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	290
[그림 5-6]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9-Bridge	292
[그림 5-7] 러시아 국민의 대외 인식	310
[그림 5-8] 대만 민중의 통일·독립 입장 추세	371
[그림 5-9] 대만 민중의 대만인/중국인 정체성분포	372
[그림 5-10] 대만 행정원 ‘신남향청책’ 청사진	374
[그림 5-11] 대만의 신남향국가와 중국의 무역총액 및 점유율 비교	375
[그림 5-12] 주요국가 및 신남향국가에서 온 관광객 인구 변화	377
[그림 5-13] 아세안에서 온 관광객 인구 변화	378
[그림 5-14]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의 노선과 범위	379
[그림 6-1] 한·중·일의 상호 인식	419
[그림 6-2] 국가주의와 보편주의의 결합양태	421
[그림 6-3] 한·중·일의 주요 지역주의 구상	424
[그림 6-4]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중심으로 한 각종 지역협력체	425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18년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을 뗀 역사적 변곡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은 1945년 이래 한반도에서 지속되었던 냉전체제 해체의 서막을 열었다. 물론 2019년 2월말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되자, 국내외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극적인 북미 정상 간의 회담과 함께 남북미 3국 정상의 만남이 성사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는 다시 본 궤도에 진입하였다. 2년여 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전쟁 가능성까지 대두되었던 한반도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제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불었던 훈풍과 달리 현재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성·불확실성·복잡성은 증가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이미 북미지역, 유럽지역과 더불어 세계경제의 3대 중심축으로 성장했지만, 동시에 정치군사적으로 미중 전략적 경쟁 및 동북아 국가 간 갈등·대립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7월 6일 중국 수입품 818종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하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본격적인 미중패권경쟁의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동북아 지역의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비핵화, 평화체제 등 여전히 지난한 과정이 예상되는 한반도 문제의 복잡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중국, 일본, 미국 등이 한반도 문제를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한반도 문제의 진전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동북아 지역의 불확실성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해체, 4차 산업혁명과 AI 등 신기술의 등장, 기후, 환경, 식량문제의 가속화, 인구 고령화, 비전통 안보의 등장 등 급격히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한국판 중장기 생존발전전략의 일환으로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동북아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평화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동북아 지역을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통합된 공간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정학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에 더해 북방과 남방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중장기 평화발전 구상이라 할 수 있다.¹⁾

물론 동북아 지역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한 동북아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의 ‘아세안+3’,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공동체’, ‘동북아 균형자’,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모두 동북아 국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책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미국 우선주의)’, 일본의 보통국가화, 중국의 중국몽(中國夢) 등 동북아 국가들의 포퓰리즘적 민족주의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와 인류문명공동체론,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 지구의(儀)를 조감하는 외교 등 동북아 지역을 넘어서는 세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동북아 국가들이 평화와 공존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일종의 정체성(identity)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형성이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출발이라는 것이다.²⁾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상 역시 동북아 국민 간 정서적 유대감을 심화하고 신뢰관계 구축을 통해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조성하는 것이 지역공동체의 공존과 공영에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보고

1)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구상에서 더 나아가 2019년 3·1절 경축사에서 새로운 100년의 미래비전으로 ‘신한반도체제’를 제시하였다.

2) 박승우,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 리뷰,” 『아시아 리뷰』, 제1권 제1호 (2011), pp. 77~83.

있다.³⁾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논의 검토를 통해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이론적이고 현실적인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을 비교·검토하여 실천적 대안 모색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동북아(동아시아)공동체 논의가 한국, 중국, 일본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검토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중·일 각 국가의 학자군(각 20명)을 대상으로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입장과 인식 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유관 국가와 지역(미국, 러시아, 몽골, 대만)의 인식도 확인함으로써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범위를 확장하여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쟁점을 각 국가의 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확인함으로써 선명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단순히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각국의 인식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실현가능성을 전제로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기존 논의와 달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가능성 자체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3) 자세한 내용은 민태은 외,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방안』(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 참조.

제 2 절 동북아문화공동체 정의

동북아문화공동체를 정의하는 작업과 관련해 우선 전제해야 할 것은, 첫째, EU와 같은 지역공동체(문화공동체)와 달리 동북아문화공동체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공동체라는 점이다. 따라서 동북아문화공동체 개념은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자기확증적(self-confirming) 접근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개념정의 작업에서 상정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인식 수준 등에 따라 동북아문화공동체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지역의 한국, 중국, 일본 등은 동북아지역, 문화, 공동체 등을 서로 다른 개념적 범주로 해석하고, 정책에 반영할 때도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다.

셋째, 국가 중심적 시각을 극복해야 한다. 국가 중심적 공동체 구상은 대내적으로는 다양한 이질적인 세력들을 동일화함으로써 지배질서를 정당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다른 지역 및 국가들을 위협하는 공동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전제들을 고려하면서 동북아문화공동체라는 개념을 다양성과 이질성이 공존하는 ‘열린 공동체’로 구상해 보고자 한다.

1. 동북아의 의미

동북아라는 지역 범위를 설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모호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⁴⁾ 국내에서도 동북아라는 지역적 범주를 동일한 지리적 공간으로 인식하는데 있어 여러 이견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내의 국가로 간주되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동북아라는 지리적 범주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의 동북아 논의를 보면, 한국은 주로 대륙에 초점을 맞추지만 일본은 해양을 통한 연계를 중시하고 있다.⁵⁾

또한 동북아 지역 범위 설정 작업은 어떤 국가를 포함하고, 어떤 국가를 배제할 것인가를

4) UN은 세계를 크게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중앙아시아, 중동 등 6개 지역으로 나누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다시 4개의 소지역을 나누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6개국과 준회원 자격의 홍콩, 마카오를 동북아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http://www.un.org/en/sections/where-we-work/index.html>>; <<http://www.un.org/en/sections/where-we-work/asia-and-pacific/index.html>>; <<http://www.unescap.org/subregional-office/east-north-east-asia>> (검색일: 2019.2.13).

5) 오명석 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4~6.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국가들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지역을 둘러싼 역내 국가 간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미국을 제외하고 동북아 지역의 정치, 안보, 경제 등을 논의할 수 없다. 따라서 동북아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미국 역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지역 공동체 논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리적으로 이 지역에 속해 있는 북한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아시아의 지역 범주는 '세계표준시간'과 마찬가지로 유럽적 사고와 기준,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구성되고, 해체 및 재구성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을 재규정하려는 시도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사실 모든 지역은 "끊임없는 재창조와 재정의의 과정에 있는 물리적, 심리적, 행태적 특성들의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혼합물"로서, 그 지리적 경계는 "사회학적 결과를 갖는 지리학적 사실이 아니라 지리학적 형식을 갖춘 사회학적 사실"이라는 점이 강조되기도 한다.⁶⁾

이를 고려하면서 본 연구는 동북아를 동남아와 서로 구분하면서 대등한 지위를 갖는 대칭적 의미의 지역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동북아에 대한 이해는 특정 역사나 유교문화에 바탕을 둔 '문화정체성'에 기반을 두기보다 지역적 근접성에 바탕을 둔 것이다.⁷⁾ 그리고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의 소속 국가를 규정하지 않고, 지역 내 주요 국가 및 유관국(지역)의 동북아, 그리고 지역공동체 및 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선정된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이며 유관국(지역)으로 러시아, 몽골, 대만, 그리고 지역패권 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을 포함하였다. 동북아 지역의 소속 국가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우선적으로 역내 국가들의 인식의 차이를 전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2. 문화공동체의 의미

보통 문화는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어 사회 성원이 공유하는 특정한 삶의 방식 혹은 양식으로서, 사회적 제도들과 세계관, 가치, 윤리, 사고방식 등의 체계"를 말한다.⁸⁾ 그러나 문화라

6) T.J. Pempel(ed.), *Remapping East Asia: The Construction of a Reg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p. 4, 재인용: 박사명, "동아시아공동체의 의의와 과제,"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서울: 이매진, 2008), p. 14.

7) 민태은 외,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p. 7. 이는 동아시아 논의와 관련해서도 동북아 중심적 동아시아 개념 또는 중국 중심적인 동아시아 개념에서 탈피해 새로운 동아시아 개념을 지향하기 위함이다. 즉 동아시아 개념을 단순히 동북아의 외연적 확장이나 중국문화를 이 지역 공통의 문화유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오명석 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p. 6.

는 개념은 “단순히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나 가치관, 사유체계 등을 규정하는 협의적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가치와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역동적 사회현상의 추진동력”으로도 파악된다.⁹⁾ 문화는 표준적인 관습이나 규칙적인 행위를 유발하는 매개체로 공동체 생활의 지속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른바 사회화의 과정 속에서 문화는 특정 지역 사람들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나아가 공동체를 규정하고 유지하는 구성요소로서 작동하게 된다.¹⁰⁾

이러한 문화는 ‘정체성’의 맥락에서 주로 정의되고 논의되어 왔다. 즉, 문화는 특정 시기와 공간의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일상’과 ‘공유 혹은 공통’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¹¹⁾ 문화는 일상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소속감을 형성·강화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점에서 공동체 형성 및 발전의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로 강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화 가운데 정치(안보) 및 경제와 관련된 행위 혹은 현상은 제외한다. 한국에서 동북아문화공동체가 제기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동북아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정서적 유대감을 갖는 지역공동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는 것은 서로를 ‘우리’로 인식하게 하여 단순한 이해관계에 의한 협력과는 달리 강력한 정서적 동기를 갖도록 하기 때문이다.¹²⁾ 이에 기존 논의들이 문화적 동질성을 중요하게 본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 논의들처럼 정치(안보), 경제를 제외한 문화의 동질성에 주목하기 보다는 문화의 차이 인정을 통한 조화와 협력에 주목한다. 문화를 하나의 정체성으로 안과 밖을 구분하는 개념 보다는 차이의 인정을 통한 조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최근의 연구 경향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지역문화의 배타성보다는 포용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¹³⁾

한편, 일반적으로 공동체는 지역적 속성과 관계적 속성을 지닌다. 특정 지역(공간)에서 특정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삶을 영위하는 집단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동체 개념은 안과 밖, 혹은 포함과 배제를 규정짓는 개념, 즉, 포용성과 배타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듯 공동체는 누가 밖에 있는 타자인지를 규정해 내부의 결속을 높이고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체는 지역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상호 작용으로 특징지어지는

8) 김광익·전영평,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I)』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13.

9) 류지성·김형수,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서석사회과학논총』, 제1집 2호 (2008), p. 293.

10) 위의 글, p. 293.

11) 민태은 외,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pp. 7~8.

12) 오명석 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p. 7.

13) 최근의 연구들은 한 사회 내에서도 구성원들 사이의 신분, 계급과 계층, 지역, 종교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관계적 속성과 이념적 성향, 생활양식과 제도 등에 있어서 반드시 동질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문화의 동질성과 배타성 보다는 문화의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정 집단으로 이해된다.¹⁴⁾

그러나 공동체 내부에는 상당한 이질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정체성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이질성을 포용 또는 배제, 억압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민족공동체처럼 공동체를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y)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¹⁵⁾ 사람들은 국가나 민족적 차원에서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많은 상징들을 활용한다. 즉 공동체는 상징적으로 구축된 세계라는 것이다.¹⁶⁾

본 연구는 이를 감안하면서 정치(안보)와 경제를 제외한 문화를 중심으로, 배타성보다는 포용성에 중점을 두고, 위로부터의 공동체 구상과 함께 아래로부터의 공동체 구상의 결합을 통한 열린 문화공동체, 개방적 문화공동체를 지향하고자 한다.

3.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북아’, ‘문화’, ‘공동체’가 개념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동북아 국가들도 서로 다른 개념적 범주로 해석하고, 정책에 반영할 때도 다른 맥락을 가지게 된다. 특히 지역문화(한자, 유교문화 등)에 대한 해석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동북아문화공동체를 구상함에 있어 공동체 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식’에 있어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지역 내 국가들의 공통성과 상이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문화공동체라는 개념이 안고 있는 포용성과 배타성에 유의하면서 배타성보다는 포용성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 물론 이 작업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임에는 틀림없다.

본 연구는 ‘동북아문화공동체’를 동북아 지역 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질적인 것이 공존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문화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열린 개념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동북아문화공동체’를 한 국가 내의 지배집단 또는 지역 내의 패권지향 국가의 문화 중심이 아닌 다양성이 공존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다시 말해 동북아문화공동체를 동북아 지역 국가들 각각의 고유한 전통을 유지하면서 상호존중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지역의 생활세계로 보고자 한다.

14) 민태은 외,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p. 10.

15) 상상된 공동체에 대해서는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83); 앤더슨·윤형숙 옮김,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서울: 나남, 1991) 참조.

16) 김광익·전영평,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I)』, p. 14.

제 3 절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자기확증적(self-confirming) 접근에 대한 반성과 함께 문화 동질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그리고 한·중·일 3국과 유관 국가와 지역(미국, 러시아, 몽골, 대만)의 인식과 정책, 이론적 논의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한·중·일 3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의 학자군(20명)의 입장을 확인하여 국가 간 스펙트럼 뿐만 아니라 국가 내 스펙트럼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쟁점을 각 국가의 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확인함으로써 선명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비교연구방법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기존 논의 및 3국의 학자들의 의견과 함께 유관국(지역)들의 정책, 인식, 이론적 논의 등 각 국가들의 인식과 정책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와 함께 각국의 연구현황을 체계화하는 양적 연구도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동북아공동체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논의의 변천 과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연구 중복성 해소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후속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장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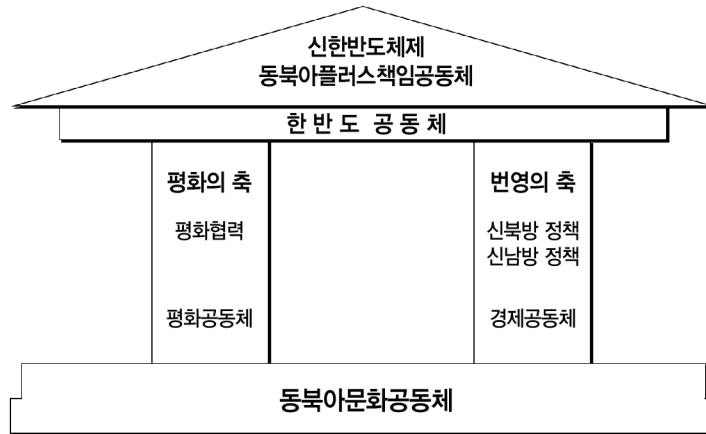
한편, 본 연구는 동북아 국가 간 문화공동체 의식이 평화의 축을 바탕으로 한 안보공동체, 번영의 축을 바탕으로 한 이익공동체(경제공동체)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그림 1-1) 참조).

역내 경제적 이익 공동체와 정치·안보적 평화공동체와 같은 다자적 협력체를 형성하고, 이를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존속시키기 위한 기반으로서 문화공동체의 실현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더 나아가 신한반도체제 실현을 위한 핵심적 과제이자 본 과제의 핵심 목표이다. 하지만 기존의 동북아공동체,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는 동북아문화공동체가 실현가능하다는 가정 위에서 실천방안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데 주력하였다. 본 과제와 기존 연구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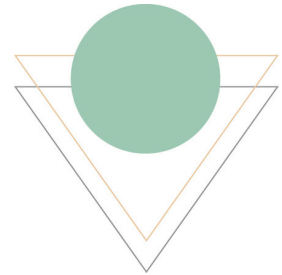
17) 이 작업의 결과는 제2권 『동북아문화공동체 토대 연구(2): 주요국의 연구동향 및 목록』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였다.

차별성이 여기에 있다. 즉 본 과제는 동북아문화공동체가 형성가능성 자체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림 1-1]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신한반도체제) 개념도



동북아문화공동체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북아문화공동체 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한국의 자기 확증적(self-confirming) 접근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동북아공동체’ 형성이 새로운 제안이 아니듯 동북아공동체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한국의 주장,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학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역 협력체(공동체)의 형성은 특정 국가의 일방적인 제안에 의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지역 내 다수국가들 간의 공감과 합의가 핵심이다. 동북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은 각국의 인식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을 구분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동북아라는 지역, 문화 공통성, 경계와 멤버십을 가정하는 공동체(내집단 vs. 외집단) 개념 등을 중심으로 한 설문지를 구성하여 한·중·일 3국의 학자군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각국의 동북아공동체(문화공동체)에 대한 논의와 정책도 연구범위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

한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

제2장 한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

제 1 절 한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

1. 지역공동체 논의와 문화공동체

가. 지역공동체 논의의 등장과 확산

1980년대의 동아시아¹⁸⁾에 대한 세계 학계의 관심은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근대화론’에 입각한 국가발전이라는 낙관적 전망과 달리 현실에서는 후진국 및 신생독립국들의 저발전이 보편화되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저발전은 아시아에서 자본주의 성장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막스 베버의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갖게 만들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일본의 경제성장, 1980년대에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이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부상하자, 그 원인을 추적하는 사회과학 및 인문학적 논의를 통해 ‘동아시아 발전모델론’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 가운데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공을 서양과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사회문화적 특성에서 찾는 논의들도 존재했고, 이 같은 논의는 1990년대에 ‘아시아적 가치론’으로 확대되었다. 아시아적 가치론은 동아시아의 성공에 작용한 문화적 요소들을 ‘아시아적 가치’란 개념으로 정리하고

18) 한국은 자신이 속한 지역을 동북아, 동아시아,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으로 지칭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동북아 중심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있는데, 이러한 문화적 요소 중에 핵심적인 것으로 유교문화를 강조하는 ‘유교자본주의’ 논의로까지 발전시켜 나갔다.¹⁹⁾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대부터 급속히 진행된 경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화와 이를 주도한 신자유주의의 확산, 그리고 제3의 민주화 물결,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지역주의 강화 등이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혹은 지역공동체²⁰⁾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더구나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탈냉전의 도래 속에서 경제협력, 나아가 경제공동체 구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럽의 다자안보협력 사례와 같은 동아시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형성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더구나 1990년대 말에 동아시아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역내 국가들은 경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지역공동체 구상)를 보다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²¹⁾

이에 따라 이론적 논의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1997년 ASEAN+3 정상회의, 1999년 동아시아 협력선언, 2001년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보고서 채택, 그리고 2005년에 시작된 동아시아정상회의 등을 통하여 국가 간의 지역협력 논의가 진행되어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과 중국의 지역패권을 둘러싼 경쟁 및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 등이 맞물려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지역공동체 논의도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한국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갔다. 특히 한국은 분단 및 한반도문제의 특성 등을 고려한 군사안보 분야의 지역협력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 시작했다.²²⁾ 1990년대 들어서는 세계화와 탈냉전적 상황 속에서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나가기 시작했고,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구상에 대한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나갔다.

인문학계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동아시아 지역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19) 박승우, “동아시아 담론의 현황과 문제,”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서울: 이매진, 2008), p. 318. 아시아적 가치론이나 유교자본주의론은 서구 학계보다는 동아시아 내의 학계 및 정계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20) 지역 공동체는 지역협력(낮은 수준)과 지역통합(높은 수준) 사이에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이다. 박사명, “동아시아공동체의 의의와 과제,”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서울: 이매진, 2008), p. 23. 본 글에서는 지역공동체를 지역통합 이전 단계로 파악하고, 다양한 수준의 공동체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

21) 박승우, “동아시아 담론의 현황과 문제,” p. 313.

22) 1988년 10월 노태우 대통령은 제48차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의회’의 창설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후 역대 정권마다 지역협력에 대한 정책과 구상을 제시해 오고 있다.

다. 이들은 동아시아 각국이 유사한 가치체제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 구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의 지역공동체 논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나갔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진행되어 나가면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후 한국의 지역공동체 논의는 군사안보와 경제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 주류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한국의 지역공동체 논의는 대체로 지역협력과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²³⁾

우선 첫째, 군사·안보적으로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테러, 국제조직범죄, 무기밀매, 불법이민, 마약, 환경오염 등의 새로운 안보 위협 요소들이 주요한 안보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 위협 요소들은 국가들의 협력에 기반한 공동대응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둘째, 지역 군사강국의 패권추구에 따른 안보환경 악화를 방지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G2로 부상한 중국과 미국의 지역패권을 둘러싼 경쟁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면서 지역강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 등이 현재 역내 안보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역강국 간의 경쟁으로 인한 안보환경 악화를 방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이 지역의 경제발전으로 역내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상호작용의 결과 파생되는 환경문제나 불법이민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세계경제에서의 한·중·일의 비중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협력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한다면 그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협력 및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여러 국가들에서 여러 가지 제안과 함께 외교적 노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협력이 어려운 이유를 많은 논의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²⁴⁾

첫째, 역내 국가 간 신뢰의 수준과 대화의 전통이 약하고, 체제 및 문화적 동질성이 미약한

23) 이하의 지역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무철,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윤대규 엮음,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파주: 한울, 2009), pp. 238~239의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 이 글은 다자안보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기서 제시된 요인들은 대체로 일반적인 지역협력 및 공동체의 필요성을 논의할 때도 항상 언급되는 내용들이다.

24) 이하의 내용은 위의 글, pp. 237~238의 내용을 재정리 및 보완한 것이다.

다양한 배경과 이익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북아 지역이 국제정치로 편입되는 과정은 제국주의의 확산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성공적으로 근대화를 이루었지만, 중국은 반식민지 상태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한 제국주의 시대를 지나서도 중국, 한국 등은 근대적 의미의 민족국가 건설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한국은 분단된 채 서로 상이한 체제를 건설해나갔고, 일본은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의 부족으로 과거청산 문제와 관련해 주변국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역내 국가들의 체제의 상이함, 역사적 반목과 신뢰의 부족으로 인해 다자주의적 대화의 전통이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역내 국가들 간의 영토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일, 중일, 러일 간 등 지역 국가들 사이에서 양자 간 영토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실제로 영토문제처럼 중대한 국가이익이 걸린 문제를 다자주의에 입각해 해결하려는 국가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유럽안보협력 회의도 독일(당시 서독)과 소련,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 문제가 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이 지역에서 다자주의적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양자주의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일, 한미, 북중 동맹체제의 지속으로 동맹관계와 다자 간 협력 사이의 관계(특히 안보협력)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이해당사국의 견해가 엇갈릴 수 있어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지역협력 및 공동체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역협력에 대한 논의는 경제협력이나 군사·안보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와 안보협력 논의는 공동체 내의 정치경제적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진통을 수반하게 된다.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보다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 지역공동체 형성의 핵심동력으로서의 문화공동체 논의

한국에서 지역 내 정치·경제적 환경에 민감한 군사안보협력이나 경제협력, 나아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2000년대부터 문화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정치 및 군사·안보적 이질성이 큰 동아시아(동북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 환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포괄성과 다양성, 그리고 다원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문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형성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문화공동체를 지역공동체 구성의 시발점 또는 과도단계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형태로 파악하고 있다.²⁵⁾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노무현 정부 시절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나가기 시작했다. 당시 동북아문화공동체를 강조하는 주장들은 동북아문화공동체가 궁극적으로 동북아평화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평화공동체 수립을 위한 첫 단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공동체를 기반으로 한다면 동북아의 경제·안보·평화 공동체로 점차 확대·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공동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의 증진, 그리고 타문화 수용을 통한 인식 변화는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²⁵⁾

이러한 전제 아래 지금까지 진행된 한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문화공동체 형성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방안,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실태 및 현황에 관한 연구 등이었다.²⁷⁾ 문화공동체 모델의 구상에 있어서는 주로 유럽연합의 사례 및 정책과의 비교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²⁸⁾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한류’ 바람을 문화공동체 형성과 연결하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특히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 한류의 상품화가 주된 관심사였다.²⁹⁾ 이러한 연구들은 동북아문화공동체 기반 형성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으며, 지역 내 다른 국가들 보다는 선도적인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실에서 실행 단계로 진입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지역공동체 논의와 마찬가지로 문화공동체 논의도 정치적 목적이거나 경제적 목적을 위한 문화협력의 활용 가능성 때문에 지역 내 국가들의 폭 넓은 합의 도출에 있어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³⁰⁾ 사실 한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들 가운데 순수한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위해 문화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논의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에서 공동체 추진의 주체로 상정한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 역사적으로 과거부터 갈등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 국가들 간의 사회문화적 접촉은 거의

25) 류지성·김형수,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서석사회과학논총』, 제1집 2호 (2008), p. 288.

26) 위의 글, p. 290.

27) 김광익·전영평,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서울: 통일연구원, 2004); 김국신 외,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Ⅱ): 종합편』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 통일연구원,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4); 김우준 외, 『동북아 문화공동체 한중일 시각 비교와 협력방안 모색』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 전재경 외, 『동북아 문화공동체 연구(Ⅲ): 법적접근체계개발』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 한만길 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의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4); 윤경철·오해섭,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4); 문옥표 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4) 등을 참조.

28) 김명섭 외,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서울: 통일연구원, 2004) 참조.

29) 문옥표 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 중국, 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4) 등을 참조.

30) 류지성·김형수,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p. 289.

단절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식민지 역사로 인해 수교 이후에도 양국 간 문화적 소통은 거의 단절되어 있다가 1990년대 들어서야 문화교류 및 협력이 서서히 진행되어 나갔다. 사실 한일 양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과의 문화적 소통을 급격히 진행해 왔기 때문에 상호 문화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다. 중국의 경우에는 체제의 성격상 개혁개방 이전에는 지역 내 국가들과의 문화교류는 거의 없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부터 서양문화 유입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지역 내 국가들과의 문화적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또한 한·중·일 3국의 문화적 정체성으로 거론되는 한자문화나 유교문화의 경우에도, 한국이나 일본 모두 한자나 유교의 수용과정에서 각기 다른 고유문화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사실 한·중·일의 문화적 동질성(또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공동체 논의 및 형성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2. 문화공동체 논의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지역협력 정책과 문화외교

한국에서 2000년대부터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동북아문화공동체를 구상하거나 제안한 적은 없었다. 노무현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라는 목표를 내걸고, 군사안보 및 경제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안정적인 지역질서와 공동체형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갔다. 이와 관련한 논의과정에서 학계에서 문화공동체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정책적 측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한편, 1990년대부터 한국정부는 자국의 국력에 맞는 위상 정립과 함께 세계에 한국문화를 알리면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문화를 활용한 ‘문화외교’를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부터는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외교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한국정부는 21세기 들어 국부 창출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 문화를 활용한 대외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외교를 전개해 나갔던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정부는 지역 공동체 추진의 핵심 동력으로 문화를 활용하거나 문화에 기반을 둔 지역공동체 형성을 제안하지 않았다. 다만 지역협력과 관련해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증진과 활성화를 강조할 뿐이었다.

1980년대 말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당시 노태우 정부는 적극적인 북방정책을

추진해 나갔고, 그 결과 중국, 소련과의 수교를 통해 한반도 주변 4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완성했으며,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수교를 통해 외교의 다변화를 이루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노태우 정부는 지역의 안보협력을 위한 동북아 평화협의회 창설을 제안하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통일 환경 조성에 주력하였다. 한편, 세계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냉전의 해체를 계기로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함께 세계화의 물결이 급속히 진행되어 나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1993년 첫 문민정부가 탄생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의 개혁과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 아래 김영삼 문민정부는 ‘신한국외교’를 천명하면서 이를 위한 5대 기조를 설정하고 외교정책 방향을 구체화 하였다. 신한국외교는 당시 한국이 처한 국제환경을 전환기적인 도전으로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인 기회로 활용하여 미래지향의 외교를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신한국외교는 세계화, 다변화, 다원화, 지역협력, 미래지향의 5대 기조로 되어 있는데, 세계화와 다변화는 세계화 및 탈냉전이라는 세계 흐름 속에서 우리의 외교를 다변화함으로써 세계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계 평화에 공헌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다원화는 기존 안보부문에 집중되어 있던 국제질서의 변화로 경제력을 중심으로 한 환경, 문화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외교의 대상 분야를 다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협력은 세계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의 지역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태 경제협력체(APEC)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 외교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은 당시 국제관계의 기본 조류이었던 개방과 국제화를 위한 외교, 그리고 당시 이러한 시대조류에서 고립되어 있던 북한을 합류하도록 하는 통일외교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³¹⁾

그러나 한국은 1997년 말 발생한 금융·외환위기로 인해 국가적 어려움에 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는 경제외교에 집중하면서 무역 자유화, 자본시장 개방 등의 급격한 세계화에 대응해 나갔다.³²⁾

김대중 정부의 지역협력 정책도 이러한 경제외교를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협력 정책을 펼친 김영삼 정부와 달리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체 창설을 주창하였다.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함께 겪고 있는 금융·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화에

31) 외무부, 『외교백서 1994』 (서울: 외무부, 1994), pp. 15~21.

32) 외교통상부, 『외교백서 1999』 (서울: 외교통상부, 1999).

대한 지역적 차원의 공동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동아시아를 범주로 한 지역협력 정책은 역내 국가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어낼 수 있었다.

동아시아공동체의 실현을 주창한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베트남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 회담’에서 민간인에 의한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East Asian Vision Group)의 창설을 제안했고, 2년 뒤에는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East Asian Study Group)을 제안했다. 또한 동아시아포럼(EAF: East Asian Forum)의 창립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³³⁾

한편, 김대중 정부는 문화외교 활성화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데도 역점을 두었다. 물론 경제 외교의 측면에서 문화를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당시 문화의 세기라고 지칭되는 21세기를 앞두고 세계 각국은 자국 문화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문화를 경제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도 문화가 산업화되는 세계적 흐름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문화외교를 추진한 것이다. 특히 독창적이고 우수한 한국문화 홍보를 통해 국가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문화산업 육성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다.³⁴⁾

노무현 정부 시기의 지역협력 정책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로 요약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는 다른 국정목표에 비해 그 달성에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는 중장기 국가전략이자 비전으로 정의되기도 했다. 이러한 동북아시대구상은 “동북아의 조화로운 지역질서와 공동체형성을 위한 지역전략이자,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전략이며, 국가적 역량과 국제경쟁력 강화, 그리고 온 국민의 상호협력과 국민 복리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규정되기도 했다.³⁵⁾

동북아시대 구상의 주요 특징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파악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구상’을 천명한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동아시아를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즉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 3국으로 구분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동북아와 동남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공동체 구현을 주장했지만, 동남아에는 ‘아세안’이 존재하는데 비해 동북아에는 이러한 구조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³⁶⁾

동북아시대 구상의 주요 특징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파악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동아시아구상’을 전개한데 비해, 노무현 대통령은 동아시아를 동남아와 동북아, 즉 아세안과 한·중·일 3국으로 구분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동북아와 동남아를 포괄하는

33) 배기찬, “동북아시대구상의 현실과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24권 제1호 (2008), p. 165.

34) 외교통상부, 『외교백서 1999』 (서울: 외교통상부, 1999) 참조.

35) 동북아시대위원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 (서울: 동북아시대위원회, 2005), p. 7.

36) 배기찬, “동북아시대 구상의 현실과 과제,” p. 165.

동아시아공동체 구현을 주장했지만, 동남아에는 ‘아세안’이 존재하는데 비해 동북아에는 이러한 구조가 없다는 점에 착목했다.³⁷⁾

노무현 정부에 이어 등장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 키워드는 ‘실용외교’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정지표인 선진일류국가 구현을 위해 성숙한 세계 국가를 목표로 창조적 실용외교를 전개하고자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외교의 지평을 동북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범아시아 지역, 중동,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확대하여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는 아세안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과 ‘신아시아 협력외교’를 추진하는 동시에 중앙아시아, 중동, 중남미 국가들과 자원·에너지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였다.³⁸⁾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라는 기조 아래,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관계 안정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 실현’,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와 공공외교 확대’, ‘경제외교를 통한 경제부흥 선도’ 등 6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갔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신뢰에 입각한 새로운 동북아 다자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한반도와 아시아, 유럽을 연결해 하나의 대륙으로 만들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이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³⁹⁾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지역 협력을 위한 구상 및 제안을 하였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은 거의 없었고, 결과적으로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현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지표 아래, 외교 분야에서 ‘해외 체류 국민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주변 4국과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라는 6개의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⁴⁰⁾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대외 및 지역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 구상은 동북아 지역이 한국의 생존과 번영의 핵심 지역이지만,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북방과 남방으로 협력의 영역을 확장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이 구상은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평화와 공동 번영을

37) 외교통상부, 『2004 외교백서』 (서울: 외교통상부, 2004), pp. 163~164.

38) 외교통상부, 『2009 외교백서』 (서울: 외교통상부, 2009), pp. 18~20.

39) 외교부, 『2014 외교백서』 (서울: 외교부, 2014), pp. 23~26.

40) 외교부, 『2018 외교백서』 (서울: 외교부, 2018), p. 17.

추구하는 ‘책임’있는 주체가 되어야 함을 표방하고 있다.⁴¹⁾

문재인 정부가 구상한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에서 ‘플러스’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지리적 공간의 확장이다. 한국의 주된 관심지역은 동북아이지만, 동북아에게만 집중할 경우 지역적 대립 구도와 안보 딜레마에 빠져 창의적이고 유연한 정책 추진이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동북아 4국 외교를 넘어 북방과 남방으로 확장하여 대륙과 해양을 포괄하는 지역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외교에서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던 아세안 국가들과 인도 등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둘째, 협력 이슈의 확장이다. 안보협력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과 사회문화적 협력의 확대, 그리고 공공외교의 증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⁴²⁾

이러한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는 평화의 축과 번영의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평화의 축을 건설하기 위해 제시된 안이 바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마련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평화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자협력체제의 구성을 추진한다. 번영의 축 건설을 위해 제시된 것이 바로 신남방과 신북방정책이다.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여 동아시아의 번영을 위한 가교의 위상을 정립하면서, 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다각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⁴³⁾

지금까지 살펴본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지역협력 정책은 전 세계적 흐름에 적극 대처하면서 남북관계 및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외전략적 차원에서 수립·추진되어 왔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범위는 당시 국제환경의 변화 및 한국의 능력 등을 고려하는 가운데 설정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김영삼 정부 시절, 세계화와 탈냉전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협력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당시 한국사회에서의 ‘아시아·태평양 시대’라는 담론은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미동맹, 그리고 한국의 경제적 능력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춰 구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의 범위는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동아시아 지역으로 변화한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외환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협력 문제가 강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나가면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슬로건이 제기된다. 당시 북핵문제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문제 해결 없이는 동남아와 동북아를 아우르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실용외교나 신뢰외교를 표방하면서 지역협력도 강조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지역협력 문제를 등한시켰다고 할 수

41) 이규창 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 43.

42) 위의 책, p. 48.

43) 위의 책, pp. 49~50.

있다.

한편, 문화외교는 1990년대 들어 강조되기 시작했지만, 지역협력과 연계한 문화외교 전략을 수립하지는 않았다. 한국의 문화외교는 세계적으로 군사력보다는 경제력을 비롯한 사회문화적 역량 등이 중요해지면서 강조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림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여 한국의 국력에 맞는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와 경제의 연계라는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문화산업을 육성하여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구상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다. 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을 바탕으로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 그리고 유라시아 지역의 협력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와 안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지역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나. 문화공동체 대한 이론적 논의

한국의 지역공동체 논의는 정부의 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견인하는 역할도 해왔다. 이러한 지역공동체 논의는 대체로 경제와 안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노무현 정부 들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화공동체 대한 논의는 인문사회연구회(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주된 내용은 동북아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 주요 정책, 그리고 유럽문화공동체와의 비교 연구, 문화공동체에 대한 한·중·일 시각 비교,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 등이었다.

이 연구들은 대체로 다음의 내용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해 나갔다.

첫째, 동북아공동체의 구상은 국가와 민족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다. 즉 동북아공동체 구상은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통한 지위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며, 한국의 안정과 번영을 지역과 함께 모색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의 긴장과 갈등 속에서 모색할 것인가와 관계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다.⁴⁴⁾

둘째, 동북아문화공동체가 해당 국가들의 공동 노력과 상호협력 없이는 불가능함을 인정한다. 국가 내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세대에 따라 세계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생활양식에 있어서 서로

44) 김광익·전영평,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I)』, pp. 3~4.

차이가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들이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시각과 성향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향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⁴⁵⁾

셋째, 동북아공동체 구상을 실제로 추진해 나갈 때 많은 난제에 직면할 것임을 인정한다.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한·중·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3국 사이에서 함께 만들어갈 동북아공동체의 모습이나 상호 공유할 명분과 공동이익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거의 없다. 사실 이런 기본적인 핵심적인 문제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과 갈등이 복합적으로 중첩되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한·중·일 3국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로서 상호 반목해 왔으며, 냉전 시기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념과 체제로 대립·경쟁하기도 했다.⁴⁶⁾

대체로 한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는 이러한 전제와 현실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문화공동체 형성의 비전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동북아문화공동체,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동북아 문화가치 창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공동체 건설”⁴⁷⁾ 등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공동체 건설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과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공동체 형성의 과제와 한국의 역할 논의의 토대연구로서 유럽문화공동체와의 비교 연구도 진행되었다. 김명섭 외의 연구는 동북아문화공동체 개념은 문화에 기반을 둔 공동체라는 것과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공동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문화공동체 구상은 ‘유산으로서의 공동체’와 ‘프로젝트로서의 공동체’라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자가 역사와 문화유산의 총량을 중요하게 본다면, 후자는 문화유산의 동질성 회복과 활용을 강조한다. 따라서 ‘프로젝트로서의 동북아’는 ‘유산으로서의 동북아’에 대한 재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보편성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구상인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역사적 단절이나 문화의식의 전환이 아닌 역사와 문화의 발전적 계승을 의미한다는 것이다.⁴⁸⁾

이 연구는 유럽문화공동체 사례의 경우, ‘유산으로서의 문화공동체’를 바탕으로 그 유산을 활용하고 미래를 향한 ‘프로젝트로서의 문화공동체’ 형성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현재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와 관련해 동질성으로 제시되고 있는 요소들은 대체로 중국 중심적 성격이 강하다. 이로 인해 유산으로서의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은 중국 중심적 문화의

45) 위의 책, p. 20.

46) 위의 책, p. 37.

47) 위의 책, pp. 42~63.

48) 김명섭 외,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pp. 9~17.

복원이 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동북아는 ‘유산으로서의 동북아’가 아닌 ‘프로젝트로서의 동북아’를 구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⁴⁹⁾

또한 한국의 문화공동체 논의에서 주요 국가로 설정되고 있는 한·중·일의 시각과 인식을 비교하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문화공동체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일본의 경우에, 19세기말 ‘아시아연대론’을 그 시발로 해서 아시아를 지배하고자 했던 침략적 대외정책을 정당화했던 ‘대동아공영권’ 등의 유산 때문에 전후에도 일본의 지역정책에 대해 주변 국가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동북아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유교와 한자 등의 문화전통을 강조하거나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유대와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공동체 논의의 서구 중심적 사고, 문화질 동질성의 전제, 국가중심적 발상 등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 한·중·일을 중심으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전개되기도 하였다.⁵⁰⁾ 이와 관련해 한 연구는 동북아문화공동체 개념보다 동북아 문화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⁵¹⁾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우영 외의 연구는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거버넌스 개념을 활용한 정부, 시민사회, 기업의 공동참여 방식과 역할을, ‘문화의 주체로서 시민사회’, ‘문화산업적 측면에서 관련 기업’, ‘문화인프라 제공자로서의 국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특히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 국내차원과 국제차원으로 구분하여 국내차원에서는 문화공동체 형성의 내적 기반 구축을, 국제적 차원은 방송과 연결하여 관련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갈등 해소를 위한 문화홍보의 방안을 모색하였다.⁵²⁾

이밖에 학계에서도 2000년대 들어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문화공동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나갔다. 김봉진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건설의 핵심은 개인적인 국가적 정체성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정체성 안에 있는 문화의 다양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⁵³⁾ 이남희는 동북아 지역 정체성과 관련해 그 성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역

49) 위의 책, pp. 85~96.

50) 오명석 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서울: 통일연구원, 2004); 김우준 외, 『동북아 문화공동체 한중일 시각 비교와 협력방안 모색』 등 참조.

51) 김명섭 외,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pp. 99~103.

52) 이우영 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거버넌스의 관점에서』(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

53) 김봉진,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문화: 한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세계정치』 7권 제28집 1호 (2007), pp. 135~137.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가 아닌 복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구성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동북아 정체성 문제에 접근하였다.⁵⁴⁾ 류지성·김형수는 정책공동체와 거버넌스의 맥락에서 비정치적이고 비경제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보다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모델을 구상하기도 했다.⁵⁵⁾

이처럼 동북아문화공동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와 주장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문화공동체 구상과 관련해 지역의 상이한 이념과 체제, 역사적 경험, 문화적 이질성 등으로 인한 구상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매개로 한 문화공동체 추진을 통한 상호신뢰 구축은 경제, 안보 등을 포괄하는 공동체 형성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사실 지역공동체 및 문화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연구들이 어떤 시각과 담론적 입장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과 정책적 제언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담론들을 네 가지로 정리한다.⁵⁶⁾ 첫째, 동아시아경제공동체 담론, 둘째, 동아시아 지역 강국의 패권추구와 연결하여 지역주의를 논의하는 지역패권주의 담론(정치 안보적 동아시아 담론), 셋째, 동아시아의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이 지역만의 특수한 지역체제를 구상하는 동아시아 아이덴티티 담론, 넷째, ‘대안적 공동체로서의 동아시아’ 또는 ‘대안체제’ 담론 등이다.

동아시아 아이덴티티 담론이나 대안체제 담론은 인문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 지역공동체 및 문화공동체 논의를 보면, 국가의 정책적 목표를 반영하고 있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 평화 구축 및 경제적 번영을 위한 지역공동체, 나아가 문화공동체 구상이었다. 이에 따라 정책과 연계된 문화공동체 논의의 대부분은 이 지역의 문화적 이질성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등에 입각한 문화공동체 논의가 부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어쨌든 노무현 정부 시절의 동북아 시대 구상 정책과 맞물려 동북아공동체 및 문화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이후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문화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거의 10여 년 동안 문화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다가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라는 정책적 구상이 제시되면서 다시 문화공동체에

54) 이남희, “동북아문화공동체의 정체성과 그 구축방안,” 『동양사회사상』, 제11집 (2005), pp. 96~97.

55) 류지성·김형수,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pp. 287~314.

56) 박승우, “동아시아 담론의 현황과 문제,” pp. 310~321; 박승우,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 리뷰,” 『아시아리뷰』, 제1권 제1호(2011), pp. 63~89.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⁵⁷⁾

이러한 한국의 문화공동체 논의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우선 첫째, 정부의 지역정책과 연계되어 연구가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하게 정권의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활발히 연구되었던 문화공동체 논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화공동체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이 있다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위의 특징과 연결되어 한국의 문화공동체 논의는 남북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공동번영, 나아가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한국의 입장에서 지역을 동북아로 한정할 뿐만 아니라 이를 주도할 주요 국가로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을 선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 내 다른 국가들, 또는 지역적 범위를 넓혀 고민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고 있다.

넷째, 문화적 다양성을 토대로 한 문화공동체 구상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공동체를 구상할 필요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3. 주요 쟁점

가. 지역의 범위 설정 문제

한국의 지역공동체 및 문화공동체 논의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아·태), 동아시아, 동북아 등으로 범주화 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대적 변화와 정부의 주요 관심사 및 이해관계 등에 따라 지역의 범위 설정도 달라져 왔다.

그런데 각각의 지역 명칭이 어떤 지역 범위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매우 모호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동북아시아위원회는 동북아의 범주를 지리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지리적 측면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몽골을, 기능적 측면에서는 미국과 ASEAN까지 포함 시켰다.⁵⁸⁾ 노무현 정부가 제시했던 동북아 개념은 남북한과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지역공동체 논의는 한·중·일 3국 중심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대체로 동북아라는 지역 범주를 사용하는 연구들은 지리적으로는 남북한, 중국, 일본, 극동 러시아를 포함하고, 문화적으로 남북한, 중국, 일본을, 지정학적으로는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에 미국

57) 민태은 외,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

58) 동북아시아위원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 p. 12.

을 포함하기도 한다.⁵⁹⁾ 1990년대 동아시아를 다루는 역사·인문학계의 논의에서도 동아시아를 한국, 중국, 일본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이 가운데 한자문화권, 유교문화권 등을 주장하는 논의들은 여기에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등을 추가하는 정도였다. 즉, 동북아와 동아시아를 등치시켜 개념화하는 경향이 강했다.⁶⁰⁾

지역의 범위 설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의 지역공동체 및 문화공동체 논의는 어떤 지역적 범위를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 중심주의’가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의 동북아에 대한 인식은 한국과 상이하다. 동북아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인식을 보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와다 하루키는 동북아시아에 한·중·일과 북한, 몽골, 미국, 러시아 등 7개국과 대만, 오키나와, 하와이, 사할린, 쿠릴열도 등 5개의 섬을 포함시키고 있다.⁶¹⁾ 이는 한국의 동북아 범위 논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와다 하루키의 주장은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자국의 이해관계와 연계되어 있는 인근 도서들을 중요시하는 일본의 입장과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동북아 논의가 주로 대륙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동북아 논의는 해양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⁶²⁾ 일반적으로 일본은 동북아보다는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라는 개념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동북아나 동아시아라는 개념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중국은 ‘중국 대 세계’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나 동북아는 중국이 소속된 지역이 아니라 자신이 관심을 갖는 대상 지역 중의 하나, 그리고 중국을 둘러싼 변방으로 보는 것인 일반적인 시각이다.⁶³⁾ 물론 1990년대 이후부터 중국 정부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적극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정부가 바라보는 동아시아는 동남아를 포괄하는 광의의 동아시아로, 한국이 생각하는 동북아를 중심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⁶⁴⁾

이를 감안할 경우, 한국의 지역공동체 논의는 자문화중심주의에 매몰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며, 정책적 측면이나 이론적 측면에서도 내부적 논의에 머물 뿐 대외적으로 관심과 지지를

59) 배기찬, “동북아시아대구상의 현실과 과제,” p. 151.

60)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동아시아를 동북아뿐만 아니라 동남아까지 포괄하는 광역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대세가 되고 있다. 박승우,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 리뷰,” p. 62.

61) 와다 하루키, 이원덕 옮김,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서울: 일조각, 2004) 참조.

62) 오명석 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pp. 4~5.

63) 백영서, 『동아시아의 귀환: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0); 장인성, “한국의 동아시아론과 동아시아 정체성,” 『세계정치』, 제26권 2호 (2005), pp. 3~26.

64) 이종석, 『‘동아시아’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성남: 세종연구소, 2011) 참조.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1990년대 주로 사용했던 동아시아라는 개념이 2000년대 들어와 동북아라는 개념으로 대체되면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동북아와 동아시아는 서로 혼용 가능한 개념으로 보는 입장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할 개념이라는 입장이 존재하나 최근의 경향은 후자가 대세가 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역사·인문학계의 주된 입장이었다. 특히 이들은 지역 설정의 기준으로 공동의 문화유산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역의 특성으로 한자문화, 유교문화 등의 중국문화를 수용하고 이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아 형성한 문화유산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⁶⁵⁾ 이와는 달리 후자의 경우, 동북아 또는 중국 중심적인 동아시아 개념에서 탈피한 새로운 동아시아 개념을 강조한다. 그리고 동북아와 동남아 지역을 구분하면서 대등한 지위를 갖는 지역으로 동아시아의 하위 지역을 구성한다. 즉 동아시아는 단순히 동북아의 확장이 아닌 새로운 지역 개념이며, 더욱이 과거의 중국문화를 이 지역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⁶⁶⁾

일반적으로 지역의 범위 설정 문제는 어떤 국가들을 포함하고 배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한국이 자신과 함께 중국, 일본을 이 지역의 핵심적인 국가로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중국과 일본이 설정한 지역의 범위는 다른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의 범위 설정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나. 문화적 동질성 문제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공동체와 관련해 역사·인문학계에서는 서양의 시각과 담론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서양 담론에 의하여 배제되었던 아시아 혹은 동양의 것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반면에 사회과학계에서는 역내 국가들의 정치, 군사, 경제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지역협력 및 공동체 구상의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논의들이 결합되어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혹은 문화공동체의 동질적 문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⁶⁷⁾ 어쨌든 지역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것을 문화에서 찾고 있는 논의들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문화적

65) 백영서, “프롤로그: 주변에서 동아시아를 본다는 것,” 정문길 외 편,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p. 16.

66) 오명석 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p. 6.

67) 위의 책, pp. 47~48.

동질성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의 지역 정체성 또는 문화공동체의 기반으로서의 동질적인 문화로 주로 유교문화나 한자문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 연구는 이러한 문화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유교자본주의, 아시아적 가치론까지 확대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은 이들 연구가 문화적 동질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유교문화권, 한자문화권 등에 비판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의 비판은 소위 유교문화권, 한자문화권이라는 개념 자체도 어떻게 보면 서양의 시각과 담론에서 구성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서양과 대비하여 동양적 특성을 전제로 우월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⁶⁸⁾ 이러한 비판은 주로 문화인류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는데, 이들은 문화연구는 역사적이면서 상황적이어야 하며, 담론보다는 실천적인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⁶⁹⁾

다시 말해 유교문화권이나 한자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문화적 동질성 주장은 ‘자아 오리엔탈리즘’⁷⁰⁾ 또는 ‘역 오리엔탈리즘’⁷¹⁾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적 동질성을 비판하는 연구들은 한 사회의 문화를 어떤 고정적이고 불변의 실체로 보지 않고, 항상 변화하면서 갈등·경쟁하는 역동적인 것으로, 내적으로는 다양한 문화요소를 포괄하고 있는 다문화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를 단일기준으로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는 작업은 역사적·사회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문화적 동질성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사회적 사실보다는 추상성이 강한 논리적 구성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사실 현실에서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를 유교문화권 혹은 한자문화권으로 묶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우에도 문화를 수용 및 내재화 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였으며, 근대 이후에는 문화적 교류보다는 단절의 역사가 더 길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세 국가의 유교문화

68) 이와 관련해서는 서구 중심주의적 사고와 타자화의 문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룬다.

69) 오명석 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p. 48.

70) 오리엔탈리즘은 근대 서구의 시각으로 비서구 지역(동양)을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묘사하고, 가르치고, 다루는 모든 사고방식이나 관점을 말한다. 이것은 비서구를 타자화 하고, 서구와 비서구를 선진과 후진, 문명과 야만 등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 에드워드 사이드, 박흥규 역, 『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고, 2007). 이 개념에 기반을 둔 자아 오리엔탈리즘은 서구가 만든 오리엔탈리즘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스스로 수용 또는 내면화(모방과 추종) 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아리프 딜릭, “역사와 대립되는 문화인가?—동아시아 정체성의 정치학,” 정문길 외 편,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0), pp. 80~112.

71) 아리프 딜릭은 자아 오리엔탈리즘과 역 오리엔탈리즘의 의미를 별로 구분하지 않지만, 박승우는 이를 구분하여 역 오리엔탈리즘은 자아 오리엔탈리즘과 달리 서구에 대한 일종의 자신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역 오리엔탈리즘은 서양과 동양을 분리하고 전자를 모방과 추종이 아닌 경쟁과 극복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박승우, “동아시아 담론의 현황과 문제,” p. 325.

혹은 한자문화는 어떤 공통성을 찾기 힘들 정도로 변형되고 토착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⁷²⁾

정리하면 최근의 연구 경향은 문화공동체의 전제로 삼고 있는 문화적 동질성의 실체와 본질을 규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어떻게 지역의 범위를 설정하든 간에 그 지역 내 국가들의 문화를 하나로 묶어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가운데 문화공동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공동체는 하나의 '상상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로서의 문화공동체' 구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⁷³⁾

다른 한편, 최근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 문화, 관광 분야 등에서의 상호교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이전 세대와 달리 젊은 세대들의 의식이 유사해져 가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의 동질성과 이해력이 증대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교류의 확대를 통해 문화공동체 형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⁷⁴⁾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상호 교류가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하는 인식을 공유하기 보다는 차이에 근거한 차별의식을 강화할 가능성도 존재함을 경계하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⁷⁵⁾

다. 국가 중심적 시각의 문제

지역공동체 또는 문화공동체 논의에 대한 주요한 비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가 중심적 시각의 문제점이다. 지역공동체 및 문화공동체 논의에 수많은 다양한 입장과 관점, 그리고 방법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국가 중심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동북아공동체 추구가 국가 단위로 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본래 의도와 달리 국가주의와 공포·타협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한 국가 내에서도 다양한 이질적인 세력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단위로 공동체 구상을 할 경우, 다양한 이질적 세력들을 동일화함으로써 지배질서의 정당화와 함께 타국에 대한 지배 욕망 강화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72) 박승우,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 리뷰,” p. 82.

73) 프로젝트로서의 문화공동체 구상에 대해서는 김명섭 외,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참조.

74) 김광익·전영평,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김국신 외,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Ⅱ): 종합편』; 김우준 외, 『동북아 문화공동체 한중일 시각 비교와 협력방안 모색』; 류지성·김형수,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등을 참조.

75) 한국사회 또는 한국인들이 동남아 국가들을 후진국으로 바라보는 인식, 국내 거주 동남아인들에 대한 차별,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 등의 사회적 현상에서 이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 중심적 시각의 대안으로 ‘주변의 입장에서 동아시아’를 파악할 것을 제안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⁷⁶⁾

국가 중심적 시각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및 문화공동체 구상은 자국의 국익 추구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내 국가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사실 지역 내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지역공동체 및 문화공동체 구상이 지역을 통제하려는 강대국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다는 의혹의 시선을 버릴 수 없다. 나아가 지역 내 국가들 간의 공동체 구성을 통해 공동체 외의 지역 및 국가들을 소외시키고 배제함으로써 주변화 시킬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및 문화공동체 논의는 기본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구상 및 실천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는 북한이나 대만, 몽골의 입장,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갖게 되는 의혹과 경계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 안과 바깥의 ‘이중적 주변의 눈’으로 새로운 구상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세계 속의 동북아(동아시아)와 동북아(동아시아) 속의 세계를 함께 살필 수 있는 시각을 갖고, 한국사회의 동북아 중심적 지향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⁷⁷⁾

이처럼 국가 중심적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실제로 지역공동체 및 문화공동체 만들기의 주체와 관련해서 국가는 매우 중요한 행위자라 할 수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주요 행위자로 국가만 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역공동체, 특히 문화공동체 형성과 관련해서는 국가 이외의 비국가행위자의 역할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비국가 행위자에는 학자, 전문가 집단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운동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집단과 조직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문화공동체 형성과 관련한 모든 것을 국가에만 맡길 수 없으며, 시민적 연대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⁷⁸⁾

76) 정문길 외 편,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참조.

77) 백영서,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p. 16; 신윤환,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탈동북아중심주의적 관점,” 한국동남아연구소 월례발표회 발표문 (2004.5.29.), p. 15.

78) 박승우,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 리뷰,” p. 99.

라. 서구 중심주의적 사고의 문제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및 문화공동체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살펴볼 것은 인식론적 측면에서의 서구 중심주의적 사고와 타자화의 문제이다. 근대 이후 우리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서구 근대의 합리성과 과학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및 문화공동체 논의들의 기본적인 논리도 이성화 기반한 서구 근대의 합리성과 과학주의와 비서구의 감성에 기반한 비합리성과 문화주의라는 서구가 규정한 이분법적 인식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서구 중심주의적 사고는 ‘자아 오리엔탈리즘’과 ‘역 오리엔탈리즘’의 문제를 낳는다. 오리엔탈리즘은 서양과 동양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동양을 후진적이며 미개하고 열등한 존재로 이미지화 한다. 자아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의 동양 및 아시아에 대한 사고를 스스로 무비판적으로 수용 또는 완전 내면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서양은 선진적이고, 동양은 후진적이라는 이분법을 어떠한 비판이나 저항 없이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내면화하여 추종하는 것이다. 서구의 근대화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근대화를 통한 서양 따라잡기가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저항적 측면에서 반식민지투쟁이나 아시아 지역연대론도 소극적 형태의 자아 오리엔탈리즘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자민족(혹은 자국) 중심주의에 입각한 대외적 침략 행위를 정당화할 수도 있다.⁷⁹⁾ 이러한 자아 오리엔탈리즘은 서구를 강자로, 자신을 약자로 설정하는 일종의 열등감이 내재되어 있다.⁸⁰⁾

반면에 ‘역 오리엔탈리즘’에는 서양에 대한 일종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다. 역 오리엔탈리즘은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공을 기반으로 한다. 역 오리엔탈리즘은 서양과 동양을 이항 대립적으로 나누고, 서양을 모방과 추종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과 극복의 대상으로 여긴다. 그러나 역 오리엔탈리즘의 인식구조 역시 오리엔탈리즘의 틀 속에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오리엔탈리즘과 마찬가지로 서양 대 동양이라는 이항대립 구도로 세계를 바라본다는 점, 둘째, 동아시아 밖의 모든 국가와 민족을 타자화 하고 적극적으로 경쟁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발전모델론, 동아시아 문화의 동질성, 아시아적 가치, 유교 자본주의 등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⁸¹⁾

이러한 문제점은 앞서 살펴본 지역 범주의 설정, 문화적 동질성, 국가 중심적 시각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왜 지역공동체 또는 문화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가,

79) 대표적 사례로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논리에 기초한 식민지 정책 및 침략전쟁을 들 수 있다.

80) 박승우, “동아시아 담론의 현황과 문제,” pp. 322~324.

81) 위의 글, pp. 325~328.

지역 내부의 동질성은 무엇을 기반으로 할 것인가, 지역 내 개별국가들이 이 기준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 및 세계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하는가 등에 대한 해답을 구할 때 직면하는 인식론적 문제가 바로 자아 오리엔탈리즘과 역 오리엔탈리즘의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공동체 및 문화공동체가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기획되고 구성되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 향후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장기간에 걸쳐 점차 발전하는 하나의 ‘정치적 구성물’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인식론적 비판에 대한 심사숙고가 요구된다 하겠다.

제 2 절 한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 전문가 조사

앞 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노무현 정부 시기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정권 교체 이후 소강상태를 겪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의 논의 공백기간 동안 동북아의 정치·경제·군사·문화적 지형도는 큰 변화를 겪었으며,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공동체와 문화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변화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관련 전문가들 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의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고 분석하려 한다. 조사결과를 미리 간략히 요약하면, 한국의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그리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동북아시아라는 개념 자체가 중국과 일본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각국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이해관계가 달라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들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한·중·일 삼국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혐오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했다. 그러나 민간교류의 증가 추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으며, 교육, 환경, 노동, 이주 거버넌스, 대중문화, 학술교류 등의 방법으로 문화협력을 늘려나가는 것이 동북아문화공동체 건설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1. 방법론 및 조사대상

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총 20명으로, 이들의 직업과 전공영역 분포는 아래 <표 2-1>과 <표 2-2>, <표 2-3>에 정리되어 있다. 기존에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거나, 동북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지닌 지역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지는 총 43문항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었다. 설문내용은 동북아시아의 범위,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필요성과 가능성, 한·중·일 3국 사이의 혐오 감정, 동북아문화공동체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을 포괄했다. 설문 문항은 객관식과 주관식이 혼합되어 있었으며, 응답자들은 가능한 한 자세하게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도록 요청받았다. 조사에 응한 전문가들에게 개인 신원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는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지시켰으며,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는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점 또한 공지되었다. 조사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응답자들에게는 소정의 자문료가 지급되었다.

〈표 2-1〉 응답자 전공영역별 분포

전공영역	사회과학	인문학	공학/자연과학	기타	합계
빈도	16	3	1	0	20

이 20명의 전문가들을 전공영역별로 나누어보면 〈표 2-1〉과 같았다. 사회과학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문학 전공자가 3명(문학, 문화학, 역사학), 그리고 공학전공자(도시공학) 1명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분포 자체가 보여주는 함의가 있다. 즉,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공동체’에 대해 관심에 집중되어 있으며, ‘문화’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연구자들은 상대적으로 그 숫자가 매우 적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지역공동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적 접근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동시에 문화교류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표 2-2〉 응답자 분포

전문가	직업군	전공영역	전문가	직업군	전공영역
A01	교수	북한학	A11	교수	정치학
A02	연구원	문화예술정책	A12	연구원	사회학
A03	교수	정치학	A13	연구원	정책학
A04	교수	국제정치학	A14	교수	정치학
A05	연구원	도시공학	A15	연구원	정치학
A06	교수	인류학	A16	교수	행정학
A07	연구원	인류학	A17	교수	문화학
A08	교수	문화행정학	A18	교수	정치학
A09	교수	문학	A19	연구원	북한학
A10	교수	정치학	A20	연구원	역사학

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전공 분포를 보면 정치학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류학 2명, 북한학 2명, 문화행정학(문화예술정책)이 2명씩 있었다. 그 밖에는 국제정치학, 도시공학, 문학, 사회학, 정책학, 행정학, 문화학, 역사학 등이 1명씩이었다. 정치학 관련 전공자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으나, 이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존에 동북아문화공동체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이 사회과학 전공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자 선정의 기준 중 하나가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해 연구경험이 있고, 관련 저서 혹은 논문을 발표한 전문가’였기 때문에, 사회과학 및 정치학 전문가의 비중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표 2-3〉 응답자 직업군별 분포

직업군	교수	연구원	공공기관	기업인	NGO	기타	합계
빈도	12	8	0	0	0	0	20

〈표 2-3〉에서는 직업군별로 응답자들을 분류했다. 그 결과 교수 12명 및 연구원 8명으로, 사실상 모두가 학계에 치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포 역시 시사해주는 것이 있다. 즉,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는 학문적 토론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 그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나 거버넌스 단계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2. 동북아 개념의 인식과 범위

동북아시아가 과연 어떤 의미의 개념이며, 어떤 국가 혹은 지역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 모두가 동북아시아 개념의 중요 요소라고 답했으며, 한·중·일 삼국은 물론, 북한, 몽골, 대만, 러시아 등이 동북아시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대만은 중국의 반발로 인한 현실적인 제약이, 러시아의 경우 역사적, 문화적으로 다른 동북아 국가들과 친화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들도 상당한 편이었다.

전문가대상 조사 설문지의 가장 첫 질문은 “선생님께서 ‘동북아시아’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를 여쭙겠습니다. 아래 보기 중 동의하시는 항목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었다. 이 질문에는 “한반도와 그 주변 국가와 지역을 포괄하는 지리적 개념이다”, 그리고 “유교, 한자 문화, 역사적 경험 등을 공유하는 문화적 개념이다”라는 두 가지 답지가 주어졌다.

〈표 2-4〉 동북아 개념의 인식

동북아 개념의 인식	빈도 (%)
(1) 한반도와 그 주변 국가와 지역을 포괄하는 지리적 개념이다.	19 (95.0%)
(2) 유교, 한자 문화, 역사적 경험 등을 공유하는 문화적 개념이다	13 (65.0%)
(1)+(2) 지리적 개념이면서 동시에 문화적 개념이다.	12 (60.0%)
합계	20 (100.0%)

〈표 2-4〉는 한국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동북아시아’의 개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1명을 제외한 모든 전문가가 동북아시아가 지리적 개념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동시에 13명(65%)의 전문가들이 동북아시아는 문화적 개념이라고도 답했다. 전체적으로 20명 중 12명의 전문가는 동북아시아는 지리적이면서 동시에 문화적인 개념이라고 답했다. 7명(35%)의 전문가들은 동북아시아를 문화적 개념이 아닌 지리적 개념이라고만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동북아시아가 지리적 개념이라는 것에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문화적 개념을 도입하여 동북아시아를 정의하는 것에는 적지 않은 수(7명)의 전문가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안보와 경제 등의 이슈가 중심이 될 지역공동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지리적 인접성이 문화적 친화성 혹은 유사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설문의 두 번째 문항은, 동북아 개념이 중국과 일본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어떤 국가들이 동북아시아공동체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지만, 한국, 중국, 일본이 그 중심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 자체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동북아시아’라는 용어가 중국과 일본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면 다른 의미를 갖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중국 및 일본을 설득하여 지역공동체 참가를 추동해내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 문항은 바로 이 점을 한국 전문가들에게 묻기 위해 삽입되었다.

두 번째 문항은 “‘동북아시아’라는 개념은 주로 한국에서만 통용될 뿐, 인접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낯설고 잘 이용되지 않는 개념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라는 용어 혹은 개념이 중국과 일본에서도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표 2-5〉에서는 이 문항에 대한 답변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 2-5〉 동북아 개념의 중·일 확장 가능성

동북아 개념의 확장가능성	빈도	%
(1) 매우 동의한다	2	10.0%
(2) 어느 정도 동의한다	8	40.0%
(3)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는다	10	60.0%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	0%
* 동의함 = (1)+(2)	10	50.0%
* 동의하지 않음 = (3)+(4)	10	50.0%
합계	20	100.0%

이 두 번째 문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히 절반씩으로 나뉘고 있었다. 10명의 전문가가 동북아 개념이 중·일에서도 통용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 반면, 나머지 절반의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조사대상이 된 전문가들의 전공영역이 이러한 견해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6〉은 동북아 개념 확장가능성에 대한 응답을 전문가들의 전공에 따라 분류해본 것이다. 이 표에서 흥미로운 것은 인문학과 도시공학, 문화행정과 문화예술정책 전공자들은 모두 동의하지 않았지만, 동의한 전문가들은 모두 사회과학을 전공한 전문가였다는 사실이다. 즉, 문화 영역을 연구하거나 문화 관련 정책을 다루는 전문가들은 동북아 개념이 한국의 고유한 개념이며, 중국과 일본에서 이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반면,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 개념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모두 정치학, 북한학, 사회학 등의 사회과학 전문가들이었다.

이러한 입장 차이 또한 문화와 공동체의 선후 관계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화 관련 전문가들은 기존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정책을 선호하는 반면, 사회과학 전문가들은 공동체가 먼저 형성이 된다면 문화는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2-6〉 동북아 개념의 중·일 확장 가능성 / 전문가 전공별 분류 (빈도)

전공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합계
국제정치학	1	0	1
도시공학	0	1	1
문학	0	1	1
문화예술정책	0	1	1
문화학	0	1	1
문화행정학	0	1	1
북한학	2	0	2
사회학	1	0	1
역사학	1	0	1
인류학	1	1	2
정책학	0	1	1
정치학	3	3	6
행정학	1	0	1
합계	10	10	20

실제로 동북아시아 개념이 중국과 일본에 통용되기 힘들다고 답한 전문가들은 그 구체적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 중요한 이유로, 한·중·일 3국의 문화적, 역사적 공통성이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약하며, 이러한 공통성의 기반 부재가 동북아 개념의 확장성에 한계로 작용한다는 주장들이 있었다.

- 전문가 A08: ‘동북아시아’라는 개념을 지리적 근거에 바탕하여 적용할 경우에 중국과 같이 동남아시아와 중동지역에 근접한 국토를 가진 경우 그 명칭이 유효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다는 이견이 발생할 수 있음. 덧붙여 유교, 한자문화, 역사적 경험으로 해당 3국을 묶기에는 각자의 견해 및 입장차이, 그리고 유교나 문화가 각 국에서 변형하여 전래되어 온 것을 고려한다면 그 또한 타당성이 약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전문가 A09: 확장성은 공통성을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하다.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한자문화권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한자를 국어로 사용하지 않는다. 해당하는 국가들은 역사, 문화에서 공통성도 있지만 국가별 독자성이 강하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역사나 경험을 공유한다는 인식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 한자는 문화적 소통에 해당하는 공통 언어일 뿐이다.

역사적 경험 또한 다르다. 동북아시아의 개념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공통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역사적 경험이 다르다.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한·중·일이 겪었던 역사적 경험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가관, 가치관, 생활방식의 차이와 역사적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동체로 묶기 어렵다.

- 전문가 A09: 우리나라에서 '동북아시아'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 흔히 상상하는 범위의 지역 권역에 포함되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중화적 지배체제의 개념을 더욱 강하게 갖고 있으며, 그 지배체제의 권역은 일본을 포함하지 않는 한편, 서쪽과 남쪽으로 우리나라에서 '동북아시아'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지역의 권역을 벗어나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자국중심으로 정의된 지역 권역의 정체성을 버리고 '동북아시아'라는 정체성을 채택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갖는 역사적 친밀도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훨씬 낮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의 정치적, 지역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동북아시아라는 개념에 묶이는 것에 거부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견해들도 있었다. 현재 중국과 일본에서 동북아시아라는 용어 자체가 잘 사용되지 않으며, 제한적인 범위에서 동북아시아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그 의미가 한국의 동북아시아 개념과 차이가 있다는 것 등이 그 이유로 제시되었다.

- 전문가 A02: 한중일에 집중된 영역으로 얘기할 경우, 한중일 3국이란 개념으로 통용되는 경향이 강하며, 동북아시아로 칭할 경우 3국 외의 어떤 국가까지를 포함하는 지가 모호해짐. 특히 중국, 일본의 경우 한중일 3국으로 묶이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타 국가와의 지리적/문화적공동체로 묶이는 방식에 대한 거부감 등이 표현되는 경우가 많음
- 전문가 A03: 한국에서 동북아시아와 동아시아는 상호교환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반면, 국제적으로는 동아시아가 동북아시아보다 더 익숙한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동북아시아라는 개념을 활용할 때 중국의 영토를 다 포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국은 이 개념을 선호할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티벳 등 영토 문제에 민감한 중국으로서는 보다 확장된 지역 개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일본도 강대국으로서 동북아시아보다는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동아시아 개념을 더 선호할 것이다.
- 전문가 A10: 박사논문 작성 중에 동경에서 1년, 북경에서 1년, 워싱턴에서 1년 이상 필드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에서 동북아시아라는

개념이 거론되는 만큼 일본과 중국에서 통용되지 않음을 목격한 바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리적으로는 중국어로 东北亚, 일본어로 北東アジア라는 용어로 쓰이기는 한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학계나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일본은 전혀 아시아에 속하지 않는, 즉 지리적으로는 위치해 있으나 선진국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과 대비가 되는 국가로 취급이 되고 있으며 중국은 아시아 전체 속의 중심, 핵심이 되는 국가로 통용이 되고 있다. 이와 대비하여 미국, 특히 워싱턴에서는 Northeast Asia, 혹은 East Asia (Northeast, Southeast Asia를 포함하나 주로 동북아를 지칭함) 라는 용어를 자주 쓰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Northeast Asia가 Far East 대신 쓰고 있는 개념으로, 영국에서 서아시아(중동)를 Middle East, 동북아시아를 Far East라고 쓰는 것에 대한 개념적 저항이라고 생각되나, Middle East는 아직도 영국과 미국에서 모두 사용이 빈번한 반면, Far East는 쓰이는 경우가 매우 적다. 이는 근본적인 역사인식과 국력에 대한 의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동북아시아라는 개념은 지리적인 의미일 뿐 국제정치적인 큰 의미는 없고 확장성을 가지기에도 어렵다. 동북아시아라는 개념의 확장적 의미를 만드는 것은 지리적 개념을 발전시키는 장점은 있다.

- 전문가 A17: ‘동북아시아’라는 개념은 남북 분단 현실을 가진 한국에는 의미가 있지만, 중국과 일본에까지 확장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북아란 북한의 우방인 중국/러시아와 한국의 우방인 일본/미국의 대립 구조에서 비롯된 제한성이 드러나는 개념일 것입니다. 중국은 동북뿐만 아니라 동남까지 아우르는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보다는 동아시아, 나아가 중앙아시아까지 포함하는 확장적 아시아 개념에 익숙하며 지향점도 그쪽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동북’이 동북삼성(東北三省) 관련 제한적 지역성을 의미하는 것이나, 러시아가 극동(極東, Far East) 개념을 쓰는 맥락과 상통합니다. 일본 역시 동북아시아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동아시아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국 및 한국과 밀접한 역사적 이해관계 속에서 특히 20세기 전반 아시아 식민 지배에 대한 기억과 더불어, 가파른 경제 성장을 통해 아시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의식이 작용한 것이라 봅니다.

중국, 일본에서 동북아 개념이 잘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한 반론도 존재했다. 전문가 A11은 중국에서도 최근 한국과 유사한 동북아 개념이 통용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일본에서 동북아라는 용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신 사용되고 있는 환동해(일본에서는 환일본해) 개념이 동북아와 유사하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 동북아 개념이 일본에서도 뿌리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전문가 A11: 중국의 경우, 외교문서나 매스미디어 등에서 '동북아(东北亚)'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 사용되며 정착된 개념이다. 동시에 북한 문제, 동북 3성 개발 문제와 연관되어 동북아시아 협력을 중요 어젠더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동북아시아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 동아시아, 아시아태평양, 최근 들어서는 인도태평양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가장 근접한 단어인 동아시아를 사용할 때조차,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을 어떻게든 포함시키고자 함. 결국 일본에서의 동아시아 개념 조차 실질적으로는 인도태평양에 더 가까운 개념임. 이것이 일본에서 동북아시아 개념이 사회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요임임. 반면,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환동해(일본에서는 환일본해) 개념이 사용되었다. 북한, 러시아, 중국, 한국과의 협력을 염두한 개념으로 동북아시아에 가까운 개념이다. 따라서 동북아 협력의 축적이 얼마든지 일본사회에 동북아 개념을 뿌리내리게 할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동북아시아라는 용어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상당 수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 혹은 지역들이 '동북아시아'에 포함되어야 하는가를 물었을 때는 한·중·일 삼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했다.

〈표 2-7〉 '동북아시아'에 포함되어야 하는 국가 혹은 지역

	포함	불포함	합계
한국	20 (100.0%)	20 (100.0%)	20 (100.0%)
북한	19 (95.0%)	1 (5.0%)	20 (100.0%)
일본	20 (100.0%)	20 (100.0%)	20 (100.0%)
중국	20 (100.0%)	20 (100.0%)	20 (100.0%)
대만	15 (75.0%)	5 (25.0%)	20 (100.0%)
몽골	17 (85.0%)	3 (15.0%)	20 (100.0%)
러시아	10 (50.0%)	10 (50.0%)	20 (100.0%)
베트남	5 (25.0%)	15 (75.0%)	20 (100.0%)
미국	1 (95.0%)	19 (5.0%)	20 (100.0%)
싱가포르	3 (14.0%)	17 (85.0%)	20 (100.0%)

〈표 2-7〉은 동북아시아에 포함되어야 하는 국가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하고 있다. 한·중·일 외에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나라는 북한 (19명)과 몽골(17명), 대만(15명)이 있었다.

러시아는 한·중·일과의 지리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10명만이 긍정적인 답을 했으며, 베트남은 5명, 싱가포르의 3명이었다. 한일과 정치적, 문화적으로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은 그러나 동북아시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답한 전문가가 1명에 그쳤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대만과 러시아에 대한 평가들이다.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을 따진다면 대만은 몽골보다도 동북아시아 개념에 포함될 자격이 충분하다. 그러나 대만은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한국 및 일본과 정식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의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대만을 동북아시아 공동체에 포함시키려 한다면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무하다. 대만이 동북아시아에 포함될 수 없다는 답을 내놓은 전문가들도 모두 중국의 반발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그 몇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전문가 A04: 문화적으로는 포함될 수 있으나, 지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대만이 포함될 경우,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전문가 A17: 지리적으로 남쪽에 치우쳐 있으며, 중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 전문가 A18: 대만을 넣게 되면 중국과의 문제로 동북아시아 자체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이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중국, 북한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러시아 자체로도 신동방정책을 통해 극동개발에 적극적인데, 러시아를 동북아시아 개념에 넣을 수 없다는 의견은 50%나 되었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전문가 A02: 한국에서는 동북아공동체 등으로 집단화하고 싶어하지만, 러시아측의 의사 낮음
- 전문가 A08: 지리적, 문화적으로 아시아 보다는 유라시아나 유럽에 가까움
- 전문가 A07: 유라시아 대륙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동북아시아라는 지역/방위적 지표가 명백히 표기된 아시아의 집단에 포함되기는 어려움.
- 전문가 A09: 국가정체성이나 문화정체성은 지역적인 요인도 있지만 문화적 경험과 가치 지향도 있다. 러시아는 유럽 문화권으로 보아야 한다.

나머지 러시아에 관련된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러시아의 지역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문화정체성과 역사적 특성으로 보아 러시아는 유럽국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들이었으며,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대한 관심은 안보와 경제, 영토 확장에 대한 욕구의 발현이고 문화공동체로

뭉이는 것에는 큰 의의를 두지 않는다는 견해들이었다.

정리하면, 동북아시아에 포함되어야 하는 나라 혹은 지역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북한, 몽골을 꼽는 것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었다. 문화적으로도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고 경제적 교류도 활발한 베트남, 싱가포르 같은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한일과 특수관계에 있는 미국은 동북아시아에 포함시키기에는 지리적 인접성이나 문화적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만과 러시아를 포함시켜야 하느냐의 문제였다. 대만의 경우 다수의 전문가들은 일단 대만이 동북아시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답했으나, 이에 부정적인 전문가들은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 대만이 포함되는 것은 현실적인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무시할 수 없는 의견을 제시했다. 러시아의 경우, 문화적, 역사적으로 동북아시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었다.

3.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필요성과 가능성

앞 절에서 보다 추상적 수준에서 동북아시아의 개념과 가능성을 물었다면, 이어진 질문들에서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공동체 혹은 다자협력체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보았다.

우선, 동북아에서의 다자협력체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유럽연합처럼, 동북아시아에서 한·중·일이 중심이 되어 ‘동북아시아 연합’ 혹은 ‘동아시아 연합’ 같은 다자적 협력체를 일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표 2-8〉 동북아다자협력체의 가능성

동북아다자협력체 가능성	빈도	%
(1) 매우 가능하다	0	0.0%
(2) 어느 정도 가능하다	12	60.0%
(3) 어느 정도 불가능하다	6	30.0%
(4) 전혀 불가능하다	2	10.0%
* 가능함 = (1)+(2)	12	60.0%
* 불가능함 = (3)+(4)	8	40.0%
합계	20	100.0%

〈표 2-8〉에는 이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을 정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가능하다는 답을 낸 전문가들이 60%(12명), 부정적인 답을 낸 전문가들이 40%였다. 부정적인 답변이 조금 적은 편이었으나 좀 더 자세히 보면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매우 강한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가 2명 있었던 반면, 동북아다자협력체가 가능하다는 응답 중에 “매우 가능하다”라는 확실한 답을 제시한 응답자들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부정적인 의견의 강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동북아다자협력체의 가능성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긍정적 의견들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동북아시아에 존재하는 안보 및 경제협력의 필요성으로 인해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 전문가 A01: 다자적 협의체의 생성에는 다양한 유인이 존재할 수 있다. 동북아에서의 유인은 지정학적 보완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를 중심으로 경제적 장단점들을 서로 보완하면서 자국의 비교우위를 최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자적 협력체를 일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래 경제적 이익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 남한, 중국, 러시아 등은 다자협의체 생성에 적극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각국의 외교 안보적 이해와의 충돌이 유발될 경우, 이러한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 전문가 A02: 안보, 경제협력 부문에 있어 특히 다자협력 수요가 높기 때문에, 다자안보협력 및 다자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협력체를 일구는 것은 가능할 것. 특히 현 시점에서 다자안보협력, 다자경제협력의 경우 미국과 중국 관계의 미래 불확실성, 중국과 일본 관계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긍정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유럽연합과 달리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미국과의 양자 군사동맹이 존재하는 한국, 일본의 경우 안보협력에서의 다자협력 충돌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균형을 찾는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음.
- 전문가 A11: 일본은 비록 동북아 개념을 사회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않지만, 환동해(환일본해) 경제권을 제안한 바 있음. 환동해 경제권은 북한 개발을 염두하고,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의 협력을 제창한 것으로 동북아 협력, 동북아 연합과 맥이 닿아 있음. 따라서 북한 핵문제가 일정 정도 해결되고, 대북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일본은 북일관계 개선과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개발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임. 또한 북핵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한중일의 북한 경제협력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임. 그 과정에서 한중일 협력이 동북아협

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함. 더불어 북핵 해결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더불어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한 안보협력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음. 동시에 한중일=대중문화 및 도시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음. 중국의 한국여행 제한 등 인위적 조치가 없다면 대중문화적 동질성에 기반한 한중일 여행객의 증대는 현실화되고 있음. 이렇듯 경제, 안보, 문화적 측면에서 동북아 상호협력은 불가피하며, 이러한 협력의 축적은 동북아 통합으로 나아가는 힘이 될 것임.

다른 긍정적 의견들은 유럽연합 같이 높은 수준의 다자적 협력체 혹은 지역공동체가 달성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느슨한 형태의 특정 이슈에 집중하는 협력체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 전문가 A03: 유럽연합을 모델로 상정하고 법, 제도 중심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가능성이 낮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보다 느슨한 형태로 regional consultative process처럼 특정 이슈, 지역 내에 국한된 제한된 모델을 상정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이슈에 대한 협의체들을 발족시켜 협력의 습관을 길러 나가고 이러한 협력의 습관들이 축적된다면 다자적 협력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 전문가 A07: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관세나 국경이동과 같은 기술적 부분에서 장벽을 낮춤으로써 인적, 물적, 정보적인 교류가 보다 원활해지며 다자적 협력체를 이루는 것으로 동북아시아 국가 각자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다자적 협력체의 범위와 강도는 다양한 수준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느슨한 정도의 다자적 협력체는 동북아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반면, 한 전문가는 동북아협력체는 역내 국가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 때문에 실현이 어렵지만, 오히려 문화적, 사상적 요청과 필요성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전문가 A17: 경제적 긴밀성은 물론이고 인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아시아의 철학, 사상의 동력에 대한 필요성에서도 동아시아 연합은 21세기의 시대적 요청이자 지상과제입니다. 구미의 한국 표상에서도 알 수 있듯(유럽이나 헐리웃 영화를 보면 한국인은 종종 중국배우가 연기하고, 한국 배경에 중국이나 일본적 상징물이 제시된 이상한 오리엔탈리즘을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애매한 중간자라는 입장보다는 중재와 무게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균형자로서

의 한반도 입지가 선제적일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한편, 동북아다자협력체의 불가능성에 대한 의견들도 많았다. 흥미로운 것은, 긍정 의견들이 대부분 동북아 국가들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자협력 혹은 지역통합이 가능할 것이라 본 반면, 부정의견들은 역내 존재하는 경제 및 안보 갈등 때문에 국가간 협력이 힘들다고 보고 있었다. 즉, 동북아다자협력체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의견 차이는 근본적으로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자유주의와 현실주의의 사상적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동북아에서 지역통합이나 다자협력체 구성이 전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매우 확실한 입장을 보여준 두 전문가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두 답변 모두 중국의 세력 성장,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대립관계를 다자협력이 불가능한 주요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전문가 A10의 경우는 동북아다자협력체가 모델로 하는 유럽연합 자체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역통합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 전문가 A10: 유럽연합을 모델로 하는 동북아공동체에 대한 가능성을 내세운 설 혹은 이론들은 유럽연합이 출범할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으나 논리적으로 타당하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은 부재하였다. 무엇보다도 유럽연합이 가진 수많은 이슈들을 묵도하면서도 계속하여 이러한 제기를 하는 것이 때로는 우습기도 하고 때로는 아쉽다. 한국에서 지역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나 고민 자체는 보기 힘들다. 왜 통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부터가 부족하다. 중국의 굴기로 중국 국력이 커지고 있는 현재에 와서는 더욱 그렇다. 2000년대처럼 중국이 성장 중이었을 때는 모르겠으나 (그때는 일본과 중국이 협력의 방향을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지배적이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중국에 기인한 설명이 더 합당하다) 지정학, 지경학적 움직임을 가시화한 현재로서는 중국과 그 어떤 협력도 쉽지 않다. 중국의 평화적 부상이 불가능한 이유는 정치적 시스템이 기타 선진국과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여겨온 학자들이 많다.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중국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미국이 이끄는 시스템에 기댈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방향 전환을 하였고, 2013년부터는 시진핑의 국내적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와 중국의 시장력에 기반한 지경학적 외교정책이 확대되고 있어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짜여진 틀이 아니면 협력 자체가 불가능하다. 설령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중국을 엮는다 하더라도 중국과 한국이 바라보고 있는 곳은 목표 자체가 다르고 협력 시 중국에 의해 한국이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전문가 A04: 중국과 일본의 라이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음. 특히 연합체의 형식의 다자협력체는 제도화를 전제하기 때문에 이런 조직의 제도화는 질서와 규범을 만드는 것인데 이를 중국과 일본 간의 라이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합의하기 어려울 것임. 경제협력체도 마찬가지.

동북아다자협력체가 ‘어느 정도 불가능하다’라고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도 그 구체적인 이유는 비슷한 내용을 답했다. 중국의 세력확장으로 인한 동북아 세력 균형의 붕괴, 일본의 우경화와 재무장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 등의 안보 및 세력 균형 문제가 주로 지적되었으며, 동북아국가들의 경제수준 차이로 인해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다자협력체를 통해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 전문가 A19: 2000년대 중반, 동북아시아에서 다자안보협의체 논의가 힘을 얻던 때가 있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당시였다.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이후 6자회담을 다자적 안보 협의체로 발전시키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동북아시아에서 다자적 협력체가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은 한중일을 둘러싼 정세 변화와 상호관계 때문이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국력이 커져서 세력 균형이 깨지고 있는 반면, 일본이 점점 우경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최근 몇 십년 동안 빠르게 바뀌고 있는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고 정상화국가를 위해 동북아 주변국가들 보다는 동남아에서 우호도를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 미일관계 또한 2010년 중반 이후로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은 미국의 지원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안보 논의는 인도-태평양으로 거점이 옮겨가고 있다. 또한 동북아에서는 최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국-대만의 양안관계와 남북한 관계, 미국, 일본, 중국 등 역내 국가의 군비경쟁 등 군사적 대결로 이어질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일중의 주도로 다자협의체 형성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 전문가 A13: 동북아시아연합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공동의 이익이 있었을 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현재 중국-한국-일본과 그 밖의 국가들이 지역연합체를 이루어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누리기에는 경제발전 수준의 격차로 인해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유럽연합은 유럽경제공동체로부터 출발하여 지역통합을 이루기 위해 50여년간 노력하였지만 결국 최근의 브렉시트로 대변되는 바와 같이 지역주의 약화를 맞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협상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경제적 효과임. 이처럼 강력한 경제적 유인이 있어야 초기 공동체 형성과 이후 공동체 유지가 가능함. 이러한 점에서 한-중-일 3국이 경제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다자 협력체 구성까지 어려움이 예상됨.

일반적인 수준에서 동북아다자협력체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위와 같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다음으로는 질문의 추상도를 다시 한번 낮추어, 경제공동체, 안보공동체, 문화공동체의 세 가지 다자협력체 중 가장 필요성이 높은 순서로 나열해달라고 물었다.

〈표 2-9〉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정리하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공동체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 또한 상당히 복잡하게 갈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안보공동체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8명으로 가장 높았지만, 문화공동체도 7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경제공동체가 1순위로 필요하다는 의견은 5명이어서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역시 안보 및 문화공동체와 비교하여 크게 차이난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표 2-9〉 동북아다자협력체의 유형별 필요성 비교

	경제공동체	안보공동체	문화공동체	합계
필요성 1순위	5 (25.0%)	8 (40.0%)	7 (35.0%)	20 (100.0%)
필요성 2순위	12 (60.0%)	5 (25.0%)	3 (15.0%)	20 (100.0%)
필요성 3순위	3 (15.0%)	7 (35.0%)	10 (50.0%)	20 (100.0%)

필요성 2순위로 가장 많이 많았던 것은 경제공동체 (12명), 3순위에서는 문화공동체 (10명)이었다. 결국 안보공동체 - 경제공동체 - 문화공동체의 순서로 그 필요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전문가들마다 나름의 이유로 그 순서를 달리 하고 있어서 그 차이를 확실히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문화공동체를 가장 필요하다고 답한 7명의 전문가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선택의 이유를 문화공동체가 먼저 실현된다면 그 이후에 경제 및 안보공동체 실현의 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주로 제시했다. 문화공동체를 통해 동북아시아 국가들간의 가치 공유, 인식공동체 형성 등이 가능해지고 이것이 경제 및 안보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였다.

- 전문가 A01: 공동체 형성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가치 공유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치 공유는 일상적인 문화적 교류의 증대에서 시작하며, 문화적 교류를 통해 완성된 문화공동체는 다른 형태의 공동체, 예를 들어 경제 및 안보공동체 형성을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공동체 형성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문화공동체가 가장 근본적이며 일상적인 이슈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다른 형태의 공동체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전문가 A02: 안보 및 경제공동체의 실질적 필요성이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다자간 공동체가 실현되려면 동북아, 특히 한중일 간에 다자협력을 통한 평화 및 안정추구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 그리고 동북아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화적 이해, 동북아가 공동체로 존재 및 지속되기 위한 원칙과 기준에 대한 상호호혜적 이해가 필수적. 문화공동체는 인식공동체가 작용하기 위한 필수조건. 따라서 문화공동체가 우선되어야 다자협력공동체를 추진함에 있어 매 주제, 매 안전별의 충돌 및 갈등을 최소화하며 진행할 수 있을 것
- 전문가 A03: 문화공동체는 동북아시아에서 지역협력을 위한 새로운 의제로 선택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동북아시아는 유럽 혹은 동남아시아에 비해 지역협력의 수준이 훨씬 낮다. 문화는 지역통합이 진전될 경우, 경제, 안보 분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은 아젠다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류, 일류 등 대중문화의 교류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광 산업의 상호 증진을 위한 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예술을 통한 평화 만들기 등은 안보 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다.

한편, 동북아공동체 자체에 회의적인 한 전문가는 경제공동체와 안보공동체의 불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피력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너무나 강력하여 경제공동체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경제권에 종속되는 위험성이 있으며, 안보공동체는 미국의 개입가능성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전문가 A10: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중국 위주의 경제권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안보공동체를 이룬다면 형태만 공동체이지 서로에 대한 감시만 강화될 것이며 안보공동체는 한국, 일본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며 (그 순간 미국과 대치되고 국내의 안보기밀이 유출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서 철수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북아공동체의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는 다른 전문가 또한 안보공동체의 실현 불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상대적으로 문화공동체가 가능성은 낮으나 더욱 필요하다고 이

야기했다.

○ 전문가 A14: 동북아공동체가 현재로서는 별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크다고도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문화공동체가 가장 필요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동북아안보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대두되는 상황이 닥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 안보공동체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은 미(일)-중-러-유럽 등으로 구성된 현재의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동북아시아가 전 세계를 향해 고립되는 것은 이전의 중화체제로의 복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어느 공동체나 그 정체성을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은 가치관, 삶의 방식 등 문화적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공동체가 가장 첫 요건이라고 답했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동북아다자협력체의 유형별 실현가능성을 물었을 때 전문가들의 답변은 필요성을 물었을 때와 사뭇 달랐다. 문화공동체의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답한 전문가들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공동체 - 안보공동체의 순서로 답이 많았다. 2순위는 경제공동체, 3순위에서는 안보공동체의 답이 각각 10명과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리하면 세 유형별 다자협력체 중 실현가능성 순으로 문화공동체 - 경제공동체 - 안보공동체를 꼽고 있었다. 그러나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은 각자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느 한 유형의 공동체가 압도적인 선호를 얻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표 2-10〉 동북아다자협력체의 유형별 실현 가능성 비교

	경제공동체	안보공동체	문화공동체	합계
실현가능성 1순위	8 (40.0%)	3 (15.0%)	9 (45.0%)	20 (100.0%)
실현가능성 2순위	10 (50.0%)	6 (30.0%)	4 (20.0%)	20 (100.0%)
실현가능성 3순위	2 (10.0%)	11 (55.0%)	7 (35.0%)	20 (100.0%)

20명의 전문가 중에서, 문화공동체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을 모두 1순위라고 대답한 전문가들은 모두 5명이었다. 이들은 주로 문화와 관련되어선 국가간 큰 갈등이 없으며, 정치적 저항이나 반감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문화공동체의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가 A02: 문화를 통한 외교, 문화교류가 강조되는 이유는 현실적 충돌이 발생할 경제, 안보공동체에 비해 작고 큰 공동체가 다양하게 실현되기 쉽기 때문. 문화공동체를 동북아 국가 간 공유되는 정체성 구축의 과정 및 결과로 인식하고, 정체성의 크기나 종류를 다양하게 이해한다면 실현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임.
- 전문가 A03: 동북아시아에서 지역협력을 위한 새로운 아젠다를 찾아야 한다면, 경제나 안보 보다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경제나 안보에 비해 문화는 국내적으로 정치적 저항이나 반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낮고, 정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부담이 낮은 주제이다. 예를 들어 경제공동체의 일환으로 FTA를 추진한다면, 국내 산업, 노동 등에 파급력이 크며 이는 국내적으로 FTA에 반대하는 정치연합을 형성할 수 있다.
- 전문가 A16: 문화공동체는 상대적으로 국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긴장과 대립은 단순하지 않으며, 국제정세의 흐름과 각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갈등요인을 유발하기 쉽다. 그러나 문화공동체는 이러한 논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의제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보다는 매력적이다.

반면, 문화공동체의 실현가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면서도 그 이유를 다르게 제시한 전문가도 있었다. 전문가 A10은 동북아에서의 지역협력 자체에 가장 비판적이었는데, 문화공동체의 실현가능성을 그나마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하면서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역량이 낮지 않기 때문에 경제 및 안보공동체의 경우와 달리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전문가 A10: 문화공동체가 그나마 낫다고 생각한 이유는, 완전히 중국에 동화되기를 중국이 바라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문화 (혹은 나아가 동남아시아 각국, 심지어는 중국 내 신장 위구르 지역의 문화 보존도 이에 해당된다) 가 각기 생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도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른다. 이에 대한 예로서 정치적인 움직임에 의한 문화의 종속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조선족의 김치를 중국의 문화라고 주장하거나 (중국 CCTV의 허끝으로 만나는 중국 다큐멘터리와 관련 책에서 이를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이 중국산 김치는 한국에 수출하면서 한국의 김치 수입을 제한하는 등의 경제적 제재와 관련된 문화의 이용 때문에 문화를 지키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문화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은 역사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흔들기가 어렵고, 설사 흔들리더라도 기존의 문화를 보존하려는 노력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문화, 경제, 안보 모두 정부의 움직임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나, 안보나 경제가 가장 파급 효과가 크고 문화는 미세한 개개인의 생활양식까지 파고드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 한국의 경우 중국과 일본의 일부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한국 고유의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움직임이 비교적 크고, 중국과 일본이 뭐라하든 그 보존의 노력과 활동에서 손을 놓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 전문가는 문화공동체가 경제나 안보공동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환경공동체가 오히려 필요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 전문가 A05: 문화공동체는 다른 공동체 개념보다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고 문화 콘텐츠 교류가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 하고 안보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 하지만 문화공동체 형성이 필수불가결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함. 실질적으로는 기후변화, 재난, 대기, 해양, 생물다양성 등 한반도 주변 동북아 국가들이 처한 환경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공동체 형성 필요성이 높음.

동북아문화공동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위와 같이 답했다. 이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꾸어 다시 한번 의견을 물었다. 정부의 시책으로 동북아문화공동체를 추진하되, 한·중·일 삼국을 먼저 공동체로 묶고 그 주변 국가와 지역을 후속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그 가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었다. <표 2-11>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리되어 있다.

〈표 2-11〉 정부주도 한·중·일 중심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

한·중·일 중심 문화공동체 실현가능성	빈도	%
(1) 매우 가능하다	0	0.0%
(2) 어느 정도 가능하다	11	55.0%
(3) 어느 정도 불가능하다	6	30.0%
(4) 전혀 불가능하다	3	15.0%
* 가능 = (1)+(2)	11	55.0%
* 불가능 = (3)+(4)	9	45.0%
합계	20	100.0%

“매우 가능하다”를 택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지만, 절반을 살짝 넘는 11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나머지 9명은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는데, 그 중 3명은 “전혀 불가능하

다”라는 강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 전문가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다시 물었다. 한국 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동북아문화공동체의 추진 가능성을 밝게 보는 이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았는데, 한·중·일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많았다. 그중에서도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관심을 갖고 문화공동체 형성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한국은 동북아 역내 국가들에게 비교적 덜 위협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 전문가 A01: 중국과 일본을 포함, 주변국가들과의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한국이 주도하는 것은 비교적 현실성이 높은 그림이다. 외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에 그 역량이 제한적인 편이다. 다시 말해 중국과 일본은 공동체 형성의 주도에 있어 각각 상대국 즉 일본 혹은 중국의 주도 보다는 한국의 주도에 대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주도에 의한 한중일 중심의 공동체 추진은 현실성이 높아보인다. 더욱이 한중일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적 경제적 주요 행위자이기 때문에, 3국이 일단 확고하게 공동체 형성에 합의한다면, 기타 관련국들의 협력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전문가 A12: 북핵문제 이후 각국은, 단순히 미국주도의 세계가 아니라 지역내의 자체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그래서 냉전 분단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이시점에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준비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역할을 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 보다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으로 보임.

경제, 혹은 안보공동체보다도 문화공동체의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것은, 한·중·일 3국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미 활발한 교류와 상호영향을 주고 받고 있으며, 문화적 친화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 전문가 A06: 한·중·일은 공통의 문화와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아시아 사회에서 공통으로 우선하는 주제를 발굴하여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추진한다면 실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적 상황과 현재의 안보적 상황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는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고 해서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 전문가 A09: 교통, 통신의 발달로 한·중·일의 심리적 거리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자국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성에 대한 자부심도 크지만 상호 문화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교육도 많이 진행되었다.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 축적되면서, 상대 문화에 대한 낯센도 많이 해소되었다. 또한 한·중·일의 상호 관련성이 긴밀해지면서, 대기문제, 해양오염 문제를 비롯한 초국경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상호 협력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또한 한·중·일을 연결하는 해저터널 같은 협력 프로젝트의 추진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
- 전문가 A11: 한·중·일은 대중문화 및 도시문화라는 공통적 문화 토대를 가지고 있음. 이에 근간을 두고 삼국 협력 영화 혹은 드라마 제작사업, 영화 혹은 드라마 등 작업장 세트 구축 사업, 한·중·일 대중 문화제 등 사업을 진척시켜가며, 북한,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포괄하게 되면 문화공동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됨. 반면, 한자, 유교 문화에 기반한 문화공동체의 진척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이는 중국 중심의 문화공동체로 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전문가 A14: 학술적 교류를 선도적으로 제시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낙관이 듭니다. 환경 문제도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첨예한 경제적 이익이나 안보, 정치적 정체성 등과 비교적 멀다고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반대할 명분도 더 작은 영역들에서 시작한다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전문가 A15: 현 정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더라도 이니셔티브 차원에서 이후 공동체 형성의 포석을 놓는 역할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이니셔티브로 문화공동체에 대한 시민사회에 공론장을 여는 역할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문화공동체를 정의하고 어떤 취지나 기획을 미리 상정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시민사회 내 지역 협력을 위한 기반, 혹은 위협 요인을 파악하고 협력적 공간으로서 동북아시아를 만들 어가기 위한 지역 공동의 아젠다를 발굴하는 데 지원하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전문가 A16: 이미 현대의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 때는 일본풍이나 홍콩을 배경으로 한 영화문화, 현재는 한류가, 향후는 중화에 의한 흐름이 서서히 부상할 것으로 예견할 때, 동북아 역내의 정서는 많은 부분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동북아 역내의 의식구조가 유사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서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전술한 국가주의에 기반을 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이들의 공동체성을 훼손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애 요인이었음을 고려한다면 가능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문가 A17: 정치외교나 경제는 사회 시스템이라는 하드웨어적 측면과 관련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 한·중·일 어느 나라도 공동체를 위해 향후 20-30년 정도까지는 자국 시스템을 포기하거나 변형을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삼국 교류의 규모나 다양화의 증대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고, 우호와 공존의 논리가 교육 등을 통해 반목과 반발의 정서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동아시아의 소프트웨어적 콘텐츠를 다루는 문화공동체는 장기적 안목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한반도 미래의 평화와 문화적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북아문화공동체 건설은 처음부터 역내 모든 국가를 같이 동참시키는 것보다는 한·중·일 3국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전문가 A03: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한, 중, 일 간의 협력과 합의를 필수적으로 처음부터 여러 국가들을 포함시켜 공동체 형성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공동체 형성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한, 중, 일 간에 합의된 영역을 중심으로 몽골, 러시아 극동 등을 점차적으로 포함시켜 나가는 점진적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정부 주도의 동북아문화공동체 프로젝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들도 많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9명의 전문가 중 3인은 특히 “전혀 불가능하다”는 매우 확고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중 두 명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문화 자체가 아직 충분히 포용적이지 못하며, 이를 외국으로 확장시키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제도로써의 동북아문화공동체를 만들어 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라 관료들의 비효율적인 보여주기식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었다.

- 전문가 A07: 정부 주도의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은 전혀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현재 한국을 문화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가? 한국인을 하나로 묶는 문화를 상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론적으로도 무리수가 많은 문제인데, 하물며 동북아를 아우르는 문화공동체를 정부가 나서서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현실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본다. 한국의 문화인 한식이나 한글을 다른 국가들에 홍보하는 정부의 시도들만 보더라도 피상적이고 지나치게 관료제적인 비효율적인 방안들이 많았는데, 국가를 넘어서는 동북아문화공동체를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는 것은 동북아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합의를 얻지 못할 것이며, 행여

국내적으로 합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에게서 호응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전문가 A10: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문화교류는 나쁘지 않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도모할 수 있는 노력이라면 정치적인 싸움을 무릅쓰고도 해야 하는 것이 이상적인 논리일 것이나 문화공동체라는 개념을 만드는 것은 비단 한국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한국은 껴안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특히 문화공동체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느냐의 범위 문제가 거론되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개념으로부터 문화공동체가 발족되었을 때에 한국은 보여주기에 집착하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고 생각된다. 중국, 한국, 일본 모두 포용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되더라도 제도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불가능”이라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답을 내놓은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말했다. 우선 문화공동체 창출이 경제 혹은 안보공동체 보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각 국가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득이나 안전보장을 위해서라면 국제협력공동체에 참여를 상대적으로 쉽게 결정할 수 없으나, 이러한 현실적 유인책이 없는 문화공동체 참여는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들이었다. 전문가 A18의 경우, 한·중·일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EU의 사례에서도 경제공동체에서 출발하였지만 EU 공통의 정체성 정립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화공동체가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 전문가 A13: 문화공동체는 소프트한 접근으로 쉽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실에서 오히려 더욱 그 실현이 더욱 어려울 수 있음. 유럽연합도 사실상 경제공동체, 이익공동체이고, 그 기반 위에서 유럽시민으로서 공동체,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렇게 본다면 문화공동체보다는 경제공동체가 더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함.
- 전문가 A18: 이 문제는 동북아시아공동체 건설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3개 국가는 패권을 두고 경쟁 혹은 갈등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협력의 가능성과 통합체를 항상 추구할 수 있는 명분과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구속되거나 통제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선불리 동북아시아 통합체를 찬성하기에는 상당히 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 전문가 A08: 앞서 언급한 EU 사례에서 설명하였듯이, 경제적, 정치적 이해를 같이하여 EU를 출현하고 문화적인 집단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나, 여전히 이중적 가치(국가별 고유의 국가 정체성과 EU라는 연합체로서 공통의 정체성)를 구현하거나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해 고전하고 있음. 하물며 역사적 해석, 2차 세계대전과 냉전 이후 상호 화해나 타협을 많은 부분에서 이루지 못하고 일부분 내재하고 있는 국제관계 가운데 문화공동체는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전문가 A02: 국제협력공동체에 참여 및 추진함에 있어 한국은 지금까지 한국의 장단기적 필요에 따른 공동체 추진이 아주 쉽게 드러나는 방법들을 사용해왔음. 국제협력공동체를 주체적으로 추진함은 국제사회 공동체의 주체적 일원으로서, 한국을 중심에 두지 않는 공동체 주제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한데 한국은 대부분 한국의 이익, 우위선점 등을 위한 공동체 추진을 해왔다는 국제사회 인식이 강함. 따라서 그간의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 없이는 공동체 형성 추진은 어려울 것.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한·중·일 삼국 국민들의 서로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아직 부족하며, 역사적 문제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문화공동체가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 전문가 A19: 한국정부가 주도하는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은 국민들의 지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동북아문화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 사이에 반일감정이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이 이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중국이나 일본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남을 침략한 경험이 없고, 남을 위협하는 강대국 지위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균형자’ 내지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장 적절하다. 그러나 우선 국내적으로 국가 간의 문화공동체는 시민사회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일본과 중국에 대한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주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동북아에 있는 많은 다른 국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국가 관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관계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떤 국가들을 포함시킬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동북아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에 해당되지만, 문화적으로 공동체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몽골, 러시아, 미국 등을 어떤 식으로 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 전문가 A05: 한·중·일 국가들 사이에서도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들이 반복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적,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주변 국가와 지역들을 포함한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은 실현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 전문가 A04: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문화공동체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즉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유구한 문화 역사를 공유하는 한·중·일 3국도 문화공동체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라를 설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어불성설이다. 우선 우리 주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확대문제는 차후에 생각할 문제다.

4. 동북아시아의 정체성과 한·중·일 상호 인식

공동체는 소속된 개별 단위들이 공통의 목적의식과 소속감, 소속 자격에 대한 기준, 그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동북아문화공동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속감과 정체성이 기존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속감과 정체성을 개발할 만한 공통의 경험이나 우호적 감정, 인식 등이 있는지가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여기에선 한국의 전문가들에게 동북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이러한 정체성이 있는지를 묻고, 이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차이를 정체성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해 보았다. 그리고 한·중·일 삼국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느끼는 지에 대한 평가도 부탁했다.

동북아시아에서 다자적협력체 혹은 공동체의 기반이 될만한 정체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나뉘어 있었다. 유교문화와 한자, 그리고 최근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등을 통해 공통의 정체성 확립이 가능하다고 본 전문가들이 있는 반면 동북아시아에는 그러한 인식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단언하는 전문가들도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한·중·일 삼국의 상호 인식과 감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했다. 혐오 감정의 수준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으며, 특히 중국의 혐일이나 일본의 혐한 감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한 전문가들이 많았다. 한국의 혐일과 혐중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되었으며, 이는 최근 여론조사의 결과로도 확인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중국과 일본을 보는 인식이 단순히 선호와 혐오의 이분법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에도 전문가들의 시각이 일치하고 있었다. 세대별로 중국과 일본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다르며, 국가로서의 일본과 개인으로서의 일본인, 국가로서의 중국과 개인으로서의 중국인에 대한 평가와 인식도 양가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었다.

앞 절에서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은 동북아시아의 공통된 정체

성이 부재하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경우가 특히 많았다. 이 문제에 대해 험머와 카첸슈타인의 연구가 자주 인용되는데,⁸²⁾ 이 두 사람은 아시아에서 유럽의 NATO에 해당되는 안보공동체가 생성되지 못한 이유를 미국의 2차대전 이후 정책적 차이와 아시아 지역에서의 공유된 정체성의 부재로 들고 있다.

지역공동체에서 문화와 정체성의 문제는 경제적 이익 및 군사적 안보의 문제만큼이나 중요하다. 이 문제를 답하기 위해 과연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는 정체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의견을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이 문항의 구체적인 질문은 아래와 같았다.

- “험머와 카첸슈타인(Christopher Hemmer and Peter Katzenstein)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지역에서 유럽연합이 가능했지만, 아시아에서는 이에 비견될 만한 지역적 다자협력기 형성되지 못했던 이유를 지역내 국가들이 공유하는 정체성의 유무에서 찾고 있습니다. 즉, 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 통합에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공통적인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십니까?”

앞 절의 문제들과 유사하게 한국의 20인 전문가 집단은 긍정과 부정으로 절반씩 갈린 답변을 내놓았다. <표 2-12>는 이 답변의 분포를 보여준다. 20인 중 “(매우 혹은 어느 정도) 공감한다”, 즉 동북아시아에 공통적인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은 10명이었다. 나머지 절반의 10명은 반대로 동북아시아에 공통적인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표 2-12〉 동북아에 공통적 정체성이 부재하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

동북아의 공통적 정체성 부재	빈도	%
(1) 매우 공감한다	1	5.0%
(2) 어느 정도 공감하다	9	45.0%
(3) 어느 정도 공감하지 않는다	7	35.0%
(4)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3	15.0%
* 공감 = (1)+(2)	10	50.0%
* 공감하지 않음 = (3)+(4)	10	50.0%
합계	20	100.0%

82) Hemmer, Christopher, and Peter J. Katzenstein, “Why is There No NATO in Asia? Collective Identity, Regionalism, and the Origins of Multilater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6, no. 3 (2002), pp. 575~607.

동북아시아의 공통적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유를 물었을 때는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우선, 한·중·일 삼국의 공통된 문화의 예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유교나 한자 문화 자체가 실상은 각국마다 매우 상이한 모습으로 발현된다는 답변이 있었다. 근대 이전까지는 유교와 한자 문화라는 것이 공통 정체성의 기반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나, 현대의 문화공동체의 발판으로 삼기에는 근거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 전문가 A07: 정체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속감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유하는 가치와 전망이 있어야 한다. 동북아시아에서 공유하는 가치를 흔히들 유교문화라고 생각하는데, 한·중·일 삼개국만 보더라도 유교문화가 발현되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상인을 중심으로 유교윤리가, 일본은 무사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윤리가, 한국은 학자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윤리가 지배적이었다고 볼 수 있음). 한·중·일이 근대와 현대에 서로 얹혀있는 역사적 경험을 하였고 그것이 현재까지 관계에 영향을 지대하고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북아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진 바 없고 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 역시 합의된 해석을 내리고 있지 못한 점도 공통적인 정체성을 가지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또한 한·중·일만 놓고 보더라도, 각 국가가 스스로 독특하고 전례없는 전통과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공통의 정체성을 도출해 내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 전문가 A18: 혹자는 동북아시아의 문화적 공통점을 유교 혹은 유교적 사회질서라고 이야기 한다. 어느 정도 타당성과 근거가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일정 시대를 기준으로 했을때나 가능한 이야기이며, 현대에 오면 전혀 다른 성격의 근대성을 각각의 국가들은 갖는다. 이를 예전의 고리타분할 정도의 구식 정체성으로 묶고자 한다면 오히려 현재 살고 있는 동북아인들의 의식이나 생각과도 괴리가 있는 설명일 것이다. 다만 지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오랜 역사적 과정 속에 함께 근접하고 동질적인 역사적 사실과 사회적인 변천 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의 공감은 존재하지만 동질적인 측면의 정체성 공유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전문가 A09: 아시아 국가들은 한자의 영향권 아래 있기는 하지만 오래전부터 독립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다. 독립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은 독립된 정신세계와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국가 통합이나 유럽처럼 왕실 결혼 등의 경험이 없다. 또한 정통성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다. 적통(嫡統)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오늘날까지 살아 있다.

- 전문가 A17: 동북아시아는 서구 세력에 의한 문호 개방 전까지는 불교 문화와 유교적 질서, 한자 사용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적으로 공통된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서구 문화가 유입된 20세기 이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한·중·일의 정체성은 희석 혹은 왜곡의 단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동북아시아 정체성 희석 및 왜곡의 핵심은 20세기 전반의 식민지 경험과 20세기 후반의 냉전체제에 기인합니다. 중국(북한도) 공산주의가 크게 위축된 유럽과 달리 상당히 견고한 체제로 자리잡았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 영향권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히 정착했습니다. 공통의 경제적 이해관계 및 안보/환경 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질적인 체제/사상이 동북아시아의 역내 협력/통합을 가로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적 이해와 정치적 역학관계의 하위 변수라는 주장이 있었다. 즉, 동북아 국가들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공동체 형성을 가능할 정도로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면, 공통의 정체성을 찾는 다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전문가 A08: 험머와 카첸슈타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체성의 공통적 요인이 인종, 역사, 정치, 문화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중 초국가적 협의기구(또는 공동체기구)를 구성하기위해 실제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각국의 정치적 이해와 그 중 공통된 부분의 규모일 것으로 사료됨. 그러한 입장에서 공통적인 정체성이 존재하기가 어려운 것은 세계패권의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한 중국과 경제와 외교를 발판으로 주요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중 누가 아시아권 공동체 기구를 통해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라는 문제가 하나의 이유일 것으로 생각됨.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이념적 관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치적 이해의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음.
- 전문가 A15: 험머와 카첸슈타인에 공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북아시아라는 지리적, 문화적 개념을 기획, 형성하는 데 있어 필요할,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시민사회적 연대, 공동체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가능한 협력적 공간이 존재하거나 혹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현실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지역의 공간이 일반 시민들의 차원에서 의식되고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공동체적 감각으로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 고려한다면, 유럽에 비교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는 분명히 상호이해의 부족, 역사 인식의 충돌, 평화, 공동번영, 정의 등 협력적 지역 개념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공통의 인식 결핍 등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본적으로 작용할 지반이 약하다고 생각한다. 유럽적 정체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동북아는 결핍되었다기보다는,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기획에서 공통의

인식, 협력적 기반을 만들어내는 시도 혹은 그 안정적 성과가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한편, 전문가 A10은 험머와 카첸슈타인을 가장 자세하게 인용·비판하면서도, 동북아에 공통 정체성이 부재하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전문가 A10은 “To these factors we would also add the continuing lack of Asian-Pacific collective identity and the lack of institutional experiences that could have helped provide a sense of community⁸³⁾”라는 험머와 카첸슈타인의 원문을 인용하면서, 이 두 저자들은 공통의 정체성이 부재하다는 것과 더불어 공통의 제도적 경험 또한 동북아시아에 부재하다고 주장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 전문가 A10: 한편, [험머와 카첸슈타인]의 주장에 따르면 유럽에 비해 아시아에서는 집단적 정체성이 생겨나는 기간이 더 오래 걸렸다는 것인데, 집단적 정체성은 결집의 결정적 요소라기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결정으로 인한 연합의 틈새를 메워주는 끈끈이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새 브렉시트와 관련된 유럽연합의 역사를 살펴보면 실로 동북아시아의 정체성에 관련되어 고민을 해왔던 학계가 사실 필요없는 고민을 장시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과 유럽대륙의 관계와 역사를 살펴보면 함께 해나갈 수 없는 부분들이 영국이 유럽대륙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많이 기인한다. 즉, 동등한 행위자로서의 인정을 할 수 없다면,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면 주름잡는 국가의 존재가 사실은 해가 되는 것이다. 동북아에서는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일본이 그와 비슷하였고, 현재의 중국이 비슷한 예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은 지역 리더십을 자처하고 있고, 일본도 90년대 말에 들어 경제적 리더십을 자처하고자 하였으나 미국이 이를 반대하였고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그리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동북아시아에 공통적인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일부 동의하나, 지역적 연대가 부재한 것은 정체성만이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전문가 A01은 동북아 공통의 정체성이 존재한다고 답변하면서도, 유럽과 아시아의 역사적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 형성의 여부가 결정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차 세계대전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유럽은 공동체를 형성해서 갈등을 방지해야할 충분한 유인이 있었기에 나토

83) Hemmer, Christopher, and Peter J. Katzenstein. “Why is There No NATO in Asia? Collective Identity, Regionalism, and the Origins of Multilateralism,” p. 602.

와 EU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의 정체성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유럽과 같은 경험에서 우리나라 공동체 형성의 유인이 없기 때문에 아시아에는 나토와 비견할 만한 공동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전문가 A01: 유럽이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던 반면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체 형성이 현재까지도 어려운 까닭은 공통적인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는가의 요인보다는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경험의 유무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연합의 공동체 형성은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세계대전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다. 반면 동북아시아는 그와 같은 세계대전의 경험이 부재하기 때문에 공동체 형성의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이지 공통적인 정체성 보유 유무와는 무관하다.

마찬가지로, 전문가 A02, A16, A20도 유럽과 아시아의 차이점은 정체성의 유무가 아니라 역사적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공동체 형성의 유인 차이 때문이라고 답했다.

- 전문가 A02: 유럽연합의 성공은 정체성보다는 언어소통의 가능성이 동북아보다 높았고,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의 위기의식이 작용한 면이 더 컸다고 봄. 따라서 공통된 정체성이 유럽연합 국가들 간에 존재했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가능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유럽연합이 구축된 이후 공통된 정체성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임. 또한 동북아 간의 다자협력의 불가능했던 점은 오히려 공통된 위기의식으로 인한 공동체 필요성이 유럽 국가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이며, 국가 간의 상충 및 충돌요소가 더 긴 시간동안 존재해오고 있기 때문에 중간 지점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됨. 그리고 중심역할을 할 국가에 대한 의견대립 또한 이슈일 것.
- 전문가 A16: EU는 기본적으로 유럽의 도시를 기축으로 하는 도시공동체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동북아지역은 양차 대전을 거치면서 국경의 개념이 보다 명확해지고, 제2차 대전 이후 이념적 대립으로 인한 동북아 역내의 냉전질서는 국가 질서 속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역내 구성원 간의 교류 단절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역사를 천 년 전으로만 돌이켜 놓아도 동북아 역내의 다양한 형태의 정치경제적 교류는 유럽지역의 도시국가 간 교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동북아 역내는 공동체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근대 이후의 정치적 이질성이 공동체성을 훼손한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 전문가 A20: 험머와 카첸슈타인(Christopher Hemmer and Peter Katzenstein)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지역에서 유럽연합이 가능했던 이유를 지역 내 국가들이 공유하는 정체성의

유무에서 찾고 있다고 했던 것은 아마도 종교적 정체성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아주 특별한 공통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유럽은 이미 수천 년간의 종교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이러한 특수한 종교적 동일성을 기준으로 동북아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특수성을 동북아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문화적 동일성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문제는 정체성과 동일성의 유무가 아니다. 이러한 정체성과 동일성을 묶어주는 요소이다. 그것이 경제적인 이해관계라고 생각한다. 만약 유럽연합이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없었다면 공동체를 성립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유럽 연합이 생겨난 이유를 경제적 문제 동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 아니라 이러한 정체성을 하나의 공동체로 엮어 낼 수 있는 경제적 동기이다.

그리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아시아에도 분명 유럽과 비견할 만한 공통의 정체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 전문가 A04: 동북아는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5000년 동안 공존해왔기 때문에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웃국가로 협력과 교류를 한 시간과 세월이 많았기에 정체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공감하지 않음. 더욱이 우리 후대들에게는 정체성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가상세계와 정보통신의 수단을 통해 동북아, 동아시아, 아시아라는 공동의 정체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가상세계에서의 정보 공유와 교환으로 이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것임.
- 전문가 A06: 일견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논의는 동북아시아의 1990년대 이전의 사회를 이해하는 데 적절할 것 같다. 과거 동북아시아 사회에서 중국, 베트남, 북한 등이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매진하고 국민들에게도 사회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강요했던 이유로 식민-반식민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절박함이 있었고 남한의 경우에도 역시 같은 이유로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고양시켜왔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주의나 자본주의와 같이 국가가 추구하는 이념과 다르게 현장의 행위자들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공동적인 정체성을 찾아내고자 한다면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전문가 A11: 동북아시아의 핵심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은 유교 문화, 한자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사성이 높음. 또한 자본주의 문화라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음. 미국 문화에 대한 동경, 한류, 일류 등의 확산으로 대중 문화적 유사성의 증대가 현실화되고 있음. 또한 한중일 모두 도시 중심의 대중 문화가 공통적임. 다만 일본의 국가 정체성은 탈아론, 해양국가,

서구와 아시아의 경계국가 등 다양한 개념으로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회자되고 있음. 즉, 일본은 서구지향성이 매우 강한 나라임. 따라서 일본이 동북아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을지는 향후 동북아 협력의 진척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만약 동북아, 특히 북한 개발을 둘러싼 현실적 수요가 사회적 관심을 불러오면 일본 사회가 동북아의 일원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봄. 즉 일본의 경우 이익(interest)에 따라 자기 정체성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동북아 국가와의 협력에 이해관계가 높아질 경우, '동북아의 일원'이라는 자기정체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음.

- 전문가 A03: 동북아시아의 공통적인 정체성을 크리스천 문명, 유교 문명 같은 정체성을 의미한다면 동북아시아에서는 공통적인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편이 맞다고 본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공통적인 정체성을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고 만들어가기 위한 재료가 존재하는가를 묻는다면 동북아시아에는 이러한 재료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한, 중, 일 모두 자국-East Asia-the West라고 하는 triad라는 도식에 위치하고 있다. 동북아시아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국이 동북아시아라는 공간에서 서구와 어떻게 조우해왔는가를 성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점에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위해 서구를 어떻게 재성찰해야 하는가라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역사적인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 A12는 문화와 정체성의 측면에서 유럽과 동북아를 가장 세밀하게 비교하는 답변을 했다. 이에 따르면 유럽에도, 아시아에도 공통의 정체성을 가능케 하는 문화적 유사성과 역사적 경험은 모두 존재한다. 그런데 유럽의 경우 20세기 초부터 유럽의 지역적 공통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의식적 노력이 이루어져왔는데, 동아시아에는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라는 지역내 통합을 추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서구의 문화와 제도를 받아들여 문명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옥시덴탈리즘)이 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들고 있다. 즉, 공통의 정체성이나 역사적 경험의 존재 혹은 부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유럽에서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공동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유럽 정체성으로 이어진 반면, 아시아에서는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 자체가 적었다는 것이 유럽과 아시아의 차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 전문가 A12: 유럽의 경우 물론 로마교황의 통치 등 유럽 영역을 연결하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이 강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독일 출신의 유대인 비교문학자 아우어바흐(Auerbach)라

는 문학평론가는 미메시스란 저서에서 유럽이 무엇인가라는 담론을 20세기 초부터 만들었고, 유럽의 공통성을 만들어가는 일종의 코스모폴리턴 문화정치를 시행했다. 기존에 존재했던 역사적 경험이 유럽적 정체성이라는 방식으로 개념화되고 Articulate되는 것은, 유럽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하는 1/2차 세계대전과 같은 파국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유럽의 공통의 정체성을 되살리고 찾아내는 것은 지속적으로 역사를 재해석하고 경험하면서 등장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도, 중국 중심의 지배체제와 한족/이민족 들간의 지속적인 갈등과 투쟁, 협력, 그리고 실크로드를 통한 문명의 전파 등 공통의 역사적 경험과 유산이 상당히 존재한데, 사회지배체제, 유교/불교/ 도교의 사상적 공통점, 실크로드/서학의 전래라는 세계화의 경험 등등. 하지만 이것을 동아시아 차원에서 고민하고 이것을 정체성/공통의 경험과 유산으로 개념화하려는 시도가 다소 부족했다. 동아시아에서 cosmopolitanism은 유럽처럼 지역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구적 세계화의 연동되었다. 이는 아마도 냉전체제하에서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게는 더욱 시급한 과제였기에 지역 질서와 정체성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세계=서구라는 옥시덴탈리즘이 지역 사회내에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에, 지역 내의 자체적인 규범과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다. 이는 어찌보면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로 인해, 지역내의 연대보다 민족주의적 정치적 지향이 더 강하게 등장해서 비롯된 문제일 것이다. 또한 내재적 지역 자체의 원리로 지역의 질서가 형성되기 보다는 미국이란 강대국에 의해 지역질서가 결정되는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지역 자체에 대한 관심은 미미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기존의 냉전적 양극체제가 끝나고 다극적 체제 속에서 한반도가 국제지역질서의 형성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행위성(agency)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동북아 정체성 형성을 통해 지역 내의 자체의 동학을 확보해 이 지역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공동의 터전(common ground)을 만들어가는 것은 무척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냉전이후의 체제 질서를 극복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을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해 현재의 기성세대들이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할 작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역사적 갈등, 민족주의의 강화, 미국 요소, 북핵 변수 등 다양한 변수들이 상존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답변이 하나로 수렴되기 보다는 다양하게 나뉘고 있었다. 이런 현상 자체가 동북아시아 공동체 문제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것이다.

그 다음 설문으로, 어떤 요소가 동북아시아의 공통적인 정체성의 바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

는 지를 물었다. 복수 답변을 허용한 이 질문에서는 “유교문화 및 한자사용”, “서세동점 시기에 대한 공통의 역사적 경험”, “공통의 경제적 이해관계”, “군사적 안보 협력의 필요성”, “비군사적 안보협력의 필요성”, “환경 문제에 대한 공통적 대응의 필요성”, “노동, 복지, 이민자, 인구 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공통적 대응의 필요성”, “한류(韓流) 등 공통적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등을 답지로 제시했다.

〈표 2-13〉 동북아시아 공통 정체성의 바탕을 이루는 요소

	긍정	부정	합계
유교문화 및 한자 사용	10 (50.0%)	10 (50.0%)	20 (100.0%)
서세동점 시기에 대한 공통의 역사적 경험	10 (50.0%)	10 (50.0%)	20 (100.0%)
공통의 경제적 이해관계	7 (35.0%)	13 (65.0%)	20 (100.0%)
군사적 안보 협력의 필요성	8 (40.0%)	12 (60.0%)	20 (100.0%)
비군사적 안보 협력의 필요성	7 (35.0%)	13 (65.0%)	20 (100.0%)
환경 문제에 대한 공통적 대응의 필요성	3 (15.0%)	17 (85.0%)	20 (100.0%)
노동, 복지, 이민자, 인구 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공통적 대응의 필요성	8 (40.0%)	12 (60.0%)	20 (100.0%)
한류(韓流) 등 공통적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13 (65.0%)	7 (35.0%)	20 (100.0%)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정리해보면, 전체 응답자 20명중 절반 이상의 답을 얻은 답지는 순서대로 “한류 등 공통적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13명)”이 가장 많았고, “유교 문화 및 한자사용(10명)”, “서세동점 시기에 대한 공통의 역사적 경험(10명)”이 그 뒤를 잇고 있었다.

한·중·일 삼국이 서로의 대중문화를 통해 교류한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근현대 이전에는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 같은 중국의 대중소설이 한국과 일본의 대중문화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현대에도 끊임없이 중국의 고전소설들에 대한 인용과 새로운 해석, 재생산이 동북아시아 국가들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에 들어와서 서구의 문화를 먼저 받아들인 일본의 대중문화는 한국과 중국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일본의 제이팝과 아이돌 문화는 한국에 직수입되어 현재 케이팝 문화의 부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외에도 드라마, 영화, 게임, 음악, 패션, 미술, 만화, 소설 등 거의 모든 대중문화 장르에서의 교류는 점점 양과 질 모두의 측면에서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 중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지만, 이 대중문화 교류의 측면에서는 결코 약자가 아니며, 동북아 삼국이 대등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분야라는 측면에서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답을 내놓은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문가들에게 물은 것은 한·중·일 삼국의 대중이 각각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에 대한 것이었다. 지역공동체와 각국 국민들이 느끼는 타자성은 서로 일종의 모순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결코 호의적이라고 할 수 없는 한·중·일의 서로에 대한 인식과 감정이 지역간 갈등의 한 원인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공동체에 대한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방향의 주장이든 중요한 것은 한·중·일 3국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각국에 대한 인식과 감정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한국에서의 혐중, 혐일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물었고, 이어서 중국에서의 혐일, 혐한 수준, 일본에서의 혐한, 혐중 수준을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물었다. 아래의 <표 2-14>, <표 2-15>, <표 2-16>은 이 설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표 2-14> 한국의 혐중과 혐일 수준

한국의 혐오 수준	한국에서의 혐중	한국에서의 혐일
(1) 매우 심각	1 (5.0%)	4 (20.0%)
(2) 어느 정도 심각	12 (60.0%)	10 (50.0%)
(3) 그다지 심각하지 않음	6 (30.0%)	5 (25.0%)
(4) 전혀 심각하지 않음	1 (5.0%)	1 (5.0%)
* 심각함 = (1)+(2)	13 (65.0%)	14 (70.0%)
* 심각하지 않음 = (3)+(4)	7 (35.0%)	6 (30.0%)
합계	20 (100.0%)	20 (100.0%)

<표 2-14>를 보면 전체 20명의 응답자 중 13명이 한국의 혐중을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었으며, 혐일 또한 14명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즉,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중이 중국과 일본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수준 또한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 전문가들이 보는 중국에서의 혐한과 혐일은 아래 <표 2-15>와 같았다. 중국에서의 혐한이 심각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전체 20명중 9명으로 절반에서 약간 모자란 정도였다. 반면 중국의 혐일이 심각하다는 의견은 무려 80%인 16명으로,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에서의 혐일 문제가 혐한

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혐한이 심각하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9명에 달해, 중국에서의 혐한을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는 않았다.

〈표 2-15〉 중국의 혐한과 혐일 수준

중국의 혐오 수준	중국에서의 혐한	중국에서의 혐일
(1) 매우 심각	1 (5.0%)	3 (15.0%)
(2) 어느 정도 심각	8 (40.0%)	13 (65.0%)
(3) 그다지 심각하지 않음	11 (55.0%)	3 (15.0%)
(4) 전혀 심각하지 않음	0 (0.0%)	1 (5.0%)
* 심각함 = (1)+(2)	9 (45.0%)	16 (80.0%)
* 심각하지 않음 = (3)+(4)	11 (55.0%)	4 (20.0%)
합계	20 (100.0%)	20 (100.0%)

일본인들이 한국과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심각한 상태라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일본인들의 혐한이 심각하다고 답한 전문가는 70%인 14명, 혐중이 심각하다고 답한 전문가들은 80%인 16명이었다(〈표 2-16〉). 즉, 중국에서의 혐한 수준을 제외하고는 한·중·일 3국의 상대방을 바라보는 인식과 감정은 심각할 정도로 부정적이라는 것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었다.

〈표 2-16〉 일본의 혐한과 혐중 수준

일본의 혐오 수준	일본에서의 혐한	일본에서의 혐중
(1) 매우 심각	3 (15.0%)	3 (15.0%)
(2) 어느 정도 심각	11 (55.0%)	7 (35.0%)
(3) 그다지 심각하지 않음	6 (30.0%)	10 (50.0%)
(4) 전혀 심각하지 않음	0 (0.0%)	0 (0.0%)
* 심각함 = (1)+(2)	14 (70.0%)	16 (80.0%)
* 심각하지 않음 = (3)+(4)	6 (30.0%)	4 (20.0%)
합계	20 (100.0%)	20 (100.0%)

이러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여론조사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 통일연구원에서는 매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주변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인식을 11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아래 두 표에 정리하였다.

〈표 2-17〉은 중국에 대한 인식을 여론조사를 통해 알아본 것이다. 2018년의 경우 중국을 싫어한다는 부정적 응답이 45.1%, 긍정적 응답은 16.1%로 부정 응답이 세배 가량 높았다. 2019년에는 같은 문항을 조사했을 때 부정인식은 약간 감소한 42.7%, 긍정인식은 약간 증가한 21.0%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하면 중국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답변이 긍정적인 답변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표 2-17〉 중국에 대한 인식 2018-2019년

	2018년	2019년
부정	452명 (45.1%)	427명 (42.7%)
보통	389명 (38.8%)	362명 (36.2%)
긍정	161명 (16.1%)	210명 (21.0%)
합계	1,002명 (100%)	999명 (100%)

* 출처: KINU 통일의식조사 2018, 2019.

한편,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중국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KINU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표 2-18〉), 2018년에 일본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은 59.7%였는데 2019년에는 오히려 증가하여 65.6%로 악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역시 긍정적인 답의 비율도 감소해서, 2018년의 14.6%가 2019년에는 12.6%로 줄었다. 즉, 한국인의 3명 중 2명은 일본이 싫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8〉 일본에 대한 인식 2018-2019년

	2018년	2019년
부정	598명 (59.7%)	655명 (65.6%)
보통	258명 (25.8%)	218명 (21.8%)
긍정	146명 (14.6%)	126명 (12.6%)
합계	1,002명 (100%)	999명 (100%)

* 출처: KINU 통일의식조사 2018, 2019.

그러나 인식과 감정은 매우 복잡한 현상이며, 단순한 집합 통계로는 그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힘들다. 수천년간 전쟁과 교류, 협력과 갈등을 겪어온 한·중·일 3국이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을 단순한 통계로 치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좀 더 복잡적, 다층적으로 접근해보기 위해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인식과 감정의 원인과 양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전문가들에게 던져보았다. 우선 한국인들이 보는 중국에 대한 인식과 감정에 대해 물었을 때 대부분의 한국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이 중국 혹은 중국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중국이 열강으로 급격히 부상하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영향력을 지니게 된 것을 인식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인식이 한국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다는 것이다.

- 전문가 A01: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중국에 대하여 정치, 경제적으로 한국보다 낙후되어있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체제 하에서 비민주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경제적으로도 시장경제를 채택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뇌물과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등의 비선진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최근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갈등 및 북한 이슈와 관련하여서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국제안보와 관련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 등을 이유로 중국의 부상이 높이 평가하거나 위협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다수 관찰된다. 최근 사드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경제적 손실을 경험하면서 한국은 중국에 대한 높은 수준의 경제연관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는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요컨대 정치, 경제적 제도는 비선진적으로 평가하나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치 안보적 중요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인지한다. 다만, 미국과 중국에 대한 중요도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국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 전문가 A02: 사드 이후 중국과 한국의 정치외교적 관계에 대한 불만이 부정적 감정으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미세먼지 등의 환경적 이슈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 방법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일반 중국인, 중국 문화 등에 대해서 일본에 비해 긍정적 감정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중국문화를 덜 현대화되었다고 인식하거나 한 단계 아래 문화 등으로 인식하는 감정이 발견됨. 또한 중국 유학생,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전문가 A05: 정치(외교), 경제(무역) 분야에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아직 문화적, 경제적(국민소득), 환경적, 정치적(민주주의) 역량 및 의식 수준이

뒤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음.

- 전문가 A07: 일반적으로 말해 중국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반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딱히 일본처럼 우리가 식민지배를 받았던 가까운 과거의 부정적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중국에 대한 감정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청결성, 윤리성, 시민성 등의 가치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게 평가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이나 관광객들에 대해 이러한 평가를 직접적으로 투사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미중 갈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원과 경제력이라는 차원만 보더라도 중국은 세계의 안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규모의 국가이며 남북한 문제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대중의 중국에 대한 감정은 상당히 현실과 동떨어지고 차별적인 인식을 저면에 깔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몇몇 전문가들은 중국 혹은 중국인들에 대한 호의적 혹은 긍정적인 인식도 존재한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예를 들어 전문가 A11은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지만, 좀 더 추상적인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가 A16은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의 근원을 “내면의 의식에서는 비하적이고 심리적 거리감을 둔 채로 감정적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뒤쳐질 수 없는 경쟁의 대상”이라고 짚막하게 정의하기도 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의 부상이 중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 전문가 A11: 중국인에 대한 감정: 매너가 없고, 자기중심적이며, 질서 의식과 시민 의식이 낮다는 인식이 강함. 중국 국가에 대한 감정: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중적 감정이 존재함. 문명의 근원, 대륙국가적 대범함 등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이지만, 패권적 태도, 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도취 등에 대해서는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음.
- 전문가 A08: 중국에 대하여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나 인식은 혼합된 것으로 생각됨. 과거 중국인들을 폄하하는 시각이 언어나 행동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면,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 여행객의 구매력 등을 바탕으로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각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음. 그러나 문화의 차이와 중국 여행객의 비윤리적 행태가 경험과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어 과거 중국인들을 일방적으로 폄하하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반감이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중국 정부의 한류(뷰티 산업, 연예 산업 등) 확산에 대한 저항적 태도, 정책 그리고 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충돌 등을 바탕

으로 중국의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만연하다고 생각함.

- 전문가 A09: 중국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 달리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인식 역시 세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중국은 한때 전장에서 총부리를 겨누고 맞서 싸웠던 존재였다. 한때는 한국 경제가 중국에 앞서서 중국의 발전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G2 국가로 발전하였다. 이 발전의 과정이 큰 시간을 두고 조금씩 이루어져다기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이루어진 변화이다. 당연하게도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중국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지저분하고, 촌스럽고,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국가'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중국이 과연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국가로서 위상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졌다.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은 분명하지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특히 중국인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인식하지 않으려는 경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중국인들의 경제력 과시나 중국 중심적인 언론보도의 형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 전문가 A10: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태도 역시 이중적이다. 한편으로는 대국의 위력에 굽히고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영향을 끼친 중국의 전통문화를 지향하면서도 (특히 삼국지와 서유기에 대한 관심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중국인들의 생활습관이나 예의, 위생 (대도시 몇 군데 제외), 사회의 이모저모에 대한 동경은 거의 없다고 보는 편이다. 일식요리는 한국시장에서 이미 포화상태이나 한국식이 아닌 중국식 중화요리에 대한 수요는 최근들어 한국에서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느낀다 (예컨대, 마라탕에 대한 수요가 중국인 체류자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높아졌고 한국인도 이를 많이 찾게 되었다). 현대 중국의 모습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중국, 혹은 한국전쟁 이후의 중국), 즉 문화대혁명 때부터 비롯된 학문과 언론의 자유가 부재한 환경과 일당독재와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로 대표되는 정치형태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중국의 외교적 압력 행사에 대한 불안감 내지는 공포심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중국은 개혁개방과 한국과의 수교 전에는 명백한 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중적인 인식이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도 모른다. 한국에 와서 느끼는 한 가지는, 반미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의 경우 중국에 대한 미온적 태도 혹은 과소평가이다. 북-중-러, 한-미-일로 압축되는 신냉전의 구조 속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이들이 상당수인 가운데, 중국을 '아시아'의 일부로 단정지어 중국이 앞으로 국력을 더 키우고 역내 영향력을 더욱 확장한다 하더라도 흔히 제국주의로 대변되는 서양 국가들의 행태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지구촌에서 중국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단순히 인종이 다르고 서양 제국주의에 당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아시아 국가들의 편에 설 것이다, 혹은 서양 국가들과 다르게 행동할 것이라는 생각들이었다. 이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알 수 없는 자신감에 기댄 나머지 중국의 진면모를 애써 보고 있지 않는, 다시 말해 관찰력이 부족하여 갖게 되는 생각이라고 여겨진다.

- 전문가 A18: 일본과 일본인들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를 중국에 대하여도 유사하게 적용하는 것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층위나 대하는 수준이 일본이나 일본인보다 더 하위 수준으로 취급하는 것이 차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시장경제 수준이나 발전이 일본과 달라 중국인들이 보이는 행태가 천박한 자본주의 졸부들이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이 경우 일본과는 달리 하나의 국가로서 중국을 개별적인 주체로서 중국인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일본과는 정반대의 대응과 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오랜 역사적 경험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으며, 현대에 들어서 자본주의 발전 단계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

한편, 한국인이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감정에 대한 평가를 부탁했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인이 일본 혹은 일본인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의 앞선 경제력과 문화에 대해 부러움과 동경이 섞인 선망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도, 과거사 문제가 얽힌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혐오를 느낀다는 것이다. <표 2-14>에서 한국인들의 혐일 문제가 심각하다는 답변이 70%에 달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동시에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도 보고 있었다.

- 전문가 A01: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일본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 보다 더욱 발전된 혹은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식한다. 한국과 비교하여 정치, 경제적으로 더욱 선진화되어있으며, 문화적으로도 더욱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해 많은 분야에 매우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역사 및 영토(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다.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한 한국인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우호적인 한일관계가 지속되는 것에 큰 장애요인으로 판단된다. 경제협력이 지속되다가도 역사문제가 이슈화되면, 모든 쟁점이 사라지고 역사문제에 대한 갈등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등의 악순환이 지속되어왔다. 최근 위안부 이슈도 마찬가지이다. 해당 이슈는 국가 간의 이슈인 동시에 각 국가의 국내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정치, 경제 등 다양한 협력이슈들을 갈등이슈로 전환시키는 증폭제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일정 수준의 합의와 합의에 대한 전파가 필요하다. 전술하였듯이 해당 이슈는 국제관계의 측면 뿐 아니라 국내정치와 깊숙이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지속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전문가 A03: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이중적이다. 과거사,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 한국인들은 일본을 하나의 단일한 체제로 인식한다. 과거사,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일본 내에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종종 간과한다. 반면, 대중문화, 관광, 음식 문화 등에 있어 일본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소비한다.

일본에 대한 양가적인 인식과 감정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 및 국가에 대한 인식과 일본 국민 및 문화에 대한 인식을 구분했다. 즉, 국가로서의 일본은 혐오하지만, 개인으로서의 일본인과 일본 문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 전문가 A02: 반일 감정이 심화되고 있고(위안부, 교육, 외교이슈 등으로 인해), 특히 일본 정부 및 고위관계자, 우익세력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해 정치외교적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가 높음. 하지만 일본 국민, 일본 문화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 혹은 중립적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세대별 차이가 발생함. 노년층의 일본 문화에 대한 선망 감정은 여전히 존재하며, 중년 및 청년층은 중립적 감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 오타쿠문화 등으로 인한 부정적 이슈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일본대중문화에 대한 관심도는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진 상황
- 전문가 A08: 최근에 들어서는 일본 정부와 국민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가시적이라는 생각이 들. 예를 들어, 과거 일본의 한국점령 기간 발생했던 문제와 독도와 관련한 문제에서 일본 정부가 거듭 사과를 거절하고 외교적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본질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와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과 분노를 계속되고 있으나, 국내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이나 극우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일본인들에 대한 감정은 정치적 문제와 분리하려는 노력과 추세를 관찰할 수 있음.
- 전문가 A11: 일본인에 대한 감정: 일본인은 매너가 좋고, 질서의식이 있으며, 시민의식이 뛰어남. 또한 개인보다는 집단 목표를 우선하는 공동체 지향의 인간이라고 생각됨. 반면 공동체는 개인의 사생활까지 간섭하지 않으면서 공동체와 개인이 상호 공존하는 사회라고 생각됨. 일본 국가에 대한 감정: 일본인에 대한 감정과는 달리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한 감정은 매우 나쁘다고 생각됨. 사죄하지 않는 일본, 말로만 사죄하는 일본, 우경화하는 일본 이런 이미지가 강함.

○ 전문가 A18: 한국인들이 대하는 일본에 대한 감점과 일본인에 대한 감정은 약간의 편차가 있다. 일본이라는 국가를 대하는 감정이나 태도와 달리 일본인 개개인을 대하는 태도는 다소 간의 차이가 있으며, 일본인 개개인에 대하여 좀 더 우호적인 경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갖는 정치적인 행위와 태도에 대하여 총합적인 하나의 주체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찬반 감정의 판단이 개별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인 개개인의 경우 이를 통합화하거나 일반화하기에는 편차가 너무 크고 일본인이라는 개별적인 주체와 공유하는 경험이나 생각 등이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의 행동과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중적인 판단과 차등적인 감정의 결과 일본이라는 국가 행위와 일본인의 행위에 대한 한국인의 대응 방식이 다소 이중적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인이 행하는 태도나 입장에서 일본이라는 국가와 일본인이라는 개인의 행위와 태도에 대하여 한국인의 인식이나 대응방식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면 일본은 싫지만 일본 여행은 좋아한다거나, 일본은 싫어도 일본 음식이나 문화에 호감을 보이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러한 양가적 태도를 세대의 문제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한국의 중장년 이상 세대는 민족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더 큰데, 상대적으로 민족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젊은 세대들은 일본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 전문가 A09: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경향을 한국인이라는 단일 범주로 접근한다면 정확한 인식을 알아내기 어렵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 받았고, 일본을 경험하는 방식은 시기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는 물론 근현대사에서도 어느 나라보다 큰 상호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밀접되어 있으며,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어떤 세대인지에 따라서 일본에 대한 기억과 경험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부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덜하다. 나이 많은 세대일수록 일본에 대한 인식의 상당 부분이 감정적인 문제이고,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객관적인 기준으로 일본을 보려고 한다. 또한 일본의 어떤 분야나 어떤 부분이나에 따라서도 일본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다. 현안이 되고 있는 위안부문제를 비롯하여 지난 역사에 대한 문제에서는 대부분 일본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일본의 과학기술이나 교육, 일본인의 시민의식이나 안전의식, 일본 문화 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

○ 전문가 A17: 주지하듯 한국인들의 대일본 인식 및 감정은 일괄하기 어렵습니다. 20세기 후반처럼 세대에 따라 선을 긋기도 어려워졌고 개인이라고 해도 일본에 대한 인식과 감정은 매우 복잡적입니다. 아직도 혼동되는 친일(親日)과 지일(知日)은 구별될 필요가 있는 개념인데 친일은 자민족 비하나 혐오가 부수하는 감정적인 것입니다. 이에 비해 일본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지일로 인식 변화는 오히려 일본대중문화가 양성적으로 유입 허용되고 월드컵공동개최가 성사된 2000년 전후의 시점이 피크였고, 현재는 외면상의 일본 인식과 내면상의 대일본 감정이 착종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인이 일본을 무수한 외국의 하나로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사례 하나만을 생각하려 하더라도 단정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청소년기까지 한국의 열악한 대중문화 소비재 부족 때문에 거의 일본에서 수입하는 만화, 애니메이션, 대중소설,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을 위화감 없이 받아들이면서도 역사 교육, 특히 한국의 근대사나 세계사에서 동양 근대사를 학습하면 곧바로 혐일 감정으로 치닫습니다. 이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비즈니스 상, 혹은 관광이나 휴양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면 그 서비스 정신이나 탄탄한 인프라에 감탄하고 이는 다시 한국 비하로 이어지며 일관되지 않은 대일본 인식 및 감정에 내내 동요하는 현황입니다.

5. 한·중·일 문화적 협력방안

동북아시아 삼국의 서로에 대한 인식과 감정이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한·중·일 삼국의 민간교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절에서는 이 민간교류의 앞으로 전망과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영향,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문화협력 방안에 대한 제안을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았다. 전문가들은 민간교류가 지금처럼 증가 추세를 지속할 것이라도 전망하였으며, 대부분은 이 추세가 동북아문화공동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물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미래 세대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했으며, 환경, 노동, 이주, 대중문화 등의 방안 또한 제시되었다.

한·중·일 삼국 간의 상호 인식이나 혐오감정은 결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는 별개로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민간교류는 대단히 활발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에게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민간교류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인가하는 전망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전문가가 앞으로도 민간교류는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을 내놓았다.

〈표 2-19〉 동북아 민간교류 전망

동북아 민간교류 전망	빈도	%
(1) 크게 증가할 것	5	25.0%
(2) 어느 정도 증가할 것	14	70.0%
(3) 어느 정도 감소할 것	1	5.0%
(4) 매우 감소할 것	0	0.0%
* 증가전망 = (1)+(2)	19	95.0%
* 감소전망 = (3)+(4)	1	5.0%
합계	20	100.0%

민간교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전문가도 한 명 있었는데(A04), 흥미롭게도 이 전문가는 동북아 국가들의 인구학적 변동 전망을 그 이유로 꼽았다. 즉, 평균수명 증가로 동북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직접 역내의 인접 국가들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 등에 제약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더해 4차 산업혁명의 영향도 또 다른 이유로 제시했는데,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직접 교류하는 시대는 끝을 맺을 것이고 현재도 활발히 진행 중인 것처럼 가상세계에서의 교류가 더 빈번해질 것이라는 이유였다. 이러한 가상세계에서의 비대면접촉 증가는 노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인간들이 물리적으로 직접 만나는 실질 방문 교류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19명의 전문가들은 민간교류와 접촉이 앞으로 더욱 활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 몇몇 전문가들은 한·중·일 간의 갈등은 최근 정부 수준에서 촉발된 갈등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 영역의 교류는 이에부터 자유롭다는 답을 제시하기도 했다.

○ 전문가 A01: 기본적으로 국가 간에 교류가 매우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일 뿐 아니라, 인접국 간의 교류는 국내에서의 이동과 유사한 수준까지 해당 비용이 크게 낮아지면서 교류의 증가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더구나 민간 교류는 국가 간의 정치, 경제적 이슈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간교류의 증대는 어렵지 않게 예상해볼 수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민간 교류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민간교류의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영향력은 향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 A02: 가까운 국가로서 민간교류는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고, 현재 한중일

3국간의 부정적 관계이슈는 대부분 국가 및 정부 차원의 대결 및 혐오분위기 조성에 영향이 큼. 즉 민간 차원의 부정적 이슈가 크게 발생한 것은 없고, 3자간 문화에 대한 호기심 및 호감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 전문가 A06: 정부의 정책이나 민족주의적 감정의 고조와는 별도로 민간 사이의 교류는 상호간의 필요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다르게 관광이나 문화예술은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더 이상 강제로 교류 자체를 막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민간교류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간혹 돌발적인 변수들, 예를 들어 중국의 한국관광 제한과 같은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의 제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류의 확대에 일정 정도 한계가 따를 수 있다.
- 전문가 A11: 최근 민간 교류의 증가는 여행, 한류·일류 등에 기인한 바가 큼. 특히 이러한 여행, 한류일류는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것으로 이들의 잦은 교류는 한중일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어 갈 것으로 보임. 그에 따라 재차 방문하는 사람들이 증가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한중일의 경제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민간교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동시에 한중일 대중문화의 동일화 현상은 더욱 지속될 것이며, 이로 인한 인적 교류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물론 정치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중일 민간교류는 중국의 한국여행 제한 등의 인위적 조치가 없다면 정치적 관계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기에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다른 전문가들은 민간교류 확대의 원인을 교통의 발달, 통신의 발달 등 기술 변화와 함께 한·중·일의 경제적 발전이라는 근본적인 변화에서 찾았다. 그리고 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여가도 중시하는 최근 한국의 문화적 변화도 그 이유로 꼽혔다. 또한 동북아 국가들의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적 상호의존도의 심화로 인해 민간교류가 활성화된 것이며, 이것이 결코 일시적 혹은 인위적으로 시작된 단기간의 현상이 아님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만약 정치적 이유로 국가가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민간교류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최근의 민간교류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 전문가 A09: 동북아시아 내의 민간 교류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인해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경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나이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경험이 축적되면서 국경이라는 개념도 많이 달라졌다. 국가의 경계를 넘는 경험이 일상화되었고, 상호 여행이나 문화적 체험을 공유하게 되면서 국경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이 많이 해소되었다. 한중일은 국제관광을 축소하지 않을 것이며, 해외여행 자체도 따라다니는 여행에서 직접 설계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개발되었다.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 일상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 전문가 A13: 방일한국인은 2012년 약 204만명에서 2017년 714만명으로 5년 사이 3.5배 이상 증가한 바 있음. 2020년 도쿄 올림픽 등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수가 더 늘어날 것임.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되면서 연휴나 휴가등을 이용해 가까운 해외를 방문하는 한국인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일본이 주요 방문국 중 하나가 됨. 중국 또한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가까운 한국, 동남아 국가등이 주요한 여행지가 되고 있음. 사드 배치 등의 문제로 인해 중국인의 한국 여행이 자유롭지 않으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면 한중관계 역시 개선될 여지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중국인의 한국방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예상됨. 이렇듯 생활방식의 변화, 해외여행 수요 증가 등으로 3개 국가간의 민간교류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문가 A15: 지역 내 경제적 상호의존이 더욱 심화되고 지리적 인접성으로 이동이 쉬운 조건에서 민간 교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젊은 세대들 역시 상대 국가에 대한 관심, 경제적 필요에 바탕해 교류가 활발하다. 이러한 인적 교류의 지속은 상호 이해와 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인적 교류는 기존 관계가 축적되는 과정에 더 증진할 것이다. 특히 한류 효과로 한류와 연계된 관광상품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상황은 민간 교류 활성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중국과 일본에서의 경제적 기회를 모색하며 해외 창업을 고민하는 젊은 세대들도 증가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 교류 증가가 전망된다.
- 전문가 A16: 별도의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지리적 접근성에서 삼국만큼 유리한 곳이 있겠는가?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 삼국만큼 일체감을 가질 지구상의 공간이 있는가? 정치·군사적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중심주의가 배제된다면(국경 개념이 약화된다면) 민간교류는 자연스러울 수 밖에 없다. EU에 대한 경험은 유럽 국가들의 국경 개념이 동북아 지역과 다르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민간에게 교류하라고 강요한다고 해도 민간은 필요성이 내재하지 않으면 이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북아 역내 민간교류의 장애 요인은 국가이다.”라는 전제에서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전문가들에게 증가하는 민간 문화교류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인가를 물었다. 그 결과, 70%의 전문가들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했지만 5명은 민간교류 증가와 동북아문화공동체는 큰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표 2-20〉 민간교류와 동북아문화공동체

민간교류와 동북아문화공동체	빈도	%
민간 문화교류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14	70.0%
민간 문화교류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은 큰 상관이 없을 것이다	5	25.0%
무응답	1	5.0%
합계	20	100.0%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전문가 A14는 무응답의 이유를 “교류의 내용에 따라 영향의 여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모든 민간 문화교류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 전문가의 주장이었다. “가령 한국인들이 유럽 여행을 많이 하고 유럽 영화를 많이 보고 유럽식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한국이 유럽과 문화공동체를 형성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오락 혹은 여흥을 위한 교류는 “같음” 보다 “다름”을 소비하기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른 문화와 삶의 모습을 보기 위해 교류가 이루어지는 단순한 관광이나 문화 콘텐츠 소비 차원에서의 교류가 문화공동체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이 전문가의 견해였다. 반면, “역사학적 차원의 학술교류나 사회운동 차원의 시민사회 교류는 장기적으로 문화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 전문가는 전망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교류들이 사회적 정체성의 핵심을 건드리면서 수행되는 종류의 교류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공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의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을 같이 던지는 교류라면 충분히 문화공동체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 전문가는 전망했다.

논리적으로 민간영역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이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소수의 전문가들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그것들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전문가 A04는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민간교류가 증가한다는 것 자체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중·일 3국에서 공통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 전문가 A04: AI와 5G 세상에서 민간 문화 교류도 감소세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교류가 이런 공동체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임.

한편, 다른 전문가들은 민간교류가 협력체 형성으로 이어질 특별한 인과적 고리를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가 전문가 A10과 A07은 민간교류와 국가간 협력체 구축이 반드시 연관되어질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었다. 민간영역의 교류 활성화와 상관없이 한·중·일 3국의 정치적 갈등 구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 A07은 현재의 한류, 일류에 편승한 민간문화교류가 국가간 문화협력체 구성으로 발전되어 나가기에는 그 폭이 아직 좁다라고 지적한다. 전문가 A19는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없이 민간의 교류만으로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에 핵심적인 공통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 전문가 A10: 교류가 많아진다고 해서 제도가 구축이 된다는 것은 특정한 영역에 한정하여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한편으로는 교류, 한편으로는 제도의 부재가 지속되거나 이것이 별개로 취급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어디까지나 주권국가로서의 바운더리를 지키려는 세 나라의 움직임이 계속될 가능성은 높고,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권력구조에 편입되지 않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교류에 있어서 계속해서 중국은 비자발급 수를 늘리거나 기준을 완화하기를 계속해서 요구해 나갈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한국과 일본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며 상호적으로 대응 (예컨대 한국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비자 비용 및 발급 기준 완화) 할 것이라는 기대가 서지 않는다. 현재의 미국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 (지나친 중국인 관광객, 유학생, 투자자에 대한 의존도와 그의 급락에 따른 경기침체)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전문가 A07: 민간의 문화교류는 개인적인 수준의 취향과 관심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국가나 사회일반의 수준으로 확장되기 어렵다. 한류가 유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긍정적 감정으로 바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방탄소년단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그들의 팬클럽인 아미가 전세계적으로 퍼져 존재한다고 해서 그들을 세계공동체라고 보지는 않는다. 특정 사안에 대한 민간 수준에서의 문화교류를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문화공동체라는 것의 형성과 연결짓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무리가 많은 구상이다.
- 전문가 A19: 민간문화 교류는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선 동북아 국가를 아우르는 공통의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 교류 확대가 국가적인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과 한국 정부간 또는, 한국과 중국 정부, 중국과 일본 정부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문화공동체 형성에는 각국 정부의 신뢰와 이에 기반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정부의 노력이 시민사회에

영향을 주고 시민사회가 민간 교류를 뒷받침할 수 있다면 민간 문화교류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전문가 A08은 민간교류와 다자협력체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민간단위의 교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앞에서 소개한 전문가 A14의 견해와도 상통하는 주장이다. 즉, 한국인들이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두 나라가 한국과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다름”을 소비하기 위해서이다. 마찬가지로 전문가 A08도 민간단위 문화교류는 이 다양성을 소비하고 즐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런데 동북아문화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 “다름”이 아니라 “같음”, 즉 공통의 정체성인데, 이것은 다름의 소비를 통해 얻어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전문가 A08은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초국가적 기구가 설립된다면 경제력, 정치력의 격차에 따라 불균등한 영향력이 배분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동북아문화공동체를 이끌고 가기위해 경쟁하게 될 것인데, 이는 다름을 긍정하는 민간교류와는 매우 다른 논리의 차원에 있다는 것이다.

- 전문가 A08: 민간단위의 교류가 활발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상호이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됨. 민간을 앞세운 교류활동을 하더라도 초국가적 기구의 경우 정치적 경제적 이해가 우선시되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UNESCO의 사례를 볼 때, 지원금을 많이 내는 국가(예: 일본)의 이해나 입장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동북아 지역권에서의 문화공동체를 구축하여 운영할 때, 유사한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더욱 높음. 또한 민간문화교류를 통해 초국가적 기구를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경제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민간문화교류의 형성과 유지되는 방법과 초국가적 기구 출현은 상충되는 부분이 훨씬 크다고 봄. 단편적으로 민간센터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의 활동과 영향이 한, 중, 일에서 나타나기로는 동일한 수준이 아니며, 문화공동체 형성과 같은 리더십을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생각함.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한·중·일의 다자적협력방안, 혹은 문화적 협력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전문가들에게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문화적 협력방안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이 매우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우선 젊은 세대의 교육을 강조한 제안들이 가장 많이 눈에 띄었다. 단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겠지만, 동북아시아 삼국의 혐오 문제를 해결하

고 공통의 관심사와 정체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꾸준히 장기적으로 교육을 통해 문화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들이었다. 구체적으로 유소년, 대학생, 체육인재, 예비 정치인들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 전문가 A01: 문화협력은 단기 보다는 중장기 사업을 통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다. 한편 협력의 대상이 교육 대상인 경우 그 파급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학생교류의 형태가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한중일 삼국의 대학생 들 간의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제안해볼 수 있다. 교류의 콘텐츠로서 엔터테인먼트의 성격을 가진 한류 등 대중문화부터 최근 그리고 미래의 이슈가 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주기적 토론 등이 활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회적이며 단편적인 교류보다는 대학생 교류라 할지라도 미래 전문 분야와 연관된 대상을 선발하여, 선발한 대상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교류를 주선하는 방법으로 교류의 깊이와 저변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중·일 3국간의 합의를 통해 경제나 안보이슈와 독립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정치경제적인 부침에 비교적 독립적일 수 있는 분야를 사전에 검토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 추진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전문가 A08: 문화외교에서 중심이 되는 개념 중 소프트파워는 전략적으로 정부의 presence는 가능한 드러내지 않고 공중 간 또는 민간섹터에서의 교류를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보고 채택하고 있음. 이는 정부의 입장이나 정치적인 목적이 문화교류에서 드러나게 될 경우, 기대하는 또는 목적한 효과 및 결과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임. 따라서 문화적 협력을 추진할 경우 정치적 이해가 해당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목적으로 작용할 지언정 민간의 협력과 전문성, 그리고 외교적 네트워크 및 자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문화외교는 또한 교육과 엘리트 그룹의 교류, 체육, 예술 등과 같은 분야에서 인력교류를 포함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학생 간 교류를 통한 문화체험 및 교류, 전파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서구 국가의 예시로는 Fulbright, Erasmus 등이 있음. 학자 간 또는 분야별 전문가 교류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와 실행이 가능함. 선정한 주제(환경, 국제관계, 난민 등)에 따라 전문가, 학자 간 논의와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임. 예술, 건축은 한·중·일 역사적으로 발전시키고 토착화한 양식의 유사성과 독창성을 비교하고 연구, 발표하는 문화교류가 가능하고, 이미 진행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을 수 있겠으나 3국의 역사적 해석에 대한 다른 견해가 정치적 문제로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위험 부담이 있음.
- 전문가 A09: 한중일은 공동의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공동 등재를 추진할 수 있다. 매사냥이

여러 나라에 걸친 공통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듯이 한중일의 문화 중에서 공통적인 문화를 찾아서 공동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포츠, 문화예술, 대중예술, 청소년 교류가 다자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우선적인 분야가 될 수 있다.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한중일 프로그램의 1,2위만 참여하는 특별리그의 창설이나 한중일이 각각 장점을 갖고 있는 스포츠 종목에서의 상호 지도자 파견이나 체육인재 육성, 유소년 스포츠 대회 순회 개최 등을 통한 방법이 있다. 청소년 예술 영재들의 음악제 개최 등을 비롯한 청소년 예술교류 행사를 확대하는 것도 협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예술 분야 이외에도 정치인이나 외교관을 꿈꾸는 대학생들의 학술교류를 확대하고, 정치 현장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중일의 예비정치인들이 공통의 관심 사항을 논의하게 하는 등의 미래지도자 육성사업도 공동체적 협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전문가 A12: 동아시아 평화교육 네트워크의 구축 필요성. 청년들이 동아시아 평화를 현장에서 고민하고 경험하는 동아시아 평화인권캠프 등을 활발하게 만들 필요성. 현재 대학생들 중심의 동아시아 평화인권캠프가 활동중임. 이런 방식으로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아시아의 청년들과 만나 네트워킹을 하고 동아시아 현재문제를 고민하는 일종의 섬머 캠프 구축등을 할 수 있음.
- 전문가 A15: 한중일의 다자적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적 협력에 주요 아젠다의 하나로 협력적 동북아시아 지역 공간에 기여하며 살아갈 새로운 세대의 형성을 생각할 수 있다. 한중일, 동북아시아의 2030 세대가 주역이 될 미래가 협력적인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평화, 정의, 공영, 생태, 성인지적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주요 가치들을 함께 논의, 발전시킴으로써 이러한 세대가 동북아시아 차원의 공동체를 현실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향후 추진할 정책적 비전, 가치를 앞서 논의, 실험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장기적으로 동북아공동체적 협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안목에서 젊은 세대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다자적 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특히 한중일 공동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다자적 협력을 위한 비전,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서 교육의 의미를 강화하고, 이러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습득한 이들이 향후 다자적 협력과 관련한 실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법이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면, 협력 건설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 전문가 A13: 동북아시아 시민으로서 '동북아 시민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 중국, 일본 3개 국가가 협력하여 정규 및 비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동북아시아에 대한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초등, 중등, 고등 교육과정 내에 글로벌 시민교육으로서 동북아시아 공통의 역사와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생각할 수 있다. 대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정규 교육과정보다는 기관교류, 네트워크간 교류 기회 확대 등을 통해서 상호 이해와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다. 또한 고등교육기관간 교류나 시민단체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전문가 A17: 동아시아 우호와 협력, 인본주의에 입각한 공생의 논리는 당연히 예로부터 존재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공유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공유될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와 시스템을 마련하여 동아시아에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일컬어지듯 교육이 '백년지대계'임이 명백할진대 지역적 일국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진지 오래로, 상호를 이해하려는 동아시아 공통의 교육 프로그램이란 제대로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의 평화주의자나 주변국과의 공존과 번영을 주장한 인물조차 변변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 증거이며, 근대 이후의 내셔널리즘(국가주의, 민족주의)과 식민지주의에 입각한 '애국'의 논리가 전쟁과 맞물려 오래도록 교육된 결과가 초래하는 오늘날의 현상이 그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또한 학문 분야의 분화와 세밀화로 일관된 근대 교육은, 최근 학제간 연구나 융합 학문이라는 시도가 무색하게 전공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인류 공통의 가치나 믿음을 다루는 인문학의 근간인 문사철(文史哲)은 물론이고, 사회의 제도와 법칙과 논리를 다루는 정치, 경제, 외교의 사회과학, 자연과학이나 의학 등 어느 학문 분야 하나 동아시아의 영향관계 속에서 논해지지 않거나 독립적이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긴 안목의 자국 중심이 아닌 동아시아 전체상의 협력과 우호의 교류사라는 긍정적 측면을 돌아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실시가 전 분야에서 기획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입각한 자리(場, 그것이 직업이든 학문이든)에서 동아시아를 이해할 정서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이 지난하지만 필수적 과정일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제안한 전문가들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환경과 노동, 이주 등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를 협력의 바탕으로 삼아 동북아문화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들이 있었다. 전문가 A19의 경우 교육과 환경 문제를 함께 제안하기도 했다. 또 전문가 A03은 동북아에서 증가추세에 있는 국제이주와 관련, 이를 관리하는 국제적 거버넌스를 제안하며, 이것을 장기적으로 다자적 협력체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전문가 A19: 한중일 3국은 역사적으로 전쟁 경험, 역사교과서 문제, 이념과 영토에 관련한 사안이 수시로 충돌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들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갈등이 전쟁까지 다다른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한 관계이다. 한자

문화권이라는 공통적 특성 때문에 왕래율이 높지만 동맹을 맺을 정도로 가까워지기는 어렵고 우호적 중립까지가 한계다. 따라서 문화적 협력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역사 인식이 묻어나는 곳에서는 갈등에 이르기 쉽다. 민간 부분에서 학술 교류, 교육 부문에서 학생 교류, 환경 부문에서의 교류를 만들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부문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기구들을 창설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한중일을 방문하여 문화행사를 하는 것들이 각각 각 단체나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 중국, 일본의 정부 산하 문화부에 기구를 두고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 한국 정부 주도로 발족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를 한중일 환경 협력 기구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미세먼지처럼 한국과 중국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하위 주제가 있지만, 이런 주요 이슈들은 특별 위원회를 통해 협력할 수 있다.

- 전문가 A05: 동아시아 미래 환경변화 분석 및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구현을 위한 협력전략 개발,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동 등⁸⁴⁾ 환경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아젠다 도출⁸⁵⁾

- 1) 협력분야: 환경거버넌스 및 공공참여 관련 법률 완비, 다양한 환경거버넌스 및 공공참여 방식 모색, 환경거버넌스 및 공공참여 관리감독 강화
- 2) 협력방식: 우호적 교류 협력 플랫폼 구축, 공통 관심 분야의 공동 연구 수행, 학술 교류 진행
- 3) 협력체제: 효과적인 협력 모델 도출, 공동 연구비 지원처 모색, 안정적인 인적 교류 체제 구축

- 전문가 A06: 첫 번째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생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중국은 급속한 매연 문제로, 일본은 대지진에 따른 방사능 오염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중국과 일본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걸쳐져 있다. 따라서 세 국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환경오염의 대처방안 및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 관광자원에 대한 보존 및 이해의 확대이다. 한중일 모두 각 국민들의 관광 수요가 과거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광에 대한 세 국가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여서 보다 수준 높은 관광의 형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 몸, 의료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일이다. 한중일은 서구와 다르게 나뭇대로의 전통회화 혹은 한의학을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와 교류의 폭을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전문가 A07: 교육과 같은 부분에서, 현재 많은 사회과학의 이론과 모델이 서구 근대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되어 온 만큼, 이를 아시아의 맥락에 적용시킬 때 역사적 궤적과 사회

84) KEI,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세종: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85) KEI, 『환경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공공참여제도 한·중 비교연구』 (세종: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가 서구와 달라 적절하지 않을 때가 많다. 따라서 한중일이 동북아의 역사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여 학문적 이론과 현실화 방안을 학문과 응용의 영역에서 함께 고민하고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환경은 보다 직접적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에서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야할 문제라는 점에서 한중일의 다자적 협력이 시급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일본의 도호쿠 대지진 이후 해양오염과 중국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같은 부분은 한중일이 대기와 해양을 직접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만큼 공동의 대처방안을 논의하여 선언문과 실행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전문가 A18: 현재 한국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교육제도 개편이나 노동시장의 직무 설정 기준 등의 제시 문제에서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는 분야이다. 경제통합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소속 국가들의 노동가치나 인건비 등의 어느 정도의 균등화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 역시 중요한 해결 영역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환경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사태나 북한의 핵문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동북아 3개국의 공동의 번영이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동의 대처와 대응 방식 구축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 전문가 A03: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 국제이주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지역 국제이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국제이주를 관리, 규율하는 글로벌 수준의 거버넌스는 이제 막 태동하고 있으며 지역 내 거버넌스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 점에서 국제이주는 동북아시아 문화 협력 방안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한, 중, 일 간에 협력을 통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고 이를 위한 정보 공유, 이민 관리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한, 중, 일 간 협력의 습속을 기르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다른 동북아 문화협력방안으로는 대중문화 협력 사업, 그리고 학술교류 사업 등도 제시되었다.

- 전문가 A11: 한중일은 대중문화 및 도시문화라는 공통적 문화 토대를 가지고 있음. 이에 근간을 두고 삼국 협력 영화 혹은 드라마 제작사업, '동북아 할리우드'와 같이 특정 지역에 '문화 규제 제로 지역'을 만들어 동북아 대중문화 산업의 자유로운 교류 및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동북아 대중문화 관계자들에게 비자 없이, 규제 없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줌), 동북아 대중 문화제 등.

- 전문가 A14: 한자문화권의 역사를 함께 연구하는 학술적 교류가 매우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고대사에 대한 연구라든가, 사상의 전파와 토착화 재전파 등의 흐름이라든가, 복식이나 무기 음식 주거 등의 유행의 전파 등의 연구가 매우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 연구에 근대 이전의 역사 기록이 주로 한자로 남아 있는 모든 국가가 참여해, 편협한 민족주의적 자국우위의 사관을 버리고 역사적 발굴을 많이 해낼수록 이 지역의 문화적 공동체 의식이 더 높아질 수 있고, 미래에 개척할 수 있는 공통 정체성에 대한 상상력도 증대 되리라고 예상해 봅니다.

6. 소결

지금까지 한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다양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전체적으로 동북아시아라는 개념의 중국 및 일본에 대한 확장가능성,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발전을 위해 다자간 협력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역사적 경험과 정치적 갈등, 각국의 다른 이해관계를 넘어서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전문가들이 있었던 반면, 오히려 이러한 제약이 동북아에서의 다자간 협력체의 필요조건이라고 보면서 정부 및 민간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충분히 동북아문화공동체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한·중·일의 부정적 혐오시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에는 전문가들이 대다수 동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호 부정적인 인식이 동북아의 공통적 정체성 확보에 결정적인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한중, 한일간 인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부정적 인식의 이면에는 긍정적 인식도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국인들은 국가로서의 일본과 개인으로서의 일본인을 구분하며, 여기에서 부정과 긍정의 양가적 인식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중국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높은 편이지만,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경외감과 역사적 관계 등의 이유로 인해 중국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한·중·일의 민간교류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데는 거의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민간교류 활성화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것에도 동의했다. 구체적인 동북아시아에서의 문화협력 가능성을 물었을 때는 교육, 환경, 노동, 이주, 대중문화, 학술 교류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제 3 절 한국의 문화공동체 논의의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의 지역공동체 및 문화공동체 논의에서 얻을 수 있는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 중심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국의 지역공동체 및 문화공동체 논의는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중심주의’적 사고의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의 확대를 제약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동북아라는 지역에 대한 3국의 인식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구상은 자기확증적 접근에 불과한 것으로 외부와의 생산적인 논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둘째, 지역공동체 및 문화공동체 논의에서의 국가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 중심적 공동체 구상은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이질적 국가들을 동일화함으로써 패권국(또는 공동체 구상의 주도국) 중심의 지배질서를 정당화하고, 외적으로는 다른 지역 및 국가들을 위협하는 공동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 행위자로 국가만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국가행위자의 역할도 강조해야 한다. 공동체는 바로 다양한 개인과 조직 및 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생활세계의 구축이라는 점에서도 국가와 비국가행위자와의 연계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의 정체성 및 문화의 동질성 논의에서 벗어나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사회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사회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신과 관용을 요구한다. 또한 ‘다문화’는 단순히 서로 다른 문화들이 병렬적으로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문화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한 문화융합의 상태라 할 수 있다.⁸⁶⁾ 이를 바탕으로 문화공동체 나아가 지역공동체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지역공동체 및 문화공동체 만들기라는 점에서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해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지역공동체 및 문화공동체가 현존하는 실체가 아니라 향후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발전될 하나의 사회적, 정치적 구성물이라고 한다면, 지역 내 구성원들의 실천적 노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실천적 노력의 결과물로서의 공동체의 모습도 다양하게 그려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의 경계는

86) 박승우,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 리뷰,” p. 96.

열려 있을 뿐 아니라 유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유럽연합의 형성이 유럽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 동질성에 기반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안보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그 반대 순서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제적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위해 경제공동체가 조직되고, 이것이 안보와 정치 공동체로 확장되었으며, 이후 이 공동체 유지를 위해 유럽의 공통적 정체성이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순서였다. 동북아문화공동체의 경우에도 한자문화권 혹은 유교문화권 등의 기존 문화적 공통성을 무리하게 확장하려는 시도는 무익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정치 및 안보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문화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동북아 공통의 정체성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것이다.

여섯째, 이러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서구 중심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식론적 차원에서 자아 오리엔탈리즘과 역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할 때, 우리가 구상하는 지역공동체 및 문화공동체는 내부적으로 억압과 수탈, 차별과 배제를 가능한 배제해 나가면서 평등과 공존공영을 지향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개방과 포용을 지향함으로써 외부로 열린 지역공동체 및 문화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적 시사점

한국의 지역공동체 및 문화공동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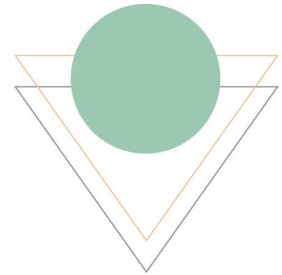
첫째, 지역공동체 및 문화공동체 구상은 장기적 비전과 전략 아래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장기적 비전과 전략은 이론적 논의에서 확인했듯이 동북아를 넘어 동남아를 포괄하는 새로운 동아시아를 상정하고, 이를 유라시아와 연결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를 장기적 안목에서 좀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있어 국가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의 역할과 이를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협력 네트워크로 확장해 나가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역공동체 및 문화공동체 추진전략은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고안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전략 추진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공동체 구상은 위로부터의 공동체 추진과 함께 아래로부터의 실천적 노력이 뒷받침될 때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래로부터의 추동에 의한 일상생활사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공동체 및 문화공동체

만들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내부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역과 연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를 지역공동체 및 문화공동체 만들기의 추동력으로, 또한 하나의 실험의 장으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동북아의 중심국가인 한·중·일 3국에 존재하는 혐오와 차별의 인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민족주의에 국내 및 국외정치가 매우 강력하게 영향받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정치인들은 민족주의에 기반한 혐오와 배제를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에 이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특히 90년대부터 국제정치와 경제의 기반이 되었던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한 신화가 무너지면서 보호주의와 극우적 민족주의가 발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는 매우 심각하게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중·일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면서 자유무역과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전세계의 경제를 선도하는 모범적인 세계화의 사례로 일컬어졌다. 이러한 동북아의 질서가 최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여기에 상호간에 대한 혐오와 배제의 민족주의가 가세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극우 민족주의와 무차별적인 혐오를 적극적으로 선제에 방하여 동북아의 갈등이 회복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넷째,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동북아문화공동체 건설에 정부의 역할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지자체, 시민사회, 개인 등의 교류를 지원하고 교류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민족주의적인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 혹은 이념적 이유로 문화적 교류가 힘들 때 이 문제를 제거해 주는 선에서 중앙 정부의 역할을 제한할 때 문화공동체 건설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동북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민간교류는 장기적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으며, 한국을 비롯 동북아 각국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민간 교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동북아문화공동체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민간 교류 확대에 부정적인 제도적 장애물 등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3장

중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

제3장 중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

제 1 절 중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

1. 지역공동체 논의와 문화공동체

가. 지역공동체 논의

1990년대 냉전이 끝나고 새로운 물결로써 지역일체화 논의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동북아시아(이하 동북아)에서도 다양한 영역에서 다자협력체가 논의되면서 중국에서도 기존의 고립주의 외교에서 벗어나 지역주의, 다자주의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위정치(high politics)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문화와 인문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도 등장했다. 특히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 위기 이후,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확대되자 자국의 국가이익과 직결된 지역과 국제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으며, 주로 아시아 차원에서 지역협력과 지역일체화, 다자협력에 대한 연구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중국의 지역공동체 논의는 ‘동북아’, ‘문화’, ‘공동체’가 각각 분리된 채 논의되었고, 이를 결합해 하나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연구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동북아문화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논의는 제한적이었으며, 특히 몇 가지 핵심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지역 내 경제협력과 여기에 대한 참여. 둘째, 지역협력의 발전, 원인, 패턴, 영향 및 대책. 셋째, 지역협력조직에 중국이 참여할 경우의 장단점, 참여효과, 지역질서와의 상관성. 넷째, 지역공동

체 수립 가능성과 저해요인 등이다.⁸⁷⁾

○ 지역주의 인식의 변화와 신지역주의의 등장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래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런 상황에서 지역안보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80년대 이후 신(新)지역주의⁸⁸⁾ 현상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나타났는데, 그 핵심은 지역 내 다자간 협력체제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APEC, 아세안지역포럼(ARF)등 지역협력체제에는 대부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포함되었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외교정책은 양자외교에 치중하는 등 고립주의적 경향과 불(不)개입주의의 특징이 있으나, 1991년 APEC 가입을 계기로 지역주의를 적극 표방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지역협력과 지역통합을 중심으로 한 신(新)지역주의 연구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었다. ARF에서 중국정부가 신안보관(新安全觀)을 제시한 이후 관련 연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이 연구가 주류를 이룬 것은 아니었으며⁸⁹⁾ 지역연구자, 특히 유럽지역 연구자를 중심으로 지역통합이론, 유럽의 경험과 이론에 대한 소개 등에 치우쳐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정부가 다자외교를 중시하면서 다자간 협력체제에 대한 정책이 투사되면서 학계와 민간을 중심으로 지역주의 논의가 보다 진전되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지역주의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기 시작했다. 학계에서도 기존의 논의를 발전시켜 신지역주의의 배경, 발전 과정, 특징과 의미 등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신지역주의의 저해요인으로 낮은 제도화, 불간섭주의, 개방주의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기도 했다.⁹⁰⁾ 또한 신자유주의의 열풍 속에서 전지구적 불평등 현상(global south)이 심화되자, 중국 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와 연계한 지역주의를 논의하려는 연구가 새롭게 등장했고, 유럽과 아시아 및 다른 지역의 지역주의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주목한 비교지역주의 연구도 등장했다. 1990년대는 중국 내 아시아 지역주의 연구가 활발해지고 아시아 관념과 정체성이

87) 예컨대, 유럽연합, 북미, 동아시아,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 등의 지역협력모델(비교) 분석, 중국의 지역협력 참여에 대한 전반적 분석, 하위지역협력(次區域合作)에 관한 연구의 경우 메콩강 지역협력과 투먼강 지역협력에 대한 연구, 한중일공동체, 동아시아지역일체화 구축의 가능성과 조건 등에 대한 연구 등이다.

88) 1980년대 이래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발전을 ‘신(新)지역주의’라고 부르며 지정학적 이상, 지역화와 국가가 추진하는 지역주의의 협력이 상호 추진되면서 각국의 이익과 지역이익이 함께 발전했다. 夏立平, “新東亞區域主義發展及其影響,” 『當代亞太』, 第6期 (2005), pp. 17~24.

89) 肖歡容, “地區主義理論的歷史演進,”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 博士學位論文』, (2002), pp. 1~158; 耿協峰, 『新地區主義與亞太地區結構變動』,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3), pp. 1~208.

90) 黃大慧·韓愛勇, “東亞地區主義研究評析,” 『外交評論』, 第3期 (2011), pp. 135~149.

고양된 시기였고⁹¹⁾ 지역주의의 개념도 “동일한 지역 내의 여러 행위자들이 공동 이익에 기초해 지역협력을 전개하는 모든 사상과 실천 활동의 총체”⁹²⁾로 접근했다. 이것은 지역을 바탕으로 한 국가 간 협력과 연대의 사상과 정책 그리고 운동⁹³⁾으로써, 이후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 지역주의 논의의 등장

2002년 장쩌민(江澤民)국가주석은 중국공산당 16차 대회에서 지역협력을 전략적 과제로 채택하고, 이를 중국공산당의 공식 문건에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이어 2004년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아시아협력대회 제3차 외교장관회의 개막 연설에서 “중국 정부는 역내 협력 강화가 새로운 시기 중국의 대외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며, 아시아 협력을 위한 다양한 다자 프로세스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러한 중국의 지역주의 외교는 중국이 주변 지역 외교를 전개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았다.

학계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주의 연구가 고양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주의’, ‘신국제주의’, ‘신동아시아 지역주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아시아-태평양지역주의’ 등과 같은 확장된 논의가 등장했다.⁹⁴⁾ 2012년 이후 신지역주의 연구 열기는 다소 식었지만,⁹⁵⁾ ‘중국 동아시아주의’, ‘범(汎) 지역주의’, ‘지역국제주의’, ‘범(汎)동아시아 통합’ 등으로 변용되어 나타났다.⁹⁶⁾ 이러한 연구결과 는 2010년대 이후 중국의 지역협력과 공동체구상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했다.

이후 중국은 다양한 차원과 성격을 지닌 지역 다자체제와 포럼에 참여했다. 즉 PECC, APEC, ASEAN Plus, ARF, ‘10+3’, EAS, SCO, CSCAP, NEAT, 아시아유럽정상회의, 보아오 아시아포럼, 6자회담,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 등이 있었다. 이것은 중국이 2013년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2015년의 ‘아세안공동체’, 그리고 ‘아시아운명공동체’ 및 ‘인류운명공동체’를 제시하는 기반이 되었다. 특히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중국이 추진하는 대륙 간 지역주의 협력 방안으로서,

91) 耿協峰, “重鑄亞洲觀念: 新地區主義研究中的中國視角,” 『外交評論』, 第2期 (2018), pp. 23~33.

92) 耿協峰, 『新地區主義與亞太地區結構變動』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3), pp. 36~95.

93) 劉新華, “地區認同與東亞地區主義,” 『現代國際關係』, 第5期 (2004), p. 18.

94) 秦亞青·朱立群, “新國際主義與中國外交,” 『外交評論』, 第84期 (2005), pp. 21~27; 夏立平, “新東亞區域主義發展及其影響,” 『當代亞太』, 第6期 (2005), pp. 17~24; 劉昌明, “雙邊同盟體系制約下的東亞地區主義: 困境與趨向,” 『當代世界社會主義問題』, 第1期 (2011), pp. 112~127.

95) 龐中英, “地區主義浪潮陷入低穀,” 『人民論壇』, 第4期 (2012), p. 4.

96) 丁磊, “東亞共同體與中國東亞主義,” 『山東社會科學』, 第4期 (2006), p. 134; 肖歡容, “泛化的地區主義與東亞共同體的未來,” 『世界經濟與政治』, 第10期 (2008), pp. 34~36; 李開盛, “地區主義與中國的東亞外交,” 『外交評論』, 第103期 (2008), pp. 20~25; 薛力, “仁厚兄長: 中國在亞洲整合中的角色,” 『世界經濟與政治』, 第10期 (2008), p. 36.

냉전 이후 중국에서 나타난 지역주의의 새로운 발전으로 볼 수 있다.

○ 중국 지역주의 논의의 특징

동아시아(아시아)지역주의에 대한 중국에서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동아시아와 아시아의 지리적 범위와 동아시아 공동체 개념의 모호성이 있다.

둘째, 다양한 지역주의가 병존하고 있고, 한 국가가 다양한 조직에 동시에 참여하는 등 교차와 중첩현상이 나타난다.

셋째, 지역주의보다 상대적으로 민족공동체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중국은 14억 명을 넘어선 다민족 국가로 언어도 다양하고 종교도 다르기 때문에 중국 내 민족공동체 구축을 중시한다.

넷째, 중국은 아시아 지역주의 발전에서 적극적이며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

다섯째, 지역 내 집단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이 부족하고, 지역 공동체를 이끌어 갈 추진력, 리더십 그리고 주도역량이 부족하다.

여섯째,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의 존재로 인해 공동체를 구축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중국은 자국의 발전에 부합하는 지역협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역협력에 대한 이론적 발전이 늦고 상황과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담론개발이 부족하다.

일곱째, 중국의 동반자관계 네트워크를 기본원칙으로 한 유연성과 개방성을 가진 다층적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

1) 시기별 지역공동체 정책

1990년대 초 소련과 동유럽 등 현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탈냉전이 도래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 간 상호관계에 있어 이데올로기보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중요해졌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체제 하에서, 교통과 통신의 발전으로 인해 상호의존이 점점 심화되면서 역내 국가들 사이의 지역협력도 활발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은 이와 같은 탈냉전의 흐름과 추세를 따라가지 못했다. 공동안보와 공동번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냉전의 유산인 이데올로기 차이, 식민과 전쟁으로 인한 역사적 기억이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행위자인 중국의 부상에 대해 주변 국가들의 부정적 인식은 역내 공동체 논의를 제약했다.

○ 개혁개방 시기 이전: 고립주의 외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 외교의 기조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였고 특히 마오쩌둥(毛

澤東) 주석은 사회주의 국가의 이익과 단결을 강조했다. 이 시기 중국은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중국은 냉전과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이라는 국제적 환경 속에서 제3세계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한편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에만 치중하는 전형적인 냉전형 고립주의 외교 노선을 견지했다. 더욱이 중소분쟁, 중-인도 국경 분쟁, 한국전쟁 개입,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으로 인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공간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건국 이후 냉전 종식 전까지 중국의 대외인식과 대외전략에는 '지역' 또는 '동아시아'라는 지역 관념과 정체성이 제기되지 않았고, 제3세계론을 넘어선 독자적 지역외교의 담론과 정책은 형성되지 못했다.

○ 개혁개방 시기 이후: 지역협력의 필요성 등장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과 1979년 미중 간 국교 수립을 계기로 중국은 국제무대에 다시 등장했고, 지역협력 정책도 크게 변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특구(SEZ)를 설치하는 한편 해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선진국인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다. 또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개혁개방의 물질적 토대를 강화하고 이를 동아시아 지역의 분업구조에 편입시키고자 했다. 왜냐하면 주변 지역에서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거나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라는 장기적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아시아에서 안정적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지역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관심을 투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9년 6월 천안문사건 이후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제봉쇄를 추진했고 개혁개방정책이 좌초의 위기에 몰리자, 덩샤오핑(鄧小平)은 1992년 1월 남순강화(南巡講話)를 통해 개혁개방정책을 다시 독려했고, 사회주의 국가에도 시장이 있고, 자본주의 국가에도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중국공산당의 핵심담론으로 삼았다. 또 하나는 1995년 대만에서 나타난 독립 움직임이다. 대만독립을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 중국은 대만을 겨냥해 미사일 훈련을 실시했고, 미국도 두 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대만에 급파하는 등 미중관계에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천안문 사건 이후 대중국 봉쇄가 강화되고 대만을 둘러싼 미중갈등 과정에서 중국은 주변 국가와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문제를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지역협력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유리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국은 역내 다양한 협력 기구의 형성과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참여하게

되었다.

○ 지역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

1990년대 이후에도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경제적 성과를 거두면서 점차 자신감을 회복했다. 이것은 중국이 아시아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중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닌 강대국 정체성을 지닌 전략적 목표와 이에 따른 새로운 전략적 안보이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동북아에서 주변국가와의 경제적·정치적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다자협력을 통해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에 과도하게 증폭된 ‘중국위협론’ 프레임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이러한 지역주의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인식은 상하이 5국(Shanghai Five)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6년 장쩌민(江澤民)주석은 국경지역의 안정과 신뢰 구축, 군비 축소를 위한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3국의 정례 회의를 제안했고, 상하이에서 첫 회담을 개최했다.⁹⁷⁾

○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중국이 지역 내 위상과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가져온 경제적·사회적 파장으로 인해 역내 국가들은 지역협력과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하지 않고, 주변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얻었다. 이러한 논의 결과 중국 공산당 제15차 당대회에서 다자외교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했다. 이것은 중국이 역내 공동체의 존재와 공동체의 주도적 위치, 즉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중국은 스스로 ‘책임강대국(responsible state)’으로 자임했고,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중국의 위상을 관철하고자 했다.⁹⁸⁾

○ 지역 문화공동체 담론의 출현

주변국과 역내 협력에 대한 중국의 정책변화는 ‘지역 문화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촉발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특히 유교문명권은 지역공동체 인식을 논의하는 데 있어 핵심 개념으로 등장했다. 오랜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겪은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와

97) Marcel de Haas and Frans-Paul van der Putten,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Towards a Full-Grown Security Alliance?,” *Clingendael Institute*, Nov. (2007), pp. 5~12.

98) 서정경·원동욱, “시진핑 시기 중국의 주변외교 분석: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17집 제2호 (2014), pp. 119~120.

안보 협력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일정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지역 중주국이자 중심국이었던 중국은 공동의 문화와 공동의 기억을 역내 문화공동체를 논의하는 동력으로 삼았고,⁹⁹⁾ 국가가 주도의 발전주의 논리를 유교자본주의 등에서 찾고자 하는 등 동북아문화공동체의 가능성을 탐색하게 되었다.¹⁰⁰⁾

○ 신(新)안보관 등장과 지역 일체화: 후진타오(胡錦濤) 시기

1998년 후진타오(胡錦濤) 부주석은 중국이 동아시아의 일원으로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고, 자신의 집권기인 2000년대 동북아 지역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역내에서 역할과 존재감이 커지자, 주변외교의 위상을 격상시켜 역내 경제 통합 및 안보 협력을 주도하고자 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역내 국가 간의 협력만이 각 국가 간 격차를 줄일 수 있으며, 아시아의 진정한 부상과 부흥을 실현할 수 있다”¹⁰¹⁾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협력을 이끌기도 했다.

우선 중국은 다자주의의 틀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대표적 사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다. 2002년 북한 핵사찰 문제가 불거진 이후 1994년 북미 간 맺은 제네바 합의가 무산되면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크게 고조되었다.¹⁰²⁾ 중국은 2003년 4월 베이징에서 3자회담을 통해 북미 사이를 중재했고, 이후 2003년 8월 제1차부터 2007년 제6차까지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 이러한 대화 플랫폼을 주도했다. 6자회담이 거둔 성과와는 별도로, 중국이 다자협력의 틀을 통해 역내 현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¹⁰³⁾

둘째, 1996년과 2000년, 장쩌민 주석이 주도한 ‘상하이 5개국’ 제5차 회의에 참여한 회원국들은 이 기구를 확대·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와 주요한 외교 사안을

99) 유교적 가치관이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유교사상 가운데 ‘어진 정치를 행한다’는 국가가 주도하는 발전전략과 관련이 있고, 유교의 혈연을 중시하는 가족주의는 가족 자본주의의 밑바탕이 되었으며, 교육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은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정책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교라는 사상적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이것이 주요국의 발전전략에 영향을 끼쳐왔다고 평가했다. 라오계평, “동아시아발전모델과 동아시아적 가치관,” 『포럼21』, 한백연구재단 (1998), p. 14.

100)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는 동아시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문화적 가치에서 찾았다.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는 동아시아경제협력의체(EAEC: East Asia Economic Caucus)에 대해 이 조직이 단순한 지리적 집단이 아니라 문화적 집단이며, 역내 무역증진을 위한 조직들이 문화적 동질성에 기반해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문영, “21세기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과 한국의 역할,” 『유럽연구』, 제10권 (1999), p. 94.

101) 한석희·강택구, “동아시아공동체 형성과 중국의 인식,”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1호 (2009), pp. 88~289.

102) “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ctober 21, 1994, <<https://2001-2009.state.gov/t/ac/rls/or/2004/31009.htm>> (Accessed March 20, 2019).

103) Paul F. Chamberlin, “Six-Party Talks: Time For Change,”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8, no. 1, Winter/Spring (2007), pp. 59~67.

논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했고, 2001년 6월 상하이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이를 ‘상하이 협력기구(SCO)’로 발전시켰다. 상하이협력기구는 최고 의결기구인 정상회의부터 경제인 협의체까지 다양한 조직을 통해 정치, 경제, 안보 등의 다양한 사안을 포괄하는 다자안보협력기구의 역할을 수행했다.¹⁰⁴⁾ 특히 중국은 지역 강대국의 자발적 의사결정보다는 회원국이 모두 합의한 <헌장>을 따르는 방식으로 상하이협력기구의 다자주의적 해법을 추동했다.¹⁰⁵⁾

셋째, 2006년 9월에 열린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역내 협력을 강화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번영을 위한 조건을 확립해야 한다는 신안보관을 내세웠다.¹⁰⁶⁾ 주변 국가들과의 신뢰구축과 경제 협력에 중점을 두는 이러한 안보인식은 지역의 역사 및 정치의 복잡성을 감안하는 한편 기존 논의를 더욱 발전시켰다. 후진타오 시기 이러한 새로운 지역주의와 지역협력을 새롭게 인식한 계기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1년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한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to Asia)’정책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었다.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에게 역내질서를 주도하는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양시켰고 민족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담론과 대안전략을 모색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 공동체, 문화 공동체, 지역주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등장했다. 당시 주류적 견해는 비(非)전통적 연성안보 이슈에서 협력의 관행을 축적하면 경성안보 이슈에서도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능주의적 접근법¹⁰⁷⁾이었다.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 경제협력, 재난대책을 위해 2008년에 출범해 제도화한 ‘한중일 정상회의’도 이러한 중국의 지역 인식의 변화로 인한 것이었다.

이처럼 후진타오 시기 중국은 지속적 부상의 결과 미중관계와 동북아에서의 자국의 위상이 높아졌고, 동북아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역내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했다. 이웃 국가와의 신뢰

104) Marcel de Haas and Frans-Paul van der Putten,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Towards a Full-grown Security Alliance?,” pp. 5~12.

105) Jianwei Wang, “China and SCO: Towards a New Type of Interstate Relations,” Guoguang Wu (ed.), *China Turns to Multilateralism: Foreign Policy and Regional Security*, Routledge (2007), Chapter 7.

106) “攜手建設持久和平, 共同繁榮的和諧亞洲” (2006.6.17.), <<http://politics.people.com.cn/GB/1024/4496181.html>> (검색일: 2019.1.30.); CICA(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는 아시아 지역의 안보 강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을 위해 1993년 출범한 조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 중국, 러시아, 한국 등 2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http://www.cica-china.org/eng/gyyx_1/zyxj/t1150155.htm> (검색일: 2019.1.30.).

107)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의 핵심개념인 전이효과(spillover effect)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비안보 영역에서 협력은 자국 내 평화이익(peace interest)이라는 사회적 선호를 형성하고 상대국의 유사한 사회적 선호와 연계되면서 양국의 안보결정에 제약(constraint)을 가하게 된다. 또한 상호작용은 관련 행위자들의 사회화 가능성을 제고하여 주요 행위자 간에 지역적 해법에 의존하는 습관을 형성한다. 손열, “동아시아의 꿈,” 『아시아리뷰』, 제4권 제2호 (2015), pp. 67~68.

및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등 매력공세(charm offensive)를 통해 역내에 퍼져있는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고, '책임 대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역내 세력균형을 추구하고자 했다. 이것은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조화세계(和諧世界) 담론으로 구체화되었다.¹⁰⁸⁾

○ '중국의 꿈'과 지역공동체 논의: 시진핑(習近平) 시기

시진핑(習近平) 시기 중국에서 문화공동체 논의가 나타난 배경에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주변국가의 경계를 약화시키고 '중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가 있었다. 사실 중국은 빠르게 성장한 군사력과 경제적 지위를 기반으로 삼아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했다. 대외적으로 미국 등 강대국들의 견제에 대응하고 주변국들의 우려도 불식시키는 한편, 대내적으로 강대국으로의 부상에 필수적 기반이 되는 지속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2013년 10월 24일 '주변외교공작좌담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주변외교는 중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이며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후 주변외교의 이념으로 '목린(睦隣), 안린(安隣), 부린(富隣)'에 '친밀, 성실, 혜택, 포용'을 포함시킨 전략이념을 제시했다. 이것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부정적 인식의 확산을 방지하고, 서방 국가가 이를 중국 견제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¹⁰⁹⁾

특히 정상외교는 이러한 주변외교를 정책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예컨대 2013년 한 해 동안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22개국을 방문했고, 65명의 외국 정상과 고위급 지도자를 중국으로 초청했으며, 약 800여 개에 달하는 협력의향서(MOU)를 체결했다. 이것은 중국 지도부가 주변지역에서 우호관계를 맺고, 이를 순차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적 고려였다. 다른 한편 안보영역과 경제영역의 협력을 동시에 추진했다. 2014년 5월 20일-21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서 차기 의장국 대표 자격으로 회의를 주관하면서 '신안보관의 거점을 아시아로 삼는다'는 이른바 아시아 신안보관을 새로운 외교 독트린으로 제시했다.¹¹⁰⁾ 즉 '공동, 종합, 협력, 지속가능성'이라는 기조 속에서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 스스로 해결해야하며, 아시아 각국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108) 2012년 양제츠 외교부장은 '조화(和諧)'라는 가치를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정신을 견지하여 조화세계'를 구축하자고 제창했다. "楊潔篪出席第67屆聯合國大會一般性辯論並發言,"『中新網』, 2012.9.28., <<http://www.chinanews.com/gn/2012/09-28/4219945.shtml>> (검색일: 2019.1.30.).

109) 파이빙귀 국무위원은 중국은 여전히 자주독립, 평화, 외교의 원칙에 따라 평화발전의 길을 걷고 있다고 강조했다. 『人民日報』, 2010.12.13.

110) "積極樹立亞洲安全觀, 共創安全合作新局面,"『人民網』(2015.7.21.), <<http://politics.people.com.cn/n/2014/0522/c1024-25048258.html>> (검색일: 2019.1.30.).

이것은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에 맞서 지역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중국의 정책의지를 피력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2014년 반둥회의에서 평화공존 5개항 발표 60주년을 맞아 중국은 평화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시 천명했다.¹¹¹⁾ 이 또한 중국의 부상과 역내 영향력 상승에 대한 주변국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

2014년 우루무치에서 개최된 실크로드 경제벨트 국제세미나에서 중국은 지역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보다 진전된 형태로 보여주었다. 즉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이것은 역내 여러 국가들을 긴밀하게 엮어 상호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며 주변국들은 중국과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역내 경제적 불균형을 줄이는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질서(hub and spokes)나 국제조직과는 달리 조직 없는 공동체를 통해 일종의 가치공동체인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상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¹¹²⁾

한편 중국은 지역 내 경제협력, 통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세안(ASEAN)과 한·중·일 16개국이 점진적 개방을 통해 역내 무역자유화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2013년부터 공식 협상을 시작했다.¹¹³⁾ 2013년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간접시설 건설 지원을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을 제안했고, 이후 영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물론이고 한국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가입한 가운데 2016년 1월 50여 개의 회원국으로 공식 출범했다.¹¹⁴⁾ 또한 중국은 2017년 한국과 자유무역지대(FTA) 협정을 체결했으며, 싱가포르·파키스탄·아세안 국가들과도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¹¹⁵⁾

중국은 지역경제협력과 지역안보협력에 참여하면서 자국의 역할을 확대해, 서방 국가 특히 미국과의 경쟁구도를 만들어 나갔다. 실제로 RCEP을 통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AIIB를 통해 아시아개발은행(ADB)을 견제했다.¹¹⁶⁾ 이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글로벌 표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¹¹⁷⁾ 역내 공동체 구상은 ‘상호원원’

111) “習近平在和平共處五項原則發表60周年紀念大會上的講話,” 『人民網』, 2014.6.28., <<http://politics.people.com.cn/n/2014/0628/c1024-25213331.html>> (검색일: 2019.1.30).

112) Huiyun Feng and Kai He, “China’s Institutional Challenges to the International Order,” *Strategic Studies Quarterly*, vol. 11, no. 4, WINTER (2017), pp. 23~49.

113) Min Ye, “China and Competing Cooperation in Asia-Pacific: TPP, RCEP, and the New Silk Road,” *Asian Security*, vol. 11 (2015), pp. 206~224.

114) Alex He, *The Dragon’s Footprints: China in the Global Economic Governance System under the G20 Framework*, (CIGI Press, 2016), pp. 247~290.

115) “중국의 FTA 추진현황,” <<http://www.fta.go.kr/cn/>> (검색일: 2019.3.20.); “China’s Free Trade Agreements,” <<http://fta.mofcom.gov.cn/english/index.shtml>> (검색일: 2019.3.20.); Guoyou Song, “China’s Free Trade Agreement Strategie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5 (2012), pp. 107~119.

116) Niruban Balachandran, “The United States Should Join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East-West Center*, no. 397 (2017), pp. 1~2.

방안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지역주의를 통한 공동번영의 필요성과 역내 협력 기구가 중국의 주변국들에게 주는 이익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¹¹⁸⁾

○ 아시아 운명공동체

‘아시아 운명공동체’는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아시아 지역 구상이었다. 2015년 3월 보아오포럼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맹자』에 등장하는 ‘천지에 같은 것이 없는 것은 자연의 이치(夫物之不齊, 物之情也)’라는 표현을 인용해 모든 국가는 크기와 힘, 발전 정도가 다르지만 국제사회의 동등한 일원이기 때문에 ‘아시아는 운명 공동체를 건설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야한다’고 주장했다.¹¹⁹⁾ 이것은 중국이 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주역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역내 지역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3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한 수정 〈헌법〉에서도 ‘각국과 외교관계와 경제, 문화의 교류를 발전시키면서 인류 운명공동체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¹²⁰⁾

시진핑 시기 중국의 주변외교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고 대국으로 성장하겠다는 정책기조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정책은 이중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즉 중국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주변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남중국해 등 중국의 이른바 ‘핵심이익’을 지키는 과정에서 공세적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의 대중국 봉쇄 전략을 완화시키기 위해 역내 국가들에게 조기수확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평화담론을 전파하는 데 주력하기도 했으나, 주변국들이 중국의 규범과 가치를 수용하기에는 역사적 기억의 무게와 이데올로기 부담이 컸다.

117) 후진타오 주석은 ‘발전 모델의 다양성을 존중하되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균형, 국내경제와 국제경제의 균형, 효율성과 평등성의 균형을 통해 인간 중심의 포괄적 발전’을 주장하면서 시장 중심의 워싱턴 컨센서스를 비판했다. “胡錦濤出席二十國集團領導人峰會並發表重要講話,”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2010.6.28., <http://www.gov.cn/jdhd/2010-06/28/content_1639035.htm> (검색일: 2019.8.27.).

118) ‘일대일로’ 건설은 새로운 일이며, 협력 중 약간의 이견은 정상적이기 때문에 각국이 공동논의, 공동건설, 공동향유 원칙을 지킨다면 반드시 협력이 증진되고 이견이 해소되어 ‘일대일로’가 경제 글로벌화에 적합한 가장 광범위한 국제 협력의 장이 될 것이고, 각국 국민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보아오 아시아 포럼 2018년 연차회의 개막식 기조연설,”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04/10/c_1122659873.htm> (검색일: 2019.4.16); ‘일대일로’의 건설은 개방적 협력무대로 지정학적으로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며, 폐쇄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 말하는 이른바 이런 저런 ‘함정’도 아닌 중국이 세계와 기회를 공유하고, 발전을 공동모색하는 빛의 길이다. “2018년 파푸아뉴기니 APEC 최고경영자 회의 기조연설,” <<http://kr.people.com.cn/n3/2018/1117/c203278-9519431.html>> (검색일: 2019.4.16.).

119) “邁向命運共同體, 開創亞洲新未來,” 『新華網』, 2015.3.29.,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5-03/29/c_127632707.htm> (검색일: 2019.3.10.).

120) 운명공동체는 2018년 중국의 10대 키워드 중 하나였다. “『咬文嚼字』 2018十大流行語發布 錦鯉官宣等上榜,” 『人民網』, 2018.12.4., <<http://media.people.com.cn/n1/2018/1204/c40606-30440351.html>> (검색일: 2019.1.3.).

2. 문화공동체 논의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문화’와 ‘운명’ 공동체

○ 동아시아에서 주변으로

1990년대부터 중국은 종합국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도광양희(韜光養晦)’라는 방어적 현실주의(reactive realism)를 견지해왔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자 적극적 주변외교를 추진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공세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미중간 세력경쟁 과정에서 ‘신형대국관계’와 ‘주변외교’ 사이에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주변외교의 합이 대국외교 보다 크다는 논의도 힘을 얻었다. 2012년 10월 시진핑 체제가 등장한 이후, 신형대국관계와 주변관계를 결합하는 새로운 외교 이니셔티브를 제기했다. 2013년 중국공산당은 ‘운명공동체의식을 주변국가에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고 보았다. 2014년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변외교정책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제2차 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주변운명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주변운명공동체는 ‘인류운명공동체’¹²¹⁾가 지역에 적용된 것이며, ‘아시아운명공동체’와 ‘아시아태평양운명공동체’는 중국의 ‘소(小)주변’과 ‘대(大)주변’¹²²⁾을 포괄한 아시아지역에 대한 외교적 투사였다. 중국이 AIIB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그리고 RCEP 구축에 주력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그리고 ‘주변운명공동체’와 ‘아시아운명공동체’는 안보·경제·인문이라는 세 차원에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한편 동북아문화공동체 관련 연구가 동아시아공동체, 동아시아경제공동체, 아시아운명공동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지역협력, 주변외교, 동반자관계, 이익공동체 등의 담론으로 세분화되었다. 그러나 ‘공동체’ 논의 자체는 여전히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연구경향도 동아시아 정체성에 대한 연구보다는 중국 대 서양의 이원적 구도, 동양문화 대 서양문화의 대립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연구도 ‘문화공동체’ 연구는 드물었고, 주로 ‘경제공동체’에 집중되었다. 무엇보다 ‘문화공동체’ 개념에 대한 합의와 공동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한자, 유학, 천하, 역사적 경험 등 전통적 요소를 거대담론으로 삼아 주목하는 경향이 강했다.

121) 2012년 중국공산당 제18회 당대회에서 제기된 후, 2013년 3월 시진핑 주석의 탄자니아 방문, 2015년 보아오 포럼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개념을 주창했다.

122) 소주변은 일반적으로 러시아, 몽골, 동북아, 동남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중국의 육상과 해양에서의 접경지역과 국가들을 가리키고, ‘대주변’은 중국과 해양 및 육지에서 전략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 즉 동북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태평양지역 등을 의미한다. 祁懷高·石源華, “中國的周邊安全挑戰與大周邊外交戰略,” 『世界經濟與政治』, 第6期 (2013), pp. 25~46.

○ 아시아 재발견

중국이 다자협력과 지역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동아시아에서 주변-아시아-유럽으로 시야를 확대했다. 특히 동아시아가 아닌 아시아 전체의 정체성에 주목하면서, 아시아지역협력과 아시아지역공동체 협력에 관한 논의도 새롭게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의 종합 국력 한계 때문에, 세계전략의 출발점을 주변지역인 아시아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아시아지역 신흥경제 주체들의 약진은 주변지역의 협력을 강화하는 촉진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오랫동안 아시아를 하나의 전체로 보지 않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중화문화를 주류문화로 정착시키지도 못했다. 이러한 주변문화는 물론 서구문화도 중국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등 핵심문화의 공백기를 겪었다. 이런 점 때문에 동북아시아에서는 오랫동안 지역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다.¹²³⁾ 중국 내에서도 ‘주변’ 개념이 편협한 자기중심주의에서 비롯된 것이고, 중국에 대한 아시아의 국가들이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다.¹²⁴⁾ 이런 점에서 역사적 개념인 ‘주변’ 대신 ‘아시아’ 또는 ‘아태(亞太)’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¹²⁵⁾는 주장도 있었다. 따라서 중국은 아시아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주의’를 내세웠다.¹²⁶⁾

○ 지역책임대국과 운명공동체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동아시아공동체’ 혹은 ‘동북아공동체’ 구상을 처음 제기하였을 때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동북아공동체는 시기상조이며, 주변국가들이 중국위협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지역공동체’, ‘지역협력’, ‘지역다자주의’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기존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동아시아문화공동체와 동아시아경제공동체에 대해 적극적 자세를 취했다.¹²⁷⁾ 아시아 국가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아시아적인 것(Asianess)’를 강조했고, 신안보관¹²⁸⁾을 주장했다.

이러한 중국의 공동체 논의는 지리적 개념과 넓은 의미의 문화적 개념이 결합되어 있었다.

123) 丁磊, “東亞共同體與中國東亞主義,” 『山東社會科學』, 第4期 (2006), p. 134.

124) 卢光盛, “再议“周边外交”的概念与理念,” 『世界知识』, 第12期 (2017), p. 73.

125) 龐中英, “中國的亞洲戰略: 靈活的多邊主義,” 『世界經濟與政治』, 第10期 (2001), p. 33.

126) 肖歡容, “中國的大國責任與地區主義戰略,” 『戰略研究』, 第1期 (2003), pp. 46~51.

127) 方浩範, “東北亞文化共同體動因及其政治阻礙: 中日韓對待‘文化共同體’的態度,” 『東疆學刊』, 第2期 (2009), p. 4.

128) “習近平在亞信峰會作主旨發言,” 『人民網』, 2014.5.21, <<http://world.people.com.cn/n/2014/0521/c1002-25046183.html>> (검색일: 2019.4.1.).

또한 기존의 단일 공동체 접근법에서 벗어나 공동의 안전과 책임을 강조하고, 공동이익과 협력을 중시하며, 공동인식과 가치관에 주목하는 책임공동체, 이익공동체, 인문공동체를 상호 결합하고, 이를 다양한 차원으로 확대한 ‘운명공동체’를 제기하는 등 복합 공동체를 구상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이러한 운명공동체는 중국식 강대국 외교담론으로 불리는 신형국제관계론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예컨대, 2013년 시진핑 주석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아세안 운명공동체’를 제기했고, 2014년 리커창 총리도 보아오(博鰲)에서 열린 아시아포럼에서 책임공동체·가치공동체·이익공동체를 내용으로 하는 ‘운명공동체’를 주장했다. 이어 2015년 대만 국민당 방문단 대표들에게는 ‘양안(兩岸)운명공동체’를 제안했고, 2016년에는 중국 교육부가 「‘일대일로’ 교육행동 공동 구축을 추진하자」¹²⁹⁾는 문건을 발표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추진과 함께 교육공동체를 통해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운명공동체 담론은 결국 중국이 공식적으로 제기한 ‘인류운명공동체’의 세계관에서부터 이해할 수 있다. 인류운명공동체는 국제관계의 새로운 준칙개념으로서 국가, 민족, 문명을 포함한 주권국가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 인류의 공동운명을 기반한 전체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차이가 국가 간 이익의 분쟁, 갈등, 경쟁관계를 초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기초로 삼아 인류운명공동체는 다양한 국가와 민족이 공동이익, 공동가치, 공동책임을 기초로 한 운명관계의 통일체로서 신형국가관계의 목표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¹³⁰⁾ ‘신형국제관계’가 기존의 국제관계와 다른 것처럼 인류운명공동체는 완전한 조직형태를 가진 국가, 정당, 기업이나 느슨한 조직 형태를 가진 유럽공동체, 동남아국가연합 공동체와 달리 조직이 없는 형태로 개인, 집단 및 그 관계를 구성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¹³¹⁾

최근 ‘운명공동체’를 제기하면서 ‘공동체’ 연구도 다양한 학술분야의 새로운 연구주제로 등장했다. 중국의 학술논문 검색엔진인 CNKI에서 ‘공동체’를 키워드로 학술추세로 검색한 결과 2017년은 3,270개, 2018년은 4,505개로 전년대비 각각 36%, 38%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2000년 이후 ‘공동체’ 연구의 관련 키워드 중 ‘인류운명공동체사상’이 1,443개로 절대적으로 많았다.¹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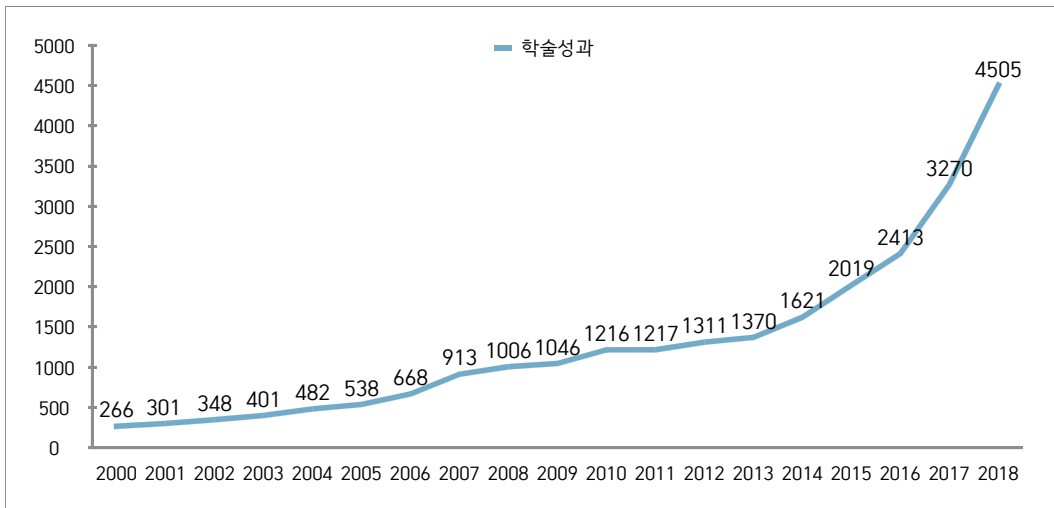
129) “教育部關於印發〈推進共建‘一帶一路’教育行動(2016)〉的通知,” <http://www.moe.gov.cn/srcsite/A20/s7068/201608/t20160811_274679.html> (검색일: 2019.1.3.).

130) 劉建飛, “中國特色大國外交的時代特色,” 『國際問題研究』, 第2期 (2017), p.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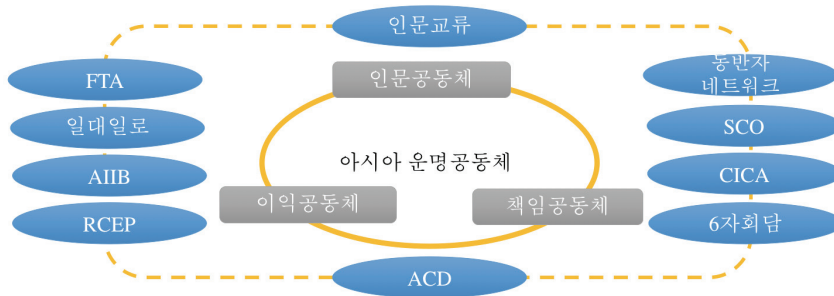
131) 중국중앙당교(국가행정대학) 국제전략연구원 류젠페이(劉建飛)의 “중국의 대국외교” 특별강연 (2019년 4월 23일, 서울).

132) CNKI에서 ‘공동체’를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이다. “CNKI” <<http://www.cnki.net/>> (검색일: 2019.4.30.).

[그림 3-1] 중국 CNKI ‘공동체’ 관련 학술 추세



[그림 3-2] 운명공동체 담론구조



출처: 우완영, “중국 신형대국외교 담론과 정책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8), p. 153.

〈표 3-1〉 운명공동체의 차원

국가운명공동체	양자운명공동체	다자운명공동체	지역운명공동체	글로벌운명공동체
중국-타이완	파키스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체코,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아세안, 아랍국가연합, G-20정상회의, 상하이협력기구 등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인류운명공동체, 사이버공간운명공동체 등

출처: 우완영, “중국 신형대국외교 담론과 정책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p. 159.

〈표 3-2〉 대국책임의 세가지 유형

구분	본토 책임	지역 책임	글로벌 책임
일반대국	기본적 안보와 물질적 부유 추구	전략적 변화 추구	비교적 작거나 일반적
지역대국	기본적 안보와 물질적 부유 달성	안보권 형성	중요(글로벌 책임 추구)
초강대국	충분한 안보와 물질적 부유 달성	세력범위 형성	글로벌 질서 지배
중국	일반대국(기본적 안보와 물질적 부유 추구)	지역대국(안보권역을 구축하지만 전략적 변화는 없음)	정치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대국이나 초대강국은 아님.

출처: 肖歡容, “中國的大國責任與地區主義戰略,” 『戰略研究』, 第1期 (2003), p. 48.

○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의 특징

동아시아 공동체는 동아시아 지역을 긴밀하게 일체화된 지역협력체로 통합하기 위해 구상된 것이다. 중국은 1940년대부터 동아시아에 지역협력조직을 구축하자는 구상을 제기한 바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명칭이 공식화되었다.¹³³⁾ ‘공동체’는 “동일한 조건 속에서 형성된 집단 혹은 몇 개의 국가가 일정한 영역에서 구축한 조직”¹³⁴⁾으로 정의되었고, ‘문화공동체’를 구성하는 세 요소로 ‘공동의 이상’, ‘공동의 문화’, ‘공동의 질서’가 제시되었다.¹³⁵⁾

중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동북아문화공동체는 동아시아공동체의 하위개념이며, 동북아공동체는 지리, 인문, 경제, 정치, 안보 등 다양한 시각과 차원으로 구성된 연합체¹³⁶⁾이다. 아세안 현장이 2015~2020년 아세안 경제공동체, 정치안보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제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여기서 문화공동체는 정치문화, 정신문화, 경제문화, 사회문화 등으로 구성된다.¹³⁷⁾ 그리고 ‘동북아문화공동체’는 문화를 중심으로 다문화 정체성을 기초로 하는 다문화국가의 ‘문화공동체’ 구상이다.

둘째, 동북아문화공동체는 동아시아공동체의 단계적 형성과정이다. 지역화(regionalization)는 한 지역이 하나의 다른 지역에 통합되는 것이고, 한 지역의 일체화 또는 공동체의 수준을 나타낸다.¹³⁸⁾ 발라사스(Bela Balassas)는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화폐연맹, 정치연맹의 단계를 거쳐 공동체가 점진적으로 실현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동북아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도 단계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쉬운 것을 해결한 후 민감하고 어려운

133) 宋均營·虞少華, “對‘東亞共同體’建設的在思考,” 『國際問題研究』, 第2期 (2014), p. 37.

134) 中國社科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2016), p. 912.

135) 奚潔人, 『科學發展觀百科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7), p. 528.

136) 祁進玉, “東北亞‘文化經濟共同體’的構想、路徑與展望,” 『世界民族』, 第3期 (2012), p. 75.

137) 曲金良, “天下一體: ‘環中國海文化共同體’的歷史構建,” 『中原文化研究』, 第1期 (2015), pp. 80~87.

138) 謝桂娟, “東北亞溫暖融合的政治因素及路徑分析,” 『東疆學刊』, 第3期 (2009), p. 37.

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보면 동북아문화공동체는 이 과정의 일종의 중간단계로 동북아공동체의 최종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동북아 ‘문화’는 동북아 각국이 사회적 실천이라는 상호작용에서 형성된 공동지식(동북아 가치관, 공동 행위규범 및 지역정체성)이고 이러한 공동지식의 형성과정이 동북아 문화융합과정으로 볼 수 있다.¹³⁹⁾

셋째, 중국에서는 지역공동체보다 지역협력, 지역주의, 다자주의, 지역화, 지역일체화 등의 연구에 집중되었다. 지역화와 지역일체화를 구분하고, 지역일체화를 경제적 힘과 정치적 힘의 결합으로 보기도 하고¹⁴⁰⁾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개방적 지역주의’로 보기도 한다. 즉 동아시아는 내부의 자연적 융합과정과 다른 지역의 일체화 진행과정 속에서 지역적 공동인식이 형성되어, 이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일체화를 추진하는 한편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나. 문화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동북아’ 범위와 공동체 개념

○ 지리적 동북아

‘지역은 관련 국가의 공동시장, 자본과 지식의 원천’¹⁴¹⁾이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리적 범주이지만, 동아시아와 동북아에 대해 합의된 개념이 없어 상황에 따라 혼용해왔다. 대체로 동북아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과 태평양 서쪽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고 인종적 특성이 유사하며, 역사복합체(historical bloc)라는 특성이 있고, 경제적으로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의존적 관계를 형성해왔다. 이처럼 지리적 동북아는 지리, 문화 혹은 역사성, 경제관계나 정치적 사회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국가군이 ‘지역성’과 ‘기능성’을 형성하고 발전시킨 연합체라고 볼 수 있는 데, 중국, 일본, 몽골, 한반도, 러시아가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중국에서는 아시아를 동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¹⁴²⁾ 즉 동아시아는 아시아를 구성하는 일부이다. 한편 동북아시아는 동아시아를 구성하는 일부로, 중국, 일본, 몽골, 한반도,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구성된 소(小)동아시아와 대(大)동아시아

139) 謝桂娟, “21世紀東北亞文化融合的動因探析,” 『延邊大學學報』, 第5期(2007), p. 16.

140) 龐中英, “地區化、地區性與地區主義: 輪東亞地區主義,” 『世界經濟與政治』, 第11期(2003), p. 8.

141) 위의 글, p. 8.

142) 蘇浩, “東亞開放地區主義的演進與中國的作用,” 『世界經濟與政治』, 第9期(2006), p. 44.

(동북아, 아세안을 포함한 동남아)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남아시아, 서아시아, 남태평양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¹⁴³⁾ 한편 지리적 인접성이라는 틀에서 보면 동북아에 속하는 범주는 중국 동부와 북부지역(동북3성, 내이명구, 허베이, 산둥, 산시, 베이징, 상하이, 톈진 등의 7개 성과 시 포함)이다. 따라서 중국의 동북 3성(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 한반도, 일본, 몽골, 러시아 동부 및 시베리아를 포함한 지역이 ‘소(小)동북아’에 해당한다.¹⁴⁴⁾ 또한 중국의 내륙과 섬과 해안을 포함한 ‘중국어해’를 범주로 삼아 중국과 다른 국가의 대륙과 섬으로 구성된 ‘환(環)중국어해 문화공동체’¹⁴⁵⁾를 주장하는 경향도 있다.

○ 정치안보 동북아

동북아지역의 주요 국가를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한국, 몽골 등 6개 국가로 볼 때, 이들 국가는 역사적으로나 국가 간의 관계를 볼 때, 공동의 역사적 기억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정치안보의 차원에서 보면, 중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이고 역외국가인 미국의 국가이익이 중첩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미국을 동북아시아 안보공동체에 포함시키는가 하는 점이 쟁점이다. 이를 단순화하면 역외국가가 포함된 동북아와 역외국가가 없는 동북아로 구분할 수도 있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고, 동북아의 주요 안보현안에 현실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여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학계의 아·태학파와 동아시아학파에서도 역외 대국이 동아시아 일체화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거나 반대해야 한다는 부정적 견해를 제시하면서 논쟁하기도 했다.¹⁴⁶⁾ 한편 동아시아 공동체를 둘러싸고 인도, 호주, 뉴질랜드 3국 그리고 러시아, 몽골, 북한 3국을 날개로 보는, 즉 ‘하나의 축과 두 개의 날개’로 보는 일부 견해도 있다.¹⁴⁷⁾

○ 경제 동북아

동북아지역공동체에서 경제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원동력이다. 실제로 경제적 동북아 공동체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가장 넓다. 이를 경제협력 가능성과 상호의존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동북아는 좁은 의미의 동북아와 넓은 의미의 동북아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좁은 의미의

143) 王逸舟, “‘東亞共同體’概念辨識,” 『現代國際關係』, 第1期 (2010), p. 84.

144) 何志工·安小平, 『東北亞區域合作: 通向東亞共同體之路』 (北京: 時事出版社, 2008), p. 16.

145) 曲金良, “天下一體: ‘環中國海文化共同體’的曆史構建,” 『中原文化研究』, 第1期 (2015), pp. 80~87.

146) 肖歡容, “泛化的地區主義與東亞共同體的未來,” 『世界經濟與政治』, 第10期 (2008), p. 36; 祁懷高, “東亞區域合作領導權模式構想,” 『東南亞研究』, 第4期 (2011), pp. 55~59; 鄭先武, “‘東亞共同體’遠景的虛幻性析論,” 『現代國際關係』, 第7期 (2007), p. 58 참조.

147) 宋均營·虞少華, “對‘東亞共同體’建設的在思考,” 『國際問題研究』, 第2期 (2014), p. 37.

경제적 동북아에 포함되는 지역과 국가는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이며, 핵심적 경제주체는 한·중·일 및 다양한 양자·다자 무역협정에 기초한 FTA 네트워크이다. 또 다른 하나는 넓은 의미의 경제 동북아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외연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볼 때, 아세안국가와 역외국가가 동북아 지역 국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10+1’, ‘10+3’, ‘10+6’, 심지어 ‘10+x’ 등이 등장했다. 이것은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일체화 과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나, 공동체 구성국가, 의제, 규칙, 집행, 거버넌스 등에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¹⁴⁸⁾

○ 문화 동북아

지리적 동북아 범위와는 달리 문화적 연대와 공통성이라는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한·중·일 3국이 핵심국가이다. 물론 언어, 민족, 역사, 정치체제, 이데올로기, 정체성, 종교 등으로 이를 세분화하면 한·중·일 3국 사이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다만 인종, 문자, 언어습성, 생활습관 등은 ‘유교문화’, ‘한자문화’ 및 역사의 공유 등에서 상당한 유사성과 공통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동북아문화공동체 발전과정에서 한·중·일은 핵심국가이며, 이들 국가의 역할이 향후 중요 변수가 될 것이다.¹⁴⁹⁾ 이 경우, 중국은 문화공동체 논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역할을 적절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¹⁵⁰⁾ 문화공동체는 정치·안보공동체나 경제공동체와는 달리 두 유형의 공동체가 포괄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 즉 정치·안보공동체와 경제공동체가 공동안보, 공동 이익을 목표로 삼는다면, 문화공동체는 다양성 속에서 정체성을 추구하는 일종의 혼종(hybrid)정체성을 중시한다. 다양성이란 상호존중과 상호학습, 상호이해를 통해 상대를 ‘있는 그대로(what it is)’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다양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도 민족과 지역에 따라서도 다양성이 존재한다.

○ 주변으로서의 동북아

동아시아문화공동체 논의과정에서 정체성의 유사성과 차이점, 정체성의 주체논쟁 등도 나타났다. 특히 무엇을 국가정체성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국은 다민족 통일국가이며, 전 인구의 약 8%에 달하는 1억 2천만 명이 소수민족으로써 대부분 접경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히 몽골족, 위구르족, 회족, 티벳족(藏族)과 같은 소수민족은 한족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고유한

148) 吳澤林, “近年中國學界關於東亞一體化的研究述評,” 『現代國際關係』, 第10期 (2015), pp. 54~63.

149) Ruan zongze, “China’s Role in Northeast Asian Community,” *Asian Perspective*, vol. 30, no. 3 (2006), pp. 149~157.

150) 祁進玉, “東北亞‘文化經濟共同體’的構想、路徑與展望,” 『世界民族』, 第3期 (2012), p. 75.

민족성이 있고, 독특한 문화전통 때문에 유교문화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예컨대 몽골족의 경우 지역특징, 생활습관이나 민족역사는 중국보다는 몽골과 유사하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이 동북아문화공동체 대신에 주변운명공동체를 제기한 것도 동아시아를 외교중심으로 삼고 유교문화를 주류문화로 보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한편, 주변지역 소수민족의 정서와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국내정치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3. 중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 쟁점과 과제

중국학계는 기본적으로 동북아지역의 평화적 발전을 위해 문화공동체 구축에 동의한다. 그러나 역사·영토 분쟁, 민족주의, 미국 요인, 이 밖에 한·중·일 3개국 간의 주도권 경쟁이 동북아문화공동체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요인이다.¹⁵¹⁾ 이러한 문제들은 지속적인 대화공론장인 문화공동체를 통해 해소하면 장기적으로는 극복될 수 있다.¹⁵²⁾

중국학계의 문화공동체 논의는 정부정책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2000년대 이전 중국은 지역공동체나 문화공동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며 수동적이었다. 그것은 시기상조론, ‘중국위협론’ 확산에 대한 우려, 문화정책과 사상의식의 보수적 성향,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욕구의 취약성이라는 요인 때문이었다.¹⁵³⁾ 그러나 이후 중국의 공동체 논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등장하면서 본격화되었고, 시진핑 정부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등과 같은 중국식 전지구화(Sinic globalization)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2012년 중국 공산당 제18차 대회에서 ‘인류운명공동체’가 제시된 이후,¹⁵⁴⁾ 과거와는 달리 공동체 담론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고 맥락화되었다.

그동안 중국에서 동북아문화공동체를 구성하는 문화적 동질성 요소로 가장 빈번하게 제시된 것은 유교문화, 한자문화 등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주변국가들이 ‘문화적 종주국’을 자처하는 중국을 경계하는 현상을 우려해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인문’이라는 개념을 널리 사용하고

151) 方浩範, “東北亞文化共同體動因及其政治阻礙—中韓日對待‘文化共同體’的態度,” 『東疆月刊』, 第26卷 第2期 (2009), pp. 2~4; 祈進玉, “東北亞‘文化經濟共同體’的構想、路徑與展望,” 『世界民族』, 第3期 (2012), p. 78.

152) 劉宗義, “亞洲命運共同體的內涵和建構思路,” 『國際問題研究』, 第4期 (2015), p. 50.

153) 方浩範, “東北亞文化共同體動因及其政治阻礙—中韓日對待‘文化共同體’的態度,” pp. 4~5; 謝桂娟, “東北亞文化融合的政治因素及路徑分析,” 『東疆月刊』, 第26卷 第3期 (2009), p. 34; 鄭媛媛, “芻議東北亞融合的政治因素及路徑,” 『才智』, 第8期 (2015), pp. 284~285.

154) 2008년부터 중국의 10대 유행어를 발표하고 있는 대중잡지 『咬文嚼字』에서는 2018년 최고의 유행어로 ‘운명공동체(命運共同體)’를 선정하고,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제창한 이후 세계가 ‘인류운명공동체’를 주목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咬文嚼字』2018十大流行語發布 錦鯉官宜等上榜,” 『人民網』, 2018.12.4., <<http://media.people.com.cn/n1/2018/1204/c40606-30440351.html>> (검색일: 2019.01.03.).

있다. ‘인문교류’, ‘인문외교’, ‘인문공동체’ 등이 그것이다. 유교·한자 등 전통문화에서 동질성을 찾는 논의를 ‘전통적 논의’라고 한다면, ‘인문’이라는 큰 틀 속에서 생성되고 있는 논의들을 ‘새로운 전개’라고 볼 수 있다.

○ 전통적 논의: 유교문화와 한자

중국학계에서는 유교문화가 동북아문화공동체의 ‘최대공약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의는 대부분 한국과 일본 유교의 역사적인 연원과 각국에서 변용된 유교문화를 소개하며 문화적 친연성(親緣性)을 강조하면서 전개되었다.¹⁵⁵⁾ 최근에는 과거 조공체제가 전통적 동북아운명공동체였으며, 이러한 공동체를 이어주는 사상적 매개체가 유교였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등장했다.¹⁵⁶⁾ 유교문화가 동아시아 문화담론으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5.4 운동 이후 서구화의 충격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교의 현대화를 모색한 중국 지식인들의 역할이 컸다.¹⁵⁷⁾ 이러한 지식인들의 담론은 대만·홍콩 등지로 확산되었고, 1990년대 이후 중국의 문화보수주의 학파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계승되었다. 이들은 서구화의 폐해를 비판하면서 유교문화를 포함한 중국적 가치체계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연구는 현재 중국적 세계질서와 중국식 담론을 생성하는 지적 자원이다.

1996년대 유교철학에 기초한 화합학(和合學)이 중국의 문화전략으로 제기되었다. 장리원(張立文)은 『중국 전통문화와 인류운명공동체(中國傳統文化與人類命運共同體)』에서 자본주의, 민주주의 정치를 비판하면서 유교문화가 인류운명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으며, “중국의 전통사상인 유교가 대동세계(大同世界)와 천하위공(天下爲公) 관념을 가지고 있고, 인류사회와 우주자연에 주목해 왔으며, ‘화합(和合)’사상 등의 사상적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류운명공동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¹⁵⁸⁾ 한편, 이러한 ‘화합’사상에 국제관계 이론을 접목한 화합주의(和合主義)를 중국외교의 가치 지향점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¹⁵⁹⁾

155) 李昌善, “構建東北亞文化共同體淺論,” 『東疆月刊』, 第1期 (2007), pp. 11~13; 王琢, “東亞區域認同的文化成因及前景,” 『東南亞縱橫』, 第7期 (2007), pp. 39~41; 孫英春, “東北亞文化傳統的同質性與‘文化共同體’遠景,” 『浙江學刊』, 第4期 (2009), pp. 25~33.

156) 張波·李群群, “東北亞命運共同體背景下的中國文化選擇,” 『東疆月刊』, 第1期 (2018), pp. 21~22.

157) 현대신유가로 분류되는 이들은 중국민족이 당면한 위기의 근원이 문화문제에 있다고 판단하고 유가사상을 중국문화의 중심에 두어 서구 문화를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전통문화의 근대화를 추구해 왔다. 이승환, “푸웨이밍(杜維明)의 유학 제3기 발전론,” 『철학과현실』, 통권 제34호 (1997), p. 175.

158) 張立文, 『和合學概論: 21世紀文化戰略的構想』(北京: 首都師範大學出版社, 1996), pp. 1~820; 『和合與東亞意識—21世紀東亞和合哲學的價值共享』(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1), pp. 1~264; 『中國傳統文化與人類命運共同體』(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8), pp. 1~316.

159) 余瀟楓, “和合主義: 論中國外交的倫理價值取向,” 『國際政治研究』, 第3期 (2007), pp. 21~24; 易佑斌, “國際關係和合主義價值論研究—兼論人類命運共同體思想的價值意蘊,” 『邵陽師範高等專科學學報』, 第4期 (1999), pp. 43~48.

이러한 논의는 새로운 천하와 조공체제 논의로 확산되었다. 자오팅양(趙汀陽)은 2006년부터 중국 고대 주(周)나라의 천하질서를 참조하여 인류사회의 안정과 이익을 위한 ‘천하’체제를 제안했다.¹⁶⁰⁾ 그는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국제사회에서 전 세계 차원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민족과 국가가 아닌 세계적 차원의 개념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서구에서도 ‘천하’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제국’이 있으나, 천하개념은 제국의 정복성·패권성·적대성이 없고 자발성·공유성·우호성을 갖춘 ‘하나의 체계, 여러 제도’의 포용적 체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체계의 포용성이 통일된 종교와 이데올로기가 아닌 관계적 이성(relational rationality)으로 형성된 공존관계에 기초한다고 설명했다.¹⁶¹⁾

이 밖에도 『논어』의 ‘어진 사람(仁者)은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을 먼저 세워주고,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면 먼저 남을 도달하게 한다(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는 말에 근거해 ‘공자의 개선(孔子改善)’을 주장하기도 했다. 즉 자신의 이익을 더욱 좋게 하려면 다른 사람의 이익도 더욱 좋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야칭(秦亞青)은 자오팅양의 주장에 착안해 맹자의 ‘최고조건(孟子最優)’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즉 『맹자』에 등장하는 ‘하늘이 주는 좋은 시기는 지리적 이로우만 못하고, 지리적 이ro움은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는 것은 단체의 화합과 협력적 인간관계가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는 최고의 조건이며, ‘공자의 개선’과 ‘맹자의 최고조건’이 신형국제관계의 핵심문제인 협력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 사유방식과 행위모델이라고 주장했다.¹⁶²⁾

이처럼 중국학자들은 기존의 서구적(미국적) 가치를 대체할 중국적 가치와 외교방식을 모색하고 있고, ‘화합’과 ‘천하’ 등 유학적 개념을 활용한 담론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적 담론들이 주장하는 중국 전통사상의 보편성과 세계성은 여전히 주변국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유교문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변모했다. 문화대혁명에서 봉건이념으로서 타도의 대상이었던 유교는 시진핑 정부가 국민에게 강조하는 문화자신감(文化自信)¹⁶³⁾

160) 자오팅양 지음, 노승현 옮김, 『천하체계: 21세기 중국의 세계 인식』 (서울: 길, 2010), p. 156.

161) 趙汀陽, “天下究竟是什麼? -兼回應塞爾瓦托·巴博納斯的‘美式天下’,” 『西南民族大學學報』, 第1期 (2018), pp. 7~8. 자오팅양은 이 글에서 살바토레 베이본스(Salvatore Babones) 교수의 미국식 천하에 대해 비판했다. 베이본스 교수는 *American Tianxia* (2017)에서 ‘천하’가 비록 합당한 개념(right concept)이지만, 중국이 ‘합당치 않은 국가(wrong country)’이기 때문에 미국이 천하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162) 秦亞青, “中華文化與新型國際關係,” 『世界知識』, 第1期 (2019), pp. 55~57.

163) 시진핑 주석은 2016년부터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이론·제도·문화에 대한 ‘4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 자신감(文化自信)은 민족·국가·정당은 자신의 문화가치에 대해 충분히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며, 그 문화적 생명력에 대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十八大以來, 習近平這樣強調文化自信,” 『新華網』 2017.10.13.,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7-10/13/c_1121796384.htm> (검색일: 2019.4.16.).

속에 포함해 제창되고 있다. 유교경전을 포함한 ‘우수전통 문화교육’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교육과 ‘중국의 꿈’을 선전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2017년부터 대학입시에도 반영되었다.¹⁶⁴⁾ 이렇게 보면 향후 유교문화로 재생산된 중국식 담론은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의 주요한 이론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중국학계는 한자문화권이 일반적으로 한자·유학·율령·중국화된 불교 등 네 가지 문화요소를 내용으로 한다고 보았다.¹⁶⁵⁾ 즉 한자 문화권에 속한 국가들이 한자를 공통의 문자로 사용하고 유학을 공통의 정치적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고도의 중앙집권 정치체제를 운영하고 불교를 고정 종교로 삼았다는 것이다.¹⁶⁶⁾ 이 밖에도 반데르미르슈(Leon Vandermeersch)가 1986년 제기한 ‘신한자문화권(新漢字文化圈)’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¹⁶⁷⁾ 여기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한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와 지역이었다.¹⁶⁸⁾ 즉 “한자문화권은 종교적 역량으로 각국을 응집시키는 힌두교·이슬람교와 다르며, 동일한 모국어에서 여러 민족의 언어를 파생시킨 라틴어나 앵글로 색슨어계와도 다르다. 이 지역 공동문화의 기초는 중국에서 생겨나 이웃국가에서 통용된 한자”¹⁶⁹⁾로 보았고, 동아시아 지역이 한자를 매개로 문화적 유사성을 지니며, 전근대 시기 고도의 응집력을 보였다.¹⁷⁰⁾

중국에서 한어병음과 간체자 운동을 주도한 언어학자 저우여우광(周有光)은 한자문화권이 역사에서 사라지기는 했지만, 한자문화의 전통과 영향력은 동아시아에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보았다. 한자가 과거에는 봉건문화를 대표했지만, 향후 국제적으로 ‘공동창조, 공동소유, 공동향유’하는 현대문화를 내용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이다.¹⁷¹⁾ 일부 학자들은 한자문화권이 2천여

164) “教育部關於印發〈完善中華優秀傳統文化教育指導綱要〉的通知,”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2014.3.26., <<http://old.moe.gov.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s7061/201404/166543.html>> (검색일: 2019.1.3.).

165) 陳尚勝, 『五千年中外文化交流史』第一卷(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2), p. 189; 李銘娜·武振玉, “東亞文化圈的形成、衰退與重建—以漢字的地位變遷為視角,” 『東北亞論壇』, 第5期(2011), p. 117. 이밖에 1928년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를 설립한 푸스넨(傅斯年)은 일찍이 『夷夏東西說』(1933)에서 동아시아 문화의 특징을 한자·유교·교육제도·율령제·불교·기술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아시아 문화 특징에서 한자를 가장 먼저 열거했다. 傅斯年, “夷夏東西說,”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外編第一種, (1933), 재인용: 馮天瑜, “漢字文化圈”概念在日中兩國的形成過程,” 『人文論叢』, 2012年卷, (2012), p. 276.

166) 王琢, “東亞區域認同的文化成因及前景,” 『東南亞縱橫』, 第7期(2007), p. 40.

167) 林龍飛, “東亞漢字文化圈及其形成論析,” 『東南亞縱橫』, 第8期(2006), pp. 58~62; 馮天瑜, “漢字文化圈”概念在日中兩國的形成過程,” 『人文論叢』, 2012年卷, pp. 275~286; 王岳川, “漢字文化圈與東方文化新契機,” 『中國投資』, 2012年 7月, pp. 110~111; 장즈창, “‘거대분단’의 극복과 이상적 동아시아의 가능성: ‘한중 인문유대 강화’가 지역의 미래에 주는 의미,” 『통일과 평화』, 제5집 2호(2013), pp. 54~73.

168) 林龍飛, “東亞漢字文化圈及其形成論析,” 『東南亞縱橫』, 第8期(2006), p. 59.

169) 汪德邁(Leon Vandermeersch)·陳彥譯, 『新漢文化圈』(南昌: 江西人民出版社, 1993), p. 2.

170) 장즈창, “‘거대분단’의 극복과 이상적 동아시아의 가능성: ‘한중 인문유대 강화’가 지역의 미래에 주는 의미,” p. 189.

년의 역사 속에서 ‘준(準)공동체정신’을 축적했으며,¹⁷²⁾ 정보화시대에서 중국이 인터넷 상의 새로운 ‘한자문화권’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⁷³⁾ 이처럼 중국의 한자문화 논의는 앞서 언급한 유교문화처럼 종주국의 입장에서 한자문화의 역사적 전파와 영향력을 다루는데 그치지 않고, 한자문화의 미래적 지향과 중국식 담론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 새로운 전개: 인문(人文)

동북아문화공동체의 전통적 논의가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한다면, ‘인문’이라는 새로운 논의는 경제·안보라는 전통적 외교영역을 제외한 포괄적인 영역이다. ‘인문’의 사전적 의미는 “인류사회의 각종 문화현상”이다.¹⁷⁴⁾ 2000년대 이후 중국정부와 학계는 인적 교류, 사상 교류, 문화 교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가 간 교류에 인문교류, 인문외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시진핑 정부가 2013년 이후 주변국가 외교담론으로 ‘친성혜용(親誠惠容)’을 제시하면서 ‘친’에 해당하는 인문교류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중국 정부가 ‘정치’, ‘안보’, ‘경제’ 외에 ‘인문교류’가 중국 외교의 한 축임을 강조하고, 인문교류를 인문외교의 틀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¹⁷⁵⁾ 인문교류와 인문외교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중국정부는 “사상 교류, 인적 교류, 교육 교류, 과학 협력, 문화예술, 언어교육, 도서출판, 정보 서비스 등 거의 모든 국가 간 인적·사회적 교류를 인문외교의 범주에 넣고 있다.”¹⁷⁶⁾

인문교류에 대한 중국학계의 논의도 주로 외교관계와 연동해 접근하고 있다. “국제관계가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상호작용하지만, 깊이 발전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의 소통이며, 문화적 상호작용이다. 인문교류는 근본적으로 소프트 파워이다. 흐르는 물처럼 사람들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강한 추진력이 생겨 나라와 나라의 외교관계에서 견고한 소통과 이해의 교량 역할을 한다.”¹⁷⁷⁾ “인문교류는 정치안보 협력, 경제무역 협력과 더불어 국제관계의 3대 동력이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각 문명과 문화 간의 이해와 번영을 추진하는 민의(民意)와 사회적 기초이다.”¹⁷⁸⁾ “아시아 운명공동체에는 이익공동체, 안보공동체, 인문공동체를 포괄하는 공동체 사이의

171) 周有光, “中國和漢字文化圈—漢字文化圈的文化演變之一,” 『群言』, 第1期 (2000), p. 37.

172) 王雨, “試論漢字文化圈的歷史經驗,” 『社會科學戰線』, 第12期 (2008), pp. 148~149.

173) 許孝梅, “漢字文化圈淺析,” 『勝利油田黨校學報』, 17卷 4期 (2004), p. 37.

174) ‘인문’은 『주역』 비괘(賁卦)의 단사(彖辭)에서 유래했다. “군셈과 부드러움이 뒤섞이는 것이 천문이다(하늘의 이치). 문명이 머무니 인문이다(사람의 도리). 천문을 관찰하여 사시의 변화를 살피고, 인문을 관찰하여 천하를 변화시켜 이룩한다.”(剛柔交錯, 天文也。文明以止, 人文也。觀乎天文以察時變, 觀乎人文以化成天下.)

175) 이희옥, “한·중 인문유대 심화발전의 방안,” 『성균차이나 브리프』, 3권 1호 (2015), p. 126.

176) 趙可金, “人文外交：全球化時代的新外交形態,” 『外交評論』, 第6期 (2011), pp. 74~78.

177) “中外人文交流的新方向,” <http://epaper.gmw.cn/gmrb/html/2018-02/08/nw.D110000gmrb_20180208_1-06.htm> (검색일: 2019.2.15.).

‘관계’를 보장하고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이다”¹⁷⁹⁾ 등으로 보고 있다.

인문교류의 전략적 경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현실적 이익 충돌로 인한 국가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현실외교에 부드러운 측면을 더한다. 둘째,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 처럼 상대국의 인문적 매력을 중시한다. 셋째, 중국의 전통문화와 전통종교는 주변국가에서 강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¹⁸⁰⁾ 한국은 중국의 맥락에서 보면 셋째 유형에 속한다. 즉 중국의 전통문화·전통종교를 매개로 인문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문화종주국’이라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관이 투영되어 있다. 또한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인문외교의 장기적 목표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동아시아의 인문적 내용을 공동으로 향유하면서 동아시아 문명을 부흥시킨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아래 <표 3-3>을 보면, 동아시아 인문적 내용의 핵심은 중화(中華)문화로 구성하고 있다. 이것은 여전히 중국과 서방국가, 중심과 주변이라는 틀에서 사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 중국 인문외교 전략의 목표

구분	서방		비서방	
	미국/ 주요 서양 대국	중국과 중요 이익 충돌 없는 서양국가	아시아 (주로 동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단 기	중국에 대한 공정하고 객 관적 이해 촉진	중국에 대한 공정하고 객 관적 이해와 기본적인 존 중 촉진	상호 간의 공정하고 객관 적 이해와 존중 실현	상호 간의 공정하고 객관 적 이해와 존중 실현
장 기	국가·국민 간의 진정으로 평등한 관계 실현	국가·국민 간의 진정한 평등과 우호적 관계 실현	중화문화를 핵심으로 하 는 동아시아문명권과 아 시아 문명의 재부상 실현	비서구 문화에 대한 문화 적 자각과 비서구문명 부 상의 촉진

출처: 簡軍波, “中國人文外交的戰略選擇,” 『人文外交:中國特色的外交戰略制度與實踐』(復旦大學國際問題研究院, 2014), p. 25.

이와 달리 동아시아의 문화적 친연성이 결코 ‘호감’이나 ‘동질감’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같은 문자와 같은 인종’을 강조한 접근 자체가 타문화에 대한 포용의식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즉 중국인의 ‘문화종주국 의식’과 주변국가의 문화적 자존심(cultural pride)이 서로 충돌하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문교류는 ‘포용성과 다양성, 공동 발전’의 방향으로 전개해야

178) 邢麗菊, “何以人文: 中外人文交流的意義,” 『世界知識』, 第23期 (2017), p. 18.

179) 劉宗義, “亞洲命運共同體的內涵和建構思路,” 『國際問題研究』, 第4期 (2015), p. 50.

180) “中外人文交流—中國特色大國外交第三支柱的興起,” <<https://iir.sass.org.cn/2017/1201/c959a7687/page.htm>> (검색일: 2019.2.15.).

한다고 주장한다.¹⁸¹⁾

한편, 2017년 중국 정부는 『중국·외국 인문교류업무 강화·개선에 관한 몇 가지 의견(關於加強和改進中外人文交流工作的若干意見)』을 발표했다.¹⁸²⁾ 여기에서 인문교류를 “대외업무의 중요한 부분이며, 중국과 외국 간의 관계를 공고화시키는 사회적, 민의적 기초이며, 대외적으로 개방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경로”로 다시 정의하면서 인문교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주목할 점은 이 문건에서 인문교류의 주체를 정부가 아닌 민간으로 확대하고, 교류의 내용도 국가 간의 교류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즉 인문교류의 주제·내용·범위를 확충하고, ‘중국·외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인문교류’와 ‘사회조직과 민간단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고취했다.’¹⁸³⁾

예컨대 2016년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채택한 인문유대 69개 세부사업을 보면, 주로 전통(역사) 문화 방면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 국민의 호응하고 체감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중국은 미국·러시아·영국·유럽연합과 교육·보건·과학기술·미디어·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학술·청소년·지방·문화(전통예능)에 한정되어 있어 국민 간의 정서적 유대와 소통을 유도하기 어려웠다.¹⁸⁴⁾ 현재 중국이 강조하는 민심상통(民心相通)¹⁸⁵⁾에 부합하는 상호 교류를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가 필요하다. 중국학계에서도 “인문교류를 항상 공자, 서예, 경극(京劇), 판다 등 네 가지로만 할 수는 없다”라며 인문교류 내용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또한 양국 간의 인문교류가 미세먼지 등 환경, 여성, 노령화 사회 등 양국 국민의 관심이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181) 王曉玲, “周邊命運共同體構建與人文交流思路的轉換,” 『現代國際關係』, 第5期 (2015), pp. 51~53.

182) “中共中央辦公廳·國務院辦公廳印發〈關於加強和改進中外人文交流工作的若干意見〉,” 中華人民共和國中國人民網網站, <http://www.gov.cn/xinwen/2017-12/21/content_5249241.htm> (검색일: 2019.1.7.).

183) “인문교류 관련 지식과 이념에 관한 교육·전파·실천을 강화하고, 해외 화교·유학생·자원봉사자·해외 주재 중국기업에서 인문교류에 적극 참여하도록 강화하여 중국·외국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인문교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문적이고 국제적 사회조직과 민간단체가 인문교류의 구체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인문교류의 내용과 범위를 내실 있게 확대시키며, 인문교류의 국제적 브랜드를 만든다. ‘해외진출(走出去)’과 ‘국내유입(引進來)’의 쌍방향 동력을 유지한다. 중국어·중의(약)학·무술·음식·민속명절·무형문화유산 등 대표 사업의 해외진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중국·외국 유학 및 합작학교 운영, 대학·연구기관의 국제적 협력·혁신, 문물·미술·음악공연 및 대형 체육행사 개최, 그리고 중점 체육사업 발전 방면의 협력을 심화시킨다. 인문교류의 각 영역에서 국제 영향력을 갖춘 브랜드 사업을 조성하고, 중국·외국 간 ‘인문교류의 해’에 부합하는 주제를 더욱 개발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환으로 2018년 1월 중국은 교육부에 ‘중외인문교류센터(中外人文交流中心)’를 설치해 인문교류방면의 활동을 관장하도록 했다.

184) 이희옥, “한·중 인문유대 심화발전의 방안,” 『성균차이나브리프』, 제3권 제1호 (2015), pp. 127~129; 장호준, “한중 인문유대 담론과 방향에 관한 고찰,” 『중국학』, 제51집 (2015), p. 219.

185) “【絲路新畫卷·繁榮之路】陸海空立體聯通 開通合作國家467條定期空中航線,” 중국정부는 일대일로의 5대 이념인 오통(五通)인 정책 소통(政策溝通), 인프라 연결(設施聯通), 무역 확대(貿易暢通), 자금유통(資金融通), 민심상통(民心相通)을 제시했다. <http://news.cnr.cn/native/gd/20190411/t20190411_524574621.shtml> (검색일: 2019.4.16.).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 기존 논의의 한계와 과제

기존의 동북아문화공동체 관련 논의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중국의 주류학계에서는 한·중·일 삼국에서 유교문화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현격히 약화되었으며, 실생활에 적용되는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본다.¹⁸⁶⁾ 다만 중국 정부는 문화강국을 지향하면서 유교 개념을 이용한 중국식 담론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중국에서 유교는 정부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기치 아래 국민에게 ‘문화적 자신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유교문화의 영향력은 노장년층에 제한되어 있고, 청년층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¹⁸⁷⁾ 유교에 대한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과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문화공동체 구상에서 유교문화가 살아있는 문화자원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¹⁸⁸⁾ 특히 새로운 유교관련 담론을 개발하지 못하는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재발견되는 중국식 담론 속에서 유교를 통한 문화적 동질성이 아닌 문화적 종속성으로 나타날 우려도 있다.

둘째, 현재 한국의 한자문화는 유교문화처럼 문화적 전통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사용하는 한자는 ‘간체자(簡體字)’로서 한국에서 통용되는 한자와 차이가 있다. 최근 중국의 부상과 문자 해독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에서 한자교육이 다시 부흥하고 있지만, 간체자는 중국어를 배운 사람만이 습득할 수 있다. 2002년부터 대만 정부는 간체자의 반대 개념인 ‘번체자(繁體字)’ 대신에 ‘정체자(正體字)’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¹⁸⁹⁾ 이를 통해 대만정부는 한자를 포함한 중국문화의 정통성이 중국 본토가 아닌 대만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했다.

셋째, 현 단계 한·중 인문교류는 동북아문화공동체로 향하는 초보적 준비단계이다. 지속적인 인문교류를 제도화하기 위해 한·중 양국 외교부는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를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해왔다. 그러나 동북아문화공동체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양국 국민이 주체가 된 문화적 교류만이 동북아문화공동체의 살아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

186) 張東明·樸松喜, “東亞文化共同體視角下的中日韓人文學術交流,” 『當代韓國』, 1期 (2015), pp. 24~26.

187) 진성수, “한국 유교의 현황과 成均館 釋奠,” 『유교문화연구』, 제1권 제19호 (2011), pp. 257~299.

188) 백영서, “한중 정상 회담에 부치는 쓴소리,” 『프레시안』, 2013.6.2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9064>> (검색일: 2019.1.5.).

189) “臺北市府推行使用正體字說帖,” 臺北市府正體字主題網, <<https://www.doe.gov.taipei/TraditionalChinese/cp.aspx?n=7215934F4589BB70>> (검색일: 2019.1.7.).

다. 따라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필요하다.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설립한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틀에서 다양한 논의가 추진되고 있지만, 환경·여성·노령화 사회 등 협력 분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 협력형태도 ‘한·중·일+a’의 다자간 형태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제 2 절 중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 전문가 조사

1. 조사 목적과 특징

○ 조사 목적

중국학계의 전문가 그룹 특히 문화공동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철학, 역사, 문화 등을 연구하는 인문학자,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한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 취지를 파악하는 한반도 및 한국연구자, 국제정치 또는 국제정치경제의 영역에서 공동체 논의의 이론적·실천적 의미를 연구하는 전문가에 대한 설문과 현지에서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동북아공동체 구상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시기별, 쟁점별로 그 지속성과 변화를 파악하는 한편, 촉진 요인과 장애 요인에 대한 현실적 과제를 추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분과학문과 연구영역별로 나타난 스펙트럼을 확인하면서 중국 내 주류적 경향을 확인하는 한편, 중국 학계가 동북아문화공동체를 실현 가능한 구상으로 인식하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동북아문화공동체가 역내 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지, 중국내 전문가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통해 ‘동북아문화공동체’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을 추출하고자 한다.

중국 정부와 학계가 구상하는 동북아공동체와 한국이 제시하는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의 접점을 찾고 이 과정에서 협력이나 갈등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찾고자 한다. 또한 동북아문화공동체 담론 기저에 있는 ‘동북아의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살펴보고, 문화적 동질성이 역내 국가 간에 상존하는 이질적 문화와 역사적 갈등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인식조사는 한국 정부가 표방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축 전략에 대해서도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중국 내 동북아공동체에 대한 담론과 주장이 중국 정부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고 기존의 인식과 연구 성과를 검토한 바탕에서 동북아 역내 동질성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동의 문화적 가치 창출과 실천 가능한 공동 의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중국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기계적, 자의적 해석을 경계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1차 자료와 기존 연구와의 상관성을 비교하면서 차이, 변화,

그리고 새로운 추이를 발견하고자 한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조사결과 분석에 대한 적실성을 교차 확인하고 향후 동북아문화공동체의 실현가능한 로드맵을 탐색하면서 정책적 제의를 하고자 한다.

○ 조사 특징

첫째, 설문조사를 통해 같은 주제와 문제에 대한 주관적 생각을 논의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 설문조사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개방성을 동시에 제시했다. 둘째, 설문대상에 응한 전문가들의 전반적 인식에 기초한 대분류, 특정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에 근거한 소분류를 결합하는 종합분석을 진행했다.

2. 방법론 및 조사대상

가. 중국 추가 해당 문항

【문 1】: 한중일 문화교류의 방향이 대체적으로 인문교류, 인문유대, 인문공동체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가정할 때, 한중일 문화교류는 이 3자 중의 어느 단계에 있는가?

【문 2】: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형성과정에서 그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유가문화, 한자 등) 그 가능성과 한계를 간단하게 평가하십시오.

【문 3】: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형성과정에서 누가 그 주체로 되어야 하는가? (예를 들면 정부, 시민사회, 개인 등) 그들은 각각 어떤 비중으로 참가해야 하는가? 그 근거를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문 4】: 동북아문화공동체와 동북아인문공동체 중 더 현실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나. 샘플 수집 방법 - 접촉인원, 자료수집 방법, 시기

○ 설문대상 선정

전공분야, 경력, 연구주제에 대한 이해도, 학계의 평판과 영향력, 한국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학자 20명을 선정했다. 이 중에서 인문학과 국제관계학의 탁월한 이론적 성과와 정책을 제시해온 저명한 창강(長江) 학자 (양타오 등), 베이징과 상하이 그리고 지방(난징, 후난, 샤먼, 동북 등)의 지역적 분포 고려, 한국에 대한 정책 이해도가 높은

한국 전문가(심리취, 스위안화, 왕샤오링, 장동밍 등), 공동체 논의에 일가를 이룬 연구자(면홍화, 량원상, 류장용 등)를 포함했다.

○ 설문내용

연구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표를 중심으로 공통질문과 중국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질문을 포함하는 등 개방성을 살렸다. 이를 한중일 인식의 공통성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 설문방식

설문지를 중국어로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고 송부하고 회수했다. 대부분의 설문 대상자들은 이미 라포(rappo)를 형성한 전문가들이었고, 수행연구기관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설문회수율이 대단히 높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설문에 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20개 설문을 배포했다. 이 밖에도 관련 연구 주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북지역을 방문해 현장면접을 실시하고 관련 연구동향을 수집했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이 중국의 체제구속성으로 인해 공식설문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기 어려웠던 쟁점에 대해 설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지 대학, 연구기관을 방문해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직, 간접적으로 실시했다.

• 응답자 분포

〈표 3-4〉 응답자 분포

전문가	직업군	전공영역	전문가	직업군	전공영역
A01	대학교수	철학	A11	대학교수	국제정치
A02	연구원	사회학	A12	대학교수	역사/국제정치
A03	대학교수	경제학	A13	대학교수	역사/정치학
A04	대학교수	국제정치	A14	대학교수	정치학
A05	대학교수	교육학	A15	대학교수	문화/정치학
A06	대학교수	철학/역사	A16	대학교수	국제정치
A07	연구원	국제정치	A17	대학교수	어문학/국제정치
A08	대학교수	역사	A18	연구원	국제정치
A09	대학교수	역사/정치학	A19	대학교수	경제학
A10	대학교수	국제정치	A20	대학교수	법학

• 직업군별 분포

〈표 3-5〉 응답자 직업군별 분포

직업군	교수	연구원	공공기관	기업인	NGO	기타	합계
빈도	17	3	0	0	0	0	20

• 전공영역별 분포

〈표 3-6〉 응답자 전공영역별 분포

전공영역	사회과학	인문학	공학/자연과학	기타	합계
빈도	12	8	0	0	20

3. 동북아 개념의 인식과 그 범위

• 해당문항 문 1-7

- 문 1 - 동북아 개념인식: 선생님께서는 ‘동북아시아’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를 여쭙겠습니다. 아래 보기 중 동의하시는 항목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표 3-7〉 동북아 개념의 인식

동북아 개념의 인식	빈도 (%)
(1) 한반도와 그 주변 국가와 지역을 포괄하는 지리적 개념이다.	6 (30.0%)
(2) 유교, 한자 문화, 역사적 경험 등을 공유하는 문화적 개념이다	1 (5.0%)
(3) 지리적 개념이면서 동시에 문화적 개념이다.	13 (65.0%)
합계	20 (100.0%)

○ 동북아를 지리적 개념이라고 본 응답자가 6인, 문화적 개념이라고 본 응답자가 1인이었으나, 지리적 개념이면서 문화적 개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13인으로 제일 많았다. 이처럼 동북아 개념을 복합적으로 인식한 것은 유교, 한자문화, 역사적 경험 등을 공유하는 문화적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한반도와 그 주변 국가와 지역을 포괄하는 지리적 개념이라고 보는 경향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이고, 문화적 개념에 대한 긍정은 지리적 개념과 연계해서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보였다.

- 문 2 - ‘동북아시아’라는 개념은 주로 한국에서만 통용될 뿐, 인접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낯설고 잘 이용되지 않는 개념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라는 용어 혹은 개념이 중국과 일본에서도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 중 동의하시는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표 3-8〉 동북아 개념의 중·일 확장 가능성

동북아 개념의 확장 가능성	빈도	%
(1) 매우 동의한다	13	65.0%
(2) 어느 정도 동의한다	7	35.0%
(3)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는다	0	0.0%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	0.0%
* 동의함 = (1)+(2)	20	100.0%
* 동의하지 않음 = (3)+(4)	0	0.0%
합계	20	100.0%

- 동북아 개념의 중국과 일본으로 확장 가능성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이 13인,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의견이 7인으로, 답변자 모두 긍정적이었다. 동북아 개념이 한국은 물론 일본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모두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 문 3-4

○ 긍정의견

- 동북아시아 개념의 확장성에 대한 근거로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바로 지리적 요인이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일본 모두 아시아의 동북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협의의 지정학적 개념으로 하나의 범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지린대학의 동북아연구센터, 중국의 아시아태평양연구학회 산하의 동북아위원회, 산둥대학의 동북아대학, 시마네(島根)현립 대학의 북동아시아 연구센터 등은 이미 중국과 일본에 동북아라는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 지리적 공통점 이외에도, 동북아가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된 것은 문화이다. 중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모두 한자, 유교경전, 중국에서 전래된 중원문화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역사적으로 특히 문화적 측면에서 상호교류가 긴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북아의 ‘문화지리적 개념’ 형성의 기초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한 의견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부상하고 중국문화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면 동북아의 문화적 중심력이 제고될 것이라 기대했다.

- 많은 의견은 동북아시아를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았으며, 한중일 간에 각국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동북아보다는 쇼와시대부터 동아시아 개념을 자국의 세력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정치·지리적 개념으로 사용해왔고, 탈아입구(脫亞入歐)정책을 시행했던 적도 있는 만큼 동북아에 대한 귀속감이 적다는 의견도 있었다. 소수의견으로 오히려 한중일은 역사와 문화에 있어서 깊은 이해와 인식을 하고 있으므로 동북아 개념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반면, 몽골은 그와 다른 이해를 가진 나라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다.
- 대부분은 동북아 개념이 확장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동남아와 대비되어 사용되는 동북아라는 개념은 지역의 협력과 평화안정이라는 공동의 필요를 실현하기 위해서 더욱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공감대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은 주목할 만하다. 그 의견에 의하면, 아세안을 통해 지역 일체화를 실현한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현재 동북아는 흩어진 모래알 같은 상태이지만, 동북아라는 지리적 개념이야말로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표식이라고 본 것이다.
- 중국 전문가들은 동북아 개념의 확장을 전체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동북아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극단적인 민족주의 정서, 구체적인 의제 등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 문 5 - 동북아시아에 포함되어야 하는 국가들

〈표 3-9〉 ‘동북아시아’에 포함되어야 하는 국가 혹은 지역

	포함	불포함	합계
한국	20 (100.0%)	0 (0.0%)	20 (100.0%)
북한	20 (100.0%)	0 (0.0%)	20 (100.0%)

	포함	불포함	합계
일본	20 (100.0%)	0 (0.0%)	20 (100.0%)
중국	20 (100.0%)	0 (0.0%)	20 (100.0%)
대만	14 (70.0%)	6 (30.0%)	20 (100.0%)
몽골	17 (85.0%)	3 (15.0%)	20 (100.0%)
러시아	12 (60.0%)	8 (40.0%)	20 (100.0%)
베트남	0(0.0%)	20 (100.0%)	20 (100.0%)
미국	2 (10.0%)	18 (90.0%)	20 (100.0%)
싱가포르	0(0.0%)	20 (100.0%)	20 (100.0%)

○ 동북아에 포함되어야 하는 국가들로는 한국, 북한, 일본, 중국에 대해서는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몽골에 대해서는 17인, 대만에 대해서는 14인, 러시아에 대해서는 12인 순이었으며, 미국에 대해서 2인이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베트남과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모두 동북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동북아 개념은 지리적 위치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 문 6 - 해당 국가가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동북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리적으로 동북아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동북아에 포함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 밖에 미국은 동북아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미국이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동북아국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동북아 발전을 위해 미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 대만의 경우, 중국학자들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라고 보는 견해가 강해서 따로 그것을 논의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 러시아의 경우, 단순히 지리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동북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문화지리적 관점에서는 전통적으로 유럽에 속한다고 보았다. 지리적으로도 기본적으로는 유럽에 속하고, 부분적으로만 동북아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 베트남과 싱가포르의 경우, 문화적으로는 동북아 국가들과 친연성이 있지만, 지리적으로

동북아가 아니라 동남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4.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필요성과 가능성

- 해당문항: 문 8-14, 문 22-24
- 문 8 - 동북아다자협력체 가능성: 유럽연합처럼, 동북아시아에서 한·중·일이 중심이 되어 “동북아시아 연합” 혹은 “동아시아 연합” 같은 다자적 협력체를 일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10〉 동북아다자협력체의 가능성

동북아다자협력체 가능성	빈도	%
(1) 매우 가능하다	1	5.0%
(2) 어느 정도 가능하다	12	60.0%
(3) 어느 정도 불가능하다	3	15.0%
(4) 전혀 불가능하다	4	20.0%
* 가능함 = (1)+(2)	13	65.0%
* 불가능함 = (3)+(4)	7	35.0%
합계	20	100.0%

○ 매우 가능하다(1인), 어느 정도 가능하다(12인)라고 보는 견해가 13인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동북아라는 개념과 정체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였으나, 동북아다자협력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35%(7인) 있었다.

• 문 9-10

○ 긍정의견

○ 긍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 중에는 지리적 근접성과 더불어, 유교와 한자라는 문화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다자협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았다. 문화 분야에서 보면, 한중일 3개국 사회 간의 발전 격차가 점차 감소하고, 3개국 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사회문화 및 생활형태도 더욱 동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한중일 협력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들은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이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정치나 안보 분야에서의 대립과 갈등은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경제와 무역 분야의 협력은 한중일의 공동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자협력이 오히려 북한 핵문제나 북한의 개혁개방 같은 정치나 안보 분야의 대립과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 한중일의 경제적 다자협력 가능성을 긍정하는 의견들은 동북아가 경제발전이 활발한 지역이라는 점, 세계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 제조업, 과학기술, 첨단산업 등 미래 산업에 있어서 주도적 국가들이라는 점 등에 주목하였으며, 한중일 3국 FTA가 건설되고, 정책 장벽이 철회되면, 협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한중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협력은 EU와는 다른 성격일 것이라고 보았다. 종(縱)적·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EU와 달리, 동북아는 횡(橫)적·수평적이며, 느슨한 구조를 띠어야 한다는 것이다.
- 한중일 협력체제가 이미 구축되었다는 견해도 있었다. 이 견해는 북한, 몽골 등을 편입시켜 동북아지역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중일 FTA가 타결된다면, 남북통일 후 자유무역구가 더욱 확대되어 '동북아 자유무역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 다자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들은 또한 그것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로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주목했다. 이들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영향이었다. 따라서 만약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면 동북아 정치·경제·문화적 구심력도 강화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두 번째는 3국 간의 역사적 갈등·영토분쟁·이데올로기 차이를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제약요인으로 인해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공동체 형성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부정의견
 - 부정적 의견들은 동북아다자협력체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제약요인들로 인해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이 제약요인으로 든 것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한중일 간의 이데올로기적 차이, 배타적 민족주의, 영토분쟁, 경제발전 수준, 역사문제, 지역주의 부족, 신뢰부족 등이었다.

-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로 인해 한중일 간에 신뢰 형성이 어렵다는 점에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협력체의 구축은 상호 간 발전과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도 했다.
- 흥미로운 견해로는 중국이 지리적·정치적 특징으로 인해 동북아공동체를 주도적으로 구축하려는 열정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일본·한국·몽골 등의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이중 한국은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한반도의 분단·대치 상황이라는 중요한 제약요인을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기타 의견으로 경제적 협력, 문화적 공감을 특징으로 하고, 경제·문화 담론 속에 존재하는 ‘동북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지만, 유럽연합처럼 고도의 체제화와 법률 제도화를 갖춘 동북아 연맹을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 문 11 - 경제, 안보, 문화공동체 필요성

〈표 3-11〉 동북아다자협력체의 유형별 필요성 비교

	경제공동체	안보공동체	문화공동체	합계
필요성 1순위	13 (65.0%)	7 (35.0%)	0 (0.0%)	20(100.0%)
필요성 2순위	7 (35.0%)	7 (35.0%)	6 (30.0%)	20(100.0%)
필요성 3순위	0 (0.0%)	6 (30.0%)	14 (70.0%)	20(100.0%)

- 경제공동체, 안보공동체, 문화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 가장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은 경제공동체였다. 그 다음으로 안보공동체, 문화공동체의 순이었다. 문화공동체를 1순위로 본 응답자는 없었다.

• 문 12

○ 안보공동체 가장 필요

- 안보공동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안보야말로 국가영역과 국제영역에서 핵심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실현 가능성으로 본다면, 당연히 경제협력 공동체이겠지만, 안보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 또한 방해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공동체나 문화공동체에 비해 안보공동체의 구축이 가장 힘들 것이라고 보았으나, 이런 점에서 더욱 안보공동체의 필요성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 응답자 중 현재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결여된 것이 바로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상호신뢰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다. 그리고 동북아에서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들었다. 그리고 그러한 경계심이 강대국의 개입과 간섭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 경제공동체가 가장 필요

- 경제공동체가 가장 필요하다고 본 이유로는 동북아 국가 간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가 바로 경제협력이고, 가장 성숙한 분야이므로 현실적으로 경제공동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안보공동체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경제적 이익공동체에서 출발해 가장 어려운 문제인 안보공동체를 해결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더욱이 동북아에서는 미국이 정치와 안보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 안보공동체의 형성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이러한 견해들은 필요성이 아닌 실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익공동체에서 책임공동체, 책임공동체에서 운명공동체로의 점진적 발전을 선호한다. 또한 조속히 공동체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경제공동체의 필요성을 우선시한 견해들은 경제가 지역공동체의 기초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공동의 경제이익이 있으면 상호 간 교류와 협력도 많아지고 정치관계와 문화교류에 대한 촉진·개선의 노력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호혜공영(互惠共贏)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한다면 안보공동체와 문화공동체 구축도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특히 동북아에서 중국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분야는 경제 분야이고, 중국의 경제발전은 동북아의 인적 왕래를 증진시켰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이점인 경제발전을 이용하여 상호 간의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동북아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가장 크고 쉽기 때문이다.

○ 문화공동체가 가장 필요

- 문화공동체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없었다. 많은 응답자는 이전 문항에서 이미 동북아지역에서의 문화적, 역사적 교류를 지적한 바 있고,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문화에 관여하지 않는 원칙에 기초해 자연적 상태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생각 때문으로 보인다.

• 문 13 - 경제, 안보, 문화공동체 실현가능성

〈표 3-12〉 동북아다자협력체의 유형별 실현 가능성 비교

	경제공동체	안보공동체	문화공동체	합계
실현가능성 1순위	19 (95.0%)	1 (5.0%)	0 (0.0%)	20(100.0%)
실현가능성 2순위	0 (0.0%)	7 (35.0%)	13 (65.0%)	20(100.0%)
실현가능성 3순위	1 (5.0%)	12 (60.0%)	7 (35.0%)	20(100.0%)

- 동북아다자협력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응답에서는 경제공동체-문화공동체-안보공동체의 순서로 응답했다. 경제공동체의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본 응답자가 안보공동체나 문화공동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대적으로 가장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본 다자협력체는 안보공동체였다.

- 동북아지역의 문화적 유대감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비교해, 문화공동체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은 흥미롭다. 역사적으로는 동북아가 유교나 한자와 같은 전통적 문화는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사상, 제도, 가치관 등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이 이유이다. 그러나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문화공동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 문 14 - 위 13번 문항에서 문화공동체(혹은 경제공동체나 안보공동체)를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과제로 선택하신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주시요. 만약 동북아공동체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를 적어주시요.

○ 경제공동체

- 경제공동체가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과 중국 국내의 커다란 소비시장으로 인해 중국에 대해 일본과 한국의 경제의존도가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FTA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둘째, 현재 동북아지역 국가는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성이 매우 높지만, 문화공동체나 안보공동체는 동력이 약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셋째, 동북아지역에서 안보공동체나 문화공동체는 이데올로기, 제도적 문제, 그리고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로 인해 복잡한 갈등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넷째, 경제공동체는 탈(脫)정치화의 체제가 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제공동체의 주체는 국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주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류와 협력이 용이하다. 다섯째, 한중일 3국의 경제·사회가 발전하면서, 특히 3국 사회가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청년세대의 세계관과 가치적 정체성이 같은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여섯째, 3개국은 모두 시장경제를 시행하고 있어 경제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갖추고 있다. 다른 분야보다 갈등요소가 적기 때문에 해결이 용이하다.

- 경제공동체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는 실현가능성보다 필요성에 주목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한중일 FTA를 추진해야한다고 보았으며, 그것을 통해 한중일이 상호 보완적인 경제공동체를 구성하여 북미와 EU에 대항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기도 했다.

○ 안보공동체

- 안보공동체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힌 전문가는 단 한 명이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경제공동체의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문화공동체의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안보공동체는 실현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에 비해 갈등과 마찰 요소가 많기 때문에 쉽게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문 22 - 한중일 중심 공동체 실현가능성: 만약 정부가 한·중·일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주변 국가와 지역들을 포함시키는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추진한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나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표 3-13〉 정부주도 한·중·일 중심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

한·중·일 중심 문화공동체 실현가능성	빈도	%
(1) 매우 가능하다	2	10.0%
(2) 어느 정도 가능하다	13	65.0%
(3) 어느 정도 불가능하다	4	20.0%
(4) 전혀 불가능하다	1	5.0%
* 가능 = (1)+(2)	15	75.0%
* 불가능 = (3)+(4)	5	25.0%
합계	20	100.0%

• 문 23-24

○ 긍정의견

○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의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의견(13인)과 매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의견(2인)을 합하면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전문가의 절대 다수가 동북아문화공동체의 실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긍정적 의견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지정학적 근접성으로 인한 상호 교류의 경험, 문화적, 역사적 유사성으로 인한 공동의 가치 형성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사실 경제공동체의 형성이 가장 쉽고 현실적이라는 이전의 의견들과 마찬가지로, 경제공동체 형성을 토대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문화공동체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또한, 역사적, 문화적 공통성을 더욱 발굴하기 위해 TV 드라마·영화·애니메이션의 합작 등 구체적인 문화 및 인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여 공동의 문화적 유전자를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결과적으로는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긍정하고 있지만, 민족주의와 민족국가 형성과정에서 문화공동체 의식이 약화된 점, 3국 간 정치·경제·사회발전 격차, 역사적 요인과 북한 문제 등 공동체형성의 걸림돌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 부정의견

-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은 어느 정도 불가능하다는 의견(4인)과 전혀 불가능하다는 의견(1인)을 포함해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부정적인 의견은 긍정적인 의견들이 우려했던 부분과 같은 이유로 부정적이라고 보았다. 다만 우려사항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이들이 들고 있는 이유로는 제도적 차이, 역사적 갈등, 정치안보문제, 역사 인식문제, 문화적 정체성의 차이, 그리고 동북아라는 명칭과 범위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이었다. 어느 정도 불가능하다는 의견 중 문화공동체 건립의 조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문 25 - 동북아문화공동체를 추진한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생각하신 바를 기술해주시시오.

○ 정부의 역할

- 많은 전문가가 경제적 협력을 문화적 협력의 전 단계로 보고 있는 만큼, 정부가 경제적 협력과 문화적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문화공동체 형성의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문화교류의 필요조건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정부 간 협력체제와 기구를 마련해야 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 구체적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도자회의→비전제시→환경조성→정책제정→예산마련→문화교류→공감대 형성→운명공동체 건설 등의 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국 간의 연구·협력을 통한 문화공동체의 정층설계(頂層設計: top level design)방안 마련, 관련기구를 지정한 정부 간의 조율 관장, 3국 우호발전의 전략과 정책 제정, 관련 규정(혹은 제도·법률 등)과 발전방향 마련, 3국 FTA 협정 체결, '일대일로'와 한일 국가발전전략의 연계,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해' 추진, 특정 예산을 마련해 학계의 '동북아문화공동체' 관련 학술 연구 활동과 출판 지원, 역내 국가 간 문화교류활동 적극 추진,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축에 대한 공감대 형성, 3국 운명공동체 건설 등을 들 수 있다.

○ 이 밖에 각국의 민족주의를 억제하고, 여론을 주도하고, 인터넷을 통해 교류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한중일 정부정책으로 2008년 'Campus Asia' 프로젝트, 2018년 5월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제시한 '한중일+X' 모델을 들기도 하였다.

○ 적극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주장하는 다수 의견과 달리, 소수의 의견으로 공자학원식의 정부주도의 문화교류를 반대하면서, 비정부 민간조직이나 지방정부에게 넓고 자유로운 정치공간을 마련하여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었다.

○ 민간의 역할

○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민간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다양한 형식의 문화교류를 개최하고 동북아 문화를 특징으로 지닌 문화상품을 공동개발한다거나, 대학이 독자적으로 정부의 간섭을 줄여나가야 한다거나, 경제무역과 문화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 대부분 전문가들은 민간이 동북아문화공동체의 기초 형성에 중요하다고 보고, 민간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비록 정부가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민간의 참여가 없다면 공동체 건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동의했다.

○ 민간이 편견 없이 동북아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론은 동북아 국가 공동의 문화, 가치, 정신을 홍보하고, 정부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보여주었다.

○ 민간의 교류에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영토분쟁과 민족주의적 정서를 제기하기도 했다.

5. 동북아시아의 정체성과 한·중·일 상호인식

- 해당문항: 문 15-20, 문 26-37
- 문 15 - 동북아의 공통적 정체성 부재에 대한 의견: 햄머와 카첸슈타인(Christopher Hemmer and Peter Katzenstein)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지역에서 유럽연합이 가능했지만, 아시아에서는 이에 비견될 만한 지역적 다자협력의 형성되지 못했던 이유를 지역내 국가들이 공유하는 정체성의 유무에서 찾고 있습니다. 즉, 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 통합에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공통적인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십니까?

〈표 3-14〉 동북아에 공통적 정체성이 부재하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

동북아의 공통적 정체성 부재	빈도	%
(1) 매우 공감한다	1	5.0%
(2) 어느 정도 공감하다	8	40.0%
(3) 어느 정도 공감하지 않는다	8	40.0%
(4)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3	15.0%
* 공감 = (1)+(2)	9	45.0%
* 공감하지 않음 = (3)+(4)	11	55.0%
합계	20	100.0%

○ 동북아에 공통적 정체성이 부재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의견이 9명,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11명으로,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의견과 어느 정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각각 8명으로 동수를 나타내었고, 매우 공감한다와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대립적 의견이 각각 1명과 3명으로 나타났다.

- 문 16-17
- 긍정의견

○ 동북아에 공통적 정체성이 부재하다는 의견은 동북아 국가들이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 발전단계, 사회발전 수준, 서방문화의 수용정도, 자기 민족의 역할에 대한 인식, 종교신앙, 군사적 역량, 정치안보, 역사적 기억 등의 차이를 그 이유로 제시한다. 지역적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를 복합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 지역적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인 역사와 문화요인은 오히려 정체성 부재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의 경험과 인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 소수 의견으로 동북아가 지역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는 원인을 일본과 북한에서 찾는 의견이 있었다. 일본은 '탈아입구(脫亞入歐)'와 '탈구반아(脫歐返亞)' 사이에서 배회하고 있기 때문이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기존 국제체제와 국제규범 밖에 유리되어 있다는 이유이다.

○ 부정의견

○ 동북아시아의 공감대가 있다는 의견은 전통적 유교사상, 한자, 가치관, 인종적 동질성, 문화와 경제교류의 역사, 지역적 귀속성,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 동북아 공동의 정체성이 부재하다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들은 정체성의 형성이 정치적, 역사적 요인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데올로기의 차이, 역사인식문제, 영토분쟁 등은 동북아 정체성에 (부정적)영향을 주는 요인들로서 모두 근대 이후 '서세동점(西勢東漸)'의 배경에서 형성된 것이거나, 또는 1945-1991년 사이의 아시아의 냉전과 이데올로기 대립의 결과이거나, 또는 정체성은 서구문화의 산물로서 동북아를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들이다.

○ 정체성에 있어서 아시아와 유럽이 다르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유럽연합 또한 지금의 정체성이 지역일체화 이후에 형성되었으며, 유럽과 아시아는 상황이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었다. 나아가 유럽연합과 같은 긴밀하고 수직적인 융합이 아니라 느슨하고 수평적인 연합일 경우 한중일 3국의 협력공동체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 문 18 - 동북아 공통 정체성의 요소: 만약 동북아시아의 공통적인 정체성을 찾는다면, 그 정체성의 바탕을 이루는 요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3-15〉 동북아시아 공동 정체성의 바탕을 이루는 요소

	긍정	부정	합계
유교문화 및 한자 사용	17 (85.0%)	3 (15.0%)	20 (100.0%)
서세동점 시기에 대한 공통의 역사적 경험	11 (55.0%)	9 (45.0%)	20 (100.0%)
공통의 경제적 이해관계	19 (95.0%)	1 (5.0%)	20 (100.0%)
군사적 안보 협력의 필요성	10 (50.0%)	10 (50.0%)	20 (100.0%)
비군사적 안보 협력의 필요성	14 (70.0%)	6 (30.0%)	20 (100.0%)
환경 문제에 대한 공통적 대응의 필요성	18 (90.0%)	2 (10.0%)	20 (100.0%)
노동, 복지, 이민자, 인구 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공통적 대응의 필요성	12 (60.0%)	8 (40.0%)	20 (100.0%)
한류(韓流) 등 공통적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5 (25.0%)	15 (75.0%)	20 (100.0%)

○ 위의 표에서 동북아 공통의 정체성의 바탕을 이루기 위해 긍정적인 요소를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1) 공통의 경제적 이해관계
- 2) 환경 문제에 대한 공통적 대응의 필요성
- 3) 유교문화 및 한자 사용
- 4) 비군사적 안보 협력의 필요성
- 5) 노동, 복지, 이민자, 인구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
- 6) 서세동점 시기에 대한 공통의 역사적 경험
- 7) 군사적 안보협력의 필요성
- 8) 한류 등 공통적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즉 경제, 환경, 비군사적 안보, 사회, 역사, 군사적 안보, 문화의 순서를 알 수 있다. 경제나 환경에 대한 협력에는 호의적인 반면, 안보나 문화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해 이상과 가치의 문제로 전개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문 19 - 위의 18번 문항에서 제시되지 않은 동북아시아의 공통적 정체성을 이룰 수 있는 다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 이 밖에 동북아시아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농경문명의 자연환경, 공동의 문화요인에 대한 각국의 지원정책과 국가 간 협력체의 구축, 공동의 가치관, 역사적 기억과 문화, 운명공동체 의식, 인문교류, 지역적 유대, 지역귀속감 강화, 청소년 문화교류, 글로벌 위기에 대처해야하는 필요성, 비전통적 안보협력, 대외 경제협력, 역사적 문제 해결, 인종적 동일성, 지역 인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문 20 - 정체성 이외에, 동북아시아 지역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이익, 가치, 믿음, 법칙, 제도 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공통의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도 설명해주시시오.

○ 정체성 이외에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이익, 안보 이익, 인권, 발전, 평화와 안정, 환경보호, 상호신뢰 등을 언급했고, 개인적 차원에서 가정에 대한 중시, 개인이 집단에 복종하는 전통과 책임감, 민주, 법치제도, 유교사상과 관념, 국가명예와 운명에 대한 강한 관심, 경제발전과 사회건설에서 국가가 적극적·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추종과 긍정 등을 언급했다. 개인적 차원에서 유교적 가치와 가정에 대한 중시 등을 언급한 응답자가 많았다.

- 문 21 - 경제협력이나 안보협력, 정치적 교류 등의 활동 외에, 한·중·일의 다자적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적 협력 방안이 있겠습니까?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아젠다와 방법을 설명해주시시오.

○ 경제협력이나 안보협력, 정치적 교류 이외에 한중일의 다자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적 협력 방안에 대해, 가장 많이 제시된 것은 환경 교류(11인)였으며, 그 다음으로 영화, 스포츠 및 드라마 등을 통한 문화 및 예술교류(10인), 청소년을 비롯한 인적 교류(7인), 교육 및 학술교류(6인), 긍정적인 언론 및 홍보체제(4인), 해상안전 협력(2인) 등의 순이었다. 그 밖에 기타 의견으로 한중일 공동의 뿌리 찾기(尋根問祖, 공동의 귀속감 찾기) 활동, 동북아 공동문화 기초의 역사적 형성, 법률 교류 등의 의견이 있었다.

○ 인적교류, 문화교류, 교육교류 등을 복합적으로 제시한 의견들이 많았다. 청소년+문화+교육의 결합을 통해 동북아시아공동체의 기반이 될 인적 자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보여주었다.

○ 구체적인 방안으로 중-일-한 예술 페스티벌, 중-일-한 문화예술교육포럼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동양특색의 문화 브랜드를 개발하고 동양문화의 매력과 감화력을 보여주는 문화소프트파워 전략의 실시, 3국 관광 실무협력 강화를 제시한 의견도 있었다.

○ 기타 의견으로 중국의 정치 전환과 민주화의 성공을 동북아공동체 건립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

• 문 28-29: 한국에서의 혐일, 혐중 수준

〈표 3-16〉 한국의 혐중과 혐일 수준

한국의 혐오 수준	한국에서의 혐중	한국에서의 혐일
(1) 매우 심각	6 (30.0%)	2 (10.0%)
(2) 어느 정도 심각	8 (40.0%)	7 (35.0%)
(3) 그다지 심각하지 않음	5 (25.0%)	10 (50.0%)
(4) 전혀 심각하지 않음	0 (0.0%)	0 (0.0%)
* 심각함 = (1)+(2)	14 (70.0%)	9 (45.0%)
* 심각하지 않음 = (3)+(4)	5 (25.0%)	10 (50.0%)
합계	20 (100.0%)	20 (100.0%)

○ 응답자들은 중국과 일본에 대한 혐오에 대해 한국의 경우 혐일보다는 혐중이 더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혐중 현상은 심각하다는 것이 70%로 압도적인 반면, 혐일은 심각하다는 의견이 45%,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이 10%로 거의 비슷했다.

• 문 32-33: 중국에서의 혐일, 혐한 수준

〈표 3-17〉 중국의 혐한과 혐일 수준

중국의 혐오 수준	중국에서의 혐한	중국에서의 혐일
(1) 매우 심각	0 (0.0%)	3 (15.0%)
(2) 어느 정도 심각	2 (10.0%)	11 (55.0%)
(3) 그다지 심각하지 않음	16 (80.0%)	5 (25.0%)
(4) 전혀 심각하지 않음	1 (5.0%)	0 (0.0%)
* 심각함 = (1)+(2)	2 (10.0%)	14 (70.0%)
* 심각하지 않음 = (3)+(4)	17 (85.0%)	5 (25.0%)
합계	20 (100.0%)	20 (100.0%)

- 중국에서의 협한과 협일에 대해 응답자들은 협일이 협한보다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협한은 심각하지 않다고 여기는 의견(17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협일은 심각하다고 여기는 의견(14인)이 훨씬 많이 나타났다.

• 문 30-31: 일본에서의 협한, 협중 수준

〈표 3-18〉 일본의 협한과 협중 수준

일본의 협오 수준	일본에서의 협한	일본에서의 협중
(1) 매우 심각	3 (15.0%)	6 (30.0%)
(2) 어느 정도 심각	8 (40.0%)	9 (45.0%)
(3) 그다지 심각하지 않음	8 (40.0%)	4 (20.0%)
(4) 전혀 심각하지 않음	0 (0.0%)	0 (0.0%)
* 심각함 = (1)+(2)	11 (55.0%)	15 (75.0%)
* 심각하지 않음 = (3)+(4)	8 (40.0%)	4 (20.0%)
합계	20 (100.0%)	20 (100.0%)

- 일본의 협한, 협중 인식에 대해 응답자들은 협중이 협한 보다 더 심각하다고 느꼈다. 일본의 협한은 심각하다는 의견과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이 비슷한 반면, 일본의 협중은 심각하다고 느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 문 34 - 중국에서의 “협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히 서술해 주십시오.

- ① 민간교류의 강화, ② 언론의 긍정적 보도를 통한 호의적 여론의 형성, ③ 민간소통채널의 지속, ④ 일본 우익의 위험성 인식, ⑤ 일본과 영토, 역사문제의 제대로 된 처리, ⑥ 경제문화 교류의 촉진 등등 협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가 취해야 하는 조치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의 역할은 경제와 정치에 집중되어 있었고, 시민사회의 역할은 계속적인 교류의 지속과 증대, 그리고 언론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강조에 집중되어 있었다. 정부와 비정부 기구의 역할분담을 통해 다층적 차원에서의 협력이 협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협일 문제의 원인은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게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일본

우익의 역사문제 인식을 이유로 들었다. 중국에서의 혐일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일본이 위안부, 강제노동, 역사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사죄하고 배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도 민간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 혐일 문제 해소를 위해 중국정부가 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그것을 대외적 방안과 대내적 방안으로 간추릴 수 있다. 대외적으로 중국 정부는 일본과 정치적 관계를 정례화하고 공공외교를 통해 관계를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역사문제를 이슈화하지 않고 조어도 영토분쟁도 약화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한중일 FTA를 추진하고, 군사적 대화 또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대내적으로 중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중국이 부국(富國)에서 강국(強國)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에 도움이 된다는 점, 중국의 평화적 부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일본과 공동으로 미국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 등을 설명하여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혐일을 양산하는 TV나 영화 등에 대한 심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중국 언론 또한 일본을 객관적이고 우호적으로 보도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일본의 무상원조 등 중국에게 도움을 주었던 일본 정부의 노력을 공개해야 한다고 보았다.

- 결과적으로 중국 내 혐일 감정의 해소는 한중일 FTA를 비롯한 경제무역 분야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한중일 안보협력 등 현실적 필요에 의해 제기되었다. 감정보다는 이성애 호소함으로써 현실적 이익을 꾀하려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역사문제와 영토분쟁에 있어서 일본에게 책임이 있다고 느끼면서도 그 문제를 뒤로 제쳐놓고 이성적인 해결방안을 선호했다.

- 문 35 - 한국에서의 “혐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히 서술해 주십시오.

- 한국의 혐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정치적 방안으로는 한중 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지속하는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한국의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분쟁 사건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공

외교 방안으로 유학을 통해 친중국 인재를 양성한다거나, 중화문화의 영향력을 강화하거나, 한국의 중국학을 지원하는 인문교류의 강화를 심화하는 등의 방안이 있었다.

- 중국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교류를 협중해결을 위한 중요한 루트로 보는 의견들이 많았다. 특히 민간교류의 심화를 통한 민심상통을 위해서 민간관계와 정치관계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또는 갈등의 소지가 많은 정치관계와 그렇지 않은 경제관계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 신중론 입장에서 협중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분야에서 나타나는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파악하여 협중의 원인을 우선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이유로 한국의 협중은 일본의 협중에 비해 심각하지 않고 그 내용과 본질도 다르기 때문이라는 입장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들은 한국정부, 언론, 시민사회의 노력이 협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 한국의 협중문제를 단순히 중한관계로만 파악하지 않고 제3자와의 관계, 즉 미국이나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들은 한국의 협중문제는 한중 양국이 제3자의 방해로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 소수 의견으로 한국의 협중 문제는 한국의 국내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 문 36 - 중국에서의 “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히 서술해 주십시오.
- 중국에서의 협한 문제를 제3자에게서 찾는 견해가 많았다. 특히 북한과 미국이 그 대상이며, 그중에서도 사드배치를 그 이유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사실 중국의 협한은 혐일과 달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나 최근에 사드배치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긴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입장은 적극적 입장과 소극적 입장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적극적 입장에서는 중국의 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한국의 전략적 관계를 심화하거나 또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극적 입장에서는 정치문제와 기타문제를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3자 요인설 다음으로 많은 견해는 경제적 협력을 위주로 한중 간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한 FTA 협정은 물론이고 정부차원과 비정부차원에서의 협력을 모두 포함한다. 나아가 청소년 교류, 학술적 논의, 유학생 상호파견 등 전방위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 신중론 입장에서는 한국의 혐중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혐한도 그 배경, 원인, 효과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양국 언론의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할 것을 제기했다.
- 다른 의견으로 중국 정부와 언론은 한국 인터넷상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한국 정부의 태도가 아니라 일부 네티즌의 개인적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국의 남북 분단의 역사, 일본 식민지 역사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다른 의견으로 중국의 혐한 문제는 ‘합한(哈韓)’ 문제처럼 실제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는 중국의 젊은이들이 이성적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문 37 - 일본에서의 “혐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히 서술해 주십시오.
- 일본의 혐중 원인을 살펴보면, 요우커 등 일부 중국인의 개별 행동을 제외하고는, 영토분쟁, 역사인식, 중국발전에 대한 우려, 중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이해 부족, 언론의 왜곡, 일부 정치인들의 실언과 망언 등 대부분의 원인이 일본 측에 있다고 보았다.
- 일본의 혐중 문제는 기본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답한 전문가 이외에 대부분이 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영토, 역사, 이데올로기 등의 문제가 난제라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해결할 수 없다면 정치문제와 다른 문제들을 구분해 별개의 문제로 다루거나, 민간교류를 확대하여 일본의 혐중 문제를 우회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 중국의 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험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치, 외교, 경제, 문화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제교류→민간교류→민심상통의 순으로 경제적 교류가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상호 간의 인식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해결은 민간교류의 확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정치교류로 나아가는 아래에서 위로(bottom-up)의 협력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영토나 역사문제에서 해결을 시도하고, 경제협력을 하는 등 위에서 아래로(Top-down)의 협력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일본의 험중은 개인 차원에서의 혐오가 아니라 중국 대 일본이라는 정부 차원의 문제라는 것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근원은 일본의 우익 지식인에게 있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 자세가 있다면, 일본 사회의 험한 현상은 어렵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6. 한·중·일 문화적 협력방안

- 해당문항: 문 38-41, 문 21, 문 25
- 문 38 - 동북아 민간교류 전망: 정부 및 국가 차원에서의 갈등과 달리, 사회 및 문화, 관광 차원에서 한·중·일의 상호 교류는 최근 대단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한류나 일본 방문객의 폭발적 증가 등). 이러한 민간 및 개인차원에서의 동북아시아 내 교류의 전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표 3-19〉 동북아 민간교류 전망

동북아 민간교류 전망	빈도	%
(1) 크게 증가할 것	6	30.0%
(2) 어느 정도 증가할 것	13	65.0%
(3) 어느 정도 감소할 것	0	0.0%
(4) 매우 감소할 것	0	0.0%
* 증가전망 = (1)+(2)	19	
* 감소전망 = (3)+(4)	0	0.0%
합계	20	100.0%

- 정부 차원에서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 내의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는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 문 39-40

- 증가

- 민간교류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문화적 정체성, 지리적 근접성을 가장 많이 들었고, 다음으로 경제협력의 증대와 경제사회발전 수준의 격차 감소, 한류에 대한 열기, 일본제품의 인기, 중국 관광의 매력 등 교류의 필요성 증가를 들기도 했다. 또한, 민간교류는 자연적인 발전과정이며 역사적 필연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현실적 차원에서 민간외교의 증가, 한중일 관계개선, 교통 통신수단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중국의 경제적 역량의 성장, 재정적 지원 등도 그 이유로 꼽기도 했다.

- 소수 의견으로 중국인과 한국인의 일본여행은 매우 증가했지만, 일본인의 중국여행은 감소해 불균형적인 발전 양상을 보임을 지적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 감소

- 무응답을 제외하고 전원 민간교류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 문 40 - 민간교류와 동북아문화공동체: 이러한 민간 문화 교류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3-20〉 민간교류와 동북아문화공동체

민간교류와 동북아문화공동체	빈도	%
민간 문화교류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18	90.0%
민간 문화교류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은 큰 상관이 없을 것이다	2	10.0%
합계	20	100.0%

- 민간의 문화교류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 문 21 - 경제협력이나 안보협력, 정치적 교류 등의 활동 외에, 한·중·일의 다자적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적 협력 방안이 있겠습니까?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아젠다와 방법을 설명해주시시오.

○ 긍정의견:

- 중국·일본·한국 공동의 뿌리 찾기 활동, 3개국이 연합하여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초국형 인재 육성, 3개국 스모그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동북아 공동문화 기초의 역사적 형성, 현재 상황, 미래 발전 등에 대해 효과적인 협력연구체제 및 보급·홍보체제 구축, 인적 왕래·교육 교류, 영화·TV 작품 등의 협력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부정의견:

- 단순한 민간문화 교류만으로는 정부 관계를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간 관계 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부정적 입장이 있었다.

- 문 25 - 동북아문화공동체를 추진한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의 역할

- 정부가 경제 및 문화교류를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들에 있어서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로 제시된 것은 정충설계 강화, 즉 국가 간 협력 체제 및 기구 마련, 유관 기관의 지도 및 감독, 정책 및 자금 지원, 민간의 문화교류를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고 대학에 독자성을 부여하는 등의 필요조건 마련이었다.
- 소수 의견으로 정부는 오히려 문화교류에 있어서 소극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정부는 지방정부나 비정부조직, 민간조직 등에게 자유로운 정치적 공간을 제공하여 문화 교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시민사회의 역할

- 응답자들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즉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지방정부·민간단체·대학·싱크탱크·언론·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 협력의 구체적 의제로 교육교류, 인문교류, 언론교류, 영화·드라마, TV 프로그램 등 문화교류, 환경교류, 예술교류, 과학교류, 법률교류 등이 제기되었다.
-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었으며, 민간의 교류는 정부 간 교류와 같은 전통적 방식이 아니라 유연한 방식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호 간의 인식과 이해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초국가적으로 연계하여 초국가적 문화컨텐츠 산업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민간은 민족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문 44 - 한중일 문화교류의 방향이 대체적으로 인문교류, 인문유대, 인문공동체의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가설할 때 한중일 문화교류는 이 3자 중의 어느 단계에 위치한가?
- 한중일 문화교류가 인문교류, 인문유대, 인문공동체의 발전단계 중 어디에 속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이 인문교류단계라고 밝혔다. 그것은 응답자들이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해 인문교류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계속해서 피력했던 점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아직은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따라서 인문유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류를 질적으로 제고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 문 45 -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형성과정에서 그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인가?(예를 들면 유교문화, 한자 등) 그 가능성과 한계를 간단하게 평가하세요.
-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과정에서 핵심적 요인으로 가장 많이 제시된 것은 유교문화와 한자이다. 그러나 그것을 중심으로 한 문화공동체 형성에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그것은 유교와 한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다. 즉 지금은 유교의 현대적 전환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 유교문화에 대한 현대인의 평가가 부정적이라는 점, 지역일체

화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유교문화의 현대화, 현대문화와의 접목, 각국 문화에 대한 개방과 포용 등을 통해 문화적 혁신을 이룬다면 동북아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지하는 견해 또한 있었다.

- 공동의 가치관을 핵심적 요인으로 제시한 의견은 그것이 매우 힘들거나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유교, 한자 등의 전통적 문화를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방문화를 포용한 다원적이며 개방적 문화를 기초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며, 유교, 한자 등의 일방적인 의제가 아니라 문화공동체를 추진하는 주체들을 고려하고, 그들이 직면한 사회, 문화적 과제를 고려하여, 상호 교류를 통해 차이점을 극복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 문 46 -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형성과정에서 누가 그 주체로 되어야 한가? 예를 들면, 정부, 시민사회, 개인 등 있는데 바람직한 참여비중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그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세요.
- 응답자들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과정에 있어서 정부, 시민사회, 개인이 모두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했고, 정부-시민사회-개인 순이었으나, 그 비율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보였다.
- 정부의 비율을 높게 본 응답자는 정부가 제도적,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고, 그러한 정책방향이 국민의 생각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들은 정부가 시민사회와 개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매개자 및 주체로서의 역할에 주목했다. 중국의 경우는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므로 그렇다는 의견도 있었다.
- 다음으로 시민사회의 비율을 높게 본 응답자는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야 공동체형성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정치적 요소를 배제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출발했다. 더욱이 문화 소비자는 시민사회와 개인이므로 이들이 주체가 되어야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다는 생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관여나 개인의 무분별한 독단 사이에서 시민사회가 완충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다.

- 마지막으로 정부, 시민사회, 개인 모두 주체라고 보는 응답자들은 이들의 역할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공동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큰 틀에서 법규와 제도를 마련하고, 시민사회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문화공동체를 추동하고, 개인은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지속성을 제고시킨다는 생각이다.

• 문 47 - 동북아문화공동체와 동북아인문공동체 중 더욱 현실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 동북아문화공동체와 동북아인문공동체 중 더욱 현실적인 것에 대해 인문공동체-문화공동체 순이었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인문공동체가 더욱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인적 교류 규모가 크고 증가하고 있다는 점, 문화공동체와 같이 가치관을 기초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문화에 대한 이해는 서로 다른 반면 인문에 대한 이해는 서로 비슷하다는 점, 인문영역의 폭이 더 넓다는 점, 인문은 현대 사회 거버넌스의 기초로서 보편성과 시대성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문화공동체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문화라는 개념이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라는 것, 동북아는 문화적으로 강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인문공동체는 문화공동체의 하위범주라는 점, 인문공동체보다 문화공동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라는 점, 동북아 대화와 협력의 공공의 플랫폼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이 밖에 소수 의견으로 문화공동체나 인문공동체나 개념상 차이가 없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또 인문공동체나 문화공동체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보다 현실성이 있는 경제, 무역 연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7. 소결

○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촉진요인(1): 경제적 이해관계

중국 전문가들에게 안보공동체나 문화공동체는 필요한 것이라는 점은 모두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수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회의적이었다. 그들은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한·중·일 FTA와 같은 경제공동체를 우선 수립해 경제적 교류를 증대시키고, 뒤이어 사회문화적 교류를 증대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민심상통을 꾀하는 것이 더욱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기본적으로 이익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한·중·일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들이 공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면 동북아공동체가 가능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대부분 한·중·일이 공통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론했다. 이것은 이익공동체에서 운명공동체로, 운명공동체에서 책임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촉진요인(2): 환경문제

환경문제는 중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환경문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중·일이 환경문제에 있어서 협력해야하며,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협력을 전개해 나가고, 그 성과가 있다면 한·중·일 상호간의 인식이 호의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환경문제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중국 전문가들이 동북아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정치, 안보, 문화와 같은 이미 갈등이 두드러진 분야가 아니라 우회적으로 대중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현실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분야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장애요인(1): 이데올로기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 일본과 달리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데올로기의 차이는 과거 냉전시대의 대립의 잔재로서 아직도 여전히 한국과 일본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로 인해 중국과의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있다.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중국 전문가들은 그러므로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이데올로기와 같은 정치적 요인을 강조하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 외교의 기본 입장은 이데올로기와 인권 등의 문제는 내정간섭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장애요인(2): 서방 영향력

동북아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 걸림돌이 되는 이데올로기, 역사인식, 영토분쟁의 시작은 냉전과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중국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냉전 이후 세계가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분열되면서,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누적되었고, 그것이 현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냉전으로 형성된 대결구도는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에서 비롯되었지만, 이질적인 이데올로기의 상호침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에는 그것이 동북아에서 여전히 첨예하고 민감한 문제로 잔존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것은 혐중, 혐일, 혐한이라는 사회현상으로 표출되어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장애요인이 되었다. 중국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한 것은 이 중에서도 일본 내의 혐중 현상으로,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 일본 정부와 언론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결국은 동북아 각국이 서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현재의 실질적 이익을 고려하고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안보관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학자들의 눈에는 근대 이후 탈아시아를 주장해 온 일본은 아시아의 문제를 아시아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국가로 비쳐지고 있다.

○ 중국 전문가의 동북아공동체 인식: 복합적 개념으로서의 동북아공동체

중국의 전문가들은 동북아공동체가 지리적 개념이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했지만, 이와 더불어 문화적 개념과 함께 인식하는 경향이 컸다. 그러나 지리적 개념이 주(主)이고 문화적 개념을 부(副)로서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순수하게 문화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동북아라는 개념 자체가 중국학계에서는 최근 유행한 낯선 개념이다. 이전에는 동북아, 동아 등의 개념보다는 동양, 서양 등의 개념을 더 선호했는데, 한국과의 교류와 협력이 빈번해짐에 따라 한국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북아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기본적으로 중국학계는 동북아라는 개념을 지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협의로 보면 중국, 한국, 북한을 포함시키고, 광의로 볼 때 일본과 몽골을 추가한다. 한중관계의 측면에서는 동북아라는 개념을 선호하지만, 한국 이외에 일본, 몽골 등과 같은 나라를 포함시킨다면 동아시아라는 보다 확장적 개념을 더욱 선호한다. 이것은 동북아 개념이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동질성과 친연성을 심정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유교문화, 한자 등 전통적 논의의 약화

중국학자들이 유교문화나 한자 등 전통적인 요인들을 동북아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의 하나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사회적·역사적 사실로서 인정하고 있을 뿐 그것을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북아가 과거 수천 년간 문자, 문화, 가치관을 공유해왔으나, 현재 이데올로기, 역사 인식, 영토 분쟁 등 정치적 요인들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학자들은 자국 문화를 내세워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추진하는 것이 무리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보다는 타협이 가능한 경제적 협력과 교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실용주의적 입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공동의 정체성 형성은 경제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면서 상호신뢰를 축적하고 그와 더불어 인문 및 문화교류를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낙관주의적 자세를 보여주었

다. 대부분의 중국 전문가들은 동북아의 협력이 가치나 문화를 위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고, 호혜적 이익 속에서 교류와 협력이 증대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우선 지리적인 지역일체화 이후에 비로소 공통의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는 단계적 통합론에 호의적이었다.

○ 아래에서 위로의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의 구축

다수의 중국 전문가들은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보다는 시민사회와 개인의 역할을 보다 더 강조했다. 정부의 역할은 시민사회가 작용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라는 큰 틀을 만들고 시민사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실제로 동북아공동체 형성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시민사회라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 이것은 동북아공동체는 위에서 아래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 중심의 교류와 협력은 민족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 사고에서 탈피하기 어렵고, 현실 정치와 이데올로기 등 동북아의 갈등을 양산하는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민간 중심의 교류와 협력은 정치와 별개로 여러 가지 채널과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초국가적 차원에서의 협력을 유도하고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정부의 참여는 간섭과 억지로 보일 수밖에 없고, 현실 정치에서의 대립과 갈등과 모순적으로 비치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 형성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초국가적이고 자발적인 교류와 협력은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최대한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정치적 이슈들을 배제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물론 단순히 민간의 교류가 증가한다고 해서 동북아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여 현실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중국의 동북아공동체 논의의 시사점

○ 열린 지역주의를 표방한 문화공동체

중국이 인식하는 동북아문화공동체의 범주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 특히 중국전문가들은 지리적 개념이 주(主)이고, 문화적 개념을 부(副)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일단 한반도, 중국, 일본이 중심이고 여기에 몽골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동북아문화공동체는 열린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표방하되 초기에 지역의 범주를 확대하기 보다는 인적교류와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공동체의 내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중심이 된 동북아문화공동체의 내포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역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결정하고 설치한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을 문화영역을 넓게 포괄하면서 상위정치(high politics)의 갈등을 해소하는 기반이 필요하다. 또한 Track 1.5 차원에서 진행되는 <한중일 공공 외교 포럼>을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

○ 미래비전과 목표를 위한 원칙 확립

동북아문화공동체 건설을 논의할 경우, 미래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태적(static)으로 간혀있는 개념이 아니라, 동태적(dynamic)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즉 현실의 조건에 매몰되어 현상을 해석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동안 동북아문화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실험을 모색했으나, 제도화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합의구조가 높고 선이후난(先易後難) 프로그램을 발굴해 점진적, 점증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손에 잡히는 체감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과거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는 시민사회의 성격이 상이했기 때문에 '시민 없는 시민연대'라는 한계가 있었고 정부주도형 사업으로 인해 동북아 시민들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것은 동북아 시민들의 문화공동체에 대한 정체성 확립의 한계가 되었다. 넷째, 미래 청년세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일이다.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넘어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교류확대과정에서 국제 감각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 등 한·중·일 대학생들의 교류협력 등의 성과를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양한 선도프로그램(pilot project)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청년,

노동, 복지, 환경, 교육, 여성 등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스케일이 큰 선도 프로그램을 초기에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상호주의 입장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문화는 차이가 있을 뿐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류를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핵심요소로 간주하기 보다는 일류(日流)와 중류(中流)에 대한 상호 수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동북아플러스공동체를 통한 지역 내 교집합 모색

중국은 기존의 고립주의 외교노선 대신 적극적으로 다자주의, 지역주의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된 이후 동북아시아에서의 운명공동체 논의를 발전시키는 한편 동북아시아 문화정체성, 동양문화의 가능성 등을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문명형 국가(civilizational state)’라는 특징을 강조하는 등 문명, 문화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외교담론의 변화는 일시적이라 보다는 적어도 국면 내지 구조(structure)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가운데 국경이 재탄생하고 있다. 특히 국경의 도시는 과거와는 달리 국가를 구획하는 경계가 아니라 새로운 소통의 관문이 되고 있다. 비록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타자(他者)에 대한 수용도가 낮고 수평적 사고도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초기단계에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일본도 이 논의과정에 우회적, 간접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일본은 기존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로 바꾸면서 중국과 새로운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정부의 동북아플러스공동체 구상과 긴밀한 연계지점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획과 프로그램이 중첩적으로 진행될수록 국가중심주의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경에서의 인프라 건설, 경제 건설 및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인적교류와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교집합을 모색할 경우 동북아문화공동체의 기반이 확대될 수 있다.

○ 복합적 정체성의 모색

중국은 종합국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양 대 서양이라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유럽연합과 같은 동북아 고유의 문화공동체를 지양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동북아 다자협력의 확장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1세기 들어 양안(兩岸)운명공동체, 주변운명공동체, 인류운명공동체 등의 담론을 확산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적 전지구화

(sinic-globalization)라는 흐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가 중심주의, 중화중심주의가 상대화되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문화의 상호 침투와 미래에 대한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실제로 중국이 주장하는 인류운명공동체의 영어표기도 ‘공동체(community)’가 아니라 ‘공유된 미래(shared future)’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역사적 기억, 천하체제, 조공체제 등의 한계 때문에 초기에는 주권에 기초한 동북아문화공동체를 기반으로 삼았다. 이것은 유럽과 달리 역사적 기억이 만들어 낸 주권에 대한 열망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복합정체성(hybrid identity)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이면서 동북아인 정체성(Northeastic)으로 생활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 동북아 전체의 화학적 결합

동북아문화공동체 인식과 정책에서 중국은 기존의 한자와 유교와 같은 물리적 경계를 넘어 동북아시아 전체의 화학적 결합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에서 향후 동북아문화공동체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책임(안보) 안보공동체, 이익(경제)공동체, 인문(문화)공동체를 긴밀하게 결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이익을 중시한다는 점에 착안해 한중일 FTA 등 지역경제협력이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는 현실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중국에서는 자국 문화를 내세워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추진하는 것이 무리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타협이 가능한 경제적 협력과 교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실용주의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공동의 정체성 형성은 경제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면서 상호신뢰를 축적하고 그와 더불어 인문 및 문화교류를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우선 지리적인 지역일체화 이후에 공통의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는 단계적 통합론에 호의적이었다. 따라서 인문공동체가 지닌 지나치게 포괄적인 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 여성, 노동, 복지, 디아스포라 등의 다양한 공동체를 실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에서도 시급한 환경문제는 대중이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가시적 성과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을 지양하고 동북아 시민과 지식인들이 주체가 되어 지(知)공동체, 시민공동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동북아시아 길의 가능성 탐색

동북아공동체 논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가시권에 접어들 경우 ‘북한변수’는 하나의 촉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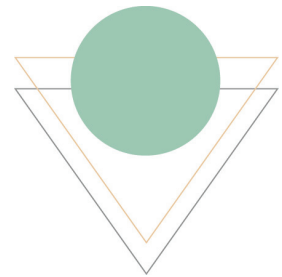
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즉 남북관계가 발전하면서 평화공존이 제도화될 경우 중국과 일본 모두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에서 북한을 포함시킬 유인이 크다는 점에서 북한체제의 연성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동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연성화도 나타나면서 상호 침투성과 개방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중·일 및 동북아에서의 이데올로기 차이가 협력의 장애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가 주권의 화학적 결합이 아니라는 점에서 내정간섭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면서 교집합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과도한 서구의 영향력을 동북아시아인이 함께 제한하는 훈련도 필요하다. 미국요소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길(Northeasten Way)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아세안에서의 실험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 동북아 공동 대학의 설계

동북아문화공동체를 위한 선도프로그램으로 동북아 공동의 대학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양자간 교류협력 프로그램은 이미 충분한 제도의 틀을 갖추고 있다. 이를 위해 학제와 학기의 통일을 통해 교육소비의 실험이 필요하다. 이를 지식사회가 뒷받침하기 위해 동북아지(知)공동체를 함께 가동해 닫힌 민족주의를 버리고 열린 공동체 개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면서 일종의 바텀라인(bottom line)을 만들 필요가 있다.

○ 시민이 주체가 된 공동체

정부주체를 넘어 시민과 지방과 의회 그리고 시민사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동북아문화공동체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 정부는 매우 중요한 플랫폼이다. 현재, 한중 간, 한일 간, 중일 간 자매도시가 촘촘하게 엮여 있다. 이를 국가를 넘어 지역을 통해 재설계하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서울-베이징-도쿄를 결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를 활용하면서 현안별로 갈등이 나타나는 정부간 교류를 보완하기 위해 의회교류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가칭 동북아의원연맹 등을 구성해 의회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역할은 시민사회가 작용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라는 큰 틀을 만들고 시민사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실제로 동북아공동체 형성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민사회이다. 이런 점에서 비록 성격을 달리하지만, 이슈별, 영역별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동북아 공동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제4장

일본의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

제4장 일본의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

제 1 절 일본의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

1. 지역공동체 논의와 문화공동체

가. 지역공동체 논의의 등장과 지역 개념

전후 일본의 아시아 지역주의 움직임은 ‘일본해-아시아’와 ‘오세아니아-태평양’을 잇는 양 갈래의 권역에서 제기되었다. 지역 개념을 나타낼 때에도 ‘동북아시아’ 용어가 아닌, ‘북동아시아’ 또는 ‘동아시아’ 용어가 쓰인다. 여기에는 아시아 지역의 역사적 갈등과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일본 사회의 질서 관념 및 국가 전략의 방침이 투영되어 나타난다. 그 관념과 용어는 일본의 패전과 아시아 냉전으로 이념적 갈등을 겪으면서도, 세계적인 데탕트와 탈냉전의 시대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2000년대부터는 글로벌리즘의 조류 속에서 아시아 지역 통합의 명분과 필요성이 확장되면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기존의 권역 개념들이 서로 융합되고 확장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유럽경제공동체(1958)에 이어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가 결성된 1967년, 베트남전쟁 중인 아시아에서 새로운 지역주의 개념과 조직이 태동한다.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5개국이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을 결성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촉발되어 일본에서는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내각

(1964-1972)의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외상이 ‘아시아태평양 외교’를 제창한다. 미키는 자민당 안에서도 대미 자주외교를 견지한 정치가다.

1) ‘환태평양-아시아태평양’ 권역과 APEC의 설립

‘아시아태평양 외교’의 실천 방도로 1975년 일본태평양협의회가 설립되어 ‘태평양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1978년 오히라(大平正芳) 내각은 취임 연설에서 ‘환태평양 연대 구상’을 발표하며, “정치, 군사보다 문화, 경제의 협력”을 중시하는 “유연한 연대”와 “열린 공동체”의 형성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오스트레일리아가 “대국 중심의 기구가 아닐 것”과 “태평양의 섬나라들을 배려할 것”, 그리고 “ASEAN의 입장을 중시할 것”을 조언하였다. 이것을 수용하여 1980년 7월부터 스즈키(鈴木善幸) 내각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물론, 중국과 ASEAN 각국을 방문하였고, 인도네시아의 지지를 얻었다. 1982년에 집권한 나카소네 내각은 “일본과 미국이 태평양을 품고 있는 동맹관계”임을 재확인하면서, ASEAN과 오세아니아를 연계한 ‘태평양경제협력회의’ 등 ‘태평양 공동체’의 제도화를 위한 기구를 창설하기에 이르렀다.¹⁹⁰⁾

1980년대 오히라-스즈키-나카소네 내각의 ‘태평양공동체’ 구상과 외교적 실천이 지속되던 시기에, 중국에서 덩샤오핑 체제의 개혁개방론이 제기되면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이 열렸다.¹⁹¹⁾ 1985년 10월 9일 와세다대학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심포지엄 ‘태평양공동체와 동아시아’가 열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구상’이 전개된 이 회의에는 중국의 연구자들도 참석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과 연대의 발전’을 논의한다. 이후 NIES(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의 ASEAN에 대한 투자와 무역이 확대되면서, 1989년 11월, ASEAN 6개국(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에 한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일본의 12개국이 참가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발족하였다. 중국, 홍콩, 타이완은 1991년부터 APEC에 참가하였다.

2) ‘일본해권-환일본해-북동아시아’ 권역의 교류와 협력

일본에서 ‘북동아시아’ 용어는 동북아 냉전 질서에 대한 대응과 ‘환일본해’ 권역의 경제 교류에서 제기되었다. 1958년 일본외무성이 아시아국의 산하에 북동아시아과(Northeast Asia Division)를 설치하여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 극동 지역까지를 관할하였다. 1960년대 말엽,

190) 増田与, 「日本における太平洋共同体構想の発展」, 峰島旭雄編, 『創設45周年記念シンポジウム「太平洋共同体と東アジア」』(早稲田大学社会科学研究所, 1986), pp. 19~20.

191) 위의 글, p. 20.

ASEAN의 발족에 자극을 받은 일본 사회에서는 정치권과 지식사회 내 혁신 세력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산권과의 경제교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태동한다. 이에 따라 ‘일본해권(日本海圈)’이란 관념이 대두하고, ‘일본해권 경제연구회’도 설립된다.

소련 해체와 중국의 경제개방이 시작된 1980년대 말, 니가타현과 시마네현이 북한, 중국, 소련을 포함한 ‘환일본해’ 국제교류를 추진하였다. 1990년 니가타현은 러시아, 중국, 남북한의 대표를 불러 ‘북동아시아 경제회의’를 주최하였다. 1993년 ‘환일본해 경제연구소’가 설립되어, 북한의 나진·선봉 경제 특구에 대한 투자와 개발도 연구하였다.¹⁹²⁾ 1999년 시마네현은 재단법인 북동아시아 학술교류재단(NEAR 재단)을 설립하고, 시마네현립대학 부설 연구소로 북동아시아 연구센터(NEAR 센터)를 설치하였다.

냉전 붕괴로 확장된 ‘북동아시아’ 교류에서 1992년 중국, 한국, 일본, 몽고, 러시아가 참가한 ‘환일본 환경 협력회의’도 개최된다. 여기에 1993년부터 유엔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가 관여하면서 ‘북동아시아 지역환경 프로그램’이 발족되었다. 격년으로 열린 환경회의에서는 에너지와 대기오염, 에코시스템 관리, 삼림 벌채와 사막화 문제를 논의했고, 1994년에 북한 대표도 참여하였다.

경제 및 환경 협력을 위한 동북아 지역의 연계 활동을 증시킨 와다 하루키(和田 春樹)는 ‘북동아시아’가 아닌 ‘동북아시아’ 용어를 사용하며 새로운 지역주의를 선언한다.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일본에 번역 소개하는 작업에 적극적이었던 와다는 1990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동아일보와 아사히신문이 공동 개최한 ‘동북아시아 협력구상’을 위한 학술회의에서 ‘동북아시아 인류 공생의 집’을 제안하고, 2003년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출판했다. 이 책은 소련 극동, 중국, 남북한, 일본, 미국이 연계된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적 공생과 상호부조를 추구하며 동북아시아 섬들의 네트워크에 주목한다. 타이완, 오키나와, 제주도, 사할린, 쿠릴열도, 하와이섬이 군사기지화 상태에서 벗어나 국가를 연결하고 넘어서는, 다양성과 복합성을 포함한 개방적 연결 거점으로 환골탈태할 것을 기대한 내용이다.¹⁹³⁾

3)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와 ‘열린 아시아’ 개념

동북아시아의 동쪽과 태평양의 서쪽에 위치한 해양국가 일본은 외교정책의 골간에서 ‘아시아

192) 和田春樹, 『アジアにおける開かれた共同体：議論の展開と発展』, 金泰旭·金聖哲編, 『ひとつのアジア共同体を目指して』(御茶の水書房, 2012), p. 20.

193) 和田春樹, 『東北アジア共同の家—新地域主義宣言』(平凡社, 2003). 이 책은 한국어로도 번역되었다. 이원덕 옮김,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일조각, 2004).

태평양' 지역 개념을 견지한다. 2001년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가 제기된 후 북동아시아 용어는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태평양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지역 개념으로 흡수되었다. 그리고 인도 경제의 세계적 성장이 예견되는 가운데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는 인도를 포함하는 '아시아 지역 통합'의 문제로 확장되었다.

1990년대부터 동아시아에서는 사람, 물건, 돈, 정보의 활발한 이동으로 역내 의존도가 높아지는 '시장 유도 지역화'가 현저해졌다. ASEAN은 브루나이에 이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가입으로 10개국으로 확대되었고, 1997년 ASEAN은 창설 30주년을 계기로 한·중·일 3국 정상을 초빙하였다. 이후 ASEAN+3국 정상회의가 정례화 되고, 1998년 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으로 동아시아비전그룹(EAVG)이 발족된다. 1997년 금융위기를 겪게 된 아시아에서도 EU와 북미처럼 '제도 유도 지역화'를 선도함으로써 역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안정적으로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활발해졌다.¹⁹⁴⁾

2001년 11월 EAVG가 동아시아 FTA를 제안한 후, 12월 제5회 ASEAN+3국 정상회의는 보고서 『동아시아공동체를 지향하며: 평화, 번영, 진보의 지역』을 제출한다. 동아시아공동체를 창설하기 위한 정치·경제 분야의 지역협력도 시작되었다. 2003년 베이징 회의에서는 동아시아싱크탱크네트워킹(Network of East Asian Think-tanks)가 발족하였다. 각국의 전문가들은 통화위기 극복과 경제금융 분야의 협력, 농업, 노동, 환경, 정치 안전보장 분야에서 '기능적 협력'의 진전을 협의하고, ASEAN의 자유무역을 동아시아에 확대할 것을 확인하였다.¹⁹⁵⁾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배경에는 2000년대 미국 중심의 글로벌리즘에 대한 견제 의식도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북아 3국이 ASEAN과 더불어 다국간 협력에 동승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졌다.¹⁹⁶⁾ 2000년 중국이 '중국-ASEAN 자유무역지역의 창설'을 서두르자, 이에 대응하여 일본은 2002년 싱가포르와 경제연계협정(EPA)을 체결하고 FTA보다 포괄적인 이국간 조약을 ASEAN 가맹국들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자유무역과 더불어 인재 교류,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의 보호 등 제도적, 포괄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목적으로 한다.

중국과 일본은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에서도 서로 반목하였다. 중국은 ASEAN+3국 중심을 주장하지만, 일본은 여기에 오세아니아와 인도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다. 한국과 중국이 추진하는

194) 東アジア共同体評議会, 『東アジア共同体白書2010』(たちばな出版, 2010), pp. 37~46, 94~95.

195) 위의 책, pp. 93~133.

196) 위의 책, pp. 69~79.

ASEAN+3의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EAFTA)에 대항하여, 일본은 2007년 ASEAN+6의 동아시아 경제연계협정(EAEP)을 제안했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 범위가 ASEAN+3(한·중·일)의 13개국인지, ASEAN+6(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의 16개국인지가 논점으로 부각되었다.

일본은 중국 패권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공조하며, 저성장기·저출산 사회의 활로를 찾는다. 그에 따라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와 ‘아시아-태평양’ 개념은 서남아시아의 인도, 파키스탄을 포괄하는 광역으로 확장되었고, 무역 자유화 논의도 인적 교류와 사회발전을 포괄하는 경제협력 차원으로 격상된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용어와 함께 ‘아시아 지역 통합’이란 용어가 활발하게 사용된다.¹⁹⁷⁾ 일본 외무성은 2001년 ‘아시아국’을 ‘아시아 대양 주국(Asian and Oceanian Affairs Bureau)’으로 개편하였다. 기존의 ‘북동아시아과’는 한국과 북한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중국·몽골과’가 별도로 존재한다. 2006년에는 ‘남부아시아부’를 신설하여 산하에 남동아시아과(ASEAN의 국가들을 담당)와 남서아시아과(인도 및 스리랑카 등을 담당)를 두고 있다.

ASEAN+6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역사적으로 ‘대동아공영권’과 중첩된다는 비판적 지적도 있다.¹⁹⁸⁾ 그러나 아시아에서 공동체 논의는 궁극적으로 일국 패권의 관철이나 배타적 대대관계를 극복하여 글로벌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과 상호 협력의 증진을 지향해야 한다. 그렇다면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미국 및 러시아까지 논의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열린 아시아’ 지역 개념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바람직할 것이다. 아시아 지역 통합의 과제는 정보통신기술과 지식기반이 발전하는 인류 사회의 미래 전망에도 부합하는 내용과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나. 문화공동체를 향한 문화교류의 시작

1) 2002년, 한·중·일 국민교류

1999년 9월 오부치 총리와 김종필 총리의 회담에서 월드컵 축구의 한일공동개최를 합의하고 2002년을 ‘한일국민교류의 해’로 삼았다. 2000년 11월 싱가포르 ASEAN+3국 정상회의에서 그 해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로 각광을 받던 김대중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주도하여, 한·중·

197) 와세다대학 연구팀은 ‘아시아 지역 통합’ 용어를 쓴다. 2019년 1월 28일 현재, 일본국회도서관에서 1992-2018년간 ‘동아시아 공동체’를 검색한 결과 924건, ‘아시아 지역 통합’을 검색한 결과 145건의 자료가 검색되었다.

198) 權寧俊, 『歴史・文化からみる東アジア共同体』(創土社, 2015), pp. 3~4.

일 3국간 ‘교류의 삼각형’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교류의 분야는 한·중·일 경제협력 공동연구, 문화·인적 교류, IT협력, 환경 협력의 4가지였다. 일본의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가 메콩강 유역 개발에 한·중·일이 협력할 것을 제안하여 합의를 이루기도 했다.¹⁹⁹⁾

한중수교 10주년을 기념하는 2002년은 ‘한·중·일 국민교류의 해’로 기획되었다. 일본에서는 월드컵 공동개최를 기념하여 2002년을 ‘한일우호의 해’로 정했다. 이 시기부터 주류 매스컴에서 한류 드라마를 방영하여 한류 붐이 일어난다. 일본 외무성은 한·중·일의 문화 및 인적 교류가 세 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동북아시아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인식을 공유하며, 상호 이해와 신뢰의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번영과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²⁰⁰⁾

일본 문부과학성은 ‘동아시아 과학 및 혁신 영역 구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주도하고자 했다. 그 목적은 동아시아 지역의 연구 개발력을 강화하고, 환경·방재·감염증 등의 공통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다.²⁰¹⁾ 한·중·일 문화·인적 교류를 위해서는 ‘한·중·일 차세대 리더 포럼’, ‘한·중·일 국내강연 포럼’을 실시했으며, 그 후속으로 2012년부터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도 실시했다. 2019년 2월 중에는 일본국제 교류기금의 후원으로 인도와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지역의 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아시아의 차세대 일본전문가 워크숍’을 열흘 동안 실시하기도 했다.

2) 한·중·일 청년 교류와 혐오의식의 맹아

2002년에 ‘한·중·일 영리더 교류’ 프로그램이 2회 실시되었다.²⁰²⁾ 일본 외무성은 중국과 한국의 일본대사관 및 현지 신문사를 통해 일본어 논문 콘테스트를 실시하고 한중의 우수학생 각 41명을 일본에 초빙하여 일본의 정치·경제·문화를 소개하고 홈스테이를 실시하며, 일본 청년들과의 교류회, 우수논문 발표회 등을 개최하였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중국 유학도 늘어나서 한·중·일 젊은 세대의 교육 및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진 상태였다.

일본 외무성은 한·중·일 학생들의 일본어 논문 6편을 홈페이지에 소개했다. 애니메이션과 록페스티벌, 연극제 등의 문화교류, 유학생 지원과 교육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이다.

199) 외무성, “日中韓首脳会合の概要,” <https://www.mofa.go.jp/mofaj/kaidan/kiroku/s_mori/arc_00/asean00/gaiyo_3.html> (검색일: 2019.2.1.).

200) 외무성, “「2002年日中韓国民交流年」とは,” <<https://www.mofa.go.jp/mofaj/area/2002jck/gaiyo.html>> (검색일: 2019.2.1.).

201) 문부성, “平成23年度 文部科学白書, 第8章 国際交流・協力の充実,” <http://www.mext.go.jp/b_menu/hakusho/html/hpab201201/detail/1324676.htm> (검색일: 2019.2.1.).

202) 외무성, “日中韓ヤングリーダーズ交流プログラム,” <<https://www.mofa.go.jp/mofaj/area/2002jck/ylep/index.html>> (검색일: 2019.2.1.).

그 중 2편이 특히 한·중·일 문화권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 어느 일본 여학생은 영국 유학 당시 한·중·일 3국의 학생들이 밥을 지어먹으며 친밀하게 지냈던 경험을 회고하며, 한국이 한자를 부활시켜 영미권의 결속에 견줄 만한 한자문화권을 형성하기를 희망한다. 한 한국 여학생은 서구문화에 대한 반발심으로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형성을 기대한다.

“청년이 문화의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를 시도하면, 동북아시아는 하나의 커다란 문화권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지금까지 여러 구미문화가 들어왔지만 동북아시아에서 그 영향은 표면적이다. 익숙하지 않은 문화를 흉내 내는 것은 구미 문화권에 들어가고 싶은 몸부림일 뿐이다. 청년은 자신이 속한 아시아 문화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²⁰³⁾

2002년 하반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효순이 미순이 사건’을 떠올리면 2003년 한국의 대학생이 구미문화에 반감을 품으며 아시아주의에 경도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짐작된다. 그러나 문화의 경계에서 ‘익숙하고 동질적인 것’에 선을 긋고 ‘이질적인 것’을 배타시하는 태도는 그 지역의 범위가 국민국가로 좁혀질 때, 한·중·일 사이의 갈등으로 재연될 것을 암시한다. 2002년 월드컵 축구의 4강 진출로 승리감에 젖은 한국이 공동 개최국인 일본에 대한 배려 없이 축제의 도가니에 빠졌을 당시, 일본의 인터넷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혐한 의식이 싹트고 있었다.²⁰⁴⁾ 한류도 혐한도 모두 ‘한일 우호의 해’에 싹튼 현상이다.

3) 한·중·일+아세안의 인재 교류

일본의 유학생 수는 1990년대에 51,000명에서 52,000명(고등교육기관) 정도를 유지했다. 그러던 것이 중국의 개혁개방과 동아시아공동체론이 대두하면서 1999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7년 현재 267,042(고등교육기관 188,384/일본어학교 78,668)명이다.²⁰⁵⁾ 2017년 일본의 국적별 유학생 수에서 한국은 베트남, 네팔보다 적은 4위에 머물렀다. 일본과 아세안 국가들의 인재 교류와 경제협력은 현저히 활발해졌다. 2010년대 초반까지 대학가 편의점이나 음식점의 아르바이트생

203) 李孝貞, “韓、日、中の正しい関係と青年の役割,” <https://www.mofa.go.jp/mofaj/area/2002jck/ylep/2_rbn_03.html> (검색일: 2019.2.1.).

204) 혐한의 발생 배경에 대해서는 조관자, “일본인의 혐한의식- ‘반일’의 메아리로 울리는 ‘혐한,’” 『아세아연구』 통권 제163호, (2016), pp. 250~281.

205) 문부성, “国際交流、協力の充実,” 『文部科学白書2017』, p. 388, <http://www.mext.go.jp/b_menu/hakusho/html/hpab201801/1407992_017.pdf> (검색일: 2019.2.1.).

은 한국, 중국의 유학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동남아에서 유입된 유학생을 자주 접할 수 있다.

〈표 4-1〉 2017년 일본의 유학생 수 상위 10개국

국가	유학생수	(전년 2016년 수)
중국	107,260	(98,483)
베트남	61,671	(53,807)
네팔	21,500	(19,471)
한국	15,740	(15,457)
타이완	8,947	(8,330)
스리랑카	6,607	(3,976)
인도네시아	5,495	(4,630)
미얀마	4,816	(3,851)
타이	3,985	(3,842)
말레이시아	2,945	(2,734)
기타	28,076	(24,706)
합계	267,042	(239,287)

출처: 日本学生支援機構「外国人留学生在籍状況調査」, 『文部科学白書2017』, p. 388.를 참조하여 작성

유학생들이 일본에서 취업 비자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실정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일본에서는 IT산업·농업과 건설업·노동집약적인 간호와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기술과 기능, 일본어 소통능력을 가진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는 제2차 아베정권 하에서 60만 명이 증가하여 2017년 현재 128만 명이다. 이 중 실제 외국인 노동자로 활약하는 ‘기능실습생’은 약 27만 명으로 그 체류기간은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2018년 11월 일본은 외국인노동자의 수용 확대를 위해 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단순노동 분야에서의 취업을 인정하고, 숙련 기능공의 경우 가족의 체류와 영주권 부여도 인정했다.²⁰⁶⁾ 하지만 이민 노동자의 자녀를 의무교육에 포함시키려는가의 문제 등 다문화 사회의 공생과 통합의 과제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이민 노동자도 자연히 고령화로 접어들 때 사회보장 책임과 다문화사회의 경비 부담이 모두 일본의 재정적자 문제를 가중시키게 되는 만큼, 고령화 인구감소 사회의 문제를 이민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도 심각하게 제기된다.²⁰⁷⁾

206) 출입국재류관리청, “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及び法務省設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http://www.immi-moj.go.jp/hourei/h30_kaisei.html> (검색일: 2019.2.1.).

207) 경제산업연구소, “人口減少下における望ましい移民政策」プロジェクト,” <<https://www.rieti.go.jp/jp/publications/nts/14j018.html>> (검색일: 2019.2.1.).

2. 지역공동체와 문화공동체 논의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정권별 지역공동체(문화공동체) 정책(고이즈미-하토야마-아베 정부 시기)

1) 고이즈미의 중층적, 기능적 지역 협력(제1차 아베 정권 시기 포함 2001-2009년)

모리 내각의 뒤를 이어 장기집권에 성공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은 글로벌리즘의 확산 속에서 일본경제의 구조개혁을 서두르고, 9.11테러와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으로 이어지던 동시대에서 미국 주도의 대테러정책과 아프가니스탄 부흥정책 등에 호응하며 일본의 안전보장을 꾀하고자 했다. 일본은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을 위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더해, 동아시아와 중남미국가 사이의 협력을 위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에도 참가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 외교의 기본 방침은 지역 협력의 틀을 개방적, 중층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있다. 이로써 역내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신뢰 구축을 촉진하며, 일본과 동아시아의 안전과 번영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²⁰⁸⁾ 고이즈미 총리는 2002년 평양 방문으로 북일정상회담을 전개하는 등 다국 간 대화 협력을 동북아 외교의 기조로 삼았지만,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와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로 한국·중국과의 외교 마찰은 끊이지 않았다.

2002년 싱가포르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아시아 지역의 다양성과 조화, 포괄적 경제연계 구상을 강조하며, ASEAN+3에 호주와 뉴질랜드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지역 협력의 차원으로 개방하고, ‘역외’인 미국과의 연계도 중시하였다.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에서 일본은 ASEAN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였다. 2003년을 ‘일본-ASEAN 교류의 해’로 선포한 일본 정부는 EPA와 ODA를 통해 동남아시아 개발의 주도권을 선취했다.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에서 아젠다를 선점하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해적, 테러, SARS나 HIV 등의 감염, 해일 등의 대규모 재해를 포함한 안전 보장에서 일본은 ASEAN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했다. 글로벌 사회의 격차로 야기되는 각종 테러와 감염의 위협, 음식물 안전, 지적 재산권 등에 대비하는 문제를 지역공동체의 실천적 의제로 삼아, ‘중층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능적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것이다.²⁰⁹⁾

208) 외무성, “4. 아시아太平洋地域における重層的な地域協力の推進,” 『外交青書・平成14年版』(2002),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2002/gaikou/html/honpen/index.html>> (검색일: 2019.2.1.).

209) 天兒慧, “総論 アジアの地域秩序と重層的ガバナンス,” 松岡俊二・勝間田弘, 『アジア地域統合の展開』(アジア地域統合講座総合研究シリーズ1, 勁草書房, 2011), pp. 3~23; 외무성, “2003年の国際情勢と日本外交,” 『平成16年版外交青書』(2004),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2004/hakusho/h16/index.html>> (검색일: 2019.2.1.).

일본에서도 FTA와 EPA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 농림수산업 분야의 저항과 노동시장의 개방 및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저성장기 일본 경제의 구조 변화를 피하고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했다. 한국 및 중국과의 FTA 교섭은 정치적, 외교적 장벽에 부딪혔다. 반면 ‘일본-ASEAN 포괄적 경제연계협정’은 2005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08년에 발효되었다. 포괄적 경제연계협정 EPA는 자민당 정권에 이어서 민주당 정권 하인 2011년 인도, 다시 자민당 정권 하인 2016년 몽골과의 관계에서 발효되었다.²¹⁰⁾

2) 민주당 정권(2009-2012) 하토야마의 ‘우애’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는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기지를 현 바깥으로 이설하는 공약 등 대미 자주노선을 제시하고, ‘우애의 정신’과 ‘새로운 공공’에 기초한 동아시아공동체 논의를 전개했다. 역사인식 문제나 안전보장 문제에서도 한국을 제1의 파트너로 삼았다. 그에 따르면, 우애는 자타 인격을 존중하고 공생을 추구하는 바, 그 인격적 존엄성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의 자립을 전제하는 자립과 공생의 사상이다.²¹¹⁾ ‘새로운 공공’이란 지역 주민과 NPO가 주체가 되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권’을 실행하고, 협동조합 방식으로 상호 부조를 실현한다. 하토야마는 ‘우애’와 ‘새로운 공공’을 방재, 교육, 환경, 복지, 개호 서비스 등 사회 공공 분야에 확산하여 시민 주체의 거버넌스를 펼치고자 했다.²¹²⁾

그러나 센카쿠-다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격화되고 미군기지 이설 지역도 찾지 못하자, 진퇴양난에 빠진 하토야마는 총리직을 사임했다. 간 나오토 내각도 3.11 지진과 원전 사고로 사임한 후,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일 EPA 교섭을 진척시키며 통화스와프의 확대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대신, 국내 여론의 무마를 위해 위안부와 관련한 역사문제의 교섭을 회피하려고 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과 천황 사과 요구 발언으로 대응하자, 한일관계는 악화되고 일본에서 혐한 현상이 고조되었다. 한편, 2010년 간 내각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 참가 의사를 표명하고, 2013년 아베 내각에서 참가를 결정한다.

210) 외무성, “日・インド首脳会談 (概要),” <https://www.mofa.go.jp/mofaj/area/india/visit/1010_sk.htm> (검색일: 2019.2.1.).

211) 鳩山友紀夫, “東アジア共同体へ具体的な提案をしよう,” 東アジア共同体研究所 編, 『なぜ、いま東アジア共同体なのか』 (花伝社, 2015), pp. 29~30.

212) 위의 책, pp. 32~33.

3) 아베 정권(2012-현재)의 ‘열린 경제, 열린 아시아’

2006년 제1차 아베 내각은 ‘사과 외교’에서 벗어나 ‘주장하는 외교’를 펼치겠다는 소신을 발표했지만, 현실 외교에서는 신중함을 보였다.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에서는 그 ‘소신 외교’를 실행함으로써 한국, 중국과 갈등을 키웠다. 한국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2006년 아베는 일본이 아시아와 세계의 가교로서 역할을 한다는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도 발표했다.²¹³⁾ 당시 내각부는 20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아시아 게이트웨이 전략회의’를 9차례 실시하고 종합적인 정책안을 내놓았다.²¹⁴⁾ 그 기초는 제2차 아베 내각에서도 지속되었다.

전략회의 보고서는 “아시아에서 일본이 유일하게 거인으로 있던 시대가 끝났음”을 인정하며, “일본이 사회 개방의 속도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인근 각국과의 유대를 강화한다면 아시아 각국과 번영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적고 있다. ‘세계의 성장 센터’인 아시아가 ‘세계에 열린 지역’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이 일본과 세계에 모두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베 내각은 아시아의 성장 활력을 일본 경제로 끌어들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자는 ‘열린 경제’, ‘열린 아시아’ 전략을 취한다. 동남아시아 제국과의 인적 교류 및 이민의 확대도 그 개방 정책의 결과로 나타난다.

아베는 새로운 일본이 세계화 개방에서 견지해야 할 가치를 ‘아름다움, 창조, 성장’으로 표현한다. ‘아름다운 나라, 일본’의 매력을 세계에 어필하며, 새로운 ‘창조와 성장’을 위하여 사람·물건·돈·문화·정보의 흐름에서 ‘열린 경제사회’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기초는 2015년에 ‘쿨 재팬(Cool Japan)’ 전략으로 재정립되어, 내각부 산하에 ‘쿨 재팬 관민 연계 플랫폼’이라는 추진 체제도 꾸려놓았다. 외국인이 일본의 매력으로 느끼는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의 콘텐츠, 패션, 음식, 전통 문화, 디자인, 로봇 및 환경 기술 등 브랜드 문화산업에 주력하여, 그 정보 발신, 해외 상품화, 국내 소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다는 경제성장 정책의 일환이다.²¹⁵⁾

아베가 자국과 아시아의 문화를 견인하는 기본 개념은 ‘매력’과 ‘활력’이다. 일본은 1975년부터 ODA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문화 유지와 진흥을 위한 ‘문화에 관한 무상자금협력’을 실행해왔고, 그 자금으로 2014년부터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 시기까지 개발도상국의 스포츠 육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²¹⁶⁾ 또한 친일파·지일파를 발굴하고 대외발신을 강화하여

213) 수상관저, “第165回国会における安倍内閣総理大臣所信表明演説,” 2006.9.29., <<http://www.kantei.go.jp/jp/abespeech/2006/09/29syosin.html>> (검색일: 2019.2.1.).

214) 수상관저 홈페이지에 ‘아시아 게이트웨이 전략회의’ 방을 만들어 한국어와 중국어 버전까지 게재하고 있다. <<http://www.kantei.go.jp/jp/singi/asia/koria.pdf>> (검색일: 2019.2.1.).

215) 내각부, “クールジャパン戦略,” <https://www.cao.go.jp/cool_japan/about/about.html> (검색일: 2019.2.1.).

216) 외무성, “文化に関する無償資金協力,” 2019.5.21., <<https://www.mofa.go.jp/mofaj/gaiko/culture/mus>>

외교 기반을 확충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일본이해 촉진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²¹⁷⁾ 역사적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라는 오명과 국제적인 고립을 만회하려는 속셈이기도 하다. 동북아시아의 갈등 해소에 소극적인 아베 정권 하에서 아시아를 결속하려는 문화공동체의 이념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아베 정부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2018년부터 ‘포괄적 선진적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CPTPP)’을 주도하는 한편,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공식화하여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정책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성장하는 아시아와 잠재력 넘치는 아프리카, 그리고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시켜, 2대륙과 2대양에 걸친 지역에 차별 없는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고 해양 질서를 ‘국제 공공재’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²¹⁸⁾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1) 법의 지배, 항행(航行)의 자유, 자유무역을 보급하고 정착시키며, 2) 도로 항만 시설(물리적 연결성), 교육과 직업 훈련(인적 연결성), EPA/FTA(제도적 연결성) 등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며, 3) 재해 구제, 해상 테러 대책과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등을 포함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2010년 이후 간헐적으로 지속되던 인도와 일본의 차관급 회의가 2017년과 2018년에 연거푸 열리면서, 북한 위기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남아시아 지역 정세 및 지구 규모의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안보·국방 및 해양·환경 분야의 협력, 방어 장비의 협력, 사이버 우주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 민간 기업의 교류 협력에 대해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과 일본의 민간 기업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구체적인 프로젝트에서 협력하는 사업도 논의 중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자바 Gas-to-Power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방글라데시에서의 LNG to Power 프로젝트가 조정 중이다. 일본-괌-호주를 연결하는 광 해저 케이블 사업은 의견 조정이 마무리되었다.

일본은 중동 지역에 영향력을 관철하려는 미국과 강력한 동맹관계에 있는 만큼, 중동 아시아에서도 경제 교류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찾는다. 일본으로서는 종교·종파와 민족적인 관점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치적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노 외상은 2017년 9월 ‘일본과 아랍의 정치 대화’에서 아랍에 대한 일본의 방침으로 “지적·인적 공헌, 사람에 대한 투자, 장기적인 대응, 정치적 활동 강화”라는 ‘고노 4개조’를 발표했다.²¹⁹⁾

ho/index.html> (검색일: 2019.6.1.).

217) 외무성, “対日理解促進交流プログラム,” 2019.4.9., <https://www.mofa.go.jp/mofaj/p_pd/ep/page23_001476.html> (검색일: 2019.6.1.).

218) 외무성,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に向けて,” 2019.1.,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407642.pdf>> (검색일: 2019.6.1.).

219) 외무성, “第196回国会における河野外務大臣の外交演説,” 2018.1.22., <<https://www.mofa.go.jp/mofaj/f>

문화공동체에 대한 논의와 전망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2017년을 ‘일본·인도 우호 교류의 해’로 정하고 양국에서 활발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문화제, 영화제, 연극제, 세계유산 전시회, 교육 홍보, 사진전 등이 연중 지속되었던 것이다.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할 기획 프로그램으로, ‘일본식 경영에 관한 훈련 프로그램’과 ‘일본 유학 촉진 사업’ 등도 기획되었으며, 인도의 음식과 요가, 축제를 공유하는 민간 교류도 활발해졌다.²²⁰⁾

인도 태평양 지역은 아시아에서 중동을 거쳐 아프리카에 이르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지역이다. 미국과 일본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여 중국에 대해 ‘안보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일본이 중국과의 갈등을 부추기지는 않는다. 동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중국과 대립하지만, 일본 정부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중국과 ‘전략적 호혜 관계’에 입각하여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²²¹⁾ 2018년 10월 이후 한일관계는 ‘2015년 한일합의’의 파기 등으로 악화되었지만, 중일 관계는 개선되었다. 미중 ‘무역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중국도 일본과의 제휴가 필요했다.

나. 문화공동체 대한 이론적 논의

1) 지식사회의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1987년에 일본의 외교, 국제 문제에 대한 초당적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포럼은 2000년에 <글로벌 경제와 아시아의 선택>, 2002년에 <동아시아에서 안전보장협력체제의 구축> 및 <아시아태평양에서 지역협력의 추진 방법>, 2003년에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구상과 일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주최하였다. 일본국제포럼 회장이자 국제정치학자인 이토 겐이치(伊藤憲一)와 도쿄대학 교수 다나가 아키히코(田中明彦)는 2003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동아시아 싱크탱크 네트워크’(NEAT, 동아시아 연구소 연합) 설립 총회에 참석한 후, 일본이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에 적극 대응할 필요에 공감하였다.

2004년 5월 ‘동아시아공동체평의회’(이하 ‘평의회’로 약칭)라는 연구단체가 발족된다. 이토와 다나가가 초대 의장과 부의장이 되어, 일본 내 싱크탱크, 대학, 언론인, 재계인, 정치가, 정부기관 등에 전문가와 지식인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평의회’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직접 추진하지는

p/unp_a/page3_002351.html> (검색일: 2019.6.1.).

220) 외무성, “日印友好交流年記念事業一覧,” 2018.2.22., <https://www.mofa.go.jp/mofaj/s_sa/sw/in/page25_000627.html> (검색일: 2019.6.1.).

221) 위의 외교연설, “第196回国会における河野外務大臣の外交演説.”.

않는다. 그 활동 목적은 동아시아공동체 논의를 위한 지적 연계 및 지적 기반의 강화, 전략적 발상의 공유에 있다. 이토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의 목표로 '복지의 추진, 평화, 번영, 진보의 실현'을 강조하고, "공동체의 구축은 좋은 거버넌스, 법의 지배, 민주주의, 인권, 국제법 등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함을 역설한다.²²²⁾

'평의회' 부의장을 역임하고 국제아시아공동체학회의 대표로도 활동하는 국제정치학자 신도 에이치(進藤榮一)가 주축이 되어 편집된 『동아시아 공동체를 설계하다』(2006)에서는 동아시아 자유무역 경제통상 체제의 구축과 개발협력, 공공정책의 구축과 복환을 포함한 평화안보 체제의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제안하고, '아시아 아이덴티티'의 형성에 대해서도 언급한다.²²³⁾ '평의회'의 활동은 2010년 일본국제포럼 총서 『동아시아 공동체 백서 2010: 동아시아 공동체는 가능한가, 필요한가』라는 책자로 출판되었다. 이 책에서는 분야별 협력 과제로 무역·투자, 금융, 환경·에너지, 정치·안전보장, 문화교류의 5개 항목을 다루고 있다. 문화교류에서는 대중문화의 네트워크 확장과 신흥 도시중간층의 문화 형성에 주목한다.

일본에서는 지역공동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가 관민 차원에서 지속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동아시아공동체' 또는 '아시아 지역 통합'의 논의는 내각부와 외무성, 일본국제교류기금 등에서 진행하는 연구회와 국제회의, 대학과 기업·시민의 교류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아츠미국제교류재단에서도 유학생에 대한 장학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세키구치 글로벌연구회(渥美国際交流財団関口グローバル研究会: SGRA)를 조직하여 동아시아일본연구자협의회 국제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며 연구 아젠다의 개발과 지식인 교류를 재촉하고 있다. 도요타재단의 공동연구 지원, 후지제록스의 유학생 지원과 스미토모재단의 일본현지 조사 지원도 동아시아 지식사회의 활발한 교류와 담론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통합' 논의는 문부과학성이나 연구기금단체의 지원을 받으며 대학의 연구 거점 단위에서 각각의 연구 분야의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는 고령사회와 의료, 복지 문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 과제를 동아시아 단위에서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 주제는 <동아시아의 생활 보장 시스템 및 연금·퇴직금 제도> (2008~2010), <동·동남아시아·태평양 역내의 다원적 국제 이동과 노동 시장의 계층화> (2010~2012), <의료관광에 관한 의학 및 사회과학·지역연구 관점에서 학제 연구> (2011~2012), <국제 의료·개호 교류에

222) 青木保・白井早由里・神保謙・浦田秀次郎・福島安紀子 著, 伊藤憲一・田中明彦 監修, 『東アジア共同体と日本の針路』, (日本放送出版協会, 2005), p. 3.

223) 進藤榮一・平川均 編, 『東アジア共同体を設計する』, (日本経済評論社, 2006), pp. 3~10, 279~332.

관한 의학 및 사회 과학·지역 연구의 관점에서 학제 연구》(2013~2015), 〈인구센서스에서 본 동아시아 8개국의 사회 지각 변동의 비교와 향후 전망〉(2014~2016) 등에 걸쳐 있다.

경제학·경영학 분야에서도 수출의존형 경제의 자유무역화 문제보다 내수주도형 발전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격차, 실업률 상승,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공통으로 대응하고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동북아북지경제공동체’ 논의들이 활발하다. 글로벌 사회 변동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의 사회·관광·기업 연구도 수반된다. 1989년 성립된 ‘아동(亞東)경제국제학회’는 2008년부터 한자문화권 내 다국가 간 복지경제교류와 개발협력 문제를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 결과를 총서로 내고 있다.²²⁴⁾

1998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관한 전문연구와 교육 거점으로 설치된 와세다대학 대학원의 아시아태평양연구과는 2002년부터 5년간 21세기 COE(Center of Excellence) ‘현대 아시아학의 창생’ 프로그램을 수행한 후, 2007년부터 연계 학과와 제휴하여 ‘아시아 지역 통합을 위한 세계적인 인재 육성 거점(Global Institute for Asian Regional Integration: GIARI)’을 만들어 문부과학성의 글로벌 COE 대형 경쟁적 조성자금을 획득하였다. ‘평의회’의 설립에 적극 관여한 국제경제학자 우라다 슈지로(浦田秀次郎)도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였으며, 현재는 현대중국 연구자인 아마코 사토시(天兒慧)가 대표로 활약한다. 연구 분야는 ‘정치통합과 아이덴티티’, ‘경제통합과 지속가능성’, ‘사회통합과 네트워크’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에 ‘아시아 지역 통합 강좌’의 학제적 연구 성과를 전 12권의 책자로 발행하였다.²²⁵⁾

일반재단법인 원아시아(ONE ASIA) 재단의 기부로 아오야마학원대학에서 2013년부터 4년간 ‘아시아 지역 통합 강좌’를 개설하고, 히로시마시립대학 국제학부에서도 2012년 국제연구 특별강좌로 ‘아시아에서 열린 공동체’를 개설하였다. 특히 아오야마학원대학 기부강좌에서 맺어진 성과는 『아시아의 지역 통합을 생각하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한일관계의 악화와 세계적인 보수주의 장벽 강화 등을 목격하며 2017년에 발행된 이 책의 편저자는 아시아 지역 통합을 위해 12가지 실천 과제를 새롭게 제시한다.²²⁶⁾

224) 朴峰寛·劉水生 編著, 原口俊道 監修, 『東アジアの社会・観光・企業 (亜東経済国際学会研究叢書—東北亜福祉経済共同体フォーラム)』, (五紘舎, 2015), pp. 3~6.

225) 와세다대학, 『アジア地域統合講座』全12巻, 〈http://www.waseda-giari.jp/jpn/research/achievements_detail/1113.html〉 (검색일: 2019.6.1.).

226) 羽場久美子 編著, 『アジアの地域統合を考える: 戦争をさけるために』, (明石書店, 2017), pp. 255~256. 민주당 정권의 수상을 역임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의 미국 및 중국의 특명 대사 또는 국제연합의 사무차장으로 활약했던 정치인들, 동아시아공동체협의회와 와세다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과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론을 제기 해온 교수들, 하버드대학의 동아시아 전문가와 한국의 신각수 전일본대사 및 서울대의 박철희 교수 등이 집필자 및 패널리스트로 참가하였다.

즉, 아시아에 싱크탱크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 아시아의 공동체를 한·중·일 및 인도, 아세안 제국으로 넓힐 것, 미국과의 공동관계, 에너지 문제의 공동대응과 아시아원자력공동체의 설치로 원자력을 관리할 것, 한중과 일본이 서로 다리를 놓아 아시아 지역 통합을 리드할 것, 젊은이들의 유학과 교류의 활성화, 음식의 안전·해적물의 대책·감염증 대책 등 비전통적인 안전보장, 한반도의 안정과 통합, 국제연합과의 연계, 안전보장에서 지역 연계의 중요성, 아시아 지표의 실행에 의한 아시아 아이덴티티 형성의 중요성이다.

원아시아(ONE ASIA) 재단의 기부로 히로시마시립대학의 재일 한국인 연구자인 김태욱 교수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김성철 교수가 2012년 5월 히로시마 평화연구소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일본에서 와다 하루키, 도고 가즈히코(東郷和彦), 한국에서 임혁백(고려대 명예교수), 이종철(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이 참가한 회의 성과는 단행본 『하나의 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하며』(2012)에 실렸다.

이 책의 아시아 지역 개념은 한·중·일의 동북아시아와 ASEAN의 남동아시아는 물론, 태평양 연안국인 러시아,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포함한다. 이는 2001년 이후 고이즈미 정권의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로 확장시킨 지역 개념에 부응하는 ‘아시아 공동체’론이다. 지리적, 인위적으로 폐쇄된 ‘배타적 공동체’가 아니라, 글로벌화에 ‘유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열린’ 공동체를 표방한 것이다.

2012년 당시 미일동맹에 기초한 미일군사시스템의 ‘일체화’와 중국 군사력의 강화, 북한의 비핵화와 중일/한일의 영토 분쟁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 시점에서 이들은 광역적인 정치 및 다국 간 안보 협력을 주장한다. 또한 동북아시아 3국에서의 무역량 증가에 따른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와 IT기술의 진보에 따른 기업 간 제휴, 인구 변화에 따른 비숙련 이민노동자의 수용, 대기오염 및 에너지 문제에 대응한 지역 협력이 정치적 갈등과 무력 충돌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아시아 공통의 문화 기반으로 인도에서 발신된 대승불교의 ‘공성(空性)’이 주목된 적도 있다. 이종철 교수는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대승불교 수용에서 이문화의 대화 가능성을 도출함으로써 아시아 문화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보다 광역적인 ‘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들은 “경쟁이 협력을 촉진한다”는 희망적 관측 하에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역사적 지혜를 존중하며, 아시아 공동체의 실현을 기약한다.²²⁷⁾

아시아 문화의 공통 기반인 대승불교의 관점에서 아시아공동체의 지식 기반을 만들어내려는

227) 金泰旭·金聖哲 編著, 『ひとつのアジア共同体を目指して』, (御茶の水書房, 2012), pp. 3~15.

움직임도 있었다. ‘새로운 공공’ 논의와 ‘지역 주권’ 론에 촉발된 2010년, 나라현에서는 현지사 아라이 쇼고(荒井正吾)의 아이디어로 나라시대(710~794)의 헤조(平城=奈良) 천도 13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협회를 발족시켰다.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실행위원회와 각 분야 전문가가 참가하는 ‘일본과 동아시아의 미래를 생각하는 위원회’라는 조직도 설치했다. 이 삼위일체의 조직에서 기획한 사업이 ‘미륵 프로젝트’와 ‘동아시아 미래회의 나라 2010’이다.

이들은 동아시아에 공통된 미래불 사상에서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슬로건을 새로 부여하고, 나라와 아시아를 결합한 조어 ‘NARASIA’로 출판과 선전 활동을 벌였다. 일본문화의 기반은 고대로부터 중국과 한반도를 거쳐 유라시아의 문화까지 다양하게 수용하고 습합(習合)한 역사 속에서 성장했다. 이들은 ‘과거에 감사’하며 새로운 미래 창조를 위해 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중층적으로 포괄하는 문화예술·지식정보 네트워크의 활성화, 환경·재해·의료 문제의 지속적 연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²²⁸⁾

『동아시아 공동체 현장 초안: 실현가능한 미래를 여는 논의를 위해』(2008)라는 책자도 출판되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가 문부성의 지원을 받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과 ‘지역주의 비교연구’를 실시한 성과물이기도 하다. 그 취지문에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공헌하는 ‘동아시아다운 공동체’를 구상하며,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경험을 참조하며 ‘실현가능한 제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역공동체의 기본 사상과 규범을 제시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면, 그 미래는 언젠가 구체성을 띠고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지역공동체 현장이 이상적으로 제시된다고 해도, 그 사상과 규범에 관민이 모두 납득하는 과정과 실천적으로 공유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2) ‘동아시아 문화 이념’의 모색

문화인류학자인 아오키 다모츠(青木保, 전 문화청장관)는 ‘평의회’의 발족 당시부터 참여하며 동아시아 공동체의 문화론을 저술하였다. 평의회가 제출한 제1차 정책보고서에서는 동아시아의 문화적 기반이 언어와 종교의 다양성에 있음을 밝히고, 과거의 제국과 문명 의식을 넘어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옹호할 것을 ‘동아시아의 문화 이념’으로 제시하였다.²²⁹⁾

일본과 ASEAN 국가 사이에서는 문화교류와 문화협력이 강조되었다. 1997년 1월 하시모토

228) 松岡正剛 編著, 日本と東アジアの未来を考える委員会 監修, 『平城遷都1300年記念出版 NARASIA 日本と東アジアの潮流』, (丸善, 2009), pp. 330~335. 후속으로 나온 책 『平城遷都1300年記念出版 NARASIA 東アジア共同体? いまナラ本』, (丸善, 2010)도 참조.

229) 東アジア共同体評議会, 『政策報告書:東アジア共同体構想の現状、背景と日本の国家戦略』, (2005), pp. 11~14.

류타로 총리가 싱가포르에서 ‘일본·ASEAN 새로운 시대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면서 대등한 협력관계 및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과 공생을 위한 다각적인 문화협력을 제기하였다. 그 실현을 위해 일본의 외무성·문부성·문화청·일본국제교류기금의 협력으로 ‘다국적 문화 미션’을 논의하는 회의가 1998년 4월까지 각국의 도시를 순회하며 열렸다. 그 결과 발표한 공동 제안은 1) 지역 아이덴티티의 형성과 상호 이해의 촉진에 기여하는 문화적·지적 교류와 지역연구의 활성화, 2) 문화 전통의 계승·육성을 위한 전략 연구 및 문화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3) 문화 이해의 촉진과 지식의 보급을 위한 인재 육성과 공동체에 뿌리 내린 생활 관습의 재생, 4) 문화의 세계화 대응과 문화 산업과 예술 창조를 위한 상호 협력, 5) 미디어와 정보의 보급에서 문화적 자원과 성과의 효율적 보급이다. 이 제안의 대부분은 하시모토 정권의 붕괴로 실현되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를 거듭하는 동안 ASEAN 국가들의 공동체 의식이 성장하고 참여국이 10개국으로 늘었으며, 장차 동아시아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서 다자간 문화협력과 교류의 기본 방향성이 밝혀졌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주장이다.²³⁰⁾

평의회는 한국과 중국이 ASEAN 각국과 문화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자간 문화 미션’이 생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2009년 문화교류에 관한 회의에서 “다채로운 문화 위에 공통의 아이덴티티를 성립시켜나가는 현상은 이 지역에 ‘완만하고 다채로운 문화공동체’라고 부를 만한 문화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도 나왔다.²³¹⁾ 애니메이션, 만화, 드라마, 영화, 가요와 같은 대중문화가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문화 제전’을 기획하여 미디어로 그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도 논했다.²³²⁾ 한류와 쿨 재팬의 글로벌 확산 현상을 볼 때, 그 가능성은 충분히 기대된다. 평의회는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교류사를 가르칠 교과서의 작성과 교육적 협력 체제 구축도 수행 과제의 하나로 꼽았다. 대학과 연구 기관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문화 및 학술 협력을 적극 수행할 것도 제기한다.²³³⁾

아오키는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일본 문화의 혼종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다양성과 혼성성에 자연선택의 ‘기층 신앙’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동아시아 각국에서 유교, 도교, 불교, 이슬람교라는 큰 종교가 형성될 때부터 민간에서는 토속적인 자연선택이나 정령신앙이 혼성

230) 위의 책, p. 35.

231) 東アジア共同体評議会, 『東アジア共同体白書2010』(たちばな出版, 2010), p. 519.

232) 위의 책, pp. 524~525.

233) 東アジア共同体評議会, 『東アジア共同体構想の現状、背景と日本の国家戦略:政策報告書』(2005), p. 35. <http://www.ceac.jp/j/pdf/policy_report.pdf> (검색일: 2019.6.1.).

되었으며, 오늘날 각국의 민간신앙에 공통되는 자연숭배와 마을 축제에서도 인류평화를 기원하는 보편적 정신이 녹아들게 되었다고 한다.²³⁴⁾

아시아 문화의 다층적 성격으로는 토속적인 기층문화와 고대 인더스·황하의 2대 문명, 그리고 근대 이후 서유럽·아메리카 문화의 혼성성이 지적된다. 아시아에서는 기후, 풍토, 언어, 문자도 다양하며, 식민지의 역사적 경험에서도宗主국의 통치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경험과 기억을 간직한다. 유교문화권과 한자문화권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아오키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현대 동아시아에서 국민국가의 문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의 행위 주체가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80년대 말부터 ASEAN 국가의 경제성장과 글로벌리즘의 진전으로 현대 아시아에 도시 중간층이 성장하여 ‘혼성문화’의 새로운 전개를 이끌고 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상하이와 베이징 등지에 국제적 규모의 문화시설이 생겨나 현지인과 관광객들을 수용하고 있다. 아오키는 도시의 신흥 중산층이 도시의 생활양식을 공유하고 문화적 취미와 국제적 유행에 민감한 만큼, 예술과 대중문화에서 자민족중심주의를 벗어나 동아시아에 공통되는 새로운 문화 창조와 발신의 담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²³⁵⁾

3) 동아시아 문화의 ‘공시성’과 유교적 ‘공통성’

1980년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부상한 NIES 국가의 경제발전은 세계적으로 ‘유교르네상스’와 ‘유교자본주의론’을 불러일으켰다. 일찍이 1950년대 일본에서는 마루야마 마사오가 에도의 유학자 오규 소라이(荻生徂徠)에게서 인간의 작위적 주체성을 고취한 정치사상을 발견함으로써 일본 유교와 근대화의 상관성을 해석한 바 있다. 그것은 ‘중국의 정체성’과 ‘일본의 진보성’을 대비시키는 일본 우월주의 관점으로 비판 받았다. 그렇다고 마루야마를 비판하는 논자들이 동아시아 유교의 공통성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아니다. 화이질서의 변방에 위치한 일본에서는 유교적 보편성보다 일본적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동아시아 유교의 다양한 차이를 강조하는 논조가 강하였다.

이러한 흐름이 바뀌어 ‘중국적인 것’의 수용과 ‘동아시아적인 것’에 주목하는 관점은 역시 한국과 중국의 유학생이 일본에 다수 유입된 1990년대부터다. 역사학이나 사상사 연구에서 동아시아 역사 발전의 내재적 동인으로 유교를 재해석하는 관점이 부상했고, 동아시아 공동체론이

234) 青木保, 「混成文化」の展開と広がる「都市中間層」, 『東アジア共同体と日本の針路』(日本放送出版協会, 2005), pp. 90~98에서는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협력을 강조.

235) 위의 글, pp. 98~116.

활발한 가운데 고전문학과 어학 연구 분야에서도 ‘동아시아에서의 문화정보의 발신과 수용’을 부각시켰다. 간사이대학의 아시아문화교류연구센터는 위와 같은 주제로 2005년부터 5년간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전개했으며, 그 결과 ‘동아시아 문화교섭학’을 제창하며 그 교육연구거점으로 특성화를 꾀하며 문부과학성의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과 타이완의 연구자들도 참여하는 이 연구팀은 역사적 추이에서 문화교류의 다양한 양상을 검증해야 할 필요를 제기한다.

‘동아시아 문화교섭학’에서는 아이덴티티의 일본 번역어인 ‘일체성’(동일성)보다 ‘공시성’의 개념을 중시한다. 그에 따르면, 문화교류는 반드시 상호대칭적인 것이 아니며, 일방적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동아시아라는 물리적 공간은 예부터 존재해 온 보편적 지역개념은 아니며, 지역의 일체성은 선험적인 자명성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 동아시아 지역의 일체성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일체성의 해소, 부정의 회로가 나타난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또 일체성과 제 문화의 고유성의 관계에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감정적 반발’을 야기하기 쉬운 것”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관점은 역시 일본적 특수성이라는 범주를 훼손하지 않는다. 대신에 동아시아적 보편성과 일본적인 것을 대립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며, 공시성 안에서 상호 관계성에 주목하려는 것이다.²³⁶⁾

한편, 시마네현의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에서 동아시아 아이덴티티의 철학적 토대로서 유교의 타자 인식을 거론한 이노우에 아쓰시(井上厚史)는 “유교는 동아시아공동체의 유대(紐帶)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시마네현은 한국과의 영토분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론에 소극적이거나 적대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쉽다. 하지만 시마네현립대학은 지역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시마네 지역 공육·공창(共育·共創) 연구조성금’을 만들어 동북아시아권과의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²³⁷⁾

시마네현립대학 동북아지역 연구센터는 2001년부터 잡지 『북동아시아연구』를 발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중국의 푸단대학과 교류를 지속하며 2010년 중국에서 국제 심포지엄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는 당시 하토야마 정권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 연계되는 활동이었지만, 아베 정권 하에서도 ‘인간문화연구기구 공동연구 프로젝트’에서 북동아시아 지역연구를 지속하며, 그 일환으로 2018년 2월 오키나와에서 <콘택트 존에서의 ‘근대’>라는 주제로 한·중·일, 타이완, 몽골의 연구자들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갖기도 하였다.

236) 松浦章編, 『東アジアにおける文化情報の発信と受容(関西大学アジア文化交流研究叢刊)』(雄松堂出版, 2010), p. 4~5, 文化交渉学, 文部科学省の支援プログラムの運用.

237) 시마네현립대학, <<http://www.u-shimane.ac.jp/research/project/coc/>> (검색일: 2019.1.24.).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 3국의 국력 경쟁과 민족감정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오늘날, 이노우에는 거꾸로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로서 유교적 ‘타자 인식’에서 ‘신뢰’를 형성할 공통의 가능성을 찾는다. “공동체는 항상 변동 요인을 내포하고 또한 경제와 정치의 힘으로 해체 위기에 노출된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동아시아 유교가 낳은 타인에 대한 두터운 신뢰”라는 것이다.²³⁸⁾ 그는 양명학의 ‘치양지(致良知)’와 퇴계학의 ‘경·애(敬·愛)’, 이토 진사이의 ‘충서(忠恕)’론에 주목하며, ‘인간적 유대’를 중시하는 유교 사상에서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도출하고자 한다.

하지만, 유교에서 공통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도출하려는 자세는 진부한 문화 전통론으로 외면당하는 모습이다. 유교 문화를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적 기층으로 채택하면서 현대 사회의 관념인 ‘사회적 신뢰(Social Trust)’와 ‘사회관계 자본(Social Capital)’과 결부시키는 자세가 현실적 맥락을 결여한 건강부회라는 것이다.²³⁹⁾ 사회관계 자본이 중요하지만, 재정적자가 누적된 일본에서 사회관계 자본의 쇠퇴가 예상된다. 경제적 효율성이 중시되는 현실에서 유교 문화론의 설득력은 사라졌고, 유교적 인간관계론의 입지점은 오히려 더욱 협소해졌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3. 주요 쟁점

각국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와 생활환경의 상이한 조건에서 어떻게 공통의 지역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협력의 네트워크를 만들 것인가? 그동안 진행되고 제시되어 온 정책 과제와 연구 논점들을 돌아보고 검토한다면, 국경을 넘어 서로에게 이로운 생활의 가치와 질서를 실현해가는 단서가 발견될 것이다.

1) 도시 중간층의 성격과 교육 네트워크

문화인류학자 아오키 다모츠가 동아시아의 ‘혼성문화’와 ‘도시 중간층’의 가능성에 주목한 후, 동남아의 다민족 국가를 연구하는 도리이 다카시(鳥居高)가 동아시아 도시 중간층의 현황과 아시아 공동체에서 그 역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²⁴⁰⁾ 그 견해는 아오키의 전망과 대립되는 논점도 제기하면서, 아시아에서 고등교육의 공유 가능성과 인재들의 초국적 이동에

238) 井上厚史, 「儒教は「東アジア共同体」の紐帯となりうるか?」, 『北東アジア研究』別冊-第2, (2013), pp. 95~116.
이노우에는 시마네현립대학에서 ‘대학생이 만드는 지역 활성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239) 進藤榮一, 『東アジア共同体をどうつくるか』(ちくま新書, 2007).

240) 鳥居高, “東アジア中間層の3つの役割,” 進藤榮一 編, 『東アジア共同体を設計する』(日本経済評論社, 2006), pp. 289~294.

의한 휴먼 커패시티(human capacity)의 확장 가능성을 새롭게 시사한다.

도리이에 따르면 동아시아 신중간층은 1980년대 후반부터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민주화의 주역으로 활약하면서, 경제의 글로벌화와 고등교육의 수혜를 입고 부상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간층은 경영·관리직, 전문·기술직, 사무직,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도시생활자들이 많지만, 싱가포르와 홍콩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그들은 농촌부와 연계를 맺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더구나 동남아의 다민족 사회에서 그들은 “종교나 언어 등의 ‘종(縱)’적 연계”에 영향 받는 모습도 강하게 남아있다. 도시 중간층이 횡적 연계가 두터운 사회계층으로 재생산되기에는 아직까지 “생성 도중”에 있다는 진단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중간층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에는 커다란 공통성이 나타난다. 고도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에 더하여 해외유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의 양적인 확대”와 “국가의 관여”가 그것이다. 민간 기업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공기업과 국책연구소를 비롯한 공적 단위를 확대하여 중간층의 양적 확산에 기여한다. 한국에서도 공기업 사원이나 공무원으로 취업하려는 청년 인구가 많지만,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는 다민족사회의 ‘안전장치’로서 중간층을 정책적으로 산출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중간층은 사회변동의 주역으로 활약하면서도, 국가나 현 체제에 의존하는 보수적 성격도 갖게 된다. 이러한 이해는 아오키가 국민국가와 자민족중심주의를 넘어서 동아시아 공통의 아이덴티티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던 ‘도시 중간층’의 성격과는 대립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도리이는 동남아시아에서 ‘아시아공동체’의 구축에 ‘생성 도중의 중간층’이 기여할 수 있는 ‘유대’의 조건을 다음의 세 가지 영역에서 찾는다. 첫째, 중간층이 소비자로 역할하면서 소비자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다만, 공통의 매뉴얼을 갖는 편의점의 운영이나 유니클로와 같은 의류 소비재는 아시아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한 유통망을 갖는다. 둘째, 도시 중간층이 대중문화나 도시문화의 공유자로 활약하며 공유 범위를 확산할 수 있다. 이것도 미국적인 것, 중국적인 것, 이슬람적인 것 등이 혼성되어 나타나는 만큼, 반드시 동아시아의 고유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셋째,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고등교육의 탈 국경화 및 네트워킹화의 현상이다.²⁴¹⁾ 1990년대부터 고등교육 기관의 증설, 영어 교육을 위한 조기 유학 등, 교육 시장의 확대가 아시아 전역에서 진행되었다. 중국을 중심으로 대학 간 연계 교육에 의한 고등교육의 네트워크화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는 동아시아 역내에서 인재의 공유 가능성으로 연결된다.

241) 黒田一雄, 『アジアの高等教育ガバナンス』(勁草書房, 2013); 鴨川明子, “アジア域内の教育ネットワーク,” 松岡俊二 著, 『アジア地域統合の展開(アジア地域統合講座総合研究シリーズ)』(勁草書房, 2011), pp. 163~186.

도리이가 지적한 아시아 역내의 교육시장의 확산과 고등교육의 네트워크화는 한국에서도 인천과 제주 등 전국 각지의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나 국제학교, 2000년대 중반부터 급증한 동남아 조기 유학, 한·중·일 간 대학교육의 연계 등에서 그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역내 교육 네트워크도 역시 글로벌리즘의 확산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만큼, 아시아 역내를 넘어서는 탈영역적 현상이다. 동남아권에서 영어를 습득한 인재가 오세아니아나 북미와 유럽 등지로 이동하는 초국적 현상도 볼 수 있다.²⁴²⁾ 동남아를 포함한 아시아공동체의 구축 여부는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영어로 교육 받으며 다양한 지역 문화를 체험한 세대들이 아시아의 타자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아시아 범주에서 초국적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연계하게 될 가능성은 높다.

동아시아에서 도시 중간층이 국민국가의 이해를 넘어서 글로벌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고 생활공동체를 확산할 가능성에 대한 해석은 일률적이지 않다. 도시 생활자의 생활양식이 균질적 공통성을 굳혀가는 모습은 아시아를 넘어선 글로벌 현상이며, 글로벌리즘의 확산에 따라 도시 중산층은 자국의 빈곤층보다 소비 공동체로서 타국의 중산층에 더욱 친근감을 갖는 현상도 나타났다. 그렇다면 계층 간의 단절과 위화감이 아시아 공동체 형성에서 오히려 전체 아이덴티티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계층적 양극화나 빈곤층의 생성 문제도 일국의 사회적 요인이나 해법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네트워크와 초국적인 글로벌 이슈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위 지역과 광역 지역, 내셔널과 트랜스 내셔널, 로컬과 글로벌의 연계 속에서 지역사회와 인류 전체의 문제를 연계적으로 사유하며 해법을 모색할 인재들이 육성될 때 지역공동체의 미래가 밝아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네트워크와 동아시아 문화도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권 안에서 한국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면, 일본 동북부 해안에서는 중국, 한국, 러시아 등지에서 떠내려 온 해양쓰레기의 처리 문제로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7년 봄에는 한국의 김 양식장에서 소독제로 사용한 과산화수소 용기가 대량으로 밀려와서 일본해 연안의 각 지자체에서 동시에 문제의 심각성을 보도하였다.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물질은 태평양 기류를 따라 미국 동부 연안으로 흘러간다. 이처럼 환경 문제는 인접 지역을

242) 김지훈, “초국적 이주로서의 조기유학: 싱가포르의 한국인 조기 유학생 추적 조사를 통한 이동성(mobility) 유형화,” 『동남아시아연구』, vol. 24, no. 2 (2014), pp. 207~251.

거쳐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만큼, ‘생활권’의 환경문제에 각국의 지자체와 정부, 그리고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제연합환경계획(UNDP)은 서해(황해)와 동해(일본해)의 해양과 연안 환경을 보전하고 유효하게 개발·관리할 목적으로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이라는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1994년 9월 제1차 정부 간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고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가 참여하였다. 2004년에는 본부사무국인 지역조정부(Regional Coordinating Unit: RCU)를 도야마시(富山市)와 부산에 공동으로 설치했고, 참여국이 협업하여 공동의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²⁴³⁾

동북아시아에서 지자체 간의 공식적인 연계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다문화공생’을 추구하는 일본의 지자체국제화협회(CLAIR)에 따르면, 일본의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제휴수는 1989년 719건에서 2017년 현재 1,725건으로 매해 증가하였다. 2015년 현재 일본의 75개 지자체가 26개국 65도시에 총 219개의 해외 활동 거점을 설치하고 있는데, 중국 76개, 한국 20개, 싱가포르 19개로 나타났다.²⁴⁴⁾

지자체의 독자적 활동 이외에도 국제적인 네트워크로서 ‘아시아 대도시 네트워크(ANMC)21’²⁴⁵⁾과 ‘아시아태평양 도시간 협력 네트워크(CITYNET)’가 가동 중이다. ANMC21은 아시아의 로컬 도시가 환경 대책, 산업 진흥, 도시기반정비, 문화예술과 관광의 진흥, 보건위생 협력 등의 공통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2005년 베이징시가 ANMC21에서 탈퇴했지만, 2014년 서울에서 에코 마일리지 실행 관련 회의가 개최되는 등 그 활동은 지속되고 있다. CITYNET는 국제연합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네트워크로 대도시와 중도시, 연구기관과 행정기관, NGO가 참여 가능하고, 발전도상국의 도시 사이에서 기술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하위지역(sub-region)인 지자체의 네트워크 형성에 주목하고 있는 사도토 모 데츠(佐渡友哲)는 동북아시아에서 지자체의 기능적인 연계가 주민들의 아이덴티티를 유의미하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국경을 넘는 지역 공동체의 형성에서는 국가(정부)가 위로부터 정책을 강요하지 않고, 지역주민이 공통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프로세스에 주목하는 쪽이

243) 도야마시의 정보 자료, <http://www.pref.toyama.jp/cms_sec/1018/kj00000787.html> (검색일: 2019.6.1.).

244) 지자체국제화협회, <<http://www.clair.or.jp/docs/houdouhappyou0229.pdf>> (검색일: 2019.6.1.).

245) 아시아대도시네트워크21, “The Asian Network of Major Cities 21,” <<https://www.seisakukikaku.metro.tokyo.jp/gaimubu/anmc21/anmc21org/english/summary/index.html>> (검색일: 2019.6.1.).

더 현실적"이라는 견해다.

사도토모는 '환일본해 교류운동'의 성과로 연안의 주민들이 지금까지의 변경의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 변화에서 기대되는 내용으로 1) 지역의 국제화와 민간 교류, 2) 중소기업의 국제경제활동 참가, 3) 자치체 상호 간의 국제 교류와 네트워크의 형성, 4) 물류 이동, 사람의 이동을 위한 인프라의 정비와 확충 및 지역주민 생활의 편리 향상, 5) 새로운 생활권으로서의 환일본해지역(동북아시아 지역)의 미래 전망, 6) 하나의 생태계로서 일본해환경권이 제시되고 있다.²⁴⁶⁾

사도토모의 논고는 2006년 시점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가 호황을 이루며 역내 협력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시점에서 나왔다. 그는 지역 연계와 지자체의 국경을 넘는 네트워크가 외교나 영토 등의 주권 문제와 연루되지 않는 '생활공간'에서 성립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동북아에서 경제협력과 생활공동체의 형성이 진척됐어도 국경을 넘는 공동체 의식과 아이덴티티의 형성은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 주요한 원인은 배타적인 주권 강화에 기초한 국익 및 자국민 중심의 역사인식에 기인하며, 역사문제가 외교적 쟁점으로 충돌할 때마다 지자체 단위의 교류와 청소년 교류도 멈추었다. 결국 동북아시아에서는 중앙정부와 미디어 언론이 아시아 아이덴티티의 형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여전히 중요한 현실 문제로 제기된다.

한편, 2014년부터 매년 한·중·일 3개국에서 각각 하나의 도시를 선출하여 3개 도시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이벤트를 개최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요코하마, 나라, 니가타, 교토, 가나자와가 선정되었고, 2019년 현재 도시마구(豊島区)에서 개최 중이다. 중국에서는 취안저우, 칭다오, 닝보, 창사가 선정되었고, 한국에서는 광주, 청주, 제주특별자치도, 대구, 인천이 선정되었다. 이 기획은 2010년 5월 '아시아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교류회의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동아시아 예술창조 도시 구상'으로 제안했다고 한다.²⁴⁷⁾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는 각국이 지방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면서, 동아시아 차원에서 현대예술문화와 전통문화, 그리고 다양한 생활문화에 관련된 문화예술을 교류한다는 취지를 갖

246) 佐渡友哲, 「自治体ネットワークの役割」, 進藤榮一 編, 『東アジア共同体を設計する』(日本経済評論社, 2006), p. 295~302. 사도토모는 동아시아 하위지역 거버넌스와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공동연구 과제로 <EU 하위지역과 동아시아 공동체: 지역 거버넌스 간의 국제제휴 모델 구축> (2006-2008), <동아시아의 중층적 하위지역과 새로운 안전보장 구축> (2016-2019) 등이 있다. 일본 문부성의 연구자 정보 <<https://research-er.jp/researchers/view/581724>> (검색일: 2019.6.1.).

247) 당시 최상용 전 주일한국대사는 3개국 상설의 오케스트라 창설을 제안했다고 한다. 東アジア共同体研究所, 『なぜ、いま東アジア共同体なのか』(花伝社, 2015), p. 62.

는다.²⁴⁸⁾ 이 활동의 목적은 동아시아 역내의 상호 이해와 유대감 형성을 촉진하고 동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의 국제 발신력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에 있다. ‘동아시아 문화 도시’로 선정된 도시에서도 문화예술 창조 산업과 관광을 진흥시키려는 목적을 갖는다. 한·중·일 3국의 정치적 협력관계를 반영하듯 아직까지 인지도가 낮고, 2018년부터 중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부터 ‘아세안 문화도시’와 결합하여, ‘아시아 문화도시 네트워크’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²⁴⁹⁾

3) 관광 교류와 문화 향유(소비) 공동체

중국이 사드 문제로 한국 관광을 제재하는 동안 일본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그들의 ‘폭탄 구매’(대량 구매)가 이어졌다. 인터넷 정보산업의 발달로 최근에는 일본을 방문하는 나라의 관광객 수와 소비 성향, 문화적·역사적 배경 등을 조사하고接客 태도까지 조언하는 정보 서비스 사이트도 생겼다. 이 사이트는 관광객과 숙박업체, 지자체의 관광사업체를 서로 연결해주고 컨설팅을 하며 정부의 지방창생 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²⁵⁰⁾

그 조사에 따르면 2016년 방일 중국인은 637만 명으로 전체 방문자수의 1/4을 차지하며 방일 중국인 소비액이 최다치를 보인다. 같은 해 방일 한국인은 약 509만 명으로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1인당 여행 소비액은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인 61,569엔으로 중국의 1/3 이하다. 방일 한국인의 대다수가 ‘젊은이’들로, 그 여행 스타일은 주말 총알여행 등의 단기 체재가 주를 이룬다.

일본 내 중국인과 중국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만큼, 최근 중국계 기업이 일본의 관광시설을 인수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중국이 일본 관광업계를 점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반감이 퍼질 수 있는 뉴스다. 그러나 이 사이트에서는 중국계 기업이 일본의 관광 관련 시설을 인수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장점을 지적한다. 지역 내 고용 창출이 가능하고, 지역의 관광산업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중국 관광객을 불러 경제 선순환을 일으킨다는 낙관론이 제기된 것이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의식 속에서 “인구 1명이 줄어도 방일 관광객 8명을 부르면 그 손실을 커버할 수 있다”는 셈법이 나온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아베 정권의 개방 정책이 지역 창생의 과제와

248) 문화청, “東アジア文化都市,” <http://www.bunka.go.jp/seisaku/kokusaibunka/east_asia/> (검색일: 2019.6.1.).

249) 한국 측 보도 기사로 “권영진 대구시장, 동아시아 문화도시 협의회 설립 제안,” 『경북일보』, 2017.8.28., <<http://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134>> (검색일: 2019.6.1.).

250) “訪日外国人集客 インバウンド対策サービスの資料請求 比較サイト,” <<https://honichi.com/>> (검색일: 2019.6.1.).

어우러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연구를 실천한 결과로 보인다.

4. 소결

일본의 지역공동체론은 아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개방적 다층적 네트워크의 육성’을 구축하고자 한다.²⁵¹⁾ 그 지정학적 조건에서 일본은 아시아 전역과 태평양 연안 지역을 포괄하고자 하며, 민주주의적 가치와 경제적 풍요, 국제사회의 안정적 질서를 표방해왔다.

2018년부터 일본은 아시아에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미국-호주-인도는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중층적인 네트워크화를 추진하는 중이다. 여기에는 물론 일본의 세계적 지위 향상을 위해 미일동맹을 견지하고 중국 패권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 새롭게 확장된 인도 태평양 지역 교류에서는 아직까지 요가, 음식 등 생활문화와 축제 행사 차원의 교류를 넘어서는 문화적 공동체 인식은 보이지 않는다.

‘다층적 네트워크’는 활동 주체와 활동 범주의 두 측면에서 확인된다. 활동 주체의 다층성이란 양자간·다자간 관계,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PEC과 같은 지역 내/간의 다양한 대화와 협력의 틀을 상정한다. 활동 범주는 경제, 안보, 환경, 문화, 교육 등에 걸친 유기적 연계와 기능성의 강화를 포함한다.

‘개방적 네트워크’란 지역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에서 지리적·국가적 경계의 범위를 확장하고 긴밀한 연계를 확충시켜간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 때에도 네트워크의 주체는 국가와 정부 기구, 지자체, 전문가와 전문가 그룹, 기업과 NGO, 유학생과 노동자, 관광객 등 다양한 정책수행자, 경제활동인구, 지식연구자들을 포괄한다. 최근 일본 정부는 한·중·일 관계에서 국익과 소신 외교의 틀에 갇혀서 공동체론을 발신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ASEAN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과의 포괄적 경제 연계 협력을 확충하며 일본의 노동력 부족도 해소하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 공동체 또는 아시아 지역 통합을 희구하는 지식인들은 연구와 그 결실의 사회적 확산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식 사회에서는 동아시아의 문화 이념에서 다양성과 혼성성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도시 생활에서 서로 연계되는 경험에 주목하며, 공시성과 공동성의 확장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립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유교와 불교에서 공통의 문화적

251) 외무성, “アジア太平洋地域における秩序の構築：開放的で多層的なネットワーク,” 『平成24年版外交青書』, 〈http://www.data.go.jp/data/dataset/mofa_20140922_0017/resource/f19de7e5-e749-4209-b5bc-ea8c04719d31〉 (검색일: 2019.6.1.).

아이덴티티를 도출하려는 자세도 있지만, ‘동아시아 통합’의 사상을 논한 경제학자 가와모토 다다오는 탈영역화하는 글로벌 세계에서 ‘아시아적 가치’라는 환상을 벗어나자고 제안한다.²⁵²⁾

글로벌 사회의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가치로서 현대의 보편적 가치에 주목하며, 근대의 표층개념인, 인권·민주주의·역사·보편·시민 등에 공통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구체적으로는 ‘자치협동체(코뮌)’의 개념을 차용하면서 주민 주권의 자율적 시점으로 지역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대 동아시아형 지역협력’의 질서를 만들자고 제안한다.²⁵³⁾ 실제 일본에서는 지역자치단체와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문화 교류, 유학과 교육, 관광, 공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트랜스 내셔널한 지역 문제의 해소, 나아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여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물론 보편적 가치의 명분 속에는 일본의 국익을 관철하고 일본 문화의 매력(쿨 재팬)을 대외적으로 발신함으로써, 친일파·지일파의 육성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252) 川本忠雄, 『東アジア統合という思想』, (文眞堂, 2013), p. 43.

253) 위의 책, pp. 2, 178.

제 2 절 일본의 동북아문화공동체 전문가 조사

1. 방법론 및 조사대상

이 장에서는 앞 장의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일본의 지식사회에서 동북아문화공동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설문 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를 소개한다. 한·중·일에 공통된 이 설문 조사의 항목은 크게 4가지 영역에 걸쳐 있다. 1) 동북아시아의 지역 개념과 그 범위에 대한 인식, 2) 동북아시아공동체의 형성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전망, 3) 동북아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한·중·일의 혐오 현상에 대한 인식, 4) 한·중·일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및 문화적 협력방안에 대한 모색이 그것이다.

설문을 실시한 2019년 1월, 일본에서는 혐한 문제가 다시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2012년부터 불거진 일본의 혐한 현상은 2015년 12월 ‘위안부문제 한일합의’와 2016년 6월 ‘헤이트스피치 규제법’이 공포된 후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²⁵⁴⁾ 2018년 10월에 실시한 내각부의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 39.4%로 중국에 대한 친근감 20.8%보다 높게 나왔다.²⁵⁵⁾ 이는 젊은 세대에 K-POP이 수용되고 한국 관광이 늘어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2018년 11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12월 일본 초계기에 대한 한국의 레이더 조사(照射) 문제가 논쟁을 야기하면서 또 다시 일본 내 혐한 여론이 비등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일본의 지식인들이 동북아문화공동체의 논의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응답할 수 있을지, 사실 기대감을 품기 어려웠다. 그러나 2012년의 ‘혐한 광풍’과 한·중·일의 갈등 국면에 서도 동아시아공동체 또는 지역 통합에 관한 일본 내 연구와 관심이 꾸준했던 것처럼, 이번 조사에서도 일본 지식사회의 동북아시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시점에서 동북아시아 다자협력체의 실현 가능성에는 부정적인 응답이 압도적이지만, 문화적 협력의 필요성을 크게 인정하는 모습이다. 공동체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응답자들도 각국 정부의 지원과 시민사회의 교육과 교류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실현을 향해 꾸준히 협력하고 노력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사실,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 및 감정은 ‘근친증오’처럼 한국의 ‘반일’ 정도에 따라 심한

254)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日: 平成二十八年六月三日),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28AC1000000068> (검색일: 2019.6.1.).

255) 내각부, “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 (2018.10.), <<https://survey.gov-online.go.jp/h30/h30-gaiko/2-1.html>> (검색일: 2019.6.1.).

기복을 나타내고, 정치적 이슈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한류, 특히 K-POP의 수용으로 친한 감정을 갖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희망적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이 반일 감정을 드러내기 보다 일본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일본인의 이해를 얻으려는 ‘공공 외교’를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과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국 정부와 지식인, 시민사회가 지혜를 발휘하여 동북아시아의 갈등을 반전시키며 지역공동체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이끌어가기로 기대하고 있었다.

일본의 응답자들은 동북아시아공동체 형성에서 일본 정부의 역할을 억제하고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시민사회의 교류를 지원하고 상대국에 대한 불신과 마찰의 장벽을 해소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우선하라는 것이다. 이는 전후 일본의 시민운동이 재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국가 의존도를 최소화했던 방침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도 제기한다. 시민사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지 아닌지 그 대표성을 검증하며, 내부에서부터 편파성과 부패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한 논의의 확산 및 수렴 과정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본 조사는 일본의 전문가 20명을 선정하여 이메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인의 지성인이 고심하며 내놓은 의견을 취합하고 정리하면서, 집단지성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답변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고 그것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종합해보면, 새로운 의제나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이 다양하게 숨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현재의 외교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북아시아문화공동체로 진전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단위의 논의와 토론을 거치며 집단지성의 힘을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일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대학 홈페이지나 공공 기관에서 개인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러한 접근 제한성 때문에 본 일본 연구진은 자신들의 인맥을 동원하여 설문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 접촉 대상자를 넓혀나갔다.

최초 접촉 인원은 20명으로 2019년 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이메일로 1차 접촉을 시도했으나, 그 중 4명이 기권 의사를 표시했다.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4명을 추가 접촉하여, 총 24명 접촉 중 20명이 회신 의사를 표명하였다. 응답자로서는 동북아문화공동체라는 실체를 짚어내기 어려운, 미래를 전망하는 주제에 서술형으로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 심적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가 낮거나 평소 지역공동체 논의에 접촉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은 응답하기 어려웠으리라 추측된다. 1차 설문 회신은 2월 20일까지 총 18명으로부터 받았다. 추가 접촉자 중 2명은

2월 28일까지 회신을 받았다.

본 설문 응답자의 연령층은 30대 2명, 40대 5명, 50대 6명, 60대 6명, 70대 1명이다. 직업별 분포는 교수 18명, 연구원 1명, 미술관장 1명이다. 교수, 연구자가 대부분이지만, 동아시아론의 대표적 논객, 소수자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시민운동 경험자도 포함시켰다. 전공 분야와 거주 지역도 안배하였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 2명과 중국 국적자 1명도 포함되었다. 설문 응답자들은 홋카이도를 제외하고 일본의 각 지역, 동북, 관동, 중부, 관서, 오키나와 등지에 골고루 거주하고 있으며, 총 20명 중 여성이 4명이다.

전공 분야로는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로 유명하거나 지역 통합을 주제로 공동연구를 실시한 국제정치학자, 한국과 중국에도 저서가 번역 출판되었으며 타이완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에 널리 알려진 정치사상연구자를 포함하여, 정치학, 사회학, 역사학, 문학 등에 걸쳐 있다. 설문 대상자의 연구 대상 지역은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타이완이기 때문에 아시아 단위에서 사고하고 연구하는 연구자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EU를 참조할 수 있는 독일사상 및 국제정치학 전공자도 포함했다. 세부 활동이나 연구 주제로는 인권연구, 대중문화연구, 유교사상연구 등도 포함된다.

〈표 4-2〉 응답자 분포

전문가	직업군	전공영역	전문가	직업군	전공영역
C01	교수	국제정치학 지역 통합(EU)	C11	교수	역사학 타이완·중국사
C02	교수	정치학 중국 노동정책	C12	기타 (미술관장)	미술
C03	교수	인문학 일본문학	C13	교수	인문학 불교
C04	교수	역사학 인권 연구	C14	교수	인문학 일본사상사
C05	교수	역사학 한국 사회사	C15	교수	인문학 독일사상문학
C06	교수	사회학 대중문화	C16	교수	인문학 철학·비교사상
C07	교수	국제정치학 일본과 동아시아	C17	교수	인문학 중국사상문화사
C08	교수	정치학 일본정치사상사	C18	교수	역사학 한국사
C09	교수	인문학 일본유교사상사	C19	연구원	사회학 베트남연구
C10	교수	인문학 중국사상 문화	C20	교수	인문학 중국사상 문화

〈표 4-3〉 응답자 직업군별 분포

직업군	교수	연구원	공공기관	기업인	NGO	기타	합계
빈도	18	1	1	0	0	0	20

〈표 4-4〉 응답자 전공영역별 분포

전공영역	국제정치학	정치학	사회학	역사학	인문학	기타(예술)	합계
빈도	2	2	2	4	9	1	20

2. 동북아 개념의 인식과 범위

□ ‘동북아시아’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 문 1 - 선생님께서는 ‘동북아시아’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를 여쭙겠습니다. 아래 보기 중 동의하시는 항목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표 4-5〉 동북아 개념의 인식

동북아 개념의 인식	빈도 (%)
(1) 한반도와 그 주변 국가와 지역을 포괄하는 지리적 개념이다.	6 (25.0%)
(2) 유교, 한자 문화, 역사적 경험 등을 공유하는 문화적 개념이다	5 (25.0%)
(3) 지리적 개념이면서 동시에 문화적 개념이다.	9 (50.0%)
합계	20 (100.0%)

- 한반도와 그 주변 국가와 지역을 포괄하는 지리적 개념으로 보는 의견과 유교, 한자 문화, 역사적 경험 등을 공유하는 문화적 개념으로 보는 의견이 대체로 비슷하다.
- 지리적 개념이면서 동시에 문화적 개념으로 보는 의견이 각각의 의견보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동북아시아’라는 표현은 지리적 개념과 문화적 개념으로 분리하기보다는 두 측면을 포괄하는 비교적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동북아시아’ 개념이 중국과 일본에서도 같은 의미로 확장될 수 있는가?

- 문 2 - ‘동북아시아’라는 개념은 주로 한국에서만 통용될 뿐, 인접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낯설고 잘 이용되지 않는 개념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라는 용어 혹은 개념이 중국과 일본에서도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 중 동의하시는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표 4-6〉 동북아 개념의 중·일 확장 가능성

동북아 개념의 확장 가능성	빈도	%
(1) 매우 동의한다	4	20.0%
(2) 어느 정도 동의한다	12	60.0%
(3)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는다	4	20.0%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	0.0%
* 동의함 = (1)+(2)	16	80.0%
* 동의하지 않음 = (3)+(4)	4	20.0%
합계	20	100.0%

○ 일본의 전문가 20인 중 긍정적인 답변은 16인, 부정적인 답변은 4인으로 나타났다. 이 질문에 대한 일본 전문가들의 답변에서 ‘동북아시아’라는 개념이 중국과 일본에서도 같은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동북아시아’ 개념의 확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동북아시아’ 또는 ‘북동아시아’라는 용어가 일본 학계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또 두 개념이 지칭하는 범위가 겹치기도 하면서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에서는 니가타대학과 동북대학에 ‘동북아시아 연구소’가 있고, 90년대 ‘환일본해’를 대신하여 사용된 ‘북동아시아’가 21세기 이후 ‘동북아시아’와 지리적으로 중첩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동북아시아’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북아시아’는 만리장성 이북과 주변국·지역(몽골, 한반도, 시베리아, 일본, 쿠릴 열도)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는 개념은 중국 전체가 아니라 중국의 일부만을 지칭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중국이 ‘동북아시아’를 전면에 내세워 주장하게 된다면, 일본에서는 그것을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 전략을 위장한 것으로 받아들일면서 경계심을 가질 것이라는 의견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동북아시아’와 같은 지리적 개념이 정치적

패권주의로 전략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 개념의 확장성에 관한 답변에서 확장 가능성의 근거로서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정치(외교와 전쟁), 경제(물류), 문화(불교, 한자, 유교) 분야에서 매우 밀접한 교류를 가져왔다는 점을 거론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현재 중국과 한국 사이의 활발한 경제교류 등을 지적하면서 확장성의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지역을 ‘비핵공동체’로 만들 필요성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은 ‘동북아시아’ 개념의 확장 가능성의 근거를 역사적 경험 혹은 현실적 여건, 미래의 요청 등에서 찾고자 하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북동아시아’라는 용어가 일본에서 정착되어 있지 않아 지리적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초·중·고등학교의 지리교과서에서는 아시아 지역에 대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는 별도의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지역은 ‘동아시아’로 이해되기도 한다. 다만 학계 혹은 외무성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정도이다.

또 다른 부정적인 의견은 용어를 사용하는 주체(개인 혹은 국가)에 따라 ‘동북아시아’가 다른 지역이나 영역을 가리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용어는 개념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국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고 따라서 중립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본인에게 ‘동북아시아’는 이미지가 불분명하고, 중국인에게는 중국 북쪽을 상상하게 하고 중국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긍정의견

- 전문가 1: 용어나 부르는 방식은 각자 차이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 독도와 다케시마, 동중국해[東シナ海]와 일본해 등). 다만 공통된 언어를 쓴다는 것은 서로 상대방에게 경의를 베푼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이 쓰는 언어를 인식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 전문가 2: 일본에서 ‘동북아시아’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는 말로 ‘북동아시아’가 있습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국제정치학·개발경제론에서, 혹은 일본해 측 지자체 등에서 환(環)일본해 경제교류권 구상을 내세운 이래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일부 국공립·시립대학이나 니이가타(新潟)에 전문연구소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ERINA). 1990년대에 ‘환일본해’를 대신하는 말로 ‘북동아시아’를 쓰이게 되었습니다만, 21세기에 들어 경제활동의 시야가 동부러시아까지 확대되면서 ‘동북아시아’와 지역범위가 겹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물론 아직

- 주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전문가 3: ‘동북아시아’라는 개념의 유통에 찬성할지 안 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공동성’을 강조하는 개념은 유통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위험성을 주시하면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전문가 4: 일본에서는 ‘동아시아’라는 표현이 비교적 통용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동북아시아’라는 표현도 일정 정도 제한을 둔다면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 비하면 낯설고 공통이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동남아시아’와 대비하여 ‘동북아시아’라고 표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 중국에서 동북아시아라고 할 때 만리장성 이남까지 포함된다는 인식이 아무런 전제 없이 공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영토에서는 중국 동북부, 내몽고 자치구에 해당되는 만리장성 이북과 주변국·지역(몽골, 한반도, 시베리아, 일본, 쿠릴 열도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통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사연구 등 학술용어로서 가능한 것이지, 현상인식의 개념으로서는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국민국가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 같은 논의가 허용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냉전 상황을 지연시키는 한반도의 분단, 그것에 깊이 영향 받는 일본이나 러시아 등의 지역정세에 대한 중국의 관여나 개입이라는 문맥에서는 중국에게도 의미 있는 단어가 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 전문가 6: 지리개념으로서의 ‘동북아시아’라는 용어는 ‘북동아시아’와 동일한 빈도로 주로 일본의 학술연구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인 J-STAGE에서 검색한 결과 건수를 보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영역에 따라 사용 빈도에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일본에서 특수한 용어는 아닙니다.
 - 전문가 7: 일본에서도 ‘북동아시아’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적지만, 학술적으로는 물론, 예를 들어 외무성의 조직명에도 ‘북동아시아’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래 북핵문제가 부상하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틀로서 6자 협의가 열리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역설적으로 지역개념으로서의 ‘북동아시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나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 전문가 8: ‘동아시아’라는 개념은 전후 일본에서는 책봉·조공체제나 율령제 등이 채용된 공간영역으로서 고대로 거슬러 올라 사용되어 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에서는 남양 제도를 위임통치하게 됨에 따라 ‘동남아시아’라는 개념이 지리교과서에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북아시아’는 ‘동남아시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지리적 범주 외에 장래 더 강한 유대가 생길 거라는 의식까지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중국이 ‘동북아시아’를 전면에 내세워 주장하게 된다면,

일본에서는 그것을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 전략을 위장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경계심이 한방에 높아질 것입니다.

- 전문가 9: 일본에서는 ‘동북아시아’나 ‘북동아시아’가 대학·대학원의 연구과에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든 통용될 가능성은 높을 것입니다. 중국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경제개발 등의 영역에서 쓰이는 개념으로 통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 전문가 12: 류큐(琉球)·한국·북한·일본·중국 동북지방은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역사상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전문가 13: 중국과 일본에서도 ‘동북아시아(동북아)’라는 표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북동아시아’라는 표현도 존재하며 중복되고 있습니다.
- 전문가 14: 동북대학에 동북아시아연구센터라는 명칭의 연구기관이 있듯이 한·중·일이 중심인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 등도 포함한 ‘동북아시아’는 일본에서도 일정한 인식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전문가 16: ‘동북아시아’라는 말은 잘 쓰이지 않지만, 그것과 거의 동일한 의미의 ‘동아시아’라는 말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중국, 한반도, 타이완, 일본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정확하게는 ‘동북아시아’라고 지칭했던 지역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용어는 영어로 말하면 ‘East Asia’로, 세계적으로 널리 그리고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라는 용어도 중국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 ‘동아시아’라는 말은 (‘동북아시아’라는 말보다) 의미가 애매하며, 동북아시아를 중핵으로 하면서도 인도보다 동쪽을 막연하게 상상할 수 있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 전문가 17: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 절실한 문제로 있고, 그것이 아시아, 나아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현재 진행중인 북미교섭을 계기로 정식으로 종전·평화선언을 이끌어내는 것, 이를 위해서도 특히 북, 한, 미, 중을 중심으로 각국이 비핵화를 위한 군축을 실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와 같은 틀이 우선 비핵공동체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우선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한자문화권인 베트남이나 타이완(중국이 들어가면서 포함되지만)에 대해 보다 시간을 두고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때의 공동체는 몇 개의 느슨한 문화공동체나 경제공동체가 겹쳐진 것으로, 획일적이기보다는 농도차가 있는 중층적인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생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전문가 18: 일본·한국·중국(특히 북부)은 고대부터 정치(외교와 전쟁), 경제(물류), 문화(불교, 한자, 유교) 분야에서 굉장히 밀접한 교류가 있었으며, 상호 연관된 역사적 경위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 한국과 중국은 정치·경제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국의 문화적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 전문가 19: ‘동북아시아’라는 말은 일본에서 자주 들리는 개념입니다. 일본·한반도·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를 생각하는 데 ‘동북아시아’라는 개념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세 이전에 중국과 조선은 일본에게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영향력이 센 지역이었습니다. 일본도 그저 영향을 받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무역 등을 통해 다소나마 영향을 미쳤으며, 삼국(특히 연안부) 사이에는 깊은 상호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대 이후에는 식민지배나 전쟁 등으로 일본과 한중의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일본의 가해자로서의 역사는 아시아 각국에 미치지만, 그 중에서도 한중과 일본의 관계는 지정학적 거리도 포함해 해결을 위해 검증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전문가 20: ‘동북아시아’라는 말은 발해·황해·동해(또는 ‘일본해’) 주변 지역을 가리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 한반도, 중국 동북부 및 화북부, 러시아, 나아가 몽골까지도 포함한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지역의 지정학적 특색은 역사적으로도 두드러지며, ‘동북아시아’는 분석개념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부정의견

- 전문가 5: 첫 번째로 일본에서는 주로 ‘북동아시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개념과 각각의 언어권에서의 번역어에 대해 공통된 인식이 형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자의 문맥에서 ‘동북(북동)아시아’를 이야기할 때 자국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립적인 개념으로 쓰지는 못할 것입니다.
- 전문가 10: ‘동북아시아’라 해도 일반적인 일본인에게는 이미지가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일본인은 중국의 북쪽에 위치한 몽골 부근을 상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중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역사에 밝은 사람이라면 고구려 부근을 상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람은 일본인 중에서 적은 편입니다.
- 전문가 11: 일본의 초·중·고등학교의 지리교과서에서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라는 지역구분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라는 표현을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문부과학성을 상대로 하게 되겠지요. 중국의 교과서에서는 ‘아주(亞洲)’, ‘아태지구(亞太地區)’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지요. 타이완은 시간이 없어서 알아보지 못했지만, 지리·정치·경제·문화개념으로서의 ‘동북아시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전문가 15: 일본에서는 ‘동아시아’라는 표현이 더 자주 쓰입니다. 옛날에는 미국(영어)의 영향으로 ‘극동(far east)’이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했지만, 사상이나 문화 방면에서는 독일어인 ‘Ostasien’의 영향일지도 모르겠지만 ‘동아시아’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타이완까지 포함한다면(그리고 포함해야 하겠지만), 정확히는 ‘북동 및 동남아시아’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베트남까지 포함한 ‘유교문화권’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 경우 필리핀이 제외됩니다.

□ 동북아시아에 포함될 수 있는 국가들

- 문 5 - 아래의 보기 중, ‘동북아시아’에 포함되어야 하는 인근 국가나 지역들을 모두 골라서 표시해주십시오.

- ☐ 한국 ☐ 북한 ☐ 일본 ☐ 중국 ☐ 타이완
☐ 몽골 ☐ 러시아 ☐ 베트남 ☐ 미국 ☐ 싱가포르

〈표 4-7〉 ‘동북아시아’에 포함되어야 하는 국가 혹은 지역

	포함	불포함	합계
한국	20(100%)	0(0%)	20 (100.0%)
북한	20(100%)	0(0%)	20 (100.0%)
일본	19(95%)	1(5%)	20 (100.0%)
중국	19(95%)	1(5%)	20 (100.0%)
타이완	14(70%)	6(30%)	20 (100.0%)
몽골	15(75%)	5(25%)	20 (100.0%)
러시아	9(45%)	11(55%)	20 (100.0%)
베트남	3(15%)	17(85%)	20 (100.0%)
미국	2(10%)	18(90%)	20 (100.0%)
싱가포르	2(10%)	18(90%)	20 (100.0%)

- ‘동북아시아’에 포함되어야 하는 인근 국가나 지역들에 대한 물음에서는 한국, 북한, 일본, 중국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포함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 타이완, 몽골에 대해서는 ‘동북아시아’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약간의 유보적 의견이 제기되었다. 타이완의 경우 몽골보다 유보적 의견이 아주 약간이지만 우회하

고 있다는 점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나라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 대한 유보적 의견을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 러시아에 대해서는 ‘동북아시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포함된다는 의견보다 우세하였다.
- 베트남, 싱가포르, 미국에 대해서는 ‘동북아시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 동북아시아에 포함되기 어려운 국가들에 대한 근거

- 문 6 - 위 문항에서 동북아시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하신 국가나 지역이 있다면, 해당 국가에 대해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간략히 1~2줄 정도로 각각 설명해주시시오.

타이완에 대해서 동북아시아에 포함해야 할지 동남아시아에 포함해야 할지 혹은 동아시아에 포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일본의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일정하지 않다. 타이완을 동북아시아에 포함시킬 경우,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아시아와 개념상의 중복이 있다는 이유로 타이완을 동북아시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유보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리적 측면에서 동남아시아로 분류할 수 있고 문화적 측면에서는 중화문명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시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기억을 근거로 타이완을 ‘동북아시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몽골에 대해서 일본의 전문가들이 ‘동북아시아’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본 근거는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멀다는 것이었다. 설령 몽골이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몽골은 한자문화권 혹은 유교,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와는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몽골은 내륙아시아로서 근대 이전까지 한국이나 일본과 깊은 관련이 없다는 점도 이 지역을 ‘동북아시아’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근거로 작용하였다.

러시아를 ‘동북아시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의견이 다수 있었다. 대체로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일부 지역이 ‘동북아시아’에 포함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이 지역과 관련된 점이 적지 않지만, 인종, 문화, 종교(동방종교) 등의 측면에서 동아시아의 영역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유라시아대륙의 일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베트남을 ‘동북아시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 이유는 대체로 베트남이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에 해당된다는 교과서적 지식에 근거한 것이

었다. 비록 베트남이 역사적으로 ‘한자문화권’에 속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체제에 속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유교문화권’ 또는 ‘중화문화권’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현재 ASEAN에 속한 국가이므로 동남아시아로 이해하는 것이 일본인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베트남은 동남아시아로 이해되고 있지만, 경제적 교류 등을 통해 경제적 영역에서 관계 설정의 가능성이 타진되기도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지리적 측면이 강조되어 동남아시아로 이해하는 의견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ASEAN의 리더인 점에서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로 간주되고 있다. 중국인 화교가 경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화인국가(華人国家)로서 중화문화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지리적으로 멀다는 인상이 강하고, 문화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근세 이전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없었다는 점이 싱가포르를 ‘동북아시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근거가 되었다.

미국에 대해서는 일본의 전문가들이 아시아태평양의 일원으로서 환태평양지역으로 규정하였고, 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이 러시아와 함께 ‘동북아시아’ 지역에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지리, 문화, 인종 등의 차원에서 이 지역과 공유될 수 있는 점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베트남전쟁, 한국전쟁, 미군기지, 북한의 핵문제 등 이 지역의 과거나 현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 지역의 미래에 까지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 미국은 현재 동아시아 서미트(EAS)의 정식 회원으로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이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미국을 ‘동북아시아’에 포함시킬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일본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을 ‘동북아시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견해에는 지리적, 문화적 공통점이 없다는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동북아시아에 포함해야 하는 국가들

- 문 7 - 위의 5번 문항에서 나열된 국가들 외에, “동북아시아”에 포함되어야 하는 국가가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그 이유도 간략히 설명해주십시오.

문 5에서 열거한 국가들, 즉 한국, 북한, 일본, 중국, 타이완, 몽골, 러시아, 베트남, 미국, 싱가포르 등을 제외하고 ‘동북아시아’에 포함될 수 있는 국가 혹은 지역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오키나와가 포함될 수 있다는 소수 의견(3건)이 있었다. 특히 오키나와 거주자가 오키나와를 제시한 것은 당연한 의견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오키나와 거주자 이외에도 동일한 의견이 일부 제시되었다. 오키나와 거주자는 오키나와가 ‘동북아시아’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로서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신뢰 관계에 기초한 문화 교류와 경제 교류의 중요한 장소였으며, 현재는 ‘동북아시아’를 노리는 아메리카의 중요한 군사기지인 점을 들었다.

한편 동남아시아 혹은 인도, 남아시아 등을 거론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 아메리카의 군사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의 관계국들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도 등 동남아시아로부터 아프리카에 이르는 AA공동체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필요성과 가능성

□ 동북아시아에서 다자협력체는 가능한가?

- 문 8 - 유럽연합처럼, 동북아시아에서 한·중·일이 중심이 되어 ‘동북아시아 연합’ 혹은 ‘동아시아 연합’ 같은 다자적 협력체를 일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4-8〉 동북아다자협력체의 가능성

동북아다자협력체 가능성	빈도	%
(1) 매우 가능하다	1	5%
(2) 어느 정도 가능하다	5	25%
(3) 어느 정도 불가능하다	12	60%
(4) 전혀 불가능하다	2	10%
* 가능함 = (1)+(2)	6	30%
* 불가능함 = (3)+(4)	14	70%
합계	20	100.0%

□ 동북아에서 다자적 협력체를 결성할 수 있다

- 문 9 - 위 설문 8에서, “(1) 충분히 가능” 또는 “(2) 어느 정도 가능”이라고 답한 경우, 그

이유를 간단히 써 주십시오.

동북아에서의 다자적 협력체 결성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 일본의 전문가들은 압도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소수이지만 긍정적 답변을 제시한 대답의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역사적으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류관계를 구축했던 시대가 있었고 현재도 공통의 문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ASEAN과 같은 느슨한 지역협력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지역이 미국의 분단정책과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 지배받고 있으며, 이 지역에 미군 기지를 비롯한 군사력이 비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최근 한국과 북한,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국제환경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넷째, 현실적 군축이나 문화·경제적 왕래를 실마리로 EU의 성공한 점과 실패한 점을 참조해서 아시아에 적합한 공생 방식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항하면서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동북아시아에서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21세기를 위한 요청이다. 21세기의 세계질서 구상은 ‘다자간협력체’가 불가결하다는 것이다. 다만 EU를 모델로 할 필요는 없고 전례가 없는 새로운 주권의 존재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 협력을 모색하고 나아가 지역 내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열린 공동체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자적 협력체의 결성이 가능하다고 답한 전문가 중에서는 다자적 협력체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 편협한 영토 내셔널리즘, 미국에 대한 추종 등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 즉 일본의 식민주의에 대한 반성을 선결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 동북아에서 다자적 협력체를 결성할 수 없다

- 문 10 - 위 설문 8에서 “(3) 어느 정도 불가능하다” 또는 “(4) 전혀 불가능”이라고 답한 경우, 그 이유를 간단히 써 주십시오.

동북아에서의 다자적 협력체 결성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 일본의 전문가들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체를 결성한 기초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한국, 북한, 일본, 중국의 예를 들어보면, 이들 지역 사이에 정치시스템·사회시스템·문화의식이 상당히 다르다. 한국과 일본은

개방적인 민주주의 사회이며, 중국과 북한은 폐쇄적 내지는 반(半) 폐쇄적인 일당독재의 통제 사회이다. 협력체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북한의 개방화·민주주의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분단 상황은 이 지역의 다자협력체 구상에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한반도가 중립화를 실현하고 나아가 이 지역에서 중립화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한 방안 중의 하나이다. 중국과 타이완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걸림돌이다. 또한 이들 지역에 속하는 각국의 정치, 사회 체제, 문화의식의 차이라는 현재적 조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과제, 발전과 성장, 사회형성에 관한 비전에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경을 넘는 공동성을 상상하게 하는 성립기반이 없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를 상정한다 할지라도, 사회주의 진영과의 대치라는 공동 목적은 냉전적 사고방식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이러한 냉전 의식을 극복해야만 이 지역의 다자협력체가 가능할 것이다.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한자문화 혹은 유교문화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부분은 협력체 혹은 연대를 구성할 조건으로서는 애매하고 불충분하다.

둘째, 일본과 중국은 이 지역에서 다자협력체를 구상할 의지가 약하고 소극적이다. 일본에서는 2002년에 자민당의 고이즈미 수상, 2008년에 민주당의 하토야마 수상이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고 학계·관계·재계에서 연구자·정책입안자들이 관련 연구서를 출판하고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러한 흐름이 현실적인 정책론까지 구체화되는 일은 없었고 자민당도 민주당도 동아시아공동체를 계속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이 희박해졌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 당시 일본이 중국의 의도를 신뢰하지 않았고, 북한과는 관계 설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셋째, 이 지역에서는 내셔널리즘과 패권주의가 강하다. 현재 일본의 아베 정권은 전쟁이나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해결하는데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대립을 더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언론 보도는 중국이 패권노선을 추구하여 주변 각국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인상을 만들어 내고, 한국에 대해서도 역사문제 때문에 서로 협조하기가 어렵다는 듯한 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냉전체제의 기류가 여전히 남아 있고, 북한의 핵보유 문제에 대한 각국의 의견 또한 냉전적 사고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정권 차원의 신뢰를 조성하는 기반이 결정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각국 국민 사이에 강한 경계의식이나 대립감정이 분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중국과 미국의 마찰이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최근에는 '일대일로'를 내세워 중국 주도로 경제권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미국은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사이버전을 중심으로 중국을 가상적국으로서 위협으로 보는 자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구축에 대해 한국과 일본 정부를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자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이 지역에서는 유럽연합(EU)과 같은 ‘동북아시아의 연합’의 가능성은 낮다. ‘연합(union)’이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역 통합(느슨한 연방에 가까운 형태)을 가리키며 주권을 제약하는 다양한 지역기구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보다도 낮은 단계를, 즉 통합의 정도는 낮지만 몇 개의 지역협력기구의 제도화가 추진되고 그것들을 묶은 것을 ‘공동체(community)’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동북아시아에서도 공동체가 탄생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주권의 제약이라는 점에서 통합의 정도는 낮은 형태이지만, ASEAN은 2015년 12월부터 3개의 ‘공동체’를 가동시키고 있다.

여섯째, 일본의 여론은 동북아시아보다도 환태평양이라는 의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대감은 사라지고 있다. 정보화 사회가 진행되면 연합이나 협력체의 범위를 ‘동북아시아’나 ‘동아시아’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일곱째, 이 지역에서는 유럽과 같은 교류의 역사가 부재하고, 부정적인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상황에서 정치적, 군사적 공동체는 위험하고 좋지 않다는 여론이 있다. 이 지역에서 경제적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경제적인 다자간협력체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각국의 경제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느슨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먼저 ‘경제자유지역’ 등과 같은 방법으로 통해 경제공동체를 목표로 하더라도 4~50년의 시간을 투자해야 가능할 것이다.

○ 긍정의견

- 전문가 1: 인구가 14억에 이르는 중국과 함께 하는 것이 간단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적대해왔기 때문에 한·중·일 삼국이 연합하고, 적어도 ASEAN과 같은 느슨한 지역협력관계를 맺는 것은 지역의 안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특히 북한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가 능숙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지만, 본래는 한·중·일이 협력해서 북한과의 협력관계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한국의 노력을 존경합니다.
- 전문가 12: 지금은 미국의 분단정책과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 지배받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류관계를 구축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비대해지는 ‘군대’를 지금처럼 유지해 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 전문가 13: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방향으로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역사적으로 하나의 문화권을 이루었으며, 공통의 문화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 다른 점은 장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전문가 17: 가능성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 경쟁·분쟁을 회피하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코 쉽지 않다 하더라도, 현실적 군축이나 문화·경제적 왕래를 실마리로 EU의 성공한 점과 실패한 점을 잘 참조해서, 아시아에 적합한 공생 방식을 창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식민주의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 편협한 영토 내셔널리즘, 미국에 대한 추종으로, 이것의 극복이 필요 불가결합니다.
- 전문가 19: 전후 보상 문제나 역사인식 문제 등으로 일본은 다른 나라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냉전에 기인한 한반도의 분단이나 시장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의 대립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과 미국의 관계는 깊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세 하에서 동북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연합을 만드는 일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동북아시아의 교착상태도 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보아도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에 대항하면서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동북아시아에서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에 연합을 성립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최근 정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소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 전문가 20: 21세기의 세계질서를 구상할 경우 ‘다자간협력체’는 가능성을 따지기 이전에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EU를 모델로 할 필요는 없고 전례가 없는 새로운 주권의 존재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내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열린 공동체를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 부정의견

- 전문가 2: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큰 기회를 놓쳤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002년에 고이즈미 수상이 제창하고 2008년에 민주당 총재인 하토야마 수상이 제창하면서 당시 이 주제는 매우 핫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학계·관계·재계에서는 많은 연구자·정책입안자들이 차례로 관련 연구서를 출판하고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했지만, 그 후 이러한 흐름이 현실적인 정책론까지 구체화되는 일은 없었고 자민당도 민주당도 주장을 계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이 희박해졌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로는 중국이 당초부터 의구심을 가지고 거리를 두고 있었던 점, 다른 하나로는 일본도 북한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당초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 전문가 3: 정치적(군사적)으로 결집하는 것은 나쁜 공동(共同)인 동시에 현재로서는 비현실적인 구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일 가능하다면 한반도의 중립화를 실현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현된다면 동아시아의 중립지역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전문가 4: 한·중·일 삼국의 정부 간에서도 그러한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일본 정부, 적어도 현 정권은 전쟁이나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해결하는 데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대립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보도는 중국에 대해서는 패권노선을 추구해 주변 각국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인상을, 한국에 대해서도 역사문제 때문에 협조에 곤란을 안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냉전체제에 기인하는 바도 큼니다. 그런 한편으로 경제적인 상호의존은 깊어지고 있으며, TPP를 이 맥락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해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유학이나 관광여행 등에 의한 왕래도 급증하고 있으며, 그러한 민간교류를 통한 상호이해는 그 과정에 마찰을 내포하면서 확대될 것입니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최근에는 '일대일로'를 내세워 중국 주도로 경제권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 간부를 캐나다에서 체포하도록 요청했다고 보도되고 있으며 통상뿐만 아니라 사이버전을 중심으로 중국을 가상적국으로서 위협으로 보는 자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구축에 대해 한국과 일본 정부를 견제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5: 한·중·일 각각에서 내셔널리즘과 패권주의가 강한 현재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 전문가 6: 각국이 안고 있는 정치·경제적 과제나, 발전과 성장, 사회형성에 관한 비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경을 넘는 공동성을 상상하게 하는 성립기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전문가 7: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겠지만, '북동아시아 연합'의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학문적으로 정착된 용어는 없지만, 유럽의 통합과정을 토대로 볼 때 '연합(union)'이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역 통합(느슨한 연방에 가까운 형태)을 가리키며 주권을 제약하는 다양한 지역기구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보다도 낮은 단계가 '공동체(community)'입니다. 유럽의 연합과 같은 형태의 '연합'이라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통합의 정도는 낮지만 몇 개의 지역협력기구의 제도화가 추진되고 그것들을 묶은 것을 '공동체'로 정의할 수 있다면 북동아시아에도 공동체가 탄생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권의 제약이라는 점에서 통합의 정도는 낮은 형태로서 ASEAN은 2015년 12월부터 3개의 '공동체'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 전문가 8: '동북아시아연합' 혹은 '동아시아연합'과 같은 다자간협력체의 형성이 장래 지역의 안정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지역공동체의 선례가 되는 EU에서도 경제적 격차나 정치의식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동북아시아에서는 정치체제의 차이, 핵보유국과 그것에 반대하는 나라 간의 골이 깊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간에 강한 경계의식이나 대립감정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실현에 어려움이 수반될 것입니다. 또한 형성을 주도해야 할 정치적 지도자 간에 신뢰를 조성하는 기반이 결정적으로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실현을 가로막는 문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상황이 언제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전문가 9: 경제적인 다자간협력체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각국의 경제체제의 문제 때문에 '느슨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이상의 정치적 다자간협력체의 확립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 전문가 10: 한·중·일 삼국 간에 특정한, 예컨대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안전보장적인 공통의 가치관이 구축된다면 가능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공통된 가치관을 찾기는 어렵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냉전시대라면 사회주의 진영과의 대치라는 공통된 목적이 한일 간에 있었겠지만, 한자문화나 유교문화의 공유와 같은 애매한 요소로는 삼국의 연대로 나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 전문가 11: EU처럼 된다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좀처럼 현실적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선은 경제공동체를 목표로 하면서 4~50년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경제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인 것이지요. 중국, 일본, 한국이 겨우 대등한 경제조건에 도달한 것이 지난 10년의 일이니 우선 '경제자유지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일본, 한국, 중국의 초등, 중등, 고등, 대학의 교류를 추진하면서 30년 정도 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동아시아 연합을 만들어야 할지를 논의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겠지요.
- 전문가 14: 유럽과 같은 교류의 역사가 부재하고, 부의 역사를 청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며, 또 현재처럼 정보화가 진행되면 연합이나 협력체의 범위를 '동북아시아'나 '동아시아'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전문가 15: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있는 한 양자를 포함한 '연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황이 변화해 한국과 북한이 어떤 형태든 유효적인 관계를 이룬다면 여전히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것은 중국이 헤게모니 지향적인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게모니 지향 자체는 19세기부터 100년에 걸쳐 이른바 열강(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흑독한 대우를

받았던 점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지만, 비민주적이고 인권 억압이 극심한 점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인권 억압이 종종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무엇을 말해도, 무엇을 써도 그것 때문에 체포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중국의 거대한 경제규모로 보면 일본과 한국은 위성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궁지 높은 위성국가로서 그 위치에 머무른다는 선택은 나름의 현명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의 조공외교와 같은 방향입니다. 조공시대에 중국이 한반도나 일본에 침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원나라를 예외로 둔다면요.

- 전문가 16: 정치체제나 공유하는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이 공산주의 체제의 중국을 상대로 EU와 같은 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타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큰 문제도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의 여론에 관해 말한다면, 환태평양이라는 의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동아시아에 대한 연대감 같은 것은 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 전문가 18: 일본·한국과 중국·북한은 정치시스템·사회시스템·문화의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기초적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본·한국은 개방적인 민주주의 사회이며 중국·북한은 폐쇄적 내지는 반(半) 폐쇄적인 일당 독재의 통제 사회입니다. 공동체를 실현한다면 우선 중국·북한의 개방화·민주주의화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그 조건은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 동북아의 다자간협력체로서 경제, 안보, 문화공동체 중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 문 11 - 동북아시아에서의 다자적 협력관계의 유형을 경제공동체, 안보공동체, 문화공동체 등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동북아시아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 중 필요성이 높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를 그 필요성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해주시시오, 예를 들어, 안보공동체가 가장 필요하고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의 순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2) - (1) - (3) 의 순서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표 4-9〉 동북아다자협력체의 유형별 필요성 비교

	경제공동체	안보공동체	문화공동체	합계
필요성 1순위	9 (45.0%)	6 (30.0%)	5(25.0%)	20 (100.0%)
필요성 2순위	10 (50.0%)	5 (25.0%)	4 (20.0%)	19 (95.0%) ²⁵⁶⁾
필요성 3순위	1 (5.0%)	8 (40.0%)	10 (50.0%)	19 (95.0%)

- 일본의 전문가들은 동북아의 다자간협력체의 유형으로서 경제공동체-안보공동체-문화공동체 순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경제공동체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안보공동체의 경우를 우회하지만, 다음 항목에 나오는 필요성의 이유에 대한 답변을 보면 안보공동체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경제공동체와 안보공동체의 필요성을 중시한 응답자들은 경제와 안보가 문화공동체 구현의 전 단계로 보는 경향이 높았다.
- 반대로 문화공동체가 성립되어야 비로소 경제공동체와 안보공동체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되었다.

□ 동북아의 다자간협력체로서 문화(경제, 안보)공동체가 가장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문 12 - 위 11번 문항에서 문화공동체(혹은 경제공동체나 안보공동체)를 가장 필요성이 높은 과제로 선택하신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주시시오. 만약 동북아공동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를 적어주시시오.

동북아지역에서 다자협력체로서 안보공동체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한 근거는 대체적으로 이 지역 군사적 대립과 충돌에 대한 불안을 들고 있다. 이러한 대립이 발생하는 요인은 이들 지역의 정치가 내셔널리즘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문제는 일본의 전문가들에게 현실적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군비확장을 억제하고 군축으로 나아가는 등 안보체제를 마련해야 하며, 군사적 측면에서 힘의 균형이 아니라 비군사적 영역에까지 확장된 안보체제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보공동체는 아니더라도 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 재해와 분쟁 등으로 발생하는 난민문제 등 세계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리스크 공동체’를 제시한 의견 또한 넓은 의미의 안보, 안전을 강구하자는

256) 무응답자 1명(경제공동체 외 필요성 없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다자협력체로서 경제공동체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한 근거는 먼저 정치적 관계보다는 기업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구상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다음으로서는 이 지역에서 이미 경제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지역 내의 무역 규모가 이미 세계적으로 볼 때도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계 구축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기술과 제품을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역 내의 각국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이한 의견으로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경제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경제공동체의 필요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 다자협력체로서 문화공동체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의 주체가 국가나 기업이 아니라 민간의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국가는 국가주의적 색채가 강하고 기업은 조직의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넘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문화교류를 전개하면서 생활 속에서 민중의 공동체를 구상하자는 것이다. 사람들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상호 이해를 위한 감성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EU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유럽 통합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잔 모네는 문화공동체를 가장 중시해야 한다고 했다. 크리스토포공공동체라는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에서조차도 유럽 통합을 위해서는 문화공동체가 매우 필요하다고 말한 점을 통해 볼 때, 유럽과 같은 종교적 통합성이 약한 동북아시아에서는 이 지역의 통합을 위해서는 문화공동체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문화교류라고 할 때 '전통 예능' 등과 같은 분야의 교류가 아니라 현대 사회의 문화 교류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서양의 영향으로 근현대 사회를 구축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문제, 예를 들면, 남녀평등의 실현이 어려운 문제, 도시문제, 농촌의 공동화 문제, 문학과 예술의 사회적 위치 등이다. 서양 사상의 수용에 따른 동아시아의 현대 사상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협력체 구상에서 경제, 군사, 문화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한 일본 전문가들의 답변에서 안보와 경제적 측면이 문화적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반대로 문화적 공동체의 기반이 있어야 안보공동체 혹은 경제공동체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북아시아공동체가 필요하지 않다 혹은 이에 대한 유보적 의견도 일부 제시되었다. 동북아시아 공동체에 대해 반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라는 것이 문화적 다양성과 소수성을 억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위험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둘째, 통합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를 들면 이들 지역의 공용어를 설정한다면,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셋째, 동북아시아에 속하는 지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이다. 동북아시아의 범위 그 자체를 한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공동체가 동남아시아 혹은 오세아니아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지역 통합의 단계로 이끌어가기 위해 각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차이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안보공동체에서는 일본의 헌법 9조의 문제, 영토분쟁, 남북문제, 중국-타이완 문제 등이 있다. 경제공동체에서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상당히 크고 또한 중국 국내에서의 상당한 격차 문제가 있다.

□ 동북아의 다자간협력체로서 경제(안보, 문화)공동체 중 어느 것이 실현가능성이 높은가?

- 문 13 - 필요성과 상관없이,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공동체, 안보공동체, 문화공동체 중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를 그 실현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해주시시오, 예를 들어, 안보공동체의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고,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의 순서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2) - (1) - (3)의 순서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표 4-10〉 동북아다자협력체의 유형별 실현 가능성 비교

	경제공동체	안보공동체	문화공동체	합계
실현가능성 1순위	11 (55.0%)	1 (5.0%)	8 (40.0%)	20 (100.0%)
실현가능성 2순위	9 (45.0%)	6 (30.0%)	3 (15.0%)	18 (90.0%) ²⁵⁷⁾
실현가능성 3순위	0 (0.0%)	11 (55.0%)	7 (35.0%)	18 (90.0%)

○ 동북아의 다자간협력체의 유형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응답에서는 경제공동체 - 문화공동체 - 안보공동체 순으로 응답했다.

○ 안보공동체는 안보공동체의 필요성 항목에서는 다수의 긍정적 의견이 있었지만, 실현가능성

257) 무응답자 2명(경제공동체 외 실현가능성 없음)

에서는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 문화공동체는 필요성 항목에서 경제공동체, 안보공동체의 경우보다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지만, 실현가능성에서는 필요성의 경우보다 긍정적인 의견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 동북아의 다자간협력체로서 경제(안보, 문화)공동체 중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 문 14 - 위 13번 문항에서 문화공동체(혹은 경제공동체나 안보공동체)를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과제로 선택하신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주시시오. 만약 동북아공동체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를 적어주시시오.

동북아시아의 다자간협력체로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순서로서 제시된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안보공동체에 대해 각각 그 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경제공동체의 실현가능성을 높게 보는 가장 큰 요인은 먼저 이미 이들 지역에서 경제적 교류가 활발하고 경제공동체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동아시아 경제권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달성하였다. 중국 경제의 성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경제가 이미 아메리카와 유럽연합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적 여건이 경제공동체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을 높게 예견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부각되고 있다. 더구나 세계 경제가 정치체제와 역사적 조건을 넘어서 글로벌 머니로서 작동하고 있으며, 세계적 차원에서 이미 경제적 측면의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이 전에 없이 증가하는 현상을 감안하면, 어느 국가에도 경제적인 합의가 절실하게 된다.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동북아시아 각 지역의 경제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공동체적 연계를 가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중국공산당의 정치 체제나 개방되지 않은 북한 체제는 이 지역의 경제공동체 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며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미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어 있으며, 북한 또한 군비 우선 정책에서 경제 우선으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경제공동체의 실현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적 영역이라는 점이다. 역사인식 문제, 식민지배, 전쟁책임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태도 또한 경제적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관점이다. 응답자의 회답의 예를 인용하면, 한국이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으로 중요한 외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화공동체의 실현가능성을 높게 보는 가장 큰 요인은 이 지역 내에 공유 가능한 역사적, 문화적 조건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공동체 논의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이다. 또 다른 요인은 문화공동체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인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K-POP, J-POP, 망가(만화) 등은 이미 국가를 넘어서 수용되고 있고, 문화적으로 공통된 감성이 형성되어 있다.

문화공동체의 실현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 가운데 특이한 근거는 문화공동체가 경제공동체, 안보공동체의 실현보다 용이하다는 의견이다. 경제공동체나 안보공동체는 국가 간의 정치적 요인 또는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문화적 교류는 이러한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안보공동체를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의견은 매우 소수였다. 그 이유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내셔널리즘이 매우 강하고 타국과의 '공동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일본 정부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까?

- 문 22 - 만약 일본정부가 한·중·일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주변 국가와 지역들을 포함시키는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추진한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나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표 4-11〉 정부주도 한·중·일 중심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

한·중·일 중심 문화공동체 실현가능성	빈도	%
(1) 매우 가능하다	1	5.0%
(2) 어느 정도 가능하다	2	10.0%
(3) 어느 정도 불가능하다	11	55.0%
(4) 전혀 불가능하다	6	30.0%
* 가능 = (1)+(2)	3	15.0%
* 불가능 = (3)+(4)	17	85.0%
합계	20	100.0%

□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의 실현 가능성

- 일본 전문가 20인 중 한·중·일 정부가 주변 국가를 포함하는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추진할 때,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3인,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17인으로,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 일본 정부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 문 23 - 위 22번 문항에서 “(1) 매우 가능” 혹은 “(2) 어느 정도 가능”을 선택했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주시시오.

일본정부가 한·중·일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주변 국가와 지역들을 포함시키는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추진한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나 실현가능할 것인가를 묻는 항목에서 일본의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상당할 정도로 높게 나왔다.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은 소수였지만, 그 근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정부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 주된 원인은 일본이 과거에 무력으로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 반성으로 인한 것이다. 다음으로 거론할 수 있는 원인은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으로 일본이 제창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대체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중국이 ‘지역경제권의 구축’을 계기로 대상지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일본 정부로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작년부터 ‘열린 외교정책’, ‘경제정책의 단계적 채용’이라는 시나리오를 현실감 있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태도 또한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견해는 이 지역의 주변 정세의 변화에 따른 일본의 태도가 전환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문화공동체’를 ‘사회·문화공동체’로 이해한다면, 인적 교류를 포함한 사회적 교류를 제도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는 각국의 이해관계와 합치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국경을 넘어 인재를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역 내의 인적 자원과 물류의 이동이 국가를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급격하게 진행되는 글로벌리즘에 따른 조건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 긍정적 의견

- 전문가 2: 이미 대강 말했기 때문에 반복을 피하겠지만,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적극적이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불가결한 파트너인 중국이 줄곧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거리를 두어왔다는 것이 문제의 배경에 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가 성립된 2013년 이후부터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가지고 일본이 제창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경제주권’ 구상은 어디까지나 ‘지역경제권의 구축’을 계기로 대상지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일본 정부로서는 신중하게 된다는 점에 기인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걱정거리인 북한이 작년부터 ‘열린 외교정책·경제정책의 단계적 채용’이라는 시나리오를 현실감 있게 시작하고 있는 지금, 일본 정부의 태도 또한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 전문가 7: ‘문화공동체’를 ‘사회·문화공동체’로 이해한다면, 인적 교류를 포함한 사회적 교류를 제도화시키는 ‘공동체’는 각국의 이해관계와 합치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국경을 넘어 인재를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전문가 13: ‘일본’은 과거에 무력으로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 반성으로서 공동체 형성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신국(神國)을 강조하고 공동체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존재합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을 추진한다면,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은 실현될 것입니다.

□ 일본 정부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 문 24 - 위 22번 문항에서 “(3) 어느 정도 불가능” 혹은 “(4) 전혀 불가능”을 선택하셨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주시시오.

일본 정부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추진한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나 실현가능할 것인가를 묻는 항목에서 일본의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이 전쟁책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회와 보상 등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일본이 주도적으로 동북아공동체를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일본의 역사인식에서 되풀이 되듯이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인근 지역이나 국가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이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추진하는 경우 그 정치적 의도가 의심받을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

둘째,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을 적대시하거나 중국·한국·북한에 대한 적대감정을 부추기면서 지지기반을 결속시키는 배외주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 ‘혐한’(嫌韓), ‘혐중’(嫌中) 분위기와 우익의 헤이트 스피치, 역사수정주의의 등장 등은 정권의 정치적 전략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셋째, 현재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미국에 종속하는 외교노선을 고수하고 있으며 한국·중국과의 긴장관계를 연출하여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를 피하고 있다. 군사동맹에 대해 말하면, 일본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제휴하는 편이 이득이 있고 유리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환태평양이라는 의식이 최근에는 더 강해지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자 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넷째, ‘동아시아 공동체’를 외교과제로 내걸었던 구 민주당에 대한 불신감이 국민 사이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다. 이 지역의 공동체 구상은 과거에 내걸었다가 성공하지 못했던 정책이라는 이미지가 남아있다.

다섯째, 정치중심의 논리로서는 지역공동체 구상이 가능할까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다. 국가는 특히 동아시아 국가, 혹은 일본의 아베정권은 내셔널리즘이 강하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나아가 일본은 최초로 근대화하고 주도권을 장악했던 시대의 헤게모니 지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문화공동체를 일본 정부가 추진한다면, 반드시 일본이 중심이 되고자 할 것이며 한국과 중국을 낮춰보는 태도를 계속해서 취할 수 있다.

여섯째, 지역공동체 구상은 국가적 차원 혹은 군사적 차원이 아니라 도시나 조직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적 주장이다. 즉 지역공동체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 혹은 문화의 측면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의 경제이익으로서의 공동체, 젊은 세대의 문화공동체, 지식인에 의한 안전보장의 공동체 등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한·중·일 사이에서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연대감, 공유된 정치이념이 결여되어 있다. 옛날의 일본인들에게는 일본문화의 원류 중 하나로 중국문화라는 것이 존재했지만, 그러한 의식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 중국이나 한국에 대한 문화적 연대감이라는 것은 지금의 일본인 사이에서는 거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히려 공동문화가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급속한 근대화의 뒤를쫓는 비관과 저항운동과 교류함으로써 ‘새로운 공통성’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되었다.

여덟째, 거대한 중국 문제이다. 중간 규모의 국가들이 병립하는 유럽과 달리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등한 입장에서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가

없다. 국가의 규모 문제 뿐만 아니라 정치체제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민주주의화된 개방사회인 일본과 한국이 비민주주의적이고 통제성이 강한 중국과 북한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동체를 구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내륙아시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동북아시아에 포함되는 일본·한국과는 주어진 조건이 너무나 다르다.

○ 부정적 의견

- 전문가 1: 저는 정치학자로서 적어도 지금의 일본정부에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정치가 평화를 만든다고도 그다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항상 국가이익을 목표로 내셔널리즘에 기반한 행동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경제, 문화에서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한·중·일 중 일본이 가장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컨대 경제적 측면에서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경단련(經團聯, 일본경제단체연합회)과 재무성은 일본경제가 더 이상 적자나 무역마찰을 확대하지 않기 위해 한국 및 중국과의 연계, AIIB와의 연계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는 참 재미있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경제이익으로서의 공동체(내지 지역공동), 젊은 세대의 문화공동, 지식인에 의한 안전보장의 공동체 - 이 지역에서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강한 각오를 가진 지식인 안전보장의 제도화 - 우선은 대화의 장을 일상화하는 것, 각 시설이 폭발하지 않도록 안전보장을 확인하는 것, 비전통적인 안전보장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군사적 동맹도 동아시아 공동체와 다른 형태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열도는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자연의 요새를 이루고 있습니다. 3,000킬로미터에 걸쳐 중국이 해양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있습니다. 세계의 대국이라면 누구나 이 자연의 요새를 탐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군사식민지로 이용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식민지가 되지 않았던 것은 일본인들이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훌륭한 점이며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일본은(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대륙을 향해 식민지를 찾아나갔습니다. 그것이 두 번의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일본의 지정학은 한반도와 중국에 대해 미국과 연계되는 전초기지로써(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는 최고의 군사기지입니다. 따라서 안전보장이 마지막, 경제와 문화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사동맹에 대해 말하면, 일본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제휴하는 편이 이득이 있고 유리할 것입니다. 배후에는 지구의 1/2을 차지하는 태평양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대륙에 대해서는 러시아, 중국, 한반도가 바다로 나가는 출구를 막고 있습니다. 이를 역전시켜 대륙과 제후하는 이익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경제연합, 문화연합, 사회적으로 공동의 정체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군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경제나 문화, 교육, 음악, 예술, 관광 등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상호이해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전문가 3: 정부가 정치적으로 ‘공동’을 내세운다면 그 정치성을 충분히 음미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발언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문가 4: 신자유주의정책 하에서 일본경제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으며 배외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현 정권은 한중을 적대시함으로써 지지기반을 결속시키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일본회의라는 정치단체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조사보고도 있는데, 이 단체는 세이쵸노이에(生長の家)에서 나온 한 분파이며 역사수정주의를 표방하는 종교단체를 모체로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의 영향력은 약하고 모멸, 공격, 차별선동이 그들의 지지 조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에 종속하는 외교노선을 고수하고 있으며 한중과의 긴장관계를 연출하여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를 피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흐름이 변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사회에 대해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보장이 비약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민간기업이 진출한 해외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 전문가 5: 전후책임·식민지배 책임문제가 미해결로 남아있기 때문에 중국·한국 정부나 사회에 대한 불신감을 불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형성에 추진자가 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전문가 6: 향후 필요한 공동체는 국가(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 도시나 조직을 중심으로 짜여진 네트워크의 ‘결과’로서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즉 정부가 타국 정부와 교섭하여 추진하는 과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역할이라면 로컬 간의 연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법을 정비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 전문가 8: 물론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싶다는 것이 진정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앞으로도 정권을 담당할 정당은 ‘일본을 되찾는다=japan first’를 내세워 지지를 얻고 있으며 중국·한국·북한에 대한 적대감정을 부추김으로써 정권유지를 도모해왔습니다. 한편 정권이 교체되었을 당시 ‘동아시아 공동체’를 외교과제로 내걸었던 구 민주당에 대한 불신감이 국민 사이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또다시 일어난다고 해도(그 가능성은 적지만) 과거에 내걸었다가 성공하지 못했던 공동체 구상을 또다시 내세우는 일은 이제 트라우마 수준으로 회피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공동체 구상을 전면내세워

추진할 가능성은, 유감이지만 현실점에서는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 전문가 9: 일본 정부가 현재의 아베 정권의 계속 내지 그 연장선상에 있다면, 미국과의 관계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동북아시아문화공동체' 논의는 진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에 대한 '자주규제' 요구도 나날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본 전체에 흐르는 '혐한'(嫌韓), '혐중'(嫌中) 분위기가 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전문가 10: 한·중·일 사이에서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행동이 나타나는데 무엇을 동기로 할까요. 저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동기는 없다고 봐야지요. 옛날의 일본인들에게는 일본문화의 원류 중 하나로 중국문화라는 것이 존재했지만, 그러한 의식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한국에 대한 문화적 연대감이라는 것은 지금의 일본인 사이에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공동체의 '유대'로 할 것인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 전문가 11: 식민지의 역사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한국 등 주변국들의 신뢰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 12: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부터 일본은 일관되게 자신이 중국·한국·북한에서 저지른 침략전쟁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인의 더러워진 손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일본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 능력도, 힘도, 의지도 지금의 정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전문가 14: 지금의 일본 정부가 일본의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이외의 방식으로 동북아시아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추진할 거라는 기대는 전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전문가 15: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의 현실을 보려고 하지 않으며 최초로 근대화하고 주도권을 장악했던 시대의 헤게모니 지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문화공동체를 일본 정부가 추진한다면, 반드시 자신이 중심이 되고자 할 것이며 나머지 두 나라를 낮춰보는 태도를 계속해서 취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일반의 일본인보다도 일본 정부 관계자가 훨씬 더 나쁩니다. 공동문화가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급속한 근대화의 뒤틀림에 신음하는 비판과 저항운동과 교류함으로써 '새로운 공통성'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전문가 16: 되풀이되지만, 정치체제나 정치적 이념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동북아시아문화공동체를 추진할 동기가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환태평양이라는 의식이 최근에는 더 강해지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자 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 전문가 17: 무엇보다도 일본정부가 과거의 식민지배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관계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친구 우익의 헤이트 스피치가 늘어나고 있으며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걸맞은 대응을 하겠다는 태도를 시민사회 쪽에서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상황을 이중삼중으로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전문가 18: (1) 중간 규모의 국가들이 병립하는 유럽과 달리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등한 입장에서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2) 이미 언급했듯이 민주주의화된 개방사회인 일본과 한국이 비민주주의적이고 통제성이 강한 중국과 북한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동체를 구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중국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내륙아시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동북아시아에 포함되는 일본·한국과 너무나 다릅니다. (4) 따라서 중국·북한이 개방사회가 된다면 공동체 구축의 가능성 또한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3)의 문제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전문가 19: 일본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역사인식이나 한국·중국·북한을 대하는 자세는 사실의 오인에 기초하거나 위에서 내려다보는 말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국으로부터 반발을 일으키는 가능성이 큼니다. 경제적인 규모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구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동북아시아에서 리더십을 갖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노선으로 리더십을 갖고자 한다면 아무래도 동북아시아 내부에 분열이 생겨 연합으로서의 기능은 형해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문가 20: 역대 일본정부에게는 과거의 제국주의와 침략전쟁을 제대로 청산하고자 하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다면 일본 정부에게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4. 동북아시아의 정체성과 한·중·일 상호인식

- 해당문항: 문 15-20, 문 26-34

가. 동북아시아의 공통적 정체성의 존재 유무

□ 동북아의 공통적 정체성 부재에 대한 의견

- 문 15 - 험머와 카첸슈타인(Christopher Hemmer and Peter Katzenstein)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지역에서 유럽연합이 가능했지만, 아시아에서는 이에 비견될 만한 지역적 다자협력기 형성되지 못했던 이유를 지역내 국가들이 공유하는 정체성의 유무에서 찾고 있습니다. 즉, 아시

아 국가들은 공통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 통합에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공통적인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십니까?

〈표 4-12〉 동북아에 공통적 정체성이 부재하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

동북아의 공통적 정체성 부재	빈도	%
(1) 매우 공감한다	3	15.0%
(2) 어느 정도 공감하다	5	25.0%
(3) 어느 정도 공감하지 않는다	8	40.0%
(4)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4	20.0%
* 공감 = (1)+(2)	8	40.0%
* 공감하지 않음 = (3)+(4)	12	40.0%
합계	20	100.0%

일본 전문가 20인 중 “공통적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험머(Christopher Hemmer)와 카첸슈타인(Peter J. Katzenstein)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8인,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인으로, 아시아에서도 공통적 정체성이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다만, 찬성이든 반대이든, 공통적 정체성의 존재 여부보다 이질적 차이를 존중하고 역사적 대립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더욱 강조한다.

‘공통성’의 존재 여부가 ‘정체성’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공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결을 달리한다. 애초에 정체성 논의가 서양 근대의 주체를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또한 정체성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 만들어지고 갱신된다. 따라서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발상은 소극적이며 수동적이다.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형성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정체성이 다른 자들끼리 서로를 인정 하면서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궁리하고 모색하는가의 태도이다. 정체성 의식이 다른 타자들 사이에서 화해를 이루고 공생을 추구하기 위해 협력해야만 공동체의 실질적인 기반이 형성되리라는 견해는 매우 시사적이다.

□ 동북아시아의 공통적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 문 16 - 위 15번 문항에서 “(1) 매우 공감” 혹은 “(2) 어느 정도 공감”을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전문가들은 유럽에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근본에서부터 묻는다.

흔히 유럽의 정체성은 기독교 문명의 공통성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두 번의 세계 대전을 치르며 5천만 이상의 인명을 희생시킨 유럽은 아시아보다 훨씬 더 서로를 적대시한 역사를 가졌다. 유럽의 문명도 다양하며 일신교인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대립은 테러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야기하고 있다. 험머와 카첸슈타인의 유럽 정체성 학설은 냉전 시대를 거치며 서구 사회가 NATO를 만들어 서로 협력할 필요에서 나온 측면이 강하다. 유럽에서 시민사회가 발전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개인주의 성향도 강해서 유럽연합 내 갈등을 노정한다. 이와 같은 근거로 응답자들은 유럽의 정체성 논의를 접할 때에도 비판적 사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동북아시아에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 근거로는 영토의 규모, 경제적 수준, 언어적 유사성, 그리고 역사적 경험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지적된다. 유교문화권, 불교문화권이 존재하지만, 유교와 불교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공통의 규범으로 정착하지 않았다. 한자문화권이 인정되지만, 한문 문자를 공유할 뿐 언어적 친화성이 적어서 직접 소통하기 어렵다. 역사적으로도 일본의 식민 지배와 냉전적 분단이 정치적, 문화적 공통성의 형성을 제약했다. 사람들의 교류도 유럽에서 만큼 활발하지 않다.

□ 동북아시아의 공통적 정체성이 존재한다

- 문 17 - 위 15번 문항에서 “(3) 어느 정도 공감하지 않음” 혹은 “(4) 전혀 공감하지 않음”을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유교, 불교, 한자 문화권에서 보듯이 유럽이 아닌 동아시아에서 오히려 공통의 문화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 지식인들이 한학으로 수양하는 등 문화적 공동체가 가능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해버리면 정체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관점도 관심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일본의 아시아 침략의 역사와 냉전적 대립의 역사가 통일적 정체성의 공유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본이 동문동종(同文同種)을 표어로 내걸고 식민지 동화정책을 정당화한 적도 있다.

대립의 역사로 인해 동북아시아에는 민족 정체성이 강하며 지역성에 대한 공통인식이 약한 편이다. 공통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역사적 유화(宥和)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적, 경제적, 윤리적, 정치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경제 활동에서 공동체적 요소를 만드는 일도 중요한 만큼 FTA와 같은 경제협정을 체결할 필요성도 높다.

일본의 식민통치 하에서 일본과 만주로 이동한 조선인들도 있었고, 오늘날 사람이나 문화의 이동에서 공시적인 생활 공통성이 확산하는 현상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타자에 대한 존중,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옹호하는 입장을 공유할 가능성도 커진다. 동남아시아에서 이데올로기 대립의 역사를 극복하고 아세안을 형성한 것처럼 동북아시아 차원에서도 꾸준히 노력하면 지역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 동북아시아 공통의 정체성을 이루는 요소

- 문 18 - 만약 동북아시아의 공통적인 정체성을 찾는다면, 그 정체성의 바탕을 이루는 요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표 4-13〉 동북아시아 공통 정체성의 바탕을 이루는 요소

	긍정	부정	합계
유교문화 및 한자 사용	13 (65.0%)	7 (35.0%)	20 (100.0%)
서세동점 시기에 대한 공통의 역사적 경험	10 (50.0%)	10 (50.0%)	20 (100.0%)
공통의 경제적 이해관계	12 (60.0%)	8 (40.0%)	20 (100.0%)
군사적 안보 협력의 필요성	3 (15.0%)	17 (85.0%)	20 (100.0%)
비군사적 안보 협력의 필요성	9 (45.0%)	11 (55.0%)	20 (100.0%)
환경 문제에 대한 공통적 대응의 필요성	14 (70.0%)	6 (30.0%)	20 (100.0%)
노동, 복지, 이민자, 인구 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공통적 대응의 필요성	16 (80.0%)	4 (20.0%)	20 (100.0%)
한류(韓流) 등 공통적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11 (55.0%)	9 (45.0%)	20 (100.0%)

위의 표에서 동북아시아 공통의 정체성을 이루는 요소로서 공동으로 대응하거나, 협력과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높다고 답한 사안을 순위대로 정렬하면 아래와 같다.

- 1) 노동, 복지, 이민자, 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
- 2) 환경 문제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
- 3) 유교문화 및 한자 사용
- 4) 공통의 경제적 이해관계
- 5) 한류(韓流) 등 대중문화에 대한 공통의 관심
- 6) 서세동점 시기에 대한 공통의 역사적 경험
- 7) 비군사적 안보 협력의 필요성
- 8) 군사적 안보 협력의 필요성

이 결과를 보면, 동시대에서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 환경, 경제 문제가 우위를 차지하고, 문화와 역사적 경험의 공통성 및 대중적 교류, 비군사적 또는 군사적인 안보 영역에 걸친 위기관리의 순서대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 문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협력 가능성을 확대할 영역으로 가장 많이 제기된 분야가 '교육'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논하면서 후술하기로 한다.

나. 한·중·일의 상호인식

□ 혐한, 혐일, 혐중 현상과 관련하여

- 문 28, 29: 한국에서의 혐중, 혐일 수준

〈표 4-14〉 한국의 혐중과 혐일 수준

한국의 혐오 수준	한국에서의 혐중	한국에서의 혐일
(1) 매우 심각	1 (5%)	5 (25%)
(2) 어느 정도 심각	7 (35%)	5 (25%)
(3) 그다지 심각하지 않음	9 (45%)	7 (35%)
(4) 전혀 심각하지 않음	1 (5%)	3 (15%)
* 심각함 = (1)+(2)	8 (40%)	10 (50%)
* 심각하지 않음 = (3)+(4)	10 (50%)	10 (50%)
합계	18 (90.0%) ²⁵⁸⁾	20 (100.0%)

258) 무응답자 2명(상황을 잘 알 수 없음)

• 문 30, 31: 일본에서의 혐한, 혐중 수준

〈표 4-15〉 일본의 혐한과 혐중 수준

일본의 혐오 수준	일본에서의 혐한	일본에서의 혐중
(1) 매우 심각	11 (55%)	10 (50%)
(2) 어느 정도 심각	6 (30%)	6 (30%)
(3) 그다지 심각하지 않음	2 (10%)	4 (20%)
(4) 전혀 심각하지 않음	0 (0%)	0 (0%)
* 심각함 = (1)+(2)	17 (85%)	16 (80%)
* 심각하지 않음 = (3)+(4)	2 (10%)	4 (20%)
합계	19 (95.0%) ²⁵⁹⁾	20 (100.0%)

• 문 32, 33: 중국에서의 혐한, 혐일 수준

〈표 4-16〉 중국의 혐한과 혐일 수준

중국의 혐오 수준	중국에서의 혐한	중국에서의 혐일
(1) 매우 심각	1 (5%)	2 (10%)
(2) 어느 정도 심각	5 (25%)	7 (35%)
(3) 그다지 심각하지 않음	9 (45%)	9 (45%)
(4) 전혀 심각하지 않음	4 (20%)	2 (10%)
* 심각함 = (1)+(2)	6 (30%)	9 (45%)
* 심각하지 않음 = (3)+(4)	13 (65%)	11 (55%)
합계	19 (95.0%) ²⁶⁰⁾	20 (100.0%)

한·중·일 상호 인식과 감정에 대한 조사 결과, 일본에서 혐한 및 혐중 현상은 매우 심각하고, 한국에서의 혐중·혐한 현상은 어느 정도 심각하며, 중국에서 혐한·혐일은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특히, 일본에서의 혐한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11명, 어느 정도 심각하다는 응답이 6명,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2명,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0명으로, 전반적으로 일본 사회 내에서의 혐한 감정이 심각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답변의 내용은 더욱 복잡적이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259) 무응답자 1명(무응답 사유 명시하지 않음)

260) 무응답자 1명(무응답 사유 명시하지 않음)

□ 일본인의 한국 인식과 혐한 감정

- 문 34 - 일본인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 및 감정은 ‘근친증오’처럼 복합적이며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말하기 어렵다. K-POP의 수용으로 한국에 대한 태도가 세대 별로 달라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인 수치로 제시된 호오 감정이 사회적인 호오 감정을 재구성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수집된 인식이나 감정에 관한 수치가 역으로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감정의 동원’에 이용되는 상황이 염려된다는 견해도 있다.

시기 별 변화를 보면, 2002년 이후 한류 붐이 일어나 2012년 이전까지 한국에 대한 호감이 높았던 시기도 있었다. 2012년 8월부터 혐한 시위가 급증했지만, 2015년 한일합의로 진정 국면을 보이기도 했다. 2016년 혐오시위나 행동을 억제하는 대책법의 시행으로 혐한 시위는 줄었다. 정부 정책에 대항하는 일부 ‘혐한’ 세력이 성장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각부가 매년 실시하는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중, 2018년 10월 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 약 40%로 좋아진 상태였다.

호전 중이던 한국 이미지는 2018년 11월부터 다시 악화되었다. 위안부문제 한일합의의 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 레이더 조사 등의 쟁점들이 부각되면서 한국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과 ‘2015년 한일합의’를 폐기했다는 인식이 퍼지고, ‘한국(인)은 거짓말쟁이’라는 불신감이 확산 중이다. 일상에서 친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조차 어려운 분위기다. 현재의 한일관계는 일본 정부가 군사력을 증강하고 쇄신시키는 정책을 정당화해주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된다.

일본 정부는 언론보다는 비교적 냉정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성장하는 중국이나 한국에 대한 위협의식을 지니고 있다. 일본의 기성세대가 한국의 시위 문화를 보면서 민주주의를 평가하거나, 과거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자각하는 태도는 일부의 지식인에 국한되어 나타난다. 오히려 대다수는 한국인이 감정적이어서 일본인보다 열등하며, 한국사회가 비생산적인 논의를 전개하는 성숙하지 못한 사회라고 인식하는 경향조차 강하다.

세대별 경험과 인식의 양상을 보면, 일본의 50~70대는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해 무관심하다가 한류 붐을 계기로 한국을 ‘재발견’하고 팬 층을 형성했지만, 최근 다시 일변하여 이 세대를 중심으로 혐한감정이 높아지고 있다. 10~20대에 한류 붐을 만난 30~40대의 이른바 ‘넷우익’ 세대에도

협한 감정이 녹아 있다. 일본의 언론이 한국의 '반일'을 보도하면서 협한 감정을 세뇌하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대다수 일본인은 과거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고집스런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감각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류의 수용이 지속적이므로 협한 현상만을 주목해서는 곤란하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김치와 예능을 즐기며 저렴하게 관광할 수 있는 곳이다. 관광을 통한 인적 교류의 활성화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이나 중국에 공감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났다. K-POP은 일본의 하위문화로 이미 정착했다. 젊은 세대에게 한국은 '경제대국'으로 인식되며, K-POP을 비롯해 최첨단의 세련된 문화를 발신하는 상대로 인식된다.

젊은 세대의 다수는 정치와 역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한일 간의 정치적 갈등에 좌우되지 않는다. 언론 보도를 일방적으로 접수하기보다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한다. 10대들은 한국을 동경하기도 한다. 문제는 그들이 성장하면서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반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와 시민 사회 차원에서 현재와 같은 갈등상태를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5. 한·중·일 문화적 협력방안

- 해당문항: 문 21, 문 25, 문 35-41

가. 동북아 민간 교류와 동북아문화공동체

- 문 38 - 정부 및 국가 차원에서의 갈등과 달리, 사회 및 문화, 관광 차원에서 한·중·일의 상호 교류는 최근 대단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한류나 일본 방문객의 폭발적 증가 등). 이러한 민간 및 개인차원에서의 동북아시아내 교류의 전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표 4-17〉 동북아 민간교류 전망

동북아 민간교류 전망	빈도	%
(1) 크게 증가할 것	11	55%
(2) 어느 정도 증가할 것	7	35%
(3) 어느 정도 감소할 것	2	10%
(4) 매우 감소할 것	0	0%
* 증가전망 = (1)+(2)	18	90%
* 감소전망 = (3)+(4)	2	10%
합계	20	100.0%

- 문 40 - 민간교류와 동북아문화공동체: “이러한 민간 문화 교류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4-18〉 민간교류와 동북아문화공동체

민간교류와 동북아문화공동체	빈도	%
민간 문화교류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18	90.0%
민간 문화교류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은 큰 상관이 없을 것이다	2	10.0%
합계	20	100.0%

일본의 전문가들은 한류와 관광이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며, 민간 교류의 활성화가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형성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설문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출되었다.

- 문 41 - 동북아문화공동체를 추진한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생각하신 바를 기술해주시요.

○ 정부의 역할: 불신 해소, 교류 촉진, 공공 외교

국가는 국익을 증시하기 때문에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에서 그 역할이 제한적이어야 한다. 정부 주도의 공동체 구상은 비핵화·중립화를 추진하는 맥락에서만 인정된다. 정부의 역할은 상호 불신의 연쇄를 제거하는 것에 있다. 정치가들이 대외 불신과 배외주의 풍조를 조장하는 사태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필요하다.

각국 정부는 외교적 마찰을 해결하려는 공식, 비공식적 대화도 활성화하고, 문화 교류의 촉진, 관광 인구의 확대, 다양한 수준에서의 협력 교류를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시민사회의 교류와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되, 내용적인 간섭은 피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역사 문제에 근거한 한일의 다양한 쟁점에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일본 정부가 과거 침략이나 식민지배 역사를 반성의 기제로 삼고, 개인에게 사죄 배상하는 방법을 취한다면 국익을 넘어서는 공생의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조선학교와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 정책을 청산하여 지방 참정권을 보장하는 논의도 필요하다. 정부가 개인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대응해야 하는데, 정치가들이 오히려 험한 여론을 조장하는 현실이다.

한국 정부는 역사 문제 등 다양하게 제기된 쟁점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알기 쉽게 일본 사회에 설명해야 한다.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강화하여, 일본의 언론에만 노출된 일본인들의 사고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한국의 논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한국에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험한 현상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지식인, 언론이 모두 자국과 상대국의 국민 여론의 향방을 바꾸려고 노력하며, 서로 갈등을 억제하도록 자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의식을 정립하고 새로운 협력의 흐름을 만드는 계기가 필요하다.

○ 시민 사회: 공생 가능한 ‘사회 문화 공동체’를 위한 노력

시민들도 국가의 책임만으로 돌리지 말고, 공생 사회의 창출에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사회란 무엇이며, 동북아시아 각국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그 정의와 존재 여부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논쟁적 사안이다.

동북아시아문화공동체에서 문화의 개념을 확장시켜 ‘사회문화공동체’를 표방하고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때, 시민사회의 대표성이 문제된다. 일본 정부가 시민사회 요구에 종속되어 있는 문제도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가 미분리 상태인 셈이다.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의견 수렴의 과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도 제기된다.

시민사회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서도 각 지역 간에 교류하고 협동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동아시아문화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공통의 목표를 형성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배외적인 애국심을 자제하는 성숙함으로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 세계시민으로 성장해야 한다. 타자와 공생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기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 교육, 지식인의 역할이 요구된다.

시민사회는 이문화와 외국어를 학습하여 차별의식과 배타적 애국주의 등을 극복해야 한다. 풀뿌리와 식자들의 교류가 모두 중요하다.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이주자가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도 중시되어야 한다. 이주자의 생활을 정부와 시민사회가 동등하게 보장하여 이주자가 공동체의 인재로 활약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사회에서 사상가, 연구자, 정책 입안자, 언론인들을 포함한 동아시아 정책 토론회, 공동연

구회, 국제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서로의 외교정책 입안에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밖에 청소년 간의 교류와 생활 속의 안전 보장을 협력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교류도 새롭게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군사적 경계선 사이에서는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되, 정부와 지자체 차원만 아니라 대학과 기업, 젊은이들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공동체론’과 관련하여 외교정책의 입안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시민사회 연구팀’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결과적으로 향후 한국(북한), 중국, 일본에서 정부의 역할이 분명해질 것이다.

나. 동북아문화공동체를 향한 한·중·일 문화적 협력 방안

- 문 21 - 경제협력이나 안보협력, 정치적 교류 등의 활동 외에, 한·중·일의 다자적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적 협력 방안이 있겠습니까?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아젠다와 방법을 설명해주시시오(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정치, 경제, 안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해주시시오. 예를 들어 교육이나 환경 등도 이 맥락의 문화 개념에 포함됩니다).

이 설문에 대한 응답에서는 공동의 가치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시스템을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상호 이해를 위한 교육 교류를 활성화시켜 광범한 젊은이들의 교류를 지원할 것이 강조되었다. 또한, 환경오염과 기후변동의 문제에 대처하여 동북아시아 공통의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지자체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재난과 공해 문제만이 아니라 관광 교류 사업도 수행할 것이 제기되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의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의 제도화

(1) 배타적 내셔널리즘과 좌우 편향성의 극복

한·중·일 국가 차원에서 타인에 대한 관용성과 다양성의 관점을 함양하는 교육 제도와 기업 문화를 충실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 복안적인 역사관 구축, 다원적인 역사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자국 중심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구축한 권력이나 인식 논리를 상대국이나 타자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체험하는 환경을 만들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좌우 이념의 역사인식이 국경을 넘어서 갈등을 일으키는 현상도 무시할 수 없다. 냉전시기 일본과 한국(북한)의 주요 사상가, 연구자, 언론인들이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자국의 역사를 서술했는지를 서로가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공동체론’과 관련하여 외교정책의 입안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시민사회적’ 연구팀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확립해 나갈 필요성도 제기된다.

(2) 언론의 선동과 역사인식의 분단 극복

한·중·일의 상호 이해와 이미지 형성에서 언론이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일본의 언론은 중국이 패권노선으로 주변국을 위협하며, 한국이 역사문제를 내세워 외교적 협력을 무시한다고 보도한다. 역사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 일본에서는 배타적 애국주의가 힘을 얻는다. 무비판적인 언론도 건전한 행태가 아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 개최 시기부터 일본의 주류 언론이 한국에 우호적인 보도를 취한 것이 인터넷이나 비주류 언론 공간에서의 험한 정보를 확산시킨 계기가 되었다. 언론 간에 진지한 교류가 가능할까 고민스럽지만, 언론 교류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역사인식의 대립과 격차는 여전히 심각하며, 역사인식의 공유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동아시아 각국이 자국 중심의 역사관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인식을 전환하거나 공유하려면 모든 회로를 통해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국의 국민교육, 초·중·고교육의 내용과 방식에서 해결점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역사연구를 비롯한 학술교류, 교환 유학 사업을 착실하게 확대하고 심화시켜 시야를 넓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성숙한 시민의 목소리가 각국의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공동 의제’를 정립하고 실천하는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1) 다국간 협력에 기초한 지역 거버넌스의 구축

미세먼지나 황사, 산성비 등 국경을 넘어 피해를 일으키는 환경오염과 기후변동의 문제에 대해서도 동북아시아 공통의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 이것은 초국적, 초당적 현안 과제가 되었다. ‘문화적 협력’을 위한 아젠다와 방법은 글로벌한 가치와 규범, 생활 공동체의 공공의 이익에 입각한 것으로서 ‘광역 거버넌스’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동아시아 버전’이 ‘글로벌 가치’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함께 모색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국간 협력에 기초한 지역 거버넌스가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과 주권의 존중, 사회적 연대, 그리고 유엔헌장의 원칙 등을 존중하고, 그 실현과 추진을 약속하는 ‘문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인류사에 보편적인 가치를 정립하고, 그에 따라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지역협력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공통의 가치와 아젠다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긴장관계를 수반하는 공동 토의가 필요하다. 가령 유교나 불교 등을 ‘그 자체’로서(An-sich) 논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구적’ 가치도 포괄하면서 그것의 현대적 의미까지 따지며, 오늘의 문제 해결 능력을 내포하고 공유해야 한다.

(2) 주민참가형 지자체 네트워크와 민제외교(民際外交)

EU에서도 중앙 협의체보다 인접영역 간의 다국적 협동시스템인 유로리전(Euroregion)에서 환경문제 등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는 주민 활동이 활발했다. 기후변동이나 대기오염 등에 대처하기 위해 도시 거점과 지자체, 각국 정부와 전문가, 시민들이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동북아 차원에서 법제도를 정비하며 서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공해 선진국’이었던 일본은 정보와 기술을 축적했으며 기타큐슈시(北九州市)에서는 연수생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왔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대한 계획이 이미 착수되고 있고, 기술원조와 정부의 개발원조, 혹은 의료원조와 같은 사업 외에 민간교류도 진행되고 있다. 활동의 노하우를 가진 지자체나 NGO가 서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민제외교’(민간외교)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3) 사회·문화적 교육과 관광·교류의 활성화

(1) ‘문화적 협력’에서 ‘사회·문화적 협력’으로

‘문화적 협력’의 관점을 ‘사회·문화적 협력’의 차원에서 이해할 때 비정치적 교류와 지역협력의 토대가 확장된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환경과 기후변동, 고용과 소득 안정, 지방 과소화 대책, 인권과 페미니즘, 언론과 SNS 활동 등 공통의 과제는 초국가적 단위에서의 기능적인 협력을 요구한다. 이들 문제는 국가 간의 마찰을 내포하면서도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협력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다.

(2) 교육·관광 교류와 교육 시스템의 혁신

교육의 협력은 동북아문화공동체의 가능성을 풍부하게 만든다. 교육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의 기회를 만들고, 동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지식’의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다룬다면 공동체 문화를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중등교육에서는 각국의 언어·문화와 동아시아 공통의 한자, 유교, 대승불교 등을 공부할 수 있다. 대학에서 추진되고 있는 TLP(trilingual program) 등을 중등교육에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의 학점호환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시민교육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인문 교양과 젠더 감성, 사회

공공성을 함양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한·중·일 간에서는 CAMPUS Asia 구상이 실행되고 있지만, 아직 규모가 작다. 대학생과 젊은 세대는 정치적 대립에 상관없이 타국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교류 프로그램에 적극적이며 만족도도 높다. EU 유로리전에서 교환유학생이 타국에서 자국의 역사와 현재를 재검토하는 프로젝트를 자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역사인식에서 역사화해로 나아가는 길을 개척했다. 학생들의 교류를 10만 명 단위까지 확대해야 한다. 가령, 일본과 한국의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나 행사에는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든다. 단 한 번의 경험이 그들을 새로운 생애의 길로 이끌 가능성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대규모 문화 행사와 연구 교육을 통해 젊은이들이 서로를 환대하며 교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사회의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며 이문화 학습의 기회를 살릴 수도 있다. 각국에 공통된 전통문화나 대중문화만이 아니라, 환경, 인권, 노동, 젠더 문제도 문화적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유교, 불교, 바둑, 스포츠, 애니메이션, 대중가요, 영화 등을 매개로 서로의 경험과 이해를 확산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6. 소결

일본의 전문가들은 ‘동북아시아’라는 지역 개념에 대해서 한반도와 그 주변 국가와 지역을 포괄하는 지리적 개념으로 보는 의견과 유교, 한자 문화, 역사적 경험 등을 공유하는 문화적 개념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즉 지리적 개념과 문화적 개념을 동시에 포괄하는 비교적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북아시아 개념이 중국과 일본에서도 같은 의미로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본의 전문가 20인 중 긍정적인 답변은 16인, 부정적인 답변은 4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의 ‘북동아시아’는 한국과 중국의 ‘동북아시아’ 개념으로 사용해도 의미가 통한다. 이 때 ‘동북아시아’에 포함되는 국가는 한국, 북한, 일본, 중국을 가리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 지리적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개념의 확장 가능성을 무조건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동북아시아’에 포함되는 인근 국가나 지역들에 대한 물음에서 타이완, 몽골을 ‘동북아시아’에 포함시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약간의 유보적 의견도 제기되었다. 타이완의 경우 몽골보다 유보적 의견이 아주 약간이지만 우회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동북아시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포함된다는 의견보다 우세하였다. 베트남, 싱가포르, 미국에 대해서는 ‘동북아

시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동북아에서의 다자적 협력체 결성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 일본의 전문가들은 압도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협력체를 결성할 정치 및 사회시스템, 문화의식 등에서 기초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일본과 중국의 태도가 소극적이며 이 지역에서 다자협력체를 구상할 의지가 약하다. 3) 내셔널리즘과 패권주의가 강하며,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냉전체제의 기류가 여전히 남아있다. 4) 중국과 미국의 마찰이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미국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구축을 견제한다. 5) '연합(union)'이란 높은 수준의 지역 통합을 가리키며 주권을 제약하는 다양한 지역기구의 존재가 필요하므로, 동북아시아에서는 낮은 단계의 지역협력기구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그 결성 정도를 공동체라 부를 수는 있다. 6) 일본의 여론은 동북아시아보다도 환태평양이라는 의식이 강하며,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대감은 사라지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연합이나 협력체의 범위를 '동북아시아'나 '동아시아'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 7) 부정적인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현 상황에서 정치적, 군사적 공동체는 위험하다는 여론이 있다. 경제적,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느슨한 경제적 다자간협력체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동북아의 다자간협력체의 유형으로서 경제공동체-안보공동체-문화공동체 순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경제공동체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한 근거는 기업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구상하는 것이 용이하고 이미 경제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자협력체로서 안보공동체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한 근거는 대체로 군사적 대립과 충돌에 대한 불안을 들고 있다. 문화공동체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한 근거는 공동체의 주체가 국가, 기업이 아니라 민간인들인 만큼, 다양한 차원에서 문화교류를 전개하면서 생활 속에서 민중의 공동체를 구상하자는 것이다. 사람들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상호 이해를 위한 감성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북아시아공동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거나 유보하는 의견도 일부 제시되었다. 반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체라는 것이 문화적 다양성과 소수성을 억압할 수 있고, 2) 통합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생길 수 있으며, 3) 동북아시아의 범위 그 자체를 한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으며, 동남아시아 혹은 오세아니아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4) 각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차이를 해소하기 어렵다. 안보공동체에서는 일본의 헌법9조의 문제, 영토분쟁, 남북문제, 중국-타이완 문제 등이 있다. 경제공동체에서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상당히 크고 또한 중국 국내의 상당한 격차 문제가 있다.

동북아다자간협력체의 유형 중에 실현가능성의 순서를 묻는 질문에서는 경제공동체-문화공동체-안보공동체 순으로 응답했다. 안보공동체의 필요성 항목에서는 다수의 긍정적 의견이 있었지만, 실현가능성에서는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문화공동체는 필요성 항목에서는 경제공동체, 안보공동체의 경우보다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지만, 실현가능성에서는 필요성의 경우보다 긍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설문에 응답한 일본의 전문가들은 아시아에 공통적 정체성이 있다고 해도, 그 존재 여부보다 서로 다른 차이를 존중하고 역사적 대립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정체성은 변할 수 있는 것인 만큼, 공통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발상보다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한류와 관광이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며, 민간 교류의 활성화가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형성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교류는 서로의 이익과 신뢰를 쌓고, 서로 공감하며 존중하는 자세로 이어갈 수 있는 활로이다. 특히 한국의 반일 및 일본의 혐한 현상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민간 교류 차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적 문제에 몰입하기보다, 동시대 공동의 사회, 환경 문제에 서로 협력하는 자세에서 출발하여 문화, 학술, 외교, 관광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경제협력이나 안보협력, 정치적 교류 등의 활동 외에, 한·중·일의 다자적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적 협력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1) 차세대(젊은 세대)의 교류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유학과 관광 등을 촉진할 것, 2) 생활의 단위인 지자체와 지역의 시민단체, 대학 등을 중심으로 사회 문제와 환경 문제 등 동시대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그 해결을 위해 서로 교류하고 지원할 것, 3) 시민사회와 차세대를 위한 교육 제도를 정비하고, 학술 교류를 심화할 것을 제안했다.

문화적 협력 방안에서 핵심은 공동의 가치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시스템의 제도화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과 관광 교류의 활성화, 동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공통의 거버넌스와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요약된다. 각국 정부는 갈등을 조정하고 시민들의 교류를 지원하며, 공생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에 주력해야 마땅할 것이다.

동북아시아문화공동체에서 문화의 개념을 확장시켜 ‘사회문화공동체’를 표방하고 내실을 기할 필요도 제기되었다. 각국 시민사회의 역량으로 문화적, 사회적 협력을 추진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실행할 수 있다면, 동북아문화공동체의 실현 가능성에 한층 근접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시민사회의 주체적 활약이 중요하지만, 그 대표성이 문제된다. 시민 단체의 간판을 내걸고 자신들의 목적만을 관철하기 위해 행동하는 이익단체가 시민사회를 대표할 수는 없다.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국민감정을 자극하여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언론의 폐해를 자정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결국 시민사회의 성숙을 요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 중국, 일본의 언론이 서로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부추기고 있고, 각국 정부가 국가적 경쟁 논리에 묶인 채 오히려 혐오를 조장하기도 한다. 시민단체들도 서로 분열되었고, 시민단체가 정치적 이슈와 민족감정을 키우는 사례도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동북아시아문화공동체의 토대를 형성할 정도로 심도 있는 교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 3 절 일본의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의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가. 개방적 다층적 네트워크

아베 정부가 이끄는 일본은 아시아와 태평양, 나아가 인도 태평양을 연결하는 ‘개방적 다층적 네트워크의 육성’에 힘쓰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탈냉전 이후 더욱 복잡한 지정학적 분쟁 구도를 보이자, 이에 대응하여 인도와 아프리카를 포괄하면서 ‘인도 태평양’이라는 더욱 글로벌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이념적 목표로 내건 것이다.

일본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상대국과 현지 사람들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발전한다는 정신”을 강조하지만,²⁶¹⁾ 동북아시아에서는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미중의 무역전쟁과 미일동맹 구도, 한·중·일 과거사 청산 문제로 일본이 추구하는 ‘다층적 개방적 네트워크’ 안에서 중국과 한반도와의 협력 관계는 많은 장애 요소에 부딪혀왔다. 그 장벽을 넘어 서기 위해 일본은 동남아시아에 이어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관계의 개선 노력은 한·중·일 모두에게 필요하다. 과거사에 기인하는 국민감정과 눈앞의 국익에 매달리기보다 새로운 공통의 가치를 향한 전향적 자세와 리더십이 요청된다.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2018년 10월부터 진척되고 있다. 물론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구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의 우호관계가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기에 가능해진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개방적 다층적 네트워크 형성을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는 일본이 중국과의 ‘전략적 호혜관계’를 추구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2018년 신년의 외교 방침에서 일본 외무대신은 동중국해의 영토 문제로 대립해오던 중국과 협의하여 동중국해를 ‘평화·협력·우호의 바다’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²⁶²⁾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도 유연한 이념에 기초한 유연한 전략 모델이 필요하다. 외교적 협력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 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상대가 손을 내밀면 굳이 상대를 돌려세울 필요가 없는데, 한국은 내 말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상대를 쳐내는 국민감정이 앞서게 됨으로써, 진정한 국익의 관점에서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오류를

261) 외무성,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に向けて,” (2019),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407642.pdf>>, 슬라이드 3쪽.

262) 외무성, “第196回国会における河野外務大臣の外交演説,” 2018.1.22., <https://www.mofa.go.jp/mofaj/fp/unp_a/page3_002351.html> (검색일: 2019.6.1.).

반복했다.

한국은 중국도 일본도 적대시할 수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명시하고, 정책 실현에서도 유념해야 한다. 상대방을 탓하면서 상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없다면, 대립이 격화하고 돌이킬 수 없는 적대적 관계로 변한다. 일본과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는 동북아시아문화공동체를 논할 수조차 없다. 지역공동체 논의에서 개방적 다층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인정한다면, 무엇보다도 한일 관계의 개선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나. 동북아시아를 넘어선 사회·문화적 협력의 관점

동북아시아 또는 북동아시아 용어는 한국과 중국, 또는 일본 중심의 시각에서 각각 발신되었다. 자국 중심의 힘의 논리에 갇혀 있는 한·중·일의 정치적 리더십과 국민감정을 들여다보면, 독선적 이거나 독점적인 이익 추구의 논리를 앞세우며 상대국을 견제하는 경향이 짙다. 이웃하는 나라와 경제-안보-문화 공동체를 형성한다면 실제 이익이 배가될 터이지만, 서로를 경쟁 상대로 인식하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어렵다.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시아는 여전히 역내 갈등 요인을 발생시키는 화약고로 기능하며, 혐한, 혐중, 혐일 등의 용어가 그 현실을 대변한다.

일본의 아시아 지역 통합 이론과 정책은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친다는 ‘성동격서’를 떠올리게 한다. 동북아시아 지역 중국, 한국과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일본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인적 교류를 포함한 경제 협력을 확대하여 일본 경제의 선순환 성장을 도모하고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있다. 동남아 출신 노동자의 수용이 확대되면서 일본이 다문화 공동체로 실질적으로 변화할 것인지, 이민사회의 문제로 피폐해져갈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동남아시아가 지역공동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이 제시하는 동북아공동체 용어는 일본이 구축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범주 안에서 한 부분만을 차지한다.

한국이 동북아시아공동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아시아의 새로운 변화에 뒤처진 채 자국 중심의 논리에 갇힐 위험성이 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 내 갈등을 지혜롭게 풀고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라도 시야를 넓혀 ‘열린 아시아’의 새로운 변화를 응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중국은 실제로 한반도의 통일을 한국 국력의 강화로 인지하기 때문에, 이들 양국으로부터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얻기는 쉽지 않다.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 통일에 호응하도록 유도하려면, 한미동맹에만 의존해서도 안 된다. 한국 스스로가 동북아시아를 넘어선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공헌하고자 노력하고 그 실질적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급하면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어떤 약도 듣지 않는 고질적인 병환일수록 환부의 급소를 건드리기보다 생활 태도를 바꾸고 기초 체력을 갱신함으로써 자연치유력을 높여야 한다. 역사문제와 지정학적 갈등을 꺼안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문제는 동북아시아를 넘어서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치유되고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은 한·중·일 중심의 단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저개발 지역의 발전을 도와서 글로벌 차원에서부터 한국의 입지점을 확보하고 그 확대된 교섭력으로 중국 및 일본과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시아에 간혀서 눈앞의 이익을 쟁하지 말고 널리 세상을 보며 내 할 일을 찾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사회·문화적 협력’과 지역 공통의 거버넌스 및 지역주민이 참가하는 네트워크의 구축을 강조했다. 문화는 생활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사람들의 일상에 녹아들어 알게 모르게 현실적인 규정력을 가질 때 공통의 정체성으로 부각된다. 따라서 문화 개념을 사회 개념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아시아 차원에서 지역 사회와 글로벌 사회의 현재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쌓이면서 ‘아시아 아이덴티티’로 긍정할 수 있는 새로운 활력소가 창출될 것이다. 공통의 미래 비전이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띠는 가운데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가 새롭게 도출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2. 정책적 시사점

가. 동남아시아와의 경제협력과 노동자 수용 정책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론은 인적 교류와 투자를 수반하는 포괄적 경제협력인 EPA정책의 전개로 일본 내에서도 그 실질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정치적, 역사적 난제들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중국과의 동북아공동체 협의와 달리,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과의 지역 통합 논의는 이론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원활하게 진척됐다. 도쿄를 방문하면 동남아 출신의 사람들과 조우할 확률이 높다. 단일민족신화가 강한 일본이 개방사회로 변한 결정적 요인은 노동 가능한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개방 정책은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발전 요구와 결합되어 나타났지만, 변화를 추진하고 수용하는 일본 사회의 자세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점이 많다고 본다.

첫째, 자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상대국의 이익과 요구를 배려하는 점이다. 역사문제로 충돌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은 패륜국가처럼 평가 절하되었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에 대한 평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한다. 상대국을 대할 때, “우리는 옳고 너희는 잘못했다”는 식의 심판자의 자세나, 내 이익과 주장을 앞세우려는 일방적인 자세는 대화와 협상을 차단한다. 양자

교류에서 서로의 입장과 관점을 배려할 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가치와 질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본은 이민제한 정책의 빗장을 서서히 풀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이민 정책의 확대가 올바른 것인지는 새로운 관점의 대안적 연구가 필요하다. 동남아 유학생이 본국에 돌아가거나 일본에 체류하는 문제는 개개인의 체류자격과 선택에 달려 있고, 생활권에서 다문화공생이 가능한 토대를 이루는 것은 인류 사회의 보편적 과제다. 이 때, 외국인 인재와 기능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국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필요가 있지만, 근본적 차원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도 자립적 공생이 가능하도록 세계 모든 지역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은 건설업과 농업, 개호, 조선업 등에 필요한 단순 노동자에게 5년간의 체류 자격을 주고, 그들이 일본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취득하면 체류 자격을 5년 연장하는 정책을 취한다. 숙련 노동자에게는 가족 동반 거주를 인정하고 영주권도 부여한다. 그러나 인구 감소 지역의 필요로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면서도 단순히 피고용자로 부려먹거나 그 본국의 문제를 외면하는 이기주의로 일관한다면, 유럽 사회에서처럼 이민 문제로 골치 아픈 모순 구조를 정착시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민과 난민의 증가로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현상을 막는 근본적인 방책이 필요하다. 그것도 일국적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다문화 공생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일본이 동남아 각 지역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도왔을 때, 그 출신자들이 장차 살기 좋은 본국으로 돌아가 노년기를 보낼 수 있다. 동남아시아가 골고루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한다면, 일본이 고령사회로 정체되는 현상 없이 글로벌 차원에서 노동 가능한 인구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과 배출 문제는 한국의 경제, 사회 문제를 생각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국에서 파키스탄 노동자를 3D 산업에 고용하면서 파키스탄의 경제 발전을 외면한다면, 불법체류자의 노동 문제와 노후된 제조업 산업에의 재정 지원 등으로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의 모순은 축적될 뿐이다. 단순히 외국인 노동력을 유입시켜서 제조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발전으로 젊은이들이 공장 노동을 기피하고 정부 보조로 적자 운영을 지속하는 산업분야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기술을 개발도상국의 어떤 지역에 전수하고 그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공생의 방법이다. 자본은 일본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한국의 산업도 일본의 자본과 기술 이전으로 조성된 마산수출자유지역과 포항제철소

에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저개발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교육과 문화적 요소도 결합시켜 종합적인 지역 개발을 도모한다면, 한국의 기능 기술자와 청년들이 참가하여 한국의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그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경쟁이 아닌 상생을 실천하여 실질적인 개발 수익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선순환 구조가 창출될 수 있다. 이 모델을 기아와 난민 문제에 허덕이는 아프리카에도 확장하여 그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산업 지역을 건설한다면 아시아공동체를 넘어서 인류가 공생하는 공동체의 실현에도 다가갈 수 있다.

나. 교육·관광이 연계되는 사회·문화적 교류·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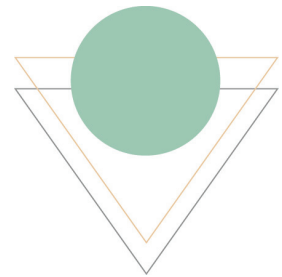
사람·돈·정보의 활발한 이동이 아시아 역내에서 힐링과 소비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광문화와 지역경제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과도기에는 문화적 차이와 상업적 이익 추구에서 오는 불편함과 불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방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배외주의나 상업주의로 대응할 수 없는 공생 공존의 질서가 생겨난다. 그 결과가 서로에게 이로운 계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과 제도를 기획해낸다면, 국경과 인종을 넘어서 서로를 연결하는 아시아 문화공동체가 불가능한 환상만은 아닐 것이다.

한류 아이돌의 공연은 동아시아의 각종 관광 중심지에서 큰 규모의 문화 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며, 도시 중산층 자녀들의 감수성과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의 창조성이 ‘동아시아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로 발전하려면 동아시아인들이 서로 활발하게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 때, 문화의 발신자도 향유자도 함께 성장하고 감동을 나눌 수 있는 교육적 내용이 오락적 재미와 어우러진다면 지역공동체 의식과 질서의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류 문화를 발신하는 문화정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일본에서 혐한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한류 문화가 아이돌 스타의 끼 발산과 이익 추구의 인기몰이에 머문다면, 대중의 환성을 받았던 스타들도 무대 뒤의 허무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거나 대중들에게 실망감을 줄 위험에 노출된다. 현재의 한류 문화가 세계인의 박수를 받으면서도 그에 응답하는 문화 예술의 비전과 책임을 보여줄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엔터테인먼트 사업가와 한류 스타들이 빌딩 구입을 자랑하고 만족해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팬들에게 어떤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인류 공동체의 공생과 행복을 향해 어떤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연구한다면 한류의 가능성은 새롭게 펼쳐질 수 있다. 한류 아이돌이 문화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행위자이자 국제 사회의 인재로

성장하고, 한류 문화가 미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다면, 한류 산업의 부가가치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교육적 효과를 자아낼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관광 인구가 늘어나고 대중문화의 교류가 확산되고 있지만, 서로의 만남을 질적으로 고양시켜 사회공공성을 함양하고 공생의 가능성을 확산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동북아 각국의 시민사회와 정부,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여 관광산업에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시킬 수도 있다. 동북아시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연구 개발한다면, 지역사회 단위의 평생 교육과 입시 위주의 교육문화를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관광도, 교육도 단순한 밥벌이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국토 자원과 인구가 부족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늘 무한경쟁에 시달리며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중국과 일본을 공생과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타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 콘텐츠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어 혐한, 혐중, 반일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때, 우리 사회 내부에서부터 동북아시아문화공동체의 실현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유관국(지역)의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

제5장 유관국(지역)의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

제 1 절 미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

1. 미국과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동북아,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역외 국가’이면서 동시에 ‘역내 국가’라는 모순적인 지위를 안고 있다. 지리적인 차원에서 미국은 역외 국가이지만, 세계 초강대국이자 ‘태평양 국가’로서 미국이 동북아와 동아시아 지역에 가지고 있는 전략적 이해관계와 영향력으로 인해 미국을 제외하고 동아시아 지역통합 문제를 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길게는 1989년 APEC의 수립 이후, 짧게는 1997년 ASEAN+3의 수립 이후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역사적 변천 과정은 미국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진화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비교적 일관되고 간명하다. 그것은 미국을 배제하거나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형태의 지역공동체에도 반대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991년 “태평양을 가르는 어떠한 계획에도 반대”한다는 당시 미 국무장관 제임스 베이커(James Baker)의 발언이다.²⁶³⁾ 베이커의

263) Claude Barfield, “The United States and East Asian Regionalism: Balancing Economics and Security,” *The United States Studies Center at the University of Sydney*, (2012), p. 2. <<https://united-states-studies-centre.s3.amazonaws.com/attache/ff/84/94/c8/08/21/d7/41/44/b1/81/50/d8/74/38/3c/alliance-21-report-united-states-barfield.pdf>> (Accessed January 23, 2019).

이 발언은 당시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Bin Mohamed Mahathir) 총리가 주창한 ‘동아시아 경제 그룹’(East Asian Economic Group: EAEG)론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마하티르는 APEC이 출범한 직후부터 미국 등 역외 국가들을 배제한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는데, 동아시아에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의 입장에서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마하티르의 제안이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았고, 미국 또한 APEC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동아시아 국가들은 마하티르를 설득하여 그가 주창한 EAEG를 APEC의 틀 내에 존재하는 일종의 의견 그룹인 ‘동아시아 경제코커스’(East Asian Economic Caucus: EAEC)로 전환할 것을 증용하고 있었다.²⁶⁴⁾

게다가 당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보다는 유럽과 북미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다. 따라서 베이커의 발언은 아시아-태평양, 동아시아 지역에서 등장한 실체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일반적인 전략적 이해관계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입장은 1991년 이후 30여 년 동안 4번의 행정부 교체 속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변천을 거듭하는 동안에도 일관되게 견지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안보 영역에서의 강고한 쌍무적 방위동맹과 경제 영역에서의 연성 다자주의에 기초해 왔다.²⁶⁵⁾ 미국은 유럽에서와는 달리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역내 공동체 구축에는 관심이 없었고, 통상 ‘허브-앤-스포크’(hub-and-spoke) 체제라 불리는 미국 중심의 쌍무적 동맹체제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 허브-앤-스포크 체제는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안보 우산을 제공하는 대신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지도력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냉전 체제의 등장과 더불어 수립된 이 체제는 한편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안보 우산 하에서 경제성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쌍무적 안보 우산을 매개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항하는 어떠한 시도도 봉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²⁶⁶⁾

264) Takashi Terada, “The United States and East Asian Regionalism: Inclusion-Exclusion Logic and the Role of Japan,” in *A Pacific Nation: Perspectives on the US Role in an East Asia Community*, eds. Mark Borthwick and Tadashi Yamamoto (Tokyo: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 2011), p. 138.

265) G. John Ikenberry, “The Political Foundations of American Relations with East Asia,” in *The US and Northeast Asia: Debates, Issues, and New Order*, eds. G. John Ikenberry and Chung-in Moon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2008), p. 21.

266) Joel R. Campbell, “US Foreign Policy towards Northeast Asia,” *Perceptions*, vol. 17, no. 4 (201

쌍무적 안보동맹체제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상대적으로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문제에 대해 방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중국의 부상이 문제로 대두되기 전까지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안보공동체는 물론 경제공동체의 구축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었다. 쌍무적 방위동맹체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안보 문제를 사고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안보공동체는 불필요한 것이었고, 동아시아 지역에 별도의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는 것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주의적 국제경제질서에 동아시아 국가들을 편입시키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었지만, 이는 동아시아 전략에서의 변화라기보다는 미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서의 성격이 큰 것이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행정부의 교체에 따라 변천을 거듭해 왔지만, ‘허브-앤-스포크’ 체제를 중심으로 한 전략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이는 역대 미국 행정부 중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클린턴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93년 출범한 클린턴 행정부는 초기에 경제전략의 차원에서 당시 동아시아의 유일한 지역공동체였던 APEC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집권 2기 들어 미국 경제가 호전되면서 APEC에 대해 다시 방관적인 자세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활발히 논의되던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2009년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to-Asia) 전략을 통해 역대 행정부와 확연히 구별될 정도로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논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지만, 이는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국무장관이 2010년 호놀룰루에서 행한 연설에서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 등 전통적인 우방과의 쌍무적 동맹체제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²⁶⁷⁾

미국 중심의 쌍무적 방위체제를 주축으로 동아시아 전략을 사고하는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논의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그것이 미국의 참여를 전제로 하느냐와 미국의 국가이익과 결부되어 있느냐의 여부이다. 앞서 베이커의 발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그리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클린턴 행정부가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논의에 대해 보였던 태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미국은 미국을 배제하거나 영향력을 감소시킬 위험성이 있는 지역공동체 논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2), pp. 3~26.

267) Takashi Terada, “The United States and East Asian Regionalism: Inclusion-Exclusion Logic and the Role of Japan,” p. 134.

다른 한편, 설령 미국이 배제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의 영향력이나 국가이익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어도 방임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와중에 탄생한 ASEAN+3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회원국 구성의 차원에서 ASEAN+3는 마하티르가 주창한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공동체가 현실화된 것이라 할 수 있었지만, 미국은 그것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화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것이다.²⁶⁸⁾ 물론 이러한 미국의 초기 입장은 21세기 들어 중국의 부상이라는 문제와 맞물리면서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된다. 이하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로의 회귀를 표방하고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n Summit: EAS)에 적극적으로 가입한 것은 이러한 인식 변화를 반영한다.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논의에 대한 미국의 전략을 요약하면 <표 5-1>과 같다.

<표 5-1>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개입 전략

		미국 국가이익의 관여도	
		높음	낮음
미국의 참여 여부	참여	적극적 개입	소극적 개입
	비참여	차단	방임

출처: 임유진·정지훈, “미국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진화,” 『21세기정치학회보』, 제25권 4호 (2015), p. 166 <표 1>을 재구성

2. 미국 역대 행정부와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논의의 전개

가. 클린턴 행정부와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논의의 전개

동아시아에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1989년 APEC의 수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1월 호주의 제안으로 시작된 APEC 논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난관에 부딪히고 EU와 NAFTA 등의 지역경제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자적 무역체제를 방어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된 것이었다. 미국은 일본의 요청으로 APEC 논의에 참여는 하였지만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당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보다는 유럽과 북미 대륙에 초점에 있었다. 미국은 유럽에서 소련 붕괴 후 소련의 영향력에 있었던 동유럽 국가들의 평화적 체제 전환 지원, 북미에서는 NAFTA를 현실화하

268) *Ibid.*, p. 135.

는 것에 보다 집중하고 있었다. 예컨대 1990년에서 1992년까지 발간된 『대통령 경제보고서(Economic Report of President)』는 동유럽의 안정적 시장경제 전환(1990년과 1991년), 멕시코와 칠레의 경제개혁 지원(1991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1990년과 1992년), NAFTA 체결(1991년과 1992년) 등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아시아 지역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²⁶⁹⁾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에 대한 미국의 방임적인 태도는 클린턴 행정부 들어 일정한 변화를 경험한다. “문제는 경제야”라는 유명한 문구로 등장한 행정부답게 클린턴 행정부는 1993년 출범과 동시에 ‘신 수출전략(New National Export Strategy)’을, 이듬해에는 “거대신흥시장계획(Big Emerging Markets Initiative)”을 발표하여 당면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가 미국의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이는 “거대신흥시장계획”의 대상이 되는 상위 10개 국가 중 절반 이상이 동아시아 국가들이었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²⁷⁰⁾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클린턴 행정부는 전임 부시 행정부가 APEC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것과는 달리 적극적인 관여(engagement)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특히 동아시아가 전략 지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 개방과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APEC의 가치에 새삼 주목하게 된 것이다. 1993년 7월 와세다 대학 연설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새로운 태평양 공동체”의 필요성과 APEC을 통한 아시아 지역의 무역자유화를 역설하고, 1994년 『대통령 경제보고서』가 APEC 출범 이후 처음으로 APEC을 다루면서 APEC을 단순한 논의 기구가 아니라 공식적이고 의무성이 강한 기구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다.²⁷¹⁾

클린턴 행정부가 경제적인 이유로 APEC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른 한편, 미국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APEC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 APEC은 단순한 경제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그러나 APEC은 미국의 전통적인 허브-앤-스포크 전략을 보완하는 수단일지언정 그것의 대체제는 될 수 없었고, 따라서 미국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 클린턴 행정부 2기에 다시금 APEC에 대한 방관적 태도로 전환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특히 1995년

269) 임유진·정지훈, “미국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진화,” 『21세기정치학회보』, 제25권 4호 (2015), p. 168.

270) Claude Barfield, “The United States and East Asian Regionalism: Competing Paths to Integ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6, no. 2 (2012), p. 159.

271) 임유진·정지훈, “미국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진화,” p. 168.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종료로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고, 1997년에는 미국 경제가 “10년 내 최고의 경제성장률, 24년 만의 최저 실업률, 30년 내 핵심 분야 인플레이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호황 국면으로 접어들어 따라 APEC의 전략적 중요성은 현저히 축소되기에 이르렀다.²⁷²⁾

그런데, 미국이 당시로서는 동아시아의 유일한 지역공동체였던 APEC에 대해 방관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동안, 동아시아에서는 새로운 지역공동체를 모색하는 흐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였다. 동남아시아는 물론 한국과 일본 등 역내 주요 국가들을 강타한 경제위기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새로운 지역공동체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였다. 여기에는 당시 금융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둘러싸고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팽배했던 미국에 대한 반감 내지 불신이 한몫하였다.²⁷³⁾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은 위기의 원인을 통상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로 일컬어지는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근본적인 문제점에서 찾기보다는 미국의 주도하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급격히 추진한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특히 성급한 금융시장 개방에서 찾았다. 1990년대 미국과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IMF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강력히 추진된 금융시장 자유화로 동아시아에 대규모로 유입된 해외자본이 경제위기를 매개로 대규모 유출됨에 따라 금융위기가 확산되었다는 것이 당시 동아시아 정책결정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다.²⁷⁴⁾

이는 위기의 원인을 외부,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질서의 문제점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미국 책임론’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러한 인식은 위기의 원인을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실 자본주의 문제에서 찾았던 미국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위기의 전개 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방관적인 태도는 동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싹틔우도록 하였다.

일례로 금융위기 문제를 논의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1997년 APEC 정상회의에 클린턴 대통령이 불참함으로써 미국의 위기 해결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낸 데다가, 대신 참석한 고어

272) 위의 글, p. 169.

273) Paul Bowles, “Asia’s Post-Crisis Regionalism: Bringing the State Back in, Keeping the (United) States Out,”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9, no. 2 (2002), pp. 230~256; Richard Higgot, “The Asian Economic Crisis: a Study in the Politics of Resentment,” *New Political Economy*, vol. 3, no. 3 (1998), pp. 333~356.

274) Saori N. Katada, “Seeking a Place for East Asian Regionalism: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und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Pacific Review*, vol. 24, no. 3 (2011), p. 277.

부통령이 위기의 원인이 정실 자본주의에 있으므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체적인 개혁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발언함으로써 반발을 산 일이 있었다.²⁷⁵⁾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미국이 위기 해결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APEC이 당면의 위기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통로로써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구 노력에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 금융위기 발발 직후인 1997년 9월 일본이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자조적인 구제금융을 목적으로 약 1천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통화기금(Asian Monetary Fund: AMF)’ 설립을 제안한 바 있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당시 미국은 AMF가 동아시아 국가들만이 참여하는 기금이라는 점에서 IMF의 위상을 잠식할 수 있고, 또 채무국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히 반대하였는데, 결국 일본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애초의 제안을 철회함으로써 AMF는 무산되기에 이르렀다.²⁷⁶⁾

AMF가 무산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결국 IMF의 구제금융만이 남게 되었다. 그런데, IMF 구제금융에 연동된 혹독한 경제개혁은 위기 발발과 더불어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형성되었던 미국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증폭시키면서, 마하티르가 오래전에 주창했던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지역공동체가 공감대를 얻어 가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그 시작은 1997년 12월 ASEAN+3의 설립이었다.

ASEAN+3는 엄밀한 의미의 지역공동체라기보다는 당면의 금융위기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국(지역)들이 참여하는 대화체로서 출범한 것이었다. 그 명칭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ASEAN+3는 1997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ASEAN 정상들이 한국, 중국, 일본의 지도자들과의 비공식적인 정상회담을 제안한 데서 비롯되었다.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회담으로 출범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ASEAN+3를 명시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었다.²⁷⁷⁾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에서 비록 비공식적인 회담으로 출범한 것이라 하더라도 ASEAN+3가 갖는 의미는 남다른 것이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유일한 지역공동체였던 APEC이 미국의 방관적 태도로 당면 위기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AMF가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상황에서, ASEAN+3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동 관심사와 협력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창구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위기를 경과하면서

275) 임유진·정지훈, “미국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진화,” p. 170.

276) Takashi Terada, “The United States and East Asian Regionalism: Inclusion-Exclusion Logic and the Role of Japan,” p. 138.

277) *Ibid.*, p. 135.

형성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공감대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ASEAN+3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허브-앤-스포크' 전략의 중추를 구성했던 한국과 일본 또한 1998년경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공동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다.²⁷⁸⁾

이에 따라 애초 비공식적인 회담으로 출발했던 ASEAN+3는 점차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중추로 부상하게 되었고, 2002년 이후부터는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협력 논의를 사실상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2002년 ASEAN+3 정상회담에서는 1998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했던 '동아시아 비전 그룹(East Asian Vision Group: EAVG)'을 각료급 회의체인 '동아시아 스터디그룹(East Asian Study Group: EASG)'으로 구체화하여 역내 경제협력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ASEAN+3라는 틀을 통한 역내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서, 2002년 이후부터는 ASEAN+3가 기존에 APEC이 수행하던 역할의 대부분을 대체하기에 이르렀다.²⁷⁹⁾

나. 부시 행정부와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논의의 전개

2001년 부시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집권과 동시에 9·11 테러를 경험한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서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 주어져 있었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일련의 정세 변화는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전임 클린턴 행정부와 달리 적극적인 관여 정책으로 선회하도록 이끌었다. 이러한 정책 선회의 중심에는 ASEAN+3의 출범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된 자유무역협정과 중국의 부상이라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부시 행정부의 관점에서 이 두 가지 사항은 서로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연동된 것이었는데, 특히 중국이 2000년에 제안한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이 구축한 허브-앤-스포크 체제를 무력화시켜 결국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²⁸⁰⁾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부시 행정부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대안적 동아시아 질서의 구축에 주력하는 전략을 구사하

278) Il Hyun Cho and Seo-hyun Park, "Domestic Legitimacy Politics and Varieties of Regionalism in East Asia,"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40, no. 3 (2014), p. 584.

279) Claude Barfield, "The United States and East Asian Regionalism: Balancing Economics and Security," p. 4.

280) Ellen L. Frost, "China's Commercial Diplomacy in Asia: Promise or Threat?" in *China's Rise and the Balance of Influence in Asia*, eds. W. W. Keller and T. G. Rawski (Pittsburgh P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2007), p. 98.

였다. 전자의 전략은 2002년 미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조엘릭(Robert Zoellic) 대표가 발표한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 전략으로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WTO 중심의 다자주의적 접근법과는 별개로 쌍무적, 지역적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한 것이었다.

쌍무적, 지역적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역대 행정부가 추진해 온 바이기는 하나, 이를 통상 전략으로까지 격상시킨 것은 부시 행정부가 최초였다. 더구나 부시 행정부는 이를 2002년 9월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의 공식 항목으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부시 행정부 하에서 미국이 한국,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등과의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한다.²⁸¹⁾

부시 행정부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더불어 동아시아 지역 질서를 재구축하려는 시도 또한 병행하였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필요성이었다. 부시 행정부가 2000년 중국이 적극적으로 ASEAN에 제안한 자유무역협정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인식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시 행정부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ASEAN+3 또한 중국의 이러한 전략에 일조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중국이 ASEAN+3를 방패 삼아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결국 이를 방지할 경우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지역공동체가 탄생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졌다.²⁸²⁾

따라서 부시 행정부가 ASEAN+3와 구별되는 또는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별도의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구축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당연했는데, 이는 미국이 직접 별도의 지역공동체 구축에 나서지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을 통해 ASEAN+3를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변모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⁸³⁾ 애초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2002년 ASEAN+3 국가들이 설립한 ‘동아시아 스터디그룹’(EASG)이 최종 보고서에서 ASEAN+3를 제도적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으로 제안한 것이었지만, 일본이 회원국의 범위를 넓힐

281) Claude Barfield, “The United States and East Asian Regionalism: Balancing Economics and Security,” pp. 6~7.

282) Peter Drysdale,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and FTA Strategies,” *Pacific Economic Papers*, no. 355 (Canberra: Australia-Japan Research Center, 2005), p. 15; Zhang Yunling and Tang Shiping, “China’s Regional Strategy,” in *Power Shift: China and Asia’s New Dynamics*, ed. David L. Shambaugh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p. 54.

283) Takashi Terada, “The United States and East Asian Regionalism: Inclusion-Exclusion Logic and the Role of Japan,” p. 135.

것을 주장하고 싱가포르가 이에 적극 동조하면서 결국 미국에 우호적인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하는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기구로 출범하게 되었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전통적인 우방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여는 ASEAN+3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희석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작동하고 있었다. 하나는 일본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부상에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01년 집권한 고이즈미 총리와 그에 뒤이은 아베 총리가 미국의 우려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미국과의 쌍무적 동맹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정책을 구사하였다는 점이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일본과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공유하고 있는 바였다. ASEAN 국가들 또한 나중에 이 대열에 동참하게 되지만, 적어도 2008년까지 중국과 ASEAN 국가들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중국이 적극적인 경제협력 모색과 더불어 2002년에 ASEAN 국가들과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공동 행동 선언(Declaration of Conduct: DOC)’을 채택하고, 2003년에는 ‘동남아 우호 협력 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TAC)’에 가입함과 동시에 ASEAN 국가들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선언을 채택하고, 이듬해인 2004년에는 ASEAN 국가들의 동남아 ‘평화, 자유, 중립지대 선언(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ZOPFAN)’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인 평화공세를 벌였기 때문이다.²⁸⁴⁾ 따라서 2000년대 초반 중국의 부상에 가장 경계심을 가지고 있던 일본과 싱가포르가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ASEAN+3를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지역기구로 확대 개편하려 했던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리더십 교체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1년 집권한 고이즈미 총리와 그에 뒤이은 아베 총리는 미국과의 쌍무적 동맹체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정책을 추구하면서 ASEAN+3를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는 ASEAN+6의 형태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집권과 더불어 미-일 동맹이 한국,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기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당시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던 테러와의 전쟁 및 이라크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특별법을 통해 평화헌법 9조의 제약을 넘어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정책 기조하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ASEAN+3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

284) David Arase, “East Asian Regionalism at a Crossroads,”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75, no. 1 (2013), p. 6.

여 ASEAN+3를 동아시아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역공동체로 변모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고이즈미 내각은 호주의 ‘동남아 우호 협력 조약’ 가입을 간곡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는데, 그것은 이 조약의 가입 여부가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여의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권유와 설득에 힘입어 호주가 이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2005년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역시 이 조약에 가입한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하는 ASEAN+6의 형태로 개최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고이즈미 총리를 계승한 아베 총리에게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특히 아베 총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중심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추진하기도 하였다.²⁸⁵⁾

결국,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구성 과정에서 ASEAN+3가 ASEAN+6의 형태로 변모한 것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일본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였다. 그런데,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을 배제한 중국 주도의 지역공동체가 발전할 가능성을 우려했던 부시 행정부는 일본을 통한 간접적인 관여 전략 이외에 직접적인 관여 전략을 채택할 수도 있었다.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ASEAN+3가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변모한 이상, 새롭게 탄생한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결국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가를 주저하게 되는데, 그것은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위상이 모호하다는 판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 전제 조건인 ‘동남아 우호 협력 조약’ 가입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었다.²⁸⁶⁾ 이러한 사정으로 부시 행정부는 전임 클린턴 행정부에 비해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도 직접적인 관여보다는 일본을 통한 간접적인 관여 전략을 선호하였던 것이다.

다. 오바마 행정부와 ‘아시아로의 회귀’(pivot-to-Asia) 전략

집권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부시 행정부는 일본을 통한 기존의 간접적인 관여 전략에 덧붙여 직접적인 관여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미 무역대표부를 통해 발표된 ‘환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 즉 기존의 APEC을 발판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규모의 자유

285) Takashi Terada, “The United States and East Asian Regionalism: Inclusion-Exclusion Logic and the Role of Japan,” pp. 141~142.

286) Ralph A. Cossa, “Northeast Asian Regionalism: A (Possible) Means to an End for Washingto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09), p. 6. <<http://nautilus.wpengine.netdna-cdn.com/wp-content/uploads/2012/09/NEAsiaSecurityCossa.pdf>> (Accessed Jan 24, 2019).

무역지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 그것이다. 한편에서 이 구상은 2002년의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 전략, 즉 전 세계적인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위해 미국이 쌍무적, 지역적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전략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환태평양 자유무역지대의 구축을 목표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FTA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은 이 지역의 경제 질서를 미국 주도의 ‘허브-앤-스포크’ 체제로 재구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환태평양 자유무역지대 구상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의 일환이었다. 이미 2006년 2월 미 국방성은 Quadrennial Defense Review를 통해 중국을 자국과 군사적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적시하고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었다.²⁸⁷⁾ 2006년 부시 행정부가 환태평양 자유무역지대 구상을 발표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참여하는 유일한 지역공동체인 APEC을 ‘허브-앤-스포크’ 형태의 지역경제공동체로 재편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2008년 말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구상으로 구체화 되었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 등 4개국과 우선 TPP 협정을 체결하여 환태평양 자유무역지대의 구축을 위한 교두보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TPP 구상은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방안이라기보다는 의지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었다. TPP 구상의 구체화는 부시 행정부의 뒤를 이은 오바마 행정부의 몫으로 남겨졌다.

부시 행정부 말기에 추진된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관여 전략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to-Asia)’ 전략을 통해 본격화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은 2011년 하와이 APEC 정상회담에서 공식 천명하기 이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미국 최초의 태평양 대통령(America’s first pacific president)’을 선언한 것이라든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통상의 관례를 벗어나 첫 해외 순방지로 유럽이 아닌 아시아를 선택한 것 등은 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들이었다. 미국이 전통적으로 태평양 국가임을 자처해 왔음에도 오바마가 ‘태평양 대통령’을 특별히 강조하고 나선 것은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의 부상을 강력히 견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⁸⁸⁾ 이는 2009년 아세안

287)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February 2006), p. 29.

288) Stephen M. Walt, “Explaining Obama’s Asia Policy,” *Foreign Policy*, 2011, <<https://foreignpolicy.com/2011/11/18/explaining-obamas-asia-policy/>> (Accessed January 24, 2019).

지역 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동남아로의 회귀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 천명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은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 전략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편에서 환태평양 자유무역지대의 구축을 위한 TPP 협정을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행정부는 TPP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동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질서를 미국이 주도하는 '허브-앤-스포크'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전임 부시 행정부 말기의 구상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런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은 전임 부시 행정부의 그것을 계승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ASEAN+3를 모태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에 대해 간접적인 관여 전략 대신 직접적인 개입 전략을 구사했다는 점에서 전임 부시 행정부와 현저히 구별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부시 행정부는 일본을 통해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ASEAN+6의 형태로 재편하는 방식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에 반하는 지역공동체가 탄생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그 첫 행보가 2009년 '동남아 우호 협력 조약' 가입이었다. 전임 부시 행정부가 꺼렸던 이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는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에 대한 간접적인 관여 전략에서 직접적인 개입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첫째는 미국 내부의 문제로 전임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전쟁 등의 문제로 동아시아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던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에 처해 있었다. 둘째는 동아시아 내부의 문제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가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팽배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미 2001년 무렵부터 일본과 싱가포르 등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2009년 이후부터는 이 대열에 동남아시아 국가들 또한 동참하게 되는데, 그것은 2008년까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중국이 2009년 이후 일방주의적인 태도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데 기인한다. 중국은 2009년 남중국해의 80%를 중국의 영해로 표시한 지도 발간을 시작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ASEAN 국가들의 공동대응 선언을 방해함으로써 사실상 2002년의 DOC 합의를 파기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 전개는 ASEAN 국가들의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이들이 중국의 일방주의적인 행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직접 개입 전략을 환영하는 기초가 되었다.²⁸⁹⁾

라.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며 등장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일방주의(unilateralism)로 요약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 노선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여 다자주의에 기초한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유약’하다고 비판하면서 다시금 강력한 일방주의로의 회귀를 선언하였다. 애초 트럼프 행정부가 뚜렷한 대외전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대외전략에서 제도적·외교적 수단보다는 강력한 군사력을 강조하고 “힘에 기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주창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전략이 레이건 행정부의 그것을 계승한 것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²⁹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시기부터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억제정책을 역설하고, 국방예산 자동삭감 조치 폐지와 국방비 증액 등의 조치를 단행한 것을 보면 이러한 평가가 전혀 틀린 것만은 아니다.²⁹¹⁾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 노선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선거 시기부터 미일동맹과 한미동맹,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경제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동맹 관계로 지목하고 동맹국들의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었다. 그리고 이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전통적인 우방인 유럽 국가들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NATO 분담금 조정, 한국과 일본에 대한 분담금 증액 압력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무역 분야에서도 엄격한 상호주의에 덧붙여 미국 경제 보호라는 목표를 앞세우면서 일방주의적 통상 압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표방한 무역의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통상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며,²⁹²⁾ 이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현실화되었다.

289) Joel R. Campbell, “US Foreign Policy towards Northeast Asia,” *Perceptions*, vol. 17, no. 4 (2012), pp. 3~26; Claude Barfield, “The United States and East Asian Regionalism: Balancing Economics and Security,” pp. 8~10.

290) Alexander Gray and Peter Navarro, “Donald Trump’s Peace Through Strength Vision for the Asia-Pacific,” *Foreign Policy*, November 7, 2016, <<https://foreignpolicy.com/2016/11/07/donald-trumps-peace-through-strength-vision-for-the-asia-pacific/>> (Accessed January 24, 2019).

291) 공민석,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 연속성과 단절에 대한 평가,” 『사회과학연구』, 제34집 4호 (2018), p. 261.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 노선은 동아시아 전략에서의 일대 변화를 가져 왔다. 부시 행정부가 구상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에 기초해 본격적으로 추진한 ‘한태평양 동반자 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자주의적 노선을 배척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귀결이지만, 다른 한편 쌍무적 관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애초 ‘한태평양 동반자 협정’은 동아시아 지역이 미국의 영향력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구상된 것이었다. 여기서 탈퇴했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경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문화공동체 논의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문화공동체와 공공외교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역대 미국 행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온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에 대해 때로는 방임적 태도를, 때로는 직간접적인 개입 전략을 구사해 온 것은 이러한 전략적 목표에 기초한 것이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지역공동체를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허브-앤-스포크’ 체제의 하위 요소로 인식해 왔다. ‘허브-앤-스포크’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지 않는 동아시아 지역공동체는 용인하지만, 미국의 영향력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무력화시키거나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전략이었다. 미국은 ‘역외 국가’로서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논의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동아시아에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진 ‘역내 국가’로서 전략적 판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논의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갖는 이러한 특수성은 문화공동체 논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역외 국가’라는 점에서 동아시아문화공동체 논의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이 지역에 미국의 가치를 전파하고 미국에 우호적인 여론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 왔다. ‘역외 국가’로서 동아시아문화공동체 논의의 외부에 존재할

292) Peter Navarro, “The Trump Doctrine: Peace Through Strength,” *The National Interests*, March 31, 2016, <<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the-trump-doctrine-peace-through-strength-15631>> (Accessed January 24, 2019).

수밖에 없지만, 동아시아에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진 ‘역내 국가’로서 미국의 가치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가들과 문화적인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이다.

문화공동체의 요체가 문화적 유대감과 일체감의 형성에 있다면, 미국은 이미 동아시아문화공동체 문제에 일정한 방식으로 개입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동아시아문화공동체를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목표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문제를 자신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질서에 종속적인 것으로 사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또한 미국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문화적 유대감의 형성이라는 전략적 목표하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문화공동체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태도는 공공외교 정책이라는 일반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외교는 해외에서 자국에 우호적인 감정과 여론을 조성하여 자국이 추구하는 외교 정책에 자발적으로 호응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타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국에 대한 호감과 문화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주력한다.²⁹³⁾ 타국 시민들 사이에서 우호적인 감정과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타국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공공외교를 미국적 ‘가치’와 ‘문화’에 대한 공감대의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왔다.²⁹⁴⁾ 자국의 외교 정책에 우호적이거나 최소한 반대하지 않는 여론을 조성한다는 일반적인 차원을 넘어 가치와 문화의 문제로 공공외교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공공외교 정책은 1953년 미국 대외공보처(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USIA)의 설립으로 본격화되었다. 이른바 ‘생각의 전쟁(war of ideas)’ 전략의 일환으로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설립한 이 기구는 해외에서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타국과의 문화교류를 지원함으로써 미국적 가치와 문화를 전파하고 이를 통해 소련과의 냉전적 대결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²⁹⁵⁾

미국 공공외교가 냉전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 냉전의 종식으로 공공외교의 역할과 규모

293) United States Advisory Commission on Public Diplomacy, “Accessing U.S. Public Diplomacy: A Notional Model,” (2010), p. 41. <<https://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149966.pdf>> (Accessed January 24, 2019).

294) 송태은, “미국 공공외교의 변화와 국제평판: 미국의 세계적 어젠더와 세계여론에 대한 인식,” 『국제정치논총』, 제57집 4호 (2017), p.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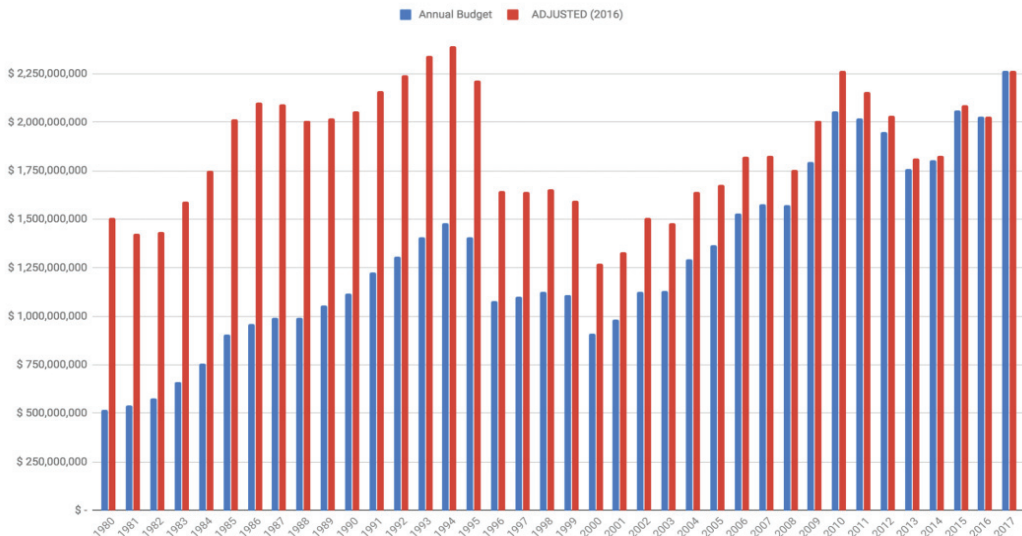
295) Duffey, Joseph., “How Globalization Became U.S. Public Diplomacy at the End of the Cold War,” in *Routledge Handbook of Public Diplomacy*, eds. Nancy Snow and Philip M. Taylor (New York & London: Routledge, 2009), p. 325.

가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1990년대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공공외교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1999년 클린턴 행정부가 USIA를 국무부 산하의 ‘공공외교·공보 차관(The Under Secretary for Public Diplomacy and Public Affairs)’으로 축소, 편입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다.

그러나 21세기 초반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개시하면서 이러한 사정에 중대한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 전쟁으로 반미 감정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를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²⁹⁶⁾ 이에 따라 반미 감정의 확산을 저지하고, 미국적 가치와 문화를 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공공외교가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공공외교 예산이 1994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2004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냉전 시기의 예산 수준을 회복하게 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다.

[그림 5-1] 미국의 공공외교 예산(1980-2017년)

Public Diplomacy Spending 1980 - 2017



출처: United States Advisory Committee on Public Diplomacy, “2018 Comprehensive Annual Report on Public Diplomacy and International Broadcasting,” (2018), p. 32. <<https://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87683.pdf>> (Accessed January 24, 2019).

296) Philip Seib, *Toward a New Public Diplomacy: Redirecting U.S. Foreign Polic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9), pp. vii~viii.

미국의 동아시아문화공동체 전략은 이러한 일반적인 맥락 속에 위치한다. 역대 미국의 행정부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별도의 문화공동체 전략을 구사하기보다는, 일반적인 공공외교 전략의 맥락에서 그에 투여되는 자원을 전략 지역인 동아시아에 집중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 동아시아 지역에 특화된 교육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투여되는 자원의 비중을 달리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 접근해 왔던 것이다.

전통적으로 미국 공공외교 자원은 유럽과 남미, 아시아에 집중되어왔다. 그런데 9·11 테러 이후 이슬람권에 대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부상함에 따라 이슬람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중동과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기준 미국 공공외교 예산의 23.1%는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에, 18.6%는 중동지역에, 10.8%는 아프리카 지역에 배정되어 전체 예산의 52.5%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 배정 순위로 보자면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가운데, 유럽과 중동,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016년 기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전체 공공예산의 16%가 투여되었는데, 이 중 절반 가까운 예산이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의 4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미국의 공공외교 예산이 이른바 전략 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카스피해 연안의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으로 이어지는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은 이슬람권에 대한 고려는 물론 천연자원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집중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공공외교 예산이 배정된 지역이 되었다. 중동지역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유럽은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자 NATO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역시 공공외교의 중요 대상이 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 지역에 배정된 예산의 절반가량이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에 배정된 것은 역시 이들의 전략적 중요성에 따른 것이다.

[그림 5-2] 미국 공공외교 예산의 지역별 분포(2016년) 기준

POSITION	COUNTRY	TOTAL SPENDING(%)
1	SOUTH AND CENTRAL ASIA	\$193,134,814(23.1%)
2	EUROPE	\$170,693,380(20.4%)
3	NEAR EAST	\$155,095,637(18.6%)

POSITION	COUNTRY	TOTAL SPENDING(%)
4	EAST ASIA PACIFIC	\$133,234,945(16.0%)
5	AFRICA	\$90,579,437(10.8%)
6	WESTERN HEMISPHERE	\$88,983,043(10.7%)
7	IO	\$3,366,500(0.4%)

출처: United States Advisory Committee on Public Diplomacy, "2017 Comprehensive Annual Report on Public Diplomacy and International Broadcasting," (2017), p. 18. <<https://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74950.pdf>> (Accessed January 24, 2019).

나. 정책

냉전 전략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던 미국의 문화공동체 정책은 이라크 전쟁 이후 반미주의의 확산이라는 사정을 배경으로 '신 공공외교' 개념으로 새롭게 추진되어 왔다. USIA를 중심으로 한 냉전 시대 미국의 공공외교가 일종의 프로파간다적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면, 신 공공외교는 미국적 가치와 문화의 확산과 공유에 보다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차원에서는 교육과 문화교류,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와 자유 유럽 라디오(Radio Free Europe), 자유 아시아 라디오(Radio Free Asia) 등의 전통적인 미디어 프로그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과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과거와 비교하여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전통적인 미디어 매체 이외에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003년 부시 행정부가 국무부 산하 정보자원관리국(Bureau of Information & Resource Management)에 전자외교사무실(Office of e-Diplomacy)을 설치하고 그 예산의 절반 이상을 각종 '디지털 아웃리치(Digital Outreach)' 프로그램에 투여하기 시작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그러나 미디어 형식의 변화를 제외하고 부시 행정부 시기의 공공외교 정책은 큰 틀에서 과거의 그것과 구별되지 않았다. 정책의 주안점이 과거와 같이 미국의 대외정책을 홍보하는데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5-3] 21세기 스테이트크래프트 어젠다

어젠다	내 용
공공외교	•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한 공공외교의 활성화
개발협력	• 정보 네트워크의 힘을 활용하는 개발협력 정책과 프로그램 (보건, 교육, 경제성장, 참여정치) • Civil Society 2.0 이니셔티브 • 민·관 간 기술 지식 교류 및 파트너십을 통한 “디지털 발전” 모델
인터넷 프리덤	•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말과 언론, 결사의 자유,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개방된 시장 및 접속의 자유를 핵심 요소로 하는 인터넷 프리덤을 21세기의 인권 문제로 부각 • 인터넷 거버넌스, 정부정책의 개방성과 투명성, 사이버안보 강조
외교 업무 혁신	• 인적 자원 훈련의 강화, 새로운 인재의 충원, 신기술을 이용하여 지식 관리와 업무에서의 혁신 도모

출처: 김태환, “주변국 공공외교의 최근 추세 유형과 한국에 대한 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45, (2016), p. 10.

미국 공공외교 정책의 패러다임적 변화는 오바마 행정부에 이르러 본격화된다. 전임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외교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다자주의 전략에 기초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기치로 내건 오바마 행정부는 정보혁명과 커뮤니케이션 혁명에 기초한 전 세계 시민사회와의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을 공공외교 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 나아가 공공외교를 미국에 대한 홍보로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나 개발 협력을 비롯한 여타의 대외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략을 채택했으며, 이를 위해 국무부의 업무혁신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재임 시 추진된 “21세기 스테이트크래프트 어젠다”로 집약된다.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는 전임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다자주의 외교로의 회귀를 천명했다는 점과 관련된다. 9·11테러를 기점으로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새롭게 강조하기 시작했지만,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일방향적이고 엘리트 중심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었고 쌍방향성에 대한 강조는 수사(rhetoric)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²⁹⁷⁾ 오바마 행정부는 이른바 ‘오바마 독트린’을 통해 다자주의 외교에 기초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부시 행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과 뚜렷이 구별되었고, 이러한 차이가 공공외교 정책에서의 차이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297) 김명섭·안혜경, “9·11 이후 미국 공공외교의 변화,”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5집 3호 (2007), pp. 311~314.

이는 반테러 전략에서도 확인된다. 전임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공공외교의 역할이 미국의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는 세력을 지원하고 미국의 가치에 반하여 테러리즘을 선동하는 세력을 고립시키는 데 있다고 본 것과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비록 그 목적은 공유하였지만,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인 방식과 달리 커뮤니케이션의 확대라는 관점을 통해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반테러 전략 커뮤니케이션 센터(Center for Strategic Counterterrorism Communications: CSCC)’를 설립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당시 미 국무부는 ‘제1차 4개년 외교개발검토(The First Quadrennial Diplomacy & Development Review: QDDR)’를 통해 전 세계 민주주의의 확산, 정보혁명 및 커뮤니케이션 혁명에 의한 지구적 연결의 확대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증대했음을 지적하고, 특히 해외 각지에 미디어 허브를 확장하고 세계의 모든 장소와 시점에서 미국을 대변하여 공공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인력의 확보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²⁹⁸⁾

오바마 행정부의 공공외교정책 기조는 시민사회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조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오바마 행정부 2기 들어 시민외교관(citizen diplomat)이라는 개념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된다. 2015년 미 국무부는 ‘4개년 외교개발검토(QDDR)’를 통해 국내외의 미국인이 시민외교관으로서 미국 정부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해외 시민사회, 시민운동가, 해외 지역공동체와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시민외교관이라는 개념은 이미 2007년 공공외교·전략 커뮤니케이션 정책조정위원회(PCC)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제시된 바 있었지만, 이를 공공외교의 핵심 의제로 제시한 것은 2015년 QDDR이 처음이었다.

시민외교관에 대한 강조는 미국의 가치와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는 해외대중 및 시민사회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하고, 이는 정부의 활동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해 있다. 2010년도 QDDR이 모든 정부 부처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외교업무혁신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2015년도 QDDR이 모든 미국인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은 이에 기인한다. 오바마 행정부 1기가 정부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2기는 시민의 참여 확대에 주안점을 두기 시작했던 것이다. 2015년 QDDR이 해외 시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미국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2016년 연례 공공외교보고서가 자발성과 박애의 가치를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로 지적하고 나선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²⁹⁹⁾

298) 송태은, “미국 공공외교의 변화와 국제평판: 미국의 세계적 어젠더와 세계여론에 대한 인식,” pp. 182~183.

299) 위의 글, pp. 184~185.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전임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에 대한 반성에서 다자주의에 기초한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일방주의로 회귀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마치 오바마 행정부의 흔적을 지우기라도 하듯, 전임 행정부가 주도해 온 주요 국제협약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탈퇴하기 시작했다. 부시 행정부가 구상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에 기초해 본격적으로 추진한 환태평양동반자 협정과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업적 중 하나로 평가받는 파리기후변화협정으로부터 탈퇴한 것은 일종의 신호탄이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방위비 분담 문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문제, 특히 중국과 격렬히 전개되고 있는 무역전쟁 등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대외정책은 일방주의로 점철되고 있다.³⁰⁰⁾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는 다른 한편 폐쇄적인 고립주의를 동반하고 있다. ‘이민자’ 문제를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답게 행정부 출범 2주가 채 안되어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멕시코 국경 담벼락 구축을 강력히 추구하는 등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고립주의에 몰두하고 있다. 공공외교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J-1 비자 발급 축소 정책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공공외교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중대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는 점에서, 이는 미국의 공공외교정책의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기 때문이다.

보다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정부 예산 편성에서 국무부의 비중이 줄어들고 국방부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2월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회계연도의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10% 증가한 6천 30억 달러로 책정하였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원조와 국무부의 외교활동을 위한 예산을 국방비 증액분만큼 삭감하여 4천 620억 달러로 책정, 발표하였다. 결과적으로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국무부 예산과 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가 사용하는 대의원조 예산은 각각 28%, 37% 삭감되었다.³⁰¹⁾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의 공공외교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무부와 국제개발처의 대의원조 예산이 대폭 삭감됨으로써 미국이 그동안 추진해온 공공외교정책의 축소가 불가피해졌고, 반이민 정서와 국경폐쇄에 대한 강조로 공공외교정책의 근간이 위협받게 되었다. 적어도 당분간은 미국이 이렇다 할 공공외교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300) 위의 글, pp. 186~187.

301) 위의 글, p. 188.

4. 문화공동체 논의의 시사점

‘역외 국가’라는 점에서 미국이 동아시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은 동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공공외교를 통해 이 지역의 국가들과 문화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미국의 공공외교정책을 통해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정책을 고찰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공공외교정책은 미국적 가치와 문화의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지역에도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과 문화적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은 동아시아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프로그램을 기초로 한다. 미국은 공통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각 지역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 예산을 집중하는 방식을 택해 왔다. 2016년 기준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네 번째로 많은 규모의 공공예산을 배정하고, 그중 절반가량을 한국, 중국, 일본 등에 지출한 것은 이러한 전략적 고려에 바탕을 둔 것이다.

미국의 공공외교정책은 냉전 시기 소련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비군사적, 비정치적 수단으로 시작된 것이었고, 따라서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공공외교 정책에 관한 관심이 퇴조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 반미주의의 확산이라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공외교정책은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다. 부시 행정부 시절 ‘부시 독트린’으로 표현된 패권적, 일방주의적 외교 노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단행된 이라크 침공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대한 반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했고, 미국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외교정책에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공공외교정책은 그 출발부터 일방주의적 외교 노선과 일정한 긴장 관계를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가 냉전의 종식 이후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공공외교에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한 것도 결국은 자신의 일방주의적 외교 노선이 야기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일방주의적 외교 노선을 포기할 수 없었고 따라서 공공외교에 새롭게 주목했지만, 실제 정책은 냉전 시기의 그것을 답습하는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일방주의 노선과 공공외교 사이의 긴장 관계는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의 공공외교정책이 극명하게 대립된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공공외교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주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난 직후 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진정한 힘은 우리가 지닌 무기의 위력이나 부의 규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우리의

이상, 즉 민주주의, 자유, 기회, 불굴의 희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전임 부시 행정부와 구별되는 외교 정책 기조의 변화를 암시한 바 있다.³⁰²⁾ 그 근거에는 전임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외교 노선에 대한 반성과 다자주의적 외교 노선으로의 전환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외교 노선으로 미국의 공공외교정책은 다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긴장 관계는 이른바 '연성 권력(소프트파워, soft power)'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 개념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쇠퇴하고 있는지, 그리고 패권 국가가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관심을 배경으로 탄생하였다. 조세프 나이(Joseph Nye, Jr.)는 이 개념을 통해 한편으로 미국이 여전히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다른 한편으로 모든 패권 질서는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전통적인 힘의 요소들뿐만 아니라 문화와 같은 연성 권력적 요소들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통적인 힘의 측면에서 미국의 절대적 우위는 감소하고 있지만, 강력한 연성 권력으로 인해 미국은 여전히 패권 국가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논지였다.³⁰³⁾

이는 곧 미국의 대외정책이 힘의 우위에 기초한 일방주의적 노선에서 벗어나 보다 다자주의적인 방식으로 전개될 때 미국의 패권이 오히려 공고화될 수 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연성 권력 개념에 대한 이론적 관심은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 정책으로 반미주의가 급속히 확산되었다는 현실적 사정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³⁰⁴⁾ 따라서 반미주의 확산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 과정에서 연성 권력 개념이 주목받게 된 것이다.

미국 공공외교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주도한 오바마 행정부가 스마트파워(smart power)를 외교 정책의 기치로 내건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과거와 같이 하드파워(hard power)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파워를 적절히 배합한 스마트파워를 통해 미국의 대외정책적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것이었다.³⁰⁵⁾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미국의 외교 정책은 다시 일방주의적 노선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스마트파워의 중요한 축이었던 공공외교정책이 그 근본에서부터 위협받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연성 권력이

302) 김상배, "매력경쟁으로서 공공외교: 미국과 중국의 사례," 김상배·이승주·배영자(편), 『중견국의 공공외교』 (서울: 사회평론, 2013), p. 57.

303) Joseph S. Nye, *Is the American Century Over?* (Cambridge: Polity Press, 2015), pp. 29~39.

304) 당시 반미주의 확산의 원인과 유형에 대한 분석으로는 Peter J. Katzenstein and Robert O. Keohane, *Anti-Americanism in World Politics* (Ithaca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참조.

305) 김상배, "매력경쟁으로서 공공외교: 미국과 중국의 사례," p. 57.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외정책이 실제로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되는가는 미 행정부의 성격이 전적으로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일방주의와 다자주의 사이에서 부침을 거듭해 왔고, 그에 따라 공공외교정책의 성격과 방향 또한 변화해 왔다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행정부의 성격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 왔다는 것은 향후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의 전개 과정이 미국 행정부의 성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으로 미국은 ‘역외 국가’이지만, 쌍무적 동맹 관계를 주축으로 지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내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의 이러한 이중적 속성으로 인해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따라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의 향후 전개 과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미국 행정부의 성격이 어떠한 방식으로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예단할 수는 없다. 다만 일반적 경향성과 그로부터 제기되는 도전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미국에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전통적인 하드파워에 기초한 대외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 갈등과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가 성숙하는데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리라 예측해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의 일방주의적 정책에 반발하여 오히려 동북아 국가들이 유대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동북아 국가들이 미국과 쌍무적 동맹 관계로 얽혀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드파워에 기초한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행정부가 갈등과 긴장을 통해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면, 소프트파워를 중심으로 다자주의 전략을 구사하는 행정부의 경우 전혀 다른 종류의 도전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미국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가 성숙하는데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북아문화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미국적 가치가 양립 가능한가에 따라 미국의 태도는 달라질 것이다. 미국 공공외교정책의 목표가 미국적 가치와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미국의 전략이익 확보를 보좌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가치와 충돌하는 동북아문화공동체는 그 자체로 미국의 전략이익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향후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미국 행정부의 성격은 물론 동북아문화공동체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여전히 패권국이고 동북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미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가 ‘역외 국가’인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다.

제 2 절 러시아의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

1. 서론

러시아를 동북아시아문화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기는 러시아측이나 아시아측에 모두 쉬워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 인종의 피부가 기본적으로는 백인이라는 사실은 물론이고 러시아의 언어와 문화가 기본적으로 유럽 문화에 기반하고 있다는 생각은 러시아와 아시아 지역에서 상식적이다. 러시아인들의 의식 속에서도 전통적으로 아시아는 외화(外化)된 지역이었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국제정세 및 지역질서의 변화하는 역동성은 러시아의 아시아에 대한 입장을 변화시켰고, 동북아시아에서도 러시아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물론 문화공동체를 논하는 것이, 특히 러시아에게, 시기상조인 것이 사실이지만, 러시아의 동북아시아와의 상호작용의 역사와 노력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나고 있는 공동체적 내지 협력적 상호작용 속에서 러시아가 동북아의 일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은 비록 아직까지는 문화공동체의 형성은 요원해 보이지만,³⁰⁶⁾ 그 전 단계로서의 동북아시아생활공동체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지니는 위치와 친화성 그리고 한계 등을 검토해 보려는 시도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우리는 러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자기정체성을 규정함에 있어서 아시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러시아의 동북아문화/생활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첫 단추가 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인들은 유럽과의 연관성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여 왔다. 하지만 진정한 유럽이 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이해/실망은 러시아로 하여금 아시아를 유럽과의 연관성 속에서는 타자이지만 자신의 일부로 이해하게 만드는 이중적 사고를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이중적 사고의 균형점은 시간을 통해서 변화해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아와의 연관 및 귀속에 대한 의식은 점차 더 뚜렷해진 것은 사실이다.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가 아시아에의 지리적인 귀속을 넘어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인식적인 귀속의 단계에까지 도달하게 될 가능성도 커가고 있다.

306) 러시아와 동북아시아의 관계에서 “문화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한 연구나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의 일원이라는 틀 속에서 러시아의 극동과 시베리아를 이해하려는 사고는 점차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와 관련된 이 장에서는 러시아와 동북아의 관계를 동북아문화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틀보다는 동북아생활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탐색해 보고자 한다. 생활공동체는 지역 내 국가들의 주민들이 인적 교류와 물질 교류를 증대해감으로써 사회, 경제적으로 같은 생활권 내지 교류권에 속해 있다고 느끼는 지역적 범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느슨하게 정의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를 동북아시아의 일원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전혀 엉뚱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에 점차 접근해 온 과정을 간단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인들이 제기하는 “러시아는 아시아인가?”라는 질문은 그들의 정체성 기저에 깔린 아시아적 요인을 인지하는 것과 동시에 향후 러시아의 미래를 모색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질문은 러시아가 동남쪽으로는 중앙아시아로, 더 동쪽으로는 시베리아와 극동으로 진출 하였던 시기부터 이어져왔다. 19세기 도스토예프스키는 『작가 일기』에서 러시아가 유럽과 아시아에 위치하여 있으며, 따라서 러시아인은 유럽인이며 동시에 아시아인이라고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미래는 아시아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유럽의 일원이 되고자 했던 러시아의 노력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좌절감과, 동시에 유럽이 지닌 러시아에 대한 불신과 혐오의 인식에 대한 당혹감을 기반한 것이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러시아에는 유럽과 다른 러시아만의 이념이 존재하며, 아시아가 러시아의 미래를 위한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그는 아시아적 러시아가 소생과 개작(改作)이 필요한 병약한 뿌리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내면에는 유럽에 대한 피해의식과 부활과 개작이 필요한 아시아라는 인식이 깔려있다.³⁰⁷⁾ 이는 비단 도스토예프스키만의 인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러시아 제국 시기 ‘아시아적 러시아’로서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은 러시아의 식민지로서 경제적으로는 수탈의 대상이었으며 사회적으로는 계몽의 대상이었다. “유럽에서 우리는 타타르였지만, 아시아에서 우리는 유럽인이다”라는 그의 말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상(像)을 극명하게 드러냄과 동시에 그 아시아 인식의 이중적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러시아의 사상가 차다예프가 러시아가 지니는 유럽과 아시아에 대한 관계의 이중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위대한 두 세계, 동양과 서양에 뿌리며, 한 팔은 중국에, 다른 한 팔은 독일에 걸치고서, 우리는 두 위대한 정신성의 기초를.... 우리 가운데 종합했어야만 했다.”³⁰⁸⁾고 지적한 이후 러시아의 정치가들과 사상가들은 계속하여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왔다. 레닌도 “러시아는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유럽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도 속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³⁰⁹⁾ 이와 같은 러시아의 아시아 및 유럽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러시아

307) 오원교, “도스토예프스키와 아시아: 『작가 일기』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vol. 22, no. 2 (2012), p. 77.

308) 차다예프의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P. Ya. Chaadaev, *Philosophckie pisimo, Coch.*, M., 1989. C.24~25.

309) V. I. Lenin, *Polnoe sobranie sochineniy.*, M., 1958~1970, t.30, p. 236.

지성사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서 오늘날까지도 러시아의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 고민들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같은 두 얼굴의 러시아에 대한 고민은 러시아 민족 및 국가 정체성과 관련하여 이중적인 사고로 지속되어 왔고, 이는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지리적 및 문화적 “중간자 의식”을 발전시켜 온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³¹⁰⁾

소련 시기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와의 외교 관계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정도로 이해되었다. 이 시기에는 러시아는 아시아인가, 러시아가 아시아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부각되지 않았고, 혁명의 전파와 냉전 시기 자본주의와의 체제 경쟁이 주요 현안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소련 외교정책은 고르바초프 이전까지는 유럽정책에 우위를 두고 아시아에서는 미소의 대결이라는 군사 및 전략적 차원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1975년 헬싱키선언 이후로 유럽의 질서가 안정을 찾아가고, 냉전적 체제가 약화되어 가면서 아-태지역이 북미와 유럽과 함께 국제정치경제의 중심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자 소련의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동북아시아가 본격적으로 러시아의 관심이 대상이 되었던 것은 소련 말기인 브레즈네프와 고르바초프 시기 이후부터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1972년 브레즈네프는 아시아 내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안보체제를 제안하였고, 1980년대 고르바초프는 블라디보스토크 선언과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을 통하여 아시아 내 다자 안보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였다. 고르바초프는 경제적 차원에서도 동시베리아와 극동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1991년 고르바초프의 도쿄 연설을 살펴보면, 러시아 동시베리아 극동지역과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연결하여 자본, 첨단 기술,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³¹¹⁾

결국 고르바초프 이후의 소련 및 러시아의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책은 국내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극동과 시베리아의 개발을 위하여 이 지역에서의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은 크게 군사-안보적인 차원의 목표와 경제적인 차원의 목표로 나뉘는데,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의 동북아정책이 지니

310) 이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 *Россия: Опыт национально-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идеологии* / В.В.Ильин, А.С. Панарин, А.В.Рябов. - М.: Изд-во МГУ, 1994; Millan Haunner, *What is Asia for Us? Russia's Asian Heartland Yesterday and Today*, London: Unwin Hyman, Inc., 1990.

311) 신사고 이후 러시아의 아-태지역 정책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Gerald Segal, *The Soviet Union and the Pacific* (Londo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90); Charles E. Ziegler, *Foreign Policy and East Asia: Learning and Adaptation in the Gorbachev Er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는 목표는 미군사력의 영향력 약화 및 제거노력, 일본의 보통국가화(재무장 및 군사대국화) 견제, 중국의 고립화나 반(反)소련화 방지, 한반도문제에 대한 전략적 차원에서의 잠재적인 영향력의 확대, 역내군축의 실현, 다자간 안보협의기구 창설 등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역내 국가들을 시베리아 개발 사업과 역내 경제협력기구 참가를 유도하고, 동북아 경제권에의 참여 등을 목표로 추구하였다.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의 패권, 세계화를 경험하면서 러시아 내부 엘리트와 국민들은 과거와는 다른 자국의 위치와 평판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이들은 러시아의 역사적 경험을 되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념 체계를 갈구하였다. 신생 국가인 러시아는 정치와 경제 체제의 전환을 겪었으며, 소련 시절 서구와 수립하였던 관계도 재정립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내 정치는 서구식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서구주의와 러시아 고유의 전통을 중시하는 유라시아주의 간의 투쟁으로 이어졌다. 서구주의는 서구적 근대화이론에 따라 국가를 서구화하려는 전략이다. 반면, 이와 대립되는 유라시아주의는 서구의 발전 성과를 인정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형성한다는 것에 중점을 둔다.³¹²⁾ 1990년대 초 엘친 대통령 역시 서구주의 사조에 따라 러시아가 서구와 “자연스러운 동반자” 관계를 맺고, IMF, 세계은행 등 서구의 금융기관에 발 빠르게 가입하였다. 한편, 이 시기 러시아는 서구에 대한 안보,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는 한편, 구소련 지역 내에서 고립주의 전략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러시아 내에서 유라시아주의 사조가 주도권을 갖기 시작한 것은 엘친 대통령이 프라마코프를 등용한 1996년 이후부터였다. 당시 러시아는 다자주의 세계 내 강대국을 목표로 구소련 지역 내의 재통합과 경제 개혁을 추진하였다. 2000년대 푸틴이 집권한 이후 유라시아주의는 한층 강화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 및 미국과 대테러 분야에서 협력하는 한편,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였다. 또한, 본격적으로 낙후된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였다.

2012년 푸틴 대통령이 재취임한 이후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新)동방정책”³¹³⁾을 통하여 실용적인 차원에서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치, 안보, 경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러시아의 대외 지향성이 보다 아시아에 가까워지고 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보다

312) 신범식, “러시아의 외교정책,” 『현대외교정책론』 (서울: 명인문화사, 2016), pp. 418~420.

313) 신범식, “러시아 신(新)동방정책과 동북아 지역정치: 지역 세력망구조 변화와 러시아의 가능성 및 한계,” 『NSP 리포트』 74호 (동아시아연구원, 2014), p. 10.

더 큰 개념인 “유로-퍼시픽(Euro-Pacific) 국가”로서의 정체성 제시하면서 “아시아 벡터(Asia Vector)”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2년 APEC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자바이칼 지역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APEC 회의 개최를 통하여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정체성 확대와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통하여 러시아는 과거 아시아를 지리적 귀속 단계를 넘어 러시아의 인식을 아시아에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상과 같은 러시아 정체성의 전개과정을 보면, 점진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정체성의 기초가 강화되면서 이 지역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은 이같은 상호작용의 본질과 한계를 드러내기 위하여, 러시아가 동북아시아로의 접근과 진입을 위해 그 동안 추진해 온 지역주의 정책과 성과와 한계를 개괄해 보고, 동북아와 관련된 정책적 담론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냉전 말기부터 추진된 정치, 경제, 문화 부분에서 러시아의 지역주의 정책을 검토한다. 그리고 러시아 학자들에 의한 동북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지역주의 논의를 검토하고, 이후 현 단계의 실제적인 생활공동체의 달성과 관련하여 러시아 대중들이 동북아시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가 지니는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소련/러시아 정부의 아태지역에 대한 지역주의 정책

가. 정치·안보 분야 지역주의 정책

소련은 붕괴 이전부터 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집단안보체제의 구축을 언급하였다. 먼저, 1972년 브레즈네프는 아시아 내 무력 충돌 방지, 안정 및 평화 보장을 위한 집단안보 체제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아시아의 집단 안보가 무력 사용의 거부, 주권의 존중과 국경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폭넓은 경제 발전, 동등한 주권,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동남아시아에서의 미군 철수로 인한 구도적 공백에서의 소련의 역할 증대와 핵실험이 성공한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루는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980년대 말 고르바초프는 중국 및 미국과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며 국제안보체제 형성을 위하여 협력하는 방향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책을 추진하였다. 고르바초프는 1986년 7월 블라디보스토크 선언을 통하여 몽골, 아프가니스탄 내 주둔군

철수하고, 동아시아에 배치된 핵무기를 감축하였다. 또한, 소련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캄보디아 내 베트남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고르바초프는 아시아 전역을 포괄하는 안보체제 형성을 위하여 여러 차례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1986년 ‘전아시아포럼(All Asian Forum)’ 제안, 1988년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을 통한 ‘전아시아안보위원회(All Asian Security Council)’ 수립 제안과 동북아 국가들과의 새로운 외교관계 설정, 1990년 아시아안보회의 제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외에도 고르바초프는 아시아 내 갈등 조정을 담당하는 ‘아시아안보협력기구(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Asia)’ 창설, 소련, 미국, 중국, 일본, 인도가 참여하는 5자회담 등 다자간 안보 협력을 위한 기구와 제도의 창설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고르바초프의 이러한 노력은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호적인 대외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특히, 당시 중국, 일본, 아프가니스탄, 아세안 국가들과 갈등 내지는 긴장을 겪고 있었던 소련은 아시아 국가와 갈등을 해소하고 선린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대외정책의 주요 과제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의 구상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³¹⁴⁾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 중국의 도전과 일본과의 영토 문제, 북핵 문제 등의 과제에 직면하였다. 먼저 러시아는 중국 간 양자적인 차원에서 양국은 국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양국 간 국경 문제는 소련 당시부터 해결되지 못하였던 과제였다. 또한, 지역적인 차원에 중국은 서북 지역의 민족 문제와 분리주의에 대한 안보적 불안을 해소하고, 러시아의 쇠퇴에 따른 중앙아시아 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 내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단면적으로 이해하였다. 한국은 러시아의 관계를 대북 관계에서의 효용으로만 파악하였으며, 북한은 러시아가 체제의 생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만 주목하였다. 일본의 경우, 지역 안보 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동북아시아 안보 차원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³¹⁵⁾

이러한 상황에서 90년대 러시아는 1993년 1차 북핵 위기 상황에서 다자 안보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994년 추르킨(Churkin)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국, 북한,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UN 사무총장,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포함된 8자회담을 제안하였다. 이후에도 러시아는 다자회담의 형식을 통하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

314) 정희석,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러시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 27, no. 2 (2006), pp. 436~438.

315) 신범식, “러시아 신(新)동방정책과 동북아 지역정치,” p. 9.

하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다양한 제안은 북한과 미국의 반대로 북핵 위기 처리 과정에서 수용되지 못하였고, 1994년 북핵 위기는 북한과 미국 간 양자 회담으로 일단락되었다. 이후 러시아는 1990년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구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1996년에 제의된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이 1997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평화 정착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러시아는 4자회담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러시아가 한반도 안보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6자회담, 내지는 10자회담의 형식을 선호한다는 점을 역설하였지만, 결국 러시아는 북핵 위기 해소를 위한 다자회담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³¹⁶⁾

푸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00년부터 러시아는 강대국 세력균형과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견지하면서 동북아시아 내에서 전략적 영향력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러시아가 지닌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 위상과 영향력의 회복 속도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등 소위 근외 지역(Near Abroad) 내 회복 속도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일각 중국의 부상으로 동북아시아 내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가 더디게 진행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러시아가 동북아시아로 영향력을 투사하기 위한 통로를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동북아시아 내 영향력 회복을 도모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부터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러시아의 참여를 보장하고 남한과 북한에 대한 등거리 관계를 유지할 것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하였으며, 한반도 문제에서 “사심 없는 브로커” 역할을 자임하고 수행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는 2002년 2차 북핵 위기 해소를 위한 6자회담에 참석할 수 있었다.³¹⁷⁾ 6자회담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것은 러시아는 북핵 위기를 타결한 이후 한반도와 지역의 안보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자안보협력 워킹그룹의 대표를 맡음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다자주의적 안보 달성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보여주었다는 점이며, 이는 최근의 북핵 위기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는 러시아의 입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동북아 지역주의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실제적인 정책으로 특기할 만한 일은 푸틴 대통령이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신동방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아시아로의 진입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강화하였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은데, 특히 이로써 러시아는 메드베데프 시기로부터 시작하여 경제의 현대화와 국력 확장을 통하여 유럽과 태평양

316) 정희석,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러시아,” pp. 440~441.

317) 신범식, “러시아 신(新)동방정책과 동북아 지역정치,” p. 11.

을 모두 아우르는 광역적 국가 정체성을 정초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같은 “유로-태평양 양국가(Euro-Pacific State)”로서 러시아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안정적인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과 동북아 지역 내 전략적 행위자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려는 행보를 보여 왔다. 이는 북한과의 관계 회복 및 강화, 한반도 문제에서의 지분자로서 위상 확보,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의 전통적인 영향력 확보를 위한 노력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북핵문제나 사드(THAAD) 문제와 같은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이해당사자, 브로커 내지 중재자, 다자협력 촉진자 등의 역내 행위자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반도 문제에서도 러시아는 남북 모두와 동시 수교국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시아 안보를 위한 다자협력체 창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다.³¹⁸⁾

이와 같은 러시아의 정책 기조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2016년 11월 푸틴 대통령이 승인한 「러시아 연방의 외교정책 개념」(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이하 외교정책 개념)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재확인 할 수 있다.³¹⁹⁾ 먼저, 외교정책 개념에서 러시아의 세계 인식을 살펴보면, 러시아는 지구적인 권력과 발전의 가능성이 점차 탈중심화 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전이되고 있는 한편, 서구의 지구적 경제, 정치적 지배가 점차 쇠락하고 있다고 여긴다. 또한, 외교정책 개념에 따르면, 세계의 문화적, 문명적 다양성과 다자 발전의 모델이 어느 때보다 명확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군사 및 정치 동맹으로 현재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 위협을 대응하기 어려우며, 사람과 국가 간 상호연결이 증대함에 따라 단일 영토 내에서 안보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실패할 것이라고 본다. 러시아는 위의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로-대서양(Euro-Atlantic), 유라시아,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개별 안보를 위한 평등하고 보편적인 원칙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현재 지구적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자적 메커니즘’에 유동적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크 외교가 중요하다는 것이 외교정책 개념에 명시되어 있다.

외교정책 개념의 지역 외교정책 우선과제를 살펴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이하 CIS), 유로-대서양 지역, 북극권 국가들 이후에 언급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는 지역 내 입지를 강화하고, 아시아·태평

318) 위의 글, pp. 4~11.

319) 러시아 외교부,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тверждена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В.Путинным 30 ноября 2016 г.* (검색일: 2018.1.30.).

양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한다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포괄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고 공평한 집단안보 및 협력 구조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동북아시아 지역 내 개별 국가 수준에서 살펴보면, 러시아가 향후 중국, 몽골, 일본, 한국과의 관계들을 발전시키는 원칙들이 명시되어 있다. 먼저,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중국을 가장 처음으로 언급한다. 외교정책 개념에는 중국과 포괄적이고 평등하며, 신뢰에 기반한 동반자 관계 및 전략적 협력을 계속 발전시키며, 전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러시아는 새로운 도전과 위협 공동 대응, 긴박한 지구적 문제 해결, 국제기구 및 다자적 지원 내에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외교정책 협력을 증진할 의사를 피력하였다. 두 번째, 몽골과 일본의 경우, 중국과 한국과 달리 매우 간략한 외교정책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몽골의 경우, 러시아는 몽골과의 관계에서는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 데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과 안보 확보를 포함하여 일본과 지속적으로 선린 관계를 수립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증진할 것을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북한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양국과 전통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한반도의 대립과 긴장 완화를 추구, 남북 간 정치 담화 촉진을 통한 화합과 협력을 유도할 것이라는 기조를 확인하였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모든 방면에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해왔으며, 6자회담이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는 향후 동북아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메커니즘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경제 분야의 지역주의 정책

지역 안보와 더불어 소련과 러시아가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견인한 것은 경제적인 요인이었다. 러시아의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은 러시아 제국부터 소련과 러시아연방에 이르기까지 지리적으로 러시아 일부에 귀속되었지만, 경제적으로 대단히 낙후되었다. 동북아시아와 인접한 극동지역은 러시아 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 비중은 전체 4.2%이며, 러시아 내 지역총생산(Gross Regional Production, 이하 GRP)에서는 5.4%의 비중을 차지한다.³²⁰⁾ 러시아 행정관구 지표별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 <표 5-2>와 같다. 시베리아 지역과 극동 지역은 영토에 비하여 GRP, 상품소매, 투자, 수출, 수입의 비중이 상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320)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Global Strategy Report』, (2017), p. 7.

〈표 5-2〉 러시아 행정관구 지표별 비중(2014년)

(단위 : %)

구분	영토	인구 (2015)	GRP (2013)	상품 소매	투자	수출	수입
중앙	3.8	26.6	35.0	34.2	25.3	51.3	60.6
모스크바시	0.01	8.3	21.5	16.8	10.9	46.3	43.8
북서	9.8	9.5	10.3	9.0	10.0	11.2	19.0
남방	2.5	6.6	6.5	9.1	9.4	4.1	3.9
북카프카즈	1.0	2.5	2.5	5.1	3.8	0.3	0.7
프리볼시스키	6.1	20.3	16.0	18.4	17.4	12.8	6.2
우랄	10.6	8.4	14.1	9.2	17.1	7.6	3.0
시베리아	30.0	13.2	10.2	10.2	10.6	7.0	2.8
극동	36.0	4.2	5.4	4.0	6.0	5.8	3.7
크림	0.2	1.6	-	0.7	0.2	0.0	0.1

출처: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p. 7.

소련 말기부터 이러한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었다. 극동지역에 대한 개발 전략을 살펴보면, 그림과 같이 1990년대~2000년대 후반 불균형 ‘해소’와 ‘안정’ 정책의 혼선기와 2010년대 통합적 지역발전, 동아시아로의 편입 정책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³²¹⁾

[그림 5-4] 러시아의 시기별 극동 개발 전략의 변화



출처: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p. 13.

321)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p. 13.

먼저, 고르바초프 집권 당시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은 저개발과 민족 분쟁으로 경제,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고르바초프는 동시베리아, 극동지역의 개발과 경제 발전을 위하여 당시 역동적인 성장세를 보였던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을 도모하였다. 그는 1991년 도쿄 연설을 통하여 동시베리아, 극동지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연결하는 것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 발전을 위하여 자본, 첨단기술, 기술인력 확보를 위하여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다.³²²⁾ 소련 붕괴 이후 옐친 정부는 극동 지방과 바이칼 지역의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1996~2005 극동·자바이칼 경제·사회개발 연방 특별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1996년에 시작된 해당 계획의 실적은 대단히 미진하였다.

극동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극동지역과 동북아시아 지역 간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진행된 것은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부터였다. 푸틴 대통령은 국내 차원에서 옐친 대통령 시기 극동·자바이칼 개발 계획을 2010년까지 연장할 것을 밝혔으며, 연방 정부는 이를 〈2013년 극동·자바이칼 지역 경제·사회 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으로 수정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APEC 정상회담에 맞추어 블라디보스토크를 개발하는 〈아·태지역 국제협력센터로서 블라디보스토크시의 발전〉이라는 하위 계획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국외 차원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 일본, 한국과의 양자 협력을 강화하였다. 러시아는 중국과 선린 우호 관계 속에서 지역 개발이 상호 이익에 합치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 먼저 양국 정상은 2004년 국경 문제를 합의하여 양국 간 갈등 요인을 제거하면서 향후 협력을 더욱 증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후 2009년 양국 정상은 〈2009~2018 러시아 극동·동시베리아지역과 중국 동북지역 간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러시아가 발표한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 사회경제개발전략〉을 살펴보면, 러·중 간 협력에 대한 내용만 온전한 장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²³⁾

한편 러시아와 일본은 영토문제로 정치적 갈등을 겪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점차 협력의 범위를 넓혀갔다. 특히, 일본은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와 교역을 꾸준히 늘려나갔으며, 러시아와 일본은 양국 간 〈러시아 극동·시베리아에서의 일·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9년 러·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은 양국 정부 및 민간이 경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322) 최태강, “아시아·태평양국가로서의 러시아: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조건과 가능성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한국시베리아연구』, (1998), p. 10.

323) 우평균, “러시아 극동개발 프로그램과 한·중·일의 정책: 현황 및 한국의 방향성,” 『슬라브학보』, vol. 25, no. 4 (2014), pp. 223~256.

2012년 푸틴 대통령이 재취임한 이후 러시아는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한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며 극동지역과 시베리아 지역 개발, 동북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재취임 이후 연례 회담 등 공개 석상에서 지속적으로 동방이 러시아 성장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2012년, 2013년 두 차례 연례 국정 연설을 통하여 러시아의 발전이 동방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국내 기업들의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세, 재산세 등 세금을 5년간 면제하고, 국가기관의 경영 간섭을 최소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국외 차원에서 러시아는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시베리아와 극동 개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 도전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보다 다자적 및 다각적인 차원에서 동북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과 경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에너지, 물류,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는 러-중-북, 러-북-남 등의 3각 협력을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³²⁴⁾ 이러한 다자협력의 계획은 <에너지 전략 2030>, <철도 전략 2030> 등 러시아의 다양한 전략 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승인된 <외교정책 개념>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경제적 협력에 목표가 명시되어 있다. 먼저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합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시베리아와 극동 내 진행 중인 발전프로그램에 활용할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러시아는 아·태 경제협력포럼에서 제시된 기회를 포함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지역 경제 협력의 기조로 삼았다.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의 실질적이고 밀도 있는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러시아는 2015년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을 개최하여 동북아시아 지역 내 국가 정상들을 초청하여 경제 협력 확대를 장려하고 있다. 동방경제포럼에서는 국가 간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경영, 문화, 스포츠, 교육, 스타트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15년 열린 첫 동방경제포럼에서 극동 지역의 주요 사회경제 발전이 러시아의 미래가 될 것이며, 극동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효과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러시아 극동에 투자하는 국가 및 기업에 독점적인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러시아가 지닌 막대한 자원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³²⁵⁾ 2016년 동방경제포럼에서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정치, 경제적

324) 신범식, “러시아 신(新)동방정책과 동북아 지역정치,” pp. 4~11.

325) 러시아 대통령 사이트, “First Eastern Economic Forum,” 2015.9.4.,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50232>> (검색일: 2019.1.28.).

협력에 큰 관심이 있다는 것과, 극동 내 프로젝트를 위한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극동을 러시아의 사회경제발전의 중심으로 만들 것을 재확인하였다. 당시 그는 5%를 넘어선 극동지역의 경제 성장과 2015년 이후 극동지역의 인구 성장, 사망률 감소 등 극동지역의 사회적인 발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³²⁶⁾ 2017년 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19개 연방 법안이 채택되었다는 것을 언급하였으며, 극동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 투자자, 기업, 연방 및 지방 정부 모두에 편리하고 명료한 법제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의사를 피력하였다.³²⁷⁾ 2018년 동방경제포럼에서도 푸틴 대통령은 극동지역의 발전이 러시아의 우선과제이며, 이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2013~2017년 극동지역의 산업 생산량은 22% 성장하여 러시아의 평균을 넘어섰으며, 극동지역은 전체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액의 25% 이상을 차지한다고 언급하며 극동지역의 성장을 과시하였다.³²⁸⁾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 지표 등을 살펴보면 러시아-동북아시아 간 경제 협력은 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러시아의 수출입 상대국 비중을 살펴보면,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은 중국이다. 중국은 2015년 이후 수입에서 20%를, 수출에서는 10%를 차지하는 러시아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이다. 반면, 일본은 전체 수출에서 3~4%, 수입에서 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5-3〉 러시아의 수출, 수입에서 중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연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2010	2015	2016	2017	2010	2015	2016	2017
CIS 국가	15.0	13.1	13.3	13.4	13.9	11.6	10.8	10.9
비CIS 국가	85.0	86.9	86.7	86.6	86.1	88.4	89.2	89.1
중국	5.1	8.3	9.8	10.9	17.0	19.1	20.8	21.1
일본	3.2	4.2	3.3	2.9	4.5	3.7	3.7	3.4

출처: 러시아 연방통계청,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18 참고해 저자 작성.

326) 러시아 대통령 사이트, "Eastern Economic Forum," 2016.9.3.,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52808>> (검색일: 2019.1.28.).

327) 러시아 대통령 사이트, "Plenary session of the Eastern Economic Forum," 2017.9.7.,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55552>> (검색일: 2019.1.28.).

328) 러시아 대통령 사이트, "Eastern Economic Forum Plenary Session," 2018.9.12.,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58537>> (검색일: 2019.1.28.).

〈표 5-4〉 2015~2017년 러시아의 동북아 4개국 수출액

(단위 : 백만 달러)

		2015년	2016년	2017년
총 수출액		165,581	130,624	159,683
한국	수출액	13,482	9,998	12,311
	비중	8.14%	7.64%	7.70%
중국	수출액	28,501	28,012	38,919
	비중	17.21%	21.44%	24.37%
일본	수출액	14,483	9,346	10,418
	비중	8.74%	7.15%	6.52%
몽골	수출액	1,117	896	1,327
	비중	0.67%	0.68%	0.83%

출처: 러시아 연방통계청,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18 참고해 저자 작성.

러시아가 동북아시아 4개국을 상대로 지난 3년간 수출한 금액을 살펴보면, 여전히 중국이 비CIS 국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뒤로 한국, 일본이 뒤를 잇는다. 2015년 서구의 대러제재 이후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액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한국 수출액은 2016년 하락하였다 2017년 다시 반등하였다. 한편, 러시아의 대일본 수출액을 살펴보면,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대몽골 수출액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5-5〉 2015~2017년 러시아의 동북아 4개국 수입액

(단위 : 백만 달러)

		2015년	2016년	2017년
총 수입액		161,693	162,658	202,608
한국	수입액	4,560	5,110	6,934
	비중	2.82%	3.14%	3.42%
중국	수입액	34,948	38,022	48,056
	비중	21.61%	23.37%	23.71%
일본	수입액	6,813	6,682	7,765
	비중	4.21%	4.10%	3.83%
몽골	수입액	44.1	35.9	41.2
	비중	0.03%	0.02%	0.02%

출처: 러시아 연방통계청,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18 참고해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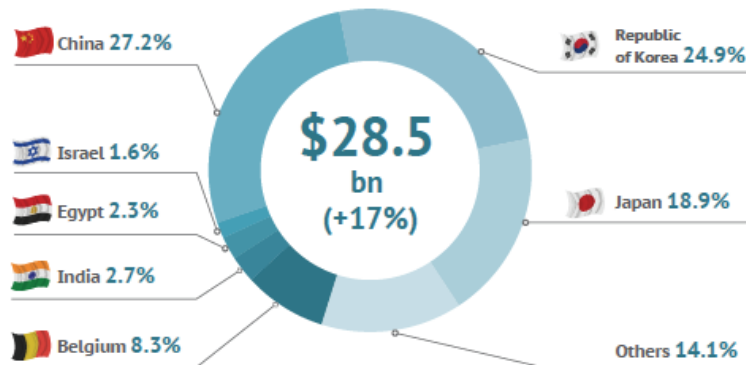
러시아의 수입에서 동북아시아 4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중국은 전체 러시아의 수입액의 21~23%를 차지하였으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의 수입액도 중국과 같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3%대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2016년 수입액이 소폭 하락하였다가 2017년 다시 반등하였으나, 전체적인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대몽골 수입액 비중 0.02%를 유지하며 교역에서 몽골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역을 극동지역으로 한정해 보면, 한국, 일본의 비중은 더욱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 썩크탱크인 발다이 토론클럽(Valdai Discussion Club)이 2018년 발표한 <Toward the Great Ocean>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극동지역의 교역액은 전년 대비 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4.9%, 18.9%인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지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러시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더욱 높은 27.2%를 기록하였다(그림 5-5) 참고).

이같은 극동지역의 교역 비중이 이야기하는 바는 명료하다. 이 지역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기반은 동북아 한, 중, 일 세 나라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의 발전이 이 지방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지방 주민들이 가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지방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해 보면, 이들은 러시아 중앙 정부가 가진 규제 등의 정책이 도리어 러시아 극동 지방의 좀 더 자유롭고 적극적인 동북아 국가들과의 소통 및 교류에 대하여 방해가 된다는 인식도 만만치 않다.

[그림 5-5] 러시아 극동지역 교역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출처: Valdai Discussion Club, *Toward the Great Ocean - 6: People, History, Ideology, Education*, (2018), p. 28.

교역을 제외한 경제협력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중국은 러시아와 물류와 자원, 농업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5년 중국과 러시아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중국은 국무원 총리를 중심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극동지역 개발을 진행 중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도로 러시아의 극동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중국 국내에서 중앙정부, 동북3성, 네이멍구 자치구 간 업무 협조가 가능한 구조가 수립되었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27억 달러를 투입하여 프리모리에 1, 2(Primoriye 1, 2) 물류망 건설로 동북 3성의 물류 구조를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프리모리에 1은 [하얼빈 ~ 수이펀허 ~ 그로데코보 ~ 블라디보스톡/나호드카/보스토치니]를 연결하는 운송 프로젝트로, 블라디보스톡 항을 통하여 중국 남부지방 항구까지 물류 루트가 연결될 수 있다. 프리모리에 2는 [장춘 ~ 길림 ~ 훈춘 ~ 크라스키노 ~ 포시에트/자루비노]를 연결하는 루트로, 중국 동북의 1,000만 도시와 러시아 극동지역이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물류 루트의 개발은 러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고, 중국-극동지역 간 경제교류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에너지 부분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ESPO)을 통하여 활발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양국은 2003년 파이프라인 건설에 합의하였으며, 2010년 파이프라인이 완공된 이후 2011년부터 러시아산 원유가 중국에 공급되었다. 2015년 기준 ESPO로 중국에 공급된 러시아 원유량은 1,600만 톤으로, 중국은 러시아의 제1원유 수입국을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극동지역과 농업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부터 극동지역과 시베리아산 곡물을 적극 수입하고 있다. 중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11월 간 수입된 러시아산 옥수수는 6,942만 톤이며, 대두는 3억 2,607만 톤에 달한다. 이러한 중국-러시아 간 극동협력은 러시아의 경제 이익에 철저하게 부합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에너지 자원 개발, 농업 분야, 인프라 개발, 제조업 투자 등 러시아가 제시한 분야에서의 협력에 조응하면서 중국은 러시아와 주도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³²⁹⁾

한편, 일본의 경우 자원개발에 집중하여 러시아 극동지역과 경제협력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1990년부터 사할린 가스 개발을 주도적으로 지원하였으며, 2009년 사할린 II에서 LNG를 생산하기 시작한 이후, 2013년 기준 생산량의 80%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한편, 농업 분야에서도 일본은 극동지역과 협력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극동에는 10여 개의 일본 농업기업이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기법인 핫카이도 농법을 러시아에 소개하며 1,000ha의 농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의 대러시아 정책은 과거 에너지

329)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pp. 46~49.

개발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한 포괄적 협력으로 기조가 변화하였다. 특히 2016년 러-일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 ▲의료, ▲도시 인프라, ▲중소기업 협력, ▲에너지 자원 협력, ▲러시아의 산업다각화, ▲극동지역 제조업 기반 구축, ▲첨단기술, ▲인적 교류 등 8개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하였으며, 그 중 다수가 일본-극동지역 간 협력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³³⁰⁾

한국도 북방정책을 통하여 러시아와의 협력을 도모하였다. 한국은 이러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에 상응하는 동북아 경제 협력에 대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권의 남-북-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연결, 박근혜 정권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문재인 정권의 신북방정책 등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의 전략적 목표와 부합하여 경제적 협력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남-북-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나진-하산 지구 공동 개발 등은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무산되었다가, 2018년 남-북 간 긴장 완화 속에 재차 거론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러시아 극동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과 유라시아 전역을 연결하는 구상을 발표하였다. 신북방정책에는 철도, 전력, 가스, 항만, 북극항로 등 물적 인프라의 연결, 수산업, 농업, 산업단지, 조선 등 분야별 협력이 포함된다(그림 5-6) 참고).

[그림 5-6]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9-Bridge



출처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홈페이지

330) 위의 글, pp. 55~57.

다. 문화교류와 ‘생활공동체’의 형성

러시아의 대외 문화교류 정책을 통해 러시아와 동북아시아 국가 간 ‘생활 공동체’의 형성과 관련된 조건과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러시아는 문화교류를 통하여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더욱 다양화, 다각화하고 있다. 문화교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 특히, 학생 교류와 관광객의 이동은 러시아와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문화와 교육, 경제의 상호작용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동북아시아 내 양국 간, 다자 간 인적 교류의 과정에서 초국경적인 삶의 섞임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하여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생활공동체’가 구성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인적 교류의 규모와 현황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으나, 유학생 수나 관광객 수 등의 지표를 통하여 정량적으로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은 이 지표의 증가는 비록 초보적일지라도 러시아의 극동-동시베리아 지역과 동북아시아 국가 간 교류의 양적 성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으며, 이러한 양적 접촉의 확대는 향후 동북아생활공동체의 틀 속에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가 포함되는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며, 이러한 조건은 향후 동북아시아의 문화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여건이 될 것이다.

먼저 러시아의 대외 문화 정책 목표를 살펴보면, 러시아는 대외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제시하였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부터 러시아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부를 기존 문화매스커뮤니케이션부에서 분리하였으며,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조치하였다.³³¹⁾ 메드베데프 정부 시기 러시아의 문화 정책 목표는 <2008~2020년 장기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개념(Concept of the Long-term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2008~2020, 이하 전략 2020)>과 러시아 연방의 목표 프로그램인 <2012~2018 러시아의 문화(The Culture of Russia 2012~2018)>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전략 2020>에서 러시아 정부는 대내적으로 러시아 국민의 문화재, 문화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하고, 러시아인들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략 2020>에서 나타난 문화 정책의 대외 목표는 해외에 러시아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알리는 것이다. <2012~2018 러시아 문화> 프로그램에서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의 문화 정체성과 동등한 문화재 접근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세계 사회 내 러시아의

331)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Вопросы системы и структуры федеральных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2008.5.12., <http://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76855/942772dce30cfa36b671bcf19ca928e4d698a928/> (검색일: 2019.1.20.).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내용을 재확인하였다.³³²⁾

대외적으로 러시아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목표는 다양한 관광, 문화교류 프로그램,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 보급 등을 통하여 실현되었다. 문화를 통한 러시아의 국제 교류와 협력, 홍보, 러시아어 보급은 구소련 지역, 동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주도권을 공고화하겠다는 대외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또한 러시아는 외교부 산하의 ‘국제 과학문화 교류협력 센터’를 활용하여 외국과 장기적인 문화교류와 국가 브랜드 홍보, 경제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국제 과학문화 교류협력 센터는 37개국에 설치된 43개 지부와 20여 개국에 파견된 직원 등을 통하여 러시아의 대외 이미지 제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 센터는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 교류, 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2009년을 ‘러시아의 해’로 지정하여 러시아어의 보급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당시 러시아는 축제, 세미나, 전시회, 언어 연수 등을 통하여 러시아어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2009년 러시아 정부는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모스크바에서 국제캠프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캠프에는 러시아, 영국, 미국, 중국, 한국, 북한 등 30개국 200여 명의 학생이 러시아어 연수, 문화 체험 등의 행사에 참여하였다. 한국 측에서는 수원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³³³⁾

2012년 푸틴 대통령이 재집권 한 이후, 러시아는 〈2013~2020 문화 및 관광 개발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звитие культуры и туризма” на 2013~2020 годы)〉을 통하여 문화 정책의 목표와 내용을 발표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의 목표는 러시아의 관광객 수를 2010년 수준으로 높일 것과 연방, 지역, 지방의 문화재 보호, 애국심과 인종 간 조화에 기반한 러시아 연방 시민들의 외모, 공공 인식, 행동 규범의 형성 등이며, 대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문화와 관광에 우호적인 러시아의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즉, 푸틴 3기 정부의 대외 문화 정책 목표는 메드베데프 정부 시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외 문화 정책의 목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러시아 정부는 언론을 통하여 러시아가 대외적으로 비우호적인 이미지가 확산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³³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러시아는 세계 문화 발전에 합류하고, 러시아가 풍부한 전통문화를 지니고

332) T. Fedorova, N. Kochelyaeva. “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and Trends in Europe, 14th edition,” *Council of Europe/ERI Carts* (2013), p. 6.

333)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한-러 문화교류 기초조사』 (2009), pp. 100~102,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downloadResearchAttachFile.do?sessionId=4C81EDED393FF751BC5C572B9421F2A.node02?work_key=001&file_type=CPR&seq_no=001&pdf_conv_yn=Y&research_id=1371000-2009000060> (검색일: 2019.1.20.).

334)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звитие культуры и туризма” на 2013~2020 годы, p. 16.

있다는 점과, 역동적인 현대 문화를 발전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전파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³³⁵⁾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러시아는 대외적으로 “문화 외교”를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외교에서 문화 부문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 문화부의 2018년 활동 보고서에는 문화 외교가 러시아의 정신적 가치와 전통을 해외에 알리는 유용한 도구이자 러시아 세계의 정신적 단결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러시아 문화부는 매년 세계 각국에서 <러시아 시즌(Русские сезоны)>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러시아 시즌>은 민족 간 대화와 문화교류를 통한 평화 증진을 위하여 마련된 행사로, 러시아 문화부는 <러시아 시즌> 기간에 오케스트라 공연, 영화 축제, 연극 및 발레 공연, 러시아 박물관의 소장품 전시, 아이스 쇼 등 다양한 러시아의 문화를 소개한다. 해당 행사는 2017년 일본, 2018년 이탈리아에서 개최되었으며, 2019년에는 독일에서 열릴 계획이다.³³⁶⁾

또한 러시아는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고 러시아의 문화를 알리기 위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문화부 산하의 연방관광처(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уризму)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해당 부처는 2004년 대통령 결의안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관광과 관련된 공공 서비스, 문화재 관리, 관광 관련 법안 시행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의 통계를 살펴보면, 동북아시아 관광객 수는 일부 유럽국가와 비견될 만큼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러시아의 인접국 중 러시아를 가장 많이 방문한 관광객은 우크라이나 관광객으로 2017년 872만 명이 러시아를 찾았다. 그 뒤를 이은 것은 카자흐스탄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러시아를 방문한 카자흐스탄 국적자의 수는 348만 명에 달했다. 2017년 기준 유럽 내 러시아를 방문한 국가 중 10만 명이 넘는 국가는 스페인(11만 명), 영국(17만 명), 프랑스(18만 명)이며, 미국 관광객은 28만 명에 달하였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살펴보면, 한국은 2017년 25만 4천 명이 러시아를 찾았으며,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은 관광에서도 동북아시아 국가 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러시아를 찾는 중국인의 숫자는 매년 대략 1%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본의 경우 2016년 관광객의 숫자가 잠시 줄어들었다가 2017년 크게 반등하였다. 한편, 몽골은 일본과 달리 2016년 관광객 숫자가 15만 명 가량 늘었다가 2017년 다시 39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335)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звитие культуры и туризма” на 2013~2020 годы, р. 24.

336) 러시아 문화부, 2018, *КУЛЬТУРА —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ИОРИТЕТ ФАКТЫ И ЦИФРЫ 2012-2018*. <<http://pravo.gov.ru/proxy/ips/?docbody=&prevDoc=102366731&backlink=1&nd=102154610>> (검색일: 2019.1.19.).

〈표 5-6〉 2015~2017년 동북아시아 국가별 러시아 방문 관광객 수

(단위: 천 명)

		2015년	2016년	2017년
총 관광객수		26,852	24,571	24,390
한국	관광객수	136	161	254
	비중	0.50%	0.65%	1.04%
중국	관광객수	1,122	1,289	1,478
	비중	4.17%	5.24%	6.05%
일본	관광객수	86	85	102
	비중	0.32%	0.34%	0.41%
몽골	관광객수	378	522	396
	비중	1.40%	2.12%	1.62%

출처: 러시아 연방통계청,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18* 참고해 저자가 작성.

러시아의 국외여행 관광객 수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러시아 관광객이 제일 많이 방문한 국가는 터키(452만 명)였다. 터키 뒤로는 압하지야(434만 명), 핀란드(333만 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유럽 국가 중 러시아인이 가장 많이 찾은 국가는 폴란드(123만 명), 독일(122만 명)이었다. 동북아시아 국가에 대한 러시아 방문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러시아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국가는 중국으로 2016년 이후 중국을 찾는 관광객이 2015년 대비 30만 명 가량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을 찾은 관광객의 수도 3만 명 이상씩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일본과 몽골을 찾는 관광객의 비중은 매우 낮았다.

〈표 5-7〉 2015~2017년 동북아 국가별 방문 러시아인 관광객 수

(단위: 천 명)

		2015년	2016년	2017년
총 관광객수		34,390	31,659	39,629
한국	관광객수	166	199	232
	비중	0.48%	0.62%	0.58%
중국	관광객수	550	813	869
	비중	1.59%	2.56%	2.19%
일본	관광객수	46	47	65
	비중	0.13%	0.14%	0.16%
몽골	관광객수	57	72	91
	비중	0.16%	0.22%	0.22%

출처: 러시아 연방통계청,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18* 참고해 저자가 작성.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관광시장은 최근 들어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4년 시작된 경제제재 및 루블화 가치 절하로 러시아 국민들의 해외여행은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의 러시아 방문은 크게 증가된 것과 관련된다. 2017년 3분기를 기준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중국인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6% 증가한 124만 명으로 추산되었고, 한국 관광객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20만 6,000명이 러시아를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³⁷⁾ 특히 한국 관광객의 경우 인접한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 관광이 크게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2016년 이후 60% 이상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면서 2018년 말까지 누적 관광객만 30만을 넘어섰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무사증 제도는 국가 간 인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러시아의 사증(Visa) 제도를 살펴보면, 동북아시아 국가 중 무사증으로 러시아에 입국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국가는 한국(비상업 목적 60일), 몽골(비상업 목적 30일) 정도이다. 중국의 경우 특수행정구역인 마카오(비상업 목적 30일)와 홍콩(비상업 목적 14일) 여권을 지닌 사람에 한해 러시아에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중국과 일본은 모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러-일 간 사증 발급 절차는 2016년 단순화 되었다. 2018년 러-중 간 관광객 무사증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³³⁸⁾ 동북아시아 국가 중 유일(唯二)하게 러시아와 무사증 협약을 체결한 국가인 한국의 경험을 보면, 무사증 협약이 양국민의 상호 방문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진행된 실증연구에서 무사증 협정과 환율이 한국 방문 러시아인들의 수요 결정요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³³⁹⁾

러시아인들의 동북아시아 관광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2016년 기준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을 찾는 러시아 관광객은 무사증 협정 이후 여가/위락/휴가의 비중이 높아져 대략 60%에 달하였다. 반면, 업무 출장의 비중은 2012년 45.8%에서 2016년 17.4%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후 쇼핑(12.7%), 친구/친지 방문(7.4%), 교육(4%), 뷰티/건강/치료(5.6%)가 뒤를 이었다.

337)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러시아 관광시장,” 2018.4.21.,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5787&searchNationCd=101093>> (검색일: 2019.3.25.).

338) “Russia, China to sign visa-free travel agreement soon — official,” 2018.6.26., <<http://tass.com/economy/1014865>> (검색일: 2019.3.25.).

339) 이소연·윤민철·송학준, “방한 러시아 관광객 수요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계량경제모형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vol. 30, no. 5 (2018), pp. 5~20.

〈표 5-8〉 2012~2016년 러시아인 방문 목적

(단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균
여가/위락/휴가	14.6	25	35.3	38.1	51.2	59.8
업무 출장	45.8	39.8	26.8	21.1	17.4	15
쇼핑	1.4	2.2	3.8	3.4	5.7	12.7
친구/친지 방문	20.1	8.6	6	15	14.1	7.4
교육	5.2	8.9	5.3	5.3	4.6	4
뷰티/건강/치료	10.9	15.3	21.2	16.5	5.6	0.6
종교/순례	0.3	0	1.5	0.6	0.9	0.4
기타	1.4	0.3	0	0	0.5	0.1

출처: “러시아 관광산업 동향,” 2018.10.28.,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0349&searchNationCd=101093>> (검색일: 2019.3.25.).

또한 러시아인들의 의료 관광에서 중국과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2016년 기준 아시아는 유럽(1위, 31%), 중동(2위, 23%)에 이어 러시아인들이 선호하는 3위의 의료 관광지로 부상하였다. 특히, 한국은 러시아인 의료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이다. 한국은 러시아인들의 의료관광지 중 독일과 이스라엘에 이어 3번째(16%)를 차지하였으며, 2015년 연간 2만 명의 러시아 환자들이 한국을 찾았다. 러시아인 관광객들은 종합 건강검진, 산부인과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의 치료를 위하여 한국에 방문하였다. 2016년 이후 중국은 저렴한 가격으로 러시아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러시아 의료관광객들은 중국의 전통의학, 치과 등에 관심을 보였다.³⁴⁰⁾

관광객의 유동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와 관련하여 러시아 정부는 2018년 월드컵 개최 등을 계기로 관광산업을 더욱 개발하고, 각 지방의 호텔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 호텔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러시아 각 지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리는 특화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을 각 지방정부에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으로, 러시아의 학생 교류를 살펴보면, 러시아 내 유학생의 수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CIS, 발트 3국, 조지아의 유학생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총합은 전체 부문에서 대략 80% 가량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동북아시아 국가 출신

340) “한국, 러시아 3위 의료관광 대상국으로 부상,” 2017.5.22.,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58753>> (검색일: 2019.3.25.).

유학생의 수는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북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러시아 유학생 수를 차지하는 중국의 유학생 수는 2017~2018 학년 총 2만 6,600명을 기록한 한편, 한국 유학생은 총 800명, 북한은 100명, 몽골은 3,400명에 달하였다. 한편, 러시아 내 일본인 유학생의 수는 통계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한국과 러시아 학생 교류 중 국내 러시아인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수학 중인 러시아인 학생은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8) 참고).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서 지난 2016년 러시아의 유학생 수는 총 973명이었으며, 이 중 학위 과정에서 수학 중인 학생의 수는 428명, 비학위과정의 어학연수생은 259명, 기타 연수생은 286명이었다. 2017년 학위과정생은 451명, 어학연수생은 311명, 기타연수생은 254명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기타연수생이 249명으로 5명 감소하였으나, 이외 학위과정생과 어학연수생 모두 30명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동북아시아 지역 내 국가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한국에 유학 중인 중국인은 6만 명 이상이며, 일본은 3~4,000여 명, 몽골은 매년 1,000명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국내 러시아 유학생의 비중과 증가폭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표 5-9〉 러시아 내 외국인 유학생 수

(단위: 천 명)

	2010/2011년			2015/2016년			2016/2017년			2017/2018년		
	admitted to study	학생수	졸업생	admitted to study	학생수	졸업생	admitted to study	학생수	졸업생	admitted to study	학생수	졸업생
총 유학생 수	37.3	153.8	24.1	88.7	242.5	42.3	86.1	244.0	39.2	86.0	260.1	41.1
중국	3.0	9.8	2.6	4.8	12.0	3.0	5.5	13.5	3.1	7.0	16.3	3.3
한국	0.1	0.5	0.1	0.2	0.5	0.1	0.2	0.6	0.1	0.2	0.5	0.1
북한	0.1	0.2	0.0	0.1	0.2	0.0	0.0	0.1	0.0	0.0	0.1	0.0
몽골	0.5	1.8	0.3	0.7	2.2	0.5	0.6	2.2	0.4	0.7	2.2	0.5
CIS, 발트, 조지아	27.9	116.7	15.8	70.3	188.1	31.2	61.1	186.8	29.4	60.3	191.6	24.0
유럽	0.3	1.3	0.3	0.9	2.5	0.4	0.9	2.5	0.5	1.0	2.7	0.5

출처: 러시아 연방통계청,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18*을 참고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

〈표 5-10〉 2016~2018년 한국 내 동북아시아(미국, 러시아 포함) 유학생 변화 추이

국가	과정		2016년	2017년	2018년
중국	학위 과정	전문학사	1,178	1,231	1,286
		학사	26,530	31,159	36,303
		석사	8,738	9,410	10,565
		박사	2,512	2,806	3,636
	비학위 과정	어학 연수생	14,594	16,226	10,722
		기타 연수생	6,584	7,352	6,025
일본	학위 과정	전문학사	47	51	61
		학사	1,232	1,314	1,394
		석사	201	157	171
		박사	88	79	71
	비학위 과정	어학 연수생	1,226	1,319	1,378
		기타 연수생	882	908	902
몽골	학위 과정	전문학사	106	102	106
		학사	971	1,003	1,172
		석사	989	1,372	1,875
		박사	213	246	304
	비학위 과정	어학 연수생	2,086	2,538	3,218
		기타 연수생	91	123	93
미국	학위 과정	전문학사	20	23	23
		학사	728	657	660
		석사	613	543	490
		박사	230	223	207
	비학위 과정	어학 연수생	397	378	306
		기타 연수생	838	943	1,060
러시아	학위 과정	전문학사	33	25	24
		학사	216	251	273
		석사	142	147	148
		박사	37	28	35
	비학위 과정	어학 연수생	259	311	351
		기타 연수생	286	254	249

출처: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16〉,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17〉,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18〉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3. 동북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인식

가. 지역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정책적 수준에서 안보, 경제, 사회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지만, 과연 러시아의 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인식은 얼마나 변화해 왔을까?

우선, 동북아시아의 지역주의, 지역협력에 대해 다른 러시아 학자들의 글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과 동시베리아와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서 러시아와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수립된 러시아의 썬크탱크인 ‘발다이 클럽’은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경제발전, 동북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해당 클럽은 푸틴 대통령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메드베데프 총리, 라브로프 외교부 장관, 쇼이구 국방부 장관 등이 발다이 토론 클럽의 정기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발다이 클럽이 2012년 이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대양을 향하여(Toward the Great Ocean)』라는 연작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러시아 내 동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에 대한 정치, 경제적 비중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발다이 클럽의 회장인 카라가노프(Karaganov),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MGIMO) EU정책학과장인 바라바노프(Barabanov) 등 해당 보고서를 최초로 작성한 인물들은 유럽 중심적이었던 러시아의 외교 및 경제 정책을 지적하면서, 아시아를 포함하는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그들은 중국의 대두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러시아가 향후 아시아 벡터에 중점을 두지 않을 경우 심각한 국익 차원에서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특히 그들은 러시아 동부 지역을 발전시키고 국내 및 국제적 맥락에서의 동부 지역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모스크바 중심에서 탈피하여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의 도시들과의 권력 및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러시아의 영토적 통합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으며, 새로운 아태지역에서의 기회로부터 소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엘리트들의 인식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주장도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정치의 동학과 관련하여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자는 흥미로운 주장이 존재한다. 러시아와 한국 간 관계를 증시하는 학자들은 러-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확보하고, 러시아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사고를 피력한다. 가령, 블라디미르 수린(Владимир

Сурин) 같은 학자는 그의 ‘한국 선언’(Корейский манифест)을 통해 러시아가 향후 중국의 부상과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가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제(諸)문제에 대하여 서구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향후 인구학적 위기를 비롯한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공생국가(symbiotic state)”를 건설하자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는 러시아 학자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한-러 협력의 중요성을 호소한 주장으로 평가된다. 실물경제와 관련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이룩한 한국은 지속적인 성장의 저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이같은 원유 등의 원자재가 절실한 가운데 러시아의 자원은 한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같은 한국이 지리적으로도 러시아와도 인접해 있으며, 특히 한국은 중국과 달리 러시아를 흡수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의 기업들이 진출하며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거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³⁴¹⁾

또한 보리소비치(Борисович)는 동북아시아 내 주요 국가인 중국, 한국, 일본과 비교를 통하여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상을 평가한다. 그는 현재 동북아시아 내 짜임새 있는 지정학적 구도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평한다. 그는 중국이 수많은 인구와 경제적 잠재력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을 능가하였지만, 내부 성장, 에너지, 기술, 환경, 은행, 소비자 분야 등 국내 부문에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고 본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 뒤처져 있지만, 양국 모두 미국의 군사, 정치, 경제력에 의존하여 자신의 입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왔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 보리소비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으며, 경제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한 반면, 일본은 경제적으로 하향세에 접어들었다. 특히 그는 21세기 러시아가 체제적인 위기를 겪으며, 동북아시아 내 패권에서 가장 멀어져 있는 국가가 되었다고 본다. 그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상 제고를 위하여 인재 개발, 극동의 투자 유치, 러시아 해군의 태평양 함대의 군사력 복원, 무역, 안보 및 기타 분야에서 중국 및 한국과의 관계 발전을 제안하였다.³⁴²⁾

한편 가메르만(Гамерман)은 동북아시아 안보와 지역적 안정에서 러시아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2015년 전후 중국과 일본, 한국, 북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계가 대체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위협이 최소화되고 있다고 파악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 한국의

341) Владимир Сурин, *Корейский манифест: Второе добровольное переселение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как спасение русской цивилизации* (2007), <<https://rusk.ru/st.php?idar=105051>> (검색일: 2019.1.30.).

342) Борисович. В. А., 2015, “К ВОПРОСУ О ПОВЫШЕНИИ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ГО СТАТУСА РОССИИ.” *ТЕОРИЯ И ПРАКТИК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20. pp. 155~157.

문제가 중국의 입장에 달려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 및 양국 간 협력이 지역 안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는 러시아와 일본 및 한국의 관계가 동북아시아 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는 에너지 안보, 식량,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러시아-일본, 러시아-한국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과의 관계도 일본, 한국과 동등하게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이런 견지에서 그는 러시아-북한 간 협력 강화와 6자회담 재개 등을 통하여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런 해법은 지역 안보의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안보에 역할과 비중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³⁴³⁾

아라포바(Арапова)는 동북아시아 3개국과 러시아가 무역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녀는 질적 및 양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러시아와 중국, 일본, 한국 간 양자 무역 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양자 교역을 전망하였다. 이에 따르면, 동방정책과 관련된 러시아의 기본 전략은 역내 국가들과의 교역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전략적이며 장기적 이익의 관점에서 러시아는 중국 및 한국과의 교역을 중공업, 화학공업, 원자재 등 분야에서 증대시키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³⁴⁴⁾ 마찬가지로 수슬로프(Суслов)도 러시아 극동과 동북아시아 국가 간 경제 통합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그는 장기적 차원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 통합은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지역의 교역 구조는 중국, 한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결정되어 왔으며, 단기적인 측면에서 러시아 극동 교역의 규모와 구조는 이들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시장 상황, 수출을 주도하는 산업의 상황, 러시아 상품에 대한 수요 등의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가 중장기적으로 고착되면서 극동지방의 동북아 지역으로의 경제적 편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였다.³⁴⁵⁾ 결국 이같은 주장은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방의 미래적 발전은 러시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지만, 이 결정은 동북아 국가들과의 협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협력이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루킨

343) Гамерман, Е.В., "РОЛЬ И МЕСТ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ОБЕСПЕЧЕН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ПОЛИТОЛОГИЯ* 2, (2015), pp. 26~36.

344) Арапова Е. Я., "Россия и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азиатский треугольник: потенциал торгов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позиции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Экономика 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науки* (2017), pp. 36~38.

345) Суслов, Д. В., "Интеграция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о странами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Комплексное изучение отдельных стран и регионов*, (2017), pp. 15~22.

(Лукин) 같은 학자는 러시아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아직까지 견실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그는 러시아 지도부가 지역 경제 기구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러시아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지역 기구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향후 동북아시아의 경제 공동체 건설의 주역이 될 중국, 일본, 한국과의 삼자협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 과정은 경제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한국은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양국은 양자 관계를 확대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이 러시아를 동북아시아 공동체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의 “고래 싸움 가운데 새우”의 위험을 완화하게 될 것이며, 이는 다자간 협력에 촉매 역할을 하는 한국의 중견국 정체성에 부합한다는 것이다.³⁴⁶⁾

한편 시넨코(Синенко)는 서구와의 관계 악화 이후 러시아가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동방정책은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러시아의 동방정책이 장기적인 목표를 지녔는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인지 그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러시아의 아시아로의 접근이 가지는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러시아의 역내 지정학적 위상을 중국, 일본, 한국과의 관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그는 러시아의 주된 관심이 동북아시아보다 여전히 유럽에 남아있으며, 따라서 러시아가 동북아시아로 동진할 때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은 지역 내 국가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갈등 구조 내에서 러시아가 역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를 지지하는 등 분명한 입장을 취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러시아의 정책은 그런 성향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시넨코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은 우크라이나 갈등과 서구 국가와의 불화로 인한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향후 러시아가 동북아시아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는 중국에 편중된 현재 외교 관행을 벗어나 다변적인 정책 지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는 러시아 극동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투자를 촉진하고 하이테크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양자 프로젝트에 더욱 중점을 둬으로써 점차 지역 수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³⁴⁷⁾

346) Лукин, А. Л., “Политик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Политика и политические науки* 3, (2016), pp. 136~145.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러시아 내에서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역주의 논의는 근외 지역(구소련 지역) 내 진행되고 있는 지역협력이나 지역주의 논의와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러시아 학자들은 러시아의 동북아시아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보 및 경제적인 협력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동북아 지역주의 및 동북아 국가들과의 지역적 협력을 강화하는데서 문화적 및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며, 특히 안보에서 지역적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비하여, 경제적으로는 지역주의에 대한 강조보다는 양자적 협력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고 있다. 물론 남-북-러 삼각협력과 같은 소다자주의에 대한 강조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러시아의 경제협력은 양자주의가 기반이 되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다자안보와 관련된 분야를 제외한다면 경제, 사회, 생활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하여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도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구조적인 차원에서 동북아시아 내에서 높은 수준의 지역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정학 및 지경학을 아우르는 지전략적 차원에서 한국, 중국, 일본은 지역 내 협력의 당사자인 동시에 역내 경합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경쟁자이다. 동북아시아 3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 경제 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러시아, 몽골, 대만과는 양자, 주도국 중심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경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한국과 일본도 대륙과 해양을 잇는 역할을 두고 경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이 지속되면서 동북아시아 내에서는 유럽연합이나 아세안과 같은 지역협력 구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주의를 활발히 논의하거나 이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보기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둘째, 동북아시아 내에서 러시아의 입지와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동북아시아 지역주의 내지 지역협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어렵게 한다. 이는 러시아의 핵심 이익이 걸린 근외 지역과 상당히 비교되는 부분이다. 근외 지역에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안보, 경제 협력을 위한 지역 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독립국가연합(CIS),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관세동맹(Custom Union),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등 다양한 지역 협력기구가 설립되었으며, 러시아는 이러한 기구의 설립과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였으며, 참여국에

347) Синенко И.Ю., “Перспективы «поворота на Восток» в контексте текущего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Росси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Политика и политические науки* 2, (2016), pp. 123~136.

는 안보,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추진 가능한 전략은 근위 지역과 달리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동북아시아 내에서 지역협력, 지역통합, 지역제도의 형성을 주도하기보다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등의 지역 국가들과의 양자적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학계 내에서 여전히 관심의 중심은 서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발다이 클럽이나 극동연방대학교의 일부 학자들이 동북아시아를 러시아의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의 주류 학계는 서구와의 관계와 유라시아 지역 내 통합에 천착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가 러시아 학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다시 말해, 동북아시아는 이제 막 그 “가능성”으로서의 가치를 획득한 러시아의 미래인 것이다.

정리해보면,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의에 대한 러시아 학자들의 논의와 토론이 아주 활발히 개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점차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내부적 필요와 중국의 부상 및 아태지역의 재구조화에 따른 러시아의 이익확보를 위한 대외 전략적 고려라는 차원에서 러시아의 학자들은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상호작용 과정과 통합에 대하여 러시아가 예의 주시하며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동시에 러시아 극동이 이 지역의 경제에 종속되거나 단순한 자원공급지로 전락되어 착취당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우려와 위기감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는 주로 경제와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공동체에 대한 지역주의 관련 논의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생활공동체의 형성에 대한 초보적 관심이 피력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나. 러시아 국민들의 동북아시아 인식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립 이후 러시아 엘리트와 민중의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는 서구였다. 짐머만(Zimmerman)은 1993~2000년 간 러시아 대중을 상대로 러시아의 위협요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미국 군사력의 확대, NATO의 동유럽 팽창, NATO의 유럽 국가 내정 간섭, CIS 국가와의 국경 분쟁, 비CIS 국가 내 분쟁 등 대체로 서구로부터의 위협을 중심으로 질문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⁴⁸⁾ 한편 서방 연구자들이 주도한 설문조사에서는 러시아인들이 세계의 다양한 국가와 국민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도 드물었

348) Zimmerman, W., *The Russian People and Foreign Policy – Russian Elite and Mass Perspective, 1993~2000*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pp. 92~101.

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는 러시아 내에서 총 네 차례 실시되었는데(1990년 Wave 2, 1995년 Wave 3, 2006년 Wave 5, 2011년 Wave 6), 다른 국가들과 달리, 러시아에서는 타국인에 대한 신뢰, 러시아인들의 소속감을 묻는 질문을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질문들은 조사 회차에 따라 설문조사 수행 기관이 변화하였음에도 러시아인들에게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³⁴⁹⁾ 따라서 러시아인들의 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부분적으로 러시아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한 관련된 인식조사의 결과를 모아 전반적인 상황을 추론해 볼 수는 있다.

동북아시아 국가에 대한 러시아 대중들의 인식은 러시아 설문조사 기관이 발표한 일부 결과를 통해 접할 수 있다. 레바다 센터(Levada Center)가 2015년 이후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2016년 러시아의 우방국과 적국을 묻는 질문에서 중국을 러시아의 가장 우호적인 국가라고 답한 비율은 34%이며, 일본 5%, 한국 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국을 묻는 질문에서 중국과 한국이 적대국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 미만, 일본은 5%였다. 또한 2017년 중요한 사건을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40%가 도핑 스캔들로 인한 평창 올림픽 출전 금지, 32%가 북핵 실험과 북한-미국 간 갈등을 꼽았다. 이외에는 시리아 내전(49%), 우크라이나 내 군사 갈등(32%), 자연재해(28%) 등에 대한 답의 비율이 높았다. 러시아인들이 2018년 5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동북아시아와 관련 사건은 평창올림픽(9%) 밖에 없었다. 이는 러시아 대선(70%), 영국에서 사망한 러시아 출신 이중스파이 스크리팔 사건(15%) 보다 훨씬 낮은 수치에 머물고 있다.³⁵⁰⁾

레바다 센터의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 내에서 러시아의 ‘중요한 타자’는 중국이다. 러시아인들에게 중국은 초반 위협요인에서 러시아에 우호적인 국가로 인식이 변화하였다. 발다이 클럽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극동지역 주민들에게 중국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중국인들의 극동 진출은 러시아인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향후 중국이 극동을 차지할 것이라고 믿었다. 탈냉전 이후 러시아의 극동 지방으로 대거 들어간 중국의 노동자들도

349) 자세한 내용은 세계가치관조사 사이트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jsp>> 참고.

350) “MEMORABLE EVENTS,” 2018.4.17., <<https://www.levada.ru/en/2018/04/17/memorable-events-2/>>; “SIGNIFICANT EVENTS OF 2017,” 2018.2.21., <<https://www.levada.ru/en/2018/02/21/significant-events-of-2017/>>; “RUSSIA’S FRIENDS AND ENEMIES,” 2016.6.10., <<https://www.levada.ru/en/2016/06/10/russia-s-friends-and-enemies-2/>>; “THE RESULTS OF YEAR,” 2016.1.11., <<https://www.levada.ru/en/2016/01/11/the-results-of-year/>>; “RUSSIA’S FRIENDS AND ENEMIES,” 2015.6.22., <<https://www.levada.ru/en/2015/06/22/russia-s-friends-and-enemies/>> (검색일: 2019.1.22.).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이해되었고, 러시아 지도부도 이들을 러시아의 중요한 안보위협 요인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인들의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을 지나면서부터였다. 러시아 내에서 중국인 계절노동자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는 중앙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에 의해 채워졌다. 중국인은 사업가, 과학자, 교사, 음악가, 예술가, 의사, 요리사 등 전문직의 모습으로 러시아를 찾았다. 중국인 사업가는 러시아 내 가장 큰 투자자였으며, 합작기업을 설립하였다. 극동 거주자들은 중국에 유학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³⁵¹⁾ 러시아 여론조사센터(VCIOM)가 2017년 2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한다. VCIOM이 200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러시아인들의 대중국인식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특기할만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던 2014년 이후 중국에 대한 인식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표 5-11〉 오늘날 러시아인들의 중국 인식

질문 : 오늘날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단일 응답, 단위: %)

	2005년	2007년	2009년	2014년	2017년
전력적, 경제적 동반자	34	36	41	49	50
우호적인 국가, 동맹	22	27	19	36	27
경제적, 정치적 라이벌, 경쟁자	24	21	24	8	10
적대 국가, 잠재적 라이벌	4	4	4	1	5
모르겠음	16	12	12	6	8

질문 : 중국이 21세기 러시아의 적,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단일 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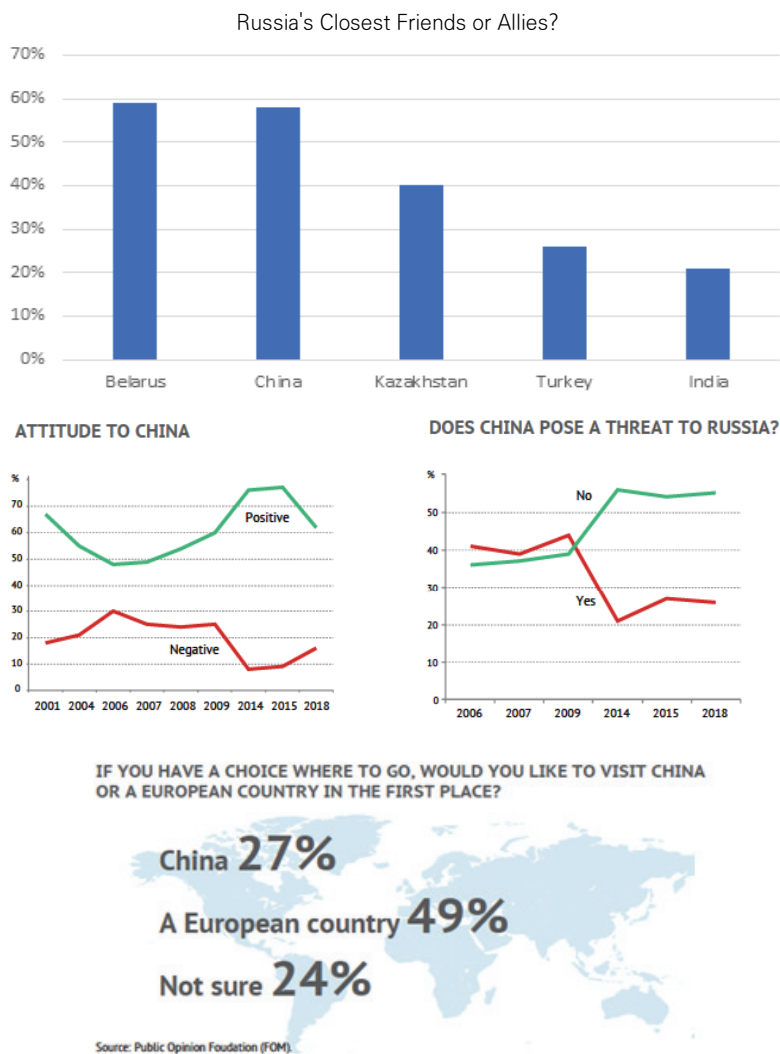
	2005년	2007년	2009년	2014년	2017년
동맹, 우호적인 국가	22	28	20	43	37
긴밀한 동반자	26	24	27	36	38
위험인 근린국, 경쟁자	25	20	24	9	14
라이벌, 적대국	6	4	5	1	2
모르겠음	21	24	24	11	9

출처: 러시아 여론조사센터(VCIOM). RUSSIA-CHINA-USA: STRATEGIC TRIANGLE RELATIONS (2017.2.7.),
 <<https://vciom.com/index.php?id=61&uid=1357>> (검색일: 2019.1.30.).

351) Valdai Discussion Club, *Toward the Great Ocean - 6: People, History, Ideology, Education. Re discovering the Identity*, (2018), pp. 34~41.

2018년 4월 러시아의 여론기관인 여론재단(Public Opinon Foundaion: FOM)의 조사에서도 중국은 러시아에 우호적인 이미지로 비추어졌다. 2014년 이후 중국에 대한 러시아인의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이 러시아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 답한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중국은 벨라루스(59%)에 이어 러시아의 가장 가까운 우호국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58%), 처음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국가로 중국을 선택한 러시아 응답자는 유럽(49%) 다음으로 높은 27%에 달했다.

[그림 5-7] 러시아 국민의 대외 인식



출처: Valdai Discussion Club, *Toward the Great Ocean – 6: People, History, Ideology, Education. Rediscovering the Identity*, p. 37.

주: 2018년 4월 기준임.

한편 한국 내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도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러시아를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주변국으로 남한 응답자는 0.1%, 북한 응답자는 6.1% 답하였다. 또한 한국과 북한의 응답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과 관련된 쟁점에서 러시아를 의미 있는 행위자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점차 러시아를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한국인들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러시아를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한국인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에 충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하였다.³⁵²⁾

이처럼 한국인의 심상지리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단적으로 떨어진 것은 러시아를 이 지역의 일원으로 수용하는데 커다란 장애로 작동하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지역정치의 일원 은 아니지만 러시아라는 나라의 문화와 클래식에 대한 편중된 평가 그리고 일부 매니아층에서 나타나는 제한된 선호는 비정상적으로 높이 나타나 그 자체가 모순적이기까지 하다. 따라서 향후 동북아문화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이같은 비대칭적이고 모순적이기까지 한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주민들 사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긍정적인 징후는 최근 들어 러시아로의 여행객 및 러시아로부터의 여행객이 급속히 증대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의 거리에서 중국은 물론 이고 한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온 젊은 여행객들이 삼삼오오 다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급속한 여행객의 증가는 블라디보스토크 시청에서 관광 인프라의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같은 관광객을 포함한 다양한 인적 교류의 확대는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베이징, 서울, 동경에서 두 세 시간 거리에 위치한 유럽도시 블라디보스토크는 이 도시의 역설적인 위치성을 강변한다. 하지만 이제 가장 가까운 유럽이라는 별명을 뒤로하고 동북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같은 인적 교류가 러시아의 극동을 동북아시아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과 연관된다. 러시아의 안보적 고려에 의해서만 관리되던 극동지역은 이제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부분으로 기능하기 위한 변신을 꾀하고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인들의 교류를 위한 대상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결국 이처럼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의 증진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그리고 그에 기반한 정책적 상호작용 속에서 생활 공동체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상호작용의 축적은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기초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352) 정근식 외, 『2017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pp. 155~156.

4. 시사점과 정책제언

앞서 살펴본 것처럼, 러시아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문화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재취임한 2012년 이후 신동방정책을 통하여 한국, 중국, 일본과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차원에서 정치, 경제적 협력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동방 진출 및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동북아시아 국가들 모두와 균등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역, 관광객, 학생 교류,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인식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러시아의 입장에서 동북아시아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에 비하여 한국과 일본은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사회·경제적인 교류를 진행 중이다. 비록 러시아가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을 위하여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관계 증진을 모색 중이지만, 러시아의 이러한 노력은 다자주의 수준의 지역주의, 지역협력을 통하여 진행된다고보다 양자 수준의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협력을 통하여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보면, 양자 수준에서 접경하고 있고,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에너지, 물류,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러시아의 입장에서 주요 협력 대상 국가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는 수긍이 간다. 그 결과 최근 몇 년간 설문조사는 러시아 국민들이 지닌 중국에 대한 인식 중 긍정적이라고 답하는 비율이 높아가고 있음은 당연한 상황일 수 있다. 더구나 2014년 이후 크림 합병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구의 대러시아 제재가 작동한 이래로 중국이 러시아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국제적 상황이 러시아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음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러시아 학자들이 지역주의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중국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러시아는 대중국 경제의존도 증가와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을 쌍수 들어 환영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수린(Vladimir Surin) 같은 러시아 학자들은 러시아에게 가장 덜 위협적인 국가인 한국과의 공생 국가의 건설을 통하여 극동지역의 개발을 진척시킴으로써 동북아시아 지역 내 정치와 경제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하여 러시아의 인구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새로운 발전을 꾀하자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던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³⁵³⁾

일부 러시아 학자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한-러 양자관계에서 증진되어야 할 여지는 아직도

353) Владимир Сурин, “Корейский манифест,” *Русская народная линия*, (2007), <http://ruskline.ru/analitika/2007/11/08/korejskij_manifest> (검색일: 2019. 2. 20.). 이 글은 『한-러 공생국가론』으로 번역되기도 했음.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비록 양적인 부분에서 양국 간 경제적 상호교류와 사회·문화적 교류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이는 양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추이는 향후 한-러 관계의 질적인 발전을 추동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한국인들의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도 양국 간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에 걸림돌이다. 한국 국민은 러시아를, 러시아 국민은 한국을 지역정치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인식하여야 비로소 양국 간 교류를 넘어선 정치·경제적 협력이 본격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 지리적 귀속에도 불구하고 인식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오랜 시간을 뒤로하고 명실상부한 지역 국가의 일원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은 이러한 러시아의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러시아의 노력은 개별 국가의 정책 추진으로만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며,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과 조율 속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적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미-중 경쟁 및 일-중 경쟁의 구조적 제약은 이 지역에서의 안보 공동체의 구축을 요원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이 지역의 지역 협력의 주된 동력인 역내 경제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도 커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역내 사회적 및 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긴장을 완화하고 지역적 동질성을 증대시키는 노력은 이 지역의 협력을 증진하고 나아가 여러 분야에서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안보적 경제적 상호작용이 일천했던 러시아가 단기간에 이 지역의 사회문화적 행위자로서 자리매김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지역의 다자주의적 과정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역내 다자주의 내지 지역주의 프로젝트에 온전한 행위자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다양한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을 양적으로 증대하여 생활공동체의 기초를 다지고, 사람들 사이에 러시아도 동북아의 일원이라는 의식이 좀 더 넓게 공유·확산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동북아생활공동체의 형성이야말로 지역 내 정치·경제적 협력은 물론 문화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현실적 목표로 설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 과제가 설정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니 현실적으로 그를 위한 역내 문화적 동질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좀 더 많은 인적 교류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호이해를 고취시키고, 삶의 필요에 따른 자유로운 왕래의 구역을 활성화함으로써 미시적, 거시적 수준에서의 생활공동체적 특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국경과 상관없이 필요에 따른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자연경제구역”(natural economic territory)³⁵⁴⁾을 활성화함으로써 가능해 질 것이다. 큐슈와

부산, 서해안과 산동, 북-중-러 지역 등에서의 초국경 교류·협력의 확대는 이런 자연경제구역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교류의 증대는 자연스러운 미시적 및 거시적 수준에서의 상호작용과 왕래를 증대시킬 수 있다. 이같은 자연경제구역을 형성하는데 핵심은 이동의 자유이다. 자유로운 이동에 방해가 되는 다양한 조건들을 개선하고, 교류의 인프라를 확대함으로써 추동되는 자연스러운 생활권의 형성은 점차 생활공동체로서의 의식을 고취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각국은 러시아 극동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학술적, 문화적, 인적 교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의 효과는 향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동북아시아의 지역 협력을 좀 더 탄탄하게 정초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동함으로써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각국 정부는 청년 세대의 교류와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을 개념으로 공유하는 미래세대 ‘지역의 지도자(regional leader)’를 육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상호 유학생의 쿼터제 교환이나 동북아 국가의 언어를 한 가지 이상 습득할 수 있는 공동장학금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 또한 유레일패스(Eurail Pass)를 참조하여, 동북아 청년들이 3개월간 철도와 웨리 등을 이용하여 동북아 국가들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가칭 “동아시아청년패스(Young East Asians Railway Pass: YEAR Pass)” 사업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함께 구상하는 다양한 청년 세대의 교류의 장을 정례화 하여 인식의 공유 지평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러시아가 진정한 의미에서 동북아시아의 일원이 되는 것은 러시아 전체로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극동과 동시베리아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과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해감으로써만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멤버십의 기초는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시도하는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행위에 더욱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이며, 지역적으로 저변의 영향력을 지니게 되는 러시아는 이 지역의 안정과 균형 잡힌 세력분포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실현이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려왔던 동북아의 다자안보 협력체의 구성을 가능하게 할 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그 사이에 위치한 국가의 하나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된 러시아는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 등과 함께 자신의 아시아가 좀 더 안정적인 구도 속에서 성장하기를 희망하면서 지역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그리고 기꺼이 가격을 치르며 지역의

354) Robert Scalapino, “Natural Economic Territories in East Asia,” in KEIA (ed.), *Economic Cooperation and Challenges in the Pacific* (Washington D.C.: KEIA, 1995).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커다란 변화의 시작은 인적 교류의 활성화로부터 오는 생활공동체의 구축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은 과연 지나친 기대일까? 우리가 진정 전쟁의 공포를 물리친 유럽 통합의 경험이 교통, 통신, 이동, 관광, 교류 등과 같은 자유로운 생활 교류의 조건을 억제하는 장벽을 해체해 간 조치들에 의해서 그 강력한 추동력을 일궈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에, 이같은 기대는 과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변해 볼 만하다.

제 3 절 몽골의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

1.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와 몽골의 역사적 위치

지금까지 ‘동북아시아’라는 개념은 주로 한국·중국·일본 3국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였다. 이들 3국과 몽골은 지역적인 위치를 제외하면 경제와 문화, 사상 등 모든 분야에서 이질적인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몽골은 전통적으로 농경사회가 아닌 유목사회였으며, 유교가 아닌 티베트에서 전래된 불교가 사회와 문화 전반을 지배해왔고, 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20세기 전반까지 위구르문자에서 유래한 몽골문자를 사용했다. 그렇지만, 몽골은 전근대시기에도 동북아시아 역사의 흐름에서 북방의 한 축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후에 새롭게 동북아시아의 구성원으로서 적극 참여하고 있는 몽골을 ‘동북아문화공동체’의 일원으로 새롭게 인식하여, 그들의 위치를 종속적이 아닌 주체적인 단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³⁵⁵⁾ 따라서 몽골의 역사와 문화, 한국과의 관계 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 한국과 몽골의 역사·문화적 관계

1) 고대 한국과 몽골 관계

한국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북아시아의 여러 민족 또는 국가와 밀접한 교류를 유지하였다. 북아시아에서 흥망을 거듭한 대표적인 민족으로는 흉노, 선비, 유연, 투르크[突厥], 위구르[回鶻], 거란(契丹), 여진(女眞), 몽골[蒙古], 만주(滿洲) 등이 있다.

우리나라 고대사에서 한반도 북부와 만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시기의 왕조들, 특히 고구려와 발해는 흉노, 선비, 투르크, 거란 등 북아시아 여러 민족들과 깊고 다양한 교류를 했다. 고려는 태조가 북방정책을 실시하면서 지속적으로 거란(遼), 여진(金), 몽골(元) 등 북아시아의 여러 민족과 교류와 항쟁을 거듭하면서도 대외적으로 개방성과 포용성을, 대내적으로는 독자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며 발전시켰다.

355) 민태은 외,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18-01, 2018), pp. 15~18;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편, 『몽골과 한국: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 (용인: 단국대학교출판부, 2012), pp. 11~34;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편, 『동몽골의 가치와 미래』 (용인: 단국대학교 출판부, 2016), pp. 405~450; 이성규, 『한국과 몽골의 유라시아: 알타이 역사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문학적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14-25), pp. 16~36.

2) 고려·조선과 몽골 관계

1218년에 고려 경내로 난입한 거란군을 고려와 몽골군이 협공하여 궤멸시키고, 1219년 초 형제맹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것이 고려와 몽골의 최초의 접촉이었다고 할 수 있다.³⁵⁶⁾ 그러나 1224년 몽골 사신 저고여(著古與)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또한 몽골제국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이후 7년 간 관계가 단절되었다. 몽골제국의 제2대 카안으로 즉위한 우구데이(太宗)는 1231년에 군사를 보내 고려 침략을 재개하였다. 이에 대해 고려 조정은 본거지를 강화도로 옮기면서까지 30여 년에 걸쳐 항쟁했지만, 결국 1259년 항복함으로써 고려는 몽골의 광범위한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항쟁시기에도 고려는 몽골제국의 수도 카라코룸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사신을 파견하며 생존 노력을 기울였다.³⁵⁷⁾

몽골에 항복한 이후에 고려의 왕은 몽골 공주와 혼인함으로써 몽골 카안의 사위가 되었고, 고려는 몽골제국의 부마국(駙馬國)이 되었다. 이 시기에 고려와 몽골 간에는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고려양(高麗樣)’, ‘몽골풍(蒙古風)’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용어들은 몽골과 고려에서 상대방 문화가 유행할 정도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쿠빌라이가 몽골제국의 수도를 ‘칸발릭(大都, 지금의 北京)’으로 옮기기 전에도, 그리고 옮긴 후에도 고려와 몽골은 밀접한 교류를 지속하였다. 특히 몽골제국[元]의 카안이었던 토곤 테무르(惠宗)는 제위에 오르기 전 대청도(大靑島)에서 유배생활을 하였으며, 카안이 된 후에는 고려에서 끌려온 공녀(貢女) 출신의 기씨(奇氏)를 황후로 맞아들였다. 1368년 몽골이 중원지역에서 물러난 이후 약 20여 년간 동아시아의 정세는 명(明)과 몽골[北元], 고려의 삼각구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388년 나가추(納哈出)가 명에 항복함으로써 고려는 명에 대해 일방적인 사대외교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와 같이 지속적이며 광범위한 교류는 없었다. 하지만 조선시대 사역원(司譯院)에서는 만주어[淸], 중국어[漢], 일본어[倭]와 함께 몽골어[蒙古]를 가르쳤고,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폐지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당시 몽골어회화 교습에 사용했던 교재는 현재 ‘몽학삼서(蒙學三書)’라고 총칭하는 『몽어노걸대(蒙語老乞大)』, 『몽어유해(蒙語類解)』, 『첩해몽어(捷解蒙語)』가 현존하고 있으며, 나머지 서적들은 모두 산실된 것으로 보인다.

356) 최근 이 ‘형제맹약’ 80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신북방 시대를 여는 팔백 년 만의 약속, 『고려-몽골 형제맹약 800주년 국제학술대회』, 2019년 3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357) 김장구, “대몽골국 초기(1206~1259) 카라코룸으로 간 고려사신들,” 『이화사학연구』 57집 (서울: 이화사학연구소, 2018), pp. 87~121.

특히 1636년, 만주족이 조선을 침략한 ‘병자호란(丙子胡亂)’을 겪은 후 청에게 복속된 조선은 어쩔 수 없이 다양한 교류를 하게 되었다.

3) 20세기 한국과 몽골 관계

20세기 초, 몽골은 만주(滿洲) 청(淸)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몽골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고 한국은 더욱 철저한 일본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관계가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이후 한국은 남북분단과 한국 전쟁 등으로 인해 사회주의 국가인 몽골인민공화국과의 관계는 복원되지 못했으며, 게다가 몽골은 1948년 10월 15일 북한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교할 정도로 고립적인 외교정책을 실시하였다. 1980년대 말 소련과 동유럽 등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더불어, 1993년 말 몽골에 주둔하고 있던 10만 명에 달하는 소련 군대가 완전히 철수함으로써 몽골은 정치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³⁵⁸⁾ 그리고 대한민국과 몽골국 간에는 1990년 3월 26일에 정식으로 수교가 이루어졌다.

먼저 1990년대 한국과 몽골 간의 관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상호교류가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1년 10월에는 푼살마긴 오치르바트(П. Очирбат) 몽골대통령이 방한하여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1992년에는 몽골 헌법에 따라 국호를 ‘몽골인민공화국’에서 ‘몽골국(Монгол улс)’으로 변경하였다. 같은 해에 몽골국립대학교와 몽골외국어대학에 한국학과가 개설되었다. 또한 1992년 손보기 교수를 단장으로 한 ‘한·몽 학술조사연구협회’가 조직되어 이후 5년간 몽골과학아카데미와 공동으로 몽골 각 지역에 대한 고고학·민속학·언어학·인류학 발굴조사를 시행하였다. 1993년에는 단국대학교(천안)에 몽골어과가 개설되었으며, 1995년에는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던 기존의 한국어학교가 ‘울란바토르 대학’으로 인가를 받았다. 특히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은 1997년부터 몽골 과학아카데미 역사학고고학연구소, 국립민족박물관과 대형 고고학학술사업인 ‘몽-솔 프로젝트(Mon-Sol Project)’를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며, 특히 흥노무덤 발굴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99년 5월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자격으로 몽골을 방문하였다.

4) 21세기 한·몽 관계와 미래

다음으로 2000년대를 살펴보면, 2001년에는 나차긴 바가반디(H. Багабанди) 몽골대통령이 방한하였으며, 2006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몽골에서 칭기

358) 제성훈, “탈냉전기 몽골 외교정책의 변화,”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편, 『몽골과 한국: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 (용인: 단국대학교 출판부, 2012), pp. 101~155.

스 칸(Чингис хан)이 세운 '대몽골국(Их Монгол улс) 건국 80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렀다. 2007년 5월에는 남바린 엔흐бая르(H. Энхбаяр) 몽골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007년 몽골과학아카데미와 '상호협력에 대한 기본 각서(MOU)'를 체결하고 2008년부터 매년 '한·몽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2011년에는 '한·몽 역사고고학자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2008년 2월에는 남바린 엔흐бая르 몽골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축하차 다시 방문하였다. 2009년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에 몽골어과가 개설되었으며, 몽골에서는 차히야긴 엘벡 도르지(Ц. Элбэгдорж)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16년 7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몽골을 국빈 방문하였다. 2017년 7월에는 할트마긴 바트툴가(X. Баттулга)가 몽골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2018년 5~7월에는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몽 공동학술조사' 2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전 '칸의 제국: 몽골'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앞으로 21세기에 한국과 몽골 양국은 주변 강대국들(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을 제외하면 정치와 외교, 경제와 사회 및 문화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서로에게 가장 가깝고도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³⁵⁹⁾

나. 북아시아의 역사와 오늘날 몽골의 지정학적 위치

1) 흉노제국부터 몽골제국까지

고고학 연구에 의하면 몽골 영토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의 흔적은 70~8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몽골에서 발견된 고고학 유적은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시대에 걸쳐 다양하며, 이후 청동기와 철기시대 유적도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초원과 사막, 산지 등 몽골의 건조한 기후와 추운 자연환경은 최상의 유물을 발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오늘날 몽골인들이 자신들의 선조가 세운 최초의 고대 국가라고 말하는 '흉노제국(匈奴帝國)'이 성립된 것은 기원전 209년이었다. 흉노제국은 유목민 특유의 기동력으로 중국의 한(漢)나라, 박트리아, 이집트, 그리스-로마 지역 등 사방의 이웃 국가들과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했다. 지금까지 100여 년에 걸친 고고학 발굴에 따라 밝혀지는 '흉노제국'의 새로운 모습은, 국제적으로 개방

359) 이성규, "한국과 몽골의 문화적 차이와 발전 방안,"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편, 『몽골과 한국: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 (용인: 단국대학교 출판부, 2012), pp. 495~514.

적인 문화의 다양성과 고유의 독자적인 전통을 유지했던 것을 알 수 있다.³⁶⁰⁾ 흉노의 뒤를 이어 선비와 유연, 투르크와 위구르, 거란 등이 몽골초원을 지배하였으며, 여진이 세운 금나라는 ‘타타르[韃靼] 부’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몽골초원을 감시하였다.

칭기스 칸은 오랜 분열을 극복하고, 1206년 몽골제국을 세운 후 점차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사방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유라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의 뒤를 이은 후계자들도 칭기스 칸의 유업을 이어받아 제국을 더욱 확장하였다. 이러한 몽골제국의 성공은 단순히 군사력을 이용한 정복전쟁을 통해서만 이룩한 것은 아니었다. 각 지역과 국가에 맞는 통치체제와 현지인들의 문화와 풍습에 대한 관용, 모든 종교에 대한 인정과 이해 등 지극히 체계적이며 일관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³⁶¹⁾

2) 몽골제국의 분열 이후³⁶²⁾

제국이 분열된 이후 몽골인들은 몽골고원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비록 이전보다는 쇠약해졌지만 여전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담당했다. 17세기 초에 시작된 러시아 제국의 시베리아 진출 및 만주[淸]의 흥기는 몽골을 비롯한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편 청나라가 흥기하는 데에도 몽골인들이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런 과정에서 1636년 내몽골 지역이 청에 복속되면서 청이 중원과 동아시아의 패권자로 급부상했다.

비록 내몽골은 독립을 잃었지만, 할하(북몽골)와 오이라트(서몽골)가 독립을 유지하면서 청조·러시아제국 등과 대립했다. 더욱이 1740년대 말에 준가르 칸국에서 일어난 제위계승 분쟁으로 인해, 청나라가 최후의 유목제국이자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준가르 칸국을 1758년에 멸망시켰다. 거의 동시에 준가르의 지배하에 있었던 동(東)투르크িস탄(新疆)도 청에 복속되었다. 이렇게 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준가르 칸국이 멸망하자 중앙아시아에서의 세력 균형이 급속히 무너졌다. 동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러시아와 청이 패권을 잡은 상황은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대 중국은 대체로 청의 영토를 물려받은 국가로, 신장(新疆)과 티벳(西藏) 등 서부 지역이 청에 귀속되는데 제일 큰 영향을 끼친 국가가 바로 몽골이었다. 만주인들이 명나라를 무너뜨리는 데에는 불과 20여 년 밖에 걸리지 않았던 반면, 전(全) 몽골을 정복하는데 무려 130여 년이란

360) G. 에렉젠·양시은, 『흉노: 몽골의 첫 번째 유목제국, 흉노의 문화유산』 (과천: 진인진, 2017), pp. 21~24.

361) 김호동,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파주: 돌베개, 2010), pp. 158~174.

362) Ts. 체렌도르지, “몽골제국 시대 이후 몽골이 아시아의 역사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김선자 외 지음, 『동서 문화 교류와 알타이』 (서울: 역락, 2016), pp. 147~171.

긴 시간을 필요로 했다는 점에서 당시 몽골의 국력과 저항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몽골인들은 청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협조와 저항을 거듭하면서 정체성을 유지하였고, 1911년 청(淸)나라가 멸망하자 당연히 몽골의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화민국은 군사력을 동원해 몽골의 독립을 취소시키고 자치정부로 격하시켜버렸다. 이에 몽골인들은 소련(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었으며, 1921년에 마침내 독립을 쟁취하였다.

3) 현대 몽골의 대외관계와 변화³⁶³⁾

1924년에 아시아 최초, 세계 두 번째로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몽골인민공화국은 이후 소련의 철저한 정치적 감시와 경제적 후원 하에서 폐쇄적인 정책을 펼쳤다. 그러다가 몽골은 1961년 10월 27일 국제연합(UN)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서구 각국들이 몽골과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냉전시기에 몽골의 대외정책은 무엇보다도 소련과 동구권 여러 나라들과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확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몽골은 국가의 발전 속도가 늦어지고, 외채가 증가하면서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위태로운 시기가 되면서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특히 몽골인들 사이에서 민주화와 새로운 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사회생활 전반을 변혁시키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몽골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 계획 경제에서 자유 시장경제 사회로 평화롭게 이행한 것은 모든 몽골인들에게 소중한 경험과 교훈이 되었다.³⁶⁴⁾

다. 군사·안보·외교 공동체

1) 몽골의 대외정책의 변화³⁶⁵⁾

몽골은 대체적으로 1990년까지 소련의 외교정책을 따라 전 세계국가들을 ‘사회주의’, ‘자본주의’, ‘개발도상 국가’로 구분하여 대외정책을 시행했다. 1990년대부터 양극체제가 무너지고, 국제 관계에 그때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몽골 외교정책의 기본 목표는 세계

363) 강톨가 외 지음, 김장구·이평래 옮김, 『몽골의 역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p. 374.

364) Bruun, Ole and Odgaard Ole eds., *Mongolia in Transition: Old Patterns, New Challenges* (Richmond: Curzon, 1996), pp. 23~41; Schwarz, Henry G. ed. *Mongolian Culture and Society in the Age of Globalization* (Washington, 2006), pp. 27~66; Sanders Alan J., “Foreign Relations and Foreign Policy,” Bruun, Ole and Odgaard Ole eds. *Mongolia in Transition: Old Patterns, New Challenges* (Richmond: Curzon, 1996), pp. 217~251.

365) 강톨가 외 지음, 김장구·이평래 옮김, 『몽골의 역사』, pp. 425~429.

각국들과 평화적인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몽골의 발전에 긍정적인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몽골은 자국의 이익을 존중하고 국제적으로 법적인 기준을 준수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들과 마찰하지 않고, 어떠한 군사동맹에도 가입하지 않으며, 외국 군대의 국내주둔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몽골은 몇 가지 기본 방향을 가지고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첫 번째, 전통적인 관계의 두 이웃 나라, 즉 북쪽의 러시아와 남쪽의 중국과 우호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특정 국가에 대한 편향보다는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 두 번째, 미국, 일본, 독일 등 동·서양의 선진국들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정책이다. 몽골은 1987년에 미국과 수교했으며, 미국은 처음부터 몽골의 개혁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1980년대부터 몽골과 일본의 관계가 증진되기 시작했으며, 평등한 협력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다.
- 세 번째, 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여, 지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ASEAN) 그 중에서도 동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과 맺은 협력 관계는 더욱 확대·증진되고 있다.
- 네 번째, 유엔(UN)과 전문 기구들, 즉 국제 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 은행(ADB) 등 재정·경제기구들과 협력하는 것이다. 몽골은 유엔의 회원국이며 현재 139 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 다섯 번째, 구(舊) 사회주의국가였던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 여섯 번째, 개발도상국들과 협력하고, 강대국들의 무역·경제 압력을 공동의 힘으로 극복하고, 상호 이해를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몽골은 국가 안전에 대한 보장을 정치적인 방법으로 얻는다는 목표 하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변화와 개혁 시기 초기 10만의 소련군을 몽골에서 내보낸 것과 유엔 제47차 총회에서 전 몽골 대통령 오치르바트가 자국에 핵무기가 없다고 선언하여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와 핵무기 보유국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것을 통해 확인된다.

특히 몽골의 외교정책에서 세 번째 기본 원칙은 ‘제3이웃 정책’으로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 몽골을 둘러싼 양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 이외에 한국과 일본, 독일 등 제3이웃 국가들과 선린우호

적인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는 외교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 양 강대국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³⁶⁶⁾ 몽골의 ‘제3이웃 정책’의 성공 여부는 몽골과 양 강대국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³⁶⁷⁾

몽골의 대표적인 지한파 인물인 초대 대통령 오치르바트(П. Очирбат)는, 2018년 11월 7일 한국일보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주최한 ‘한반도 평화, 아시아의 기회와 도약 국제포럼’에서 밝힌 기조 강연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특히 최근 한반도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 동북아시아 지역에 평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 정상의 노력으로 협력과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몽골 국민 모두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 전 세계가 한반도의 평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했으며, “몽골은 한국과 북한 두 나라와 동시에 동반자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고 있으며, ‘첵헤르 슴드(Цэцхэр сүлд, 푸른 깃발)’ NGO 기구 의장인 저는 몽골의 비핵화 입장 확인, 동북아시아 안보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지지, 양국의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속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어서 한반도 비핵화 구축, 북미 간의 관계 호전, 북한 체제 유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남북, 북미,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몽골 학자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인 “남북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 증진, 통일을 위한 호의적인 환경 조성, 한반도는 아시아의 비핵화 지역이 되어 평화와 안전의 허브 역할 구축, 동북아시아 개발사업 달성을 위한 호의적인 환경 조성, 아시아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 변영의 기반 조성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³⁶⁸⁾ 한편, 최근 한 연구에서도 한반도에서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면, 몽골의 ‘비핵화 선언’의 경험이 일정부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³⁶⁹⁾

366) 바야르후 D(Баярхүү Д.), “몽골의 제3이웃 정책과 양 강대국(Монгол улсын гуравдагч хөршийн бодлого & Хоёр хөрш),” *Pax Mongolica* 2018 no. 2(10). Ulaanbaatar: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2018), pp. 12~50.

367) 바야흐르 J.Баясах Ж.) and 투르дал라이(Төрдалай Р.), “몽골의 독립과 대외정책의 세 가지 초석(Монгол улсын тусгаар тогтнол ба гадаад бодлогын тулгын гурван чулуу),” *Pax Mongolica* 2018 no. 1(9). Ulaanbaatar: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2018), pp. 3~18.

368) 오치르바트(П. Очирбат) 전 몽골 초대 대통령 2018년 11월 7일, 한국일보·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주최 ‘한반도 평화, 아시아의 기회와 도약’ KorAsia Forum 기조 강연 발표문 (몽골문·번역문)

369) Dierkes J. and Mendee J., “Mongolia on an Emerging Northeast Asian Region,” Batbayar T. ed. *The Mongo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20, Ulaanbaatar: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2018), pp. 91~100.

라. 경제 공동체

1) 동북아경제공동체에서 몽골의 역할

몽골제국 시대 육로와 해로를 포함하여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광역 교통망(잠치 jamči 站赤)을 건설하였던 몽골인들은, 오늘날 러시아와 중국 두 강대국에 둘러싸인 내륙의 ‘섬’ 국가처럼 되었다. 이에 몽골은 다른 나라와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이다. 이 GTI는 한국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몽골이 참여하여 동북아시아 각국의 공동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몽골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³⁷⁰⁾

오치르바트 전 몽골 대통령은 ‘동북아경제공동체’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관심을 표명했는데,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몽골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몽골은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정치 경제적으로 관계가 깊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원한다. 몽골의 해외 투자와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이들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한다. 몽골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광산업, 주된 경제활동의 한 축인 유목·목축업에 동북아시아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발전한다면, 몽골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번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몽골은 ‘핵 없는 국가’임을 선언함으로써,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각종 지원을 받았는데, 이는 아시아의 발전에도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또한 ‘굴뚝 없는 공장’인 관광 산업 역시 몽골의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며, 연료, 우라늄, 태양광, 풍력 등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산업 발전에도 큰 가능성을 갖고 있다.³⁷¹⁾ 이는 몽골이 넓은 영토, 풍부한 지하자원, 높은 교육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몽골은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으며, 경제를 개방하여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발전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이 급선무”임을 호소하였다.³⁷²⁾

370) 구해우, “한국과 몽골의 광역두만강개발계획 참여 전략,”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편, 『동몽골의 가치와 미래』 (천안: 단국대학교 출판부, 2016), pp. 357~403; 김보라, “GTI에 대한 몽골의 시각과 비전 및 한·몽 협력 방안: 동몽골 지역 개발 내용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편, 『동몽골의 가치와 미래』, pp. 405~450; 김보라, “이웃 국가들을 통해 출해구(出海口)를 확보하고자 하는 몽골의 이해관계와 몽골-러시아 연해주 협력: 정책 문서와 협의·합의·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주최, 『2016 동몽골프로젝트 학술회의 자료집』 (용인: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국제관 502호, 2016.11.4.), pp. 88~118.

371) 한중수, “몽골의 광물자원과 광업정책,”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편, 『몽골과 한국: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 (용인: 단국대학교 출판부, 2012), pp. 241~288.

372) 오치르바트(П. Очирбат) 전 몽골 초대 대통령 2018년 11월 7일, 한국일보·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주최 ‘한반도 평화, 아시아의 기회와 도약’ KorAsia Forum 기조 강연 발표문 (몽골문·번역문)

2) 동북아철도공동체에서 몽골의 위치와 역할

몽골이 ‘동북아경제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는 바로 철도 분야이다. 이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와 ‘신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 연계’와 연관한 것으로, 201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6자회담 당사국에 몽골을 더해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 것과도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 계획에 의하면, ‘이후 30년 동안 남북 경협에 따라 발생할 긍정적인 경제 효과는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이며, ‘평양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2018년 12월 26일 열린 ‘동해·서해선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은 남측의 철도 자재와 장비를 제공을 위한 착공식(2002년 9월 18일)이 개최된 지 16년만이며, 경의선 열차가 문산역, 동해선 열차가 금강산역에서 시범 운행(2007년 5월 17일)을 한 지 11년 만의 행사였다. 이 착공식에는 중국과 러시아 대표와 함께 몽골의 소드바타르(Я. Содбаатар) 도로교통개발부 장관이 참석하여 ‘몽골 정부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도로와 철도 착공식을 했으니 앞으로 이 길을 통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까지 물자 수송과 인적 교류 등 모든 것들이 잘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몽골의 참여와 역할 확대에 대한 희망을 밝혔다.

아울러 오치르바트 전 몽골 대통령은 몽골의 철도 산업 발전 방안 및 동북아시아에서 철도 산업의 역할에 대해서 ‘몽골 철도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발전 전략 국제회의’에서 현재 남북 노선 하나 밖에 없는 몽골의 철도 노선을 동부와 서북부까지 연결하는 간선철도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중에서 동부 철도 노선은 중국 측 철도와 연결하여 동북아시아 철도 공동체와 연결할 예정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8년 8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경제 지평을 북방 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시아 상생과 번영의 대동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는 한국과 북한, 러시아, 중국, 몽골 등 동북아시아 각국의 공통된 입장임을 밝혔다.

한국은 2018년 7월에 국제철도연맹 회원국이 되었고, 이미 공동 조사 및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몽골의 ‘길을 따라 발전이 온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이러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가 구축된다면 바다가 없는 내륙국인 몽골의 지정학적 약점을 극복할 수 있고, 더 넓은 지역과 국가들과도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동북아시아, 동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와의 공동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3) 동북아평화공동체에 대한 몽골의 입장과 역할

오치르바트 전 몽골 대통령은, 또한 최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아시아의 역할과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 구축, 비핵화가 진전되는 현 상황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제안으로 공동의 번영과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아시아 평화체제 구축 및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2030’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회, 환경,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아시아 포럼’ 설립을 제안하였다. 지역화 협력을 위한 이 포럼은 국경을 넘는 범죄, 자연 재해, 전염병 확산, 환경 보호를 위한 공동 네트워크 구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아울러 상호 우호관계는 아시아인의 문화 체험과 이해, 각국의 단점 극복과 개발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몽골은 아세안(ASEAN)을 지역화, 나아가 세계화 무대에서 매우 중요한 기구로 평가하며,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몽골도 회원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몽골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과 우호 관계 유지를 지지하고 있는, ‘아시아-유럽 포럼(ASEM)’의 회원국입니다. 이 포럼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제11회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를 몽골에서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아시아 각국들의 협력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아세안,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 협력회의(EAS)등은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평화 구축과 지역 번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라며 몽골이 동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무대에서 평화 정착과 유지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몽골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나라와 공히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과는 이미 외교 수립 70주년을 맞이하였고, 한국과는 2020년에 30주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몽골은 남·북한 양국과 맺은 우호 관계를 통해 삼자 협력과 번영을 위한 다양한 기회가 있음을 두 나라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 구축은 한반도 뿐 아니라 아시아 경제 번영과 우호 협력 관계 증진에 큰 기회를 열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국경을 넘어, 아시아의 연료와 에너지 개발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아시아 슈퍼 네트워크(Asia Super Network)’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평양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이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에 합의하였습니다. 남북한이 철도로 연결되어 지역 철도망과 연결되면, 바로 신 실크로드와 만나 부산에서 유럽까지 물품을 운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동북삼성(東北三省), 러시아의 극동 지역, 몽골 등의 동북아시아 각국의 상품이 남북한 연결철도를 통해 ‘부산-서울-평양-북경-울란바토르-모스크바-파리’까지 오가게 되면, 곧바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몽골과 북한 등 동북아시아에는 지하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아시아의 경제 번영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저는 부산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은 핵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거기에도 충분히 현명한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핵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바로 회의석상에 앉아 평화 구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 말이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 바로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이슈들로 입증되어 매우 기쁩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마. 동북아문화공동체 참여 가능성과 교류 현황

1) 주요 강대국과의 문화적 교류와 연계 현황

오늘날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몽골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는 바로 중국이다.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또한 중국 내몽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에는 400만 명에 이르는 몽골족이 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몽골국 국민들에게 비자를 요구하지 않아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몽골 국민 일부는 강대한 중국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적 몽골의 경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다음은 러시아 연방이다. 바이칼 호수 부근에는 100여 만 명에 이르는 부리아트 자치공화국에 몽골인들이 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300여 년이 넘는 동안 러시아화 되어 러시아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고 있다.

몽골에게 북한은 지속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중요한 나라이다. 몽골이 한국과 수교하기 이전에는 북한 영화와 서커스 등이 몽골인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일본은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으로 몽골의 믿음을 얻은 대표적인 국가이다. 최근에는 스모 등을 통한 스포츠와 문화 교류를 통해 일본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도 일본처럼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몽골을 연구하고 장기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독일은 몽골의 현실에 알맞은 산업기술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으며, 역사연구와 고고학 발굴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 한국과의 문화공동체 가능성 검토

1990년 수교 이후 몽골과 문화교류가 가장 활발한 나라는 단연코 한국이다. 수만 명의 몽골인들이 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고 있고,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몽골에 살고 있다. 특히 몽골인들에게 제주도는 꼭 방문해야 하는 곳이며, 남양주에는 ‘몽골 문화촌’이 있어 한국인들에게 몽골의 다양한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³⁷³⁾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교류도 아주 활발하다.

또한 국가기관들도 몽골과의 교류 협력에 열심인데 예를 들면,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의 한국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몽골, 러시아, 베트남 등의 학술기관들과 MOU를 체결하고, 공동 학술조사와 학술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동북아시아, 나아가 중앙유라시아의 지역과 민족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을 서로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몽골과는 이미 2007년에 포괄적인 학술 연구 조사와 관련하여 MOU를 체결하였고, 연례적으로 공동의 이슈에 대한 학술회의 개최 등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11월에 재단은 몽골과학아카데미 산하 역사고고학연구소 등과 한·몽 간의 교류 강화를 위해 협정서를 새로 체결하고 ‘한·몽 역사고고학자 협의회’를 발족하였으며, ‘몽골 역사교사 올림피아드 개최 및 우수자 한국 단기 연수 프로그램’ 등도 실시하고 있다.³⁷⁴⁾

국립중앙박물관은 실크로드·중앙유라시아와 관련한 다양한 전시회를 기획하여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中央아시아 美術』(1986)과 『스키타이 황금전』(1991), 『동서 문명의 십자로: 우즈베키스탄의 고대문화』(2009), 『차마고도의 삶과 예술』(2009) 전시회를 열고 도록을 발간하였다. 또한 몽골과 공동 고고학 발굴조사를 통해 『몽골 우글룩칭골 유적』(1999) 등을 발간하였으며, 1997년 이후 몽골과 공동(Mon-Sol Project)으로 발굴 조사한 고고학 성과를 『몽골 흥노무덤 자료집성』(2008)으로 정리하였다. 2018년 5월에는 한·몽 공동 조사 20주년을 기념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 칸의 제국-몽골’ 전시회를 개최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1년부터 ‘Asia Archaeology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고구려, 발해, 몽골과 러시아 연해주, 중국 장성지대 등의 고고학 발굴 성과를 공유하였다. 아울러 몽골과학아카데미 역사고고학연구소와 『몽골의 문화유산·1~6』(2010~16)을 발간하였다.

373) 최근 남양주시에서 운영해오던 ‘몽골문화촌’을, 그 동안에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쇄하였다. “막 내린 몽골문화촌 이대로 문 닫을라,” 『인천일보』, 2019.3.6.,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34185#08hf>> (검색일: 2019.4.14.).

374) 장석호, “17세기 몽골인들이 직접 쓴 유목민의 삶과 역사,” 『동북아뉴스레터』 2015년 4월호,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이외에도 몽골과 관련된 학회들도 다양한 연구 활동과 학술회의 등을 통해 몽골과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알타이학회, (사)중앙아시아학회, (사)한국몽골학회는 해당 국가와 지역에 관한 최고 수준의 논문 발표 및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알타이학회는 1985년 10월 창립, 『알타이학보』 창간호를 발행한 이후 지금까지 29호(2018.12)를 간행하였다. (사)중앙아시아학회는 1993년 봄에 설립한 ‘중앙아시아연구회’를 모태로 1996년 10월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그 해 12월 『중앙아시아연구』 창간호를 발행한 이후 현재 23-2호(2018.12)까지 간행하였다. (사)한국몽골학회는 1996년 12월 『몽골학』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현재 55집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관련 논문들이 한국어와 몽골어로 실리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 국가와 교류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한국과 몽골은 생업 방식이 다르고, 오랫동안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역사와 문화를 이룩하고 발전시켜 온 서로 다른 배경을 인정해야 하며, 유목문화와 농경문화의 차이점과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 필요하다. 따라서 스포츠를 통한 상호 이해와 장기/체스, 바둑, 고누/샤가이 등 오락과 놀이를 통한 교류와 이해, 음악과 미술, 연극과 영화, 드라마 등 예술 분야의 상호 교류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한류는 이미 몽골 청소년 세대에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현상이지만, 반대로 일부 기성세대는 이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한류 등 우리 문화가 상대방 국가에서 확산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그들의 문화에 대해 우리들이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문학, 특히 고고, 역사, 언어, 민속 등을 통한 역사적 교류와 상호 접촉의 흔적 등을 통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충돌 없는 교류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적극적인 교류라고 할 수 있는 여행, 관광을 통한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자연 보호 및 공정 여행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문화공동체 논의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정권별 외교정책과 지역공동체³⁷⁵⁾

1) 오치르바트(П. Очирбат) 대통령 시기³⁷⁶⁾

오치르바트 대통령은 1990년 9월 3일부터 1992년 2월 12일 신헌법 제정까지 몽골인민공화국 대통령직을 수행했으며, 1992년 2월 12일부터 1997년 6월 20일까지 몽골국 초대 대통령직을 수행하였다. 1990년 11월에는 몽골과 일본 양국의 무역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다방면에 걸친 교류가 시작되었다. 이어서 1991년 1월에는 몽골 대통령 최초로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양국 간 교류와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1991년 8월에는 중국 양상쿤(楊尙昆) 국가주석이 몽골을 방문하였다. 이 만남에서 1950~60년대 중국이 몽골에 빌려준 차관을 5년 유예하며, 몽골에 중소기업 시설을 세우기 위해 5,000만 위안(元)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이는 1956년 주덕, 1960년 주은래의 방문 이후 최초의 고위직 방문이었다. 1991년 10월에는 오치르바트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몽골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의 고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노태우 대통령은 몽골의 발전과 안정이 동북아에서 아주 중요함을 이해하며 상호 선린우호관계를 맺기로 하였다.

1992년 2월 12일 몽골국 헌법을 새로 제정하고 문장도 새롭게 만들었다. 1992년 9월 25일 제47차 유엔총회에서 몽골국을 비핵국가로 만들 것을 선언하였다. 이에 1993년 11월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지지를 표명하고, 1998년 제53차 유엔총회에서 승인하였다. 몽골은 1994년 6월 30일 몽골의 외교정책에 대한 기본 노선을 정했다. 핵심은 “몽골의 외교정책은 평화를 존중하고 외국과 충돌하지 않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다. 몽골국의 이익을 존중하는 동시에 외국의 이익도 존중한다...”는 내용이다.

오치르바트 대통령 시기 몽골국은 일본, 미국, 중국, 한국 등 주변 국가들과의 안정적이고 긴밀한 교류를 위한 기초를 놓은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는 퇴임한 후에도 교류를 위해 지속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몽골의 대표적인 친한파이다.³⁷⁷⁾

375) 여기에서는 몽골과 동북아시아 각국(미국 포함)과의 외교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볼드바타르(Болдбаатар Н), 『몽골국 대통령 25년-연대기(1990.09-2015.10)』, (Монгол улсын ерөнхийлөгч 25 жил - он дарааллын товчоон(1990.09-2015.10), (울란바토르(Улаанбаатар): 몽골국 대통령비서실(Монгол улсын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тамгын газар), 2015), pp. 1~358.

376) 1990년 9월 3일 ~ 1992년 2월 12일, 1992년 2월 12일 ~ 1997년 6월 20일

377) 폰살마긴 오치르바트 지음, 김혜정 옮김, 『몽골국 초대 대통령 오치르바트 회상록』 (서울: 오름, 2010), pp. 9~518.

2) 바가반디(H. Багабанди) 대통령 시기³⁷⁸⁾

1997년 5월 몽골인민혁명당 후보인 바가반디 후보가 제2대 몽골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97년 6월 20일 몽골국 제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바가반디 대통령은 1998년 5월에 일본을 공식 방문하여 하시모토 총리와 만나 양국의 경제와 공동 협력 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 측은 몽골에 경제적 지원과 기후 변화 등에 대한 예방과 공동 대응, 방송기구 등에 지원할 것, 식료품 가공 공장 증설을 지원할 것 등에 관한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바가반디 대통령은 1998년 12월에는 중국을 공식 방문하여 장저민(江澤民) 국가주석과 양국 간의 국경 무역, 공동 협력, 경제와 자본 투자 등 문제,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과 티베트(西藏)과 타이완(臺灣)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999년 5월 말에는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이 몽골을 국빈 방문하였다. 한국의 개발 경험과 노하우(know-how), 몽골의 잠재력(풍부한 자원 등)을 결합하여 호혜적 발전을 목표로 하는 '21세기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 수립에 합의하였다. 또한 몽골에 저리 차관 증여, 다방면에 걸친 공동 협력 등에 뜻을 같이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몽골 국회에서 “지난해 한국은 몽골의 다섯 번째 교역국, 네 번째 자본투자국이 되었는데, 이는 양국의 역사와 문화 교류의 깊은 관계로 인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999년 7월에는 중국의 장저민(江澤民) 국가주석이 몽골을 방문하여 3,000만 위안의 무상원조 등을 약속하였다. 바가반디 대통령은 2001년 2월에는 한국 등을 방문하여 그동안 한몽 간 경제 교류와 통상 확대 및 정치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이 더욱 밀접한 관계로 발전하였는데, 특히 한국에서 일하는 몽골 근로자들의 건강과 경제 상황, 법적 보호 등에 대해 한국 정부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2001년 5월 20일 바가반디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여 6월 20일에 취임하였다. 2003년 6월에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몽골을 방문하였다. 이때에 5,000만 위안의 무상원조와 300만 달러를 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하였다.

바가반디 대통령은 2003년 12월에 일본을 공식 방문하였고, 2004년 7월에 중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그는 2004년 7월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였으며, 2004년 12월에는 북한을 공식 방문하여 최고인민회의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회담하였다.

이 시기에는 한국과 중국과의 교류에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일본, 미국, 북한과의 교류확대에

378) 1997년 6월 20일 ~ 2001년 6월 20일, 2001년 6월 20일 ~ 2005년 6월 24일

도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3) 옹흐바야르(Н. Энхбаяр) 대통령³⁷⁹⁾

2005년 5월 22일 몽골인민혁명당 소속 국회의장인 옹흐바야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2005년 6월 24일 몽골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2005년 11월 21일 부시 미국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했으며, 2005년 11월말에는 옹흐바야르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2006년 5월에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하여 양국 간의 관계를 '선린우호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층 격상시켰다. 옹흐바야르 대통령은 2007년 3월에 일본을 방문하였고, 2007년 5월말에는 한국을 방문하였다. 2007년 10월말에는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2008년 2월말에 옹흐바야르 몽골 대통령이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였다. 2008년 10월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셈(ASEM) 정상회담에 참석하였다.

2008년 10월에는 바야르(С. Баяр) 몽골 총리가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이는 신내각 출범 이후 첫 번째 외교 행보로, 한국-몽골 간 중기 행동계획 채택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수교 20주년 행사 개최에도 합의하였다.

이 시기에도 미국, 중국, 일본과의 교류와 함께 특히 한국과의 교류관계에 큰 관심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4) 엘벡도르지(Ц. Элбэгдорж) 대통령 시기³⁸⁰⁾

2009년 5월 24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엘벡도르지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2009년 6월 18일 몽골국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2009년 7월 27일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과 회동하였고, 2010년 4월말에 중국을 공식 방문하여 후진타오 주석과 회동하였다.

2011년 3월 바트볼드(С. Батболд) 몽골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였다. 총리 방문 기간 중 한국과 몽골은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 차관 지원 방안, 한국 기업의 몽골 광업 개발 참여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2011년 11월에는 일본을 공식 방문하여 '전면적 우호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는 이어서 2011년 6월에 미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2011년 8월에는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이 몽골을 공식 방문하여 양국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379) 2005년 6월 24일 ~ 2009년 6월 18일

380) 2009년 6월 18일 ~ 2013년 7월 10일, 2013년 7월 10일 ~ 2017년 7월 10일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2013년 6월 26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7월 10일 재선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그는 2013년 10월말 북한을 방문하여 최고인민회의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회동하였다. 2014년 8월에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몽골을 방문하여 양국 관계를 ‘ 전면적 전략 관계’로 격상시켰다.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2014년 10월 16-17일에는 ASEM 회의를 몽골 주관하여 울란바토르에서 개최하였다. 2014년 11월에는 중국의 초청으로 베이징에서 열린 APEC 회의 참석하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동하였다. 2016년 5월에는 한국을 국빈 방문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였으며, 5월 20일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접견하였다. 2016년 7월에는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이 ASEM회의 참석에 이어 몽골을 국빈 방문하였다.

엘벡도르지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각국과의 교류와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바트툴가(X. Баттулга) 대통령³⁸¹⁾

2018년 1월에는 후렐수흐(Y. Хүрэлсүх) 총리가 한국 방문하여 추후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이 양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3월에는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몽골을 방문하여 바트툴가 대통령, 후렐수흐 총리 등과 면담하고 몽골과의 경제협력체널 구축방안을 협의하였다.

2019년 3월 25~27일에는 대한민국 이낙연 국무총리가 몽골을 방문하였다. 아직까지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방문하지 않았지만, 되도록 이른 시기에 방문하여 양국 간의 상호 경제협력과 관계발전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몽골의 외교정책의 기본 원칙은 전문, 정치 방면의 외교정책, 경제 외교정책, 과학과 기술 방면의 외교정책, 문화와 인도주의 외교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문화와 인도주의 외교 정책’은 몽골인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보호하며, 독특한 문화유산을 통해 세계문화의 성취를 풍부하게 하며, 다양한 역사문화 유산을 복원하여 세계에 몽골을 널리 알리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외국에서 몽골연구를 지원하여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인권과 자유 평등과 상호이익을 원칙으로 삼을 것을 천명하였다.³⁸²⁾

이상으로 몽골의 동북아시아(미국 포함) 각국과의 외교관계를 살펴본 것처럼, 몽골은 중국과

381) 2017년 7월 10일 ~ 현재.

382) Mongolian Government, “Concept of Mongolia's Foreign Policy,” Batbayar T. ed, *The Mongo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20, Ulaanbaatar: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2018), pp. 141~148.

미국, 일본뿐 아니라 특히 대한민국과의 관계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주변 강대국들 뿐만 아니라 몽골처럼 약소국에 대해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상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신남방 정책’과 더불어 ‘신북방 정책’을 꾸준히 펼쳐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나. 문화공동체 대한 이론적 논의

‘동북아문화공동체’의 성립은 가능한가?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주도한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강대국들은 약소국들의 입장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동북아시아 각국을 설득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지금도 주변 국가들의 역사를 자국사로 편입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과 역사 갈등을 일으킨 ‘동북공정’과 북방 유목민과 몽골의 역사를 ‘중국사’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인 ‘북강공정(北疆工程)’ 등이다. 최근에는 국가사회과학기금 중대위탁프로 그램인 ‘몽고족(蒙古族) 기원(起源)과 원(元)나라 시대 제후릉(諸侯陵) 종합연구프로그램’의 소과제 인 ‘중국고대북방민족총서’ 편찬과 출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학술회의를 개최하였 다.³⁸³⁾ 러시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몽골인들의 땅과 역사, 문화를 빼앗아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바이칼 호 주변 부리아트 (몽골)공화국과 알타이 산맥의 탄누-투바 공화국 등이다. 일본은 ‘괴뢰 만주국’ 시기에 몽골 국경을 침략한 전력이 있으며, 지금도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몽골은 결코 이들 강대국을 믿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같은 중앙유라시아 역사의 전통을 공유하는, 카자흐스탄과 터키 등의 역사학 자들도 ‘몽골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이다. 몽골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등 여러 나라에서 칭기스 칸과 몽골제국의 역사에 대한 연구에서 몽골사에 대해 잘못된 서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오해는 대부분 칭기스 칸의 기원을 카자흐, 키르기스 등이라거나 또는 그는 카자크 사람이기 때문에 카자흐인들의 노력에 의해 몽골제국이 성립되었으며, 제국의 성립에 몽골 부족들은 하나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몽골제 국 시대에 쓰인 문서 자료들은 위구르 문자로 카자크어로 쓰였다거나, 또는 칭기스 칸이 건립한 나라는 투르크-몽골제국이었다는 식으로 사료를 명백하게 왜곡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한다.³⁸⁴⁾

383) “‘开创中国古代北方民族史研究新格局’ 中国社会科学网,” <http://arch.cssn.cn/kgx/kgdt/201902/t20190220_4833220.shtml> (검색일: 2019.3.24.).

그렇다면 우리나라 연구자와 일반인들도 오랫동안 중국의 시각, 일본의 시각, 미국의 시각으로 몽골을 비롯한 북방 유목민을 오랑캐라고 폄하해왔던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우리 시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정책과 이론적 논의의 주요 쟁점³⁸⁵⁾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관계, 그 중에서도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경향의 하나는 ‘비단길(실크로드)’를 둘러싼 공동 협력 사업이 확대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몽골국은 역사, 지리, 종교, 문화, 대외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실크로드 지역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몽골의 중요성은 실크로드의 길목에 위치하는 것과, 남북한 양국과 공히 공평한 대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몽골은 어디까지나 민주적인 정치체제와 평화를 지향하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발전을 계속하면서 해당 지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고 있지만,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으며, 사회적 기반도 가장 취약하며, 경제적으로도 오늘날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고, 약소국이며, 취약국에 속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도 발전해 있으며, 중소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나라는 추후에 어떻게 협력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양국 사이에 어떤 기회와 시련이 놓여 있는가? 해당 지역에 위치한 강대국들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한다.³⁸⁶⁾

- ① 한국과 몽골의 관계 연구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민족 기원에 대해, 오늘날까지 한국과 몽골의 연구자들은 단선적, 또는 평면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예를 보면 양국 관계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와 곤란한 점 등을 설명하고자 할 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양국 관계에서 보다 정밀한 이론이 발전하지 못하고, 더 많은 기회를 놓치고, 보다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한국의 자본 투자를 유입할 수 있는 경제력과, 유치 조건, 시장 경제 등이 몽골에는 부족하다. 둘째, 몽골은 약소국이

384) 출몽(S. Tsolmon)·강바트(L. Ganbat), “투르크계 언어로 출판된 일부 역사 저작에 보이는 몽골사 서술,” 동북아역사재단 2016년도 한·몽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집, pp. 149~156, 157~165.

385) 바트투르(Ж. Баттөр),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국제질서에서 몽골과 한국의 관계,” 『유라시아 문명과 실크로드』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유라시아실크로드연구소 국제학술회의발표논문집, 2014.12.10.), pp. 189~193, 194~209.

386) 서동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한·몽 관계 발전,” (고려-몽골 형제맹약 800주년 국제학술회 발표논문집, 2019.3.22.), pp. 116~128.

- 때문에 영향력이 적다는 점이다. 국제 관계에 해당 지역의 수준에서 몽골의 지원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 셋째, 오늘날 몽골과 더욱 긴밀하게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 한국은 비교적 늦었다. 넷째, 오늘날까지 눈에 띄는 대규모 자본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
- ②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몽골국 총 수출의 96%를 중국 한 나라가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외국에 팔아 외화를 보유할 수 있는 광물의 90%도 역시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몽골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중국은 ‘자본을 투하하는’ 경제적인 외교 관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몽골이 외국과 체결한 우호 협력 관계의 등급 중에서 가장 높은 ‘전면적 전략 관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전면적 우호 관계’를 체결한 다섯 나라 중 하나이다.
- ③ 일본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 몽골국 전 대통령 엘벡도르지는 2014년 7월에 일본을 국빈 방문했을 때 양국의 공동 경제협력 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몽골과 일본의 관계는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지속되어 온 상황이 1990년대 이후에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예전에는 적대적이었던 일본과 교육, 농·목축업, 금융 경제, 건강 보장, 대외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1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믿지 않던 양국이 공동 협력우호국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상호 신뢰와 공동 협력의 상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준에 이르렀다. 또 하나의 큰 기회는 몽골의 천연자원을 일본의 기술과 자본으로 이용하게 되어 양측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조항도 들어 있다.
- ④ 한반도의 양국 통일에 참고할 ‘몽골 모형’: 한국이 진정으로 유라시아로 진출하여 경제, 문화,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려고 한다면, 반드시 북한과 ‘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북한과 ‘대화’를 진행할 때 몽골의 영향력이 적지 않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몽골 정부는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표명해 왔다. 또한 몽골 측에서는 최근에 ‘중개자’의 입장에 서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몽골과 한국의 관계에서 버릴 수 없는 한 부분이 바로 북한이다.
- 북한을 개방 국가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한국은 단지 미국이나 중국만을 쳐다보지 말고 몽골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유는, 몽골이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이행한 경험을 북한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 한반도 양국의 우호 관계, 나아가 통일 과정에 생생한 예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몽골의 민주화 경험이 한반도 통일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첫째, 정치 체제의 변환을 경험했다. 둘째, 경제 체제의 변화를 경험했다. 셋째, 안전보장을 확립한 경험이 있다. 넷째, 사회 조화와 통합을 이룩한 경험이 있다.
- ⑤ 몽골의 의견 개진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몽골정부가 동북아시아, 그 중에서 한반도의 통일에 관한 구상으로 분명히 밝힌 것은 ‘울란바토르 대화(Ulaanbaatar Dialogue)’라는 제안이다.

동북아시아의 각국의 상호 이해와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역적 분쟁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충돌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유라시아의 협력 관계에서 한국과 몽골의 협력 사업은 양국만의 독특한 형태와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몽골의 경제 협력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당면 과제이다. 최소한 양국 사이에 '자유무역 협정'을 시급히 체결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몽골의 협력 관계에 있어 반드시 유념해야 할 한 가지 요인은 중국의 영향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이 실행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공정'과 같은 형태의 역내 국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 프로젝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³⁸⁷⁾ 몽골도 또한 한국과 몽골 두 나라 사이에서 장기적이며 효과적인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유연한 자세로 대하여 협력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 또한 우리 두 나라가 해야 할 일이다. 아울러 몽골과 일본이 '적극적 협력과 상호 신뢰에 기반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합의, 명확한 창조적 건설 등을 연구하고, 그 경험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문화공동체 논의의 시사점

가. 이론적 시사점

'동북아문화공동체' 설립은 구상에서 실현 단계까지 장기간에 걸친 준비와 폭넓은 시야에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북아'를 뛰어넘는 '유라시아적 맥락'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실크로드를 통한 유라시아의 교류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보더라도 그 이유와 당위성은 분명하다. 몽골은 이미 '동북아문화공동체'에 참여할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 유라시아'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몽골을 매개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와의 교류도 한층 강고하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균형 잡힌 연구 기반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과 몽골, 중앙아시아 각국의 서적, 논문, 자료 등을 번역하여 양측에서 발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앙 유라시아'에 관심을 가지려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이해

387) 장슈이지에(Жан Сюйжие) "'일대일로(一帶一路)'와 몽골의 '초원길' 프로젝트 연계 방안" *Pax Mongolica* 2018 no. 2(10), Ulaanbaatar: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2018), pp. 105~116; 박인멘드(白音門德), "동북아시아 판도에 있어서 몽골국의 전략적 위치," (고려-몽골 형제맹약 800주년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9.3.22., pp. 71~79, 79~89.

하기 때문이다. 즉, 외부인의 시선으로 이해하는 ‘중앙 유라시아’와 함께 ‘현지인들의 시각’을 이해해야만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각 분야별 연구 주제에 대한 의견이다. 몽골은, 문헌사료에 의한 역사 연구가 미진하거나 정제된 분야를 고고학 연구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이미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흥노 고고학 연구’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외에도 전통을 이어온 구전문학, 자연 신앙과 민속, 언어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로써 상호 양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몽골 국민들에게 한국은 ‘경제 강국’이라는 인식을 넘어 ‘문화 학술 강국’이라는 긍정적인 인식도 심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 국익에 큰 도움이 되며 주변 강대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한·몽 양국 간의 학술적 공동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몽골 양국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관 등 관련기관에 한국어, 몽골어 뿐 아니라 영어, 러시아어 등으로 된 한국·몽골 관련 자료 기증을 통해 상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역사 연구는 전문 연구자들만의 전유물일 수 없다. 일반인들과 공유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영인, 출판과 번역, 박물관 자료의 출판과 소개, 주제에 따른 사진 자료의 활용, 연구서와 더불어 일반 독자를 위한 출판 서비스 등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몽골과 중앙아시아를 포함하여 유라시아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몇몇 더 있다. 예를 들면, 국립중앙박물관(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대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주) 등이다. 따라서 각 기관의 연구와 방향성이 여타 기관과의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한다.

그리고 ‘몽골과 중앙아시아’ 각국의 현지 연구기관과 연구자에 대해서도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현지 젊은 연구자를 초청하여 해당국의 연구 성과를 우리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들의 도움 없이는 훌륭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보고, 추후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을 제시하도록 해야한다. 일본은 1972년 몽골과 수교 이후, 캐시미어 생산회사인 ‘고비 공장 설비’ 무상 제공 등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울란바토르 시내 서부를 관통하는 고가도로[나르니 잠 Нарны Зам]를 건설하였고, 몽골국립대 옆 在몽골 일본센터(在モンゴル 日本センター)를 세워 다양한 교육과 문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몽골에 대한 다양한 지원 외에도 국제몽골학회(IAMS) 부속 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터키 정부는 터키 국제협력처(TICA)에서 몽골제국의 수도였던 카라코

름과 고대 투르크 유적인 호쇼 차이담을 연결하는 40여 km에 이르는 도로를 건설했다. 독일은 카라코룸 발굴 성과와 함께 몽골 유물전시회를 열고 도록을 발간했으며, 프랑스는 몽골 불교예술 연구 성과 전시와 ‘골 모드Gol Mod’ 흉노무덤 발굴 전시회에 프랑스 대통령의 관심과 직접 지원을 했다. 이외에도 중국, 타이완, 러시아, 캐나다 등도 대규모 투자와 함께 공동 학술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과 몽골은 2006년 5월에 ‘선린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고, 2011년 8월에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다. 그러나 몽골국 교육부 검정 『역사지리 교과서』에는 한국관련 서술이 지극히 빈약한 상황이며, 심지어 동해(東海)는 모두 일본해(日本海)로 표기돼 있다. 이는 일본 측에서 꾸준히 지도와 정보를 제공한 덕분이다.

한국이 ‘동북아문화공동체’ 설립을 주도하고자 하지만 과연 그럴 준비가 되어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분명하게 답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 경제, 기술(IT 등)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 바탕에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문화, 학술적 바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몽골 경제는 비교적 소규모입니다. 그러나 동북아에서 위치는 작지 않다. 따라서 박물관, 과학관, 학교 등 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한다거나 학술회의 및 연구자 교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역사·지리 교사를 포함하여 초·중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장·단기 연수 기회를 주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나. 정책적 시사점³⁸⁸⁾

몽골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몽골 외교정책의 최우선적인 이슈가 되었다. 왜냐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정치·경제적인 세계화 과정에 부합하기 위해서 해당지역 내 기관 간의 관계가 절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리적, 문화적, 민족 특성, 실용적인 의미에서도 몽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동북아 지역에 포함되는 나라이다. 몽골은 현재 이 지역의 국가들과 상호 관계 확대, 지역에서의 입지 강화,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다자간의 활동 통합 등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한국과 몽골은 1990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과학, 인문학 등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양국의 무역 및 경제 협력의 범위도 상당히 확대되고 교역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ODA는 몽골의 기간산업, 정보기술, 환경보호, 에너지, 농업분야에서 연구, 전문

388) 옹흐투스신(Б. Энхтүвшин), 2012년도 동북아역사재단 한·몽 공동 학술회의 인사말(김장구 번역 원고).

가 초청, 전문가 양성 및 봉사단원 파견 등에 재정지원을 했다.

교육 및 문화 교류협력이 확대되어 한국에서 배우는 몽골 유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기관 및 지방 행정기관 간의 직접 협력관계가 확대되어 한국의 20여 개의 지방행정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몽골과 한국의 국제적, 지역적 협력관계도 확대되고 있다. 양국은 기후 변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국제 테러리즘 등 세계적인 시급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논의하고 협력해 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정, 아울러 국제 안정에 한반도 상황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반도 평화 및 안정보장이 몽골의 국가 이득 및 이해관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존중 및 공동번영, 무력 충돌 위험성을 방지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몽골 국가 발전에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단기적 급속 경제 발전이 중요한 발전 모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양국 협력 관계를 특히 과학 분야에서 확대하여 발전시키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다.

몽골 과학아카데미는 2011년에 한국 교육과학기술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흉노 시대 역사 및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울란바토르와 서울에서 전시회를 개최해 왔다. 2002년에 몽골-한국 과학기술협력센터가 설립되었다. 2010년에 양국 정부부처간의 과학 협력위원회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몽골 과학아카데미는 역사학고고학연구소, 언어문학연구소, 경제학연구소, 국제학연구소, 지질학연구소, 자연환경연구소, 지리학연구소, 화학연구소, 물리학 및 기술연구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소들은 한국의 동일 분야의 연구소들과 협력교류를 하고 공동학술연구 성과물을 발간, 젊은 학자 양성, 젊은 학자들의 언어 및 전문적 지식 증가, 전문성 증진, 학위 취득, 국제사업 참가 등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해 왔다.

몽골 과학아카데미는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과도 성공적으로 협력을 해왔다. 우리의 협력관계는 더욱 확대되고 깊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다방면 협력관계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장기적으로 실행하여 뚜렷한 성과를 내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신북방’ 시대 한국과 북아시아의 몽골과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각국과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가야 한다.

제 4 절 대만의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

1. 지역공동체 논의와 문화공동체

가. 지역통합 논의의 등장

대만에서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논의가 등장하는 시점은 한국과 비슷하다. 1980년대에 경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확산 및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협정(NAFTA)에 자극을 받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1989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가 설립되었다. 대만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지역통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은 1990년대 초, APEC 가입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991년 대만은 ‘차이니스 타이베이(Chinese Taipei)’라는 이름으로 APEC에 가입했다. 같은 해 중화인민공화국(이후, 중국)도 APEC에 가입했다. 1990년대 초 대만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역통합 발전 상황을 파악하고, 대만이 노력할 방향이 무엇이며, 대만과 양안³⁸⁹⁾에 끼치는 영향에 관심을 보였다.³⁹⁰⁾ 그리고 이런 관심은 경제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후 대만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게 되는 계기는 1990년대 말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ASEAN+3의 설립이다. 1997년 7월에 태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에 큰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 아세안 국가들과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금융위기를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세계화가 가져온 거대 자본의 자유 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역경제·무역의 통합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³⁹¹⁾ 이러한 아시아 통합의 필요성에 일본, 중국, 한국이 호응하면서 2000년 아세안 정상 회담에서 아세안 10개국(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과 한국, 일본, 중국이 가입한 국제회의체 ASEAN+3의 설립이 선언되었다. 2004년 11월 ASEAN+3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n Summit: EAS)로 재편되어,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가입해 2005년 12월 첫 정상회의를 개최했다.³⁹²⁾

389) ‘양안(兩岸)’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중국과 대만을 말한다. 대만에서는 대만과 중국의 관계를 ‘양안관계’라고 칭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390) 施建生, “貿易自由化與區域整合,” 『臺灣經濟研究月刊』, 第15卷 6期 (1992), pp. 6~8; 姜家雄, “臺海兩岸經濟關係與亞太區域整合,” 『國際關係學報』, 第8期 (1992), pp. 157~178; 蔡宏明, “亞太區域整合之發展,” 『貿易週刊』, 第15 49期 (1993), pp. 4~9; 杜巧霞, “區域整合與多邊貿易的自由化,” 『經濟前瞻』, 第10卷 2期 (1995), pp. 64~67; 王朝弘, “由區域整合分析臺灣經貿努力方向,” 『嶺東學報』, 第7期 (1996), pp. 25~42; 葛永光, “加速區域整合帶動亞洲發展,” 『臺灣教育』, 第550期 (1996), pp. 2~5.

391) 金榮勇, “形成中的東亞共同體,” 『問題與研究』, 第44卷 3期 (2005), p. 46.

ASEAN+3 설립으로 인해 대만의 주변 국가들인 중국, 일본,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동아시아 지역통합 회의 체제에 가입되어 대만만이 유일하게 미가입국으로 남게 되었다. 대만은 자신을 제외한 주변에서 발생하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대한 움직임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만에서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2000년대 대만 경제계와 학술회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주제에 집중되었다.³⁹³⁾ 첫째,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현황·추세와 발전전망을 관찰하는 주제다. 이런 연구 중에는 경제·무역·금융·화폐 등의 통합 상황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연구도 포함되어 있다.³⁹⁴⁾ 둘째, 동아시아 지역통합 추세 속에 대만이 직면한 상황·문제와 대응 전략을 다루는 주제다.³⁹⁵⁾ 셋째, 아세안 혹은 동아시아 지역통합 속에서 중국의 역할·전략을 분석한 연구다.³⁹⁶⁾ 넷째, 동아시아 지역통합이 양안관계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주제다.³⁹⁷⁾ 다섯째, 2008년 5월 마잉주(馬英九) 총통 취임 후,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인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海峽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을 추진하게 되자 아세안-중국 자유무역 지역의 설립과 ECFA체결이 대만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다.³⁹⁸⁾ 여섯째, 동아시아 지역통합 속에서 지역주의의 발전과정을 분석한 연구다.³⁹⁹⁾ 주목할 만한 것은 ASEAN+3의 일본과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끼치는 영향이나 전략·역할에 관한 토론이 미미하다는 것이다.⁴⁰⁰⁾

2008년 6월 호주총리가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Asian-Pacific Community) 설립을 제안하고, 2009년 12월 일본이 동아시아 공동체(East Asian Community) 설립을 추진하게 되자, 대만에서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의 논의는 더욱 활발해 졌다. 2010년대의 대만 경제계와 학술회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했다.⁴⁰¹⁾ 2010년대에 가장 많이 다뤄진

392) 王曉麟, “東亞區域整合對台灣經濟發展之困境與因應策略,” 『東亞論壇』, 第45卷 6期 (2007), p. 26.

393) 대만에서 출간되는 거의 모든 잡지 논문의 제목은 국가도서관 대만잡지논문검색시스템(臺灣期刊論文索引系統)에서 검색할 수 있다. 2000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지역통합[區域整合]으로 논문 제목과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직접적으로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연관된 논문은 총 28편이다. “국가도서관 대만잡지논문 검색시스템,” <<http://readopac.ncl.edu.tw/nclJournal/>> (검색일: 2019.2.17.) 참조.

394)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현황·추세와 발전상황에 관한 주제는 27편 중 10편으로 37%를 차지했다.

395) 동아시아 지역통합 추세 속에 대만이 직면한 상황·문제와 대응 전략을 다루는 주제는 27편 중 6편으로 22.2%를 차지했다.

396) 아세안 혹은 동아시아 지역통합 속에서 중국의 역할·전략과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27편 중 4편으로 14.8%를 차지했다.

397) 동아시아 지역통합이 양안관계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주제는 27편 중 3편으로 11.1%를 차지했다.

398) ECFA체결에 관한 논문은 27편 중 2편으로 7.4%를 차지했다.

399) 지역주의의 발전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28편 중 1편이다.

400) 일본의 지역통합 경향이 대만에 시사하는 점을 연구한 논문이 1편이었지만, 한국에 관한 논문은 없었다.

401) 국가도서관 대만잡지논문검색시스템(臺灣期刊論文索引系統)에서 2010년 1월부터 2019년 2월을 기준으로 지역통합[區域整合]으로 논문 제목과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직접적으로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연관된 논문은 총 63편이다. “국가도서관 대만잡지논문검색시스템,” <<http://readopac.ncl.edu.tw/nclJournal/>> (검색

주제는 역시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현황·추세와 발전전망에 관한 것이다.⁴⁰²⁾ 그리고 여전히 동아시아 지역통합 추세 속에 대만이 직면한 상황·문제와 대응 전략은 중요한 주제였다.⁴⁰³⁾ 그 외에 아세안 혹은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중국 관련 연구는 중국의 역할·전략 외에도 중국의 동아시아공동체 인식에 대한 주제가 추가되었다.⁴⁰⁴⁾ 반면 동아시아 지역통합이 양안 관계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주제는 감소되었다.⁴⁰⁵⁾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ECFA의 역할을 설명하는 연구도 2000년대에 비해 증가하지 않았다.⁴⁰⁶⁾ 또한 한·중·일 또는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보다는 증가했다.⁴⁰⁷⁾ 그러나 여전히 한국만을 주제로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관찰한 연구는 보기 힘들었다. 2010년대에는 지역주의의 발전과정을 분석한 연구 외에도 지역통합 이론을 검토한 연구와 지역정체성에 관한 연구도 추가되었다.⁴⁰⁸⁾

동아시아 지역통합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대만 학술회의 평가는 낙관적인 관점과 비관적인 관점 둘 다 제시하고 있다. 낙관적인 관측으로는 지역주의는 필연적 추세로 지역경제통합이 생산해내는 효과는 정치통합으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지역 내 국가들이 비록 이익은 서로 다르지만 교섭과 교류로 서로의 신용을 쌓아가며 협력 기구를 형성해 간다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비관적인 관측으로는 동아시아 지역의 광활한 지리적 범위·국가 상황의 특수성·문화적 차이·국가 이익 및 각국의 위협에 대한 해석 차이, 그리고 환율제도의 위험성과 국가 간 역사적 원한·현실적 충돌로 인해 지역통합을 이루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과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또한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⁴⁰⁹⁾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도 동아시아 지역은 서로를 융합할 수 있는 응집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경제발전·사회문화의 차이·역사인식의 차이·정치적 대립 및 강권(強權) 간의 모순 등은 동아시아 국가 간의 강력한 응집력을 형성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언어·정치적 다원성과 경제적인 불균형 발전 또한 공동체 형성의 난이도

일: 2019.2.17.) 참조.

402) 총 63편 중 26편으로 41.3%를 기록했다.

403) 총 63편 중 10편으로 15.9%를 기록했다.

404) 중국에 관한 연구는 총 63편 중 9편으로 14.3%를 기록했다.

405) 양안관계에 관한 논문은 총 63편 중 1편으로 줄었다.

406) ECFA에 관한 논문은 총 63편 중 2편으로 3.2%를 차지했다.

407) 총 63편 중 7편으로 11.1%를 기록했다.

408) 지역주의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는 2편, 지역주의 이론에 관한 연구는 2편, 지역정체성에 관한 연구도 2편 검색되었다. 그 외에 동아시아 지역통합이 국가에 끼치는 영향과 각 국가들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참여하는 방식을 연구한 논문이 각 1개씩 검색되었다.

409) 王曉麟, “東亞區域整合對台灣經濟發展之困境與因應策略,” p. 27.

를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공동체 설립의 사명감은 특정 엘리트 계층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했다.⁴¹⁰⁾ 이렇듯 대만 학술회에서는 비관적인 시각이 더 많이 제시되었다.

나. 지역정체성 논의의 등장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가능성

2010년대 대만에서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논의 주제가 다양해지고 논의의 심도도 깊어졌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만 학술회가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원인은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차이와 국가 간 역사적 원한·역사인식의 차이 등 ‘상호 인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한 연구에서는 아세안은 출범 당시부터 ‘정체성’에 기초를 두지 않고 현실주의적인 생존·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 하에 동남아시아 각국은 아세안 설립을 결정하고 동남아시아의 안정 유지에 힘썼다고 지적한다. 즉, 아세안 설립은 현실주의를 지역주의의 틀에 집어넣고 현실주의가 강조하는 주권·안전·생존의 개념을 지역주의에 융합시킨 것이라 한다. 따라서 아세안은 출범 당시 강조되었던 것이 바로 불간섭·불개입이었다. 아세안 설립의 사상적 원류는 현실주의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아세안은 공동체 개념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국가 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체성’을 형성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평가했다.⁴¹¹⁾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아세안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점이다. 즉, 동아시아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013년 대만에서 처음으로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통합에서 ‘정체성’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신지역주의는 다음과 같은 서로 연결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첫째 세계화라는 환경 하에 공통된 경제 전략, 둘째 새로운 형태의 문화정체성, 셋째 사회 상호 작용 중 발생하는 공존감이다. 문화정체성 혹은 공존감은 실제적으로 지역정체성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통합은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로 나뉜다고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지리적 단위, 예를 들자면 동북아시아다. 두 번째 단계는 사회단체 혹은 비정부 행위자의 지방·변경을 초월하는 사회 문화 및 경제 관계다. 세 번째 단계는 정부 간의 조직적인 문화·경제·군사 범위의 협력이다. 네 번째 단계는 지역적인 공동 시민 사회를 구비하는 것이다. 즉, 공동의

410) 周百信·李裕民, “東亞區域整合趨勢與我國因應策略,” 『區域與社會發展研究』, 第2期 (2011), pp. 200~201.

411) 陳仲沂, “從區域主義觀點論冷戰結束後歐盟與東協發展歷程之異同,” 『臺灣國際研究季刊』, 第7卷 1期 (2011), p. 188.

사회·정치와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조직 체계다. 다섯 번째 단계가 바로 세계화 의제에 상응하는 지역정체성과 정부구조의 구비다.⁴¹²⁾ 다시 말하자면 지역통합과 지역공동체는 첫 번째 단계부터 다섯 번째 단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완성할 수 있으며, 가장 높은 단계에 지역정체성 형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역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지역통합과 지역공동체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적인 지역정체성은 다른 지역과 구분되어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서양과는 다른 ‘아시아 방식(Asian way)’이다. 아시아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EU와 같은 조직이 없다. 아시아에서는 비정식적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정식적인 제도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비정식적인 네트워크도 지역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비강조적이고 느슨한 점이 아시아적 지역조직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시아적 가치 혹은 유교주의는 서양 문화와 다른 아시아 문화의 특징이다. 그리고 아시아 금융위기 및 기타 지역통합의 발전은 아시아 국가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아시아적 정체성 형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했다. 이렇듯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제도와 문화는 서방 국가들과 차이가 있으니 서방 국가들의 문제처리 방식이 아시아에 게 반드시 적합하다고는 할 수 없다며 아시아적인 정체성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⁴¹³⁾

그리고 같은 해, 중국에서 아시아적 지역정체성이 형성되어 있는가를 분석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중국의 외교연감·국방백피서, 중국공산당대표대회공작보고서[中共黨代表大會工作報告], 중국외교부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된 문장의 점유율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 중국은 아직 아시아적 지역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⁴¹⁴⁾

현재 필자가 발견한 동아시아 지역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위의 두 개가 전부다. 따라서 대만에서는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되기는 했으나 현재까지 논의의 확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다. 문화공동체 논의의 부진과 그 원인

대만에서 문화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무척 부진한 편이다. 대만 국가도서관에서 ‘문화공동체’로 도서를 검색한 결과, 대만에서 출판된 도서는 1건도 없었다. 그 외에 학술회의 논문이 4건 검색되

412) 戴東清, “亞洲區域整合之認同的趨勢與挑戰：以東亞為例,” 『人文社會科學研究』, 第7卷 4期 (2013), p. 2.

413) 위의 글, p. 5.

414) 楊仕樂, “共同體想像? 檢證中國大陸的亞洲區域認同,” 『亞太研究通訊』, 第11期 (2013), pp. 135~155.

었다.⁴¹⁵⁾ 그러나 이 학술회의 논문의 주제는 “벨기에어 민족의 문화공동체 및 행정자치구의 연혁 및 현황”⁴¹⁶⁾, “문화 기술 및 문화 공동체: 기술적 ‘진보’와 어려움에 대한 토론을 포함”⁴¹⁷⁾, “문화공동체의 구축: 대만 원주민 자치정책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⁴¹⁸⁾, “한자문화공동체에서 국민국가: 대만과 베트남의 비교”⁴¹⁹⁾로 본 연구와는 관계성이 낮은 내용이었다. 또한 잡지 논문은 총 5편 검색되었다.⁴²⁰⁾ 그 주제는 “한전불교(漢傳佛教) 경전 및 동아시아문화공동체의 형성”⁴²¹⁾, “국화(國畫) 폐지 후—전후 대만의 수묵화 ‘동아시아공동체’ 사상의 형성”⁴²²⁾, “벨기에 다문화 정책의 발전 및 변혁”⁴²³⁾, “한자문화공동체의 해체: 대만과 베트남의 비교”⁴²⁴⁾, “21세기의 아시아 및 교육-‘동남아 문화공동체’의 제창”⁴²⁵⁾이다. 그리고 석·박사 논문은 1건도 검색되지 않았다.⁴²⁶⁾ 위의 연구 중 본 연구와 그나마 관계가 있는 것은 “한자문화공동체에서 국민국가: 대만과 베트남의 비교”와 “한자문화공동체의 해체: 대만과 베트남의 비교”인데 이 두 논문은 모두 문화공동체를 앞으로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가 아닌, 한자문화공동체가 해체되었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이렇듯 대만에서 문화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논의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동아시아문화공동체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공동체에 관한 연구도 거의 없다. 그러나 동아시아문화공동체의 논의가 대만에 수입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백영서의 “동아시아 지역 질서: 제국을 넘어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해”⁴²⁷⁾와 “동아시아 인식 공동체 형성에 관한 호

415) 대만 국가도서관 소장목록검색시스템을 이용해 ‘문화공동체[文化共同體]’로 검색한 결과, 총 4개의 학술회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이 검색에서는 출간 기간을 한정하지 않았다. ‘국가도서관 소장목록시스템,’ <<http://alweb.ncl.edu.tw/F?func=find-b-0>> 참조. (검색일: 2019.2.17.).

416) 廖立文, “比利時語族文化共同體與行政自治區之演變與現況,” 『各國語言政策學術研討會論文集』, (2002), pp. 34~376.

417) 麻國慶, “文化的技術與文化共同體: 兼論技術的「進步」與困惑,” 『科技發展與人文重建研討會論文集』, (2002), pp. 43~54.

418) 高德義, “文化共同體的建構: 臺灣原住民實行自治的政策可行性分析,” 『中華民國八十三年全國文藝季原住民文化會議論文-原住民與當代政治』, (1994).

419) 蔣為文, “從漢字文化共同體到民族國家: 台灣和越南之比較研究,” 『2006年台灣的東南亞區域研究年度論文研討會論文集』, (2006).

420) 대만 국가도서관 ‘대만잡지논문검색시스템’에서 출간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문화공동체[文化共同體]’로 논문 제목과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총 5건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국가도서관 대만잡지논문검색시스템 <<http://readopac.ncl.edu.tw/ncl/journal/>> 참조. (검색일: 2019.2.17.).

421) 萬金川講, “漢傳佛教經典與東亞文化共同體的形成,” 『佛光學報』, 第2卷 2期 (2016), pp. 17~25.

422) 白適銘, “廢除「國畫」之後—戰後臺灣水墨畫「東亞文化共同體」思想之形成,” 『臺灣美術』, 第104期 (2016), pp. 56~69.

423) 關河嘉, “比利時多元文化政策的發展與變革,” 『教育資料集刊』, 第36期 (2007), pp. 271~284.

424) 蔣為文, “漢字文化共同體之解構: 臺灣ham越南ê比較,” 『臺灣史學雜誌』, 第2期 (2006), pp. 35~55.

425) 名越二荒之助, “二十一世紀的亞洲與教育—「東南亞文化共同體」之提倡,” 『臺灣教育』, 第505期 (1993), pp. 10~12.

426) 대만 국가도서관 ‘대만박석사논문검색시스템[臺灣博碩士論文知識加值系統]’에서 출간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문화공동체[文化共同體]’로 논문제목 검색한 결과, 1건도 검색되지 않았다. ‘대만 박석사 논문검색 시스템’ <<https://ndltd.ncl.edu.tw/cgi-bin/gsc32/gswweb.cgi/ccd=RvtUns/webmge?mode=basic>> 참조. (검색일: 2019.2.17.).

427) 白永瑞, “東亞地域秩序: 超越帝國, 走向東亞共同體,” 『思想』, 第3期 (2006), pp. 129~150.

소”⁴²⁸⁾라는 글이 소개되었다. 백낙청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및 한반도 분단 체제”⁴²⁹⁾라는 글도 대만에 소개되었다.

백영서와 백낙청의 글을 위주로 주로 한국에서 다뤄지는 동아시아문화공동체의 의제가 대만으로 수입되어, 대만의 학술잡지인 『대만사회연구계간(臺灣社會研究季刊)』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공동체에 관심을 보였으나,⁴³⁰⁾ 대만에서 논의를 확산시키지는 못했다.

대만에서 동아시아문화공동체가 전개되지 못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유엔 탈퇴 후 국제적 고립과 ‘하나의 중국’ 원칙

한국전쟁 후 동아시아 냉전체제가 확립되자, 대만은 미국의 지시로 UN의 ‘중국대표권’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안전이사회의 자리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미국은 대중국정책에 있어 중국 정권을 파멸시키겠다는 방침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또한 핵실험 성공 후 중국의 국제적인 지위가 향상되었다. 1969년 닉슨 대통령 취임 후 중국에 대해 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전환은 UN의 ‘중국대표권’ 문제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70년 캐나다가 중국 정권을 승인하고 중화민국과 단교했다. 1970년 UN 대회가 진행되는 기간 미국은 키신저의 주도하에 중국 정권과 화해를 진행해 간다. 1971년 7월 닉슨은 중국 방문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정책의 변화는 중화민국의 ‘중국대표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미국이 중국 태도의 변화는 UN에 참여한 다른 국가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아프리카 등의 신생국가들은 보편적인 원칙에 의해 중국대륙의 토지를 점령한 중국을 ‘중국’ 정권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결국 1971년 10월 UN 회의에서 ‘중국대표권’이 중화인민공화국에게 넘어가자, 대만은 UN 탈퇴를 선언했다.⁴³¹⁾

UN 탈퇴 후 대만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다. 중국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하면서 ‘하나의 중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 국민당 정부도 고수해 온 원칙이다. 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중국’을 대표하는 정권은 자신뿐임을 주장해 왔고, 국제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두고 치열한 싸움을 해 왔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UN의 ‘중국대표권’이다. 1971년 10월 이전에는 UN에서 합법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정권이라 인정받은 것은 중화민국이었고, 그 이후는 중화

428) 白永瑞, “關於形成東亞認識共同體的呼籲·記“東亞的連帶與雜誌的作用”國際學術會議,” 『臺灣社會研究季刊』, 第63期 (2006), pp. 219~225.

429) 白樂晴著·黃文俊譯, “東亞共同體構想與韓半島分斷體制,” 『臺灣社會研究季刊』, 第81期 (2011), pp. 385~389.

430) 沈松僑, “和解的東亞共同體如何可能?,” 『臺灣社會研究季刊』, 第71期 (2008), pp. 281~286.

431) UN ‘중국대표권’의 자세한 내용은 王恩美, “1971年「中國代表權」問題與韓國政府「中國政策」的轉變,” 『國立政治大學歷史學報』, 第36期 (2011.11) 참조.

인민공화국인 것이다. 대만은 ‘하나의 중국’ 싸움에서 패배했으며, 그 결과가 UN의 자진 탈퇴였고, ‘하나의 중국’의 불이익의 감당이였다.

대만은 현재 UN 회원국이 아니며,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대만과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는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을 수 없다. 대만은 1972년 일본, 1979년 미국, 1992년 한국과 단교되었다. 2019년 3월 기준 대만과 정식으로 수교한 국가는 17개국으로 중남미, 오세아니아의 약소국가들이 대부분이다.⁴³²⁾ 또한 WHO, 유네스코 등 대부분의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못하며 국제기구에 참가하더라도 ‘중화민국’이라는 국가명으로 참가할 수 없다. 대만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타이핑진마 개별 관세 지역(臺澎金馬個別關稅領域)’이라는 이름으로 가입했으며 올림픽에는 ‘차이니스타이페이[中華臺北]’라는 이름으로 참가하며 올림픽에서는 대만 국기도 사용할 수 없다. UN 탈퇴 후 대만은 국제적으로 국가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대만 UN 탈퇴 후,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며 다른 나라들이 그 원칙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 대만이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만 자신도 그 지역공동체의 가입국이 되어야 했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에 반대를 무릅쓰고 대만의 가입을 승인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했다.

그로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한국·일본과 동남아시아 등 모든 대만 주변 국가들이 지역통합 조직에 가입해 지역통합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혼자만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지역통합 혹은 지역공동체 형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만은 그저 방관자일 뿐이었다. 대만은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형성에 있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영향을 끼치기 힘들었다. 따라서 대만 내부에서는 동아시아를 하나의 단위로 문화적인 면에서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동아시아문화공동체’에 대한 토론을 전개하기 힘들었다.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공동체 형성 범위에 자신이 참여 못하는 상황에서 문화적 공동체의 논의 또한 확산되기 힘들었다. 실질적으로 대만이 동아시아를 단위로 하는 공동체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동아시아문화공동체의 논의 또한 자신이 아닌 남의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2) 네이션 빌딩의 미완성

그 외에 중요한 원인으로는 대만의 국민국가가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

432) 中華民國外交部邦交國, 〈<http://www.mofa.gov.tw/AlliesIndex.aspx?n=0757912EB2F1C601&sms=26470E539B6FA395>〉 참조. (검색일 : 2019.3.8.).

한다. 즉, 대만의 네이션 빌딩(Nation-Building)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도 대만 국내에서 동아시아문화공동체의 논의가 확산되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라 생각한다. 대만도 한국과 같은 시기인 1987년 계엄령을 해제하면서 민주주의 사회로 전환을 시작한다. 권위주의 독재 정권일 때는 대만 국민들이 지닌 다양한 배경은 무시되었고 ‘중국 민족주의’를 통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강압적으로 국민통합을 만들어 냈다. 대만에서는 ‘단일 국민’으로 형성되었다는 담론이 주류를 이루었다.⁴³³⁾

그러나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대만 국민들이 지닌 다양한 배경은 존중 받아야 마땅해졌다. 민주화 후, 대만 국민은 4개의 에스닉 그룹으로 형성되었다고 보는 게 정설이 되었다. ① 대만 ‘원주민’, ② 17~19세기에 중국 복건성(福建省) 남쪽에서 다량으로 대만으로 이주한 ‘민남인(閩南人)’⁴³⁴⁾, ③ 17~19세기에 중국 본토에서 이주한 ‘객가인(客家人)’, ④ 1949년 중국국민당이 국공내전에 패배한 후 장제스(蔣介石)와 같이 대만으로 이주한 ‘외성인(外省人)’이다.⁴³⁵⁾ ‘민남인(閩南人)’과 ‘객가인(客家人)’은 ‘본성인(本省人)’으로 불리며 ‘외성인(外省人)’과는 대립적인 개념을 형성한다. 황쎬판(黃宣範)의 연구에 의하면 4개의 에스닉 그룹 중 ‘민남인’의 인구가 가장 많고 전체 인구의 약 73.3%를 차지한다. 그 외 ‘외성인’은 13%, ‘객가인’은 12%, ‘원주민’은 1.7%를 차지한다.⁴³⁶⁾

민주화 후, 대만에서는 대만적 가치와 대만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대만 민족주의’가 형성되어 확산되어 갔다. 대만적 가치와 대만의 정체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에스닉 그룹은 인구가 가장 많은 ‘민남인’이다. 이로 인해 ‘중국적’ 가치와 정체성이 배타당하게 되는데, ‘객가인’과 ‘외성인’들은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며 ‘중국적’ 가치와 정체성을 옹호하게 된다. ‘대만 민족주의’는 ‘중국 민족주의’에 배타성을 지니고 있고, 양자는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4개의 에스닉 그룹의 국가정체성은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해 있다. ‘민남인’은 대만을 범위로 한 국가정체성을 나타내지만 ‘객가인’과 ‘외성인’은 대만과 중국을 포함한 국가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대만의 4개의 에스닉 그룹의 국가정체성은 하나로 통일되지 못했고 대만의 국민국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네이션 빌딩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대만에서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려면 우선 국내의 네이션 빌딩을 완성해야

433) 黃智慧, “台灣的日本觀解析(1987-): 族群與歷史交錯下的複雜現象,” 『思想』, 第14期 (2010), p. 64.

434) 민남(閩南)은 중국 복건성의 남부를 일컫는 말이다.

435) 王甫昌, 『當代台灣社會的族群想像』(台北: 群學出版, 2003), p. 57; 黃宣範, 『語言、社會與族群意識—台灣語言社會學研究』(台北: 文鶴出版, 1995), p. 20.

436) 黃宣範, 『語言、社會與族群意識—台灣語言社會學研究』, pp. 20~21.

한다. 네이션 빌딩이 완성되지 않은 대만에서의 공동체 논의는 대만 자국 국민의 운명공동체, 생명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우선시되었다. 대만은 국가를 초월한 인식 혹은 정체성 형성보다도 국민의식의 형성과 통합이 우선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국가적 네이션 빌딩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를 초월한 동아시아공동체 논의는 전개되기 힘들었다.

각기 다른 출신 배경을 지닌 4개의 에스닉 그룹은 중국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 대만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남인’은 중국을 경계하고 대만의 자주와 독립을 강조한다. 대만을 억압하는 가장 큰 세력이 바로 중국이라고 보고 중국에는 적대적이다. 그러나 ‘객가인’과 ‘외성인’은 중국에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대만의 국가 발전에서 중국을 배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중국에 대한 각기 다른 감정들은 대만이 동아시아공동체 형성과 그 논의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동아시아공동체에서 중국은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일원이었다. 이는 대만이 동아시아공동체의 일원으로 참가하는데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대만에서는 중국과 하나를 형성하는 민감한 주제인 동아시아문화공동체 논의는 확산되기 힘들었다.

3) 일본에 대한 통일되지 않은 감정

2018년 ‘재단법인대만민기기금회(財團法人台灣民意基金會)’에서 1,07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대만 국민이 가장 호감을 갖는 나라 1위가 싱가포르(88.2%)고, 2위가 일본(84.6%)이다.⁴³⁷⁾ 이렇듯 대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일본에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만은 외부로부터 ‘친일’국가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4개의 에스닉 그룹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차이가 있고 모순적이다. 즉, 4개의 에스닉 그룹은 서로 분열된 일본관을 가지고 있다.

일제 식민지시기를 경험한 ‘민남인’ 세대는 일본 통치의 억압과 차별로 중화민국에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었다. 1945년 일본 패전 후, 대만인들은 중화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며 열렬히 환영했다. 그러나 1947년 228사건을 경험한 후 중화민국이라는 ‘조국’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렸다. 국민당(國民黨)정권은 일본 식민 통치의 권력자와 별 차이가 없었다. 독재 정권하에서 대만인은 억압과 차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일본 식민 통치에 불만을 품고 ‘조국’의 힘으로 일본에게 대항하려 했으나 ‘조국’의 기대가 절망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한 ‘민남인’들은 국민당 통치를 일본보다 더 폭력적이고 대만인을 착취하는 ‘외래정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⁴³⁸⁾ 뿐만 아니라 국민당

437) 財團法人台灣民意基金會, <<https://www.tpof.org/%E5%9C%96%E8%A1%A8%E5%88%86%E6%9E%90/2018%E5%8F%B0%E7%81%A3%E4%BA%BA%E6%9C%80%E5%96%9C%E6%84%9B%E7%9A%84%E5%9C%8B%E5%AE%B6%EF%BC%882018%E5%B9%B4%E6%9C%8817%E6%97%A5%EF%BC%89/>> 참조. (검색일 : 2019.3.10.).

438) 黃智慧, “台灣의日本觀解析(1987-) : 族群與歷史交錯下的複雜現象,” pp. 69~70.

정권은 일본 식민 통치의 비교 대상이 되었다. 국민당정권의 장기간의 ‘배색테러’를 겪은 ‘민남인’들은 국민당정권을 일본 식민 통치보다 더 억압적이고 공포스러운 정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민남인’들의 일본 통치의 경험을 회상할 때 ‘피억압의 감정’은 상대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감각이 되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 혹은 ‘착취를 당했다’는 감각은 없어졌다.⁴³⁹⁾ 따라서 일제 식민지시기를 경험한 ‘민남인’ 세대는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 식민 통치를 경험한 ‘객가인’ 세대는 ‘민남인’에 비해 ‘고향(home land)’에 집착이 강했다. 228사건 ‘객가인’들에게 피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민남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었다. 당시 고유의 문화와 ‘고향 의식’을 기반으로 형성된 ‘중국 민족주의’를 강하게 갖고 있던 ‘객가인’들은 228사건을 겪은 후에도 ‘중국 민족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⁴⁴⁰⁾ 일본 식민 통치를 경험한 ‘객가인’ 세대는 여전히 ‘중국’을 ‘조국’으로 인식하며 일본에 대한 감정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국민정신총동원운동(1937)’이 전개되고 ‘국가총동원법(1938)’이 공포되면서 대만이 전시체제에 돌입하자 ‘원주민’들의 ‘일본화’가 가속되었다. 남양전쟁에서 일본인과 생사를 같이 한 경험은 1945년 전후 ‘원주민’들의 일본관에 큰 영향을 끼쳤다.⁴⁴¹⁾ 일본 식민 통치를 경험한 ‘원주민’ 세대는 일본에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8년에 걸친 중일전쟁으로 약 300만 명의 사상자(그 중 사망자는 약 100만 명)가 발생했다. 그리고 중일전쟁은 중국인이 아편전쟁 이후 100여년 만에 승리한 전쟁이라 할 수 있다. 중일전쟁은 중국인의 ‘중국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중국 민족주의 의식’이 강한 ‘외성인’은 중일전쟁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반일’ 감정이 강하다. 그리고 1970년부터 1972년까지 대만에서는 일본과 영토 분쟁인 ‘조어도 보호 운동’이 발생한다. 또한 1972년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대만과는 단교한다. 이로 인해 ‘외성인’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더욱 악화되었다.⁴⁴²⁾

종합하자면 ‘민남인’과 ‘원주민’은 일본에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객가인’과 ‘외성인’은 일본에 비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에스닉 그룹의 역사적인 경험은 일본에 대한 감정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대만 젊은 세대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또 다르다. 서로 다른 에스닉 그룹 간의 결혼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감정을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439) 蔡錦堂, “跨越日本與國民黨統治年代的台灣人之日本觀,” 『台灣文獻』, 第58卷 第3期 (2007), pp. 7~8.

440) 黃智慧, “台灣的日本觀解析(1987-): 族群與歷史交錯下的複雜現象,” pp. 73~78.

441) 위의 글, pp. 84~87.

442) 위의 글, pp. 88~90.

하기보다는 만화·에니메이션·영화·소설·게임·드라마 등의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으며, 여행 등의 경험도 큰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젊은 세대들은 나이 많은 세대에 비해 일본에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젊은 세대라고 해서 에스닉 그룹 간의 일본에 대한 감정 차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만이 동아시아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에스닉 그룹간의 일본에 대한 감정 차이를 극복해야만 한다.

4) ‘반한’ 감정과 한국과의 경쟁

2018년 ‘재단법인대만민지기금회’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호감도는 6위로 58.4%를 차지했다. 그러나 한국의 혐오도는 북한(70.9%), 필리핀(52.9%), 중국(43.9%), 한국(33.8%)으로 4위를 기록했다.⁴⁴³⁾ 대만인 10명 중 3~4명은 한국을 싫어한다는 뜻이다. Liu, Chang-De(劉昌德)의 연구에 의하면 대만의 ‘반한’ 감정은 1980년대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1980년에서 1990년의 ‘반한’ 감정은 주로 정부 측 보도 혹은 정치 인물의 발언 등을 위주로 형성되었으며, 정치적 성향이 강했다. 예를 들어 1984년 한국에서 개최된 아시아 청년 농구대회에서 한국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대만 선수단의 국기 소지를 금지했다. 이로 인해 대만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아량을 떨기 위해 대만을 멸시했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 여론 형성을 주도한 것은 정부 및 주한국대사 등 정치 인물이었다.⁴⁴⁴⁾

1992년 한국과의 단교는 대만의 ‘반한’ 감정을 더욱 강화시켰다. 한국은 UN에 가입한 다음 해인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과 정식외교를 수립하고 대만과 단교했다. 당시 대만에는 수교국이 많지 않았고, 한국은 그 중 가장 중요한 수교국이었다. 그리고 한국은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 냉전체제 속에서 반공 최전선 국가였기 때문에 ‘형제의 나라’라고 불렸다. 따라서 한국의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수교는 대만인에게 커다란 배신감을 안겨줬다. 또한 한국 정부는 단교 후 24시간만에 대만대사관원을 출국시켰으며 대만 정부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17억 달러에 달하는 대만대사관을 무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게 넘겨줬다. 한국의 이러한 행동에 대만인들은 분노했다.⁴⁴⁵⁾

또한 대만은 한국과 같이 무역에 치중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경제 성장으로

443) 財團法人台灣民意基金會, <<https://www.tpof.org/%E5%9C%96%E8%A1%A8%E5%88%86%E6%9E%90/2018%E5%8F%B0%E7%81%A3%E4%BA%BA%E6%9C%80%E5%96%9C%E6%84%9B%E7%9A%84%E5%9C%8B%E5%AE%B6%E5%BC%882018%E5%B9%B4%E6%9C%8817%E6%97%A5%E5%BC%89/>> 참조. (검색일: 2019.3.10.).

444) 劉昌德, “國族主義的娛樂化與經濟邏輯: 臺灣媒體運動報導中「仇韓」與「仇中」言論的演變,” 『新聞學研究』, 第122期 (2015), pp. 96, 100~101, 103~107.

445) 鍾亞芳, “大眾傳播媒介如何建構國族意識—以2010年亞運楊淑君事件報導為例,” 淡江大學大眾傳播學系傳播碩士班碩士論文, (2014), p. 68.

인해 대만은 한국을 경쟁자로 인식하게 된 것도 '반한' 감정을 부추겼다. 1990년대만 해도 대만은 한국에 대해 경제적으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대만은 한국을 대만을 추격하는 경쟁자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 외에 대만의 '대국주의(大國主義)'도 대만의 '반한' 감정 형성에 일조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여기서 '대국주의'는 대만을 '대국'으로, 한국을 '소국'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외성인'들에게서 이러한 '대국주의' 성향이 나타난다. 중국대륙에서 온 '외성인'들은 중화민국이 비록 대만으로 정권을 이전했으나 중화민국은 여전히 청나라 정권을 이어받은 중국의 정통정권이라는 인식하에 청나라 시기의 '종속국'이었던 한국을 '소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화 전 대만의 총통과 정부관계자는 대부분 다 '외성인'이었기 때문에 국민당정부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한국에 대해 '대국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민주화 전 대만의 역사 교육은 '중국 민족주의'에 근거해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 전에 교육을 받은 세대는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에스닉 그룹의 차이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대국주의' 성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만의 '대국주의'는 한국을 멸시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대만을 '배신'하고 중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경제적 경쟁자로 부상하자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만도 한류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2000년 7월 대만 케이블 채널에서 '불꽃'이 방영되어 대만 시청자의 관심과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2001년 3월 '가을날의 동화'는 한국 드라마의 매력을 대만 시청자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2003년의 '겨울연가'와 2004년의 '대장금'은 대만에서 열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 후 K-POP이 유행하게 되었고, 대만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가 늘어났으며, 한국의 의류·화장품·핸드폰·음식 등도 대만에서 유행하기 시작한다.⁴⁴⁶⁾ 그러나 이러한 한류의 유행도 대만인의 '반한' 감정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한국이 대만보다 먼저 1인당 명목국내총생산(GDP)이 2만 달러를 돌파한 2006년 대만은 큰 충격에 빠졌다. 대만 신문 등 미디어에서 대만은 아시아 4소룡(亞洲4小龍)의 머리에서 꼬리로 전락해 빛을 잃은 지 오래라고 하며 한국은 이미 대만을 추월해 '선진국대열'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대만 미디어의 보도는 대만의 경제적 지위가 하락한 것 대한 실망감뿐만 아니라, 한국이 경제적으로 대만을 추월한 것에 대한 원통함이 반영되어 있다.⁴⁴⁷⁾ 대만인의 이러한 감정은 '대국주의'에 의한 한국 멸시관에서 의거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446) 郭秋雯, “韓流對台灣的影響及其因應對策,” 『WTO研究』, 第18期 (2011), p. 130.

447) 王恩美, “대만의 선진국 담론 활용 전략과 한·중·일 인식(2007~2017),” 『중국근현대사연구』, 제79집 (2018), p. 223.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반한’ 감정으로 이어지기 쉬웠다.

2010년에 발생한 ‘양수권(楊淑君) 사건’은 대만의 ‘반한’ 감정의 최고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11월 17일 양수권은 대만 태권도 선수로 중국 광주(廣州)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다. 양수권은 9-0으로 경기를 리드하고 있었는데 중국기술위원 차오레이(趙磊)가 양수권의 발뒤꿈치에 장착한 전자보호대가 이상반응을 보인다고 알리자 경기의 심판이었던 한국계 필리핀 국적 심판은 경기를 중단하고 조사한 결과 양수권의 전자보호대의 반응 칩에 규정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세계 태권도연맹 부비서장인 양진석(梁振錫)은 양수권에게 전자 반응 칩을 규정위반이라고 0:12패를 선포했다.⁴⁴⁸⁾ 양수권의 패배로 가장 득을 본 나라는 중국이었다. 중국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승 후보인 양수권을 떨어뜨리려는 중국 측의 음모였다는 말도 있었다. 그러나 ‘양수권 사건’이 불러일으킨 것은 심각한 ‘반한’이었다. 경기의 심판이 한국계 필리핀 국적이었고, 최종적으로 양수권의 패배를 선언한 양진석 역시 한국인이었기 때문이다. 대만의 각종 신문과 방송 매체는 연일 뜨겁게 한국 비판했다.⁴⁴⁹⁾

이러한 대만 ‘양수권 사건’이 불러일으킨 사회적 ‘반한’ 분위기는 신문과 방송 매체에 의해 선도되는 경향이 강했다. 대만의 신문과 방송 매체의 종사자들 중에는 ‘외성인’이 많았고, ‘외성인’은 ‘민남인’보다 ‘중국 민족주의’가 강했으며 ‘대국주의’ 성향도 강했다. 따라서 대만의 신문과 방송 매체의 종사자들 중 다수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도 대만에서 ‘반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대만이 한국과 동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반한’ 감정을 완화시키고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448) 鍾亞芳, “大眾傳播媒介如何建構國族意識—以2010年亞運楊淑君事件報導為例,” p. 6.

449) 신문과 방송에 등장한 보도 내용은 鍾亞芳, “大眾傳播媒介如何建構國族意識—以2010年亞運楊淑君事件報導為例,” pp. 69~77; 劉昌德, “國族主義的娛樂化與經濟邏輯：臺灣媒體運動報導中「仇韓」與「仇中」言論的演變,” pp. 105~109참조.

2. 지역·문화공동체 논의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이론적 논의

대만에서 진행된 지역·문화공동체에 관한 연구의 중점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대만의 지역통합에 대한 대응과 전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만이 지역통합에 참여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소는 중국이다. 대만은 중국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에서 소외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지켜만 볼 수만은 없었다. 따라서 대만의 지역통합에 대한 대응과 전략에 관해서는 중국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중점이 맞춰졌다. 주로 세 가지 방법·전략이 언급되었다.

첫째, 중국을 피해서 간접적으로 지역통합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양자간의 무역을 활성화해 아세안 10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이 제시되었다. 해외에 진출한 대만 기업들이 중국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도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경제·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동남아시아에 대만 기업을 지원해 줄 기구를 설립해 '남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⁵⁰⁾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대만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게 하려면 대만 국내 시장을 더욱 개방해 경제적 유인(誘因)을 제공해야 한다. 만일 상대방에게 더 많은 무역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대만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다.⁴⁵¹⁾

둘째, 대만이 지역통합에서 주변화되는 핵심적인 원인이 중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중국과 안정적인 경제·무역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다.⁴⁵²⁾ 대만은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라는 대세 속에서 중국과 특수한 정치적 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저지당하고 있다. 중국은 각국에게 대만과의 무역협정 체결은 중국의 내정 간섭과도 같기 때문에 그런 의향이 있는 나라는 중국의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명확히 선언했다. 대만과 경제·무역관계가 밀접한 동아시아 국가, 예를 들자면 일본과 싱가포르의 대만과의 경제·무역적인 파트너 관계를 강화하고 싶지만 중국의 눈치를 보며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만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서로 언어가 통하며 생활습관도 비슷하다. 그리고 서로의 사회 경제 구조에 익숙하다. 이러한 점들을 활용해 대만이 국제적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문호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위협은 중국이

450) 孫國祥, “新區域主義及其對台灣發展的影響,” 『全球政治評論』, 第3期 (2003), pp. 98~101.

451) 劉大年, “全球區域整合下的台灣思維,” 『經濟前瞻』, 第113期 (2007), p. 57.

452) 王曉麟, “東亞區域整合對台灣經濟發展之困境與因應策略,” 『東亞論壇』, 第456期 (2007), p. 36; 李裕民, “東亞區域整合趨勢與我國因應策略,” 『區域與社會發展研究』, 第2期 (2011), p. 204.

독재국가이기 때문이다. 대만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우선 중국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대만은 민주 국가들에게 대만의 입장을 표명하고 중국의 민주화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⁴⁵³⁾

셋째, 미국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기 전에는 우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앞장서서 시범을 보이는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미국이 대만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대만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대만은 중국의 정치 억압을 완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만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 요소를 극복해야 한다. 첫 번째는 중국으로부터의 방해로 어떻게 극복하느냐이다. 두 번째는 미국을 설득시킬 자유무역협정 필요성 논증이 부족하다. 세 번째는 쌀 수입 개방·지적 재산 소유권 보호·약품의 가격설정 등 자유무역 체결로 무역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지역 대전략에 부합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주도할 수 있는 구상이 부족하다.⁴⁵⁴⁾ 이렇듯 대만이 미국을 이용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 또한 결코 쉽지는 않다. 이를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다.

2) 지역통합·공동체 형성에 있어 중국의 역할

1997년 3월 쟁저민(江澤民)이 ‘신안전관’을 제시한 후, 2002년 11월 중공16대 정치보고에서 신안전관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서로 신뢰하고 이를 공동으로 유지함으로 서로의 신뢰와 이익, 평등과 협조를 기반으로 한 신안전관을 수립해야 한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며 무력 혹은 무력위협에 호소하지 않으며 각종 형식의 패권주의와 강권(強權)정치를 반대한다. 중국은 영원히 패권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확장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⁴⁵⁵⁾ 1990년대 후반 중국은 ‘신안전관’을 제시함으로써 대외정책의 전환을 시사했다. 이는 피동적인 참여에서 주동적인 참여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중국의 주장을 표현하며 중국의 국제체제의 영향력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005년 4월 후진타오(胡錦濤)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거행된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융합세계[和諧世界]’ 수립을 주장했다. 2007년 10월 후진타오는 중공17대 정치보고에서 “우리는 각국 사람들이 손을 잡고 평화와 공동의 번영이 지속되는 융합세계를 추진하고 건설할 것을 노력할 것을 주장한다”라고 밝혔다. 그 후 ‘융합세계’

453) 王曉麟, “東亞區域整合對台灣經濟發展之困境與因應策略,” pp. 35~39.

454) 위의 글, pp. 35~37.

455) 胡聲平, “中共對東亞區域整合的認知--權力觀點,” 『亞太研究通訊』, 第11期 (2013), p. 88.

는 중국 대외정책의 기본 사상이 되었다. ‘융합세계’는 ‘신안전관’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⁴⁵⁶⁾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이 주장하는 ‘신뢰, 평등, 협조와 패권주의 반대’가 동아시아 지역통합·공동체 형성에 있어 정말로 실현되었는지를 살펴본다면 대만에서는 긍정과 부정 두 가지 견해가 제시되었다. 즉 긍정적인 견해는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통합·공동체 형성에 있어 ‘신뢰, 평등, 협조와 패권주의 반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부정적인 견해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긍정적인 견해로는, 1997년 중국은 아세안 지역 포럼에서 처음으로 지역다방면의 안전회담에 참여했고, 그 후 중국은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국가와 각종 협력관계를 만들어 갔다. 정치적으로는 고위 지배 계층에서 상호방문이 빈번해졌고, 2002년에는 중국과 아세안이 ‘남해행위선언’을 체결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해 분쟁을 해결해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했다. 2003년에는 ‘동남아시아 우호 협력 조약’을 체결해 중국은 아세안 외에 처음으로 이 조약을 체결한 대국이 되었다. 동시에 중국은 ‘중국과 아세안이 평화와 번영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향한 연합 선언’을 체결했다.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국가 연맹과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것이다.⁴⁵⁷⁾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2000년에는 주동적으로 ‘아세안+3’을 주장했으며, 2002년에는 ‘중국-아세안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처음으로 ‘아세안+1’을 형성해 일본과 한국보다 먼저 이 계획을 실현에 옮겼다. 한국에 제시한 아세안 현 구조에서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공동체’ 건의도 찬성했다. 한국·중국·일본과의 영토 분쟁과 충돌에도 한·중·일 서로 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이러한 예를 들어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은 지역통합의 인식과 실제 행동에 있어 언행이 일치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국은 서로의 이익 추구의 이념에서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참여할 것이라 보고 있다. 그리고 제도 설립 후에는 중국은 그 운영 규칙을 준수할 것이며 국제 규범을 받아들일 것이라 보고 있다.⁴⁵⁸⁾ 즉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통합·공동체에서 ‘신뢰, 평등, 협조와 패권주의 반대’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견해에서는 영토분쟁과 주권을 예를 들어 ‘신뢰, 평등, 협조와 패권주의 반대’의 역할을 해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07년 이후부터 중국은 동해와 남해 영토와 주권 분쟁에 있어 날이 갈수록 강경한 입장과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융합세계’의 이념과 목적에 반대된

456) 위의 글, pp. 88~89.

457) 馬祥佑, “中國對亞洲區域整合的認知與作為——制度觀點的檢證與分析,” 『亞太研究通訊』, 第11期 (2013), pp. 124~125.

458) 위의 글, pp. 124~127.

다고 아니할 수 없다. 중국의 경제와 군사력의 증강이 중국의 대외 행위 패턴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주변 국제 질서에도 변화를 끼쳤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꺾기된 싹은 ‘수정주의 강권’이라 할 수 있다. ‘수정주의 강권’은 기존 국제체제 패권에 도전자로 ‘현상유지 강권’이 아니며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리고 2013년부터 중국은 ‘지역 전면경제파트너관계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를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주도권을 쟁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역 통합에 참여해 각국의 중국 주도지역의 ‘정체성’을 촉진한다는 것은 최종 목표가 여전히 패권 취득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통합에서 미국과 일본의 경쟁을 피할 수 없으며,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되고 중국이 꺾기해야만 동아시아의 평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견해가 중국내부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⁴⁵⁹⁾ 이렇듯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통합·공동체에서 ‘실패, 평등, 협조와 패권주의 반대’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

3) 지역통합·공동체 형성과 양안관계의 발전

지역통합에 있어 양안관계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대만이 중국과 어떠한 양안관계를 만들어야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지역통합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만은 통합의 압력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가장 문제인 것은 역시 주권 지위의 분쟁에서 발생한 주변화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참여할 수 없다면 지구화적인 정치 경제 발전 하에 대만의 정치, 경제와 무역 지위는 구축효과에 의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다. 양안관계에 있어 대만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현상유지’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된 대만의 대 중국정책기관인 ‘대륙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만 사람들은 ‘대만독립’, ‘중국과 통일’, ‘현상유지’의 선택 중에서 ‘현상유지’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현상유지’를 선택한 대만 사람은 2008년에는 91.1%, 2009년에는 84.7%, 2010년에는 87.3%, 2011년에는 87.2%, 2012년에는 83.7%, 2013년에는 84.5%에 달했다.⁴⁶⁰⁾ 2008년에 비해 7%가량 낮아지기는 했지만 대만 사람들의 ‘현상유지’에 대한 지지도는 압도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양안관계에 있어 최저 허용한도이기도 하고 본질적인 면에서도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의 중국’이라는 주권이 견지다. 중국은 지금까지 대만이 주권을 쟁취하려고 하는

459) 胡聲平, “中共對東亞區域整合的認知--權力觀點,” pp. 87, 92~97.

460) 沈有忠, “東亞區域整合下的兩岸關係發展,” 『展望與探索』, 第12卷1期 (2014), pp. 77~78.

국제적인 공간에서는 첩판과 같이 변함없이 제제를 가했다. 그러나 민간 성질적인 경제·문화 교류에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지역통합의 구조 속에서 양안관계는 대만과는 협력 파트너를 형성한다면 중국은 미국·일본 등 다각적 외교정책의 거래요소로 대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대만은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다. 대만이 동아시아 의제에서 자주권을 획득한다면 대만 정책의 ‘하나의 중국’의 한도를 넘어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⁴⁶¹⁾

이러한 대만과 중국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양안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해 Shen, Yu-Chung(沈有忠)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지역통합의 추세 속에서 대만은 주변화 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이것을 해결할 열쇠는 ‘어떻게 하면 동아시아 국제사회가 대만을 받아들일게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중국이 “대만독립”의 의혹이 없이 대만을 국제사회에 가입시켜주느냐’다. 대만은 독립과 통일 모호성을 유지하며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중국은 대만을 국제사회에 가입시키는 것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만과 중국 사이에 주권 분쟁의 우려가 없다면 중국은 대만과 공동으로 지역통합의 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대만을 이용해 경쟁국가와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중국이 직접 도화선에 오르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로써 중국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신뢰를 하락시키지 않을 수 있다.⁴⁶²⁾

4) 지역정체성과 동아시아공동체 형성

아시아가 전통문화와 조직의 특성을 기초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정체성의 독특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아시아 사람들의 정체성을 단순한 지리적 근접성에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 정체성 및 공동 사회의 이념으로 발전시키기는 쉽지 않다. 지역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고 Day, Dong-Ching(戴東清)은 지적한다. 우선 지역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지역문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은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며 그 중요성은 국가와 같거나 국가를 초월해야 한다. 지도자들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용서하는 기초를 만들어 지역의식을 강화하고 공동의 커뮤니티 아이덴티티를 구축해야 한다. 즉, 위에서 아래로 추진시켜 아래에서 위로의 움직임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⁴⁶³⁾

둘째,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을 구축한다. 지역의 기억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461) 위의 글, pp. 80~81.

462) 위의 글, pp. 79, 81.

463) 戴東清, “亞洲區域整合之認同的趨勢與挑戰：以東亞為例,” p. 8. 아래 글의 내용도 戴東清의 논문을 인용하고 있으며 인용주는 생략한다.

있는데, 개인적 측면과 사회·미디어적 측면이다. 후자는 특정 지역의 사건·사람들·이야기·전설과 형상을 사회적 상호작용과 미디어를 통해서 전환·계승한다. 전자는 개인의 특정 지역에 대한 인식체계로서 사람들의 경험과 기억 사건에 영향을 준다. 만일 한 지역의 사람들이 충분한 공동 기억을 갖게 된다면 공동 기억이 없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구분될 것이며, 지역정체성도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집단기억은 초문화(超文化)적 기억으로도 강화될 수 있는데, 여행·무역과 기타 형식의 문화교류를 통해 초문화적 기억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종교·스포츠·음악·소비문화로도 초문화적 기억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역사교육의 실시도 지역정체성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방법이다. 동아시아의 역사 해석을 둘러싸고 한·중·일 간의 공통적인 역사인식을 만들겠다고 결정한 후에 사실 그 전보다 더 많은 갈등을 불러왔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공통 역사인식의 중요성을 일반 시민들도 인식하게 되었다. 역사 교육은 지역정체성을 구축하는데 있어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학교에서 실시되는 의무교육의 역사교육은 지역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넷째, 지역정체성은 지역의식을 통해 구축할 수 있다. 지역의식은 한 지역의 자연경관·문화와 주민의 특성을 말한다. 그리고 이 특성은 다른 지역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정체성은 지역 분업·지역 시장·관리 및 정치지역화, 즉 지역의식을 통해 구축할 수 있다. 우선 지역의식이 만들어져야 지역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다. 만일 한 지역의 민중이 지역의식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면 지역정체성은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지역정체성을 구축하기는 쉽지 않다. 제도화 되지 않고 법적 강제조치도 없는 '아세안 방식'이 정말로 지역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을 지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아세안 국가들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정치 체제는 공통 의식을 형성하는데 장애가 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자면 미얀마 정부의 아웅산수지에 대한 처분으로 아세안 국가들은 미얀마를 아세안에서 축출하려했던 적이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내에는 많은 국경과 영토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 국경과 영토 분쟁은 동아시아 지역정체성 구축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역할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자신이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명확한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태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만일 동아시아공동체가 발전하게 된다면 중국은 지역 무대를 통해 지연 전략을 강화하게 되면 미국의 아시아의 이익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때문에 미국은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나. 대만 정부의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반응과 정책

대만에서는 동아시아공동체 논의가 학술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대만 정부 차원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만에서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은 2000년대부터고,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2010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마잉주(馬英九, 2008.5.20.~2016.5.19.), 차이잉원(蔡英文, 2016.5.20.~) 시기의 '총통부소식(總統府新聞)'⁴⁶⁴⁾에 게재된 기사를 통해서 대만 정부의 동아시아공동체 인식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동아시아공동체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펼쳤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마잉주 시기와 차이잉원 시기, 2008년 5월 20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동아시아문화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를 키워드로 '총통부소식'을 검색한 결과, 이 두 단어가 들어 있는 기사는 한 건도 검색되지 않았다. 그리고 마잉주 시기 8년간 '총통부소식'에 '공동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사건수는 총 22건으로 년 평균 2.75건 밖에 없었다. 반면 차이잉원 취임 기간인 2016년 5월 20일에서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총통부소식'에 '공동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사건수는 총 29건 발견되었다. 차이잉원의 취임 기간을 2.5년으로 계산한다면 년 평균 11.6건으로 마잉주 시기에 비해 4.2배의 양이다.

마잉주 시기의 공동체에 관한 기사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지역통합과 단일시장 형성에 관한 것이다. 2008년 마잉주는 취임 후 각 방면에서 친중국 정책을 전개해 간다. 특히 마잉주 정부는 중국을 경제 불황에 시달리는 대만을 구원해 줄 구세주로 생각했다. 2009년 마잉주 정부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인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海峽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체결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2009년 3월 7일 타이난(台南)에 있는 성공대학(成功大學)을 방문한 마잉주는 대만 경제 회복을 위해서 ECFA 체결이 꼭 필요하다고 ECFA 체결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한다.⁴⁶⁵⁾

마잉주 정부는 ECFA 체결을 위해 현존하는 지역 경제 공동체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그 조직을 이용해 중국과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했다. 중국과의 경제 공동체 형성의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ECFA였다. ECFA가 2009년 대만 언론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464) '총통부소식'은 총통·부총통이 참가한 활동과 연설을 소개하고 그 발언을 정리한 뉴스로 정부가 신문사, 방송사에 내보내는 정부 소식이라 할 수 있다. '총통부소식'은 리덩휘이(李登輝)총통 시기인 1992년 1월부터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있어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다. 본고에서 사용된 총통부 소식은 "總統府, 신문과 활동, 총통부소식 [總統府,新聞與總統活動,總統府新聞]" (<http://www.president.gov.tw/Page/35>)에서 검색 가능하다.

465) 王恩美, "대만의 선진국 담론 활용 전략과 한·중·일 인식(2007~2017)," p. 216.

2009년 9월 호주 국회 중의원 데이빗 호커(David Hawker)가 대만을 방문했을 때 “마잉주 총통은 호주 케빈 러드(Kevin Rudd) 총리가 추진하는 ‘아시아태평양공동체(Asia Pacific Community)’의 구상에 대해 대만도 참여를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지지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총통부소식’이 전했다.⁴⁶⁶⁾ 같은 해 11월 12일 호주 국회 참의원 방문단을 접견했을 때 마잉주는 호주 총리가 추진하는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설립 준비 작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⁴⁶⁷⁾

또한 마잉주는 2009년 12월 16일 ‘대만동남아시아국가협회연구센터(台灣東南亞國家協會研究中心)’의 개막식 및 국제학술대회에 참가 했을 때, 아세안(ASEAN)이 동남아시아의 정치, 경제 및 전략 등 협력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역경제체(區域經濟體)’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호주 총리가 추진하는 ‘아시아태평양공동체’와 일본 하토야마(鳩山)총리가 추진하는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 Community)’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마잉주는 다음과 같이 지역 통합체제의 대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시아 국가들의 지역통합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현재 대만도 그 자리에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국제 추세의 발걸음을 따라갈 자신이 있습니다… (중략) …대만은 IT산업, 교육, 농업, 의료 보건, 재해 구조 관리, 기업관리 및 중소기업 영역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은 중국대륙과 이미 9개 항목의 협의와 금융 협의의 MOU를 체결하고, 현재 중국과의 ‘경제협력기본협정(經濟合作架構協議,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교섭을 통해 양안 관계를 다방면적인 협력 관계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은 아세안 회원국과 더 광범위적인 상호 관계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지역포럼에 더 많은 참여의 기회가 주어질 것을 기대합니다.⁴⁶⁸⁾

위의 기사를 통해 마잉주는 중국과 ECFA의 체결을 통해 대만이 아세안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의 승인 하에 아세안과 교류하고, 참여하며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2010년 1월 13일 마잉주는 ‘동아시아 지역 작업 회보(東亞區域工作會報)’에 참여했을 때도 ‘아시아태평양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를 거론하며 최근 지역 내 각국의 지역통합이 추진되고

466) “總統接見澳大利亞聯邦國會眾議員霍克,” 『總統府新聞』, 2009.9.22.

467) “總統接見澳大利亞聯邦國會參議員訪華團,” 『總統府新聞』, 2009.11.12.

468) “總統出席「台灣東南亞國家協會研究中心」開幕典禮暨國際研討會開幕式,” 『總統府新聞』, 2009.12.16.

있다고 말하며 중국과 ECFA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⁴⁶⁹⁾

대만과 중국은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ECFA를 2010년 6월 29일에 체결하였다. 마잉주는 ECFA 체결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대만이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고 해도 중국의 반대로 성공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대륙과 먼저 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⁴⁷⁰⁾

마잉주 정부는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 이후 바로 중국과 ‘양안무역·서비스협정(海峽兩岸服務貿易協議, Cross-strait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CSSTA)’를 추진시켰다. 그러나 그 내용은 대만의 경제와 일자리를 크게 위협하는 조약이라며 대만 젊은 층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다. 2014년 3월 17일 별다른 토론도 거치지 않고 30초 만에 ‘양안무역·서비스협정’이 국회 심사를 통과하자, 다음 날(3월 18일) 대학생들을 위주로 한 대만 젊은 층은 국회를 장악하고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4월 6일 국회의장인 왕진핑(王金平)이 양안협약감독법안(承諾兩岸協議監督條例)을 제정해 입법하기 전까지 ‘양안무역·서비스협정’의 체결을 보류하겠다고 약속한 후, 학생들이 해산하기 시작했고 반대운동은 막을 내렸다. 이 반대운동을 대만에서는 ‘해바라기 학생운동’ 또는 ‘3·18학생운동’이라고 한다.

‘3·18학생운동’으로 인해 마잉주의 중국과 경제 공동체 형성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없었지만 마잉주는 계속해서 지역통합과 단일 시장 형성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마잉주는 지역 단일 시장 중심의 ‘경제공동체’의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를 언급했다. 마잉주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이 2016년 2월에 체결되었고, 아세안경제공동체도 2015년 12월 13일에 정식 설립되었다고 말하며 상품, 서비스, 무역, 투자 자유화를 기초로 해 단일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필요성을 강조했다.⁴⁷¹⁾

차이잉원 시기의 공동체 사용 상황을 살펴보면 ‘공동체 의식’에 관한 기사가 대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세안과 같은 지역 통합 단일 시장 형성을 지향하는 공동체 사용 횟수가 마잉주 시기와 비교해 현저히 줄었다.

차이잉원은 취임 후 중국 경제에 기대지 않는 새로운 대외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 그것이 바로 ‘신남향(新南向) 정책’이다. 과거 리덩휘이(李登輝, 1988~2000) 총통 시기인 1990년대에

469) “總統出席「東亞區域工作會報」與會駐處代表晚宴,” 『總統府新聞』, 2010.1.13.

470) “總統出席「天下經濟論壇」, 開幕儀式,” 『總統府新聞』, 2010.1.18.

471) “總統出席「2016天下經濟論壇」,” 『總統府新聞』, 2016.1.21.

남향정책을 펼친바 있다. 따라서 리덩훙이 시기의 남향정책과 구분하기 위해 차이잉원 시기는 ‘신남향 정책’이라고 한다. 차이잉원 정부는 ‘신남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 공동체 의식’, ‘지역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 형성과 강화를 강조했다.

‘신남향 정책’은 2016년 5월 20일 총통 취임 연설에서부터 그 형태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취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의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만의 현 단계의 경제 발전은 지역 내의 각 국가들과 고도의 관계가 있고, 상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경제 발전의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 가는 노력은 아시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협력하고, 함께 미래 발전 전략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 경제 창출, 구조 조정 및 영속 발전을 위해 공헌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구성원들과 긴밀한 ‘경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⁴⁷²⁾

이렇듯 차이잉원은 대만이 앞으로 동남아시아,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경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취임 후 ‘신남향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동남아시아,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경제 공동체 의식’, ‘지역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이 더욱 강조되었다.

2016년 8월 차이잉원은 ‘신남향 정책’의 방침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신남향 정책’의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대만과 아세안, 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의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문화 등 측면에서 연결을 추진하며 자원, 인재 및 시장 창출, 상호 이익과 승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협력 방식을 만들고, 더 나아가 ‘경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다. 둘째, 광범위한 협상과 대화 체제를 만들어 아세안, 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와 협력 및 공통된 인식을 형성함과 동시에 문제와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상호의 신용과 공동체 의식을 쌓아가는 것이다.⁴⁷³⁾

그리고 ‘신남향 정책’의 행동 기준 중 하나로 ‘장기간에 걸쳐 경제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한걸음 한걸음 장기간에 걸쳐 정성을 기울여 전방위적으로 아세안, 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과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를 만들어감과 동시에 점차적으로 ‘경제 공동체 의식’을

472) “中華民國第14任總統蔡英文女士就職演說,” 『總統府新聞』, 2016.5.20.

473) “總統召開「對外經貿戰略會談」通過「新南向政策」政策綱領,” 『總統府新聞』, 2016.8.16.

형성해야 만이 돈독한 기초를 만들 수 있고 난관과 장애물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⁴⁷⁴⁾ 천젠런(陳建仁) 부총통도 2016년 11월 26일 ‘2016년 남도 민족 국제 회의(2016年南島民族國際會議)’에 참가해 ‘신남향 정책’의 목표와 ‘경제 공동체 의식’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후에도 차이잉원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세안, 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과 ‘경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신남향 정책’의 중요한 목표임을 강조했다.⁴⁷⁵⁾

‘지역 공동체 의식’도 ‘경제 공동체 의식’과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었다. 2017년 11월 7일 천젠런 부총통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로스앤젤레스 분교 방문단’을 접견할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만의 역할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신남향 정책’을 통해 이웃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을 응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⁴⁷⁶⁾

‘경제 공동체 의식’, ‘지역 공동체 의식’과는 달리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 경우에는 대만의 소프트 파워, 특히 의료, 교육, 인력 자원 개발, 기술 창출, 농업, 방재(防災) 등 방면에서의 대만 경험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 지역 발전 및 복지에 공헌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되었다. 이 또한 ‘신남향 정책’에 부합한다는 것이다.⁴⁷⁷⁾

차이잉원 정부도 ‘아세안’을 언급하고 있지만 마잉주와는 다른 맥락 속에서 말하고 있다. 차이잉원은 ‘아세안’을 ‘신남향 정책’의 맥락 하에서 거론하고 있다.

2016년 9월 22일 차이잉원은 ‘2016 대만 동남아시아 지역 연구 년도 회의(2016年臺灣的東南亞區域研究年度研討會)’의 인사말에서 이번 회의의 주제가 ‘정치 전환 하의 동남아시아: 민(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여정’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아세안은 이미 ‘정치를 응집하고 경제를 통합해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민(民)을 근본’으로 한 공동체를 설립할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대만의 중요성과 ‘신남향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대만도 반드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심장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연결 지점에 위치해 이 지역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맞이한 도전은 대만이 맞이한 도전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474) “總統召開「對外經貿戰略會談」通過「新南向政策」政策綱領,” 『總統府新聞』, 2016.8.16.

475) “總統出席「2016新南向商機論壇」,” 『總統府新聞』, 2016.12.21; “副總統接見「亞太資通訊科技聯盟大賽」得獎隊伍,” 『總統府新聞』, 2017.2.22; “副總統接見「107年世界留臺校友會聯誼總會-新南向國家邀訪團」,” 『總統府新聞』, 2018.9.22.

476) “副總統接見「美國加州大學洛杉磯分校訪問團」,” 『總統府新聞』, 2017.11.7.

477) “總統接受印度、印尼、馬來西亞、菲律賓、新加坡及泰國等六國媒體聯訪,” 『總統府新聞』, 2017.5.5; “副總統接見「泰國清邁雲南會館清萊雲南會館回國訪問團」,” 『總統府新聞』, 2017.6.27; “總統出席「玉山論壇:亞洲創新與進步對話」開幕式,” 『總統府新聞』, 2017.10.11.

도전은 자유, 민주를 확고히 하고, 경제 경쟁력과 창조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연속성과 포용성을 겸비하고, 대화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 영원한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 (중략) ... 우리의 신남향 정책은 과거의 남향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이익에 치중하며 전통 형태의 무역 및 투자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려 했습니다. 반면 우리의 신남향 정책은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국가와 방법위한 연결을 만들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내는 것입니다.⁴⁷⁸⁾

2016년 11월 차이잉원은 '2016년 대만·아세안 대화 회의(2016年臺灣-東協對話研討會)'에 참가해 '신남향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세안, 남아시아 국가 및 호주·뉴질랜드와의 관계에서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첫째, 상호의 이해를 증진시킨다. 둘째, 안정적으로 양측의 교류를 만들어 간다. 셋째, 전면적인 파트너 관계를 강화한다."⁴⁷⁹⁾ 차이잉원은 이러한 '신남향 정책'을 추진하는 맥락에서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거론했다. 2015년 말에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설립되었고, 대만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일원으로 지역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을 위해 공헌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신남향 정책'의 행보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⁴⁸⁰⁾ 그리고 차이잉원은 다시 한 번 아세안 회원국들과 '경제 공동체 의식'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⁴⁸¹⁾

이렇듯 마잉주 시기와 차이잉원 시기에 '동아시아문화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라는 단어가 발견되지 않은 것에서 대만 정부 차원에서도 동아시아공동체 논의가 활성화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마잉주 정부와 차이잉원 정부가 동아시아공동체에 아예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마잉주 정부의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반응은 지역통합과 단일 경제시장 형성에 집중되었다. 차이잉원 정부는 동남아시아와의 '경제 공동체 의식', '지역 공동체 의식' 등 공동체 의식의 형성의 중요성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두 정부의 반응은 앞서 거론한 대만의 지역통합에 대한 대응 전략과 맞물려 있다. 마잉주 정부는 중국과 밀접하고 안정적인 경제·무역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차이잉원 정부는 중국을 피해서 간접적으로 지역통합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차이잉원 정부는 동남아시아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신남향 정책'을 지역통합의 대응 정책으로 채택했다. 또한 차이잉원

478) "總統出席「2016年臺灣的東南亞區域研究年度研討會」," 『總統府新聞』, 2016.9.22.

479) "總統出席「2016年臺灣-東協對話研討會」," 『總統府新聞』, 2016.11.15.

480) 위의 글.

481) "副總統接見「2016年臺灣-東協對話研討會」與會官員學者," 『總統府新聞』, 2016.11.16.

정부가 지역공동체 의식에 주목한 것은 지역정체성 구축(構築)을 도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잉주 정부의 지역통합 정책은 앞서 거론한 양안관계 수립 정책에 부합된다. 즉, 마잉주 정부는 대만 주권을 견지하지 않고 독립과 통일 모호성을 유지하며 중국을 통해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다. 주요 쟁점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공동체 형성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은 역시 중국 문제다. 대만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인해 UN에 가입할 수 없고, 국가의 주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국으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국제조직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러한 중국의 억압으로 인해 대만은 동아시아 지역통합 참여에 있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국가 주권을 주장하지 않고 중국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국가 주권을 견지하며 중국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참여하느냐다. 대만의 위치상으로 중국을 통하지 않는다면 동남아시아를 통해 지역통합에 참여하는 방법이 가장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마잉주 정부는 중국을 통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차이잉원 정부는 동남아시아를 통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2010년 6월 29일 마잉주 정부는 중국과 ECFA를 체결했다. 주권을 배제하는 양안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FTA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 FTA는 국가 대 국가의 협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과 홍콩이 체결한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CECA)라는 형식도 채택하지 않았다. 대만은 경제 발전에서 수출 의존도가 일본, 한국과 중국보다도 높다. ECFA 체결은 대만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Lu, Meng-Huang(呂孟璜)은 판단했다.⁴⁸²⁾

ECFA의 체결은 겉보기에는 중국이 많은 이익을 양도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위협은 크지 않다. 반대로 중국에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에 대한 대만의 의존이 한층 더 높아져 양안 통일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대만 입장에서 보자면 단기적으로는 ECFA로 인해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자면 중국으로 수출이 더욱 집중되어 경제와 정치적으로 중국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⁴⁸³⁾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당은 전력을 다해 ECFA 체결을 추진시켰다. 민진당은 ECFA 체결은 대만이 점차적으로 주권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국민당의 견해는 대만은 천연자원이

482) 呂孟璜, “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ECFA)對臺灣經濟發展的影響,” 『商學學報』, 第21期 (2013), p. 5.

483) 江敏華, “後ECFA時代：兩岸關係前景之研析,” 『戰略安全研析』, 第63期 (2010), p. 15.

결핍된 섬으로 형성된 국가라는 것이다.. 대외 무역의 의존하고 외부의 투자 흡수로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떤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대만 경제에 도움이 된다. 특히 지역 무역 협정이 성행하는 현재 대만은 중요한 경제 무역 파트너와 체결된 무역협정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중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진당의 견해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과의 경제·무역 교류가 심도 깊어지면 대만의 경제적 미래는 중국의 모든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중국이 대만이 다른 무역 파트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할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대만이 ECFA를 이용해 다른 아시아 국가와 경제·무역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경제가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면 대만의 정치도 중국에 융합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⁴⁸⁴⁾ 이렇듯 학술적 이론으로나 정부 정책으로나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있어 쟁점은 바로 중국 문제인 것이다.

3. 지역통합 및 공동체 논의의 시사점

가. 이론적 시사점

대만에서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공동체 참여 논의는 정치적 색깔을 강하게 띠고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통합과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국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공동체에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하는 연구는 마잉주 정부 시기(2008.5.20.~2016.5.19.)에 집중되었다. 차이잉원 정부 시기(2016.5.20.~현재)에 진입 하면서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공동체에 관한 연구는 현저히 감소된 반면 '신남향정책'에 관한 연구가 대폭 증가했다.

지역통합과 공동체에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하는 연구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Shen, Yu-Chung(沈有忠)의 연구다. 그는 중국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만과 중국의 '다중 정체성 형성'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대만과 중국은 존이구동(存異求同)의 '다중 정체성 형성'이 양안이 추구해야 할 미래일지 모른다고 말한다. 대만과 중국이 가진 이(異), 즉 차이점은 서로 대립하는 국가 부호, 예를 들자면 국호, 국가, 국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추상적인 화인(華人) 문화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주권 논쟁 혹은 주권을 상징하는 표식을 공동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양안의 공동 기억, 문화 교류, 언어 교합을 기초로 정체성의 표식을 형성해 동아시아 통합과정에서 양안이 공동 참여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다. 그는 계층을 초월한

484) 위의 글, p. 15.

공동 정체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민간 사회, 산·학계를 통해 공동으로 창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제 조직과 국제 사무의 참여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정체성을 요소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정체성을 참여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 하에서 대만은 동아시아 지역통합 과정에서 경제적 의제, 심지어는 정치적 의제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 공간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중국은 경직된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 탈피해 양안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방법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민진당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에게는 '대만을 억압한다'는 고정관념을 약화시킬 수 있고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상승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대만은 실리적인 참여 구조 속에서 양안의 신뢰를 심화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⁴⁸⁵⁾

이렇듯 마잉주 정부 시기의 지역통합에 대한 논의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대만이 지역통합에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중국과의 관계 심화를 추구하며 지역통합에 참여할 길을 모색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차이잉원 정부 이후 이러한 논의는 거의 중단되었다. 차이잉원 정부는 중국과의 연합이 아닌 동남아시아와의 연합을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술적인 지역통합 참여에 대한 논의도 감소했다. 대만의 동아시아 지역 통합과 공동체 참여에 대한 학술 이론적 논의는 현정부의 중국과의 관계와 정치적 성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나. 정책적 시사점

동아시아 지역통합으로 인한 대만의 주변화의 위기는 대만 선거의 주요 의제가 되기도 한다. 마잉주 총통은 2007년 총통선거 기간 중 계속해서 자신의 정책은 대만의 경제가 주변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5월 총통 취임 후에도 대만이 만일 동아시아 경제 통합에 참여하지 못하면 대만은 주변화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⁴⁸⁶⁾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당이 급하게 ECFA를 체결한 이유는 체결 후 무역 효과를 2012년 총통 재선에서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만일 세계화 경제의 중대 변화 속에서 대만이 ECFA로 인해 대외 무역의 증가되고 경제 성장을 만들어 낸다면 국민당은 2008년 정권 탈환 후 최대의 집권 성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⁴⁸⁷⁾

그러나 국민당의 기대와는 달리 마잉주 정부의 '친중국' 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마잉주 집권 말기인 2015년 5월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마잉주 집권 7년에 대한 만족도는 14.51%~16%였

485) 沈有忠, “東亞區域整合下的兩岸關係發展,” pp. 82~83.

486) 위의 글, p. 77.

487) 江敏華, “後ECFA時代：兩岸關係前景之研析,” p.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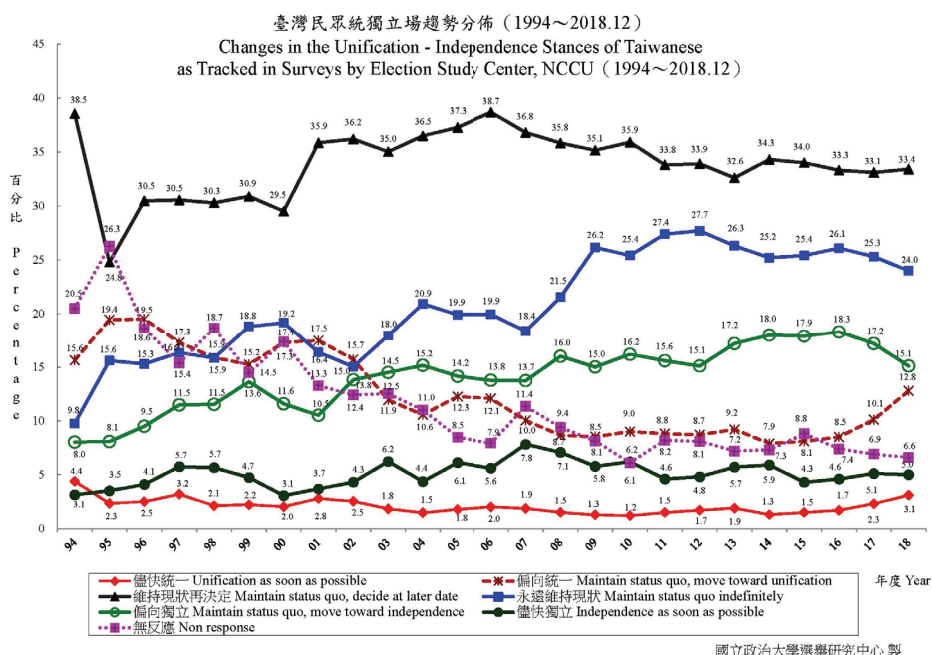
고, 불만족도는 64.37%~75.7%였다. 대만주계처(台灣主計處) 통계에 의하면 7년간 대만 평균 경제 성장률은 3.08%, 평균 실업률은 4.56%,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은 연평균 1.28%였고, 실질적인 임금은 7년 전보다 못해 15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빈부차이도 확대됐으며 타이페이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일반인이 임금만으로는 도저히 구입할 수 없게 돼 버렸다. 마잉주 정부는 지나치게 ECFA의 경제효과에 의존했지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마잉주 정부의 중국을 통해서 세계로 나가겠다는 방법도 외부의 의혹을 받게 되었다.⁴⁸⁸⁾

2018년 12월 정치대학선거연구센터(政治大學選舉研究中心)에서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대만사람들은 대만과 중국의 관계에서 ‘현 상태 유지 후 재결정’(33.4%)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그 다음이 ‘영원히 현 상태 유지’(24.0%)다. 이 둘을 합하면 2018년 12월 현재 대만사람들은 57.4%가 ‘현 상태 유지’를 지지한다. 또한 ‘가능한 조속히 독립’(5.0%)과 ‘독립 지향’(15.1%)은 20.1%를 점한 반면 ‘가능한 조속히 통일’(3.3%)과 ‘통일 지향’(12.8%)은 총 16.1%를 차지했다. 2016년 이후 ‘통일 지향’이 차지하는 비율이 올라가고 ‘독립 지향’의 비율이 낮아졌지만 중국과 통일을 지향하는 비율은 16.1%이고 나머지 77.3%는 중국과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⁴⁸⁹⁾ ([그림 5-8] 참조)

488) “台灣來鴻馬英九執政七年『得與失』,” 『BBC中文網』, 2015.5.21., <http://www.bbc.com/zhongwen/trad/taiwan_letters/2015/05/150521_taiwan_letters_ma_ying-jeou_7th_anniversary_office> 참조. (검색일: 2019.3.10.).

489) 77.3%는 무응답(6.6%)을 제외한 비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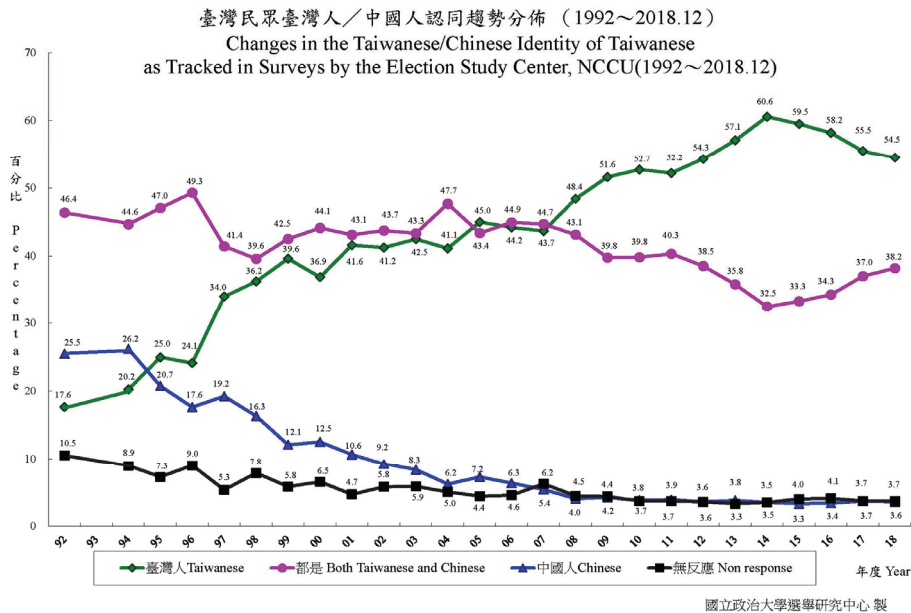
[그림 5-8] 대만 민중의 통일·독립 입장 추세



자료출처: 政治大學選舉研究中心, <<https://esc.nccu.edu.tw/news/news.php?Sn=167>> (검색일: 2019.3.25.).

2018년 12월 정치대학선거연구센터에서 조사한 대만사람들의 정체성 조사를 보면 자신이 '대만인'(54.5%)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두 번째를 차지한 것은 '대만인과 중국인 둘 다'(38.2%)라는 정체성이다. 그리고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은 3.6%를 차지했다.(그림 5-9 참조)

[그림 5-9] 대만 민중의 대만인/중국인 정체성분포



자료출처: 政治大學選舉研究中心, <<https://esc.nccu.edu.tw/news/news.php?Sn=166>> (검색일: 2019.3.25.).

동아시아 지역통합에서 중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중국인’이 아닌 ‘대만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이며 정치적으로도 중국과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만인들은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제조직과 국제사회의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상 유지’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현상 유지’는 대만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주의가 초래하는 기본적인 정치문제는 주권의 유실이다. 어느 정도 통합이 이루어지면 구성국은 지역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혹은 문화 등의 국가 이익을 희생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은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조합에서는 작은 나라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지역통합은 민주적자(democracy deficit)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중요한 결정을 국내 체제가 아니라 지역 체제로 결정하게 된다면 국내 민주주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독재국가와 민주국가의 조합일 경우에는 민주국가의 희생이 가장 크다.⁴⁹⁰⁾ 따라서 대만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참여하기 위해 중국과 통합을 하게 된다면 작은 나라이며 민주국가인 대만은 주권 상실과 민주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490) 許忠信, “台灣關係法與台灣安全,” 『台灣國際法季刊』, 第10卷 (2014), pp. 9~10.

차이잉원은 2016년 5월 20일 총통 취임 연설에서 '신남향정책'을 대외정책으로 삼을 것을 선언했다. 6월 1일 총통부는 '총통부신남향정책사무실설치요점(總統府新南向政策辦公室設置要點)'을 발표하고 총통부 내에 '신남향정책사무실'을 설치했다. 이 사무실은 정책의 토의와 자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사무실 설치 후, 8월 13일 차이잉원은 대외경제·무역전략회의를 소집하고 국가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신남향정책강령(the Guidelines for New Southbound Policy)'을 확정짓게 했다. 이 강령에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세우고 10개 항목의 행동기준과 4개 항목의 연결, 그리고 정책 추진 구조를 설명했다.(<표 5-12> 참조)

〈표 5-12〉 신남향정책강령의 정책목표와 행동기준 요점

정책 목표	1. 전반적인 장기목표 1-1. 대만과 아세안, 남아시아, 호주·뉴질랜드 등 국가들과 경제·무역, 과학 기술, 문화 등 각 방면에서 연결을 강화하고 자원, 인재와 시장을 공동 향유함으로 상호 이익과 승리의 신 협력 방식을 창조한다. 더 나아가 '경제공동체의식'을 수립한다. 1-2. 광범위한 협상과 대화 체제를 수립해 아세안, 남아시아, 호주·뉴질랜드 등 국가들과 협력적인 공동인식을 만들어간다. 효과적으로 관련 문제와 분쟁을 해결하고 점차적으로 상호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간다.
	2. 중·단기 목표 2-1. 국가의 의지·정책의 이점과 상업 기회를 접목해 무역, 투자, 관광, 문화와 인재 등 쌍방 간의 교류를 추진하고 확대한다. 2-2. 경제 발전의 새로운 방식에 맞춰 산업의 신남향 전략을 추진한다. 2-3. 신남향 인재를 배양하고 총당해 발전의 병목현상을 돌파한다. 2-4. 다방면적이고 쌍방적인 협상과 대화를 확대해 분쟁을 해결한다.
행동기준	장기적인 운영으로 경제공동체의식을 만들어 간다.
	대만의 지역 발전에서 미래의 역할을 정확히 한다
	4대 연결 전략을 추진한다.(소프트 파워의 연결, 공급연의 연결, 지역시장의 연결, 사람과 사람의 연결)
	신남향 인재를 배양하고 총당한다.
	다방면적이고 쌍방적인 제도화된 협력을 추진한다.
	완전한 완화 조치를 만들고 효과적으로 위험요소를 관리한다.
	적극적으로 국제 협력에 참여한다.
	협상, 대화 체제를 전면 강화한다.
	양안의 선의적인 관계와 협력을 추진한다
	민간 조직과 활력을 활용한다

자료출처: 楊昊, “檢視臺灣的新南向政策：議程、網絡與挑戰,” 『問題與研究』 第56卷 1期 (2017), p. 137.

2016년 9월 5일 행정원은 '신남향정책강령'에 근거해 '신남향정책추진계획(New Southbound Policy Promotion Plan)'을 발표했다. 정책강령에서 나열된 항목들을 구체화하고 행정원 각 부서에서 실행하도록 했다. '신남향정책추진계획'은 부서간의 협조와 민간 부문도 투입되어야

했다. 실질적으로는 행정원의 18개 부서가 이 계획에 참여했다. 그 중에서도 경제부(주/협동으로 27개 구체적인 사항), 외교부(주/협동으로 17개 구체적인 사항), 교육부(주/협동으로 13개 구체적인 사항), 내정부(주/협동으로 10개 구체적인 사항), 과학기술부(주/협동으로 6개 구체적인 사항)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2016년 12월 14일 행정원은 '신남향정책강령'과 '신남향정책추진계획'에 맞춰 '신남향정책작업계획(Work Projects for New Southbound Policy)'을 제정했다.⁴⁹¹⁾

행정원은 '신남향정책'에 대해 [그림 5-10]과 같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청사진은 '신남향정책'의 전체적인 구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신남향정책'의 4대 방향인 경제무역의 협력, 인재교류, 자원공유, 지역연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남향정책'의 핵심이념, 목표시장 및 정책에 참여하는 각 부서가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그림 5-10] 대만 행정원 '신남향정책' 청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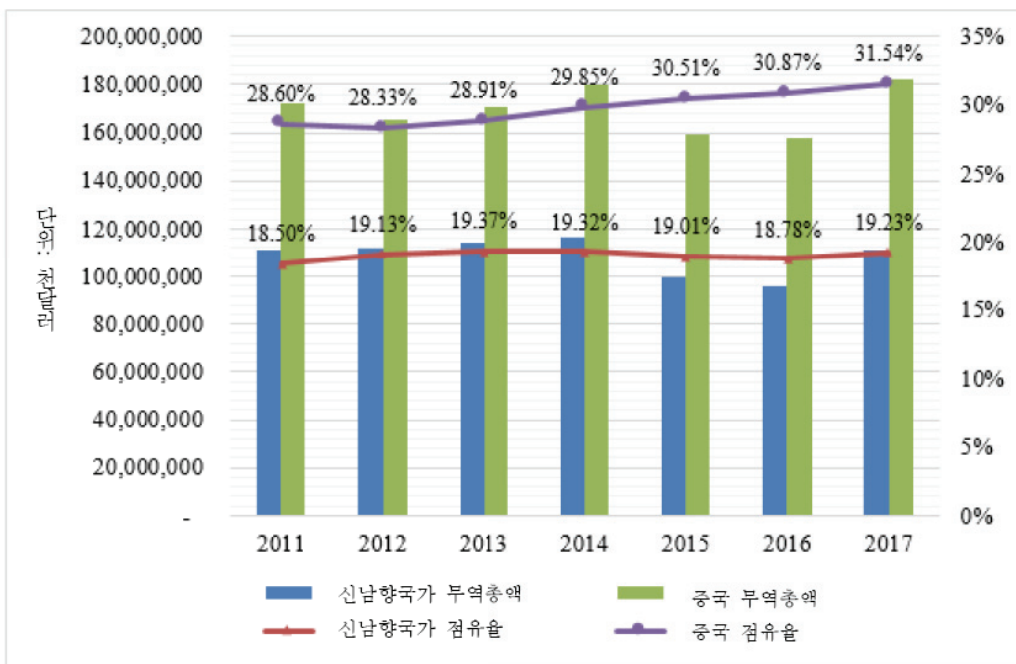
출처: 대만 행정원 중요시정 성과, 신남향정책, <<https://achievement.ey.gov.tw/cp.aspx?n=53E4AD5EA2AE7FA6>> (검색일: 2019.4.19.).

491) 楊昊, “檢視臺灣的新南向政策: 議程、網絡與挑戰,” 『問題與研究』, 第56卷 1期 (2017), p. 128.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민진당이 현·시장(縣市長)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단체를 위주로 ‘신남향 정책’에 호응하는 정책도 추진되었다. 예를 들자면, 타이난시(臺南市) 시장인 라이칭더(賴清德)는 ‘신남향정책’에 맞춰 타이난시의 관광 특색을 강화하고, ‘신남향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⁴⁹²⁾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신남향국가와 중국에 대한 무역총액을 살펴보면 중국의 점유율은 성장추세에 있으나, 신남향국가의 점유율은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그림 5-11] 참조)

[그림 5-11] 대만의 신남향국가와 중국의 무역총액 및 점유율 비교



출처: 徐遵慈·李明勳, “我國新南向政策的執行成果與未來展望,” 『經濟前瞻』 第176期 (2018), p. 11.

그러나 <표 5-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남향정책’ 추진 후,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수출액은 성장추세에 있다. 2017년 신남향국가의 수출액의 성장률은 13.42%를 기록했고, 신남향 중점국(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성장률은 16.93%를 기록했다. 비록 중국의 성장률 20.46%보다는 성장률이 낮지만 신남향국가에 대한 수출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492) 위의 글, p. 130.

〈표 5-13〉 대만 2017년 대남향국가 및 중국의 수출액

(단위: 천 달러)

	2016년	2017년	2017년 비율	성장률(2017/2016)
신남향국가	59,415,946	67,387,240	21.23%	13.42%
신남향 중점국	37,082,302	43,360,868	23.66%	16.93%
아세안	51,291,216	58,583,994	18.46%	14.22%
남아시아	4,610,638	5,232,725	1.65%	13.49%
호주, 뉴질랜드	3,514,092	3,570,521	1.12%	1.61%
중국	73,878,920	88,995,359	28.04%	20.46%
홍콩, 마카오	38,527,444	41,396,521	13.04%	7.45%

출처: 徐遵慈·李明勳, “我國新南向政策的執行成果與未來展望,” 『經濟前瞻』 第176期 (2018), p. 12.

주: 신남향 중점국은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6개국이다.

인재배양 면에서는 장학금을 확대해 신남향국가의 유학생을 유치하고, 대만 학생이 신남향국가에 유학을 가는데 중점을 두었다. 대만 교육부의 통계에 의하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대만에 온 유학생이 늘고 있다. 그 중 말레이시아에서 온 유학생이 가장 많았다. 2016년 말레이시아 유학생은 4,712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5,305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 베트남 유학생은 3,686명이었으나 2017년 4,319명으로, 2016년 인도네시아 유학생은 3,065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3,549명으로 증가했다.⁴⁹³⁾

‘신남향정책’ 실시 후 동남아시아에서 온 관광객도 증가했다. 차이잉원 정부는 신남향국가들의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비자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동시에 대상국의 대만인에 대한 비자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대만 외교부가 공표한 ‘우리 나라와 신남향국가 상호 비자 대우(我國與新南向國的相互簽證待遇)’에 의하면 대만이 뉴질랜드에 발급하는 비자의 가장 호혜적(무비자 90일)이었고, 그 다음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무비자 30일)였다. 2016년 중순부터 외교부는 추가적으로 태국, 브루나이와 필리핀의 비자를 완화해 무비자로 30일간 대만에 체류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와 인도에 대해서는 조건적인 무비자를 허용했다.⁴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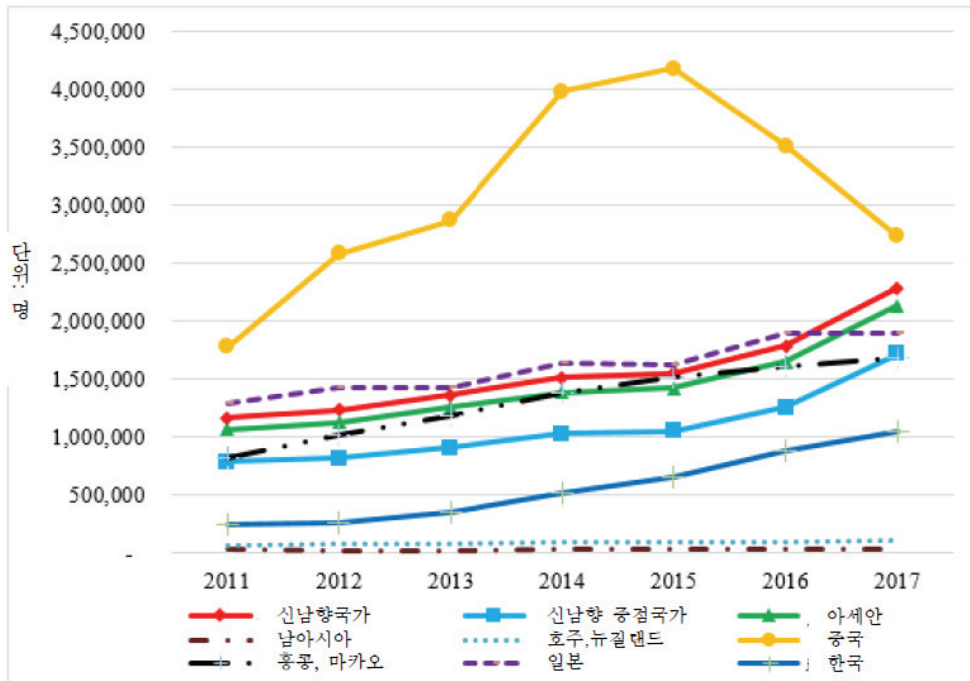
[그림 5-12]에서 알 수 있듯이, 2015년부터 중국에서 온 관광객이 현저히 줄기 시작해 2017년에는 273만 명을 기록했다. 반면 신남향국가 18개국과 아세안 10개국에서 온 관광객이 2016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해, 2017년 228만 명과 213만 명을 기록했다. 2017년 신남향 중점국가에서

493) 徐遵慈·李明勳, “我國新南向政策的執行成果與未來展望,” 『經濟前瞻』, 第176期 (2018), pp. 12~13.

494) 위의 글, pp. 14~15.

온 관광객도 172만 명에 달했다.

[그림 5-12] 주요국가 및 신남향국가에서 온 관광객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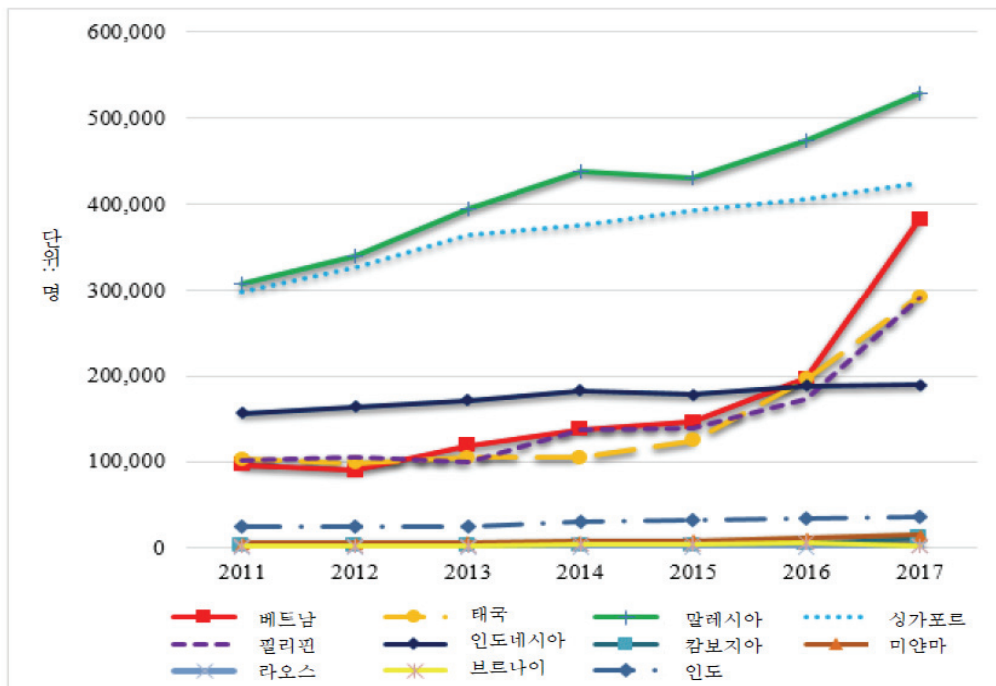


출처: 徐遵慈·李明勳, “我國新南向政策的執行成果與未來展望,” 『經濟前哨』, 第176期 (2018), p. 16.

또한 [그림 5-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7년 아세안 10개국에서 온 관광객 중 가장 인구를 기록한 국가는 말레이시아로 52만 명에 달했고, 2위는 싱가포르로 42만 명이다. 2017년 베트남에서 온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2016년 약 20만 명에서 2017년에는 38만 명으로 증가했다. 태국과 필리핀도 2016년 약 19만 명과 17만 명에서 2017년에는 각각 29만 명으로 증가했다. 베트남, 태국과 필리핀 관광객의 증가 원인으로는 앞서 서술한 비자 완화 정책이 작용한 것이라 판단된다.⁴⁹⁵⁾

495) 위의 글, pp. 16~17.

[그림 5-13] 아세안에서 온 관광객 인구 변화



출처: 徐遵慈·李明勳, “我國新南向政策的執行成果與未來展望,” 『經濟前瞻』, 第176期 (2018), p. 17.

그 외에 대만 행정원은 국영사업 목표국의 상업활동이 증가했으며 목표국에서 농업협력과 문화교류를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그 성과를 발표했다. ‘신남향정책’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 경제부가 2017년 12월 7일에 발표한 ‘대만-필리핀 투자보장 협정(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BIA)’을 체결한 것이라고 평가되었다.⁴⁹⁶⁾

차이잉원의 ‘신남향정책’은 중국에 의지하지 않는 지역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남향정책’도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세계에서 소수의 대만의 수교국을 제외하고는 대만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국가는 없기 때문이다.⁴⁹⁷⁾ 또한 ‘신남향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일대일로’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합친 명칭이다.([그림 5-14] 참조)

496) 過子庸·金士懿, “對我國「新南向政策」目標國的研析,” 『發展與前瞻學報』, 第22期 (2018), p. 69.

497) 위의 글, p. 71.

[그림 5-14]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의 노선과 범위



출처: 대만 과학기술자문실(科技產業資訊室)에서 발표한 ‘중국 미래지역 대전략 ‘일대일로’ 정책의 고찰[中國未來區域大戰略“一帶一路”政策觀察]’, <<http://iknow.stpi.narl.org.tw/post/Read.aspx?PostID=10904>> (검색일: 2019.4.18.).

2013년 9월 시진핑(習近平)은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의 구상을 밝혔다. 2015년 3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와 상무부의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축을 추진하는 전망과 행동[推動共建絲綢之路經濟帶和21世紀海上絲綢之路的願景與行動]’ 문서 발표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중국의 지역 경제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로 설정한 지역은 동남아시아 국가도 포함되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와 인도가 그 범위에 포함된다.⁴⁹⁸⁾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신남향정책’의 목표 국가이기도 하다. 그리고 ‘일대일로’에서도 경제·무역의 협력뿐만 아니라 인재교류, 농업협력, 지역연결을 강조하고 있다.⁴⁹⁹⁾ 이것들은 ‘신남향정책’에서도 중시하는 항목이다. 중국

498) 陳竹梅, “中共「一帶一路」倡議下我國「新南向政策」的因應思維與實踐,” 『復興崗學報』, 第112期 (2018), pp. 10~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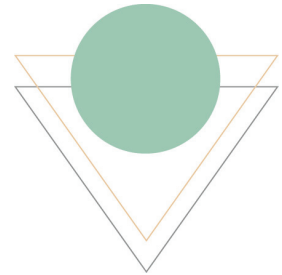
499) 顧瑩華, “一帶一路與新南向的競合策略分析,” 『經濟前瞻』, 第178期 (2018), p. 121.

이 아세안 공동체와 무역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대만은 지역 경제 통합에서 다시 한 번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만이 '신남향정책'을 추진할 때 동남아시아 각국과 무역 왕래를 진행함에 있어 '일대일로'의 대만에 대한 위협을 잊지 않아야 한다.⁵⁰⁰⁾ 그렇기 때문에 '신남향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외교적인 입장과 의미를 과도하게 나타내지 않을 것이 건의되었다. 민감한 정치의 제로 인해 목표국이 방어심을 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국가가 중국의 압력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양안관계가 저조한 상황에서는 더욱 민감해지기 때문이다.⁵⁰¹⁾

이처럼 '신남향정책'도 순조롭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있지만, 차이잉원 정부는 그 외의 다른 선택 사항을 제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동남아시아를 통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영향력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신남향정책'의 성과는 점차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성과들이 대만의 동아시아 지역통합 참여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500) 陳竹梅, “中共「一帶一路」倡議下我國「新南向政策」的因應思維與實踐,” p. 115.

501) 過子庸·金士懿, “對我國「新南向政策」目標國的研析,” p. 71.



제6장

종합분석 및 한국의 대응전략

제6장 종합분석 및 한국의 대응전략

제 1 절 각국 인식에 대한 비교분석

1. 각국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논의 비교

각국의 동북아 지역에 관한 논의는 지리적 범주, 지역개념, 지역협력의 필요성 등에서 인식의 공감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한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유관국(지역)인 미국, 러시아, 몽골, 대만 등에서도 동북아 지역에 관한 공동의 합의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각국이 동북아 지역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자국중심의 지역설정, 국가별 체제 상이성, 역내 역사문제 등에서 상반된 태도와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 지역에 관한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1990년대까지 자신이 속한 지역을 동아시아의 틀에서 인식하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러한 인식을 동북아라는 개념으로 대체해 나가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지역주의 논의가 확대되면서 동아시아의 하위개념으로 동북아 지역을 인식하면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갔다. 그러나 일본은 전통적으로 동북아 지역 보다는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개념을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북아 지역 논의는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을 아시아-태평양,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등으로 범주화해서 인식한다. 이러한 한국의 지역

개념은 냉전질서 해체, 금융위기 등 대내외 환경변화와 집권 정부의 관심사 등에 영향을 받으며 변해 왔다.

한국 정부 차원의 동북아 지역 논의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동북아 시대위원회는 동북아의 범주를 지리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지리적 측면에서는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을 포함시켰고, 기능적 측면에서는 미국과 ASEAN을 포함시켜 논의를 진행했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지역범주를 남북한과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 등을 포함시켰지만, 지역공동체 논의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당시 학계에서는 동북아 지역을 지리적 측면에서 남북한, 중국, 일본, 극동 러시아로 구분했고, 문화적 측면에서는 남북한, 중국, 일본 등으로 설정해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미국을 포함시켜 지역범위를 설정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이 문화적 측면에서 동북아 지역 논의를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한국의 역사인문학계에서 유교와 한자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범주화하면서부터였다. 이 논의에서는 각국을 공동의 문화유산을 공통분모로 범주화했고, 유교, 한자와 같은 중국문화를 수용하고 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동북아 중심적인 동아시아 또는 중국 중심적인 동아시아 개념을 탈피한 새로운 동아시아 개념을 지향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때의 동북아는 동남아와 대등한 지위를 갖는 동아시아의 하위 지역으로 설정되었다. 여기서 동아시아는 단순히 동북아의 외연적 확장을 의미하기보다는 새로운 지역 개념으로 설정되었고, 중국문화가 이 지역에서 공통의 문화유산을 제공하는 것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한국은 동북아 지역 논의를 가장 활발하게 전개했으며 정부와 학계에서 군사안보, 경제, 역사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지역 논의를 지역공동체 논의로 확장시켰다. 특히, 한국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를 개념화했는데 이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일본 등과 접해 있고 역사적으로 중국, 일본과 군사외교안보, 경제, 문화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

한국과 달리 중국의 동북아 지역 논의는 동아시아와 동북아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없어 상황에 따라 혼용되어 왔다. 중국은 대체로 동북아시아를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과 태평양 서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적 개념으로 인식한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고, 인종적 특성이 유사하며, 역사복합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관점의 동북아 지역 논의는 중국, 일본, 몽골, 한반도, 러시아 등을 범주화해서 진행되었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아시아를 지리적으로 동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로 구분한

다. 중국은 동아시아를 아시아 구성의 일부로 보면서, 중국, 일본, 몽골, 한반도,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구성된 소동아시아와 대동아시아(동북아, 아세안을 포함한 동남아)의 상위개념으로 본다. 또한, 지리적 측면에서 중국 동부와 북부지역(동북3성, 네이멍구, 허베이, 산둥, 산시, 베이징, 상하이, 톈진 등의 7개 성과 시 포함)이 동북아 지역에 해당된다고 인식한다. 이때 동북아는 중국 동부와 북부지역, 한반도, 일본, 몽골, 러시아 동부 및 시베리아가 포함되어 범주화된다.

중국은 동북아 지역 범위를 정치안보 측면에서 미국을 포함시키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역외국가가 포함된 동북아와 역외국가가 없는 동북아로 구분하기도 한다. 역외국가가 포함된 동북아 개념을 견지하는 그룹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고, 동북아 주요 안보현안에 현실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 관점에서 미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동북아 지역을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협력 가능성과 상호의존성을 기준으로 좁은 의미의 동북아와 넓은 의미의 동북아로 구분하기도 한다. 좁은 의미의 경제적 동북아 지역 범위는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이 해당되며, 핵심적 경제주체는 한·중·일 및 다양한 양자, 다자 무역협력에 기초한 FTA 네트워크 등이 된다. 넓은 의미에서의 동북아 지역범위는 APEC 정상회의, 아세안과 동북아 지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10+1, 10+3, 10+6, 10+X 등으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중국은 문화적 공통점을 기초로 동북아 지역 범위를 설정하기도 하는데 이때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핵심국가로 설정된다. 이때 한·중·일 3국의 인종, 문자, 언어습성, 생활습관 등은 유교문화, 한자문화 및 역사공유 등에서 상당한 유사성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 지역 범위 설정의 근거가 된다.

중국의 동북아 지역 논의는 이 지역을 동아시아의 하위개념으로 인식하면서 정치안보, 경제, 문화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동북아 지역 논의는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변외교 차원에서 동북아 논의가 전개되는 특징을 보인다.

일본의 동북아 지역 논의는 아시아 지역주의 차원에서 일본해-아시아와 오세아니아-태평양의 두 갈래로 전개되었다. 일본은 지역개념을 사용할 때 ‘동북아시아’가 아닌 ‘북동아시아’ 또는 ‘동아시아’의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동북아 지역 논의는 세계적인 테탕트와 탈냉전 시대 변화 등 대외적 환경변화와 세계적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해왔다. 2000년 이후부터는 글로벌리즘의 조류 속에서 아시아 지역통합의 명분과 필요성이 부상되면서 일본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기존의 권역 개념들이 서로 융합되고 확장되는 형태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일본의 지역주의는 기본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개념을 전지하고 있다. 2001년에는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가 제기되면서 일본의 기존 북동아시아 용어는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태평양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지역개념으로 흡수되었다. 또한, 일본은 인도 경제가 부상하면서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에 인도를 포함시키고 이를 ‘아시아 지역통합’으로 확장시키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범위 설정 논의는 ‘어떤 국가를 포함시키고 어떤 국가를 포함시키지 않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러한 지역 범주화는 국가의 핵심이익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예민한 외교적 사안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지역설정 갈등은 과거 중국과 일본 사이에도 발생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동체 논의가 등장하게 된 계기는 2000년대 미국 중심의 글로벌리즘에 대한 견제 의식이 작동하면서부터였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한·중·일 3국과 ASEAN에서 다국 간 지역협력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2000년 중국이 ‘중국-ASEAN 자유무역지역의 창설’을 서두르자, 이에 일본은 2002년 싱가포르와 경제연계협정(EPA)을 체결하고 FTA 보다 포괄적인 국가 간 조약을 ASEAN 가맹국들과 체결하는 경쟁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지역 논의는 동아시아공동체의 지리적 범주 설정에 관해서도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중국은 ASEAN+3국 중심으로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성할 것을 주장했지만, 일본은 여기에 오세아니아와 인도를 포함시키는 것을 주장했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이 추진하는 ASEAN +3의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EAFTA)에 대항하여, 2007년 ASEAN+6의 동아시아경제연계협정(EAEP)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 범위가 ASEAN+3(한·중·일)의 13개국인지, ASEAN+6(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의 16개국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동아시아 지역 논의를 보다 넓은 지역 차원으로 확장시키려는 경향을 갖는다. 일본은 중국 패권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논의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자국의 역내 입지를 모색하려고 한다. 이에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논의는 서남아시아의 인도, 파키스탄을 포괄하는 광역 단위로 확장되었고, 무역 자유화 논의도 인적교류와 사회발전을 포괄하는 경제협력 차원으로 격상되었다. 이러한 맥락적 흐름 속에 일본은 ‘동아시아 공동체’ 용어와 함께 ‘아시아 지역통합’의 용어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일의 동북아 지역 논의는 지역주의의 세계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중심으로 지역주의 논의를 전개시키다 보니 상호 간 지역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기회를 좀처럼 마련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한·중·일은 대륙과 해양에서 직접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 범위 설정에 대한 상호 간의 합의나 일치된 견해를 갖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

는 동북아 지역을 대륙 중심으로 인식하면서 한·중·일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중국은 대륙의 관점에서 동북아를 동아시아의 하위개념으로 인식하면서 주변으로서의 동북아 지역을 개념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해양중심적 사고로 동북아를 동아시아의 일부로 인식하면서 아시아-태평양의 관점을 견지하는 등 각국의 동북아 지역 인식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일 3국이 동북아 지역에 관한 공유된 개념이나 지역 범주를 갖고 있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1945년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상호 간의 교류가 단절된데 그 원인이 있다. 한·중·일은 오랜 기간 교류가 단절되면서 동북아 지역에 관한 공동의 인식을 공유할 기회가 없었다. 한국은 1945년 해방 이후 일본, 중국과 식민역사 문제와 체제 이질성으로 오랜 기간 동안 단절된 상태로 지내왔다. 한국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까지 지리적, 문화적, 제도적인 접촉을 갖지 못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한중은 외교·경제·문화 교류를 추진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의 단절과 국가체제 이질성 등으로 동북아 지역 논의 진전에는 한계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도 식민지 역사로 인해 수교 이후에도 양국 간 문화적 소통이 거의 단절되어 있었다. 1990년대 들어와서야 문화협력 등이 추진되었지만, 한일 간의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는 여전히 한일관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한일 간의 동북아 지역 논의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동북아 지역 논의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은 한중일을 중심으로 동북아와 동아시아를 개념화하고자 한다. 또한, 한중일 이외에도 북한,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 등을 지역 범주에 포함시킨다. 한국은 이러한 동북아 지역개념에 동남아 지역을 덧붙여 동아시아 지역개념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아시아를 동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로 구분하고 동북아를 동아시아의 일부로 인식하면서 중국, 일본, 몽골, 한반도,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구성된 소동아시아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한다. 일부 논의에서는 지역범위를 중국의 동북 3성과 한반도, 일본, 몽골, 러시아 동부 및 시베리아를 포함한 소동북아로 파악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아시아-태평양'의 지역개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동북아는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태평양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로 흡수하여 논의되는 특징을 보인다. 한국은 동북아 지역설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하려는 반면에 중국과 일본은 동북아 지역을 '주변' 또는 '동아시아'의 부분으로 논의하면서 지역개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북아 지역 논의에서 유관국인 미국은 이 지역에서 역외 국가인 동시에 역내 국가라는 지위를 갖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동북아에 포함되기 어렵지만, 세계 초강대국이자 '태평양 국가'로서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고려해 동북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동북아 지역을 냉전시기 패권경쟁 상대국인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지역으로 인식했고, 냉전붕괴 이후에는 중국이 부상하면서 이를 견제하고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반면에 러시아는 지리적, 경제적, 역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에 접하고 있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서, 아시아와 유럽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해 오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 북한 등과 지리적으로 접경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동북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고르바초프 이후에는 동북아 지역에 대해서 국내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극동과 시베리아의 개발을 위해서 이 지역에서의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창출하고자 했다. 또한, 메드베데프 시기부터는 유럽과 태평양을 모두 아우르는 국가 정체성인 유로-태평양 국가의 실현을 목표로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정적 교두보 확보를 위한 공간으로 동북아 지역을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영향력과 반소련화에 대비하고, 경제적으로 각국의 시베리아개발 참여, 역내 경제협력기구 창설, 동북아 경제권 참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유럽 지역을 중시하는 가운데 경제적 측면에서 동북아 지역으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관국 몽골의 경우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과 지리적인 위치를 제외하면 경제, 문화, 사상 등 모든 분야에서 이질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몽골은 전통적인 농경사회가 아닌 유목사회였고, 유교가 아닌 몽골불교가 사회와 문화전반을 지배해왔으며, 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몽골은 1948년 북한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교할 정도로 고립적인 외교정책을 실시하면서 동북아 지역 논의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 1990년대 이후 소련군 철수, 한국과의 수교 등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점차 대외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나, 동북아 지역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관국(지역) 대만의 경우에도 몽골과 마찬가지로 동북아 지역 논의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이는 대만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관계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 되어 있고, 1971년 UN 탈퇴 이후에 국제적으로 국가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지역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관국(지역)의 동북아 지역 논의를 종합하면 러시아가 경제적 측면에서 극동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연계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지역에 관한 논의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 소련을 견제하고 지역 내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을 논의하지만 지역설정에서 동북아 지역을 특정하여 인식하기보다는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동아시아로 이 지역을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몽골과 대만의 경우에는 동북아 지역 논의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지역 논의는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중국, 일본 등은 주변과 아시아의 일부로 동북아를 인식하고 있고, 유관국(지역)인 미국, 러시아, 몽골, 대만 등에서도 한국과 같은 구체적인 동북아 지역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6-1〉 각국의 동북아 지역에 관한 논의 비교

국 가	내 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을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 인식 - 한·중·일 이외에 북한,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 등을 포함해서 논의 - 동북아 지역 개념을 중심으로 동남아를 덧붙여 동아시아 지역 개념으로 확장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를 동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로 구분 - 동북아는 동아시아의 일부로 중국, 일본, 몽골, 한반도,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구성된 소동아시아로 파악 - 일부에서는 중국의 동북 3성과 한반도, 일본, 몽골, 러시아 동부 및 시베리아를 포함한 소동북아로 파악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개념 견지 - 동북아는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태평양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 내에서 진행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외 국가인 동시에 역내 국가인 미국은 전통적으로 전략적 이익과 영향력 확보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을 인식 - 기본적으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지역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측면에서 극동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연계하고자 하면서 동북아 지역 논의를 전개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지역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부재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1년 UN 탈퇴 이후 국제적으로 국가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지역논의가 매우 부진

2. 각국의 지역협력에 대한 논의 비교

각국의 지역협력 논의는 국가별로 전략적 이해관계가 고려되는 가운데 협력과 경쟁을 반복하면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지역협력 논의에서 미국의 참여 문제와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확보를 위해서 경쟁했고, 이는 지역협력에 어떠한 국가를 포함할 것인가에 관한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국의 지역협력은 한반도 분단 문제가 고려된 것으로 통일환경 조성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 유관국(지역)인 미국, 러시아, 몽골, 대만 역시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측면에서 지역협력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지역협력 논의는 군사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와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 하에 정부 주도로 지역협력 논의가 전개되었다. 1990년대에 냉전질서가 해체되면서 당시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회의 창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통일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이는 결국, 한국의 지역협력 논의가 한반도 분단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목적에 두고 진행된 사례였다. 이후 김영삼 정부는 외교정책을 신한국외교로 규정하고, 세계화, 다변화, 다원화, 지역협력, 미래지향 등의 5대 기조로 APEC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노태우 정부와 마찬가지로 고립된 북한이 지역협력에 합류 할 수 있도록 통일외교를 추진하기도 했다.

한국의 지역협력 논의는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경제 분야로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김영삼 정부는 아태지역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김대중 정부는 동아시아 지역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이 지역에서 금융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과 경제중심의 동아시아공동체를 이루고자 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동아시아 구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동아시아를 동남아, 동북아로 구분했다. 이로 인해서 아세안 지역과 한중일 3국의 지역이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세안에는 지역협력 질서가 있지만, 동북아에는 지역협력 질서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지역협력을 추진하고자 했다. 당시 동북아시대위원회가 이 역할을 담당했고, 이 때 제시된 동북아시대구상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조화로운 질서를 창출하고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한 지역전략이었다. 또한 동북아시대구상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한반도전략인 동시에, 국가 역량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온 국민의 상호협력과 국민 복리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규정되었다.⁵⁰²⁾

한국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역협력이 강조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역협력을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 등 범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면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명박 정부는 아세안을 비롯하여 역내 국가들과 신아시아 협력외교를 추진하는 동시에, 중앙아시아, 중동, 중남미 국가들과 자원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새로운 동북아 다자협력의 질서를 만들기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한반도와 아시아, 유럽을 잇는 하나의 대륙을 형성하고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이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 플러스책임공동체를 통해 지역협력을 실현하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 지역을 한국의 생존과 번영의 핵심공간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경제, 안보를 통한 협력을 북방과 남방으로

502) 동북아시대위원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 p. 7.

확장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협력은 공간적으로 아세안, 인도, 호주, 몽골, 러시아까지 범위를 확장해서 대륙과 해양을 포괄하는 지역협력 전략을 추진하면서 협력 이슈로 안보, 경제, 사회문화 협력을 통해 상호 긍정적 효과를 발현하고자 한다.

한국 정부의 지역협력은 세계적 흐름에 대처하면서 한반도 분단문제 해결을 위한 대외전략 차원에서 수립·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범위는 당시의 국제환경 변화, 한국의 역량 등을 고려하면서 설정되었다. 이러한 지역범위는 김영삼 정부에서는 세계화와 탈냉전의 세계적 흐름 속에 주목받게 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되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지역범위가 동아시아 지역으로 초점이 옮겨졌다. 이어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북핵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 없이는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동북아에 초점을 두는 동북아시대 슬로건이 제시되었다.

한국의 지역협력 논의는 기본적으로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은 1980년대 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1990년대 탈냉전,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제 분야에서의 지역협력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한국에 있어서 한반도 분단 문제는 군사안보 분야의 지역협력 논의를 꾸준히 제기하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문제로 부각되면서 6자회담을 발전시킨 형태의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외교·안보, 경제 분야에서의 지역협력 논의는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우선, 외교·안보 지역협력 논의는 군사안보적으로 테러, 무기밀매, 국제조직범죄, 불법이민, 인종대립, 밀수, 마약, 환경오염 등 새로운 안보위협이 증가했기 때문에 역내 국가들의 안보협력에 대한 공동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역내에서 미중 대립이 격화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군사안보분야에서의 지역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제분야의 지역협력은 역내 국가 간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이 커지면서, 지역협력을 통해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국제무대의 교섭력이 증대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한국 학계에서는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꾸준히 지역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협력이 더딘 현실적 문제에 관해서 동북아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들의 상이한 정치 체제와 역사적 반목, 신뢰부족, 영토분쟁, 양자주의적 외교방식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중국의 지역협력 논의는 냉전해체 이후 동북아에서 다양한 다자협력 논의가 일어나면서 기존

의 고립주의 외교정책을 벗어나 지역주의, 다자주의에 관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 위기 이후,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관여를 시작하면서 지역협력 논의에 활기를 띄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중국에서 아시아 차원의 지역협력과 지역일체화, 다자협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중국의 지역협력 논의는 개혁개방 이후 해외투자유치를 추진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당시 중국은 주변지역에서 안정적인 지역협력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은 아시아에서 지역협력을 모색하고자 했다. 또한, 중국은 천안문 사태, 타이완 갈등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경험하면서 주변국가와의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지역협력 논의는 빠른 경제성장을 토대로 역내에서의 역할과 존재감이 증가하자 주변 외교의 위상을 격상시키면서 역내 경제 통합 및 안보 협력을 주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중국은 다자주의 틀에서 지역 현안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점차 강화해 나갔다.

중국이 지역협력을 공식화한 것은 2002년 장쩌민 주석이 중국공산당 16차 대회에서 지역협력을 전략적 과제로 채택하고, 중국공산당 공식 문건에 포함시키면서부터였다. 이때 학계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신국제주의, 신동아시아 지역주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 등과 같은 논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역협력 논의들은 2012년 이후 점차 줄어들었지만 동아시아주의, 범지역주의, 지역국제주의, 범동아시아 통합 등으로 변용되면서 지속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 중국의 지역협력과 지역공동체 구상에 토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1년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경험하면서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즉,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다툼 과정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지역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는 경제성장을 경험한 중국에게 역내를 주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고, 새로운 대안담론과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중국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 공동체, 문화공동체, 지역주의에 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가 등장하면서 지역협력의 개념이 이전 보다 확대·강화 되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의 꿈'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주변외교를 펼치면서 지역경제협력과 지역안보협력에서 중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미국과의 경쟁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은 아시아운명공동체를 주장하면서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지역협력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주역이 되겠다는 것으로 주변국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중국이 지역협력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지역협력의 특징은 첫째, 동아시아와 아시아 지역의 지리적 범위와 동아시아 공동체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둘째, 중국은 다양한 지역주의가 병존하고 있으며, 다양한 조직에 동시에 참여하는 등 교차와 중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중국은 지역주의보다 민족공동체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중국은 아시아 지역주의 발전에 적극적이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다섯째, 중국은 지역 내 집단 정체성이 다소 부족하고, 지역공동체를 이끌어 갈 추진력, 리더십 그리고 주도역량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여섯째, 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로 인해서 중국 주도의 공동체 구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일곱째, 중국의 동반자관계 네트워크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 유연성과 개방성을 가진 다층적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중국과 달리 일본은 전통적으로 지역협력을 아시아-태평양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 일본의 지역공동체론은 아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개방적 다층적 네트워크 육성을 구축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일본의 관점은 아시아 전역과 태평양 연안 지역을 포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적 가치와 경제적 풍요, 국제사회의 안정적 질서를 실현하고자 한다.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정책은 1975년 일본태평양협회의의 설립을 통해 태평양공동체 구상이 제시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일본은 1982년 ASEAN과 오세아니아를 연계한 태평양경제협력회의 등 태평양 공동체의 제도화를 위한 기구를 창설하기도 했다. 이러한 구상은 1980년대 중국이 대외개방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논의로 확장된 것이었다.

일본에서는 동북아시아 용어 대신에 ‘환일본해’ 권역의 경제 교류 차원에서 ‘북동아시아’라는 지리적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1958년 일본 외무성에는 아시아국 산하에 북동아시아과(Northeast Asia Division)를 설치하여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 극동 지역까지를 관할했고, 1960년대 말에는 ASEAN 발족에 자극을 받고 지식사회 내 혁신 세력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산권과의 경제교류를 추진하면서 ‘일본해관’의 개념이 생겨났다. 1980년대 소련 해체와 중국 개혁개방으로 니가타현과 시마네현은 북한, 중국, 소련을 포함하는 ‘환일본해’ 국제교류를 추진하기도 했다.

냉전질서의 해체는 일본의 북동아시아 개념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92년 중국, 한국, 일본, 몽고, 러시아가 참가한 환일본 환경협력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는데 이는 1993년 유엔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가 관여하면서 북동아시아 지역환경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었다. 격년으로 열리는 환경회의에 에너지와 대기오염, 에코시스템 관리, 삼림 차별과 사막화 문제 등이 논의되었고, 1994년에는 북한이 참여하기도 했다.

일본의 와다하루끼는 동북아 지역을 소련 극동, 중국, 남북한, 일본, 미국을 포함시켜 범주화하고 평화적 공생과 상호부조를 추구하며 동북아시아 섬들의 네트워크 형성에 주목했다. 특히, 대만, 오키나와, 제주도, 사할린, 쿠릴열도, 하와이섬이 군사기지화 상태를 벗어나 국가 연결의 구조로, 다양성과 복합성을 포함한 개방적 연결 거점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외교방침으로 지역협력의 틀을 개방적이고 중층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는 역내 국가들의 상호의존성을 심화시켜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일본과 동아시아의 안전과 번영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일본은 동북아 지역협력 논의의 지리적 범주를 꾸준하게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2년 고이즈미 총리는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지역의 다양성과 조화, 포괄적 경제연계 구상을 강조하면서 ASEAN+3에 호주와 뉴질랜드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지역협력 차원으로 개방하면서 역외 국가인 미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동아시아공동체 논의를 통해서 ASEAN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일본은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에서 아젠다 선점을 위해서 해적, 테러, SARS나 HIV 등의 감염, 해일 등의 대규모 재해를 포함한 안전 보장 측면에서 ASEAN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일본은 글로벌 사회의 격차로 발생하는 테러, 감염, 음식물, 지적 재산권 등에 대비하는 문제를 지역공동체의 실천적 의제로 삼아 ‘중층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능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일본 아베 내각은 경제적 측면에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아베 내각은 아시아의 성장 활력을 일본 경제로 끌어들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열린 경제’, ‘열린 아시아’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에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인적교류 및 이민 확대 등의 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변화는 아시아에서 일본의 위상이 유일한 강대국으로의 시대가 종식되었음을 받아들이고 일본 사회 개방 속도를 가속화시켜 각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아시아 각국과 번영을 공유하고자 한다. 일본은 세계의 성장 센터인 아시아가 세계에 열린 지역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의 지역협력은 대체로 동맹국 미국과의 보조를 맞추고 있다. 관련하여 아베 내각은 2018년부터 ‘포괄적 선진적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CPTPP)’을 주도하면서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공식화하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정책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는 성장하는 아시아와 잠재력 넘치는 아프리카,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시켜 2대륙과 2대양에 걸친 지역에 차별 없는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고 해양 질서를 ‘국제 공공재’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일본의 동북아 지역 논의는 연결성과 확장성의 특징을 갖는다. 일본은 동북아 지역 논의에서

머물지 않고 이를 태평양 지역과 역외 국가인 미국과 연결하여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시각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여기에 아시아를 덧붙이는 형식으로 지역협력 개념을 구체화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

한중일의 지역협력 논의의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대외환경 조성차원에서 지역협력 논의를 진행시켰다. 이는 한국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다자협력 구조가 외교안보적 안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결과였다. 또한 역내 국가들의 정치외교안보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보다 쉬운 경제협력 차원에서 지역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에 중국은 최근 기존의 단일 공동체 접근법에서 벗어나 책임공동체, 이익공동체, 인문공동체, 운명공동체 등 복합 공동체로 지역협력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이러한 논의는 인류운명공동체, 아시아운명공동체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중국위협론’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중국 주도의 지역협력 구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열린 아시아’의 개념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에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통합’의 문제로 확장시키고 있고, 미국과 러시아도 여기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연계된 지역협력 개념을 갖고 있으며, 지역협력 논의를 한국, 중국에 비해 보다 확장적으로 논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유관국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지역협력에 대한 입장이 비교적 일관되고 간명하다. 이는 미국을 배제하거나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지역협력도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991년 미 국무장관 제임스 베이커가 “태평양을 가르는 어떠한 계획에도 반대”한다는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정책이 안보 영역에서 쌍무적 방위동맹과 경제영역에서의 연성 다자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공동체 구축에 관심이 없었고, 동아시아 지역의 영향력을 쌍무적 동맹체제를 통해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안보 우산을 제공하는 대신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지도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쌍무적 안보동맹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상대적으로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지역공동체 문제에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유관국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서 지역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데 큰 관심을 갖는다. 러시아의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은 러시아 제국시절부터 현재까지 경제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푸틴 집권이후 극동개발 정책을 펼쳤고, 중국, 한국, 일본과의 양자협력 강화를 통해서 극동지역의 발전을 꾀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동북

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 학계에서 동북아 지역주의, 지역협력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동북아 지역 안보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러시아-동북아 국가 간의 협력이 논의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북아 지역협력 논의는 학계에서 주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 학계는 서구와의 관계, 유라시아 지역 내 통합 등이 주류적 관점이었고, 동북아 지역협력 논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몽골은 1990년대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외교정책을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몽골은 이 지역 내에서 정치·경제적인 세계화 과정에 부합하기 위해서 역내 국가들과의 상호 관계 확대, 지역에서의 입지 강화, 지역의 정치·경제적 다자 간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몽골은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두 강대국에 둘러싸여 내륙의 섬국가처럼 되어 있다. 이에 몽골은 다른 나라와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얻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협력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몽골은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에 적극 참여하면서 지역협력을 통해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에는 동아시아 지역협력 논의에서 국내 정치상황이 강하게 영향을 주었다. 이는 지역협력과 공동체 참여 문제가 중국과의 관계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만의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공동체 논의는 마잉주 정부시기에 집중되었다가 차이잉원 정부시기에 와서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동북아 지역 논의가 감소하는 대신에 '신남향정책'에 관한 연구가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만은 마잉주 정부시기에는 지역통합 논의가 중국과의 관계 심화를 추구하며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차이잉원 정부가 중국과의 연합이 아닌 동남아시아와의 연합을 추구하면서 지역협력 논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듯 대만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논의는 대만정부와 중국과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 정부의 지역협력 방향은 중국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차이를 보인다.

종합하면 유관국(지역)인 미국, 러시아, 몽골, 대만 등에서는 지역협력 논의가 자국의 전략적 이익 확보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지역협력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러시아는 동북아와 극동지역을 연결해서 경제적 효과를 얻고자 한다. 대만의 경우 지역협력 논의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그 내용에 변화를 겪었다. 몽골은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역내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부합하려는 목적으로 지역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유관국(지역)들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관점에서 지역협력

을 군사안보,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다.

〈표 6-2〉 각국의 지역협력에 관한 논의 비교

국가	내 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 차원에서의 지역협력 논의 - 강대국과 접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다자협력 구상 강조 -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구상 강조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기존의 단일 공동체 접근법에서 벗어나 책임공동체, 이익공동체, 인문 공동체, 운명공동체 등 복합 공동체 논의로 확산 → 인류운명공동체, 아시아 운명공동체 등 - 중국위협론 확산 방지와 함께 중국 주도의 지역공동체 구상에 집중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는 현재 인도 태평양 지역을 포함하는 '아시아 지역통합'의 문제로 확장, 여기에 미국 및 러시아까지 협력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열린 아시아' 지역 개념으로 접근 - 지역통합 논의와 관련해서 중국과 주도권 경쟁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동맹 체제를 전제로 하는 지역협력 논의는 지지 -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미국을 배제하거나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형태의 지역협력도 반대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국내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극동과 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목적 하에 지역협력 강조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지역국가들과 지역협력 관계를 높이려는 의도는 갖고 있으나 실현 역량 부족 -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비단길(실크로드)'을 둘러싼 공동 협력 사업 참여를 위해 노력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으로 국가 지위의 문제로 지역협력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3. 각국의 문화협력에 대한 논의 비교

각국의 문화협력은 대체로 문화외교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국은 국가 이미지 제고, 문화의 경제적 효과, 소프트 파워로서의 문화적 영향력 확보 등을 위해서 문화협력을 외교 정책의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역내 문화공동체로서의 문화협력 논의나 공감대는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한국의 문화협력 논의는 1990년대 인문학계에서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들이 유사 가치체계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지역협력의 관점에서 문화협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0년대에 군사안보, 경제 분야에서 지역협력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지역협력의 출발로 문화협력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문화협력을 기반으로 동북아의 안보·경제·평화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 구상이 배경이 되었다. 한국은 역내 국가들의 문화협력을 통해서 상호 이해 증진, 타문화 수용 등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를 통해서 역내 국가의 인식 변화를 불러일으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한국의 경우에는 중국, 일본 등과 달리 문화협력 논의가 동북아문화공동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졌다. 주된 논의 내용은 동북아문화공동체 기반 형성을 위한 기초연구로 문화공동체 형성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방안,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실태 및 현황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문화공동체에 관한 구상을 유럽연합 사례와 비교하면서 진행했고, 이후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이를 활용한 문화협력 방안의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정책차원에서 문화협력이 국가 이미지 제고와 문화산업 육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를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는 문화외교 활성화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했고, 독창적이고 우수한 한국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차원에서 문화협력이 강조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문화외교가 강조되었는데 당시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한류바람이 불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활발한 문화외교를 통해 한국의 국가이미지 제고, 대외경쟁력 향상 도모, 민간차원의 문화교류 활동 등을 통한 외국과의 우호친선을 도모하고자 했다. 한국의 문화외교는 포괄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체육, 관광, 청소년 교류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 되었다.

한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는 국가와 민족 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소명인 동시에 역내 국가의 공동보조와 상호협력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함을 전제하며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동북아문화공동체의 구체적 사안에 들어가면 서로의 이익과 갈등이 복합적으로 중첩되어 현실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러한 구상이 실현 가능한가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한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의 특징은 우선, 정부의 지역협력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는 정부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문화공동체 논의는 남북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공동번영, 나아가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한 것임이 강조되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발전을 위해 문화공동체 논의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역내에서 문화공동체 실현 가능성은 역사문제와 영토분쟁, 민족주의, 미국 요인, 한중일 3개국 간의 주도권 경쟁 등으로 현실적인 실현이 어렵다고 본다.

중국의 문화협력 논의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전개되고 있다. 2000년대 이전 중국은 지역협력과 문화협력에 관해서 상대적으로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는 시기상조론, 중국위협론 확산에 대한 우려, 문화정책과 사상의식의 보수적 성향,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욕구의 취약성 등이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지역협력 논의는 시진핑 정부 이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등이 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2012년 중국

공산당 18차 대회에서 인류운명공동체가 제시되면서 과거와 달리 생각 수준에 머물렀던 공동체 담론이 적극적으로 제기 되기도 했다.

중국은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성의 동질적 문화요소로 유교문화와 한자문화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는 과거 조공체제를 동북아운명공동체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전제하면서 사상적 매개체로 유교를 제시했다. 한자문화권은 일반적으로 한자, 유학, 율령, 중국화된 불교 등 네가지 문화요소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이해되고 있다. 한자문화권에 속한 국가들은 한자를 공통의 문자로 사용하고 유학을 공통의 정치적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고도의 중앙집권 정치체제를 운영하면서 불교를 고정종교로 삼고 있다는 점이 동북아문화공동체의 주요 특징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은 주변국들이 문화적 종주국을 자처하는 중국을 경계할 것을 우려하여 유연하고 포괄적인 ‘인문’이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인문교류, 인문외교, 인문공동체 등이 그것이다. 유교한자 등 전통문화에서 동질성을 찾는 논의가 전통적 논의라고 한다면 인문은 보다 큰 틀 속에서 생성되고 있는 논의이다. 중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의 전통적 논의가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했다면, 인문 논의는 경제안보의 전통적 외교영역을 제외한 포괄적 영역으로 규정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중국 정부는 인적 교류, 사상 교류, 문화 교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가 간 교류에 인문교류, 인문외교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정치, 안보, 경제 외에도 인문교류를 중국 외교의 한축임을 강조하면서 인문교류와 인문외교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이 제시하는 아시아운명공동체에는 이익공동체, 안보공동체, 인문공동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 인문공동체 구축은 공동체 간의 관계를 보장하고 필수적인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었다.

중국은 동북아문화공동체를 동아시아공동체의 하위개념으로 보고, 동북아공동체를 지리, 인문, 경제, 정치, 안보 등의 다양한 시각과 차원에서 구성된 연합체로 인식하면서 논의를 전개한다. 아세안 현장에서 제기된 동아시아공동체의 하위개념인 문화공동체는 정치문화, 정신문화, 경제문화, 사회문화 등으로 구분되었다. 여기서 제기되는 동북아문화공동체는 다문화 정체성을 기초로 이해되는 다문화 국가의 문화공동체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동북아문화공동체를 동아시아공동체의 단계적 형성과정의 첫 단계로 인식하면서 동북아문화공동체가 동북아공동체의 최종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동북아 ‘문화’는 동북아 각국이 사회적 실천이라는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공동지식이라고 보고, 이러한 공동지식의 형성과정이 동북아 문화융합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본다. 중국은 다른 한편으로 지역공동체보다 지역협력, 지역주의,

다자주의, 지역화, 지역일체화 등의 연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지역화와 지역 일체화를 구분하고, 지역일체화를 경제적 힘과 정치적 힘의 결합으로 보면서,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개방적 지역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의 문화협력 논의는 문화교류와 문화외교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동북아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협력 논의는 한국과 중국에 비해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다. 특히, 한국과의 실질적인 문화협력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진행되었는데,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가 계기가 되었다. 한일 양국은 2000년 월드컵 축구의 한일공동개최에 합의하고, 2002년 한일국민교류의 해로 삼아 문화교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2000년 11월 싱가포르 ASEAN+3국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주도하여 한중일 3국 간 교류를 추진하면서 한중일의 문화협력의 길이 모색되기도 했다.

특히, 2002년 한일우호의 해로 정해지면서 부터는 일본 주류 매스컴에서 한류 드라마가 반영되었고 이에 일본에서 한류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또한 한중일의 문화인적교류는 한중일 차세대 리더포럼, 한중일 국내강연 포럼, 2012년 한중일 캠퍼스 등의 교육 분야에서도 활발히 논의되었다.

일본의 문화교류는 국가이미지 제고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아베 내각은 새로운 일본이 세계화 개방에서 견지해야 할 가치를 ‘아름다움, 창조, 성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름다운 나라, 일본’의 매력을 세계에 어필하면서, 새로운 ‘창조와 성장’을 위해서 사람·물건·돈·문화·정보의 흐름에서 ‘열린 경제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일본의 문화협력 정책은 2015년 ‘쿨 재팬(Cool Japan)’ 전략으로 재정립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 일본의 매력을 느끼는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의 콘텐츠, 패션, 음식, 전통 문화, 디자인, 로봇 및 환경 기술 등 브랜드 문화산업을 통해서 경제성장 이루겠다는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문화협력은 일본의 매력과 활력을 활용해 아시아 문화를 견인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일본은 1975년부터 ODA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문화 유지와 진흥을 위해 문화에 관한 무상자금협력을 실행해 왔고, 그 자금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도쿄 올림픽 개최 시기까지 개발도상국의 스포츠 육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외교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일본이해 촉진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친일파·지일파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문화공동체 실현을 고려한 문화협력 논의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역내 문화교류가 강조되면서 문화협력에 관한 연구와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일본에서 문화협력의 차원에서 동아시아공동체 논의는 연구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표적으

로 동아시아공동체평의회라는 연구단체는 동아시아공동체 논의를 위한 지적 연계 및 지적 기반의 강화, 전략적 발상의 공유 등의 논의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후 동아시아공동체 또는 아시아 지역통합의 논의는 내각부와 외무성, 일본국제교류기금 등에서 진행되는 연구회와 국제회의, 대학과 기업시민의 교류 등에서 진행되었다. '아시아 지역통합' 논의는 문무과학성이나 연구기금 단체의 지원을 받으며 대학의 연구 거점 단위에서 각각의 연구 분야의 특성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경제학·경영학 분야에서 수출의존형 경제의 자유무역화 문제보다 내수주도형 발전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격차, 실업률 상승,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동북아복지경제공동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동아시아 문화 이념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관련하여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 인류학자 아오키 다모츠는 동아시아의 문화적 기반이 언어와 종교의 다양성에 있음을 주목하면서 과거의 제국과 문명 의식을 넘어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옹호하는 '동아시아의 문화 이념'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오키는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일본문화의 혼종성을 강조하면서 그 다양성과 혼성성에 자연숭배의 '기층 신앙'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아오키는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민간의 자연숭배나 정령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유교, 도교, 불교, 이슬람교 등의 종교가 형성되면서 혼성이 이루어지는 특징에 주목했다. 또한, 아시아의 혼성성은 문화의 다층적 성격으로 토속적인 기층문화, 고대 인더스·황하의 2대 문명, 근대 이후 서유럽·아메리카 문화 등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시아는 기후, 풍토, 언어, 문자가 다양하며, 식민지의 역사적 경험에서 종주국의 통치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경험과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아오키가 주목한 것은 현대 동아시아에서 국민국가의 문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의 행위 주체로 도시 중간층의 성장에 주목하면서 아시아에서 도시의 신흥 중산층이 도시의 생활양식을 공유하고 문화적 취미와 국제적 유행에 민감한 만큼, 예술과 대중문화에서 자민족중심주의를 벗어나 동아시아에 공통이 되는 새로운 문화 창조와 발신의 담당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학자 도리이의 경우 동아시아 신흥중간층이 1980년대 후반부터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민주화의 주역으로 활약하면서, 경제의 글로벌화와 고등교육의 수혜를 입고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리이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중간층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의 공통점을 고도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에 더하여 해외유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의 양적인 확대'와 '국가의 관여'로 파악했다. 이는 국가가 공기업과 국책연구소를 통해 공적 단위를 확대하면서 중간층의 양적

확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도시중간층의 특성은 국가나 현 체제를 의존하는 보수적 성격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도리이는 아오키가 도시중간층이 국민국가와 자민족중심주의를 넘어서 동아시아 공통의 아이덴티티의 창출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국가중심의 보수적 성격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하위지역인 지자체의 네트워크 형성에 주목하고 동북아시아에서 지자체의 기능적인 연계가 주민들의 아이덴티티를 유의미하게 변화시킨다고 보았다. 사도토모 테츠의 경우에는 국경을 넘는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국가(정부)의 위로부터 정책이 아닌, 지역주민이 공통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프로세스에 주목했다. 사도토모는 지역 연계와 지자체의 국경을 넘는 네트워크가 외교나 영토 등의 주권 문제와 연루되지 않는 ‘생활공간’에서 성립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는 현실화되지 못했는데 역사문제와 국가 간 갈등 격화로 지자체 단위의 교류가 사실상 중단되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었다.

한·중·일 간의 도시교류는 2014년부터 매년 한중일 3개국에서 각각 하나의 도시를 선출하여 3개의 도시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이벤트를 개최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프로그램으로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행사는 각국의 지방의 문화예술 교류를 도모하면서, 동아시아 차원에서 현대예술문화와 전통문화, 그리고 다양한 생활문화에 관련된 문화예술을 교류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는 분명 한계가 있지만 2017년부터는 ‘아세안 문화도시’와 결합하여 ‘아시아 문화도시 네트워크’ 차원에서 확대되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문화협력 논의는 1900년대부터 역사학 또는 사상사 연구에서 동아시아 역사 발전의 내재적 동인으로 유교를 재해석하면서 동아시아적인 것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자 활기를 띠게 되었다. 간사이대학에서는 2005년부터 ‘동아시아 문화교섭학’이 제창되면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일체성(동일성)’보다는 ‘공시성’의 개념이 중시되었다. 이는 문화교류가 반드시 상호 대칭적이라기 보다는 일방적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동아시아 지역개념은 예전부터 존재해온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며, 지역의 일체성은 선험적인 자명성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되었다. 일체성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는 제 문화의 고유성의 관계에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감정적 반발’을 야기하기 쉬운 것으로 인식했다. 일본은 동아시아적 보편성과 일본적인 것을 대립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공시성 안에서 상호 관계성에 주목하고자 했다.

일본은 동아시아 공통문화를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교문화가 강조되기도 했다. 이노우의 경우에는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로서 유교적 ‘타자 인식’을 통해서 ‘신뢰’를 형성하는 공통점

이 있다고 보았다. 즉,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동아시아 유교가 낳은 타인에 대한 두터운 신뢰라고 제시하면서 ‘인간적 유대’에서 유교 사상에서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도출하고자 했다. 하지만 경제적 효율성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유교문화론의 설득력이 약화되었고, 오히려 유교적 인간관계론의 입지가 축소되었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중·일의 문화협력 논의는 한국의 경우에는 동북아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거나,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문화 개념의 창출을 제시하면서 진행되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평화공동체와 이익공동체 형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문화공동체를 바라보았다. 반면에 중국은 다민족 국가라는 점에서 문화공동체보다 주변운명공동체가 강조되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 중심의 공동체 구상을 위해서 유교문화와 한자문화를 중심으로 ‘중국적 담론’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개방적 다층적 네트워크’의 육성에 초점을 두고 동아시아 문화 이념의 모색을 문화의 다양성과 일본문화의 혼종성을 강조하면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통한 공동체 논의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유관국 미국의 문화협력 논의는 공공외교 측면에서 미국적 ‘가치’와 ‘문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역내 문화협력을 전략적 목표달성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미국의 가치를 전파하고 미국에 우호적인 여론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문화협력 정책은 공공외교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미국은 일반적인 공공외교 전략 차원에서 문화협력을 추진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 특화된 교육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투여되는 자원의 비중을 달리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서 문화협력을 공공외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문화협력을 문화교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관계를 더욱 다양화, 다각화 하고자 한다. 러시아의 문화협력은 국가 이미지 제고의 목표 아래 다양한 관광, 문화교류 프로그램,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 보급 등을 통해서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 문화를 통한 러시아의 국제 교류와 협력, 홍보, 러시아어 보급은 구소련 지역, 동유럽 지역 및 아시아 지역에서 주도권 강화를 위한 대외 정책의 연장선에서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는 외교부 산하의 ‘국제 과학문화 교류협력 센터’를 활용하여 외국과 장기적인 문화교류와 국가 브랜드 홍보, 경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문화부의 2018년 활동 보고서에는 문화외교를 러시아의 정신적 가치와 전통을 해외에 알리는 유용한 도구이자 러시아 세계의 정신적 단결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대외 이미지 제고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문화부 산하에 관광연방처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여기서 관광과 관련된 공공 서비스, 문화재 관리, 관광 관련 법안 시행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몽골의 문화협력에 관한 논의는 외교정책 차원에서는 진행되고 있으나 문화공동체를 고려한 논의는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몽골은 자국 문화를 보호하고 세계에 알리는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몽골은 문화협력을 외교정책 차원에서 다루면서 몽골인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보호하고 독특한 문화유산을 통해서 세계문화를 풍부하게 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역사문화 유산을 복원하여 세계에 몽골을 널리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이를 위해서 외국에서 몽골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대만의 문화협력에 관한 논의는 부진한 편이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받으면서 문화교류 및 문화공동체의 논의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관국(지역) 미국, 러시아, 몽골, 대만의 동북아문화공동체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부진한 상황에 있다. 유관국(지역)들은 외교적 차원에서 문화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화외교 정책이 문화공동체로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표 6-3〉 각국의 문화협력에 관한 논의 비교

국 가	내 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논의 하거나,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문화 개념의 창출 강조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평화공동체와 이익공동체 형성을 위한 토대로 문화공동체 구상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다민족 국가라는 점에서 문화공동체보다는 주변운명공동체를 강조 - 동시에 중국 중심의 공동체 구상을 위해 유교문화와 한자문화 등을 중심으로 한 '중국적 담론' 생산에 주력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적 다층적 네트워크' 육성에 초점 - 동아시아 문화 이념의 모색: 문화의 다양성과 일본문화의 혼종성을 강조하면서 인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공동체 논의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공동체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수단이며, 그 핵심은 미국의 가치를 전파하고 미국에 우호적 여론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에 있음 - 미국의 문화협력은 공공외교 정책차원에서 추진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에서 문화적 공감대가 부족하고, 아직 문화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 지역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낮은 상황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외교 차원에서 문화협력 논의가 이루어짐. 문화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부진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정치상황으로 문화협력과 문화공동체 논의 부진

4. 한·중·일 전문가 조사 비교

이 장에서는 한·중·일 3국의 전문가들이 같은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다른 답변을 내놓았는지를 간략히 비교하고 그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개념과 그 개념의 확장가능성에 대해서, 한국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중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충분히 이 개념이 자신들의 나라에서도 통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들이 동북아에 포함될 것인가에 있어서도 삼국 전문가들의 의견은 거의 일치했다.

그러나 실제로 동북아시아의 다자협력체 건설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일본의 전문가들은 대다수가 부정적이었으며, 정부 주도의 동북아문화공동체 건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한·중·일 3국에서 협한, 협중, 협일이 어느 정도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삼국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여기에서 각국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중국내의 협한 수준에 대해 한국 전문가들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지만 정작 중국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중국 전문가들은 오히려 중국내의 협일이 훨씬 심각하다고 보고 있었다. 일본에서의 협한 및 협중에 있어서는 삼국 전문가들이 의견이 일치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일본전문가들은 일본에서의 협한과 협중이 모두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었고, 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도 동조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가. 동북아 개념의 인식과 그 범위

한·중·일 전문가들이 “선생님께서 “동북아시아”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를 여쭙겠습니다. 아래 보기 중 동의하시는 항목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아래 표에 비교했다. 이 문항에는 “한반도와 그 주변 국가와 지역을 포괄하는 지리적 개념이다”, 그리고 “유교, 한자 문화, 역사적 경험 등을 공유하는 문화적 개념이다”라는 두 가지 답지가 주어졌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세 번째 답지가 있었다.

〈표 6-4〉 동북아 개념의 인식

동북아 개념의 인식	한국: 빈도 (%)	중국: 빈도 (%)	일본: 빈도 (%)
(1) 한반도와 그 주변 국가와 지역을 포괄하는 지리적 개념이다.	19 (95.0%)	6 (30.0%)	6 (25.0%)
(2) 유교, 한자 문화, 역사적 경험 등을 공유하는 문화적 개념이다	13 (65.0%)	1 (5.0%)	5 (25.0%)
(1)+(2) 지리적 개념이면서 동시에 문화적 개념이다.	12 (60.0%)	13 (65.0%)	9 (50.0%)
합계	20 (100.0%)	20 (100.0%)	20 (100.0%)

동의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가 가능한 다중선택 항목이었지만, 중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하나 씩만의 항목을 체크한 반면, 한국의 전문가들은 다중 체크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위 표에서 비교한 결과를 보면, 한국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동북아시아를 지리적 개념으로 보는 빈도가 높은 반면, 일본과 중국의 전문가들은 동북아시아를 지리적이며 동시에 문화적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즉, 동북아시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지리적 인접성 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동질성도 같이 지녀야 한다는 견해가 상대적으로 중국과 일본에서 높은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 절에서 상술한 것처럼 동북아시아라는 용어 자체가 중국과 일본에서는 잘 쓰이지 않거나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지적들이 있다. 이에 대한 각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아래에서 비교해보았다. “‘동북아시아’라는 개념은 주로 한국에서만 통용될 뿐, 인접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낯설고 잘 이용되지 않는 개념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라는 용어 혹은 개념이 중국과 일본에서도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각국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표 6-5〉 동북아 개념의 중·일 확장가능성

동북아 개념의 확장가능성	한국: %	중국: %	일본: %
(1) 매우 동의한다	10.0%	65.0%	20%
(2) 어느 정도 동의한다	40.0%	35.0%	60%
(3)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는다	60.0%	0.0%	20%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	0.0%	0%
* 동의함 = (1)+(2)	50.0%	100%	80%
* 동의하지 않음 = (3)+(4)	50.0%	0.0%	20%
합계	100.0%	100.0%	100.0%

위 문항을 보면,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중국과 일본의 전문가 대부분이 동북아 개념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을 내놓았다. 중국 전문가 20명 전부와 일본 전문가 80%가 확장가능성이 있다고 동의했다. 즉, 한국의 동북아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중국과 일본에서는 낯설 수 있을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단어 혹은 개념은 이미 존재하며 충분히 확장 가능한 용어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에 대해서는 한국 전문가들의 절반이 확장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 결과는 동북아시아 개념 사용에 큰 문제는 없으며, 충분한 설명과 설득과정을 거치면 이 용어와 개념을 확장·전파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다음으로 물어본 것은 동북아시아에 포함되어야 하는 국가 혹은 지역에 대한 질문이었다.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등 인근 10개국 및 지역의 리스트를 제시한 후, 각 지역이 동북아시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3개국 전문가들에게 물었고 그 답을 아래 표에 비교하였다.

〈표 6-6〉 ‘동북아시아’에 포함되어야 하는 국가 혹은 지역

	한국	중국	일본
한국	20 (100.0%)	20 (100.0%)	20(100%)
북한	19 (95.0%)	20 (100.0%)	20(100%)
일본	20 (100.0%)	20 (100.0%)	19(95%)
중국	20 (100.0%)	20 (100.0%)	19(95%)
대만	15 (75.0%)	14 (70.0%)	14(70%)
몽골	17 (85.0%)	17 (85.0%)	15(75%)
러시아	10 (50.0%)	12 (60.0%)	9(45%)
베트남	5 (25.0%)	0(0.0%)	3(15%)
미국	1 (95.0%)	2 (10.0%)	2(10%)
싱가포르	3 (14.0%)	0(0.0%)	2(10%)

위 표는 동북아시아의 범위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북아시아에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국가로 한국, 북한, 중국, 일본을 꼽는 것에는 3국의 거의 모든 전문가가 이의를 보이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대만의 경우였다. 한국의 경우 75%의 전문가가 대만을 동북아시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았으며, 나머지의 경우 대만을 제외하는 이유는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 혹은 문화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중국과 대만의 관계 때문이라는 현실적인 고려를 들었다. 일본의 경우에도 70%의 전문가가 대만을 동북아에 포함시켰으며, 반대의견으로는 대만은 일본에서 통용되는 '동아시아'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북아 개념과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있었다. 그런데 중국학자 70%가 대만을 동북아시아에 포함된다고 한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중국학자들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 정부의 견해에 동조하면서 대만의 포함 혹은 불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국학자 대부분이 대만을 동북아에 포함시킨 이유를 추측해보면,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동북아에 포함된다면 대만 또한 당연히 동북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몽골의 경우 문화적 동질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동북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대체로 한중일 전문가들은 대부분 몽골 또한 동북아 국가라고 보는 비율이 높았다. 러시아의 경우가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었다. 한국은 50%, 중국은 60%, 일본은 45%로 대략 절반 정도의 전문가들은 러시아도 동북아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 반면, 나머지 절반의 전문가들은 부정적이었다. 이는 역시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고려할 때 러시아는 한중일 삼국과 모두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그 지리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에 포함시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 전문가 25%와 일본 전문가 15%가 포함에 긍정적이었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모두 부정적이었다. 싱가포르의 경우 한국 전문가 15%가 긍정적인 반면, 일본은 10%, 중국은 모두 부정적이었다. 큰 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베트남과 싱가포르까지 동북아 개념을 확장시키는 것에 한국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긍정적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현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신남방정책의 영향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 일본이 각각 동맹을 맺고 있고 민주주의라는 문화적 유사성도 강한 국가였지만, 그러한 밀접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동북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한국 전문가 1명, 중국 및 일본 전문가 각 2명 만이 긍정적이 답을 하였다. 비록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과 한국, 일본에 대한 동맹관계의 중요성이 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동질성이라는 두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을 동북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삼국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내리고 있었다.

나.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필요성과 가능성

삼국 전문가들에게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공동체 혹은 다자협력체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물어본 결과를 비교하였다. “유럽연합처럼, 동북아시아에서 한·중·일이 중심이 되어 ‘동북아시아 연합’ 혹은 동아시아 연합’ 같은 다자적 협력체를 일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삼국 전문가들의 답변을 아래 표에 비교해서 정리했다.

〈표 6-7〉 동북아다자협력체의 가능성

동북아다자협력체 가능성	한국: %	중국: %	일본: %
(1) 매우 가능하다	0.0%	5.0%	5%
(2) 어느 정도 가능하다	60.0%	60.0%	25%
(3) 어느 정도 불가능하다	30.0%	15.0%	60%
(4) 전혀 불가능하다	10.0%	20.0%	10%
* 가능함 = (1)+(2)	60.0%	65.0%	30%
* 불가능함 = (3)+(4)	40.0%	35.0%	70%
합계	100.0%	100.0%	100.0%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의 답변 분포는 대략 비슷했다. 한국 전문가의 60%, 중국 전문가들의 65%가 동북아에서의 다자협력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서 한국 및 중국 전문가들과 의견이 달랐다. 일본 전문가의 70%가 동북아공동체 혹은 동아시아공동체의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한국 및 중국, 일본 전문가들이 각각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전망에 대해 내놓은 구체적인 이유는 각 절의 분석에 좀 더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동북아공동체 구성을 위해서 일본 사회, 특히 일본의 지식인 사회에 대한 더 폭넓은 교류와 공감대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은 정치경제적 구조가 상이한 중국 등과 같은 공동체로 묶이는 것에 가능하지도 않고 그다지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부분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확보하고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한 주의를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 형성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꾸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삼국의 전문가에 던졌다: “만약 정부⁵⁰³⁾가 한·중·일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주변 국가와 지역들을 포함시키는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추진한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나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 질문의 위의 질문과 달리 공동체의 성격을 ‘문화공동체’로 구체화했으며, 사업 추진 주체도 민간이나 시민사회가 아닌 정부로 규정했다는 차이가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국과 중국은 긍정적으로, 일본은 부정적으로 갈렸다.

〈표 6-8〉 정부주도 한·중·일 중심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

한중일 중심 문화공동체 실현가능성	한국: %	중국: %	일본: %
(1) 매우 가능하다	0.0%	10.0%	5.0%
(2) 어느 정도 가능하다	55.0%	65.0%	10%
(3) 어느 정도 불가능하다	30.0%	20.0%	55%
(4) 전혀 불가능하다	15.0%	5.0%	30%
* 가능 = (1)+(2)	55.0%	75.0%	15%
* 불가능 = (3)+(4)	45.0%	25.0%	85%
합계	100.0%	100.0%	100.0%

한국 전문가들은 정부주도의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형성 가능성을 55% 정도가 긍정적인 반면, 중국의 경우는 75%로 더욱 긍정적이었다. 반면 일본 전문가들은 85%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아서, 한국/중국의 전문가들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 차이에 대한 하나의 설명은 과거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의 이름으로 동북아의 침략을 정당화한 경험 때문에, 정부 주도의 공동체 건설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부정의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해당 장에 설명되어 있다.

다. 동북아시아의 정체성과 한·중·일 상호 인식

동북아시아 만큼 오랜 역사적 대립과 전쟁의 상흔을 가졌지만, 유럽에서는 성공적인 다자협력

503) 일본 설문지의 경우 “일본 정부”라는 표현 사용.

체를 구축하고 정치적 통합의 단계로까지 발전시켰다. 유럽에서의 성공이 동북아시아에서도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삼국 전문가에게 던지고 그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헴머와 카첸슈타인(Christopher Hemmer and Peter Katzenstein)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지역에서 유럽연합이 가능했지만, 아시아에서는 이에 비견될 만한 지역적 다자협력이 형성되지 못했던 이유를 지역내 국가들이 공유하는 정체성의 유무에서 찾고 있습니다. 즉, 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 통합에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공통적인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십니까?”

〈표 6-9〉 동북아에 공통적 정체성이 부재하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

동북아의 공통적 정체성 부재	한국: %	중국: %	일본: %
(1) 매우 공감한다	5.0%	5.0%	15.0%
(2) 어느 정도 공감하다	45.0%	40.0%	25.0%
(3) 어느 정도 공감하지 않는다	35.0%	40.0%	40.0%
(4)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5.0%	15.0%	20.0%
* 공감 = (1)+(2)	50.0%	45.0%	40.0%
* 공감하지 않음 = (3)+(4)	50.0%	55.0%	60.0%
합계	100.0%	100.0%	100.0%

한자 및 유교 문화, 서세동점에 대한 공통의 역사적 기억 등 동북아에는 분명 동질감의 바탕을 이룰 만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문에 응답한 삼국의 전문가 거의 절반(한국 50%, 중국 45%, 일본 40%) 정도가 동북아시아가 유럽연합 같은 공동체 건설에 성공하지 못한 요인이 공통적 정체성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었다.

반복하지만, 문화적 혹은 역사적 유사성에 삼국의 전문가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러 가지 문화적 동질성의 요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체성(identity)의 수준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공통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삼국의 문화적 동질성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지를 다음 질문에서 물었으며, 그 답변은 아래 표에 비교되어 있다.

〈표 6-10〉 동북아시아 공동 정체성의 바탕을 이루는 요소

	한국: 빈도(%)	중국: 빈도(%)	일본: 빈도(%)
유교문화 및 한자 사용	10 (50.0%)	17 (85.0%)	13 (65.0%)
서세동점 시기에 대한 공통의 역사적 경험	10 (50.0%)	11 (55.0%)	10 (50.0%)
공통의 경제적 이해관계	7 (35.0%)	19 (95.0%)	12 (60.0%)
군사적 안보 협력의 필요성	8 (40.0%)	10 (50.0%)	3 (15.0%)
비군사적 안보 협력의 필요성	7 (35.0%)	14 (70.0%)	9 (45.0%)
환경 문제에 대한 공통적 대응의 필요성	3 (15.0%)	18 (90.0%)	14 (70.0%)
노동, 복지, 이민자, 인구 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공통적 대응의 필요성	8 (40.0%)	12 (60.0%)	16 (80.0%)
한류(韓流) 등 공통적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13 (65.0%)	5 (25.0%)	11 (55.0%)

공통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은 모두 유교문화 및 한자 사용을 중요한 동질감의 요소로 보고 있었다. 역사적 경험에서 동질감을 찾을 수 있다는 견해도 약 절반 정도였다.

한국 전문가들은 한류 등 공통적 대중문화를 동질감의 요소로 보았지만(65%), 중국 전문가들은 대개 부정적(25%)이고 일본 전문가들은 그 중간쯤(55%)이었다. 대중문화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 전문가들은 ‘공통의 경제적 이해관계(95%)’, ‘환경문제에 대한 공통적 대응의 필요성(90%)’에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였는데, 한국의 전문가들은 경제적 이해관계에서는 35%, 환경문제에서는 15%만이 동의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전문가들이 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동의 비율이었다. 즉, 중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문화적인 협력보다 경제 및 환경 같은 좀더 현실적이고 실제 삶에 맞닿아 있는 문제를 통해 협력 방안을 찾는 것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각국의 전문가들에게 삼국의 혐오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 지에 대해 물었다. 한국의 혐증, 혐일 인식 수준과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물론 한국전문가들이 좀 더 많은 정보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 혹은 일본인을 얼마나 혐오하는 지에 대한 중국 및 일본의 인식 또한 동북아의 현실 중 매우 중요한 일부이며, 여기에서 이를 비교하는 것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표 6-11〉 한국의 혐중 수준

한국의 혐중 수준	한국전문가	중국전문가	일본전문가
(1) 매우 심각	1 (5.0%)	6 (30.0%)	1 (5%)
(2) 어느 정도 심각	12 (60.0%)	8 (40.0%)	7 (35%)
(3) 그다지 심각하지 않음	6 (30.0%)	5 (25.0%)	9 (45%)
(4) 전혀 심각하지 않음	1 (5.0%)	0 (0.0%)	1 (5%)
* 심각함 = (1)+(2)	13 (65.0%)	14 (70.0%)	8 (40%)
* 심각하지 않음 = (3)+(4)	7 (35.0%)	5 (25.0%)	10 (50%)
합계	20 (100.0%)	20 (100.0%)	18 (90.0%) ⁵⁰⁴⁾

〈표 6-12〉 한국의 혐일 수준

한국의 혐일 수준	한국전문가	중국전문가	일본전문가
(1) 매우 심각	1 (5.0%)	2 (10.0%)	5 (25%)
(2) 어느 정도 심각	12 (60.0%)	7 (35.0%)	5 (25%)
(3) 그다지 심각하지 않음	6 (30.0%)	10 (50.0%)	7 (35%)
(4) 전혀 심각하지 않음	1 (5.0%)	0 (0.0%)	3 (15%)
* 심각함 = (1)+(2)	13 (65.0%)	9 (45.0%)	10 (50%)
* 심각하지 않음 = (3)+(4)	7 (35.0%)	10 (50.0%)	10 (50%)
합계	20 (100.0%)	20 (100.0%)	20 (100.0%)

위의 두 표에서는 한국에서의 혐중 및 혐일 수준에 대해 삼국 전문가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비교해보았다. 한국전문가들의 65%가 한국에서 혐일과 혐중이 매우 혹은 어느정도 심각하다는 답을 내놓았다. 반면 중국전문가들이 보는 한국의 혐중 수준은 심각하다는 답변이 70%, 혐일 수준은 45%였다. 즉, 중국전문가들은 한국에서 혐일보다 혐중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일본전문가들의 경우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한국의 혐일수준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50%, 혐중수준은 40%였다. 전반적으로 삼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혐중, 혐일이 존재하며 어느 정도 심각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고, 특히 혐중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전문가들의 우려가

504) 무응답자 2명.

큰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중국에서의 혐한과 혐일은 그 분포가 달랐다. 한국과 일본전문가 중 보는 중국에서의 혐한 수준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각각 45%와 30% 정도였는데, 중국내 여론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중국전문가들은 그 비율이 10%에 그쳤다. 즉, 사드 배치 이후 중국에서 혐한 감정이 심화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 등으로 한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이러한 걱정과는 달리 중국의 전문가들은 혐한 수준을 그리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표 6-13〉 중국의 혐한 수준

중국의 혐한 수준	한국전문가	중국전문가	일본전문가
(1) 매우 심각	1 (5.0%)	0 (0.0%)	1 (5%)
(2) 어느 정도 심각	8 (40.0%)	2 (10.0%)	5 (25%)
(3) 그다지 심각하지 않음	11 (55.0%)	16 (80.0%)	9 (45%)
(4) 전혀 심각하지 않음	0 (0.0%)	1 (5.0%)	4 (20%)
* 심각함 = (1)+(2)	9 (45.0%)	2 (10.0%)	6 (30%)
* 심각하지 않음 = (3)+(4)	11 (55.0%)	17 (85.0%)	13 (65%)
합계	20 (100.0%)	20 (100.0%)	19 (95.0%)

〈표 6-14〉 중국의 혐일 수준

중국의 혐일 수준	한국전문가	중국전문가	일본전문가
(1) 매우 심각	3 (15.0%)	3 (15.0%)	2 (10%)
(2) 어느 정도 심각	13 (65.0%)	11 (55.0%)	7 (35%)
(3) 그다지 심각하지 않음	3 (15.0%)	5 (25.0%)	9 (45%)
(4) 전혀 심각하지 않음	1 (5.0%)	0 (0.0%)	2 (10%)
* 심각함 = (1)+(2)	16 (80.0%)	14 (70.0%)	9 (45%)
* 심각하지 않음 = (3)+(4)	4 (20.0%)	5 (25.0%)	11 (55%)
합계	20 (100.0%)	20 (100.0%)	20 (100.0%)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혐일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70%의 중국 전문가들이 혐일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한국전문가들도 이런 시각에 동의하였는데(80%), 일본전문가들은 오히려 45% 만이 심각하다고 답변, 의견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6-15〉 일본의 혐한 수준

일본의 혐한 수준	한국전문가	중국전문가	일본전문가
(1) 매우 심각	3 (15.0%)	3 (15.0%)	11 (55%)
(2) 어느 정도 심각	11 (55.0%)	8 (40.0%)	6 (30%)
(3) 그다지 심각하지 않음	6 (30.0%)	8 (40.0%)	2 (10%)
(4) 전혀 심각하지 않음	0 (0.0%)	0 (0.0%)	0 (0%)
* 심각함 = (1)+(2)	14 (70.0%)	11 (55.0%)	17 (85%)
* 심각하지 않음 = (3)+(4)	6 (30.0%)	8 (40.0%)	2 (10%)
합계	20 (100.0%)	20 (100.0%)	19 (95.0%)

〈표 6-16〉 일본의 혐중 수준

일본의 혐중 수준	한국전문가	중국전문가	일본전문가
(1) 매우 심각	3 (15.0%)	6 (30.0%)	10 (50%)
(2) 어느 정도 심각	7 (35.0%)	9 (45.0%)	6 (30%)
(3) 그다지 심각하지 않음	10 (50.0%)	4 (20.0%)	4 (20%)
(4) 전혀 심각하지 않음	0 (0.0%)	0 (0.0%)	0 (0%)
* 심각함 = (1)+(2)	16 (80.0%)	15 (75.0%)	16 (80%)
* 심각하지 않음 = (3)+(4)	4 (20.0%)	4 (20.0%)	4 (20%)
합계	20 (100.0%)	20 (100.0%)	20 (100.0%)

일본전문가들은 오히려 일본에서의 혐한 및 혐중 수준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었다. 85%의 일본전문가들이 일본국민들 사이의 혐한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혐중 수준이 심각하다는 답변도 80%에 달했다. 한국전문가들이 보는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70%의 한국전문가들은 일본의 혐일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75%의 중국전문가들 또한 일본의 혐중 수준이 높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면, 각국이 서로에 대한 갖고 있는 혐오의 문제에 대해 삼국 전문가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경우였다. 삼국 전문가들이 일본의 혐한 및 혐중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다. 물론, 역사 및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세 나라의 감정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무모한 작업일 것이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중국에 대한 역사적 가해의 경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혐한 및 혐중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의 혐오가 한국 및 중국에서의 혐오 감정보다 그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결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각국에 대한 고정관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 한·중·일 문화적 협력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북아에서의 다자적 협력체의 가능성과 전망에 대해서 각국 전문가들의 전망은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특히 일본의 전문가들은 동북아공동체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삼국의 전문가들 거의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은 동북아에서의 민간교류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민간 및 개인차원에서의 동북아시아내 교류의 전망을 물었을 때, 한국 및 중국전문가들 95%, 일본 전문가들 90%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표 6-17〉 동북아 민간교류 전망

동북아 민간교류 전망	한국: %	중국: %	일본: %
(1) 크게 증가할 것	25.0%	30.0%	55.0%
(2) 어느 정도 증가할 것	70.0%	65.0%	35.0%
(3) 어느 정도 감소할 것	5.0%	0.0%	10.0%
(4) 매우 감소할 것	0.0%	0.0%	0.0%
* 증가전망 = (1)+(2)	95.0%	95.0%	90.0%
* 감소전망 = (3)+(4)	5.0%	0.0%	10.0%
합계	100.0%	95.0% ⁵⁰⁵⁾	100.0%

505) 1명 무응답

일본 전문가들은 동북아다자협력체의 가능성이나 정부주도 문화공동체 건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이었으나, 민간 교류 증가에 있어서는 절반 이상(55%)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한국의 25%와 중국의 30%를 크게 앞서는 것이다.

삼국의 국민들이 서로 교류하며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은 결국 역사적 상처를 아물게 만들고 갈등의 가능성을 낮추게 될 것이다. 정부 정책 및 기업의 투자가 동북아다자협력체 건설에 필수적이겠으나, 결국 그 근간이 되는 것은 각 국민들이 서로에게 느끼는 동질성과 유대감의 형성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삼국 전문가들이 민간교류가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동북아다자협력체 건설에 있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제 2 절 한국의 대응방향과 정책과제

1. 한국의 대응방향

가. 한·중·일의 3국 관계와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필요성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에는 ‘협오’라는 유령이 지역을 배회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일본이 급속한 경제사회적 성장을 이루며 아시아와 세계에 경제적, 문화적 힘을 발산했다면, 1980년대 이후에는 한국이 급속한 경제·정치적 발전을 이루면서 아시아와 세계에 경제적, 문화적 힘을 발산했다.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는 중국이 급속하고 거대한 경제발전을 통해 아시아와 세계에 경제적, 정치군사적 힘을 발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을,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따라 배웠고, 각국의 내면에 서로의 모습이 아로새겨졌다. 그리고 한·중·일 3국 간에는 유학생과 각종 기업인, 그리고 관광객들이 엄청난 규모로 오고갔다. 이렇게 각국 서로의 관계가 가장 긴밀해졌을 때 ‘협오’의 독버섯이 우후죽순처럼 자라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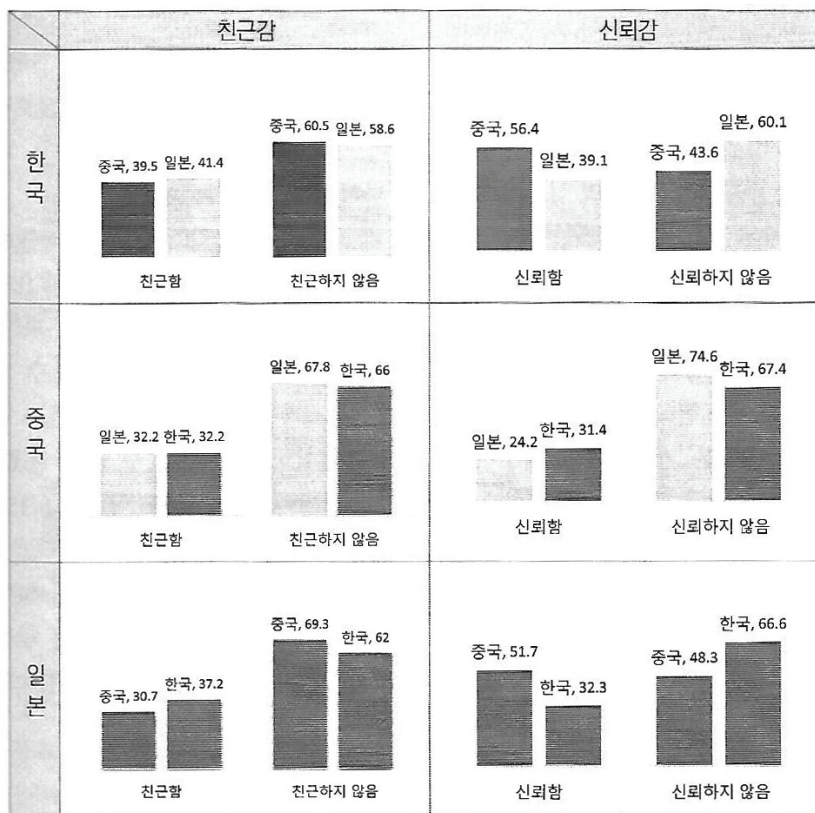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이후 4년이 지난 2002년, 한국과 일본이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공동개최해 한일관계가 절정에 도달했을 때 일본에서 한편으로는 한류가 나타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혐한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지난 100년간 심각했던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좁아지면 질수록 일본에서는 혐한의식이 강화되었고, 한국에서는 반일의식이 높아졌다. 2013년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뒤 4년이 된 2016년 한중관계는 절정에 달했다. 양국 간의 경제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외교적으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긴밀했고, 사회문화적 교류협력도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2016년 북핵문제로 인한 한국의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한중관계는 급랭했다. 중국은 대한 경제제재만이 아니라 정부 주도로 반한의식을 부추겼고, 이에 대응해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중심이 되어 반중의식에 불을 질렀다. 당시의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꿈’을 이야기하면서 그 동안 발전의 모델로 삼았던 한국의 모습을 지우려했고, 자신의 정체성에 기반한 독자의 모델로 굴기하려 했다.

그 결과 이번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한·중·일 삼국의 연구자들 모두 서로에 대한 혐오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 중국전문가들은 한국에서의 혐중이 70%, 한국에서의 혐일이 45%, 중국에서의 혐한이 10%, 중국에서의 혐일이 70%, 일본에서의 혐한이 55%, 일본에서의 혐중이 75%라고 응답했다. 일본전문가들은 한국에서의 혐중이 40%, 한국에서의 혐일이 50%, 일본에서의 혐한이 85%, 일본에서의 혐중이 80%, 중국에서의 혐한이 30%, 중국에서의 혐일이 50%라고 응답했다.

한국전문가들은 한국에서의 협증이 65%, 협일이 65%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을 종합하면 일본의 협증은 77.5%, 일본의 협한은 70%, 한국의 협일은 47.5%, 한국의 협증은 55%, 중국의 협일은 60%, 중국의 협한은 20%이다. 그 순서를 보면 일본의 협증 > 일본의 협한 > 중국의 협일 > 한국의 협증 > 한국의 협일 > 중국의 협한 순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협한을 제외하고 모두가 50% 대 이상의 협오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6-1] 한·중·일의 상호 인식

(단위: %)



출처: 최은미, “한중일 3국협력의 전개와 향후 과제(1999-2018),”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8), p. 19.

일반적으로 지배를 받거나 침략을 당한 국민(민족)이 지배(침략)국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점에서 중국의 혐일이나 한국의 혐일, 혐중은 역사로부터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인이 그들이 지배했던 중국과 한국에 대해 강한 혐오를 보이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열등성이나 신뢰의 부족만이 아니라, 경제문화적 격차의 감소나 추월으로 인한 상실감과 국력의 역전으로 인한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이 미국이나 유럽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정을 보이지 않는데 왜 유독 중국과 한국에 대해 이러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일까? 한국 또는 일본과 중국에는 절대 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럴까? 이는 중국도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의 마음이다. 그것은 한, 중, 일 세 나라가 모두 이웃국가로서 일종의 ‘근친’이고 서로에 대한 우월의식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근친증오’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가족이 관계가 나빠지면 더욱 원수가 된다는 일반적인 상식이 여기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가 새로운 차원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동체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이 2018년 7월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중일 3국의 협력에 대해 한국은 91.2%, 일본은 79%, 중국은 76.3%가 협력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했다.⁵⁰⁶⁾ 이는 비록 현재 한중일 3국의 국민들이 서로에 대해 친밀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으나 ‘유대강화를 숙명으로’⁵⁰⁷⁾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21세기에 들어 지역주의가 쇠퇴하고 국가단위의 민족(국민)주의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중화민족주의에 불을 질렀고, 푸틴의 러시아는 유라시아주의를 주창하며 러시아의 유라시아적 정체성을 강조하며 크림반도를 병합했다. 그리고 아베 수상은 ‘일본제국’을 미화하면서 ‘새로운 일본’을 주창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하에 미국 우선주의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유럽에서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고, 헝가리, 프랑스 등 유럽대륙에서도 기존의 유럽연합적 지향과는 달리 국민(민족)국가적 지향성을 강조하는 정치 세력이 날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동북아에서 과거에 벌어진 전쟁과 적대로 인한 역사적 갈등,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심리적 박탈감과 우월감,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민(민족)국가주의 조류는 우리들에게 평화로운 삶, 행복한 일상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흐름은 1990년대 냉전의 종식 이후

506) 최은미, “한중일 3국 협력의 전개와 향후과제(1999~2018),” p. 21.

507) 『동아일보』, 2018.11.16; 최은미, 위의 글, p. 29.

강력하게 전개된 세계화의 물결과 SNS등 ITC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이 한없이 축소된 지구촌의 시대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국민(민족)국가와 지구촌, 국가주의와 보편주의의 문제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급속한 현안이 된 것이다. 여기서 국가주의와 보편주의(지역주의, 세계주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국가(민족)주의와 보편주의의 결합양태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⁵⁰⁸⁾

[그림 6-2] 국가주의와 보편주의의 결합양태

제국적 보편 imperial universality	무국적 보편 또는 반(反)국적 보편 anarchical universality anti-national universality
국제적 보편 international universality	초국적 보편 transnational universality

여기서 제국적 보편은 과거 중화제국적 보편의 확장,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미국의 네오콘이 표명한 혁명적 보수주의 등이 해당하므로 이것을 염두에 둔 지역주의 또는 지역공동체론은 우리가 추구할 수 없다. 또한 국가주의가 “국가를 지고의 존재, 신적인 절대권위를 가진 실체로 상징”하기에 편협하고 배타적이며 팽창적인 성격을 지니지만, 무정부상태의 위험성과 자유·평등·인권·민주 등 보편가치의 실현할 수 있는 기본단위이자 최고의 정치공동체라는 인식을 염두에 둘 때⁵⁰⁹⁾ ‘무국적, 반국적 보편’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이 두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는 ‘국제적 보편’과 ‘초국적 보편’을 지역주의 및 세계화 추진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국제적 보편은 “제국적 보편과는 달리 특정국가의 시공간적 장악을 통한 보편의 창출이 아니라 개별국가에 대한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합의된 보편인데, 개별국가가 지난 정체성과 특수성을 인정하고, 국가들 간의 약속을 통해 보편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샬러드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초국적 보편은 “국가의 일정한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에 주목하면서 국가라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NGO, 자본조직, 노동조직 등의 광범위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보편을 창출해내는 것으로 스파게티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다.⁵¹⁰⁾

508) 김명섭, “국가주의와 보편주의의 조화방안,” 『동북아를 보는 눈: 국가주의와 보편주의』 (동북아시아대위원회, 동북아시아사재단 주최 심포지움 발표논문집, 2007.5.30.), p. 16.

509) 강정인, “국가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정치철학적 접근,” 『동북아를 보는 눈: 국가주의와 보편주의』 (동북아시아대위원회, 동북아시아사재단 주최 심포지움 발표논문집, 2007.5.30.), pp. 28~29.

510) 김명섭, “국가주의와 보편주의의 조화방안,” p. 17.

‘협오’가 유명처럼 배회하고 적대가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동북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화합하고 평화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국제적 보편과 초국적 보편으로서 동북아협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동북아문화공동체론’은 이 점에서 먼 미래의 일이나 공허한 추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화되고 세계화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계된다.

나. 지역적 범주 문제: ‘동북아’, ‘동아시아’, ‘아시아-인도태평양’, ‘지구’

이번 협동연구의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지역범주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와 이해관계에 따라 구성되고 해체되며 재구성되는, “물리적, 심리적, 행태적 특성들의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혼합물”로 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선 우리의 필요와 이해관계를 따져봐야 하며, 그 다음으로 물리적, 심리적, 행태적 특성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유관국(지역)들이 지역의 범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고, 또 이와 관련한 지역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한국은 기본적으로 한국을 중심에 두고 일본과 중국을 핵심으로 하는 동심원의 동북아를 범주화했다. 즉 지리적으로는 남북한, 중국, 일본, 극동러시아를 포함하고, 문화적으로는 남북한, 중국, 일본을, 지정학적으로는 남북한, 중국, 일본에 러시아와 미국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범주화는 역사적인 근거만이 아니라 한국이 현실적인 남북한문제, 외교안보문제 나아가 경제문화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적으로 고민해야 할 지역범주이기 때문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를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했는데, 이는 기존의 ‘동북아’라는 지역개념으로는 현재의 세계변화를 담아낼 수 없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서 ‘동북아플러스’의 플러스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으로 표현되는데, 북방으로는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로 확장되고, 남방으로는 아세안과 인도로 지역의 범주가 확장되었다.

중국은 당과 정부 차원에서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주의에 대해 논의를 전개해왔는데 동북아와 관련된 지역논의는 ‘주변’이라는 범주이다. 중국은 아시아대륙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중심에 둔 주변은 동북아시아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등 아시아의 대부분을 포괄한다. 따라서 중국에게 유의미한 지역범주는 결국 ‘중국 주변지역’이고, 이는 ‘동북아’보다 훨씬 넓은 ‘아시아’이다.

중국은 2015년부터 중국의 꿈이 이루어지는 2049년까지 35년간 기본적 대외정책이자 국가대 전략인 ‘일대일로 비전과 행동’을 발표했다. 여기서 ‘일로’는 북아시아-러시아-북유럽, 중앙아시아-서아시아-남유럽, 동남아-남아시아(인도)의 세 루트를 포괄하고, ‘일로’는 남중국해-남태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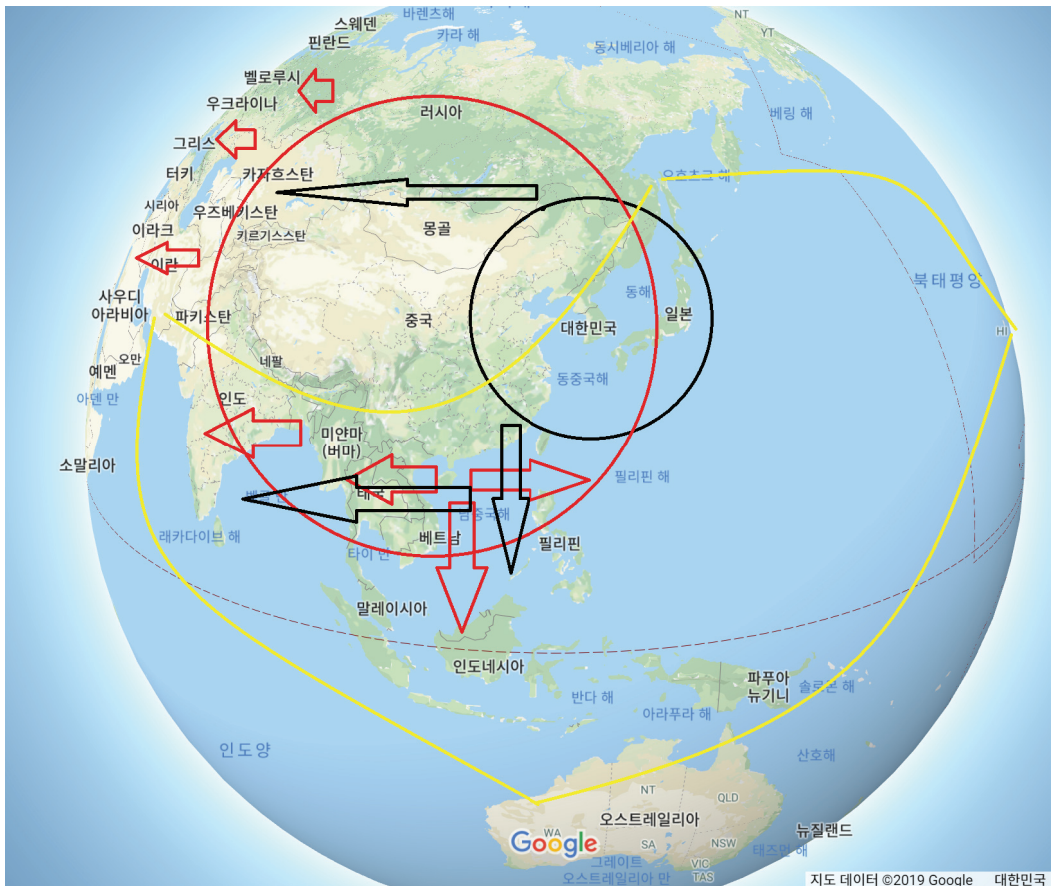
양, 남중국해-인도양의 두 루트를 포괄한다. 따라서 중국은 기존의 중국 주변지역에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와 태평양, 인도양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서태평양의 해양국가로서 본질적으로 대양 지양적이다. 즉 냉전이후에는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지역 범주를 주창했고, 21세기 중국의 굴기 이후에는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 범주를 구상하여 이를 미국과 통용하며 매우 강조한다. 이 두 지역범주에서 일본이 가장 중시하는 지역은 아시아대륙과 태평양, 인도양과 태평양의 가교인 동남아(아세안)이다. 그래서 일본은 동남아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아세안에서 일본은 역외 국가 중 압도적으로 높은 친밀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남태평양국과 함께 동태평양 연안국을 중시하고, 인도태평양에서는 ‘인도’를 중시한다. 일본이 이렇게 지역범주를 확장함에 따라 한반도의 중요성은 약화된다. 일본은 1990년대에 ‘일본해(동해)를 중심으로 한 ‘환일본해권’을 ‘북동아시아’라는 개념으로 설정하여 협력을 모색했지만, 남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일본에게 동북아시아라는 지역 범주의 유의미성이 아주 약화되었다. 현재의 국제관계 추세와 일본의 대외정책을 고려할 때 일본의 ‘탈 동북아’는 가속화될 것이고, ‘동북아공동체’는 일본에게 공허하게 인식될 것이다.

미국은 원래 동북아공동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했고, 그 대신 세계패권국가로서 자신의 자유, 민주 등의 이념을 지구적 보편이념으로 확산시키는 공공외교에 집중해왔다. 비록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은 글로벌 행위자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지역적으로는 동북아보다는 직접적으로 미국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에 더 집중할 것이다.

러시아는 푸틴의 신동방정책과 연해주의 지리적 조건으로 ‘동북아’라는 지역범주에 매우 애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이 21세기에 들어 중요한 지역범주로 등장하자 러시아는 스스로를 ‘아시아태평양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푸틴은 러시아를 기본적으로 유라시아국가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설정하는 지역범주는 ‘유라시아-태평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3] 한·중·일의 주요 지역주의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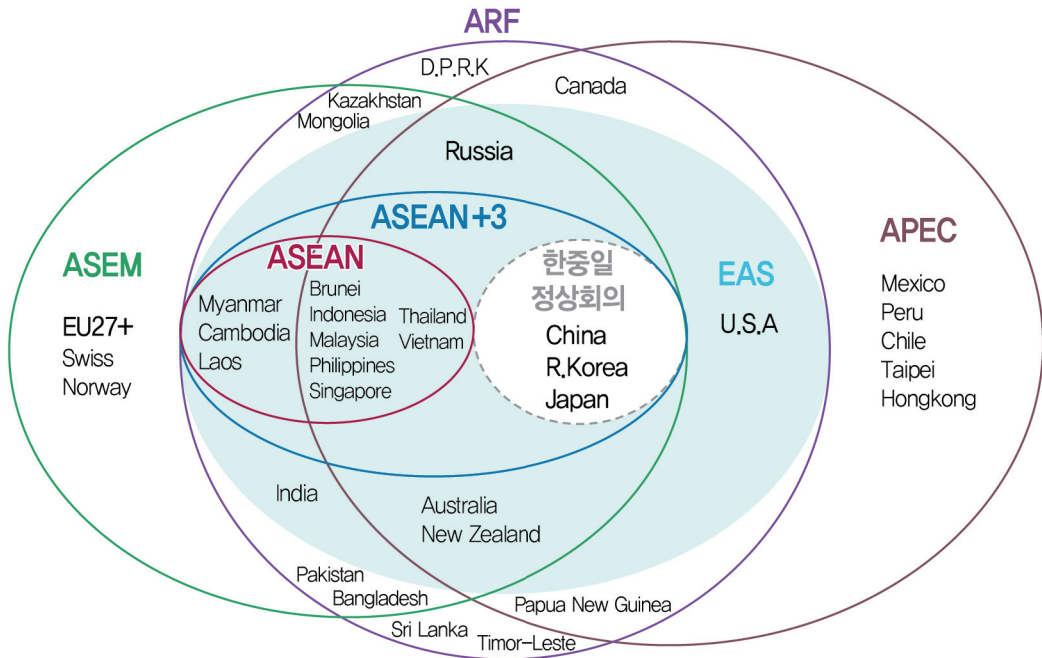


그 동안 한국에서 동북아라는 지역범주가 핵심적 지역범주로 역할을 해 온데 대한 문제제기로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의 ‘동북아 중심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동북아 중심주의적 사고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의 확대를 제약하고, 외부와의 생산적 논의가 불가능하게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를 대체하는 지역범주로 ‘동아시아’를 고려할 수 있다.

‘동아시아(East Asia)’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가장 의미있는 회의체는 2005년 ASEAN+3(한중일)을 모태로 하여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가 결합된 ASEAN+6의 형태로 출범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이다. 여기에 2011년 태평양, 대서양 국가인 미국과 유라시아 국가인 러시아가 결합됨으로써 ‘동아시아정상회의(EAS)’는 동북아(한중일)과 동남아(아세안) 그리고 인도양

(인도)와 남태평양(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유라시아와 동태평양을 모두 포괄하는 거대한 지역개념이 되었다.

[그림 6-4]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중심으로 한 각종 지역협력체



결국 아시아 대륙 전체에 걸친 중국의 강대화와 이를 균형되게(balancing)하기 위한 미국과 인도, 호주와 뉴질랜드의 동일 지역범주 포함은 위의 지구본에서 제시된 지역 전체를 하나의 지역범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 지역 전체는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인도-태평양'이며, 정치적으로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아세안지역포럼(ARF)으로 대표된다. 이러한 지역범주는 유럽 + 아프리카 대륙과 미주대륙과 연결끈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들과 구별되는 나름의 역사적, 정치적, 지리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지역범주는 한반도 차원 ⇒ 동아시아(아시아-인도태평양) 차원 ⇒ 지구 차원으로 크게 세 범주로 나누어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때 동북아의 핵심국가인 한중일은 지역주의적 담론의 범주보다는 3국 간의 국제관계로 볼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1999년부터 계속되어온 '한중일 정상회의'는 의미가 크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 구상한 동북아다자안보체제(남·북·미·중·일·러), 동북아철도공동체, 동북아에너지공동체 등도 동아시아의 소지역협력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동아시아’ 즉, ‘아시아-인도태평양’ 지역은 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신경제구상, 동북아협력구상 그리고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가를 거론한다면 동으로는 태평양 국가인 미국, 남으로는 동남아와 호주, 남서로는 인도, 서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들, 북으로는 몽골과 러시아를 포괄하는 지역이다. 앞으로 ‘동북아다자평화안보체제’와 같은 구체적인 주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지역전략의 범주는 동북아가 아니라 동아시아, 즉 ‘아시아-인도태평양’을 대상으로 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지역전략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아시아-인도태평양’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최근 외교부가 조직개편에서 동북아국에 중국·대만과 몽골, 아세안국(동남아국)에 아세안 10개국, 아시아태평양국에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을 담당케 한 것도 지역과 관련된 세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처럼 지역주의와 관련된 지역의 범주를 아시아-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해도 현재 세계가 지역화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구화(글로벌화)되고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전까지는 일국적 범위, 지역적 범위, 지구적 범위 등으로 사람들의 활동이 확산되었지만, 1990년 이후의 IT혁명과 교통의 발전은 이 세 가지 범주가 동시에 전개된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의 문화적 현상은 SNS나 세계 공연투어를 타고 동시에 세계로 확산되며, 애초부터 세계를 대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이를 국내로 역으로 확산시키는 경우도 있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세계무대에서 먼저 큰 인기를 끌었던 것, 한국 드라마 ‘킹덤’이 넷플릭스라는 세계 공급망을 통해 방영되고 이것을 국내에서 시청하게 된 것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문화와 관련하여 공동체 또는 네트워크를 이야기할 때 이제는 일국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지리적 구분이 무의미해졌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오늘날의 세계는 명실상부하게 ‘지구촌(글로벌)’이 되었고, 이것은 외교·안보·경제만이 아니라 문화·사회·교육·인적 교류 등 모든 방면에서 동시에 나타난다. 특히 문화는 SNS를 통해 거리의 장벽을 뛰어넘고, 인공지능(AI)에 기초한 통번역을 통해 언어적 차이를 뛰어 넘으면서 세계화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점에서 향후 문화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지역범주는 무의미해지고 지구적 차원의 논의만이 의미가 있게 될 것이다.

다. ‘포괄적 틀’의 문제 - 공동체에서 네트워크로

문화와 관련된 우리의 담론이 ‘정체성과 동질성’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체’ 논의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질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방적이고 다층적인 네트워크’가 되어야 하는지

에 대한 논의도 주요한 쟁점이다.

현실적으로 동북아문화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유교적 정체성, 한자문화권, 중국식 율령체제에 따른 천하체제(조공체제) 또는 불교문화권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은 과거 전통시대의 것일 뿐 현재의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조차도 유럽의 기독교적 정체성 또는 그리스·로마적 정체성에 비교하면 매우 약하다고 평가한다.

또한 동북아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국가인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국가이념과 정치경제체제 면에서 아주 이질적이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자유민주이념에 입각해 있지만, 천황제국가의 일본과 민주공화제의 한국은 매우 다르다. 중국과 북한은 모두 공산주의에 입각해 있지만, 주체·유일사상과 세습체제에 기초한 북한은 중국식 사회주의에 입각한 중국과 다르다. 공산주의를 경험한 러시아 또한 권위주의체제로서 동북아의 여타 국가들과 다르다.

현실에 존재하는 동북아의 이러한 약한 정체성과 상반된 이념에 기초한 각 국가의 체제를 염두에 둘 때, 동북아문화공동체는 ‘과거’와 ‘현실’이 아닌 ‘미래’와 ‘상상’에 의거해서 구성할 수도 있다. 즉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지역공동체 및 문화공동체 만들기라는 점에서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해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태적으로 갇혀 있는 개념이 아니라, 동태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도 연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운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 ‘운명’을 공통의 기반으로 하는 ‘운명공동체’를 강조하기도 한다. 아시아운명공동체, 아태운명공동체, 인류운명공동체가 대표적이다. 중국은 이 점에서 인류운명공동체의 영어표기를 ‘공동체(community)’가 아니라 ‘공유된 미래(shared future)’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제기된다. ‘상상’과 ‘동태적 재구성’을 통해서라도, 즉 억지라도 ‘공동체’라는 개념을 고집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공동체’라는 개념 외에 다른 개념으로 동북아, 나아가 동아시아(아시아-인도태평양)를 조화와 협력의 지역으로 만들 수 없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 점에서 일본은 선도적으로 ‘개방적 다층적 네트워크’를 강조했고, 한국은 ‘동북아문화공동체’를 “동북아지역의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민간교류 네트워크, 국가 간 제도화된 교류조직과 기구”⁵¹¹⁾로 규정하기도 했다.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조직 그리고 사회를 연결시키는 관계의 묶음’이다. 여기에는 가치의 개념이 일단 배제되지만, ‘협력 네트워크’, ‘평화 네트워크’ 등의 개념으로 공통의 지향성을 담아

511) 민태은 외,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방안』,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 p. 7.

낼 수는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라는 개념 대신에 동북아 나아가 동아시아(아시아-인도태평양)에서의 ‘개방적이고 다층적인 협력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사용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먼 과거나 모호한 미래로부터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에서 각종 지역협력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우리가 새롭게 설정한 동아시아(아시아-인도태평양)는 너무나 다양하고 상호 이질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질성을 존중하는 의미의 문화 ‘공동체’는 사실 개방적이고 다층적인 ‘네트워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앞에서 말한 한중일 삼국의 ‘근친증오’는 이제 각자 독립된 정체성을 가진 존재에 대한 이질성 용인과 다양성 존중으로 발전할 수 있다. 잘못된 ‘근친’의식으로 공동체를 억지로 만드는 것은, 비록 그것이 중국의 중국주변국으로서의 ‘아시아 운명공동체’처럼 국가성을 희석시키는 효과가 설령 있을지라도, 대동아공영권의 ‘내선일체론’처럼 제국적 지배의식의 부산물일 수 있다.

라. 답아야할 내용(내포)의 문제 - 인간존중과 인간애

본 연구는 ‘동북아문화공동체’를 주제로 이루어졌다. ‘동북아’라는 지역범주에서 ‘공동체’라는 틀에 답아야 할 범주로 ‘문화’를 상정했는데, 이때의 문화는 정치, 안보, 경제를 제외한 전 분야이다.

내포와 관련하여 한국은 이전의 연구에서 “일상적인 시민의 삶과 관련한 일련의 다양한 행위와 현상, 인간과 사회의 다양한 현상,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의 총체”로 문화로 규정하기도 했다.⁵¹²⁾ 여기서 생활문화라는 개념이 가능해진다. 중국은 ‘사람과 문화’를 포괄하여 ‘인문(人文)’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즉 다양한 인적교류와 사회문제 그리고 문화까지를 포함하여 인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이를 ‘인문공동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한다. 그리고 일본은 사회와 문화를 결합한 사회문화를 하나의 포괄된 개념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는 결코 정치외교, 안보, 경제적인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 해당하는 문화영역은 ‘하드 파워(hard power)’에 해당하는 안보경제 등의 영역으로부터 파생되기도 하고, 심각하게 제약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제대로 된 공동체 논의는 정치외교안보 및 경제영역과 결코 분리되어 연구될 수 없다. 이 점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미국의 공공외교이다. 미국은 ‘문화영역’을 독자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전략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다. 이로 인해 정권의 성격에 따라 문화와 관련된 예산과 정책도 매우 심하게 변화된다.

512) 위의 책, p. 7.

따라서 “미국의 가치와 충돌하는 동북아문화공동체는 그 자체로 미국의 전략이익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

한편 문화를 ‘공유 또는 공통의 속성 내지 정체성’으로 규정하여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해야 할 어떤 것’으로 규정한다면 우리는 문화에 어떤 것을 포함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전개하면서 ‘3P’를 핵심가치로 천명했다. 3P는 ‘People, Peace, Prosperity’인데, 사람, 평화, 번영이다. 여기서 ‘사람(people)’은 첫 번째 되는 핵심가치이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BTS(방탄소년단)는 “자존감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 빛나는 노래에 숨은 철학의 복잡성, 정교한 안무에 깃든 시너지와 형제애, 그리고 수많은 자선적이고 인류학적인 노력”⁵¹³⁾으로 세계에서 수백만명의 팬을 확보하고 세계인에게 롤 모델이 되었다. 사실 한류가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 인기를 얻은 TV드라마(겨울연가, 대장금 등)와 영화, 노래 등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우수한 표현력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어필할 수 있는 핵심가치를 담고 있었다.

주변의 동북아국가만이 아니라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까지 확산된 한류와 세계적으로 지속적 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각종 문화현상을 분석해보면 그 속에는 공통적으로 어떤 핵심가치가 내포되어 있다. 그것은 세계적인, 인류적인 보편성을 띠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존중과 인간애’이다. 따라서 문화의 영역에서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핵심가치를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세계적 문화현상을 염두에 둘 때 문화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용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문화의 영향력, 즉 외연이 확장될수록 문화의 내용(내포)은 더욱 더 인류적이고 세계적인 보편성을 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국 어떤 특수 이념적인 것이거나 개별 종교적인 것 또는 컬트(cult)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존중과 인류애를 담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인간존중과 인류애를 핵심으로 하는 문화를 새롭게 발굴하고 상상하며 구성해야 한다. 여기서 ‘하늘백성의 나라’를 꿈꾸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한 세종의 비전, ‘모든 사람이 성인이 되는 문화국가’⁵¹⁴⁾를 꿈꾼 김구의 비전은 21세기 세계적 문화네트워크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513) “With positive messages of self-confidence, intricacies of philosophy hidden in their sparkly songs, true synergy and brotherhood in every step of their elaborate choreography, and countless charitable and anthropological endeavors” 미국 시사주간지 TIME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100인’에 선정된 기사 중에서 방탄소년단에 대한 팝 스타 할시(Halsey)의 추천사, 2019.4.16., <<http://time.com/collection/100-most-influential-people-2019/5567876/bts/>>.

514) 김구, 『백범일지』 (서울: 돌베개, 2002), p. 432.

마. 추진 주체의 문제

한국에서는 ‘동북아문화공동체’의 추진주체와 관련하여 논의 단계에서부터 국가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들은 국가중심적 시각은 자기확증적 접근으로 외부와의 생산적 논의가 불가능하고, 결국 공동체 주도국 중심의 지배질서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것에는 과거 일제가 추진한 ‘대동아공영권’이 일본의 제국적 지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주창되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중국의 ‘운명공동체’가 국가가 추진하는 지역주의전략의 일환이기에 분명 문제가 있지만, 이 운명공동체 논의가 중국의 강고한 국가중심주의, 중화중심주의를 상대화하는 부수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운명공동체가 과거 2천년의 중화제국 질서를 부활하고, 현재의 강대화된 중국 중심의 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우려는 더욱 의미가 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 또한 국가중심, 국가주도로 ‘동북아문화공동체’의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동북아, 동아시아에서의 문화협력, 문화공동체 형성에 국가가 기여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 우선 앞에서 언급한 ‘국제적 보편’과 관련하여 개별적 국가들 간의 약속을 통해 상대에 대한 증요를 막고 상호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 각국이 입법을 통해 증요발언과 행동을 금지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일본 정부가 제정한 ‘헤이트스피치 방지법’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다른 한편 비국가적 행위자들, 즉 지방, 시민(사회), 대학, 기업 등이 문화협력을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우선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동북아 나아가 세계 각국에는 지방정부(자치단체)가 어떤 식이든 존재하고, 현재 한중, 한일, 중일 간에는 각종 형태의 자매도시가 촘촘하게 결연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광역단위, 기초단위)가 문화교류에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둘째는 대학 등 ‘지(知)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것이다. 각 대학의 양자 간 교류협력프로그램이 제도화된 상태에서 동북아문화공동체의 선도프로그램으로 ‘동북아 공동의 대학’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닫힌 민족주의를 버리고 열린 공동체 개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단위로서 ‘동북아 지(知)공동체’를 함께 가동할 필요가 있다. 이때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타국을 공생과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타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 콘텐츠의 개발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에 확산되는 혐한, 혐중, 혐일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관광 등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만남을 질적으로 고양시켜 사회공공성을 함양하고 공생의 가능성을 확산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 각국의 시민사회와 정부,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여 관광산업에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각종 형태로 증가하는 이민자,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문화협력, 공생문화형성의 계기로 삼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와 문화의 이질성을 떠나 개인의 인격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다섯째, 동북아 나아가 아시아-인도태평양의 각종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와 언론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 혐오문제, 사회문제 등에 대한 시민사회와 언론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시민사회와 언론 나아가 의회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동북아 단위에서 시민사회와 언론이 각종 협력체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책과제

가. 후속 연구의 방향

동북아문화공동체 토대 연구로서 ‘각국의 인식과 연구동향’을 연구한 이번의 연구는 2018년에 연구 완료된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방안』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획협동과제로 연구된 2018년도 연구는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역사문화적 배경 및 전제조건(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대만)’, ‘유럽연합 및 아세안의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에 함의’, ‘동북아문화공동체 현황과 영역별 형성방안(사회, 환경, 교육, 예술)’ 등을 담고 있다. 이번 2019년도의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유관 4개국(지역)의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논의와 전문가 조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2018년도 연구를 보완·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2018년, 2019년의 연구를 통해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이제 거의 전부가 망라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연구용역을 통해 동북아문화공동체의 의미와 적실성 그리고 향후의 방향성도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2개년에 걸친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방대한 연구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 연구는 연구의 지역적 범위를 ‘동북아’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이번 연구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은 동북아에 한정된 문화공동체는 실현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의미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급속한 기술의 발전과 세계화는 시간과 공간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 정치외교안보 및 경제적인 지역의 범주는 동북아에서 ‘동아시아’(아시아-인도태평양)로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문화, 경제적인 영역은 이미 세계가 하나의 단위가 되었고, 세계를 하나의 단위로 고려하지 않는 어떤 논의도 무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문화’와 관련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할 경우, 그 단위는 최소한 ‘동아시아’(아시아-인도태평양) 단위가 되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세계를 단위로 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는 ‘동북아’ 차원의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후속 연구의 내용적 주제와 관련하여 문화에 국한하는 연구보다는 이와 직접 관계되는 정치외교, 안보, 경제 등도 동시에 고려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네트워크’ 또는 ‘협력체’나 ‘플랫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설계에서 문화 이외의 영역과의 관련성을 배제하려 했으나 실제의 연구에서는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배제할 경우에는 연구의 유의미성이 오히려 저하되고 연구가 추상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필요와 관련되는 ‘동아시아 지역’(아시아-인도태평양) 전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동체’를 주제로 연구하다보니 연구가 실제적인 연구가 되기보다는 개념과 당위 나아가서는 미래의 추상적 담론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많은 자원이 소요되는 기획협동연구는 추상적 담론이 아니라 현실에 필요한 실제적인 연구가 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동아시아에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적, 사회·문화적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그 연결망의 성격과 작동과정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의 실질적 연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번의 토대연구는 그러한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셋째, 이번의 연구를 통해 한국 국내(연구자)에 국한된 연구보다 일본, 중국 등의 연구자들의 연구동향과 전문가 의견이 매우 유용했다. 따라서 향후의 후속연구는 일본, 중국 등의 외국 연구자들이 연구의 객체가 아니라 연구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과 관련된 연구는 그 연구의 성격상 유관국(지역)의 연구자가 포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 연구자 스스로가 향후 관련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동북아문

화공동체의 형성에 유관국(지역)의 전문가들은 관련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필요한 각종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확보한 각국의 전문가 데이터 베이스(DB)는 이러한 점에서 후속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등의 연구자를 연구의 주체로 참여시킬 때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성과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충분히게 준비하고 넉넉한 시간을 확보하여 제대로 된 성과를 내는 것을 후속연구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나. 구체적인 정책과제

구체적인 정책과제는 크게 중앙정부 차원, 지방자치체 및 공적인 기관(공공기관, 학교 등) 차원, 그리고 시민사회와 개인 등의 시민 차원의 3범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① ‘동아시아’를 우리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지역범주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구상과 제도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활성화하는데 아세안과 더불어 적극 나설 필요가 있고, 한-아세안정상회의에서 이것을 의제의 하나로 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현재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북한의 참여도 적극 제안할 필요가 있다.

사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관련하여 민간조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아시아비전그룹(EAVG)은 1998년 아세안+3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해 1999년에 출범했고 ‘동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2011년 한국주도로 EAVG II가 출범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한국은 이제 EAVG III를 출범시켜⁵¹⁵⁾ ‘동아시아 인문사회문화 협력체’를 목표로 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동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에 제안했던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등 동아시아차원에서 민간으로 구성되는 각종 연구그룹과 네트워킹그룹을 가동하고 활성화하는데 한국이 앞장서야 한다.

② 동아시아를 지역범주의 중심으로 설정하더라도 동북아의 핵심국가인 한중일의 정상회의는 지속되면서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하고, 이에 한국이 앞장서야 한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아세안+3를 계기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거의 매년 개최되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별도로 개최되기 시작했고, 2011년에는 한국에 한중일협력사무국(TCS)을 설립했다. 한중일

515) 배금찬, “2018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결과분석: 한-ASEAN, ASEAN+3, EAS를 중심으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8), pp. 19~20.

3국의 협력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나라는 우리나라이고, 협력사무국도 한국에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 5년 동안 2015년에 한 번 열린 것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2018년에 들어서야 다시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인적교류를 포함한 폭넓은 영역에서의 협력을 증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었다.

현재 한중일 3국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은 3국 협력에 대한 낮은 정책적 우선 순위, 3국 협력의 공통비전 부재, 4국내 양국 갈등과 과거사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한중일 3국 협력과 각국 지역구상의 접점을 통한 이점을 발굴해야 한다. 그리고 3국 협력이 가능한 의제를 확장해야 하는데, 그 의제로는 연성안보, 대기오염, 전염병 예방, 에너지 등만이 아니라 사회문화협력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중일협력사무국’이 기존에 해온 한중일 언론인 교류프로그램, 청년대사 프로그램, 한중일 3국협력포럼 등을 더욱 활성화하고 새로운 교류협력을 구상해내는 것도 필요하다.⁵¹⁶⁾ 중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와는 달리 중일의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한국은 한중일 3국 협력을 주도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③ ‘동북아’라는 지역범주는 한반도의 남북한과 이와 관계되는 미중러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소지역주의의 일환으로 한정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조건에 따라 여전히 유효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북아평화안보협력체, 동북아철도공동체, 동북아에너지공동체, 동북아환경문제 등은 한중일과 극동 러시아를 포함하는 동북아 고유의 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를 염두에 둔 지역개념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적인 기관과 관련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①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 더 좁게는 환동해(일본해)권, 환서해(황해)권 차원의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오래전부터 베세토(베이징, 서울, 도쿄)협력이 있었고, 이에 아세안의 수도 나아가 동아시아(동아시아정상회의 참가국) 각국의 수도까지 포함하는 자치단체협력체를 구상할 수 있다. 또한 2018년 포항에서 한국 및 러시아 극동지역 광역단체 26개 도시가 참가한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개최되었고, 환동해 도시 간 네트워크, 환동해 국제심포지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모델로 하여 소지역차원에서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협력사업을 펼칠 수 있다.

② 한중일 및 동아시아 차원의 각종 인적, 사회문화적 교류의 확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지혜롭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문화원이나 세종학당 등을 동아시아 각국에 설치하는 것과 동시에,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와 언어, 생활과 경제 등에 관한 것을 한국에

516) 최은미, “한중일 3국협력의 전개와 향후 과제(1999~2018),” pp. 24~31.

서 알릴 수 있도록 건물이나 관리 등을 지원해 상호교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의 한류가 동아시아의 각 지역에서 공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국가의 문화행사가 한국에서 개최되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③ 본 연구에서도 강조되었지만 학생들과 젊은 세대의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이 더욱 개발되어야 한다. 유럽에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유럽 대학교 및 대학생의 교류협력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지적 교류 및 지적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 등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대상국을 중심으로 장학생 초청 규모를 확대하고, 공무원 및 전문가의 교류를 확대하며, 기술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 등도 이와 연관해서 진행할 때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활동할 미래의 '지역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④ 인적교류 및 사회문화협력에서 각종 문턱을 낮추고 장애물을 제거하며, 협력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중국이 사드배치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광제한 정책을 펼 것처럼 정치적 이유로 관광 등 인적교류를 국가가 주도하여 제한하는 행위는 제어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자의 확대가 불법체류자의 양산으로 전개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면서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의 유레일패스처럼 일정 나이의 청년들에게만 통용되는 3개월 정도의 '동아시아(동북아)철도패스'도 고려할 수 있다.

시민사회와 언론 등 민간 차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협력과제가 중요하다.

① 상호 간의 생각과 평가를 공유하는 기능을 하는 언론과 SNS 등 각종 여론형성 기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언론과 SNS에서는 혐오에 관한 글이 넘쳐난다. 이러한 글이 자정되고 또 걸러지도록 하는 각종 기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2018년 1월부터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네트워크 시행법(Network Enforcement Act)'이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언론과 SNS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상호 교류함으로써 서로를 더욱더 잘 이해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

② 앞서도 언급했지만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처럼 인간의 존엄과 인간애를 해치는 발언이나 행위가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주장될 수 없도록 동북아 및 동아시아 각국에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지 정부의 법제도만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건전하고 헌신적인 노력도 필요로 한다. 일본에서 우익단체들이 헤이트 스피치를 하며 비이성적인 활동을 전개할 때, 이를 제어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일본 자체의 시민단체

에서 나왔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단체들이 각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국제적으로 형성되고 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자기와 타자, 자국과 타국, 같은 것과 다른 것을 조화시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상반되는 것은 보완적인 것이다(CONTRARIA SVNT COMPLEMENTIA)’⁵¹⁷⁾라는 말이 있다. 한중일 나아가 동아시아의 각국은 동질적인 것도 있지만 이질적이고 때로는 상반되는 것도 있다. 이 이질적이고 다양한 것이 이 세상과 우리를 풍부하게 하고, 상반되는 것이 우리의 부족을 채울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와 자기 나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알렉산더 포프(Alexznder Pope)는 “신은 전체에서 부분으로 사랑한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반드시 개체에서 전체로 올라간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고결한 정신이 깨어나도록 돕는다. 작은 조약돌이 고요한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듯이 중심으로부터 동심원이 퍼져나간다. 먼저 친구, 부모, 이웃을, 그 다음에 나라를, 그 다음에 온 인류를 포용한다.”⁵¹⁸⁾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오래전부터 자기 나라만이 아니라 그 나라가 속한 지역(동아시아) 나아가 온 세계를 단위로 생활할 수밖에 없도록 발전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나라와 지역과 세계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국가의 중요성만큼이나 이웃 지역이 중요하고 세계 전체가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나는 프랑스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럽인으로 죽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유명 정치인이 “나는 한국인(일본인, 중국인, 몽골인 혹은 타이완인)으로 태어났지만 동북아인 혹은 아시아인으로 죽을 것이다.”⁵¹⁹⁾라고 말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100여 년 전 안중근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오늘날 일본의 총리였던 하토야마 유키오가 다수 일본인의 인식과는 달리 한국에게 식민지배를 사죄하고, 중국에게 침략전쟁을 사죄하는 것을 보면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를 자기 나라만큼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꼭 불가능한 것만도 아닌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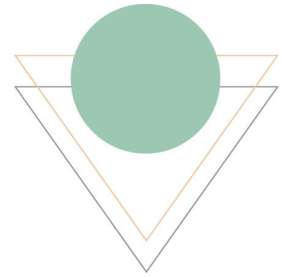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우리는 이전에 시도된 적이 있었던 공동의 역사교과서 등 공동의 인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이미 국가를 뛰어넘어 동아시아, 세계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인식의 차원, 구체적으로 정체성 인식의 차원에서

517) 국립외교원이 경구로 삼고 있는 말이다.

518) 김명섭, “국가주의와 보편주의의 조화방안,” p. 21.

519) 위의 글, p. 18.

아직 우리는 동아시아인, 세계인으로서 사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기존의 다양한 국가중심적 의식이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동북아문화공동체' 프로젝트의 목적이기도 하다.



제7장 결론

제7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및 연구의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동북아 지역과 관련한 지역협력 및 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정책 등에서 공통분모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대상 국가를 넓혀 지역 유관국(지역)인 미국, 러시아, 몽골, 대만의 논의를 고려하면,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지역협력 및 문화공동체에 대한 공동의 합의나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체제의 상이성, 역내 역사 및 영토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자국 중심으로 지역을 설정하고 지역협력 및 공동체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범위 설정 논의는 어떤 국가를 포함시키고 배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이는 국가의 핵심이익과 직접 연관되어 논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예민한 외교적 사안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지역설정과 관련해서 중국과 일본은 2000년대부터 팽팽히 맞서왔다. 중국과 일본은 2000년대 초 ASEAN과 한·중·일 간의 지역협력 논의과정에서 주도권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했었다. 중국은 ASEAN+3국 중심으로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성할 것을 주장했지만, 일본은 여기에 오세아니아와 인도를 포함시키는 것을 주장했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이 추진하는 ASEAN+3의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EAFTA)에 대항하여, 2007년 ASEAN+6의 동아시아경제연계협정(EAEP)을 제안하기도 했다. 일본은 중국 패권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논의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자국의 역내 입지를 모색하려고 한다. 중국과 일본은 지역협력 논의에서 미국의 참여 문제와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확보를 위해서 경쟁했고, 이는 지역협력에 어떠한 국가를 포함할 것인가에 관한 논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중·일 3국은 동북아 지역협력 논의를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중심으로 전개하다보니 상호간 지역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한·중·일을 중심으로 동북아와 동아시아를 개념화하고자 한다. 또한, 한·중·일 이외에도 북한,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 등을 지역 범주에 포함시킨다. 한국은 이러한 동북아 지역개념에 동남아 지역을 덧붙여 동아시아 지역개념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아시아를 동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로 구분하고 동북아를 동아시아의 일부로 인식하면서 중국, 일본, 몽골, 한반도,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구성된 소동아시아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한다. 일부 논의에서는 지역범위를 중국의 동북 3성과 한반도, 일본, 몽골, 러시아 동부 및 시베리아를 포함한 소동북아로 파악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아시아-태평양'의 지역개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동북아는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태평양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로 흡수하여 논의되는 특징을 보인다. 한국은 동북아 지역설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하려는 반면에 중국과 일본은 동북아 지역을 '주변' 또는 '동아시아'의 부분으로 논의하면서 지역개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북아 지역범위 설정에 있어 상이함을 보이는 한·중·일 3국은 자신이 설정한 지역범위를 바탕으로 자국의 이해관계에 맞춰 지역협력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대외환경 조성차원에서 지역협력 논의를 진행시켰다. 이는 한국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다자협력 구조가 외교안보적 안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결과였다. 또한 역내 국가들의 정치외교안보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보다 쉬운 경제협력 차원에서 지역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에 중국은 최근 기존의 단일 공동체 접근법에서 벗어나 책임공동체, 이익공동체, 인문공동체, 운명공동체 등 복합 공동체로 지역협력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논의는 인류운명공동체, 아시아 운명공동체 등과 연결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중국위협론'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중국 주도의 지역협력 구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열린 아시아'의 개념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에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통합'의 문제로 확장시키고 있고, 미국과 러시아도 여기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연계된 지역협력 개념을 갖고 있으며, 지역협력 논의를 한국, 중국에 비해 보다 넓혀 논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다보니 한·중·일 3국에서 지역협력과 연결된 문화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논의도 쉽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문화협력을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3국은 국가 이미지 제고, 문화의 경제적 효과, 소프트 파워로서의 문화적 영향력 확보 등을 위해서 문화협력을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역내 문화공동체로서의 문화협력 논의나 공감대는 매우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문화공동체 논의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2000년대 초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한국의 문화공동체 논의는 동북아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거나,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 하면서 새로운 문화 개념의 창출을 제안하면서 진행되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평화공동체와 이익공동체 형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문화공동체를 바라보았다. 반면에 중국은 다 민족 국가라는 점에서 문화공동체보다 주변운명공동체가 강조되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 중심의 공동체 구상을 위해서 유교문화와 한자문화를 중심으로 ‘중국적 담론’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개방적 다층적 네트워크’의 육성에 초점을 두고 동아시아 문화 이념의 모색을 문화의 다양성과 일본문화의 혼종성을 강조하면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통한 공동체 논의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 유관국(지역)의 논의를 살펴보면 우선, 이 지역에서 역외국가인 동시에 역내 국가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 미국은, 냉전 붕괴 이후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신을 배제하거나 자신의 전략적 이익과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지역협력도 반대해왔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정책이 안보 영역에서 쌍무적 방위동맹과 경제영역에서의 연성 다자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공동체 구축에 관심이 없었고, 동아시아 지역의 영향력과 지도력을 쌍무적 동맹을 통해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지역문화 협력 논의는 공공외교 측면에서 미국적 ‘가치’와 ‘문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리적, 경제적, 역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에 접하고 있는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유럽 지역을 중시하는 가운데 경제적 측면에서 동북아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 논의에 접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러시아에서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 지역협력 논의는 주된 관심사항이 아니다.

몽골은 한국, 중국, 일본 등과 지리적인 위치를 제외하면 경제, 문화, 사상 등 모든 분야에서

이질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1990년대 이후부터 러시아, 중국 등을 제외한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다자주의적 지역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몽골은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두 강대국에 둘러싸여 내륙의 섬처럼 되어 있다. 이에 몽골은 다른 나라와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얻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협력을 고민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관계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고, 1971년 UN탈퇴 이후에 국제적으로 국가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지역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대만의 지역협력 논의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동북아보다는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지역협력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대만에서 지역의 문화협력 논의는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중·일 3국뿐만 아니라 유관국(지역)들도 지역협력 논의를 자국의 전략적 이익확보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문화를 매개로 한 협력 또는 공동체 구성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중·일 3국 전문가들은 동북아의 다자협력 및 문화공동체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는데, 특히 일본 전문가 대다수가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히 한·중·일 3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3국이 서로에게 갖고 있는 ‘혐오’의식 확산에 대한 우려이다. 각 국가의 전문가들은 자국 내 상대국들에 대한 혐오 의식의 증대를 우려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지배를 받거나 침략을 당한 국민(민족)이 지배(침략)국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점에서 중국의 혐일이나 한국의 혐일, 혐중은 역사로부터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인이 그들이 지배했던 중국과 한국에 대해 강한 혐오를 보이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열등성이나 신뢰의 부족만이 아니라, 경제문화적 격차의 감소나 추월로 인한 상실감과 국력의 역전으로 인한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본이 미국이나 유럽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정을 보이지 않는데 왜 유독 중국과 한국에 대해 이러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일까? 한국 또는 일본과 중국에는 절대 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럴까? 이는 중국도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의 마음이다. 그것은 한·중·일 3국이 모두 이웃국가로서 일종의 ‘근친’이고 서로에 대한 우월의식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근친증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현상이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가 새로운 차원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동체를 도모할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동북아에서 과거에 벌어진 전쟁과 적대로 인한 역사적 갈등,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심리적 발탁감과 우울감,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민(민족)국가주의 조류는 우리들에게 평화로운 삶, 행복한 일상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흐름은 1990년대 냉전의 종식 이후 강력하게 전개된 세계화의 물결과 SNS 등 ITC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이 한없이 축소된 지구촌의 시대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국민(민족)국가와 지구촌, 국가주의와 보편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급속한 현안이 된 것이다. '협오'가 유령처럼 배회하고 적대가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동북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화합하고 평화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국제적 보편과 초국적 보편으로서 동북아협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동북아문화공동체론'은 이 점에서 먼 미래의 일이나 공허한 추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화되고 세계화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계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 결과가 향후 후속 연구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적 범주 문제와 관련해서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해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사실 지역범주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와 이해관계에 따라 구성되고 해체되며 재구성되는 물리적, 심리적, 행태적 특성들의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혼합물이다. 현재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를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했는데, 이는 기존의 '동북아'라는 지역개념으로는 현재의 세계변화를 담아낼 수 없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서 '동북아플러스'의 플러스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으로 표현되는데, 북방으로는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로 확장되고, 남방으로는 아세안과 인도로 지역의 범주가 확장된다.

따라서 한국의 지역연구는 동북아 중심주의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국, 일본 등과 지역범주 논의를 생산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일본 등의 지역범주 논의를 고려한다면 지역범위를 확장하여 지리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인도-태평양'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개념은 유라시아와 동태평양을 모두 포괄하는 거대한 지역개념으로, 아시아 대륙 전체에 걸친 중국의 부상과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인도, 호주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범주는 유럽+아프리카 대륙과 미주대륙과 연결 끈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들과 구별되는 나름의 역사적, 정치적, 지리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중점을 뒤야 할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인도태평양' 지역은 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신경제구상, 동북아협력구상 그리고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될 것이다.

둘째, 지역협력 및 문화공동체 논의는 '이질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방적이고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동북아문화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유교문화, 한자문화 등을 중심으로 한 동질성 논의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은 과거 전통시대의 것일 뿐 현재의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조차도 유럽의 기독교적 정체성 또는 그리스·로마적 정체성에 비교하면 매우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을 비교하더라도 체제의 성격이 상당히 이질적이다. 결국 동질성을 찾기보다는 이질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공동체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과연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하는데 있어 기존의 공동체라는 개념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공동체'라는 개념 외에 다른 개념으로 동북아, 나아가 동아시아(아시아-인도태평양)를 조화와 협력의 지역으로 만들 수 없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네트워크'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조직 그리고 사회를 연결시키는 관계의 묶음'이다. 여기에는 가치의 개념이 일단 배제되지만, '협력 네트워크', '평화 네트워크' 등의 개념으로 공통의 지향성을 담아낼 수는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라는 개념 대신에 동북아 나아가 동아시아(아시아-인도태평양)에서의 '개방적이고 다층적인 협력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사용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먼 과거나 모호한 미래로 부터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에서 각종 지역협력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문화공동체 논의는 정치안보, 경제를 포괄하여 인간존중과 인간애를 담아내야 한다.

본 연구는 편의상 정치안보, 경제를 제외한 전 분야를 문화로 상정하였다. 그런데 문화는 결코 정치안보, 경제적인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 해당하는 문화영역은 '하드 파워(hard power)'에 해당하는 정치와 경제 등의 영역으로부터 파생되기도 하고, 심각하게 제약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제대로 된 공동체 논의는 정치외교안보 및 경제영역과 결코 분리해 연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의 동질성보다는 이질성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문화공동체 논의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인류보편적인 '인간존중과 인간애'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문화의 영역에서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핵심가치를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신한반도체를 제시하면서 첫 번째 핵심가치로 사람을 제시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평화와 번영의 능동적인 한반도 및 지역질서를 구상한 것이다. 중국은 '사람과 문화'를 포괄하여 '인문(人文)'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즉 다양한 인적 교류와 사회문제 그리고 문화가

지를 포함하여 인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이를 '인문공동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한다. 그리고 일본은 사회와 문화를 결합한 사회문화를 하나의 포괄된 개념으로 보고 있다. 물론 한중일 3국의 이러한 인식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보편적인 인간존중과 인간애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세계적 문화현상을 염두에 둘 때 문화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용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문화의 영향력, 즉 외연이 확장될수록 문화의 내용(내포)은 더욱 더 인류적이고 세계적인 보편성을 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간존중과 인류애를 핵심으로 하는 문화를 새롭게 발굴하고 상상하며 구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위주체의 역할과 관계 형성 논의를 좀 더 심화시키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의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에서 지적했듯이 국가 중심적 시각은 자기확증적 접근으로 외부와의 생산적 논의가 불가능하고, 결국 공동체 주도국 중심의 지배질서를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다.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제도와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가들 간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대로 일본의 헤이트스피치 방지법처럼 한국과 중국 등도 입법을 통해 증오발언과 행동을 금지하도록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국가적 행위자들, 즉 지방, 시민사회, 대학, 기업 등이 문화협력을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함께 다양한 행위주체들 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관계형성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제 2 절 향후 정책적 과제와 신한반도체제

앞서 6장에서 제시했던 정책적 과제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첫째, 동아시아를 우리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지역범주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각종 구상과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비전그룹(EAVG)III'을 출범시켜 '동아시아 인문사회문화 협력체'를 목표로 한 연구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 둘째, 동아시아를 지역범주의 중심으로 설정하더라도 동북아의 핵심국가인 한중일의 정상회의는 지속하면서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중일협력사무국'이 기존에 해온 한·중·일 언론인 교류프로그램, 청년대사 프로그램, 한·중·일 3국협력포럼 등을 더욱 활성화하고, 새로운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에 한국이 앞장서야 한다. 셋째, '동북아'라는 지역범주는 남북한과 이와 관계되는 미중러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소지역주의의 일환으로 한정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북아평화안보협력체, 동북아철도공동체, 동북아에너지공동체, 동북아환경문제 등은 한중일과 극동 러시아를 포함하는 동북아 고유의 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를 염두에 둔 지역개념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적인 기관들 차원에서는 첫째,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 더 좁게는 환동해(일본해)권, 환서해(황해)권 차원의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한중일 및 동아시아 차원의 각종 인적, 사회문화적 교류의 확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지혜롭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 셋째, 학생들과 젊은 세대의 교류협력을 위해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동아시아에서 활동할 미래의 '지역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적교류 및 사회문화협력에서 각종 문턱을 낮추고 장애물을 제거하며, 협력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시민사회와 언론 등 민간 차원에서는 첫째, 상호간의 생각과 평가를 공유하는 기능을 하는 언론과 SNS 등 각종 여론형성 기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북아 국가들 간의 혐오발언 확산을 막기 위해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네트워크 시행법'을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의 헤이트스피치 방지법처럼 인간의 존엄과 인간애를 해치는 발언이나 행위가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주장될 수 없도록 동북아 및 동아시아 각국에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에 시민단체들이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자기와 타자, 자국과 타국, 같은 것과 다른 것을 조화시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우리는 이전에 시도된 적이 있었던 ‘공동의 역사교과서’ 등 공동의 인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1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100년의 비전으로 ‘신한반도체제’를 공식 제안하였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레마이네 차이퉁(FAZ)’ 기고문에서 평범함의 위대함을 강조하면서 “한국 국민은 평범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힘은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무너뜨리고, ‘신한반도체제’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한반도체제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 오랜 시간 고착된 냉전적 갈등과 분열, 다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해체되어 평화와 공존, 협력과 번영의 신질서로 대체될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수동적인 냉전질서에서 능동적인 평화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남북한이 ‘생명공동체’로 평화경제를 통한 번영을,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동북아시아의 에너지공동체,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며, 나아가 이 공동체를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아시아가 지닌 잠재력을 함께 실현하고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6월 오슬로 포럼 연설을 통해 신한반도체제가 한반도를 아우르며 ‘국민을 위한 평화’임을 재차 강조하였다.⁵²⁰⁾ 그리고 남북한의 평범한 국민을 위한 한반도 평화 조성을 바탕으로 동북아와 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능동적이며 포용적 질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신한반도체제와 관련된 논의는 우리에게 과거 100년과 다른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100년을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단일 생활공동체(생명공동체)를 형성하고, 평화경제를 통해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허브국가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전략 마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주제인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는 신한반도체제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신한반도체제는 남북의 평범한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생명공동체를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능동적이며 포용적인 평화질서 정립에 기여해 나갈 것임을 밝힌 미래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한반도체제 추진 전략의 구체화 작업은 본 연구가 제시한 연구의 시사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20) 문재인 대통령은 오슬로 포럼 연설(2019.6.12.)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분단으로 인해 겪는 구조적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국민을 위한 평화’로 부르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본 연구는 지역협력 및 문화공동체 논의는 정치안보, 경제를 포괄하여 인간존중과 인간애를 담아낼 것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한반도체제의 추진은 사람, 즉 평범한 국민이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평범한 국민의 삶과 생활을 중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한반도 체제는 한반도의 수동적인 냉전질서를 타파하고 능동적인 평화질서로 바꾸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와 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포용적 평화질서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도 지역협력 및 문화공동체 논의를 동북아지역을 벗어나 '아시아-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하여 연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지역 개념의 확장은 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신경제구상, 동북아협력구상, 그리고 신남방정책 및 신북방정책을 모두 포괄하게 된다.

또한 신한반도체제는 100년의 미래를 향한 장기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 체제 및 국민들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포용성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이질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방적이고 다층적인 네트워크 구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방적이고 다층적인 네트워크 구성은 국가를 비롯한 다양한 행위주체의 역할 강화 및 관계 형성이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한국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신한반도체제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 100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추진해야 할 단기 전략뿐만 아니라 중기 및 장기 전략의 큰 그림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자국 중심주의, 동북아 중심주의의 탈피와 함께 인간존중과 인간애, 다양성과 이질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신한반도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그리고 능동적인 포용질서 형성을 위해 주변국들과 함께 할 것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신한반도체제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데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톨가 외 지음. 김장구·이평래 옮김. 『몽골의 역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 김광익·전영평.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I)』.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김구. 『백범일지』. 서울: 돌베개, 2002.
- 김국신·송정호·이교덕·정정숙.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III): 종합편』.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
- 김명섭·이연호·이동윤.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김우준·김예경·최운도. 『동북아 문화공동체 한중일 시각 비교와 협력방안 모색』.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
- 김호동.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파주: 돌베개, 2010.
-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편. 『몽골과 한국: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 용인: 단국대학교, 2012.
- _____. 『동몽골의 가치와 미래』. 용인: 단국대학교, 2016.
- 동북아시아대위원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구상』. 서울: 동북아시아위원회, 2005.
- 문옥표·송도영·양영균.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민태은 외.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
- 배금찬. 『2018년 ASEAN관련 정상회의 결과분석: 한-ASEAN, ASEAN+3, EAS를 중심으로』.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8.
- 백영서. 『동아시아의 귀환: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0.
- 새뮤얼 헌팅턴.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1997.
- 앤더슨 저, 윤희숙 역.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서울: 나남, 1991.
- 에드워드 사이드 저,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고, 2007.
- 오명석·한경구·장수현·최호림.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와다 하루키 저, 이원덕 옮김.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서울: 일조각, 2004.
- 외교통상부. 『외교백서 1999』. 서울: 외교통상부, 1999.
- _____. 『2004 외교백서』. 서울: 외교통상부, 2004.
- _____. 『2009 외교백서』. 서울: 외교통상부, 2009.
- 외교부. 『2014 외교백서』. 서울: 외교부, 2014.
- _____. 『2018 외교백서』. 서울: 외교부, 2018.
- 외무부. 『외교백서 1994』. 서울: 외무부, 1994.
- 윤경철·오해섭.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이규창·김상기·김석진·김수경·김현집·이우태·전병곤·정성윤·조한범·한동호. 『평화와 번영의 한
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이성규. 『한국과 몽골의 유라시아: 알타이 역사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문학적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4.
- 이우영·김재철·전영선·정정숙·윤철경·이우승.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거
버넌스의 관점에서』.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
- 이종석. 『‘동아시아’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성남: 세종연구소, 2011.
- 자오팅양 저, 노승현 역. 『천하체계: 21세기 중국의 세계 인식』. 서울: 길, 2010.
- 전재경 외. 『동북아 문화공동체 연구(III): 법적접근체계개발』.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
- 정근식·김선·문인철·송영훈·정동준·조동준·천자현·황정미·김희정·이정옥·임수진. 『2017 통일
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 정문길·최원식.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 최은미. 『한중일 3국협력의 전개와 향후 과제(1999-2018)』.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8.
- 통일연구원.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_____.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 중국, 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푼살마긴 오치르바트 저, 김혜정 역. 『몽골국 초대 대통령 오치르바트 회상록』. 서울: 오름, 2010.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한-러 문화교류 기초조사』. 서울: 한국외대 지식출판원, 2009.
- 한만길·최영표·이현영.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의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G. 에렉젠·양시은. 『홍노: 몽골의 첫 번째 유목제국, 홍노의 문화유산』. 과천: 진인진, 2017.
- KEI.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2018.

KEI. 『환경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공공참여제도 한·중 비교연구』. 2018.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83.

Bruun, Ole, and Odgaard Ole eds. *Mongolia in Transition: Old Patterns, New Challenges*. Richmond: Curzon, 1996.

Fedorova, T., N. Kochelyaeva. *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and Trends in Europe (14th edition)*. Council of Europe/ERICarts. 2013.

He, Alex. *The Dragon's Footprints: China in the Global Economic Governance System under the G20 Framework*. CIGI Press, 2016.

Katzenstein, Peter J. and Robert O. Keohane. *Anti-Americanism in World Politic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Nye, Joseph S. *Is the American Century Over?* Cambridge: Polity Press, 2015.

Seib, Philip. *Toward a New Public Diplomacy: Redirecting U.S. Foreign Polic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9.

Schwarz, Henry G. ed. *Mongolian Culture and Society in the Age of Globalization*. Washington: East Asian Studies Press, 2006.

T.J. Pempel ed. *Remapping East Asia: The Construction of a Reg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재인용: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서울: 이매진, 2008.

Zimmerman, W. *The Russian People and Foreign Policy – Russian Elite and Mass Perspective, 1993-2000*. Princeton: New Jersey, 2002.

[중국]

耿協峰. 『新地區主義與亞太地區結構變動』.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3.

李喜所 主編, 陳尚勝 著. 『五千年中外文化交流史』 第一卷.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2.

汪德邁(Leon Vandermeersch)·陳彥 譯. 『新漢文化圈』. 南昌: 江西人民出版社, 1993.

張立文. 『和合學概論: 21世紀文化戰略的構想』. 北京: 首都師範大學出版社, 1996.

_____. 『和合與東亞意識—21世紀東亞和合哲學的價值共享』.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1.

_____. 『中國傳統文化與人類命運共同體』.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8.

中國社科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2016.

何志工·安小平. 『東北亞區域合作: 通向東亞共同體之路』. 北京: 時事出版社, 2008.

奚潔人. 『科學發展觀百科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7.

[일본]

権寧俊. 『歴史·文化からみる東アジア共同体』. 創土社, 2015.

金泰旭·金聖哲 編著. 『ひとつのアジア共同体を目指して』. 御茶の水書房, 2012.

東アジア共同体研究所. 『なぜ、いま東アジア共同体なのか』. 花伝社, 2015.

東アジア共同体評議会. 『東アジア共同体白書2010』. たちばな出版, 2010.

_____. 『政策報告書: 東アジア共同体構想の現状、背景と日本の国家戦略』. 2005.

朴峰寛·劉水生 編著·原口俊道 監修. 『東アジアの社会·観光·企業(亜東経済国際学会研究叢書—東北亜福祉経済共同体フォーラム)』. 五絃舎, 2015.

峰島旭雄編. 『創設45周年記念シンポジウム「太平洋共同体と東アジア」』. 早稲田大学社会科学研究所, 1986.

松岡正剛 編著. 日本と東アジアの未来を考える委員会 監修. 『平城遷都1300年記念出版 NARASIA 東アジア共同体? いまナラ本』. 丸善, 2010.

_____. 日本と東アジアの未来を考える委員会 監修. 『平城遷都1300年記念出版 NARASIA 日本と東アジアの潮流』. 丸善, 2009.

松岡俊二·勝間田弘. 『アジア地域統合の展開』. アジア地域統合講座総合研究シリーズ1. 勁草書房, 2011.

松浦章編. 『東アジアにおける文化情報の発信と受容(関西大学アジア文化交流研究叢刊)』. 雄松堂出版, 2010.

羽場久美子 編著. 『アジアの地域統合を考える: 戦争をさけるために』. 明石書店, 2017.

井上厚史. 「儒教は「東アジア共同体」の紐帯となりうるか?」, 『北東アジア研究』. 別冊-第2, 2013.

進藤榮一. 『東アジア共同体をどうつくるか』. ちくま新書, 2007.

進藤榮一·平川均 編. 『東アジア共同体を設計する』. 日本経済評論社, 2006.

川本忠雄. 『東アジア統合という思想』. 文眞堂, 2013.

青木保 外著·伊藤憲一 外監修. 『東アジア共同体と日本の針路』. 日本放送出版協会, 2005.

和田春樹. 『東北アジア共同の家—新地域主義宣言』. 平凡社, 2003.

黒田一雄. 『アジアの高等教育ガバナンス』. 勁草書房, 2013.

[몽골]

- 바토르(Улаанбаатар). 몽골국 대통령비서실(Монгол улсын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там гын газар). 2015.
- 볼드바타르(Болдбаатар Ч). 『몽골국 대통령 25년-연대기(1990.09-2015.10)』. (Монгол улсын ерөнхийлөгч 25 жил - он дарааллын товчоон(1990.09-2015.10). 울란.

[대만]

- 王甫昌. 『當代台灣社會的族群想像』. 台北：群學出版, 2003.
- 黃宣範. 『語言、社會與族群意識—台灣語言社會學研究』. 台北：文鶴出版, 1995.

2. 논문

- 공민석.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 연속성과 단절에 대한 평가.” 『사회과학연구』. 제34집 4호, 2018.
- 구해우. “한국과 몽골의 광역두만강개발계획 참여 전략.”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편. 『동몽골의 가치와 미래』. 천안: 단국대학교 출판부, 2016.
- 김명섭·안혜경. “9·11 이후 미국 공공외교의 변화.”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5집 3호, 2007.
- 김보라. “GTI에 대한 몽골의 시각과 비전 및 한·몽 협력 방안: 동몽골 지역 개발 내용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편. 『동몽골의 가치와 미래』. 천안: 단국대학교 출판부, 2016.
- _____. “이웃 국가들을 통해 출해구(出海口)를 확보하고자 하는 몽골의 이해관계와 몽골-러시아 연해주 협력: 정책 문서와 협의·합의·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주최. 『2016 동몽골프로젝트 학술회의 자료집』. 2016.
- 김봉진.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문화: 한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세계정치』. 7권 28집 1호, 2007.
- 김상배. “매력경쟁으로서 공공외교: 미국과 중국의 사례.” 김상배·이승주·배영자 편. 『중견국의 공공외교』. 서울: 사회평론, 2013.
- 김장구. “대몽골국 초기(1206~1259) 카라코룸으로 간 고려사신들.” 『이화사학연구』. 57집, 2018.
- 김지훈. “초국적 이주로서의 조기유학: 싱가포르의 한국인 조기 유학생 추적 조사를 통한 이동성(mobility) 유형화.” 『동남아시아연구』. vol. 24, no. 2, 2014.
- 라오제핑. “동아시아발전모델과 동아시아적 가치관.” 『포럼21』. 한백연구재단, 1998.

- 류지성·김형수.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서석사회과학논총』. 제1집 2호, 2008.
- 박승우.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 리뷰.” 『아시아 리뷰』. 제1권 제1호, 2011.
- _____. “동아시아 담론의 현황과 문제.”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서울: 이매진, 2008.
- 배기찬. “동북아시아대구상의 현실과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24권 제1호, 2008.
- 백영서. “프롤로그: 주변에서 동아시아를 본다는 것.” 정문길 외 편.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 서정경·원동욱. “시진핑 시기 중국의 주변외교 분석: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17집 제2호, 2014.
- 성원용.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전략과 한·중·일의 극동진출정책 비교연구.” 『비교경제연구』. 제16권 2호, 2009.
- 손열. “동아시아의 꿈.” 『아시아리뷰』. 제4권 제2호, 2015.
- 송태은. “미국 공공외교의 변화와 국제평판: 미국의 세계적 어젠더와 세계여론에 대한 인식.” 『국제정치논총』. 제57집 4호, 2017.
- 신범식. “러시아의 신(新) 동방정책과 동북아 지역정치: 지역 세력망구도 변화와 러시아의 가능성 및 한계.” 『EAI 국가안보패널 보고서: 동북아 데탕트-탈냉전 국가 대외전략 비교연구』. 2014.
- _____. “러시아의 외교정책.” 『현대외교정책론』. 서울: 명인문화사, 2016.
- 신윤희.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탈동북아중심주의적 관점.” 한국동남아연구소 월례발표회 발표. 2004.5.29.
- 아리프 딜릭. “역사와 대립되는 문화인가?-동아시아 정체성의 정치학.” 정문길 외 편.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0.
- 오원교. “도스토예프스키와 아시아 - 『작가 일기』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22권 2호, 2012.
- 우완영. “중국 신형대국외교 담론과 정책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8.
- 우평균. “러시아 극동개발 프로그램과 한·중·일의 정책: 현황 및 한국의 방향성.” 『슬라브학보』. 제25권 4호, 2014.
- 이남희. “동북아문화공동체의 정체성과 그 구축방안.” 『동양사회사상』. 제11집, 2005.
- 이무철.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윤대규 엮음.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파주: 한울, 2009.
- 이성규. “한국과 몽골의 문화적 차이와 발전 방안.”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편. 『몽골과 한국:

-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 용인: 단국대학교 출판부, 2012.
- 이소연·윤민철·송학준. “방한 러시아 관광객 수요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계량경제모형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제30권 5호, 2018.
- 이승환. “뚜웨이밍(杜維明)의 유학 제3기 발전론.” 『철학과현실』. 제34호, 1997.
- 이희옥. “한·중 인문유대 심화발전의 방안.” 『성균차이나브리프』. 제3권 제1호, 2015.
- 임문영. “21세기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과 한국의 역할.” 『유럽연구』. 제10호, 1999.
- 장즈창. “‘거대분단’의 극복과 이상적 동아시아의 가능성: ‘한중 인문유대 강화’가 지역의 미래에 주는 의미.” 『통일과 평화』. 제5집 제2호, 2013.
- 조관자. “일본인의 혐한의식- ‘반일’의 메아리로 울리는 ‘혐한’.” 『아세아연구』. 통권 제163호, 2016.
- 임유진·정지훈. “미국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진화.” 『21세기정치학회보』. 제25권 4호, 2015.
- 장인성. “한국의 동아시아론과 동아시아 정체성.” 『세계정치』. 26권 2호, 2005.
- 장호준. “한중 인문유대 담론과 방향에 관한 고찰.” 『중국학』. 제51집, 2015.
- 정희석.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러시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7권 2호, 2006.
- 제성훈. “탈냉전기 몽골 외교정책의 변화.”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편. 『몽골과 한국: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 용인: 단국대학교 출판부, 2012.
- 진성수. “한국 유교의 현황과 成均館 釋奠.” 『유교문화연구』. 제1권 제19호, 2011.
- 최태강. “아시아-태평양국가로서의 러시아: 동북아지역 공동체 형성의 조건과 가능성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한국시베리아연구』. 2권, 1998.
- 한석희·강택구. “동아시아공동체 형성과 중국의 인식.”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1호, 2009.
- 한중수. “몽골의 광물자원과 광업정책.”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편. 『몽골과 한국: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 용인: 단국대학교 출판부, 2012.
- Ts. 체렌도르지. “몽골제국 시대 이후 몽골이 아시아의 역사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김선자·박선미, 장석호 엮음, Tserendorj Tsegmed, Beisenov Arman Z, Jumabekova Gulnara S, Bazarbayeva Galiya A 지음. 『동서문화 교류와 알타이』. 서울: 역락, 2016.
- Arase, David. “East Asian Regionalism at a Crossroads.”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75, no. 1, 2013.
- Barfield, Claude. “The United States and East Asian Regionalism: Competing Paths to Integ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6, no. 2, 2012.
- Bowles, Paul. “Asia’s Post-Crisis Regionalism: Bringing the State Back in, Keeping the

- (United) States Out.”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9, no. 2, 2002.
- Campbell, Joel R. “US Foreign Policy towards Northeast Asia.” *Perceptions*. vol. 17, no. 4, 2012.
- Cho, Il Hyun and Seo-hyun Park. “Domestic Legitimacy Politics and Varieties of Regionalism in East Asia.”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40, no. 3, 2014.
- Dierkes J. and Mendee J. “Mongolia on an Emerging Northeast Asian Region.” edited by Batbayar T. *The Mongo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20, 2018.
- Drysdale, Peter.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and FTA Strategies.” *Pacific Economic Papers*. No. 355. Canberra: Australia-Japan Research Center, 2005.
- Frost, Ellen L. “China’s Commercial Diplomacy in Asia: Promise or Threat?” In *China’s Rise and the Balance of Influence in Asia*. edited by W. W. Keller and T. G. Rawski. Pittsburgh P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2007.
- Guoyou Song. “China’s Free Trade Agreement Strategie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5, 2012.
- Hemmer, Christopher, and Peter J. Katzenstein. “Why is There No NATO in Asia? Collective Identity, Regionalism, and the Origins of Multilater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6, no. 3, 2002.
- Higgot, Richard. “The Asian Economic Crisis: A Study in the Politics of Resentment.” *New Political Economy*. vol. 3, no. 3, 1998.
- Huiyun Feng, Kai He. “China’s Institutional Challenges to the International Order.” *Strategic Studies Quarterly*. vol. 11, no. 4, 2017.
- Ikenberry, G. John. “The Political Foundations of American Relations with East Asia.” In *The US and Northeast Asia: Debates, Issues, and New Order*. edited by G. John Ikenberry and Chung-in Moon.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2008.
- Joseph, Duffey. “How Globalization Became U.S. Public Diplomacy at the End of the Cold War.” In *Routledge Handbook of Public Diplomacy*. edited by Nancy Snow and Philip M. Taylor. New York & London: Routledge, 2009.
- Katada, Saori N. “Seeking a Place for East Asian Regionalism: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und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Pacific Review*. vol. 24, no. 3, 2011.
- Marcel de Haas and Frans-Paul van der Putten.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Towards a Full-grown Security Alliance?” *Clingendael Institute*. Nov. 2007.

- Min Ye. "China and Competing Cooperation in Asia-Pacific: TPP, RCEP, and the New Silk Road." *Asian Security*. vol. 11, 2015.
- Niruban Balachandran. "The United States Should Join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East-West Center*. Sep. 2017.
- Paul F. Chamberlin. "Six-Party Talks: Time For Change."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8, no. 1, Winter/Spring, 2007.
- Ruan zongze. "China's Role in Northeast Asian Community." *Asian Perspective*. vol. 30, no. 3, 2006.
- Sanders Alan J. "Foreign Relations and Foreign Policy." edited by Bruun Ole and Odgaard Ole. *Mongolia in Transition: Old Patterns, New Challenges*. Richmond: Curzon, 1996.
- Scalapino, Robert. "Natural Economic Territories in East Asia," edited by KEIA, *Economic Cooperation and Challenges in the Pacific*. Washington D.C.: KEIA, 2017.
- Terada, Takashi. "The United States and East Asian Regionalism: Inclusion-Exclusion Logic and the Role of Japan." In *A Pacific Nation: Perspectives on the US Role in an East Asia Community*. edited by Mark Borthwick and Tadashi Yamamoto. Tokyo: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 2011.
- Wang, Jianwei. "China and SCO: Towards a New Type of Interstate Relations." In *China Turns to Multilateralism: Foreign Policy and Regional Security*. edited by Guoguang Wu. New York: Routledge, 2007.
- Yunling, Zhang and Tang Shiping. "China's Regional Strategy." In *Power Shift: China and Asia's New Dynamics*. edited by David L. Shambaugh.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중국]

- 肖歡容. “地區主義理論的歷史演進.”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 박사학위논문. 2002.
- 復旦大學國際問題研究院. “中國人文外交的戰略選擇.” 『人文外交: 中國特色的外交戰略制度與實踐』. 2014.
- 耿協峰. “重塑亞洲觀念: 新地區主義研究中的中國視角.” 『外交評論』. 第2期, 2018.
- 曲金良. “天下一體: ‘環中國海文化共同體’的歷史構建.” 『中原文化研究』. 第1期, 2015.
- 祈進玉. “東北亞‘文化經濟共同體’的構想、路徑與展望.” 『世界民族』. 第3期, 2012.
- 祁懷高. “東亞區域合作領導權模式構想.” 『東南亞研究』. 第4期, 2011.
- 祁懷高·石源華. “中國的周邊安全挑戰與大周邊外交戰略.” 『世界經濟與政治』. 第6期, 2013.
- 盧光盛. “再議‘周邊外交’的概念與理念.” 『世界知識』. 第12期, 2017.
- 雷劍鋒. “‘一帶一路’與中國的歐亞地區主義.” 『東北亞論壇』. 第5期, 2017.
- 劉建飛. “中國特色大國外交的時代特色.” 『國際問題研究』. 第2期, 2017.
- 劉新華. “地區認同與東亞地區主義.” 『現代國際關係』. 第5期, 2004.
- 劉宗義. “亞洲命運共同體的內涵和建構思路.” 『國際問題研究』. 第4期, 2015.
- 劉昌明. “雙邊同盟體系制約下的東亞地區主義: 困境與趨向.” 『當代世界社會主義問題』. 第1期, 2011.
- 李開盛. “地區主義與中國的東亞外交.” 『外交評論』. 第103期, 2008.
- 李銘娜·武振玉. “東亞文化圈的形成、衰退與重建-以漢字的地位變遷為視角.” 『東北亞論壇』. 第5期, 2011.
- 李昌善. “構建東北亞文化共同體淺論.” 『東疆月刊』. 第1期, 2007.
- 林龍飛. “東亞漢字文化圈及形成論析.” 『東南亞縱橫』. 第8期, 2006.
- 苗吉·李福建. “中國與亞洲地區主義.” 『國外理論動態』. 第2期, 2015.
- 龐中英. “中國的亞洲戰略: 靈活的多邊主義.” 『世界經濟與政治』. 第10期, 2001.
- _____. “地區主義浪潮陷入低穀.” 『人民論壇』. 第4期, 2012.
- _____. “地區化、地區性與地區主義: 輪東亞地區主義.” 『世界經濟與政治』. 第11期, 2003.
- 方浩範. “東北亞文化共同體動因及其政治阻礙: 中日韓對待‘文化共同體’的態度.” 『東疆學刊』. 第2期, 2009.
- _____. “東北亞文化共同體動因及其政治阻礙——中韓日對待‘文化共同體’的態度.” 『東疆月刊』. 第26卷 第2期, 2009.
- 謝桂娟. “東北亞文化融合的政治因素及路徑分析.” 『東疆月刊』. 第26卷 3期, 2009.
- _____. “21世紀東北亞文化融合的動因探析.” 『延邊大學學報』. 第5期, 2007.

- _____. “東北亞溫暖融合的政治因素及路徑分析.” 『東疆學刊』. 第3期, 2009.
- 薛力. “仁厚兄長: 中國在亞洲整合中的角色.” 『世界經濟與政治』. 第10期, 2008.
- 蘇浩. “東亞開放地區主義的演進與中國的作用.” 『世界經濟與政治』. 第9期, 2006.
- 孫英春. “東北亞文化傳統的同質性與‘文化共同體’遠景.” 『浙江學刊』. 第4期, 2009.
- 宋均營·虞少華. “對‘東亞共同體’建設的在思考.” 『國際問題研究』. 第2期, 2014.
- 餘瀟楓·張泰琦. “和合主義: 建構國家間認同的價值範式-以一帶一路沿線國家為例.” 『西北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6期, 2015.
- 餘瀟楓. “和合主義: 中國外交的倫理價值取向.” 『國際政治研究』. 第3期, 2007.
- 易佑斌. “國際關係中的和合主義.” 『邵陽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1期, 2018.
- _____. “國際關係和合主義價值論研究-兼論人類命運共同體思想的價值意蘊.” 『邵陽師範高等專科學學報』. 第4期, 1999.
- 吳澤林. “近年中國學界關於東亞一體化的研究述評.” 『現代國際關係』. 第10期, 2015.
- 王嶽川. “漢字文化圈與東方文化新契機.” 『中國投資』. 第7期, 2012.
- 王雨. “試論漢字文化圈的歷史經驗.” 『社會科學戰線』. 第12期, 2008.
- 王逸舟. “‘東亞共同體’概念辨識.” 『現代國際關係』. 2010.
- 王琢. “東亞區域認同的文化成因及前景.” 『東南亞縱橫』. 第7期, 2007.
- 王曉玲. “周邊命運共同體構建與人文交流思路的轉換.” 『現代國際關係』. 第5期, 2015.
- 張東明·樸松喜. “東亞文化共同體視角下的中日韓人文學術交流.” 『當代韓國』. 第1期, 2015.
- 張波·李群群. “東北亞命運共同體背景下的中國文化選擇.” 『東疆月刊』. 第1期, 2018.
- 丁磊. “東亞共同體”與“中國東亞主義.” 『山東社會科學』. 第4期, 2006.
- 鄭先武. “‘東亞共同體’遠景的虛幻性析論.” 『現代國際關係』. 第7期, 2007.
- 鄭媛媛. “芻議東北亞融合的政治因素及路徑.” 『才智』. 第8期, 2015.
- 趙可金. “人文外交: 全球化時代的新外交形態.” 『外交評論』. 第6期, 2011.
- 趙汀陽. “天下究竟是什麼? -兼回應塞爾瓦托·巴博納斯的‘美式天下’.” 『西南民族大學學報』. 第1期, 2018.
- 周有光. “中國和漢字文化圈—漢字文化圈的文化演變之一.” 『群言』. 第1期, 2000.
- 秦亞青. “中華文化與新型國際關係.” 『世界知識』. 第1期, 2019.
- 秦亞青, 朱立群. “新國際主義與中國外交.” 『外交評論』. 第84期, 2005.
- 肖歡容. “泛化的地區主義與東亞共同體的未來.” 『世界經濟與政治』. 第10期, 2008.
- _____. “中國的大國責任與地區主義戰略.” 『戰略研究』. 第1期, 2003.
- 馮天瑜. “‘漢字文化圈’概念在日中兩國的形成過程.” 『人文論叢』. 第00期, 2012.

- 夏立平. “新東亞區域主義發展及其影響.” 『當代亞太』. 第6期, 2005.
- 許孝梅. “‘漢字文化圈’淺析.” 『勝利油田黨校學報』. 第17卷 第4期, 2004.
- 邢麗菊. “何以人文: 中外人文交流的意義.” 『世界知識』. 第23期, 2017.
- 黃大慧·韓愛勇. “東亞地區主義研究評析.” 『外交評論』. 第3期, 2011.

[일본]

- 鳩山友紀夫. “東アジア共同体へ具体的な提案をしよう.” 東アジア共同体研究所·編. 『なぜ、いま東アジア共同体なのか』. 花伝社, 2015.
- 鴨川明子. “アジア域内の教育ネットワーク.” 松岡俊二 著. 『アジア地域統合の展開(アジア地域統合講座総合研究シリーズ)』. 勁草書房, 2011.
- 鳥居高. “東アジア中間層の3つの役割.” 進藤榮一 編. 『東アジア共同体を設計する』. 日本経済評論社, 2006.
- 佐渡友哲. 「自治体ネットワークの役割」. 進藤榮一 編. 『東アジア共同体を設計する』. 日本経済評論社, 2006.
- 増田与. 「日本における太平洋共同体構想の発展」. 峰島旭雄編. 『創設45周年記念シンポジウム「太平洋共同体と東アジア」』. 早稲田大学社会科学研究所, 1986.
- 和田春樹. 「アジアにおける開かれた共同体: 議論の展開と発展」. 金泰旭·金聖哲編. 『ひとつのアジア共同体を目指して』. 御茶の水書房, 2012.

[러시아]

- Арапова Е. Я. 2017. “Россия и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азиатский треугольник: потенциал торгов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позиции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Экономика 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науки.
- Балакин. В. И. 2015. “Регионализм и регионализация 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Политика и политические науки 3.
- Борисович. В. А. 2015. “К ВОПРОСУ О ПОВЫШЕНИИ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ГО СТАТУСА РОССИИ.” ТЕОРИЯ И ПРАКТИК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20.
- Гамерман. Е.В. 2015. “РОЛЬ И МЕСТ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ОБЕСПЕЧЕН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ПОЛИТОЛОГИЯ 2.
- Костюнина. Г.М. 2016. “Интеграционные процессы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 Экономика 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науки 8.
- Ларин. В. Л. 2018. “ТИХООКЕАНСКАЯ РОССИЯ В «БОЛЬШОЙ ЕВРАЗИИ» НАЧАЛА XXI ВЕКА: ВЫЗОВЫ И ОТВЕТЫ.” *Historical and Social-Educational Idea* 10(3).
- Лукин, А. Л. 2016. “Политик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Политика и политические науки* 3.
- Подковальников Сергей Викторович & Савельев Владими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 Чудинова Людмила Юрьевна. 2015. “Перспективы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Кооперации России И Стран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Studies on Russian Economic Development Проблемы прогнозирования*.
- Синенко И. Ю. 2016. “Перспективы «поворота на Восток» в контексте текущего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Росси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Политика и политические науки* 2.
- Суслов. Д. В. 2017. “Интеграция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о странами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Комплексное изучение отдельных стран и регионов*.

[몽골]

- баярхүү D.(Баярхүү Д.) “몽골의 제3 이웃 정책과 양 강대국(Монгол улсын гуравдагч хөршийн бодлого & Хоёр хөрш).” *Рах Mongolica* 2018 no. 2(10). Ulaanbaatar: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2018.
- баярсах J.(Баясах Ж.) and 투르далай(Төрдалай Р.). “몽골의 독립과 대외정책의 세가지 초석(Монгол улсын тусгар тогтнол ба гадаад бодлогын тулгын гурван ч улуу).” *Рах Mongolica* 2018 no. 1(9). Ulaanbaatar: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2018.
- 장슈이지에(Жан Сюйжие) “‘일대일로(一帶一路)’와 몽골의 ‘초원길’ 프로젝트 연계 방안.” *Рах Mongolica* 2018 no. 2(10). Ulaanbaatar: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2018.

[대만]

- 王恩美. “대만의 선진국 담론 활용 전략과 한·중·일 인식(2007-2017).” 『중국근현대사연구』. 제79집, 2018.
- 施建生. “貿易自由化與區域整合.” 『臺灣經濟研究月刊』. 第15卷 第6期, 1992.

- 姜家雄. “臺海兩岸經濟關係與亞太區域整合.” 『國際關係學報』. 第8期, 1992.
- 蔡宏明. “亞太區域整合之發展.” 『貿易週刊』. 第1549期, 1993.
- 杜巧霞. “區域整合與多邊貿易的自由化.” 『經濟前瞻』. 第10卷 2期, 1995.
- 王朝弘. “由區域整合分析臺灣經貿努力方向.” 『嶺東學報』. 第7期, 1996.
- 葛永光. “加速區域整合帶動亞洲發展.” 『臺灣教育』. 第550期, 1996.
- 金榮勇. “形成中的東亞共同體.” 『問題與研究』. 第44卷 3期, 2005.
- 王曉麟. “東亞區域整合對台灣經濟發展之困境與因應策略.” 『東亞論壇』. 第456期, 2007.
- 周百信·李裕民. “東亞區域整合趨勢與我國因應策略.” 『區域與社會發展研究』. 第2期, 2011.
- 陳仲沂. “從區域主義觀點論冷戰結束後歐盟與東協發展歷程之異同.” 『臺灣國際研究季刊』. 第7卷 1期, 2011.
- 戴東清. “亞洲區域整合之認同的趨勢與挑戰：以東亞為例.” 『人文社會科學研究』. 第7卷 4期, 2013.
- 楊仕樂. “共同體想像？檢證中國大陸的亞洲區域認同.” 『亞太研究通訊』. 第11期, 2013.
- 廖立文. “比利時語族文化共同體與行政自治區之演變與現況.” 『各國語言政策學術研討會論文集』. 2002.
- 麻國慶. “文化的技術與文化共同體：兼論技術的「進步」與困惑.” 『科技發展與人文重建研討會論文集』. 2002.
- 高德義. “文化共同體的建構：臺灣原住民實行自治的政策可行性分析.” 『中華民國八十三年度全國文藝季原住民文化會議論文-原住民與當代政治』. 1994.
- 蔣為文. “從漢字文化共同體到民族國家：台灣和越南之比較研究.” 『2006年台灣的東南亞區域研究年度論文研討會論文集』. 2006.
- 萬金川講. “漢傳佛教經典與東亞文化共同體的形成.” 『佛光學報』. 第2卷 2期, 2016.
- 白適銘. “廢除「國畫」之後--戰後臺灣水墨畫「東亞文化共同體」思想之形成.” 『臺灣美術』. 第104期, 2016.
- 闕河嘉. “比利時多元文化政策的發展與變革.” 『教育資料集刊』. 第36期, 2007.
- 蔣為文. “漢字文化共同體之解構：臺灣hām越南ê比較.” 『臺灣史學雜誌』. 第2期, 2006.
- 名越二荒之助. “二十一世紀的亞洲與教育--「東南亞文化共同體」之提倡.” 『臺灣教育』. 第505期, 1993.
- 白永瑞. “東亞地域秩序：超越帝國，走向東亞共同體.” 『思想』. 第3期, 2006.
- _____. “關於形成東亞認識共同體的呼籲 記‘東亞的連帶與雜誌的作用’國際學術會議.” 『台灣社會研究季刊』. 第63期, 2006.
- 白樂晴著·黃文俊譯. “東亞共同體構想與韓半島分斷體制.” 『臺灣社會研究季刊』. 第81期, 2011.
- 沈松橋. “和解的東亞共同體如何可能？” 『臺灣社會研究季刊』. 第71期, 2008.
- 王恩美. “1971年「中國代表權」問題與韓國政府「中國政策」的轉變.” 『國立政治大學歷史學報』. 第36期,

- 2011.
- 黃智慧. “台灣的日本觀解析(1987-): 族群與歷史交錯下的複雜現象.” 『思想』. 第14期, 2010.
- 蔡錦堂. “跨越日本與國民黨統治年代的台灣人之日本觀.” 『台灣文獻』. 第58卷 第3期, 2007.
- 劉昌德. “國族主義的娛樂化與經濟邏輯: 臺灣媒體運動報導中「仇韓」與「仇中」言論的演變.” 『新聞學研究』. 第122期, 2015.
- 郭秋雯. “韓流對台灣的影响及其因應對策.” 『WTO研究』. 第18期, 2011.
- 孫國祥. “新區域主義及其對台灣發展的影响.” 『全球政治評論』. 第3期, 2003.
- 劉大年. “全球區域整合下的台灣思維.” 『經濟前瞻』. 第113期, 2007.
- 王曉麟. “東亞區域整合對台灣經濟發展之困境與因應策略.” 『東亞論壇』. 第456期, 2007.
- 李裕民. “東亞區域整合趨勢與我國因應策略.” 『區域與社會發展研究』. 第2期, 2011.
- 胡聲平. “中共對東亞區域整合的認知--權力觀點.” 『亞太研究通訊』. 第11期, 2013.
- 馬祥佑. “中國對亞洲區域整合的認知與作為--制度觀點的檢證與分析.” 『亞太研究通訊』. 第11期, 2013.
- 沈有忠. “東亞區域整合下的兩岸關係發展.” 『展望與探索』. 第12卷 1期, 2014.
- 呂孟璜. “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ECFA)對臺灣經濟發展的影响.” 『商學學報』. 第21期, 2013.
- 江敏華. “後ECFA時代: 兩岸關係前景之研析.” 『戰略安全研析』. 第63期, 2010.
- 許忠信. “台灣關係法與台灣安全.” 『台灣國際法季刊』. 第10卷, 2014.
- 楊昊. “檢視臺灣的新南向政策: 議程、網絡與挑戰.” 『問題與研究』. 第56卷 1期, 2017.
- 徐遵慈·李明勳. “我國新南向政策的執行成果與未來展望.” 『經濟前瞻』. 第176期, 2018.
- 過子庸·金士懿. “對我國「新南向政策」目標國的研析.” 『發展與前瞻學報』. 第22期, 2018.
- 陳竹梅. “中共「一帶一路」倡議下我國「新南向政策」的因應思維與實踐.” 『復興崗學報』. 第112期, 2018.
- 顧瑩華. “一帶一路與新南向的競合策略分析.” 『經濟前瞻』. 第178期, 2018.
- 鍾亞芳. “大眾傳播媒介如何建構國族意識—以2010年亞運楊淑君事件報導為例.” 淡江大學大眾傳播學系傳播碩士班碩士論文. 2014.

3. 기타자료

[신문]

『경북일보』.
『동아일보』.
『인천일보』.
『프레시안』.
『BBC中文網』.
『CCTV』.
『中新网』.
『人民日報』.
『人民網』.
『新華網』.
『總統府新聞』.
『光明日報』.

[웹자료]

국가도서관 대만잡지논문검색시스템 <<http://www.readopac.ncl.edu.tw/ncljournal>>.
내각부 <<https://www.cao.go.jp>>.
대만 블로그 <<http://barbare.cocolog-nifty.com>>.
대만 총통부 <<http://www.president.gov.tw>>.
대만 행정원 중요시정 성과, 신남향정책 <<https://achievement.ey.gov.tw>>.
문부성 <<http://www.mext.go.jp>>.
문화청 <<http://www.bunka.go.jp>>.
러시아 대통령궁 사이트 <www.president.ru>.
러시아 여론조사 기관(Levada-Center) <<https://www.levada.ru>>.
러시아 외교부 <<http://www.mid.ru>>.
상해사회과학원 <<http://iir.sass.org.cn>>.
세계가치관조사 사이트 <<http://www.worldvaluessurvey.org>>.
수상관저 <<http://www.kantei.go.jp>>.
시마네현립대학 <<http://www.u-shimane.ac.jp>>.


-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http://www.unescap.org>>.
- 와세다대학 <<http://www.waseda-giari.jp>>.
- 외무성 <<https://www.mofa.go.jp>>.
- 일본의 연구 <<http://research-er.jp>>.
- 전러시아여론조사센터 <<http://www.VCIOM.ru>>.
- 중국인민라디오방송 <<http://news.cnr.cn>>.
- 지자체국제화협회 <<http://www.clair.or.jp>>.
- 출입국재류관리청 <<http://www.immi-moj.go.jp>>.
- 토야마시 <<http://www.pref.toyama.jp>>.
- FTA 강국, KOREA <<http://www.fta.go.kr>>.
- Chinese Chairmanship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http://www.cica-china.org>>.
- China FTA Network <<http://fta.mofcom.gov.cn>>.
- CNKI <<http://www.cnki.net>>.
- KOTRA <<http://www.kotra.or.kr>>.
- The Asian Network of Major Cities 21 <<http://www.seisakukikaku.metro.tokyo.jp>>.
- TIME <<http://time.com>>.
- RIETI <<http://www.rieti.go.jp>>.
- UN <<http://www.un.org>>.
- U.S. Department of State <<http://www.state.gov>>.
-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http://www.moe.gov.cn>>.
- 中華人民共和國中國人民網站 <<http://www.gov.cn>>.
- 中華民國外交部邦交國 <<http://www.mofa.gov.tw>>.
-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http://www.gov.cn/ldhd/>>.
- 財團法人台灣民意基金會 <<https://www.tpof.org>>.
- 臺北市政府正體字主題網 <<http://www.doe.gov.taipei>>.
- 中華民國總統府,新聞與總活動,統府新聞 <<http://www.president.gov.tw/Page/35>>.
- 科技產業資訊室 <<http://iknow.stpi.narl.org.tw/>>.
- 中国社会科学网 <<http://arch.cssn.cn>>.
- 電子政府の総合窓口 <<http://elaws.e-gov.go.jp>>.
- 訪日外国人集客 インバウンド対策サービスの資料請求 比較サイト <<http://honichi.com>>.
- 政治大學選舉研究中心 <<https://esc.nccu.edu.tw>>.

[기타]

- 강정인. “국가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정치철학적 접근.” 『동북아시아대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심포지엄 ‘동북아를 보는 눈: 국가주의와 보편주의’ 자료집』. 2007.
- 김태환. “주변국 공공외교의 최근 추세 유형과 한국에 대한 함의.” 『주요 국제문제 분석』. 2016.
- 김명섭. “국가주의와 보편주의의 조화방안.” 『동북아시아대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심포지엄 ‘동북아를 보는 눈: 국가주의와 보편주의’ 자료집』. 2007.
- 바인멘드(白音門德). “동북아시아 판도에 있어서 몽골국의 전략적 위치.” 『고려-몽골 형제 맹약 800주년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9.
- 바트투르(Ж. Баттөр).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국제질서에서 몽골과 한국의 관계.”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유라시아실크로드연구소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유라시아 문명과 실크로드』. 2014.
- 서동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한·몽 관계 발전.” 『고려-몽골 형제맹약 800주년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9.
- 영흐툽신(Б. Энхтүвшин). 2012년도 동북아역사재단 한·몽 공동 학술회의 인사말(김장구 번역 원고). 2012.
- 오치르바트(П. Очирбат, 몽골국 초대대통령). 한국일보·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주최 ‘한반도 평화, 아시아의 기회와 도약’ KorAsia Forum 기조 강연 발표문(몽골문·번역문). 2018.
- 장석호. “17세기 몽골인들이 직접 쓴 유목민의 삶과 역사.” 『동북아뉴스레터』.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5.
- 출몽(С. Цолмон)·강바트(Л. Ганбат). “투르크계 언어로 출판된 일부 역사저작에 보이는 몽골사 서술.” 『동북아역사재단 한·몽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16.
-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Global Strategy Report』. 2017.
- Barfield, Claude. “The United States and East Asian Regionalism: Balancing Economics and Security.” *The United States Studies Center at the University of Sydney*, 2012.
- Cossa, Ralph A. “Northeast Asian Regionalism: A (Possible) Means to an End for Washingto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09.
- Gray, Alexander and Peter Navarro. “Donald Trump’s Peace Through Strength Vision for the Asia-Pacific.” *Foreign Policy*, 2016.

- Mongolian Government. "Concept of Mongolia's Foreign Policy." Batbayar T. ed. *The Mongo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20. Ulaanbaatar: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2018.
- Navarro, Peter. "The Trump Doctrine: Peace Through Strength." *The National Interests*, 2016.
- United States Advisory Committee on Public Diplomacy. "Assessing US Public Diplomacy: A Notional Model."
- United States Advisory Committee on Public Diplomacy. "2017 Comprehensive Annual Report on Public Diplomacy and International Broadcasting." 2017.
- United States Advisory Committee on Public Diplomacy. "2018 Comprehensive Annual Report on Public Diplomacy and International Broadcasting." 2018.
-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2006.
- Valdai Discussion Club. "Report: Toward the Great Ocean – 6: People, History, Ideology, Education. Rediscovering the Identity." 2018.
- Walt, Stephen M. "Explaining Obama's Asia Policy." *Foreign Policy*, 2011.
- Zhang Yunling ed. *East Asian Regionalism: Trend and Response*. Beijing: World Affairs Press, 2005.
- 東アジア共同体評議会. 『東アジア共同体構想の現状、背景と日本の国家戦略:政策報告書』. 2005.

부 록

	동북아 협력강화를 위한 서면 인터뷰	한국
<p>안녕하십니까?</p> <p>『동북아문화공동체 토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통일연구원의 이상신 연구위원입니다.</p> <p>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결성하는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p> <p>바쁘신 중에 죄송하지만, 잠시 시간을 할애하시어 아래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저희 연구결과물에도 참여해주신 분들의 신원은 일체 보호될 것을 약속드립니다.</p> <p>서면인터뷰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20px;"> <div> <p>☎ 통일연구원 이상신 연구위원</p> <p>☎ 통일연구원 윤혜령 연구원</p> </div> <div> <p>연락처 : 02-2023-8141</p> <p>연락처 : 02-2023-8247</p> </div> </div>		
<p>연구주관기관 : 통일연구원</p>		
<p>※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p> <p>연구책임자: 통일연구원 이상신 연구위원 연락처 : 02-2023-8141</p>		
<p style="text-align: center;">「통계법」</p> <p>제33조 (비밀의 보호)</p> <p>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p> <p>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p>		

1. 우선, 선생님께서는 “동북아시아”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를 여쭙겠습니다. 아래 보기 중 동의하시는 항목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한반도와 그 주변 국가와 지역을 포괄하는 지리적 개념이다.
☐ 유교, 한자 문화, 역사적 경험 등을 공유하는 문화적 개념이다.

2. “동북아시아”라는 개념은 주로 한국에서만 통용될 뿐, 인접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낯설고 잘 이용되지 않는 개념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라는 용어 혹은 개념이 중국과 일본에서도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 중 동의하시는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동의한다
 (2) 어느 정도 동의한다
 (3)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 위 2번 문항에서 “(1) 매우 동의” 혹은 “(2) 어느 정도 동의”를 선택하셨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200자 ~ 400자 이내)

4. 위 2번 문항에서 “(3)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음” 혹은 “(4) 전혀 동의 않음”를 선택하셨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200자 ~ 400자 이내)

5. 아래의 보기 중, “동북아시아”에 포함되어야 하는 인근 국가나 지역들을 모두 골라서 표시해 주십시오.

☐ 한국 ☐ 북한 ☐ 일본 ☐ 중국 ☐ 대만
☐ 몽골 ☐ 러시아 ☐ 베트남 ☐ 미국 ☐ 싱가포르

6. 위 문항에서 동북아시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하신 국가나 지역이 있다면, 해당 국가에 대해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간략히 1~2줄 정도로 각각 설명해 주십시오.

○ 국가명 1 ():
 ○ 국가명 2 ():
 ○ 국가명 3 ():
 ○ 국가명 4 ():
 ○ 국가명 5 ():

○ 국가명 6 ():

○ 국가명 7 ():

7. 위의 5번 문항에서 나열된 국가들 외에, “동북아시아”에 포함되어야 하는 국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유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8. 유럽연합처럼, 동북아시아에서 한·중·일이 중심이 되어 “동북아시아 연합” 혹은 “동아시아 연합” 같은 다자적 협력체를 일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가능하다.
- (2) 어느 정도 가능하다.
- (3) 어느 정도 불가능하다
- (4) 전혀 불가능하다.

9. 위 8번 문항에서 “(1) 매우 가능하다” 혹은 “(2) 어느 정도 가능하다”를 선택하셨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간략히 적어 주십시오. (200자 ~ 400자 이내)

10. 위 8번 문항에서 “(3) 어느 정도 불가능하다” 혹은 “(4) 전혀 불가능하다”를 선택하셨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간략히 적어 주십시오. (200자 ~ 400자 이내)

11. 동북아시아에서의 다자적 협력관계의 유형을 경제공동체, 안보공동체, 문화공동체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동북아시아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중 필요성이 높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를 그 필요성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안보공동체가 가장 필요하고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의 순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2) - (1) - (3) 의 순서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 (1) 경제공동체
- (2) 안보공동체
- (3) 문화공동체

12. 위 11번 문항에서 문화공동체(혹은 경제공동체나 안보공동체)를 가장 필요성이 높은 과제로 선택하신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 동북아 공동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200자 ~ 400자 이내)

13. 필요성과 상관없이,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공동체, 안보공동체, 문화공동체 중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를 그 실현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해주시시오, 예를 들어, 안보공동체의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고,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의 순서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2) - (1) - (3)의 순서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 (1) 경제공동체
- (2) 안보공동체
- (3) 문화공동체

14. 위 13번 문항에서 문화공동체(혹은 경제공동체나 안보공동체)를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과제로 선택하신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주시시오. 만약 동북아공동체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를 적어주시시오. (200자 ~ 400자 이내)

15. 험머와 카첸슈타인(Christopher Hemmer and Peter Katzenstein)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지역에서 유럽연합이 가능했지만, 아시아에서는 이에 비견될 만한 지역적 다자협력의 형성되지 못했던 이유를 지역내 국가들이 공유하는 정체성의 유무에서 찾고 있습니다. 즉, 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 통합에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공통적인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십니까?

- (1) 매우 공감한다
- (2) 어느 정도 공감한다
- (3) 어느 정도 공감하지 않는다
- (4)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6. 위 15번 문항에서 “(1) 매우 공감” 혹은 “(2) 어느 정도 공감”을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시오. (200자 ~ 400자 이내)

17. 위 15번 문항에서 “(3) 어느 정도 공감하지 않음” 혹은 “(4) 전혀 공감하지 않음”을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시오. (200자 ~ 400자 이내)

18. 만약 동북아시아의 공통적인 정체성을 찾는다면, 그 정체성의 바탕을 이루는 요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유교문화 및 한자 사용
- ☐ 서세동점 시기에 대한 공통의 역사적 경험
- ☐ 공통의 경제적 이해관계

- ☐ 군사적 안보 협력의 필요성
- ☐ 비군사적 안보 협력의 필요성
- ☐ 환경 문제에 대한 공통적 대응의 필요성
- ☐ 노동, 복지, 이민자, 인구 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공통적 대응의 필요성
- ☐ 한류(韓流) 등 공통적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19. 위의 18번 문항에서 제시되지 않은 동북아시아의 공통적 정체성을 이룰 수 있는 다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시오.
20. 정체성 이외에, 동북아시아 지역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이익, 가치, 믿음, 법칙, 제도 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공통의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도 설명해주시시오. (200자 ~ 400자 이내)
21. 경제협력이나 안보협력, 정치적 교류 등의 활동 외에, 한·중·일의 다자적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적 협력 방안이 있겠습니까?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아젠다와 방법을 설명해주시시오(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정치, 경제, 안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해주시시오. 예를 들어 교육이나 환경 등도 이 맥락의 문화 개념에 포함됩니다). (400자 ~ 600자 이내)
22. 만약 정부가 한·중·일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주변 국가와 지역들을 포함시키는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추진한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나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 1) 매우 가능하다
 - 2) 어느 정도 가능하다
 - 3) 어느 정도 불가능하다
 - 4) 전혀 불가능하다
23. 위 22번 문항에서 “(1) 매우 가능” 혹은 “(2)어느 정도 가능”을 선택하셨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주시시오.(200자 ~ 400자 이내)
24. 위 22번 문항에서 “(3) 어느 정도 불가능” 혹은 “(4)전혀 불가능”을 선택하셨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주시시오.(200자 ~ 400자 이내)

25. 동북아문화공동체를 추진한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가 해야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생각하신 바를 기술해주시시오. (400~600자)

▷ 한·중·일 상호간의 인식과 감정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26.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일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간략히 설명해주시시오.(400자 ~ 600자 이내)

27.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간략히 설명해주시시오.(400자 ~ 600자 이내)

▷ 한·중·일 사회에서 번지고 있는 “혐한”, “혐중”, “혐일”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하십니까?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해주시시오.

28. 한국에서의 혐일

- | | |
|--------------------------------------|-------------------------------------|
| <input type="checkbox"/> 매우 심각 | <input type="checkbox"/> 어느 정도 심각 |
| <input type="checkbox"/> 그다지 심각하지 않음 | <input type="checkbox"/> 전혀 심각하지 않음 |

29. 한국에서의 혐중

- | | |
|--------------------------------------|-------------------------------------|
| <input type="checkbox"/> 매우 심각 | <input type="checkbox"/> 어느 정도 심각 |
| <input type="checkbox"/> 그다지 심각하지 않음 | <input type="checkbox"/> 전혀 심각하지 않음 |

30. 일본에서의 혐한

- | | |
|--------------------------------------|-------------------------------------|
| <input type="checkbox"/> 매우 심각 | <input type="checkbox"/> 어느 정도 심각 |
| <input type="checkbox"/> 그다지 심각하지 않음 | <input type="checkbox"/> 전혀 심각하지 않음 |

31. 일본에서의 혐중

- | | |
|--------------------------------------|-------------------------------------|
| <input type="checkbox"/> 매우 심각 | <input type="checkbox"/> 어느 정도 심각 |
| <input type="checkbox"/> 그다지 심각하지 않음 | <input type="checkbox"/> 전혀 심각하지 않음 |

32. 중국에서의 혐한

- | | |
|--------------------------------------|-------------------------------------|
| <input type="checkbox"/> 매우 심각 | <input type="checkbox"/> 어느 정도 심각 |
| <input type="checkbox"/> 그다지 심각하지 않음 | <input type="checkbox"/> 전혀 심각하지 않음 |


▷ 이제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를 여쭙어 보겠습니다.

4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
| (1) 교수 | (2) 연구원 | (3) 공공기관 | (4) 기업인 |
| (5) NGO 관련 | (6) 기타 | | |

43. 귀하의 전공 영역이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

_____ (예: 정치학, 사회학, 경영학 etc.)

 통일연구원	为促进东北亚合作的书面访谈	中國
---	---------------	----

1. 您如何理解“东北亚”这一词汇，请您标记出您同意的选项。（可多选）

- ☐ 包括半岛及其周边国家与地区的地理概念
☐ 共享儒家文化、汉字文化、历史经历等的文化概念

2. “东北亚”这一概念虽然在韩国广泛使用，但一些人指出在日本却是相对陌生、使用并不太多的概念。东北亚这一词汇或是概念的使用是否可以扩展到中国、日本？请标出您同意的选项。

- (1) 非常同意
 (2) 一定程度上同意
 (3) 一定程度上不同意
 (4) 非常不同意

3. 如果在上一问题中回答了“(1) 非常同意”或“(2)一定程度上同意”，请简单说明理由。

(200-400字)

4. 如果在上一问题中回答了“(3) 一定程度上不同意”或“(4)非常不同意”，请简单说明理由。

(200-400字)

5. 请标记出应在“东北亚”范畴内的国家或地区。

- ☐ 韩国 ☐ 朝鲜 ☐ 日本 ☐ 中国
☐ 台湾 ☐ 蒙古 ☐ 俄罗斯 ☐ 越南
☐ 美国 ☐ 新加坡

6. 如果您认为以上选项中哪几项不在“东北亚”的范畴内，请简单说明理由。（1-2行）

○ 国家名称 1 ()

理由：

○ 国家名称 2 ()

理由：

○ 国家名称 3 ()

理由 :

○ 国家名称 4 ()

理由 :

○ 国家名称 5 ()

理由 :

○ 国家名称 6 ()

理由 :

○ 国家名称 7 ()

理由 :

7. 除了问题5中列出的国家或地区, 您认为还有哪些国家应包括在这一范畴之内? 请简单说明理由。

8. 您认为东北亚是否可以像欧盟一样以中日韩三国为中心构建“东北亚联盟”或者“东亚联盟”等多边合作体?

- (1) 非常可能
- (2) 一定程度上可能
- (3) 一定程度上不可能
- (4) 完全不可能

9. 如果在上一问题中回答了“(1) 非常可能”或“(2)一定程度上可能”, 请简单说明理由。(200-400字)

10. 如果在上一问题中回答了“(3) 一定程度上不可能”或“(4)完全不可能”, 请简单说明理由。(200-400字)

11. 目前, 可以东北亚的多边合作关系的类型可以分为经济共同体、安全共同体、文化共同体等。考虑到目前的东北亚关系, 其中最必要的课题是哪一个? 请按照您认为重要的顺序排列以下选项。例如, 您认为安保共同体最有必要, 其次是经济共同体、文化共同体, 那么您回答(2)-(1)-(3)即可。

- (1) 经济共同体
- (2) 安保共同体
- (3) 文化共同体

12. 如果在问题11中回答文化共同体（或是经济共同体、安全共同体）最有必要，请简单说明理由。如果您认为不需要东北亚共同体，也请简单说明理由。（200-400字以内）
13. 暂且不论必要性的情况下，您认为东北亚地区经济共同体、安全共同体、文化共同体哪一个可行性最高？请按照您认为可行性高的顺序依次排列以下选项。例如，您认为安全共同体可行性最高，其次是经济共同体、文化共同体，那么您回答(2)-(1)-(3)即可。
- (1) 经济共同体
 - (2) 安保共同体
 - (3) 文化共同体
14. 如果在问题13中回答文化共同体（或是经济共同体、安全共同体）可行性最高，请简单说明理由。如果您认为东北亚共同体不具有可行性，也请简单说明理由。（200-400字以内）
15. 海莫与卡赞斯坦(Christopher Hemmer and Peter Katzenstein)认为，第二次世界大战以后欧洲地区可以建立起欧盟，但亚洲地区却并未形成与之比肩的区域性合作机制，造成这种差异的原因在于区域内国家是否存在共同的认同。这种观点认为，亚洲国家并不具备一个共同的认同感，导致区域一体化的失败。请问您是否同意东北亚地区不存在共同的认同？
- (1) 非常同意
 - (2) 一定程度上同意
 - (3) 一定程度上不同意
 - (4) 完全不同意
16. 如果在上一问题中回答了“(1) 非常同意”或“(2)一定程度上同意”，请具体说明理由。（200-400字以内）
17. 如果在上一问题中回答了“(3) 一定程度上不同意”或“(4)完全不同意”，请具体说明理由。（200-400字）
18. 构成这一认同感基础的要素有哪些？请标记出这些要素。
- ☐ 儒家文化与汉字的使用
 - ☐ “西势东渐”时期共同的历史经历
 - ☐ 共同的经济利益关系
 - ☐ 军事安全合作的必要性
 - ☐ 非军事安全合作的必要性

- ☐ 共同应对环境问题的必要性
- ☐ 共同应对劳动、福利、移民、人口、老龄化等社会问题的必要
- ☐ 对韩流等共同大众文化的关注

19. 除了问题18中的选项，您认为还有哪些构成东北亚共同认同感的其他要素？请列出这些要素。

20. 除了认同感，东北亚地区是否还存在可以共享的共同利益、价值、信任、规则、制度等？如果存在，您认为其共同价值是什么？如果您认为不存在，请指出理由。（200-400字以内）

21. 除了经济合作或安全合作、政治交流等活动，是否存在增进中日韩多边合作的文化合作方案？如果存在，请具体说明可以合作的议题与方法。（此处的文化是不包括政治、经济、安全的所有领域。例如，教育、环境等也包括在内。）（200-400字以内）

22. 如果政府以中日韩为中心开始，促进形成一个包括周边国家与地区的东北亚文化共同体，您认为有多大的可能性？

- (1) 非常可行
- (2) 一定程度上可行
- (3) 一定程度上不可行
- (4) 完全不可能

23. 如果在问题22中回答了“(1) 非常可行”或“(2)一定程度上可行”，请简单说明理由。（200-400字以内）

24. 如果在问题22中回答了“(3) 一定程度上不可行”或“(4)完全不可能”，请简单说明理由。（200-400字以内）

25. 如要促进东北亚文化共同体的形成，各国政府与民间的合作是非常重要的。您认为政府应发挥哪些作用？民间可以发挥什么作用？请您自由阐述您的想法。（400-600字）

▷ 中日韩三国相互认识与感情

26. 中国人大体上如何认识日本？对日本有什么样的感情？请简单说明。（400-600字）

27. 中国人大体上如何认识韩国？对韩国有什么样的感情？请简单说明。（400-600字）

▷ 您认为中日韩社会中出现的“嫌韩”、“嫌中”、“嫌日”现象有多严重？请标记出您同意的选项。

28. 韩国的嫌日

- | | |
|--------------------------------|---------------------------------|
| <input type="checkbox"/> 非常严重 | <input type="checkbox"/> 比较严重 |
| <input type="checkbox"/> 不是很严重 | <input type="checkbox"/> 一点都不严重 |

29. 韩国的嫌中

- | | |
|--------------------------------|---------------------------------|
| <input type="checkbox"/> 非常严重 | <input type="checkbox"/> 比较严重 |
| <input type="checkbox"/> 不是很严重 | <input type="checkbox"/> 一点都不严重 |

30. 日本的嫌韩

- | | |
|--------------------------------|---------------------------------|
| <input type="checkbox"/> 非常严重 | <input type="checkbox"/> 比较严重 |
| <input type="checkbox"/> 不是很严重 | <input type="checkbox"/> 一点都不严重 |

31. 日本的嫌中

- | | |
|--------------------------------|---------------------------------|
| <input type="checkbox"/> 非常严重 | <input type="checkbox"/> 比较严重 |
| <input type="checkbox"/> 不是很严重 | <input type="checkbox"/> 一点都不严重 |

32. 中国的嫌韩

- | | |
|--------------------------------|---------------------------------|
| <input type="checkbox"/> 非常严重 | <input type="checkbox"/> 比较严重 |
| <input type="checkbox"/> 不是很严重 | <input type="checkbox"/> 一点都不严重 |

33. 中国的嫌日

- | | |
|--------------------------------|---------------------------------|
| <input type="checkbox"/> 非常严重 | <input type="checkbox"/> 比较严重 |
| <input type="checkbox"/> 不是很严重 | <input type="checkbox"/> 一点都不严重 |

34. 为了解决中国的“嫌日”问题，中国政府应该采取什么样的措施？请简单说明。（200-400字）

35. 为了解决韩国的“嫌中”问题, 中国政府应该采取什么样的措施? 请简单说明。(200-400字)
36. 为了解决中国的“嫌韩”问题, 中国政府应该采取什么样的措施? 请简单说明。(200-400字)
37. 为了解决日本的“嫌中”问题, 中国政府应该采取什么样的措施? 请简单说明。(200-400字)
38. 不同于政府与国家层面的矛盾, 社会与文化、观光等领域的中日韩交流最近非常活跃。(例如韩流与日本游客的剧增等)。您如何评价和展望东北亚地区内民间与个人层面的交流?
- (1) 民间交流将大幅增加
 - (2) 民间交流将一定程度上增加
 - (3) 民间交流将一定程度上减少
 - (4) 民间交流将大幅减少
39. 您认为问题38中民间交流增加(或减少)的原因是什么?(200-400字)
40. 这种民间文化交流是否有利于东北亚文化共同体的形成?
- (1) 民间文化交流有利于东北亚文化共同体的形成
 - (2) 民间文化交流与东北亚文化共同体的形成没有太大的关系
41. 如果您再问题40中选择(2), 请简单说明理由。(200-400字)

追加提问

1. 假设中日韩文化交流向人文交流、人文纽带、人文共同体的方向发展, 请问目前中日韩文化交流处在这三者中的哪一阶段?(简答)
2. 东北亚文化共同体形成过程中的核心要素是什么? 如儒家、汉字等。请简单评价其可能性与局限性。(简答)

3. 你认为促进东北亚文化共同体形成的主体应该是谁?例如,政府、公民社会、个人等。他们参与的比重应该是什么样的?请简单说明其根据。(100-200字)

→ 为进行统计分析,请回答以下几个问题。


▷ 为了方便统计,请您回答以下两个问题。

42. 您的职业?

- (1) 大学教授
- (2) 研究员
- (3) 公共机构
- (4) 企业人士
- (5) NGO相关人士
- (6) 其他

43. 您的专业领域是?

_____ (例:政治学、社会学、经营学、历史、哲学等)

	<p>東アジアの協力強化のための書面インタビュー</p>	<p>日本</p>
---	------------------------------	-----------

ソウル大学校の日本研究所(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は、「東北アジア文化共同体の基礎研究：各国の認識と研究動向」というテーマの基に、共同の企画研究に参加しております。

この共同研究は、韓国の統一研究院が主導するもので、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協力を強化するため、韓国政府にあるべき政策を提案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おります。この度は、日本・中国・台湾・韓国など、東アジアの各地域が関連している「東北アジア文化共同体」の可能性と必要性を検討・研究するために、書面インタビューを実施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ご多忙中、大変恐れ入りますが、以下の質問にお答えいただき、率直なご意見を伺いたく思います。なお、回答内容はこの度の研究にのみ活用され、すべての個人情報は一切公表されません。

書面インタビューの内容についてご不明な点がございましたら、下記の担当者までお気軽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 梁一模(ソウル大学校 自由専攻学部): yimoy@snu.ac.kr

☎ 趙寛子(ソウル大学校 日本研究所): joa@snu.ac.kr

☎ 金旻(ソウル大学校 日本研究所): kiimmin@hanmail.net

1. 「東北アジア」という概念に対して、どのような認識をお持ちですか？下記の内、同意する項目にチェックをしてください。(複数選択可能)

- ☐ 日本列島およびその周辺の国家と地域を包括する地理的概念だ。
☐ 儒教、漢字文化、歴史的経験などを共有する文化的概念だ。

2. 「東北アジア」という概念は、専ら韓国内で通用されるのみで、日本や中国ではあまり使われていない概念だという指摘もあります。東北アジアという用語、もしくは概念が日本や中国でも通用されるような拡張性を持っていると思いますか。

- (1) 強く同意する
(2) やや同意する
(3) あまり同意しない
(4) まったく同意しない

3. 上の設問2で「(1)強く同意する」もしくは「(2)やや同意する」と答えた場合、その理由を簡単にお書きください。(300字前後)

4. 上の設問2で「(3)あまり同意しない」もしくは「(4)まったく同意しない」と答えた場合、その理由を簡単にお書きください。(300字前後)

5. 下記の国家および地域の内、「東北アジア」に含まれるべき近隣国家や地域を全てお選びください

- | | | | |
|-------------------------------|---------------------------------|------------------------------|-------------------------------|
| <input type="checkbox"/> 韓国 | <input type="checkbox"/> 北朝鮮 | <input type="checkbox"/> 日本 | <input type="checkbox"/> 中国 |
| <input type="checkbox"/> 台湾 | <input type="checkbox"/> モンゴル | <input type="checkbox"/> ロシア | <input type="checkbox"/> ベトナム |
| <input type="checkbox"/> アメリカ | <input type="checkbox"/> シンガポール | | |

6. 上の設問5で、東北アジアに含まれないと見なした国家や地域がございましたら、それぞれの国家や地域が含まれない理由を簡単にお書きください。

- 国家名 1 ():
○ 国家名 2 ():
○ 国家名 3 ():
○ 国家名 4 ():
○ 国家名 5 ():

7. 上の設問5に挙げられた国家以外に、「東北アジア」に含まれるべき国家や地域があれば、記載してください。その理由も簡単にお書きください。
8. 欧州連合(EU)のように、東北アジアで日・中・韓が中心になって、「東北アジア連合」もしくは「東アジア連合」のような多者間協力体を作り上げることは、可能だと思いますか、それとも不可能だと思いますか。
- (1) 十分に可能
 - (2) やや可能
 - (3) やや難しい
 - (4) まったく不可能
9. 上の設問8で、「(1) 十分に可能」もしくは「(2) やや可能」と答えた場合、その理由を簡単にお書きください。(300字前後)
10. 上の設問8で「(3) やや難しい」もしくは「(4) まったく不可能」と答えた場合、その理由を簡単にお書きください。(300字前後)
11. 東北アジアにおいて、多者間の協力関係の類型としては、経済共同体、安保共同体、文化共同体などが考えられます。現在の東北アジア関係を鑑みて、諸類型の内、必要性の高い課題は何だと思いますか。下の項目を、その必要性が高い順に並べてください。例えば、安保共同体が最も必要で、経済共同体、文化共同体の順に必要なと思う場合、(2) - (1) - (3)の順にお書きください。
- (1) 経済共同体
 - (2) 安保共同体
 - (3) 文化共同体
12. 上の設問11で、文化共同体(もしくは経済共同体や安保共同体)を最も必要性の高い課題と選んだ場合、その理由を簡単にお書きください。あるいは、東北アジア共同体が必要でないと思う場合、その理由もお書きください。(300字前後)
13. 必要性に関わらず、東北アジアで経済共同体、安保共同体、文化共同体の内、現実的に実現可能性の高い課題は何だと思いますか。下の項目を実現可能性の高い順に並べてください。例えば、安保共同体の実現可能性が最も高く、経済共同体、文化共同体の順に実現可能性があると思う場合、(2) - (1) - (3)の順にお書きください。

- (1) 経済共同体
- (2) 安保共同体
- (3) 文化共同体

14. 上の設問13で文化共同体(もしくは経済共同体や安保共同体)を最も実現可能性の高い課題と選んだ理由を簡単にお書きください。あるいは、東北アジア共同体の実現が不可能だと思う場合、その理由もお書きください。(300字前後)

15. ハンマーとカッチェンスタイン(Christopher Hemmer and Peter Katzenstein)は、第二次世界大戦以後、ヨーロッパでは欧州連合の創設が可能であったが、アジアではそのような地域的多者協力が成立しなかった理由として、地域内の国々が共有するアイデンティティの有無を指摘しています。つまり、アジアの国々は共通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持っていないため地域統合に失敗したと主張しています。東北アジアには共通的なアイデンティティが存在しないという主張に共感しますか。

- (1) 非常に共感する
- (2) やや共感する
- (3) あまり共感しない
- (4) まったく共感しない

16. 上の設問15で「(1) 非常に共感する」もしくは「(2) やや共感する」と答えた場合、その理由を簡単にお書きください。(300字前後)

17. 上の設問15で「(3) あまり共感しない」もしくは「(4) まったく共感しない」と答えた場合、その理由を簡単にお書きください。(300字前後)

18. もし東北アジアにおいて共通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模索するならば、そ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土台を構成する要素には、何があると思いますか。その要素に該当すると思われるものを、下の項目から全てお選びください(複数選択可能).

- ☐ 儒教文化および漢字を使うこと
- ☐ 西勢東漸時期に対するの共通の歴史的経験
- ☐ 共通の経済的利害関係
- ☐ 軍事的安保協力の必要性
- ☐ 非軍事的安保協力の必要性
- ☐ 環境問題に対する共通の対応の必要性

- ☐ 労働、福祉、移民者、人口高齢化など、社会問題に対する共通対応の必要性
- ☐ 韓流など、共通的大衆文化に対する関心

19. 上の設問18で挙げられた項目の他に、東北アジアの共通アイデンティティを構成する要素があると思ったら、それは何なのか、ご自由にお書きください。

20. アイデンティティとは関係なく、東北アジア地域で共有できる共通の利益、価値、信念、法則、制度などが存在すると思えば、その共通の価値は何なのか、お書きください。もし存在しないと思えば、その理由を教えてください。(300字前後)

21. 日・中・韓の多者の協力を増進させるため、経済協力や安保協力、政治的交流などの外、何か文化的協力の方法があると思いますか。協力可能なテーマと方法を具体的にお書きください。(ここで言う「文化」とは、政治、経済、安保以外のすべての活動を包括する概念です。例えば、教育や環境なども文化に含まれます。)(500字前後)

22. もし日本政府が日・中・韓と周辺国家を含む東北アジア文化共同体の形成を推進するとしたら、その実現可能性について以下の項目からお選びください。

- (1) 十分に可能
- (2) やや可能
- (3) やや難しい
- (4) まったく不可能

23. 上の設問22で「(1) 十分に可能」もしくは「(2) やや可能」と答えた場合、その理由を簡単にお書きください。(300字前後)

24. 上の設問22で「(3) やや難しい」もしくは「(4) まったく不可能」と答えた場合、その理由を簡単にお書きください。(300字前後)

25. 東アジア文化共同体の形成を推進するにおいて、その実現のためには各国の政府と市民社会の協力が重要だと思います。政府の役割と市民社会の役割は何なのか、それぞれについて簡単にお書きください。(500字前後)

▷ 日・中・韓、相互の認識と感情についてお聞きます。

26. 日本人は、一般的に韓国をどう認識し、どんな感情(好感・非好感・嫌悪など)を持っていますか。簡単にお書きください。(500字前後)

27. 日本人は一般的に中国をどう認識し、どんな感情(好感・非好感・嫌悪など)を持っていますか。簡単にお書きください。(500字前後)

▷ 日・中・韓の社会で広がっている「嫌韓」、「嫌中」、「嫌日(反日)」がどれほど深刻な状況だと思いますか。該当する項目に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

28. 韓国での嫌日

- ☐ とても深刻 ☐ やや深刻
☐ あまり深刻ではない ☐ まったく深刻ではない

29. 韓国での嫌中

- ☐ とても深刻 ☐ やや深刻
☐ あまり深刻ではない ☐ まったく深刻ではない

30. 日本での嫌韓

- ☐ とても深刻 ☐ やや深刻
☐ あまり深刻ではない ☐ まったく深刻ではない

31. 日本での嫌中

- ☐ とても深刻 ☐ やや深刻
☐ あまり深刻ではない ☐ まったく深刻ではない

32. 中国での嫌韓

- ☐ とても深刻 ☐ やや深刻
☐ あまり深刻ではない ☐ まったく深刻ではない

33. 中国での嫌日

- ☐ とても深刻 ☐ やや深刻
☐ あまり深刻ではない ☐ まったく深刻ではない

34. 日本での「嫌韓」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日本の政府はどんな対策を講じるのが望ましいと思いますか。簡単にお書きください。(300字前後)
35. 日本での「嫌韓」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韓国の政府はどんな対策を講じるのが望ましいと思いますか。簡単にお書きください。(300字前後)
36. 韓国での「嫌日(反日)」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日本の政府はどんな対策を講じるのが望ましいと思いますか。簡単にお書きください。(300字前後)
37. 韓国での「嫌日(反日)」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韓国の政府はどんな対策を講じるのが望ましいと思いますか。簡単にお書きください。(300字前後)
38. 政府や国家レベルでの葛藤とは違い、社会および文化、観光のレベルでの日・中・韓の相互交流は、最近大変活発になっています。(例えば、韓流や訪日旅行客の爆発的な増加、韓国青年の日本企業への就職など。)このような東北アジア域内における民間および個人の交流をどう展望しますか。
- (1) 大幅に増加する。
 - (2) ある程度増加する。
 - (3) やや減少する。
 - (4) 大幅に減少する。
39. 上の設問38で民間交流が増加(又は減少)すると答えた理由を簡単にお書きください。(300字前後)
40. このような民間文化交流が東北アジア文化共同体の形成に役立つと思いますか。
- (1) 役立つ。
 - (2) 役立つたない。
41. 上の設問40で「役立つ」(もしくは「役立つたない」)と答えた理由を簡単にお書きください。(300字前後)



▷ 最後は統計処理のための質問です。

42. 応答者の職業は何ですか。

- (1) 教授
- (2) 研究員
- (3) 公共機関所属
- (4) 企業家
- (5) NGO関連
- (6) その他

43. 応答者の専攻・活動分野を教えてください。

_____ (例: 政治(学), 社会(学), 経営(学), 人文(学) etc.)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17-01

동북아문화공동체 토대 연구(1): 주요국의 인식과 한국의 대응

발행 2019년 8월
발행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909호
전화 044) 211-1000
홈페이지 www.nrc.re.kr
인쇄처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6

I S B N 979-11-5567-311-9

* 연구회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동북아 문화공동체 토대 연구 (1)

주요국의 인식과
한국의 대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9 791155 673119
ISBN 979-11-5567-311-9

비매출/무료

93900